

GOVP 19916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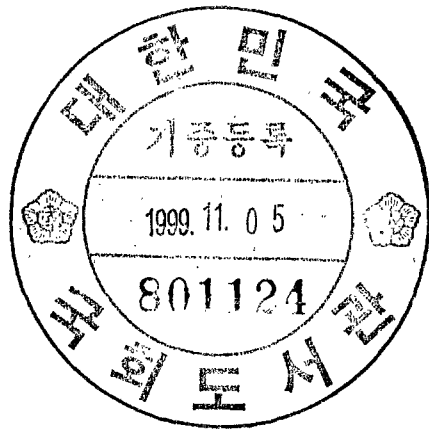
R  
630.95/  
L293 L  
1998

1999년도

#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 립 부

“국민을 움직여야 농업이 산다”



# 목 차

## 제 1 부 농업부문

제 1 편 1998년도 농업동향 .....	3
제 1 장 경제동향 .....	5
제 1 절 국내의 경제동향 .....	5
1. 국내 경제동향 .....	5
가. 경제성장 .....	5
나. 물가와 금리 .....	10
다. 고용과 임금 .....	12
라. 경상수지와 환율 .....	13
2. 해외 경제동향 .....	16
가. 경제성장 .....	16
나. 고용 및 물가 .....	17
다. 교역 및 경상수지 .....	19
라. 국제금리 및 환율 .....	20
제 2 절 농촌경제동향 .....	22
1. 농업구조 .....	22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22
나. 농경지 .....	23
2. 농가경제 .....	25
가. 농가소득 .....	25
나. 가계비 .....	31

다. 농가자산 .....	32
라. 농가부채 .....	33
마. 농가편의용품 보유현황 .....	36
바. 전·겸업 농가별 주요현황 .....	36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	37
가. 개 황 .....	37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	37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	39
4. 농림어업 부가가치 .....	42
5. 농업생산성 .....	44

## 제 2 장 국내농산물 수급동향 ..... 46

### 제 1 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 46

1. 식량 작물 .....	46
2. 원예·특용작물 .....	48
가. 채소류 .....	48
나. 과실류 .....	50
다. 특용작물 .....	50
라. 인삼류 .....	51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52
가. 축산물 .....	52
나. 사료작물 .....	54

### 제 2 절 식품 수급동향 ..... 56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	56
2. 식품수요와 공급현황 .....	59
가. 식품수요 .....	59

나. 식품공급 .....	63
3. 식품가공산업 현황 .....	65
가. 산업구조 .....	65
나. 생산동향 .....	67
다. 수출입동향 .....	69
<b>제 3 절 농산물 교역동향 .....</b>	<b>71</b>
1. 농산물 수출입동향 .....	71
가. 수출동향 .....	71
나. 수입동향 .....	72
2. 농산물 남북교역동향 .....	73
가. 농산물 교역규모 .....	73
나. 농산물 교역동향 .....	73
<b>제 3 장 국제 농업동향 .....</b>	<b>76</b>
<b>제1절 국제곡물수급과 가격동향 .....</b>	<b>76</b>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76
2. 국제곡물 가격동향 .....	78
<b>제2절 주요 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국간 통상협력 .....</b>	<b>79</b>
1. 주요국가의 농업동향 .....	79
가. 미 국 .....	79
나. 중 국 .....	83
다. 일 본 .....	85
라. E U .....	88
2. 양자간 통상협력 .....	93
<b>제3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관련활동 .....</b>	<b>101</b>

1. WTO 활동 .....	101
가. WTO 차기 농산물 협상 논의 .....	101
나. 분석 및 정보교환작업 .....	104
2. OECD 활동 .....	107
가. OECD 농업위원회 활동 .....	107
나. OECD의 한국농업정책 검토 .....	109
3. FAO 활동 .....	110
4.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	111
5. APEC 관련활동 .....	113
6. 농업·환경·무역연계 논의동향 .....	115
7. WTO/SPS협정이행 관련 논의동향 .....	117
<b>제 2 편 1998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b>	<b>121</b>
<b>제1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지원 토대확립 .....</b>	<b>123</b>
<b>제1절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재원확보 .....</b>	<b>123</b>
1.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예산규모 .....	123
2. 중점투자분야 및 재원확보내용 .....	123
가.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	123
나. 15조원 농특세 사업 .....	125
<b>제2절 농림업무 심사평가를 통한 투융자 효율성 제고 .....</b>	<b>127</b>
1. 농어촌구조개선 투융자사업현황 .....	127
가. 농어촌 투융자계획 개요 .....	127
나. 농어촌 투융자 집행 내역 .....	127
2. 농업투융자사업의 객관적 평가실시 .....	129
가. 농림사업 심사평가 실시 .....	129

나. 지방지차단체 평가 .....	130
다. 농어촌투융자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향 .....	131
3. 농림업 투융자제도 개선 추진 .....	132
가. 농림사업투융자 제도개선 .....	132
나. 농림사업 실시제도 보완 .....	133
<b>제3절 농림행정쇄신 및 농정조직개혁 .....</b>	<b>136</b>
1. ‘열린 농정’의 구현 .....	136
2. 농림행정 쇄신 및 규제완화 .....	137
가. 주요추진상황 .....	137
나. 주요개선내용 .....	138
3. 농정조직 및 추진체계 개혁 .....	140
가. 농림행정조직 통합 및 축소개편 .....	140
나. 농업기반공사 설립추진 .....	147
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개편 .....	149
4. 농정모니터제 운영개선 .....	150
<b>제4절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및 법령 제도 개선 .....</b>	<b>151</b>
1.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 .....	151
2. 농림분야법령 및 제도개선 .....	155
3. 재해지원 기준 개선 .....	162
<b>제 2 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들의 정립 .....</b>	<b>165</b>
<b>제1절 IMF위기극복을 위한 농가경영안정대책 및 귀농대책 .....</b>	<b>165</b>
1. 사료곡물과 영농자재의 안정적 공급대책 .....	165
2. 농가경영안정대책의 추진 .....	168
3. 귀농자에 대한 영농 정착 지원추진 .....	169

4. 농림분야 실업대책 추진 .....	171
<b>제2절 농업전문경영체 및 여성농업인의 육성 .....</b>	<b>173</b>
1.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업인 육성 대책 .....	173
2. 품목별 농업인교육 .....	174
3. 농업계 학교교육 활성화 .....	177
4.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	178
5. 법인경영체의 육성 .....	179
가. 영농조합법인 .....	179
나. 농업회사법인 .....	180
다.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지원 .....	181
6. 여성농업인 육성 .....	182
가. 추진배경 .....	182
나. 주요정책내용 .....	183
<b>제3절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곡물 자급기반 확충 .....</b>	<b>185</b>
1. 주곡의 안정적 공급기반 유지를 위한 노력 .....	185
가. 추곡약정수매가 인상 및 적기수매 .....	185
나. RPC중심 쌀 생산·가공·유통 혁신 .....	186
다. 농지보전 및 관리강화 .....	188
2. 식량생산기반의 확충 .....	190
가. 일반경지정리사업 .....	190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191
다. 밭기반 정비사업 .....	192
라.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사업 .....	193
마. 배수개선사업 .....	195
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195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	196



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	197
3.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	198
가. 원예특작부문지원 .....	198
나. 인삼산업육성지원 .....	198
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 .....	199
라.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	200
4. 농업기계화 및 영농자재의 수급안정 .....	201
가. 농업기계 공급지원 .....	201
나. 농업기계 이용조직 육성 .....	204
다. 농업기계 사후관리 및 기술훈련강화 .....	205
라.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 .....	207
마. 농약의 수급관리 .....	209
바. 종자의 수급관리 .....	210
사. 비료의 적정공급 및 가격안정 .....	211
<b>제4절 고부가가치농업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과 정보화 .....</b>	<b>213</b>
1. 농업기술혁신 .....	213
가. 개    요 .....	213
나. 농림기술개발사업 .....	214
다. 분야별 농업기술개발 .....	216
라. 농업기술 보급 .....	225
2. 농업정보화촉진 .....	229
가. 농업정보화 기반의 마련 .....	230
나. 농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 .....	231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	232
라. 농산물 유통분야 정보화 본격추진 .....	233
마. 정보화응용 지원사업 확대 .....	234

바. 농림부 홈페이지 개설·운영 .....	234
<b>제5절 수급안정과 물류효율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 .....</b>	<b>235</b>
1. 농산물유통개혁 .....	235
가.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	236
나. 물류센터 개장으로 유통단계축소 및 물류절감 .....	236
다. 다양한 농산물 가격지지 Program 도입 .....	237
라.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인하 .....	237
마. 안전성조사 및 품질차별화 강화 .....	238
2. 농축산물 수급안정 .....	238
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	238
나. 과실류 수급안정 지원 .....	239
다. 축산물 수급안정 지원 .....	241
<b>제6절 농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친환경농업의 기반마련 .....</b>	<b>243</b>
1. 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	243
2.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대책 .....	244
가. 축산식품 가공업무 관리일원화 및 위생검사체계 .....	244
나.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방역시책 .....	245
3. 친환경농업의 기반마련 .....	247
가. 『친환경농업의 원년의 해』 선포 .....	247
나.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추진 .....	247
다. 민간의 친환경농업 실천운동 확산 .....	248
<b>제7절 농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b>	<b>249</b>
1. 농산물 수출진흥 대책 .....	249
가. 해외시장 개척 .....	249
나. 농산물 수출지원체제 강화 .....	251
2. 수입관리 .....	252

<b>제8절 농촌활력증대 및 농업인 복지증진</b> .....	253
1. 농촌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	253
가. 정주생활권 개발 .....	253
나. 농어촌도로 확장·포장 .....	254
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	255
2. 다양한 소득원 개발 .....	256
가. 농공단지 조성 지원 .....	256
나.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	256
3. 농어업인 복지제도 확충 .....	257
가. 농어촌 교육여건과 개선대책 .....	257
나. 농어업인 후생복지 증진 .....	264
<b>제 3 편 1999년 농정시책</b> .....	271
<b>제 1 장 1999년 농업정책 방향</b> .....	273
<b>제1절 1999년도 농정목표</b> .....	273
<b>제2절 1999년도 농정방향</b> .....	275
1. 주곡자급기반 확충 및 재해대비 안전영농대책 .....	275
2.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 .....	275
3. 신지식·친환경농업 적극 육성 .....	276
4. 농산물 수출 강화 및 WTO 차기협상준비 철저 .....	277
5. 농가경제안정과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수립시행 ....	277
6. 지속적인 농정개혁과 규제개혁 .....	278
<b>제3절 1999년도 농림부문예산 확보</b> .....	279
1. 1999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	279
2. 1999년 농림예산 규모 .....	281

<b>제 2 장 1999년 주요농정시책</b> .....	283
<b>제1절 농업·농촌 투융자계획</b> .....	283
1. 투융자계획의 필요성 .....	283
2. 농업·농촌의 여건변화 .....	283
3. 투융자 규모 및 지원분야 .....	284
4. 투융자 필요성 제고방안 .....	285
<b>제2절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과 양곡관리제도 개선</b> .....	287
1. 우량농지 보전시책의 지속추진 .....	287
2. 생산기반 확충 .....	289
가. 일반경지정리 사업 .....	289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	290
다. 발기반정비사업 .....	291
라.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사업 .....	292
마.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기타 .....	292
3.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강화 .....	293
4.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	296
<b>제3절 농산물유통구조의 획기적 개혁</b> .....	296
1.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 .....	296
2. 농산물유통체계의 효율성 증진 .....	297
가. 새로운 수급안정제도 정착 .....	297
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혁신 .....	297
다. 도매시장거래제도 다양화 및 물류효율화 촉진 .....	298
라. 규격포장화 및 하역기계화 추진 .....	299
마.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	299
바. 직거래확대 및 소매유통개선 .....	300

사.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300
<b>제4절 신지식농업을 향한 인력육성과 정보화 추진 .....</b>	<b>301</b>
1. 농업인력육성의 내실화 .....	301
가.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업인 육성 .....	302
나.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	302
다. 농업법인체 내실화 추진 .....	303
라. 농업계 교육 활성화 .....	304
2. 농업의 기계화 및 현대화 .....	305
3. 농업기술의 혁신 및 보급 .....	310
가. 개    요 .....	310
나. 첨단기술개발사업 .....	311
다.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311
라. 벤처형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 .....	312
마. 농업기술개발 촉진대회 개최 .....	312
4. 지식농업을 위한 농업정보화의 확대 추진 .....	314
5. 신지식농업인 육성 .....	317
<b>제5절 수출농업의 기틀 구축 .....</b>	<b>320</b>
1. 수출여건과 전망 .....	320
2. 농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 .....	321
3. 수입관리대책 .....	323
<b>제6절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b>	<b>325</b>
1. 국제적 동향 .....	325
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 .....	327
3. 친환경농업육성방향 및 추진시책 .....	327
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 비료 등 환경오염의 경감시책 .....	328

나. 농업자원 유지·개량시책 .....	329
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	331
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지원·육성 .....	332
마.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추진 .....	333
<b>제7절 농업인 소득지원과 복지지원 강화 .....</b>	<b>334</b>
1. 직접지불제 단계적 확대 .....	334
2. 농가경영 안정대책 추진 .....	335
3. 농어촌교육·의료등 복지지원 강화 .....	336
4.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	340
5.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	343
6. 재해농가 지원 강화 .....	344
<b>제8절 농정추진체계의 강화 .....</b>	<b>346</b>
1. 농림사업의 투융자 방식 개선 .....	346
가. 농업관련기금의 정비 .....	346
나. 투융자 효율성 제고 .....	348
다. 농림사업 종합평가 .....	349
라. 현장농정 점검지원 평가 .....	350
2.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 .....	351
3. 농업행정쇄신 및 규제개혁 .....	353
4. 농정조직의 개편 .....	353
가. 농림부 및 외청의 직제개편 .....	353
나. 농림관련 기관 및 단체의 조직개편 현황 .....	359
5. 협동조합개혁추진 .....	361
가. 협동조합 개혁추진 경위 .....	361
나.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방향 .....	362
다.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내용 .....	363

6. 농림분야 「제2의 건국운동」 추진 .....	365
-----------------------------	-----

**제9절 WTO차기 농산물협상 대책 추진 및 남북농업**

<b>교류·협력 활성화</b> .....	367
1. WTO 차기농산물협상 추진방향 .....	367
2. OECD의 차기 농업협상 관련 논의 대응 .....	368
3. 남북농업교류·협력방안 .....	370
가. 「국민의 정부」 남북 농업 교류·협력 추진방향 .....	370
나. 북한 식량 수급상황 .....	371
다. 농업부문 교역현황 .....	371
라. 대북지원 현황 .....	372
마. 민간부문의 농업협력 추진현황 .....	373
바. 국제기구를 통한 농업협력사업 .....	375

**<부록>**

농업·농촌기본법 .....	377
「국민의 정부」 주요농정 추진사항 .....	377
I. 농가 부채대책 추진 .....	391
II. 농산물 유통개혁 .....	400
III.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통합 .....	410
IV. 협동조합 개혁 .....	423

## 제 2 부 임업부문

<b>제 1 편 1998년도 임업동향</b> .....	439
<b>제 1 장 국내의 임업동향</b> .....	441
제1절 국내 임업동향 .....	441
1. 산림자원 동향 .....	441
2. 임업동향 .....	443
3. 목재시장 동향 .....	445
제2절 국제 임업동향 .....	448
1. 산림자원 동향 .....	448
2. 주요 국가의 임업동향 및 임업정책 .....	452
3. 목재수급 동향 .....	462
4. 임업분야 국제회의 및 협약체결 동향 .....	465
<b>제 2 장 국내 임산물 수급동향</b> .....	471
제1절 임산물 수급동향 .....	471
1. 용 재 .....	472
2. 종실류 .....	473
3. 버섯류 및 산나물 .....	473
4. 조경재·기타 .....	475
제2절 임산물 교역 동향 .....	476
1. 임산물 수출동향 .....	476
2. 임산물 수입동향 .....	478



<b>제 2 편 1998년도 주요 임정성과</b> .....	481
<b>제 1 장 산지의 자원화 기반조성</b> .....	483
<b>제1절 경제림의 지속적 육성</b> .....	483
1. 우량종묘 및 경제수종묘 공급기반 확충 .....	483
2. 자원가치가 낮은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 .....	484
3. 육림사업의 확대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	486
<b>제2절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대대적 추진</b> .....	487
1. 추진 배경 .....	487
2. 추진 성과 .....	488
<b>제 2 장 경쟁력 있는 임업육성</b> .....	490
<b>제1절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b> .....	490
1. 사유림 경영구조의 개선 .....	490
2. 임업경영 주체 육성 .....	491
<b>제2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기반 확충</b> .....	494
1. 임도시설의 내실화 .....	494
2. 임업기계화 촉진 .....	497
3. 임업전문인력 양성 .....	499
<b>제3절 임산업 경쟁력 강화</b> .....	500
1. 목재산업 육성 및 국내재 이용촉진 .....	500
2. 단기소득 임산물을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 .....	501
3. 임산물 유통체계 개선 .....	502
<b>제4절 임업협동조합 육성</b> .....	503

<b>제5절 임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b>	504
1. 액화목재의 폴리우레탄 발포재 개발	504
2. 임목의 조직배양기술 개발	506
3. 세포배양 및 신물질 개발	507
4. 형질전환에 의한 신기능성 품종 육성	509
5. 대나무숯 제조기술 개발	509
<b>제6절 국유림 경영개선</b>	511
1. 국특회계 운영개선 및 국유림 확대 집단화	511
2. 국유림 책임경영제 정착	514
<b>제7절 산촌 종합 개발</b>	515
1.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515
2. 산촌종합개발 내실화 및 지원체계 확립	516
<b>제 3 장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b>	517
<b>제1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b>	517
1. 도시림의 체계적 관리	517
2. 지역특색 조림등 환경조림 확대	519
3. 5대강 유역 산림 특별관리	519
<b>제2절 산림 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문화 진흥</b>	521
1. 자연친화적 휴양시설의 확충과 경영체계의 합리화	521
2. 산림체험 기회의 확대	521
3. 산림문화 진흥	522
<b>제3절 산림재해방지</b>	524
1.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524

2.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	526
3. 산사태 예방 및 환경친화적 사방 .....	528
<b>제4절 식물자원의 보전관리 .....</b>	<b>531</b>
1. 야생식물자원 보전관리 .....	531
2. 비무장지대 산림생태계 조사 .....	533
<b>제 4 장 산림행정 쇄신 및 법령·제도 개선 .....</b>	<b>535</b>
제1절 산림행정조직 개편 .....	535
제2절 산림관련 법령정비 .....	536
제3절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	538
제4절 산림정책 모니터제 운영 .....	540
<b>제 3 편 1999년도 임정시책 .....</b>	<b>543</b>
<b>제 1 장 1999년도 임업정책 방향 .....</b>	<b>545</b>
제1절 1999년도 임정목표 .....	545
제2절 1999년도 임정방향 .....	546
제3절 1999년도 임정부문 예산 .....	548
<b>제 2 장 1999년도 주요 임정시책 .....</b>	<b>551</b>
제1절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 기반구축 .....	551
1. 우량 종자·묘목 생산 공급 .....	551
2. 지역특성과 생태계에 적합한 다양한 조림사업 추진 .....	551
3.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시설 .....	553
4. 자연생태계 보호 및 지역주민 편익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 ...	555

<b>제2절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내실화</b> .....	557
1. 숲 가꾸기 사업 .....	557
2.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	559
<b>제3절 사유림경영의 활성화</b> .....	569
1. 사유림경영의 기반구축 .....	560
2.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	561
3. 임업전문인력 양성 .....	562
4. 산촌 종합 개발 .....	562
<b>제4절 산림농업을 통한 산지소득증대</b> .....	564
1. 산림농업 생산기반 확충 .....	564
2. 임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소득 제고 .....	567
3.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혁 .....	569
<b>제5절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b> .....	570
1.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570
2. 야생 식물자원 관리 .....	571
3. 산림휴양시설 운영의 내실화 .....	573
4. 『녹색복권』 발행으로 녹색자금 조성 .....	574
<b>제6절 산불방지등 산림보호대책 강화</b> .....	575
1. 산불 예방활동 강화로 피해 최소화 .....	575
2. 산림병해충방제 방법개선 .....	578
<b>제7절 임산물 수출증대와 국제협력 강화</b> .....	579
1. 임산물 수출증대 추진 .....	579
2. 국제협력 증진 및 통상협력 강화 .....	580
<b>제8절 장기·안정적 목재공급을 위한 해외조림 확대</b> .....	581

<b>제9절 임업기술 개발 촉진</b> .....	583
1. 산삼·송이 등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의 개발 .....	583
2. 현장수요 중심의 실용화 기술개발 .....	585
3. 임산자원의 단기소득 상품화 기술개발 .....	586
<b>제10절 임업협동조합 개혁</b> .....	589
1. 추진 현황 .....	589
2. 주요 개혁방향 .....	590

# 표 · 그림

## 제 1 부 농업부문

### 제 1 편 1998년도 농업동향

<표 1-1- 1> 경제활동 부문별 성장률 .....	6
<표 1-1- 2> 총저축과 총투자 추이 .....	7
<표 1-1- 3> 농림어업의 성장률 .....	8
<표 1-1- 4> 광공업의 성장률 추이 .....	8
<표 1-1- 5>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	9
<표 1-1- 6>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성장률 추이 .....	9
<표 1-1- 7> 서비스업의 성장률 추이 .....	10
<표 1-1- 8>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	11
<표 1-1- 9> 취업자수와 실업률 .....	12
<표 1-1-10> 연도별 국제수지 현황 .....	14
<표 1-1-11> 세계 경제성장 추이 .....	17
<표 1-1-12> 주요국의 실업율과 소비자 물가상승율 .....	18
<표 1-1-13> 세계교역 신장률과 경상수지 변동 추이 .....	20
<표 1-1-14> 주요 국가의 단기금리 및 환율 변동추이 .....	21
<표 1-1-15>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	22
<그림1-1-1> 경지면적 변동추이 .....	23
<표 1-1-16> 농경지 이용현황 .....	24
<표 1-1-17>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	25
<표 1-1-18> 휴경면적 .....	25

<표 1-1-19> 농가소득의 구성 .....	26
<표 1-1-20> 경지 규모별 농가소득 .....	27
<표 1-1-21> 지대별 농가소득 .....	27
<표 1-1-22> 농업소득의 구성 .....	28
<표 1-1-23> 경지규모별 농업소득 .....	29
<표 1-1-24> 지대별 농가소득 .....	29
<표 1-1-25> 농외소득의 구성 .....	30
<표 1-1-26> 경지규모별 농외소득 .....	30
<표 1-1-27> 지대별 농외소득 .....	31
<표 1-1-28> 가계비 구성 .....	31
<표 1-1-29> 농가자산 현황 .....	32
<표 1-1-30> 용도별 농가부채 .....	33
<표 1-1-31> 차입처별 농가부채 .....	34
<표 1-1-32> 부채규모별 농가분포 .....	34
<표 1-1-33>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	35
<표 1-1-34> 농가자산과 부채비중 .....	35
<표 1-1-35> 농가편의용품 보유현황 .....	36
<표 1-1-36> 전·겸업 농가별 주요현황 .....	36
<표 1-1-37> 농가교역조건 동향 .....	37
<표 1-1-38> 농가판매 가격지수 동향 .....	39
<표 1-1-39> 농가구입 가격지수 동향 .....	41
<표 1-1-40> 농촌임료금 동향 .....	42
<표 1-1-41>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	43
<표 1-1-42> 농림어업 구조 추이 .....	44
<표 1-1-43>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	44
<표 1-1-44> 농업생산성 지표 .....	45
<표 1-2- 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	46

<표 1-2- 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상황 .....	47
<표 1-2- 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	48
<표 1-2- 4> 채소류 수급동향 .....	49
<표 1-2- 5> 과일류 수급동향 .....	50
<표 1-2- 6> 특용작물 수급동향 .....	51
<표 1-2- 7> 인삼 생산동향 .....	51
<표 1-2- 8> '98 축산물 수급동향 .....	52
<표 1-2- 9>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 .....	53
<표 1-2-10> 육류자급율 .....	53
<표 1-2-11> 사료수급 추이 .....	54
<표 1-2-12>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	55
<표 1-2-13> 초지조성 실적 .....	55
<표 1-2-14> 1인 1년당 식품공급량 1990~97 .....	56
<표 1-2-15> 1인 1일 에너지 공급량, 1990~97 .....	57
<표 1-2-16>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1990~98 .....	58
<표 1-2-17> 주요 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	59
<표 1-2-18>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	60
<표 1-2-19> 영양권장량(RDA)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	61
<표 1-2-20> 주요 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	62
<표 1-2-21> 연도별 주요 식품의 공급량 .....	63
<표 1-2-22> 연도별 주요 식품 자급률 추이 .....	64
<표 1-2-23> 농업생산성 지표 .....	65
<표 1-2-24>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및 사업체수 .....	66
<그림1-2-1> 식품가공산업의 제품출하지수 .....	68
<표 1-2-25>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	69
<표 1-2-26> 품목별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	70
<표 1-2-27>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	71



<표 1-2-28> 농림산물 수입동향 .....	72
<표 1-2-29> 남북교역동향 .....	73
<표 1-2-30> 반출입 통관실적 .....	74
<표 1-2-31> 주요 품목별 반출실적 .....	74
<표 1-2-32> 주요 품목별 반입실적 .....	75
<표 1-3- 1> 세계곡물수급상황 .....	75
<표 1-3- 2> 국제곡물가격추이 .....	79
<표 1-3- 3> 미국 농업 주요지표 .....	81
<표 1-3- 4> 일본 농업 주요지표 .....	86
<표 1-3- 5> EU 농업의 주요지표 .....	89
<표 1-3- 6> 주요 국제기구별 대북지원실적 및 목표 .....	112

## 제 2 편 1998년도 시행한 주요 농정 시책

<표 2-1- 1> 42조원 구조개선 + 15조원 농특세사업 예산(1998) .....	125
<표 2-1- 2> 42조원 구조개선 투융자사업 예산(1998) .....	126
<표 2-1- 3> 15조원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1998) .....	126
<표 2-1- 4> 농어촌 투융자계약 .....	127
<표 2-1- 5> 총 투융자 실적 .....	128
<표 2-1- 6> 지원대상별 투융자 실적 .....	129
<표 2-1- 7> '98 농림부분 규제완화 추진실적 .....	138
<표 2-1- 8> 농림부 조직개편 현황 .....	143
<표 2-1- 9> 농림부 공무원정원 조정현황 .....	143
<표 2-1-10> 농림부 소속기관 공무원정원 조정현황 .....	143
<표 2-1-11> 농촌진흥청 조직개편현황 .....	145
<표 2-1-12> 농촌진흥청 공무원정원 조정현황 .....	145
<표 2-1-13>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정원 조정현황 .....	145

<표 2-1-14> 산림청 조직개편 현황 .....	146
<표 2-1-15> 산림청 공무원정원 조정현황 .....	147
<표 2-1-16>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정원 조정현황 .....	147
<표 2-1-17>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 주요현황 .....	149
<표 2-1-18> 건의·제안 수신 추이 .....	151
<표 2-1-19> 1999년 제·개정된 농림법률 .....	158
<표 2-1-20> 복구지원단가 상향조정 및 현실화 내역 .....	163
<표 2-1-21> '98재해 지원실적 .....	164
<표 2-2- 1> '98 밀·사료 원료곡물 L/C개설·지원실적 .....	166
<표 2-2- 2> GSM-102 자금 사용실적 .....	167
<표 2-2- 3> 농자재 가격동향 .....	168
<표 2-2- 4> 연도별 귀농가구 현황 .....	169
<표 2-2- 5> 귀농창업자금 자원실적 .....	170
<표 2-2- 6>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실적 .....	172
<표 2-2- 7> '98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	173
<표 2-2- 8> 농림계 학교지원 실적 .....	178
<표 2-2- 9> 농업인구 및 농업종사자중 여성비율 추이 .....	182
<표 2-2-10> 관행방식대비 미곡종합처리장 처리효과 .....	187
<표 2-2-11> RPC 유통시 마진 감축효과 .....	187
<표 2-2-12> RPC 유통비율 .....	188
<표 2-2-13>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	191
<표 2-2-14>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	192
<표 2-2-15> 발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193
<표 2-2-16>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194
<그림 2-2-1>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	194
<표 2-2-17>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	195

<표 2-2-18>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	196
<표 2-2-19>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	196
<표 2-2-20>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	197
<표 2-2-21> '98 원예 특작부문 지원 실적 .....	198
<표 2-2-22> '98 인삼산업 지원 실적 .....	199
<표 2-2-23> '98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내역 .....	200
<표 2-2-24> 연도별 주요 농업기계공급 및 자금지원 .....	202
<표 2-2-25>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	203
<표 2-2-26> '98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지원 실적 .....	204
<표 2-2-27> '98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 실적 .....	205
<표 2-2-28>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 설치현황 .....	206
<표 2-2-29> 농업기계 기술훈련 실적 .....	207
<표 2-2-30> 신기술 농업기계 주요특성 .....	208
<표 2-2-31> 연도별 농약 소비 상황 .....	210
<표 2-2-32> 연도별 보급종 공급량 .....	211
<표 2-2-33> 곡종별 증수율 .....	211
<표 2-2-34> 비료 소비량 추세 .....	212
<표 2-2-35> '98 주요비종별 대농업인 판매가격 .....	213
<표 2-2-36> 기업체 기술이전 우수과제 내역 .....	215
<표 2-2-37> '98 벼 품종육성 현황 .....	217
<그림2-2-2> 토목에 강한 “수라벼” 생육현황 .....	217
<그림2-2-3> 축산분뇨 최비화 공정 .....	222
<표 2-2-38>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지원 현황 .....	227
<표 2-2-39> '98병해충 발생현황 .....	229
<표 2-2-40> 농림수산 정보망(AFFIS) 이용현황 .....	230
<표 2-2-41> 농업인 정보화 교육현황 .....	233
<표 2-2-42> 농림부 홈페이지 이용현황 .....	235

<표 2-2-43> 주요품목의 예시가격 .....	237
<표 2-2-44> 주요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	239
<표 2-2-45> 과일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	240
<표 2-2-46>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실적 .....	250
<표 2-2-47> 도로포장 현황 .....	254
<표 2-2-48>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획 .....	255
<표 2-2-49> 상수도 보급현황(1997년말 현재) .....	255
<표 2-2-50>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계획 .....	256
<표 2-2-51> 농촌휴양자원 개발계획 .....	257
<표 2-2-52> 학교급식 실시 현황 .....	258
<표 2-2-53> 형태별 급식 실시 현황 .....	259
<표 2-2-54> 공동도서관 지원 추진 실적과 계획 .....	260
<표 2-2-55> 농어가와 도시가계의 교육비 지출 비교 .....	260
<표 2-2-56> 농어촌지역의 교육비 부담요인별 비중 .....	261
<표 2-2-57>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	261
<표 2-2-58>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	262
<표 2-2-59> 기숙사 건립투자계획 .....	262
<표 2-2-60> 학자금 융자실적 .....	263
<표 2-2-61> '98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입학 현황 .....	264
<표 2-2-62> 농어촌소재 고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	264
<표 2-2-63> 우리나라 노령인구 증가 추이 .....	265
<표 2-2-64> '98 농어업인 연금 가입자 현황 .....	266
<표 2-2-65> 농어업인 연금 지원현황(농특세) .....	267
<표 2-2-66> 농어촌 보건소의 한방진료실 설치 및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계획 .....	268

### 제 3 편 1999년도 농정시책

<표 3-1- 1> 1999년 농림예산 기능별·재원별 규모(2칭 예산 포함) ...	281
<표 3-1- 2> 1998년 농림예산 사업별 규모 .....	282
<표 3-2- 1> 농업·농촌 투융자 규모 .....	284
<표 3-2- 2> 주요 분야별 투융자 규모 .....	285
<표 3-2- 3> 분야별·재원별 투융자 사업비 .....	286
<표 3-2- 4> 일반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	290
<표 3-2- 5>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	291
<표 3-2- 6> 연차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 .....	291
<표 3-2- 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	292
<표 3-2- 8> 최근의 쌀 수급현황 .....	294
<표 3-2- 9> 농산물 안전성 조사실적과 계획 .....	300
<표 3-2-10> '98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	302
<표 3-2-11> 농림수산계 학교지원 실적 .....	305
<표 3-2-12>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현황 .....	309
<표 3-2-13> 기술개발 성과활용 내역 .....	313
<표 3-2-14> 신지식농업인 선정현황 .....	318
<표 3-2-15> '99년도 농산물 수출전망 .....	320
<표 3-2-16>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	324
<표 3-2-17> 중학교 급식 추진계획 .....	337
<표 3-2-18> 1999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현황 .....	338
<표 3-2-19> '99 재해지원기준 단가 .....	344
<표 3-2-20> 농림부문예산 및 기금운용규모 .....	346
<표 3-2-21> 농업관련기금 조성 및 운용현황 .....	346
<표 3-2-22> 유사사업 통합그룹화 방안 .....	348
<표 3-2-23> 종합자금제와 기존제도와의 비교 .....	352
<표 3-2-24> 농림부 조직개편 현황 .....	355

<표 3-2-25> 농림부 공무원정원 조정현황('99.5.24) .....	355
<표 3-2-26> 농림부 소속기관 공무원정원 조정 현황('99.5.24) ....	356
<표 3-2-27>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현황 .....	357
<표 3-2-28> 농촌진흥청 공무원정원 조정현황('99.5.24) .....	357
<표 3-2-29>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정원 조정 현황('99.5.24) .....	357
<표 3-2-30> 산림청 조직개편 현황 .....	358
<표 3-2-31> 산림청 공무원정원 조정 현황('99.5.24) .....	358
<표 3-2-32>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정원 조정 현황('99.5.24) ....	359
<표 3-2-33> 기관별 자체 구조조정 실시계획 .....	360
<표 3-2-34> 농산물 반출입 현황 .....	372
<표 3-2-35> 한국의 대북한 지원규모(1995~98) .....	373
<표 3-2-36>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비교 .....	373
<표 3-2-37> 남북한 민간 농업협력사업 승인현황 .....	374

## 제 2 부 임업부문

제 1 편 1998년도 임업동향 .....	437
<표 1-1-1> 소유별 산림면적 및 축적. ....	441
<그림1-1-1> 임목축적 및 ha당 임목축적 추이 .....	442
<표 1-1-2> 임상별, 영급별 임야면적 및 임목축적 .....	442
<그림1-1-2> 주요 수종의 내부투자수익률 추이 .....	443
<표 1-1-3> 임목지의 임상별, 영급별 현황 .....	444
<표 1-1-4> 세계의 산림면적 추이 .....	449
<표 1-1-5> 지역별 임목축적 .....	450
<표 1-1-6> 공업국의 개발가능 산림 현황 .....	451
<표 1-1-7> 독일의 산림 현황 .....	458
<표 1-1-8> 독일의 목재수급 현황 .....	459
<표 1-1-9> 독일의 소유별 산림 현황 .....	459
<표 1-1-10> 세계 목재생산 및 소비 현황 .....	463
<표 1-1-11> 품목별 5대 생산국 .....	464
<그림1-2-1> '98년도 임산물 생산액 .....	471
<표 1-2-1> 연도별 임산물 생산액 추이 .....	472
<표 1-2-2> '98년도 수종별 용재 생산량 .....	473
<표 1-2-3> 연도별 종실류 생산량 .....	474
<표 1-2-4> 연도별 버섯류 생산량 .....	474
<표 1-2-5> 산나물류의 생산 .....	475
<표 1-2-6> 조경재의 생산규모 .....	476
<표 1-2-7> 임산물의 수출실적 .....	477
<표 1-2-8> 수출 대상국별 실적 .....	478

<표 1-2-9> 임산물의 수입 실적 .....	479
<표 1-2-10> 수입 대상국별 실적 .....	479

## 제 2 편 1998년도 주요 임정성과 ..... 481

<표 2-1-1> '98 조림계획 대 실적 .....	485
<표 2-1-2> 국고보조금 개선 .....	486
<표 2-1-3> '98 육림사업 계획 대 실적 .....	487
<표 2-1-4> '98 숲 가꾸기 사업 실적 .....	489
<표 2-2-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 요건 .....	492
<표 2-2-2>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 계획 .....	492
<표 2-2-3> 협업체 조직 현황 .....	494
<표 2-2-4> '98 임도시설 추진 실적 .....	495
<표 2-2-5> 임도시설 연도별 추진 실적 .....	497
<표 2-2-6> 임업기계 개발 추진 현황 .....	498
<표 2-2-7> '98 영림단 조직 현황 .....	500
<표 2-2-8> 연도별 세입 결손액 .....	512
<표 2-2-9> 국유림 확대 실적 .....	514
<표2-2-10> 지방산림관리청별 집약 경영구역 설정 현황 .....	514
<표2-2-11> 산촌종합개발 추진 실적 .....	516
<표 2-3-1> 도시림 연차별 추진 계획 .....	518
<표 2-3-2> 5대강 유역 산림특별관리 추진 실적 .....	520
<표 2-3-3> 산림휴양시설 조성 계획 .....	521
<표 2-3-4>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 .....	525
<표 2-3-5> 연도별 산림병해충 발생 면적 .....	527
<표 2-3-6> 연도별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 .....	527
<표 2-3-7> '98 산사태 등 피해 현황 .....	529



<표 2-3-8> '98 사방사업 추진 실적 .....	530
<표 2-3-9> 자생지 조사 현황 .....	531
<표2-3-10> 희귀식물 수집 및 증식 실적 .....	532
<표2-4- 1> 산림행정 조직 및 정원 현황 .....	536
<표2-4- 2> 산림정책 모니터요원 위축 현황 .....	540

### **제 3 편 1999년도 임정시책 .....**

<표 3-1-1> '99 임정부문 회계별·경비별 예산 .....	550
<표 3-2-1> '99 조림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민유림) .....	552
<표 3-2-2> '99 임도시설 추진 계획 .....	553
<표 3-2-3> 임도시설 장기 계획 .....	555
<표 3-2-4> '99 사방사업 추진 계획 .....	556
<표 3-2-5> 숲 가꾸기 사업 현황 .....	558
<표 3-2-6> 숲 가꾸기 산물 수집·활용 계획 .....	558
<표 3-2-7> '99 실직자 기술교육 계획 .....	559
<표 3-2-8> '99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	561
<표 3-2-9> 단기소득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 현황 .....	566
<표3-2-10> '99 5대강 유역 산림사업 계획 .....	571
<표3-2-11> '99 우리 꽃길 조성 사업량 및 사업비 .....	572
<표3-2-12> '99 산림 병해충별 방제 계획 .....	578
<표3-2-13> '99 임산물 수출목표 .....	579
<표3-2-14> 해외조림 장기계획 지표 .....	583

# 제 1 부 농업부문

제 1 편 1998년도 농업동향

제 2 편 1998년도에 시행한 주요 농정 시책

제 3 편 1999년도 농정 시책

여 백

# 제 1 편 1998년 농업동향

여 백

# 제 1 장 경제동향

## 제 1 절 국내외 경제동향

### 1. 국내경제동향

#### 가. 경제성장

1998년중 우리 경제는 전년에 이은 경기하강 국면이 지속된 데다 지난 연말의 외환위기에 따른 IMF체제하에서 경기의 침체가 심화되어 실질 GNP 기준 경제성장률이 전년의 5.5% 증가에서 7.9% 감소로 급반전되었다. 1인당 GNP도 경기후퇴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3,484달러 줄어든 6,823달러였다.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5.8% 감소하였다. 이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하였으나 2/4~3/4분기 중에는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7.2%와 7.1%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4/4분기에 5.3%로 감소폭이 약간 둔화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6.3%)을 포함해 광공업(-7.4%), 서비스업(-5.4%) 등 전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특히, 건설업(-9.0%)이 부진했다.

#### (1) 소비지출

최종 소비지출은 수출(-4.9%)이 감소하였고 설비투자(-38.5%)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내구소비재를 비롯한 민간소비(-9.6%)도 크게 위축되어 전년의 3.5% 성장에서 5.8% 감소하였다.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감소, 실업자의 증가 및 고용 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전년의 3.1%보다 크게 낮아져 감소(-9.6%)를 나타냈다. 그러나,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9% 감소로 2/4분기 -11.2%, 3/4분기 -10.4%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가계소비도 큰 폭으로 감소(-9.8%)하였는데, 이는 승용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28.5% 줄어들고, 의복 등 준내구재와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도 17.9% 줄어든 데다 그 동안 증가추세였던 해외 여행에 대한 지출도 감소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정부지출도 구조조정 등으로 인건비와 물건비 등에 대한 지출이 낮아졌지만 실업자 보호 등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0.1% 감소에 머물렀다.

<표1-1-1> 경제활동 부문별 성장률

구 분	'90	'94	'95	'96	'97	'98(p)
국민총생산(GNP)	9.6	8.6	8.9	7.1	5.5	△7.9
국내총생산(GDP)	9.5	8.3	8.9	6.8	5.9	△5.8
농 립 어 업	△4.6	0.2	6.6	3.3	4.6	△6.3
광 공 업	9.3	10.8	11.1	6.7	6.5	△7.4
전기가스수도사업	17.9	12.4	7.5	12.0	11.5	△0.5
건 설 업	25.7	4.6	8.8	6.9	1.4	△9.0
서 비 스 업 <sup>1)</sup>	9.9	10.3	9.6	7.8	5.4	△5.4
소 비	10.1	7.0	7.2	6.9	3.5	△8.2
(민 간)	(10.3)	(7.6)	(8.3)	(6.8)	(3.1)	(△9.6)
(정 부)	(8.9)	(4.2)	(1.0)	(7.8)	(5.7)	(△0.1)
총고정자본 형성	18.3	11.8	11.7	7.1	△3.5	△21.1
(건 설)	(29.1)	(4.5)	(8.7)	(6.1)	(2.7)	(△10.2)
(설 비)	(18.4)	(23.6)	(15.8)	(8.3)	(△11.3)	(△38.5)
수 출	4.2	16.5	24.0	13.0	23.6	13.3
(상 품) <sup>2)</sup>	(3.4)	(14.6)	(25.3)	(13.0)	(24.7)	(15.6)
수 입	14.4	21.7	22.0	14.8	3.8	△22.0
(상 품) <sup>3)</sup>	(14.0)	(21.8)	(21.3)	(14.1)	(3.2)	(△24.6)

주: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금융취급숙서비스(공제), 수입세를 포함

2) F.O.B. 기준

3) C.I.F. 기준

자료: 한국은행

## (2) 저축과 투자

총저축률(33.2%)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반면 국내총투자율(20.9%)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투자재원 자립도(158.3%)가 전년(97.8%)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민간저축률은 소비 위축으로 전년보다 2.3% 상승한 반면 정부 총저축률이 경기부진에 따른 조세수입 감소로 전년보다 2.5% 낮아짐에 따라 총저축률은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국내총투자율은 재고투자와 설비 등 고정투자의 대폭 감소로 전년보다 13.5% 낮아진 20.9% 시현하였다.

<표1-1-2>

### 총저축과 총투자 추이

(단위: %)

구 분	'90	'94	'95	'96	'97	'98(p)
총 저 축 률	35.9	35.4	36.2	34.8	34.6	33.2
- 민 간	27.4	26.0	25.7	23.6	24.3	25.1
- 정 부	8.5	9.3	10.6	11.3	10.3	8.1
국내총투자율	37.1	36.2	37.4	38.8	35.3	20.9
- 민 간	32.7	31.2	32.5	33.3	29.2	14.7
- 정 부	4.3	5.0	4.9	5.6	6.1	6.2
투자재원자립도	N.A.	97.7	96.9	89.8	97.8	158.3

자료: 한국은행

## (3) 산업별 생산활동

농림어업을 포함한 전산업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 특히 건설업이 -9.0%로 두드러지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농림어업 성장률은 전년의 2.5% 성장에서 -6.3%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농업부문은 수해의 영향으로 미곡, 과일류, 채소류 등 거의 모든 작물생산이 줄어들어 전년도 1.8% 성장에서 크게 하락한 -6.2%를 나타냈다. 임업도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률(-4.1%)보다 더 하락하여 -5.3%의 성장률을 보였다. 어업도 전년도에 비해 -7.6%의 성장률을 보였다. 어업의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한일어업협정의 발효로 어획고가 급격히 줄어들어 기인한다. 축산업 성장률만이 양돈업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1.5%의 성장률을 보였다.

<표 1-1-3> 농림어업의 성장률

(단위: %)

구 분	'90	'94	'95	'96	'97	'98(p)
농림어업	△4.6	0.2	6.6	3.3	4.6	△6.3
농업	△4.9	0.1	9.4	4.2	4.2	△6.2
재배업	△6.0	1.7	4.9	4.3	2.4	△7.7
축산업	△1.5	△3.8	9.6	1.3	△1.8	1.5
임업	△9.3	6.1	△8.9	△0.9	△2.9	△5.3
어업	△0.2	0.7	△7.4	△2.4	6.2	△7.6

자료: 한국은행

광공업은 전년의 6.5% 성장에서 7.4% 마이너스 성장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광업 및 채석업은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로 석탄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철광석은 23.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기타 금, 티타늄 등 금속광물도 매장량 고갈로 크게 줄어 전체적으로 광업은 22.9%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제조업은 화학제품 및 고무프라스틱제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밀광학기계와 사무용기계,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난해 6.2% 성장에 비해 13.4%가 감소한 -7.2% 성장을 기록하였다. 제조업 유형별로 경공업이 11.7% 줄었고 중화학공업이 5.9% 감소하였다.

<표 1-1-4> 광공업의 성장률 추이

(단위: %)

구 분	'90	'94	'95	'96	'97	'98
광업 및 채석업	△10.6	4.0	△5.5	△5.3	△0.4	△22.9
제조업	9.1	10.5	10.8	7.4	6.2	△7.2
경공업	2.7	3.5	△0.1	△2.8	△2.2	△11.7
중화학공업	12.7	13.1	14.7	10.6	8.5	△5.9

자료: 한국은행

건설업은 민간건설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비주거용 건물건설(공장, 사무실)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주거용 건물건설도 줄어든 데다 토목건설도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11.2% 감소하였다. 정부건설도 공공건물, 상하수도 등 대부분이 부진하여 3.3% 감소하였다. 민간토목건설은 건설부문의 침체로 전년의 12.9% 성장에서 3.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표 1-1-5>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90	'94	'95	'96	'97	'98
건설업	25.7	4.6	8.8	6.9	1.4	△9.0
민간건설	27.5	2.2	10.7	3.5	0.2	△11.2
정부건설	12.9	8.3	1.1	16.3	8.5	△3.3

자료: 한국은행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년의 성장률(11.5%)에 비해 0.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전기업은 경기위축으로 가정용 및 산업용 전력 수요가 둔화됐으나, 공공 및 서비스용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한 데 힘입어 0.4% 성장하였다. 가스 및 열 공급업도 경기침체와 가계소득이 줄어들어 2.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수도업도 가계소득의 감소로 -6.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표 1-1-6>                   **전기·가스·수도사업의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90	'94	'95	'96	'97	'98
전기·가스·수도	17.9	12.4	7.5	12.0	11.5	△0.5
전기업	15.6	11.4	7.4	12.5	10.8	0.4
가스 및 열공급	34.8	26.6	26.5	18.1	15.7	△2.9
수도업	10.2	11.0	△0.8	△0.2	△1.2	△6.3

자료: 한국은행

서비스업은 통신업이 호조를 보였으나 도소매업, 운수업,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의 5.4% 성장에서 반전되어 -5.4% 성장을 기록하였다.

도소매업은 수출상품 거래가 증가하였으나 수입상품 및 공산품 거래가 국내수요 위축으로 크게 부진하여 9.5% 감소하였다. 음식숙박업은 숙박업이 가계의 소비위축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0.5% 감소하였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전년의 15.2% 성장에서 크게 둔화되어 1.5%의 성장에 그쳤다. 운수업은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및 여행객 감소로 육상, 수상 및 항공운수 등이 모두 부진하여 8.4% 감소하였다. 창고업은 공산품 및 냉장상품 보관량이 줄어들어 17.5% 감소하였다. 통신업은 시내전화, 시외전화 및 무선호출 이용실적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동전화 이용실적이 큰 폭으로 늘어나 19.4%의 높은 신장세를 유지하였다.

#### <표 1-1-7> 서비스업의 성장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

구 분	'90	'94	'95	'96	'97	'98(p)
서비스업 <sup>1)</sup>	9.9	10.3	9.6	7.8	5.4	△5.4
도소매·숙박·음식	7.9	8.6	8.3	5.8	5.0	△7.7
운수·창고·통신	11.5	12.6	13.3	12.4	15.2	1.5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13.3	9.8	7.7	7.0	5.8	△1.0
사회 및 개인 서비스	9.4	9.8	9.3	4.1	3.0	△5.3

주: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수입세를 포함하고 금융귀금속서비스는 삭감  
자료: 한국은행

### 나. 물가와 금리

#### (1) 물 가

'98년 생산자 물가는 전년의 3.9% 상승에서 크게 상승하여 12.2% 상승률을 보였다. 농림수산품은 3.9% 상승에 그친 반면에 공산품과 전력·수도·도

시가스는 각각 14.5%, 14.0%로 크게 상승하였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의 상승률(4.5%)보다 상승폭이 커져 7.5% 상승률을 보였다. 식료품 상승률은 6.1%를 보인 반면 식료품 외는 7.7% 상승률을 보였다.

'98년 12월 기준으로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하락하고 전월에 비해 2.6% 하락하였다. 생산자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게 된 원인은 환율의 하락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98년에는 전반적으로 농림수산물 물가가 다른 공산품과 서비스물가에 비하여 상승률이 크게 낮았다. 이로써 IMF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가계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경제위기극복의 토대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1-1-8>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

(단위: %)

구분	'90	'94	'95	'96	'97	'98
생산자물가	4.2	2.8	4.7	2.7	3.9	12.2
농림수산물	14.3	12.1	3.9	2.1	1.6	3.9
공산품	2.4	1.6	4.9	2.9	4.2	14.51
전력·수도·도시가스	△5.8	0.5	3.5	2.2	4.5	4.0
전도시 소비자물가	8.5	6.2	4.5	4.9	4.5	7.5
식료품	10.0	9.4	3.4	3.9	3.8	6.1
식료품 이외	7.7	4.7	5.0	5.4	4.6	7.7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공산품 가격은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IMF 체제의 영향으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여 1/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7.2% 상승하였고 이후 차츰 안정되면서 4/4분기에는 9.5% 상승으로 상승폭이 둔화되었다. 이는 원자재 가격이 1/4분기의 45.9% 상승에서 4/4분기에는 -0.7%로 안정된데 기인했다.

소비자물가도 전년동기 대비 1/4분기에 8.9% 상승에 차츰 안정되어 4/4분기에는 6.0% 상승으로 하향 안정추세를 보였다.

## (2) 금 리

시장금리는 전년 말에 시작된 외환위기 때문에 급등했던 금리가 IMF 위기 상황이 점차 해소되면서 1/4분기의 20%를 넘는 고금리 수준에서 점차 하향세를 보이다가 5월에 10%대로 진입하였고 3/4분기 말부터 10%미만으로 하향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 다. 고용과 임금

### (1) 고 용

'98년 1/4분기에는 IMF 체제하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취업률이 1/4분기에 3.7% 감소, 2/4분기에는 5.4% 감소, 3/4분기에는 6.4%로 감소폭이 확대되다가 4/4분기에 5.8% 감소로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4분기에 59.6%로 낮아졌다가 2/4분기에 61.6%로 증가하였고 4/4분기에는 60.5%를 기록하였다. 특히, 여성의 취업자수가 1/4분기에 급격히 줄었다가 2/4분기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산업별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생산활동 둔화에 따른 고용기회의 위축, 기업들의 감량 경영 노력 등으로 연중 감소하다가 연말에는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건설업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연중 점차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1-1-9>

취업자수와 실업률

(단위 : 천명, %)

구 분	'90	'94	'95	'96	'97	'98	구성비 (98)
경제활동인구	18,487	20,326	20,797	21,188	21,604	21,390	-
취업자수	18,036	19,837	20,377	20,764	21,048	19,926	100.0
농림어업	3,152	2,698	2,547	2,405	2,324	2,424	12.2
광공업	4,990	4,735	4,799	4,701	4,501	3,904	19.6
SOC, 기타 서비스업	9,816	12,398	13,041	13,657	14,223	13,598	68.2
실업률	2.3	2.4	2.0	2.0	2.6	6.8	-

자료 : 한국은행

그러나 유일하게 농림업분야는 귀농가구 지원과 숲가꾸기 사업, 농촌 용배수로 준설사업 등 각종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취업자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농산물가격안정과 더불어 IMF위기극복에 농림분야가 기여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예로 기록되고 있다.

## (2) 임 금

'98년 전산업 명목임금 상승률은 경기 부진 및 이에 따른 고용불안 등으로 '97년의 7.1%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 -2.5% 기록하였다. 특히, 3/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8.1%를 기록하였다.

명목임금의 하락은 IMF의 영향으로 전 산업에 걸쳐 발생했다.

## 라. 경상수지와 환율

'98년 중 우리 나라의 경상수지<sup>1)</sup>는 400.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81.7억 달러)보다 크게 흑자로 전환되었다. 대폭 흑자로 전환된 것은 수출의 증가에 기인한 것보다는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에 기인했다.

### (1) 상품수지

상품수지는 전년(-31.8억 달러)에 비해 522.6억 달러 증가한 411.7억 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수출(국제수지 기준)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1,318.1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국제수지 기준)은 경기침체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36.1% 감소한 906.4억달러에 머물렀다.

---

1) '97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바뀐 국제수지 편제를 따랐다. 새로운 편제에서는 개편전의 경상계정, 자본계정, 금융계정이 경상계정, 자본계정 및 준비자산증감으로 변경되며, 금융계정에 계상되던 예금은행의 대외자본거래는 민간기업의 대외거래와 함께 자본계정에 계상된다. 또한 준비자산증감에는 각종 대외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 증감만을 기록하게 된다. 경상계정의 개편전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 등은 상품·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로 변경되며, 자본계정은 장·단기 기간구분을 폐지하고 자본의 성격에 따라 투자수지와 기타 자본수지로 구분된다.

<표 1-1-10>

연도별 국제수지 현황

(단위: 10억 달러)

구 분	'90	'94	'95	'96	'97	'98
경상수지	△2.0	△3.9	△8.5	△23.0	△8.6	400.4
상품 및 서비스수지	△3.1	△4.7	△7.4	△21.1	△6.8	415.5
상품수지	△2.5	△2.9	△4.4	△15.0	△3.9	411.7
수 출	63.7	95.0	124.6	130.0	138.6	1,318.1
수 입	66.1	97.8	129.1	144.9	142.5	906.4
서비스수지	△0.6	△1.8	△3.0	△6.2	△2.9	3.8
수 입	9.6	16.8	22.8	23.4	26.3	246.0
지 급	10.3	18.6	25.8	29.6	29.2	242.2
소득수지	△0.1	△0.5	△1.3	△1.8	△2.7	△48.1
경상이전수지	1.1	1.3	0.2	△0.05	0.9	33.0
자본수지	2.6	10.3	16.8	23.3	5.4	△39.9
투자수지	2.9	10.7	17.3	23.9	6.0	△42.2
기타자본수지	0.3	△0.4	△0.5	△0.6	△0.6	2.3
준비자산증감	1.2	△4.6	△7.0	△1.4	11.9	△309.8
오차 및 누락	△1.7	△1.8	△1.2	1.1	△8.7	△50.7

자료: 한국은행

(가) 수 출

연중 통관기준에 의한 수출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1,323.1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철강제품의 수출이 11.8%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제품에서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대선진국 수출이 미국과 스위스 등 유럽국가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 지역이 부진하여 감소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먼저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은 철강제품의 증가를 제외하고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제품수출이 감소하였다. 반면에 경공업제품의 경우 타이어는 수출이 전년에 비해 7.4% 증가하였고 섬유사와 직물 등은 감소하였다.

## (나) 수 입

연중 통관기준 수입액은 전년대비 36.1% 감소한 932.8억달러를 기록하였다. '98년 중에 수입이 감소세로 급반전한 것은 IMF 외환위기와 내수산업의 침체로 인한 투자수요의 위축으로 자본재 및 소비재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데다 원자재도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신용장 개설 애로 등으로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필리핀으로부터의 수입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품목별로는 자본재 수입은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기계류(-48.7%)와 항공기, 선박 등 수송장비(-46.1%)의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전년대비 35.5% 감소하였고, 원자재 수입은 전년대비 34.3% 감소하였으며, 소비재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 기업부도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대비 39.5%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37.6%, 13.6%로 전년보다 하락하였으며, 원자재 수입은 전년의 52.7%에서 48.9%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 (2) 서비스수지

'98년 중 서비스수지는 3.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적자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IMF와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수출입물동량의 감소에 기인되었다.

항목별로는 운수수지가 10.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6.9억달러)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되었으며, 여행수지는 원화 환율 하락과 내국인의 출국자의 감소와 달러 가치의 상승에 따른 외국인 방문의 증가에 따라 전년의 22.6억달러 적자에서 28.8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

## (3) 환 율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86.2%로 절하되어 달러당 1,611.7원이 되었다가 2/4분기에 1,394.6원(56.4% 절하), 3/4분기에 1,325.2원



(47.5% 절하), 그리고 4/4분기에 1,279.4원(11.8% 절하)으로 환율의 안정을 다시 찾아가는 추세를 보였다. 외국투자자금의 유입과 IMF 극복을 위한 차입의 증가가 원화환율의 절하율을 축소시켰다.

대엔화 환율은 전년의 100엔당 1,087.8원에서 1,053원으로 약간 절상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규천)

## 2. 해외경제동향

### 가. 경제성장

'98년중 세계경제는 미국 및 EU권 경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의 침체와 '97년 7월 이후에 시작된 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가 러시아 및 중남미 경제로 확산되면서 신흥개도국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함에 따라 성장률이 전년대비 1.5% 포인트 낮은 1.9%의 저성장을 기록하였다.

선진국 경제동향을 주요국별로 보면 작년도 3.9%의 고성장으로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미국 경제는 '98년에도 민간소비 호조와 설비투자의 확대에 전년도와 같은 3.9%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고용사정의 악화와 지가 및 주가 하락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된 데다 경기전망의 불투명과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현상으로 기업들의 투자도 부진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4.3% 포인트 줄어든 마이너스 2.9%의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다. 유럽연합 경제는 전년도 후반기 경기회복세가 다소 확대되고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음에 따라 전년도보다 0.3% 포인트 높은 2.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개도국 경제를 보면 아시아 개도국은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중남미 개도국은 1차산품 수출부진 및 환율방어를 위한 금리인상과 러시아 모라토리움(채무불이행) 선언 이후의 경제 불안정 등에 따른 내수위축으로 전년대비 3.7% 포인트 줄어든 1.8%의 저성장율을 기록하였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들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강력한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극도의 내수위축과 주요 교역 상대국인 일본의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

도 부진함에 따라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중국은 실업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과 양쯔강 대홍수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포인트 낮은 7.8%의 성장에 그쳤다.

<표 1-1-11>

세계경제성장 추이

(단위: %)

	1995	1996	1997	1998
세 계	2.7	3.5	3.4	1.9
선 진 국	2.2	3.0	3.0	2.2
미 국	2.3	3.4	3.9	3.9
일 본	1.4	5.2	1.4	△2.9
유럽 연합	2.4	1.9	2.5	2.8
개 도 국	4.7	5.8	5.5	1.8
태평양연안국 <sup>1)</sup>	7.6	6.5	5.4	△4.5
중 국	9.0	9.7	8.8	7.8
중 남 미	2.7	3.2	5.1	1.2
동 유 럽	5.7	3.9	3.1	2.3
구소련연방	△5.0	△3.4	0.7	△3.1

주: 1) 태평양연안국에는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및 태국이 포함됨.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nd Quarter, 1999.

나. 고용 및 물가

1998년중 선진국의 고용사정을 보면 미국의 경우 경기호조 지속으로 지난해보다 더 호전되고 EU국가들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경기침체로 크게 악화되었다.

국별로 보면 미국은 1998년 들어 3%대 중반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실업률은 1970년 이후 28년만에 최저수준인 4.5%로 낮아져 고용사정이 크게 호전되었다. 한편 일본은 경기침체 심화에 따른 기업부도 증가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실업률이 전년도의 3.4%에서 4%대로 상승

하는 등 고용사정이 전후 최악의 상태를 나타냈다. EU국가들도 정부의 고용촉진 정책에 힘입어 선진국의 실업률이 전년대비 1.4%포인트 낮아진 9.6%로 나타났다.

1998년중 선진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오름세가 더욱 둔화되어 1991년 이래 8년 연속 상승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물가가 안정된 것은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대폭 하락,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절하 등에 따라 수입물가가 크게 하락한데 주로 기인하였다.

국별로 보면 미국은 지속적인 고용확대에 따른 임금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달러화 강세에 힘입은 수입물가 안정, 금리하락에 따른 기업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물가상승이 전년의 2.3%에서 1%대로 크게 낮아졌다.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임금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0.9%포인트 낮아진 0.6%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급격한 환율절하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는 전년대비 3.2%포인트 급등한 7.9%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중남미 국가들은 재정긴축과 고금리 정책 등으로 전년보다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표 1-1-12> 주요국의 실업률과 소비자물가 상승율

				1995	1996	1997	1998
실업률	선진국			8.5	8.5	8.2	7.9
	미국			5.6	5.4	4.9	4.5
	일본			3.2	3.4	3.4	4.1
	EU			11.0	11.2	11.0	9.6
소비자물가	선진국			2.4	2.2	2.0	1.4
	미국			2.8	2.9	2.3	1.6
	일본			0.1	0.1	1.7	0.6
	EU			3.0	2.4	1.9	1.6
	개도국			2.7	3.2	5.1	1.2
	아시아			8.0	7.9	4.7	7.9
	중남미			21.0	20.8	13.9	10.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ecember, 1998.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nd Quarter, 1999.

## 다. 교역 및 경상수지

1998년중 세계교역(수출입물량기준)은 아시아 외환위기국들의 수입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다 세계경제 성장세도 크게 둔화됨에 따라 그 신장률이 전년의 10% 가까운 수준에서 3% 내외로 대폭 하락하였다.

선진국의 수입(물량기준)은 미국의 경우 민간소비 호조를 반영하여 비내구소비재와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작년에 이어 11%대 중반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EU국가들도 작년보다 둔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경기침체 심화에 따라 수입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일본의 수입감소는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들의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침체 탈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한편 개도국의 수출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본 및 역내 개도국의 수입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거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도 아시아 지역에 대한 1차산품 수출부진에 따라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1998년 선진국의 경상수지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미국은 적자가 크게 확대된 반면 일본은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EU도 여전히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였다. 우선 미국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중남미 경제불안의 영향으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 호조 및 8월 까지의 달러화 강세 등으로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의 1.5배 수준인 2,300억달러 수준에 달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내수침체 심화에 따라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상품수지 흑자가 늘어난 데다 운수수지 및 여행수지 등 서비스 수지 적자도 줄어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작년에 이어 큰폭으로 확대되어 1994년 이후 최대 규모인 약1,300억 달러 정도에 이르렀다. 또한 EU의 경상수지는 프랑스, 영국 등의 흑자가 줄어들었으나 1991년이 후 적자를 지속해 온 독일의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였다.

한편 개도국의 경상수지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내경기 침체와 환율 절하에 따른 수입수요 위축에 따라 전년보다 흑자규모가 크게 늘어났으나 중남미 국가들은 큰 폭의 적자가 지속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적자가 늘어났다. 특히 중국은 아시아 지역 경기위축과 경쟁국 환율 절하 등에 따른 수출부진 등으로 흑자규모가 작년보다 감소하였고 중남미 국가 또한 엘니뇨 피해에 따른 농산물 생산 감소와 주요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수출액이 전년 수준에 그침에 따라 경상수지가 현저히 악화되었다.

<표 1-1-13>

세계 교역 신장률과 경상수지 변동 추이

(단위: %, 10억달러)

구 분		1996	1997	1998
교역신장률	세계교역 신장률	7.0	9.9	3.3
	선진국 수입	6.5	9.2	4.6
	미 국	9.2	13.9	11.5
	일 본	11.5	△0.2	△9.4
	E U	4.2	8.8	7.5
	개도국 수출	8.7	11.3	2.9
경상수지	선진국	35	72	44
	미 국	△135	△155	△231
	일 본	66	94	128
	E U	90	123	100
	개도국	△74	△66	△95
	아시아	△39	5	33
	중남미	△38	△65	△87
	체제전환국	△18	△25	△21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nd Quarter, 1999.

라. 국제금리 및 환율

1998년중 국제금리 동향을 보면 미국 등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였는데 특히 9월말 이후 잇단 금리인하에 따라 미일간 단기금리

격차가 다소 축소되었다.

미국 금리는 재정수지 개선에 따라 국제 공급물량이 감소하고 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외국자본의 채권시장 유입이 지속되면서 장단기금리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유럽의 금리도 작년보다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앞으로의 경기전망도 불투명한데다 하반기에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을 더욱 완화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 모두 하락하였다. 독일 금리도 아시아 등 신흥개도국을 이탈한 투기자금이 유입되면서 연초이래 하락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환율 동향을 보면 1995년 4월 이후 강세를 지속해온 달러화는 1998년 8월 초순까지 엔화에 대해 강세를 나타내었으나 독일 마르크화 및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안정세를 지속하였으며 그 후로는 엔화와 마르크화에 대해 약세로 돌아섰다. 우선 마르크화의 경우 8월 초순까지 대체로 전년말의 달러당 1.8마르크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및 중남미 경제 불안 등에 따라 약세로 돌아서 12월초에는 달러당 1.67마르크를 나타내었으며,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전년말의 파운드당 1.64달러를 중심으로 소폭의 변동을 보였다.

<표 1-1-14> 주요 국가의 단기금리 및 환율 변동 추이

(단위: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금 리	미 국	5.9	5.4	5.6	5.5
	영 국	6.7	6.0	6.8	7.3
	독 일	4.5	3.3	3.3	3.5
	일 본	1.2	0.6	0.6	0.7
환 율	마르크/달러	1.43	1.50	1.73	1.76
	엔/달러	94.1	108.8	121.0	130.9
	달러/파운드	1.58	1.56	1.64	1.66

주: 주요국의 단기금리는 3개월 만기 기준임.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2nd Quarter,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창길)

## 제 2 절 농촌경제 동향

### 1. 농업구조

#### 가.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98년말 현재 총농가수는 1,413천호이고, 농가인구는 4,400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농가수는 27천호(1.9%), 농가인구는 68천명(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5>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구 분	단위	1993	1997	1998	전년대비		5개년('93~'98) 평균증감율(%)	
					증감	증감율(%)		
농 가 호 수	천호	1,592	1,440	1,413	△27	△1.9	△2.4	
농 가 인 구 (총인구비중)	천명 (%)	5,407 (12.3)	4,468 (9.7)	4,400 (9.5)	△68	△1.5	△4.0	
호당농가인구	명	3.40	3.10	3.11				
연령별 농 가 인 구	50세이상 (구성비)	천명 (%)	2,271 (42.0)	2,118 (47.4)	2,086 (47.4)	△32	△1.5	△1.7
	50세미만 (구성비)	천명 (%)	3,136 (58.0)	2,350 (52.6)	2,314 (52.6)	△36	△1.5	△5.9
성 별 농 가 인 구	남 자 (구성비)	천명 (%)	2,610 (48.3)	2,149 (48.1)	2,129 (48.4)	△20	△0.9	△4.0
	여 자 (구성비)	천명 (%)	2,797 (51.7)	2,319 (51.9)	2,271 (51.6)	△48	△2.1	△4.1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농가와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대, 대규모 경영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소규모 영세농가의 상

대적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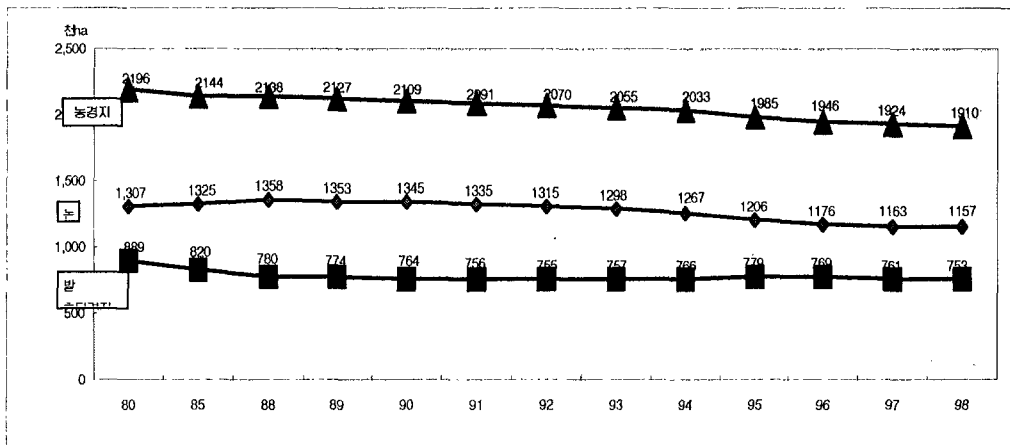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중은 9.5%로 일본의 9.2%(1997년기준)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47.4%로 1997년도와 같은 비중을 보였다. 성별비율은 남자가 48.4%, 여자가 51.6%로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농경지

농경지 면적은 도시화에 따른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용도 전환면적이 크게 증가되어 지난 5년간 해마다 연평균 28.9천ha씩 줄고 있다.

'98년말의 경지면적은 '97년보다 13천ha 줄어든 1,910천ha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논은 전년에 비하여 5천ha 감소한 1,157천ha이고, 밭은 8천ha 감소한 753천ha로 나타났다. 경지면적의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건물·건축용 6.3천ha, 공공시설용 5.9천ha, 기타사유 13.2천ha로 총 25.3천ha 감소하였으며, 개간·간척 9.0천ha, 복구 등 3.3천ha로 총 12.3천ha 증가하였다.

< 그림 1-1-1 > 경지면적 변동추이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98년의 경지 이용면적은 2,118천ha로 전년보다 21천ha가 증가하였으며, 경지이용율은 전년의 107.8%에서 110.1%로 높아졌다. 경지이용 면적의 증



가내용을 살펴보면 식량작물의 이용면적은 미곡과 맥류 등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21천ha가 증가하였다.

채소·과수 등 경제작물 중 채소면적은 고추와 과채류의 재배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배추와 마늘, 양파 재배면적이 소폭 증가하여 채소 전체면적을 7천ha가 감소하고, 과수면적이 1천ha 감소하였으나 기타 특용작물 등의 면적이 11천ha가 증가하여 경제작물 전체적으로는 3천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휴경면적은 22.3천ha가 발생하여 전년보다 7.2천ha가 감소되었는데 이는 휴경지 생산화가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6>

농경지 이용현황

(단위 : 천ha)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경지이용면적	2,261	2,285	2,205	2,197	2,142	2,097	2,118
식 량 작 물	1,478	1,467	1,403	1,346	1,340	1,314	1,332
(미 곡)	(1,157)	(1,136)	(1,103)	(1,056)	(1,050)	(1,052)	(1,059)
(맥 류)	(103)	(117)	(85)	(90)	(95)	(70)	(83)
(두류 등)	(218)	(214)	(215)	(200)	(195)	(192)	(190)
경 제 작 물	783	818	802	851	802	783	786
(채 소)	(306)	(318)	(303)	(322)	(311)	(285)	(278)
(과 수)	(146)	(154)	(161)	(172)	(171)	(174)	(173)
(기타) <sup>1)</sup>	(331)	(346)	(338)	(357)	(320)	(324)	(335)
경 지 면 적	2,070	2,055	2,033	1,985	1,945	1,923	1,910
경지이용율(%)	108.1	110.4	107.3	108.1	107.9	107.8	110.1
( 논 )	(103.4)	(105.5)	(102.5)	(104.1)	(106.1)	(104.8)	(107.0)
( 밭 )	(116.4)	(118.9)	(115.7)	(114.7)	(110.7)	(112.4)	(114.9)

주 : <sup>1)</sup> 특·약용작물, 시설작물, 과수원, 병발, 관상수 심은 밭, 묘포, 기타를 뜻함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1-17>

농경지 사유별 증감내역

(단위 : 천ha)

연도별	증 가				감 소				증 감 면 적
	계	개 간	간 척	복 구	계	건 물 건축	공 시 공 설	기타	
'91	5.4	1.3	3.3	0.8	23.4	9.0	5.0	9.4	△18.0
'92	4.9	1.0	1.4	2.5	25.9	8.4	4.7	12.8	△21.0
'93	10.0	2.1	5.0	2.9	25.1	7.8	4.5	12.8	△15.1
'94	9.9	4.9	3.5	1.5	32.0	11.2	6.5	14.3	△22.1
'95	15.6	5.1	9.0	1.5	63.0	24.7	11.2	27.1	△47.4
'96	12.1	8.9	0.5	2.7	51.9	16.8	6.6	28.5	△39.8
'97	10.9	5.5	3.1	2.3	32.9	10.4	7.1	15.4	△22.0
'98	12.3	5.9	3.1	3.3	25.3	6.3	5.9	13.2	△1.3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표 1-1-18>

휴 경 면 적

(단위 : 천ha)

구 분	'91	'92	'93	'94	'95	'96	'97	'98
휴 경 면 적	67.5	68.9	66.5	62.5	64.6	34.3	29.5	22.3
논	24.0	31.0	30.3	31.4	33.5	14.5	10.3	6.2
밭	43.5	37.9	36.2	31.1	31.1	19.8	19.2	16.1
휴 경 율 (%)	3.2	3.3	3.2	3.0	3.2	1.7	1.5	1.2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통계과

(통계기획담당관실 통계사무관 김봉철)

## 2. 농가경제

### 가. 농가소득

'98년도 농가호당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12.7% 감소한 20,494천원이었으며, 이중 농업소득은 IMF에 따른 비료, 농약, 영농광열비 등의 자재값 인

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와 소비위축에 의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전년대비 12.2% 감소한 8,955천원으로 나타났다. 농외소득은 상업, 수산업 및 서어비스업의 수입감소와 기타 노임, 임대료, 배당이자 등 사업이외 수입의 감소로 전년대비 19.6% 감소한 6,976천원이었다. 이전수입은 출타가족의 송금보조 및 축조의금등 피증 보조금 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IMF에 따른 실직자의 퇴직 일시금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0% 감소한 4,563천원으로 나타났다.

<표1-1-19>

농가소득의 구성

(단위 : 천원,%)

구분	'90	'95	'96	'97	'98	증감율		
						'96	'97	'98
농가소득	11,026	21,803	23,298	23,488	20,494	6.9	0.8	△12.7
농업소득	6,264	10,469	10,837	10,204	8,955	3.5	△5.8	△12.2
농외소득	2,841	6,931	7,487	8,677	6,976	8.0	15.9	△19.6
(비중)	(25.8)	(31.8)	(32.1)	(36.9)	(34.0)			
이전수입	1,921	4,403	4,974	4,607	4,563	13.0	△7.4	△1.0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경지규모별 농가소득을 보면 0.5ha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은 16,032천원으로 평균 농가소득의 78.2% 수준에 불과하며 5.0ha이상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은 44,248천원으로 평균농가소득의 2.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0.5ha미만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은 58.1%에 달하며 3.0~5.0ha를 경작하는 농가의 경우 농외소득 비중은 16.9% 수준이었다.

<표 1-1-20>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평 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ha 이상
농가소득	20,494	16,032	17,425	20,983	22,712	26,652	31,498	44,248
농업소득	8,955	2,568	5,625	9,612	12,846	16,559	22,144	30,226
농외소득	6,976	9,321	7,403	6,108	5,844	5,326	5,315	7,908
(비 중)	(34.0)	(58.1)	(42.5)	(29.2)	(25.7)	(20.0)	(16.9)	(17.9)
이전수입	4,563	4,142	4,397	5,212	4,022	4,766	4,040	6,114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지대별 농가소득을 보면 도시근교와 평야·산간은 평균보다 높고 중간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농외소득 비중은 도시근교가 47.6%로 가장 높고 산간이 26.6%로 가장 낮았다.

<표 1-1-21>

지대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농가소득	20,449	22,648	22,134	19,733	22,207
농업소득	8,955	7,712	10,905	8,541	11,781
농외소득	6,976	10,787	6,496	6,778	5,910
(비 중)	(34.0)	(47.6)	(29.3)	(34.3)	(26.6)
이전수입	4,563	4,149	4,733	4,414	4,516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1) 농업소득

(가) 농업조수입

'98년도의 농가호당 평균 농업조수입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16,630천원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곡은 농가판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태풍 예

니에 의한 단보당 생산량의 감소로 전년대비 9.1% 감소한 6,703천원이었다.(조수입중 미곡의 비중은 40.3%로 전년보다 2.3%포인트 감소). 채소류에 있어서는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가격은 증가하여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등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5.2% 증가하였다.

과실류는 복숭아, 포도, 감, 자두 등의 생산량 증가와 사과, 감귤 등의 농가판매가격 증가로 전년대비 28.4% 증가하였다. 축산은 IMF에 의한 사료값 인상 등으로 한우, 젖소, 닭 등의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소, 닭 등의 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33.7% 감소하였다.

<표 1-1-22>

농업소득의 구성

(단위 : 천원, %)

	'96		'97		'98		증감율 ( '98/'97)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농업소득	10,837		10,204		8,955		△12.2
○농업조수입	17,284	100.0	17,284	100.0	16,630	100.0	△3.8
미  곡	7,049	40.8	7,370	42.6	6,703	40.3	△9.1
채  소	3,808	22.0	3,498	20.2	4,030	24.2	15.2
특  용  작  물	733	4.2	816	4.7	702	4.2	△14.0
과  수	1,666	9.6	1,651	9.6	2,119	12.8	28.4
축  산	3,085	17.9	3,093	17.9	2,050	12.3	△33.7
기  타	943	5.5	856	5.0	1,026	6.2	19.9
○농업경영비	6,447	100.0	7,080	100.0	7,675	100.0	8.4
비  료  비	377	5.8	367	5.2	449	5.9	22.4
농  약  비	389	6.0	432	6.1	606	7.9	40.4
농  구  비	916	14.2	1,071	15.1	1,224	15.9	14.3
양  축  비	1,604	24.9	1,624	22.9	1,337	17.4	△17.7
노  임	489	7.6	496	7.0	495	6.5	△0.2
임차료및수리비	1,289	20.0	1,264	17.9	1,282	16.7	1.4
기  타	1,383	21.5	1,826	25.8	2,282	29.7	25.0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나) 농업경영비

농업경영비는 IMF에 의한 비료, 농약, 영농광열비 등의 자재값 인상과 기계화의 추진에 따른 농기계 보유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및 경상수리비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8.4% 증가하였다.

<표 1-1-23>                      경지규모별 농업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ha 이상
농업소득(A)	8,955	2,568	5,625	9,612	12,846	16,559	22,144	30,226
농업조수입(B)	16,630	6,816	10,344	17,510	22,327	29,621	39,183	57,233
농업소득율(A/B)	53.8	37.7	54.4	54.9	57.5	55.9	56.5	52.8
농업경영비	7,675	4,248	4,719	7,898	9,481	13,062	17,039	27,007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표 1-1-24>                      지대별 농가소득

(단위 : 천원, %)

구분	평균	도시근교	평야	중간	산간
농업소득(A)	8,955	7,712	10,905	8,541	11,781
농업조수입(B)	16,630	14,778	20,429	16,114	19,602
농업소득율(A/B)	53.8	52.2	53.4	53.0	60.1
농업경영비	7,675	7,066	9,524	7,573	7,821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2) 농외소득

1998년도 호당평균 농외소득은 상업 및 서비스업등 겸업수입의 감소와 노임, 임대료, 배당이자등 사업외의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19.6% 감소한 6,976천원이었다.

<표 1-1-25>

농외소득의 구성

(단위 : 천원, %)

	'90	'96	'97	'98
농 외 소 득	2,841	7,487	8,677	6,976
겸 업 소 득	589	1,522	1,823	1,213
- 겸 업 수 입	1,038	3,285	3,847	2,324
- 겸 업 지 출	449	1,763	2,024	1,111
사업이외 소득	2,252	5,965	6,854	5,763
- 사업이외 수입	2,550	6,649	7,153	6,182
· 노 임 · 급 료	2,196	5,672	5,990	5,148
· 임 대 료 · 배 당 이 자	280	807	978	794
· 기        타	74	170	185	240
- 사업이외 지출	298	684	299	419
· 차 입 금 이 자	290	660	262	368
· 기        타	8	24	37	51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경지규모별 농외소득을 보면, 0.5ha 미만 농가의 농외소득 비중이 58.1%로 가장 높고,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외소득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농산물 가공이나 농업부대 서비스업에서 얻은 소득인 겸업소득은 5.0ha 이상의 농가가 5,101천원으로 가장 높고, 노임·급료 등 사업이외 소득은 0.5ha 미만의 농가가 7,780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26>

경지규모별 농외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0.5ha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ha 이상
농 외 소 득	6,976	9,321	7,403	6,108	5,844	5,326	5,315	7,908
	(34.0)	(58.1)	(42.5)	(29.2)	(25.7)	(20.0)	(16.9)	(17.9)
겸 업 소 득	1,213	1,541	881	830	1,109	1,350	2,185	5,101
사업이외소득	5,763	7,780	6,522	5,278	4,735	3,976	3,130	2,807

주 : ( )내는 농가소득에 대한 농외소득 비중임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지대별 농외소득을 보면,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도시근교 지역이 10,787천원으로 가장 많고 농업의존도가 높은 평야 및 산간지대가 낮게 나타났다

<표 1-1-27>

지대별 농외소득

(단위 : 천원, %)

구 분	평 균	도시근교	평 야	중 간	산 간
농 외 소 득	6,976	10,787	6,496	6,778	5,910
결 업 소 득	1,213	1,758	1,030	1,244	939
사업이외소득	5,763	9,029	5,466	5,534	4,971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나. 가 계 비

'98년도 호당평균 가계비는 16,442천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한 수준이었다.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교제증여비 등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거비, 피복 및 신발비, 미용위생비, 관혼상제비 등이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가계비중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엔겔계수는 전년의 20.4%에서 21.0%로 다소 높아졌으며, 가처분소득중 가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 성향은 전년의 73.2%에서 81.1%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1-1-28>

가계비 구성

(단위 : 천원, %)

구 분	'96	'97	'98	증 감 율 ('98/'97)
가 계 비	17,039	17,045	16,442	△3.5
음 식 물 비	3,411	3,485	3,445	△1.1
주 거 비	1,199	1,226	974	△20.5
피복 및 신발비	677	641	470	△26.6
광열 · 수도비	583	705	670	△5.0
교육 · 교양오락비	1,895	1,913	1,850	△3.3
교 제 증 여 비	4,478	4,201	4,233	0.8
관 혼 상 제 비	1,944	1,918	1,779	△7.3
보 건 의 료 비	1,089	1,115	1,130	1.3
교 통 통 신 비	914	997	1,053	5.6
기 타	849	844	838	△0.3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 다. 농가자산

'98년도 호당평균 농가자산은 192,335천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하였다. 고정자산은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건물의 평가액 증가, 기계화의 추진에 따른 대농구 평가액과 과수 재배면적 증가에 의한 대식물 평가액 증가로 전년대비 7.5% 증가하였다. 유동자산은 미곡등 재고농산물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9.8% 감소하였다. 유통자산의 경우 예금, 대부금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12.0%의 감소를 보였다.

<표 1-1-29>

농가자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96	'97	'98	증감율 (98/97)
농가자산		168,901	184,503	192,335	4.2
고정자산	토지	111,080	120,724	122,836	1.7
	건물	21,772	23,465	31,337	33.5
	대농구	3,474	3,588	5,121	42.7
	대동물	5,162	4,135	2,521	△39.0
	대식물	1,177	1,237	2,818	127.8
소계		142,665	153,149	164,633	7.5
유동자산	소동물	264	180	131	△27.4
	재고농산물	4,590	4,679	4,222	△9.7
	재고생산자재	198	254	258	1.4
	소계	5,052	5,113	4,611	△9.8
유통자산	현금	381	311	337	8.5
	예금	15,222	19,089	17,250	△9.6
	대부금	2,205	2,651	1,351	△49.0
	보험·적립금	2,371	3,077	3,365	9.4
	기타	1,005	1,113	788	△29.2
소계		21,184	26,241	23,091	△12.0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 라. 농가부채

'98년도 호당평균 농가부채는 17,011천원으로 전년보다 30.7% 증가하였다. 농가부채가 증가한 것은 IMF에 의한 농업경영비 증가로 농가소득이 감소하여 추가 차입이 늘어나고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 추진으로 농·축협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농가부채의 용도별 구성비율을 보면 토지구입, 건물의 신·증축, 대농구 구입비등과 겸업자금, 재산적지출등 생산성부채가 76.2%를 차지하고 가계성부채 및 채무상환용 부채는 각각 15.6%, 8.2%로 나타났다

<표 1-1-30>

용도별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구 분		'90	'95	'97	'98
농 가 부 채 (증 감 율)		4,734 (21.4)	9,163 (16.2)	13,012 (10.9)	17,011 (30.7)
생 산 성	토지·건물	1,202	3,810	4,969	6,160
	대 동 물	284	576	617	779
	농 기 계	722	1,263	1,330	1,965
	단기영농비등	938	1,682	2,865	4,054
	소 계 (증 감 율)	3,146 (24.6)	7,331 (18.4)	9,781 (7.1)	12,958 (32.5)
가 계 성	교 육 비	210	231	331	528
	생 활 비	601	674	1,190	1,726
	관혼상제비	204	205	254	399
	소 계 (증 감 율)	1,015 (16.9)	1,110 (5.2)	1,775 (21.7)	2,653 (49.5)
채 무 상 환 용 (증 감 율)		573 (13.0)	722 (12.8)	1,456 (27.7)	1,400 (△3.8)
비 중	생 산 성	66.5	80.0	75.2	76.2
	가 계 성	21.4	12.1	13.6	15.6
	채무 상환용	12.1	7.9	11.2	8.2

자료 :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농가부채를 차입처별로 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부채는 전년대비 31.9% 증가한 16,235천원으로 전체 부채중 9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차입 부채는 전년대비 9.7%가 증가한 776천원으로 4.6%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어 부채의 차입구조면에서는 건전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표 1-1-31>

차입처별 농가부채

(단위 : 천원, %)

구 분	'90	'95	'97	'98
금융기관 (농협)	4,078 (3,858)	8,364 (7,364)	12,304 (9,561)	16,235 (13,263)
개인차입 (비중)	656 (13.9)	799 (8.7)	708 (5.4)	776 (4.6)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부채규모별 농가분포를 보면, 부채가 전혀없는 농가는 전년의 20.4%에서 16.6%로 낮아졌으며, 5,000만원이상 고액부채농가는 전년의 7.5%에서 9.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부채의 비중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IMF에 의한 추가자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1-1-32>

부채규모별 농가분포

(단위 : %)

	'95		'97		'98	
	분포	누적분포	분포	누적분포	분포	누적분포
부채없는 농가	19.5	19.5	20.4	20.4	16.6	16.6
200만원 미만	17.6	37.1	17.7	38.1	14.9	31.5
200 ~ 400	13.3	50.4	10.2	48.3	8.8	40.3
400 ~ 600	9.2	59.6	6.0	54.3	6.4	46.7
600 ~ 800	5.5	65.1	4.5	58.8	4.9	51.6
800 ~ 1,000	4.5	69.6	4.2	63.0	3.7	55.3
1,000~2,000	15.3	84.9	14.5	77.5	15.4	70.7
2,000~3,000	6.3	91.2	7.7	85.2	10.4	81.1
3,000~4,000	3.2	94.4	4.6	89.8	6.0	87.1
4,000~5,000	2.0	96.4	2.7	92.5	3.9	91.0
5,000만원이상	3.6	100.0	7.5	100.0	9.0	100.0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농가부채를 경지규모별로 보면 0.5~1.0ha 경작농가의 부채는 12,481천원으로 평균의 73.4% 수준이며, 5.0ha이상은 평균부채의 3.2배 수준에 해당하는 53,658천원이었다. 이는 호당경지규모 확대에 따른 투자증대에 따라 부채의 절대규모도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33>

경지규모별 농가부채

(단위: 천원, %)

구분		평균	0.5ha 미만	0.5~1.0	1.0~1.5	1.5~2.0	2.0~3.0	3.0~5.0	5.0ha 이상
농가부채		17,011	12,760	12,481	14,224	17,346	27,274	35,920	53,658
차입처별	금융기관 (비중)	16,235 (95.4)	11,699 (91.7)	11,600 (92.9)	13,810 (97.1)	16,410 (94.6)	26,372 (96.7)	34,903 (97.2)	52,835 (98.5)
	개인차입	776	1,061	881	414	936	902	1,017	823
용도별	생산성 (비중)	12,958 (76.2)	9,911 (77.7)	9,017 (72.2)	10,376 (72.9)	13,334 (76.9)	21,268 (78.0)	29,881 (83.2)	44,893 (83.7)
	가계성 (비중)	2,653 (15.6)	1,938 (15.2)	2,428 (19.5)	2,496 (17.6)	2,515 (14.5)	3,827 (14.0)	3,100 (8.6)	5,464 (10.2)
	채무상환용 (비중)	1,400 (8.2)	911 (7.1)	1,036 (8.3)	1,352 (9.5)	1,497 (8.6)	2,179 (8.0)	2,939 (8.2)	3,301 (6.1)

자료: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부채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유통자산 대 농가부채비중은 73.7% 수준이며, 예·저금에 대해서는 98.6% 수준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부채와 예금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4>

농가자산과 부채비중

(단위: %)

구분	'96	'97	'98
부채/유통자산	55.4	49.6	73.7
- 부채/예금	(77.1)	(68.2)	(98.6)
부채/농가자산	6.9	7.1	8.8

자료: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 마. 농가편의용품 보유현황

농가편의용품중 칼라TV, 냉장고, 전화, 가스렌지는 모든 농가에 보급되었다. 최근 자동차와 컴퓨터의 보급율이 증가하여 자동차는 2.3호당 1대, 컴퓨터는 4.7호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5> 농가편의용품 보유현황 (100호당 : 대)

구 분	'90	'95	'97	'98
칼라 TV	96.3	133.6	141.4	145.1
세탁기	37.4	81.0	86.7	93.4
냉장고	100.0	109.4	112.8	113.0
전화	98.0	99.9	99.9	99.5
휴대폰	-	-	5.6	21.1
가스렌지	95.4	102.6	103.5	101.8
자동차	5.0	29.6	39.2	44.1
컴퓨터	미조사	12.3	18.7	21.2

자료: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바. 전·겸업 농가별 주요현황

전·겸업 농가별 현황을 보면 농가소득은 농외소득 기회가 상대적으로 큰 2종 겸업농에서 농업소득 및 부채는 1종 겸업 농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가계비와 자산, 이전수입은 2종 겸업농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1-36> 전·겸업 농가별 주요현황 (단위 : 천원, %)

	전업농가 (A)	1종겸업 (B)	2종겸업 (C)	비율	
				B/A	C/A
농가소득	17,533	24,133	24,328	137.6	100.8
농업소득	10,701	13,178	3,708	123.1	28.1
농외소득	2,384	6,668	15,844	279.7	237.6
이전수입	4,448	4,287	4,776	96.4	111.4
가계비	15,343	17,859	17,864	116.4	100.0
농가자산	175,107	202,402	207,391	115.6	102.5
농가부채	16,942	23,574	13,876	139.1	58.9

자료: 통계청 농수산통계과

### 3.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 가. 개 황

1998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0.3%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0.6% 상승하여 농가교역조건이 전년보다 9.4포인트 악화되었다.

<표 1-1-37>

#### 농가교역조건 동향

(1995=100)

구 분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농가판매가격지수(A)	54.6	73.7	100.0	105.2	102.2	101.9
농가구입가격지수(B)	58.3	75.4	100.0	104.3	106.7	118.0
농가교역조건 (A/B×100)	93.7	97.7	100.0	100.9	95.8	86.4

자료 : 농협중앙회

#### 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998년도 연평균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1.9로 전년도의 102.2에 비해 0.3% 하락하였다. 이를 유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곡 물

1998년도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22.4로 서류(△9.4%)를 제외하고 미곡(6.7%), 맥류(5.5%), 잡곡(1.1%), 두류(8.3%)가 올라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6.2% 상승하였다. 미곡은 일반미(7.1%)와 참쌀(1.8%) 가격이 상승했으며, 맥류는 보리(5.5%), 쌀보리(5.5%), 맥주맥(5.4%)이 오름세를 보였다. 잡곡은 옥수수(1.8%)의 가격이 올랐으며, 두류는 콩(11.3%)과 팥(7.4%)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서류는 고구마(△26.7%)와 감자(△1.5%)가 내림세를 보였다.

## (2) 청과물

1998년도 청과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1.7로 과실이 0.5% 내렸으나 채소가 2.0% 올라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1.3% 상승하였다.

채소중에서 엽채류는 열무(22.3%), 깻잎(20.2%), 부추(2.9%)가 올랐으나 쪽갓( $\Delta$ 26.5%), 배추( $\Delta$ 20.0%), 상추( $\Delta$ 11.9%), 미나리( $\Delta$ 2.7%)가 떨어져 6.2%의 내림세를 보였다. 근채류는 당근(48.0%)과 무(37.4%)가 올라 39.1% 상승하였다. 조미채류는 생강( $\Delta$ 52.5%)이 떨어졌으나 마늘(35.9%)과 고추(34.8%), 양파(6.7%)가 올라 23.3%의 오름세를 보였다. 과채류는 오이( $\Delta$ 30.3%)와 참외( $\Delta$ 27.5%), 토마토( $\Delta$ 15.4%), 수박( $\Delta$ 13.5%) 등이 내림세를 보여 19.0% 하락하였다.

과실의 경우는 사과(13.1%), 감귤(8.1%), 밤(0.6%)이 올랐으나 포도( $\Delta$ 16.9%), 복숭아( $\Delta$ 16.1%), 감( $\Delta$ 8.4%), 배( $\Delta$ 6.7%)가 내림세를 보였다.

## (3) 축산물

1998년도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80.6으로 유란이 17.1% 상승했으나 가축이 13.1% 내려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10.1% 하락하였다.

가축의 경우는 닭(14.4%)과 돼지(6.2%)가 올랐으나 유우송아지( $\Delta$ 49.7%), 한우송아지( $\Delta$ 36.2%), 한우( $\Delta$ 21.6%), 유우( $\Delta$ 16.8%)가 하락하였다. 유란은 우유(18.7%)와 계란(15.1%)이 오름세를 보였다.

## (4) 기타농산물

특용작물·화훼·부산물 등 기타농산물의 1998년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06.2로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2.0% 하락하였다.

특용작물은 표고버섯(7.4%)과 들깨(1.9%)가 올랐으나 느타리버섯( $\Delta$ 16.8%), 땅콩( $\Delta$ 16.4%), 인삼( $\Delta$ 10.9%), 참깨( $\Delta$ 6.9%)가 내림세를 보여 지난해에 비해 3.7%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화훼류는 백합( $\Delta$ 3.5%)과 카네이션( $\Delta$ 1.0%)이 내렸으나 장미(28.7%), 거베라(10.4%), 국화(2.7%)가 올라 9.4% 상승하였다. 부산물(볏짚)도 지난해에 비해 5.4% 상승하였다.

<표 1-1-38>

농가판매가격지수 동향

(1995=100)

구 분	가 중 치	농가판매가격지수		동 락 륜 (%)
		1997년	1998년	
총 지 수	1000.0	102.2	101.9	△0.3
곡 물	323.3	115.3	122.4	6.2
(미 곡)	288.7	116.7	124.5	6.7
(맥 류)	13.6	100.0	105.5	5.5
(잡 곡)	3.7	109.7	110.8	1.1
(두 류)	7.8	102.7	111.3	8.3
(서 류)	9.5	106.1	96.1	△9.4
청 과 물	296.6	100.4	101.7	1.3
(채 소)	208.5	103.1	105.2	2.0
(과 실)	88.1	93.9	93.4	△0.5
축 산 물	322.3	89.7	80.6	△10.1
(가 축)	294.7	88.3	76.7	△13.1
(유 란)	27.6	104.4	122.2	17.1
기 타 농 산 물	57.8	108.4	106.2	△2.0
(특 용 작 물)	48.8	110.8	106.7	△3.7
(화 획)	6.7	93.8	102.6	9.4
(부 산 물)	2.3	100.5	106.0	5.4

다.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1998년도 연평균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8.0으로 지난해의 106.7에 비해 10.6% 상승하였다.

(1) 가계용품

1998년도 가계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8.8로 연평균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6.7% 상승하였다.



식료품은 쌀·보리쌀·밀가루 등 곡류(11.0%)와 무·배추·상추 등 채소류(23.5%), 두부·생선통조림 등 가공식품(18.2%), 그리고 커피·사탕·과자 등의 기호품(13.8%)이 올라 8.0%의 오름세를 보였다. 피복비는 내의·와이셔츠 등 의류(0.6%)와 구두·운동화 등 신발류(8.6%)가 오름세를 보여 2.0% 상승하였다. 주거비는 2.4% 올랐는데 유별로는 책상·썩크대 등 가구집기(3.6%)와 양은솔·식기 등 주방용기구(0.3%), 벽지·장판지 등 주택자재(10.8%)가 상승세를 보였다. 가계광열비는 석유, 경유, 가스료, 전기료 등이 상승해 28.2% 올랐다. 보건의료비는 5.8% 상승했는데 유별로는 감기약·소화제·진통제 등 의약품(1.0%)과 입원비·투약 및 주사료 등 병원비(7.8%), 그리고 한의원이용비(4.2%)가 오름세를 보였다. 교육교양오락비는 납입금 등 교육비(1.4%)와 노트·볼펜 등 문방구비(2.7%), 장난감·필름 등 기타오락비(3.9%), 신문도서비(1.3%) 등이 올라 전년대비 1.5% 상승하였다. 교통통신비는 시외버스료, 택시요금, 항공료 등이 오름세를 보여 9.1% 상승하였으며, 기타잡비도 목욕료, 숙박료, 금반지 등이 상승하여 4.8%의 오름세를 보였다.

## (2) 농업용품

1998년도 농업용품의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8.7로 연평균 기준으로 전년대비 18.7% 상승하였다.

종자는 무, 배추, 양파종자 등이 올라 0.2% 상승하였다. 비료는 41.4%의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으며, 농약은 수도용(32.8%)과 원예용(28.7%), 제초제(29.0%)가 올라 29.7% 상승하였고, 농기구도 농기계가격이 환율상승과 농기계 반값공급의 중단 등으로 상승하여 47.3%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영농광열비는 석유와 경유, 휘발유 등이 올라 24.9% 올랐으며, 사료는 양돈사료, 비육우사료, 낙농사료 등이 상승해 23.5%의 오름세를 보였다. 영농자재는 농용비닐과 각재, 시멘트 등이 오름세를 보여 19.0% 상승하였다. 반면 가축은 유우송아지와 한우송아지, 한우, 새끼돼지 등이 하락하여 15.0%의 내림세를 보였다.

<표 1-1-39>

농가구입가격지수 동향

(1995=100)

구 분	가중치	농가구입가격지수		등락률 (%)
		1997년	1998년	
총 지 수	1000.0	106.7	118.0	10.6
가 계 용 품	524.9	111.3	118.8	6.7
(식 료 품)	97.6	105.9	114.4	8.0
(피 복 비)	39.1	109.5	111.7	2.0
(주 거 비)	48.7	96.4	98.8	2.4
(가 계 광 열 비)	35.6	127.1	163.0	28.2
(보 건 의 료)	69.8	112.9	119.5	5.8
(교 육 교 양 오 락)	121.5	119.2	121.0	1.5
(교 통 통 신)	76.5	108.2	118.1	9.1
(기 타 잡 비)	36.1	109.7	115.0	4.8
농 업 용 품	403.7	100.0	118.7	18.7
(중 자)	17.4	100.5	100.7	0.2
(비 료)	24.3	105.8	149.7	41.4
(농 약)	24.6	108.0	140.0	29.7
(농 기 구)	83.6	104.2	153.4	47.3
(영 농 광 열)	13.9	134.8	168.4	24.9
(가 축)	129.9	82.2	69.9	△15.0
(사 료)	77.7	110.5	136.4	23.5
(영 농 자 재)	32.3	110.4	131.4	19.0
농 촌 입 료 금	71.4	110.2	107.8	△2.2
(농 업 노 동)	31.7	116.5	110.5	△5.2
(기 타 입 금)	2.8	108.5	102.4	△5.7
(도 정 료)	8.2	106.5	109.4	2.7
(농 기 계 입 차 료)	28.7	104.5	104.9	0.5

자료 : 농협중앙회

### (3) 농촌임료금

1998년도 농촌임료금지수는 107.8로 지난해에 비해 2.2% 하락하였다. 이 중 농업노동임금은 남자, 여자가 각각 4.0%, 6.7% 하락했는데, 남자의 경우는 급식물을 포함하여 하루 3만 7,136원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2만 5885원이었다. 기타임금도 5.7% 하락했는데 목수와 미장이임금이 각각 5.6%, 5.8% 떨어졌다. 한편 쌀도정료는 전년대비 2.7% 상승하였으며, 농기계임차료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등의 임차료가 올라 0.5%의 오름세를 보였다.

<표 1-1-40>

#### 농촌임료금 동향

(단위 : 원/1일, 급식물평가액 포함)

구	분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농업노동	남 자	9,695	18,563	33,237	36,156	38,681	37,136
	여 자	6,940	13,224	23,791	26,349	27,746	25,885
기타임금	목 수	19,130	37,509	67,221	71,934	73,509	69,408
	미장이	18,205	36,014	66,792	70,044	71,148	66,987

자료 :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조사부 권 응)

## 4. 농림어업 부가가치

1998년 물가상승 요인을 제거한 농림어업의 실질부가가치(1995년 기준)는 23조 6,505억원으로 전년의 25조 2,342억원에 비해 6.3% 줄어들었다. IMF 관리체제 이후 투입재가격의 상승과 호우 및 태풍에 따른 감소, 농산물 수요감소로 인한 가격하락 등으로 농림어업의 실질부가가치는 축산물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부문별로는 재배업의 부가가치는 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미곡, 두류 등의 감소로 16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7% 감소하였다. 축산업의 부가가치는 양돈부문의 성장으로 3조 5,820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IMF 관리체제하에서 농림어업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표 1-1-41>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 10억원)

구 분	'90	'95	'96	'97	'98	증감률(%) (전년대비)
농림어업	20,287.1 (15,212.2)	23,353.5 (23,353.5)	24,120.3 (23,012.9)	25,234.2 (25,279.0)	23,650.5 (23,495.3)	△6.3 (△7.1)
농업	16,733.1	20,042.2	20,876.4	21,767.6	20,428.3	△6.2
-재배업	14,631.4	16,674.2	17,178.2	17,883.8	16,500.0	△7.7
-축산업	1,743.3	3,045.4	3,361.8	3,527.4	3,582.0	1.5
-농업서비스	358.4	322.6	336.4	356.4	346.3	△2.8
임업	1,164.7	853.0	845.3	869.9	824.1	△5.3
어업	2,390.1	2,458.7	2,399.5	2,597.3	2,399.3	△7.6

주 : '95년 불변가격기준

자료 : 통계청

임업의 부가가치는 생산감소와 임산물의 가격하락으로 8,241억원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하였으며, 어업의 부가가치도 생산부진으로 2조 2,993억으로 전년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도 농림어업 중 농업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재배업의 비중이 약간 줄어든 반면 축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산업은 양돈업의 성장으로 농림어업 비중 가운데 전년대비 0.8% 증가하여 1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가운데 임업과 어업은 전년도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2>

농림어업 구조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90	'95	'96	'97	'98
농림어업	15,212.2 (100.0)	23,353.5 (100.0)	24,438.1 (100.0)	25,279.0 (100.0)	23,495.3 (100.0)
농업	83.6	85.8	85.4	86.0	85.9
- 재배업	74.7	71.4	70.2	71.0	70.0
- 축산업	7.5	13.0	13.8	13.6	14.4
- 농업서비스	1.4	1.4	1.4	1.4	1.5
임업	4.1	3.7	3.5	3.5	3.5
어업	10.2	10.5	10.2	10.6	10.6

주: 경상 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창길)

5. 농업생산성

농가에서 영농작업에 투입한 주요 요소를 보면, 호당 노동시간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1,226시간이며, 농업자본액은 1994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호당 경지면적은 1993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다.

1998년에 호당 영농 투입시간은 1,226시간으로 전년에 비해 7시간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서 벼가 도복되어 작업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호당 농업자본액은 29,056천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다. 호당 경지면적은 전년 1.36ha 보다 조금 늘어난 1.38ha였다.

<표 1-1-43>

농가호당 생산요소 투입량

구 분	단 위	'93	'94	'95	'96	'97	'98
영농시간	시 간	1,447	1,396	1,376	1,293	1,219	1,226
농업자본액	천 원	17,439	19,217	21,323	25,707	25,782	29,056
경지면적	10a	13.36	13.50	13.54	13.66	13.55	13.80

자료: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1998년에 IMF에 의한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대부분의 농업생산성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7,559원으로 전년 10,780원 대비 29.9% 감소하여 성장세가 크게 주춤했다. 10a당 토지생산성은 672천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자본생산성도 0.32원으로 전년 0.51원 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면적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나타내는 노동집약도는 89시간으로 전년 90시간에 비해 1.1% 감소하였다.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자본액을 나타내는 자본집약도는 2,106천원으로 1993년 이후의 상승추세를 이어갔다.

<표 1-1-44>

농업생산성 지표

구 분	단위	'93	'94	'95	'96	'97	'98
노동생산성	원/시간	6,940	8,714	9,387	10,573	10,780	7,559
토지생산성	천원/10a	778	929	954	1,001	970	672
자본생산성	원/원	0.60	0.65	0.61	0.53	0.51	0.32
노동집약도	시간/10a	108	107	102	95	90	89
자본집약도	천원/10a	1,305	1,424	1,575	1,882	1,903	2,106

주 : 1. 노동, 토지, 자본생산성은 농업부가가치 기준

2.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자료 : 통계청 농수산물통계과

(통계기획담당관실 통계사무관 김봉철)

## 제 2 장 국내농산물 수급동향

### 제 1 절 국내 주요 농산물 수급동향

#### 1. 식량작물

경지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경지이용면적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98년도의 경지이용면적은 2,118천ha로 '97년 2,097천ha에 비해 21천ha가 증가되었다.

식량작물재배 면적도 '97년도의 1,315천ha보다 17천ha가 늘어난 1,332천ha 수준이었으며, 식량작물중 벼재배면적은 전년의 1,052천ha보다 7천ha가 늘어난 1,059천ha였다. 이는 '96년부터 시작된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벼재배면적 확보시책과 시중쌀값 상승으로 쌀생산농가의 소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전체 경지이용면적중 식량작물 비율이 전년도 62.7%에서 62.9%로 증가하였다.

맥류의 경우에는 전년 보리 파종기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재배면적이 13천ha 늘어났다.

<표 1-2-1> 주요작물의 경지이용면적 추이

(단위 : 천ha, %)

연도	경지 이용 면적	식 량 작 물					채 소		과 실		기 타	
		소계	구성비	미 곡	맥 류	기타 품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90	2,409	1,669	69.3	1,244	160	265	277	11.5	132	5.5	331	13.7
'94	2,205	1,403	63.6	1,103	85	215	303	13.7	161	7.3	338	15.3
'95	2,197	1,346	61.3	1,056	90	200	322	14.6	172	7.8	357	16.2

연도	경지 이용 면적	식 량 작 물					체 소		과 실		기 타	
		소계	구성비	미 곡	맥 류	기타 품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96	2,142	1,342	62.7	1,050	95	197	311	14.5	171	8.1	320	14.9
'97	2,097	1,315	62.7	1,052	70	193	285	13.6	174	8.4	324	15.4
'98	2,118	1,332	62.9	1,059	83	190	278	13.1	173	8.2	335	15.8

주: 기타는 시설작물, 수원지, 기타작물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통계과

전체곡물 생산량은 매년 감소추세였으나 '98 양곡년도에는 총 6,122천톤이 생산되어 전년도 6,031천톤에 비해 91천톤의 생산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벼재배면적의 증가와 기상여건의 호조등으로 국내곡물생산량의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의 대풍에 따른 것이다.

소비량은 그동안 증가추세를 보여왔으나 '98년은 19,301천톤으로 '97년보다 513천톤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IMF 환란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사료용 소비가 지난해보다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며, 식량용 소비는 밀, 콩의 식량용과 가공용 증가로 전년의 10,402천톤에 비해 다소 늘어난 10,466천톤으로 나타났다. 전체곡물 자급도는 31.7%로 '97년보다 1.3% 포인트 증가되었고, 사료를 제외하면 58.5%로 전년도 58.0%보다 0.5%포인트가 상승하였다.

#### <표 1-2-2> 연도별 전체양곡 수급 상황

(단위: 천톤)

양 곡 년 도	'80	'85	'90	'95	'97	'98
생 산	7,048	7,102	7,013	5,816	6,031	6,122
수 입	5,051	5,051	10,022	14,258	14,167	13,034
소 비	12,596	14,667	16,282	19,974	19,814	19,301
- 식 량 용	10,124	9,921	9,981	10,601	10,402	10,466
- 사 료 용	2,472	4,746	6,301	9,373	9,412	8,835
연 말 재 고	2,179	2,280	3,657	3,119	2,418	2,273
자 급 륜(%)	56.0	48.4	43.1	29.1	30.4	31.7
(사료용 제외시)	(69.6)	(71.6)	(70.3)	(55.7)	(58.0)	(58.5)
1인당 연간소비량(kg)	195.1	181.7	167.0	160.5	157.9	154.2

자료: 농림부 식량생산국



한편, 국민의 식생활변화에 따라 육류·과일·채소류 소비는 계속 늘어났으나, '98년도에는 IMF영향으로 곡물류 중 채소류를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소비가 감소했다.

'98년도 국민 1인당 양곡소비량은 '97년의 157.9kg에서 154.2kg으로 3.7kg로 대폭줄어들었다.

곡종별로 보면 쌀이 전년도 102.4kg에서 3.2kg가 줄어든 99.2kg으로 나타났다으며, 밀은 0.9kg, 콩 0.1kg가 전년에 비해 소비량이 증가되었으나, 보리는 0.2kg, 옥수수 0.6, 서류 0.3kg, 기타곡물 0.4kg씩 전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추이

(단위 : kg)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70	219.4	136.4	37.3	26.1	1.1	5.3	10.2	3.0
'80	195.1	132.4	13.8	29.4	3.1	8.0	6.3	2.1
'85	181.7	128.1	4.6	32.1	3.1	9.3	3.1	1.4
'90	167.0	119.6	1.6	29.8	2.7	8.3	3.3	1.7
'94	160.9	108.3	1.7	32.5	3.0	8.9	3.1	3.4
'95	160.5	106.5	1.5	33.9	3.3	9.0	3.0	3.3
'96	160.2	104.9	1.6	33.8	3.6	9.3	3.5	3.5
'97	157.9	102.4	1.7	33.7	3.7	9.3	3.6	3.5
'98	154.2	99.2	1.5	34.6	3.1	9.4	3.3	3.1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사무관 최병국)

## 2. 원예·특용작물

### 가. 채소류

'98년 채소류의 재배면적은 전년도보다 1.1% 감소된 360.1천ha였다. 그러나 엘리뇨에 의한 봄채소 작황호조로 생산량은 9,984천톤으로 '97년보다 1.8%

증가되었고, 1인당 소비량은 연간 150.0kg인 것으로 추정된다.

봄무·배추는 재배면적이 3.8% 증가된데다 엘리뇨 현상에 의한 작황호조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7.2% 증가된 1,591천톤이었으며, 평년생산량 1,464천톤보다도 8.7%나 늘어나 과잉 생산되었다. 고랭지무·배추는 재배면적이 12.5천ha로 전년대비 3.8% 증가되었으나 2개월여에 걸친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장마로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은 398천톤으로 '97년보다 19.5%가 감소되어 가격이 급등하는 등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다. 가을무·배추는 재배면적이 12.2% 증가되었으나 태풍예니에 의한 침수 등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생산량은 2,393천톤으로 '97년 대비 6.8% 증가하는데 그쳐 수급이 비교적 안정되었다.

고추는 재배면적이 65.3천ha로 전년보다 16% 정도 감소하였으며 집중호우 등으로 작황도 부진하여 수요량(168천톤)보다 21천톤이 적은 147천톤이 생산되었다. 마늘은 재배면적이 37.3천ha로 전년보다 3% 정도 증가하였으나 작황부진으로 수요량보다 적은 394천톤이 생산되었다. 양파는 재배면적이 14.8천ha로 18% 증가되어 수요량(700천톤)보다 172천톤이 많은 872천톤이 생산되었는데, 특히 조생양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채소특작과 농업서기관 김남수)

<표 1-2-4>

채소류 수급동향

(단위: 천톤)

		'90	'94	'95	'96	'97	'98
수요	계	8,697	9,385	10,670	10,337	9,957	10,114
	내수	8,677	9,358	10,611	10,302	9,932	10,059
	수출	20	27	59	35	25	55
공급	계	8,697	9,385	10,670	10,337	9,957	10,114
	생산	8,677	9,222	10,586	10,209	9,806	9,984
	수입	20	163	84	128	151	130
1인당 소비량(kg)		132.6	140.8	158.5	152.2	148.2	150.0

자료: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 나. 과실류

과수재배면적은 낮은 소득, 노목원 폐원 등의 영향을 받은 사과외의 경우에 '97년보다 6.3ha가 감소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 포도, 복숭아 등의 증가에 힘입어 358ha가 증가하였다. 과실 생산량은 생육기 잦은 비로 인한 병해충 피해와 수확기 태풍 피해로 인해 '97년대비 12%가 감소한 2,153천톤을 기록하였다.

<표 1-2-5>

과실류 수급동향

(단위: 천톤)

구 분		'90	'95	'96	'97	'98
공 급	생 산	1,766.2	2,300.1	2,207.3	2,451.6	2,153.4
	수 입	37.2	183.5	187.7	226.5	147.2
소 비	내 수	1,790.4	2,472.7	2,383.7	2,664.8	2,286.2
	수 출	13.0	10.9	11.0	13.3	14.4
1인상 소비량(kg)		41.7	55.4	52.3	57.9	49.2

자료: 농림부 과수화훼과

## 다. 특용작물

참깨는 재배면적이 52.8천ha로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나, 7월이후 계속된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생산량은 27.7천톤으로 전년대비 17.0% 감소하였으며 소비량도 전년대비 0.8천톤이 감소하였다.

땅콩 재배면적은 7.5천ha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25.4% 증가한 13.8천톤을 기록하였다. 연간 땅콩 소비량은 소비둔화 및 소비대체가 가능한 아몬드 등 견과류 수입 등으로 감소추세이며, 자급율은 42%이다.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임현언)

<표 1-2-6>

특용작물 수급동향

(단위 : 천톤)

		참					콩				
		'90	'95	'96	'97	'98	'90	'95	'96	'97	'98
수 요	계	51.8	88.9	102.1	103.6	101.3	44.2	31.1	36.5	36.3	31.0
	당년소비	47.3	86.3	93.1	90.3	89.5	40.1	26.5	31.7	32.0	26.1
	수 출	0.4	-	-	1.1	-	-	2.3	1.0	0.6	0.2
	차년이월	4.1	2.6	9.0	13.3	10.7	4.1	2.3	3.8	3.7	4.7
공 급	계	51.8	88.9	102.1	103.6	101.3	44.2	31.1	36.5	36.3	31.0
	전년이월	-	19.0	2.6	9.0	13.3	8.1	3.3	2.3	3.8	3.7
	생 산	39.7	27.9	31.9	29.4	33.4	28.7	16.8	17.2	10.8	10.9
	수 입	12.1	42.0	67.6	65.2	54.6	7.4	11.0	17.0	21.7	16.4
자급률(%)		84	32	34	33	37	72	63	54	34	42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생산은 전년도 생산량임)

라. 인삼류

인삼의 재배면적은 '90년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96년부터 홍삼전매제 폐지를 계기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98년에는 10,349ha로 전년대비 4.5% 증가하였고, '98년 생산량은 11,478톤으로 전년대비 2.0% 증가되었다.

<표 1-2-7>

인삼 생산동향

	'90	'95	'96	'97	'98
면 적(ha)	12,184	9,375	8,940	9,903	10,349
생 산 량(톤)	13,889	11,971	10,147	11,259	11,478
농 가 수(호)	36,404	23,172	23,304	20,399	22,170

자료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농업서기관 장승진)

### 3. 축산물과 사료작물

#### 가. 축산물

'98년 육류 소비량은 1,307천톤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하여 IMF 체제로 인하여 국내육류 소비량에 영향을 준 결과가 되었다.

쇠고기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4.5% 감소한 345천톤, 돼지고기 소비량은 0.4% 증가한 701천톤, 닭고기 소비량은 6.7% 감소한 260천톤으로 나타났고, 계란 소비량은 4.4% 감소한 456천톤이었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은 지난해 보다 3.9% 감소한 28.1kg 이었다. 이중 쇠고기는 7.4kg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15.1kg와 5.6kg으로 1.3%, 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란은 5.3%가 감소한 179개(9.8kg)였다.

우유는 지난해보다 6.3% 감소한 2,286천톤을 소비하였고, 1인당 소비량도 7.7% 감소한 49.2kg를 기록하였다.

<표 1-2-8>

'98 축산물 수급 동향

(단위 : 천톤)

		공 급				소 비	수 출	차년이월
		이 월	생 산	수 입	계			
육 류	계	67.8	1,241.5	145.7	1,455	1,306.6	89.2	59.2
	쇠 고 기	46.6	264.1	77.0	387.7	345.5	-	42.2
	돼지고기	17.6	732.7	55.7	806.0	700.8	88.3	17.0
	닭 고 기	3.5	244.7	13.0	261.2	260.4	0.8	-
우 유		85.9	2,027.2	281.7	2,394.8	2,286.3	12.6	95.9
계 란		0.8	455.4	-	456.2	456.2	-	-

자료 : 농림부 축산국

<표 1-2-9>

1인당 연간 축산물 소비량

(단위: kg, 개)

구분	'90	'94	'95	'96	'97(A)	'98(B)	증△감 (B-A)
육류 (kg)	19.9	25.8	27.4	28.7	29.3	28.1	△1.2
쇠고기	(4.1)	(6.1)	(6.7)	(7.1)	(7.9)	(7.4)	△0.5
돼지고기	(11.8)	(14.2)	(14.8)	(15.3)	(15.3)	(15.1)	△0.2
닭고기	(4.0)	(5.5)	(6.0)	(6.3)	(6.1)	(5.6)	△0.5
계란(천개)	167.0	181.0	184.0	189.0	189.0	179	△1.0
우유 (kg)	42.8	46.8	47.8	54.5	53.3	49.2	△4.1

자료 : 농림부 축산국

<표 1-2-10>

육류 자급율

구분	'90	'95	'96	'97	'98	
총 소 비 량	육류(천톤)	853.8	1,230.9	1,303.1	1,338.5	1,306.6
	국내산	769.1	1,047.7	1,102.3	1,121.5	1,158.3
	수입	84.7	183.2	200.8	217.0	148.3
	(자급률)(%)	(90.8)	(86.3)	(87.4)	(87.6)	(95.5)
	쇠고기	177.0	301.2	322.9	362.0	345.5
	국내산	94.9	154.7	173.9	227.8	260.1
	수입	82.1	146.5	149.0	134.2	85.4
	(자급률)(%)	(53.6)	(51.4)	(53.9)	(62.9)	(75.3)
	돼지고기	504.8	661.7	696.9	698.3	700.8
	국내산	502.2	625.0	654.9	633.5	650.8
	수입	2.6	36.7	42.0	64.8	49.9
	(수출)	(5.9)	(14.3)	(36.9)	(51.6)	(105.5)
	(자급률)(%)	(100.7)	(96.6)	(99.3)	(98.1)	(92.1)
	닭고기	172	268.0	283.3	279.1	260.4
	(자급률)(%)	(100)	(90.9)	(80.8)	(95.8)	(87.7)
계란(백만개)	7,151	8,262	8,544	8,690	8,294	
우유(천톤)	1,879	2,144	2,465	2,394	2,286	
국내산	1,879	1,948	1,991	2,293	2,004	
수입	-	196	474	101	282	
(자급율)	(100)	(90.9)	(80.8)	(95.8)	(87.7)	

주 : '95~'98 닭고기 총소비량중 ( )는 수입불량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육류 자급률은 총소비량 1,307천톤 중에 국내산이 1,158천톤이고 148천톤이 수입됨에 따라 95.5%를 유지하였다.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75.3%, 돼지고기가 105.5%, 닭고기 95.0%, 우유가 87.7%를 기록하였다.

(축산물유통과 서기관 이재성)

## 나. 사료작물

'98년에 가축용 사료의 총수급량은 전년보다 7.8%가 감소한 18,702톤으로 이중 농후사료가 15,081천톤, 조사료가 3,641천톤으로 추정된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4,259천톤으로 전년보다 10.9% 감소하였다.

<표 1-2-11>

### 사료 수급 추이

(단위: 천톤, %)

구분	'80	'85	'90	'95	'96	'97 (A)	'98 (B)	증감율 (B/A)
합 계	7,561	13,250	17,154	23,302	24,222	20,310	18,722	△7.8
농후사료	3,996	7,322	11,211	15,700	16,827	16,870	15,081	△10.6
- 배합사료	3,464	6,467	10,567	14,856	15,933	16,000	14,259	△10.9
- 농가자급사료	532	855	644	844	894	870	822	△5.5
조사료	3,565	5,928	5,943	7,602	7,395	3,440	3,641	5.8
- 사료작물 및 목초류	781	1,974	2,832	2,498	2,291	1,252	1,438	14.9
- 산야초, 볏짚 등	2,784	3,954	3,111	5,104	5,104	2,188	2,203	△0.7

주 : 조사료는 말린 무게 기준임.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종별로는 비육우용이 17.4%, 양돈용이 2.8% 양계용이 9.0%, 낙농용이 12.3% 감소하였다. 지난 연도에 비하여 배합사료 생산이 줄어든 것은 '97년말 IMF의 영향으로 배합사료가격의 인상과 축산물 소비의 감소에 따른 가축사육두수의 감소 등으로 양축용 배합사료 급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표 1-2-12>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천톤, %)

	'80	'85	'90	'95	'96	'97 (A)	'98 (B)	증감률 (B/A)
합 계	3,464	6,467	10,529	14,856	15,933	16,000	14,259	△10.9
양 계 용	1,872	2,310	3,274	3,766	3,849	3,763	3,423	△9.0
양 돈 용	769	1,924	3,551	4,725	4,994	5,062	4,918	△2.8
낙 농 용	514	994	1,790	2,095	2,168	2,087	1,833	△12.2
비육우용	306	1,209	1,667	3,681	4,136	4,366	3,605	△17.4
기 타	3	30	247	589	785	722	480	△33.5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옥수수, 소맥 등 배합사료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외 곡물가격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외곡물가격 변화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내 사료자원의 개발을 통해 사료자급도를 높여 건전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 초지개발과 청예 및 답리작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98년에 신규로 882ha의 초지를 조성하였다.

'98년말 현재 초지 총관리면적은 57천ha로 392천톤(말린 무게 기준)의 목초를 생산하였다. 초지조성은 환경문제로 인한 규제강화와 지가 및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어려운 반면, 전용 등에 의한 관리제의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

<표 1-2-13>

초지조성 실적

(단위: ha, 천톤, %)

	'85	'90	'94	'95	'96	'97 (A)	'98 (B)	증감률 (B/A)
신규조성면적	5,111	616	525	413	373	676	882	30
관 리 면 적	80,732	89,903	69,474	66,301	62,649	57,321	56,715	△4.4
목 초 생 산 량	649	742	469	462	441	413	392	△5.1

자료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홍식)



## 제 2 절 식품수급 동향

### 1. 식품소비와 식생활의 변화

1인당 연간 곡류 소비량은 1990년 이후 큰 변동이 조금씩 감소하였으나, 쌀의 소비는 1990년 120.8kg에서 1997년 104.6kg으로 매년 2.1%씩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서류의 소비량은 1990년 11.0kg에서 1997년 15.2kg으로 매년 4.6%씩 증가하였다. 또한, 채소류, 과일류, 육류, 우유류 등의 소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육류와 과일류의 소비증가율이 높다. 채소류는 1990년에 132.6kg에서 1997년 148.2kg으로 증가하였다.

<표 1-2-14> 1인 1년당 식품공급량

(단위: Kg)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90~'97 평균증감률
곡 류	175.4	170.0	172.9	173.1	171.8	170.3	△0.4
- 쌀	120.8	113.7	112.6	110.6	108.5	104.6	△2.1
서 류	11.0	14.7	12.2	11.0	14.7	15.2	4.6
설 탕 류	11.7	15.9	17.4	17.8	16.9	17.0	5.3
두 류	10.3	9.8	11.1	11.1	11.3	10.9	0.8
채 소 류	132.6	153.5	140.7	160.6	152.2	148.2	1.6
과 실 류	29.0	35.1	35.1	39.1	36.8	41.8	5.2
육 류	23.6	28.6	29.8	32.7	34.0	35.2	5.7
계 란 류	7.9	8.5	8.4	8.6	8.7	8.7	1.4
우 유 류	31.8	34.8	32.8	38.5	42.0	41.0	3.6
어 패 류	30.5	31.6	32.5	33.4	34.4	32.0	0.7
해 조 류	5.7	11.7	12.4	11.7	9.3	11.6	10.2
유 지 류	14.3	13.3	13.9	14.2	14.4	15.2	0.9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1인당 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이후 매년 0.5%씩 증가하였으며, 1997년의 에너지 공급량은 2,956kcal로써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식물성 에너지 중 전분질을 통한 에너지 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는 종래의 곡물 중심의 에너지 공급 패턴이 육류 위주로 점차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품목별 비중을 보면 1997년에 총에너지의 85.4%를 식물성 식품에서 섭취하였으며, 그 중 곡물류에서 60.5%의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어 에너지의 곡물의존도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동물성 식품의 에너지 구성비는 1990년 12.5%에서 1997년에는 14.6%로 증가하였다.

<표 1-2-15> 1인 1일 에너지 공급량

(단위: Kcal)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연평균 증감률(%)
총에너지	2,853 (100.0)	2,872 (100.0)	2,950 (100.0)	2,959 (100.0)	2,948 (100.0)	2,956 (100.0)	0.5 -
식물성	2,457 (87.5)	2,464 (85.8)	2,534 (85.9)	2,520 (85.2)	2,495 (84.6)	2,525 (85.4)	0.4 -
- 전분질	1,837 (67.6)	1,803 (62.8)	1,839 (62.2)	1,806 (61.0)	1,804 (61.3)	1,788 (60.5)	△0.4 -
- 채소류	162 (6.0)	195 (6.8)	198 (6.2)	209 (7.1)	186 (6.3)	198 (6.7)	2.9 -
- 기 타	458 (14.0)	466 (16.2)	497 (17.5)	505 (17.1)	505 (17.1)	540 (18.3)	2.4 -
동물성	395 (12.5)	408 (14.2)	416 (14.1)	439 (14.8)	453 (15.4)	431 (14.6)	1.2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도시가계의 식료품 지출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외식비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외식비는 연간 12.6%씩 증가해왔으며, 도시근로자 가구의 총식료품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에 20.4%에서 1998년에 33.6%로 증가하였다. 금액면에서도 1990년에 4만 4,800원에서 1997년 12만 2,800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1997년말 금융위기로 인하여 1998년 도시가계 소득의 감소와 식료품에 대한 지출액이 감소하였다. 식료품 중에서 곡류 및 빵, 채소 및 낙농품의 지출액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과일류 및 어패류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표 1-2-16>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

(단위: 천원, %)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90~'98 평균증감률
소비지출	685.7	1,021.0	1,140.4	1,265.9	1,426.9	1,489.5	1316.2	8.2
식료품	219.5 (100.0)	301.7 (100.0)	341.6 (100.0)	367.1 (100.0)	409.5 (100.0)	427.5 (100.0)	365.9 (100.0)	6.4 -
곡류 및 식빵	42.0 (19.1)	45.3 (15.0)	46.6 (13.6)	46.7 (12.7)	54.4 (13.3)	53.5 (12.5)	48.4 (13.2)	1.8 -
육 류	26.2 (11.9)	36.0 (11.9)	38.4 (11.2)	42.2 (11.5)	44.3 (10.8)	43.7 (10.2)	38.6 (10.5)	1.9 -
낙농품	10.4 (4.7)	15.4 (5.1)	16.4 (4.8)	17.1 (4.6)	17.6 (4.3)	17.9 (4.2)	19.2 (5.2)	7.7 -
어패류	21.1 (9.6)	28.3 (9.4)	30.4 (9.0)	33.3 (9.1)	36.2 (8.8)	35.0 (8.2)	29.1 (8.0)	4.0 -
채소·해조류	24.6 (11.2)	31.0 (10.3)	36.6 (10.7)	35.6 (9.7)	37.6 (9.2)	38.8 (9.1)	35.0 (9.6)	4.4 -
과실류	15.6 (7.1)	22.3 (7.4)	28.0 (8.2)	28.5 (7.8)	30.5 (7.5)	30.9 (7.2)	22.3 (6.1)	4.5 -
조미식품	11.7 (5.3)	15.6 (5.2)	16.8 (5.0)	15.7 (4.3)	16.5 (4.0)	15.9 (3.7)	16.2 (4.4)	4.1 -
빵 및 과자류	12.6 (5.7)	11.8 (3.9)	12.7 (3.7)	13.5 (3.7)	15.1 (3.7)	15.9 (3.7)	15.8 (4.3)	2.8 -
차와 음료	7.0 (3.2)	7.1 (2.3)	8.3 (2.4)	8.7 (2.3)	9.5 (2.3)	10.1 (2.4)	9.4 (2.6)	3.7 -
주류	3.1 (1.4)	4.2 (1.4)	4.9 (1.4)	5.0 (1.4)	5.4 (1.3)	5.5 (1.3)	4.7 (1.3)	5.2 -
기타식료품 <sup>1)</sup>	0.4 (0.2)	5.2 (1.7)	4.8 (1.4)	5.0 (1.4)	5.8 (1.4)	5.2 (1.2)	4.5 (1.2)	△2.9 <sup>2)</sup> -
외식	44.8 (20.4)	79.6 (26.4)	97.8 (28.6)	115.7 (31.5)	136.6 (33.4)	155.0 (36.3)	122.8 (33.6)	12.6 -

1) 1990년까지는 식료품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출이고, 1991년부터는 기타 식료품에 대한 지출임.

2) 1993~98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 2. 식품수요 및 공급현황

### 가. 식품수요

1인당 식품공급량은 최근 들어 육류, 과일류, 빵 및 과자류에 대한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서구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이들 품목의 소비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식품공급량 중에서 곡류(170.3kg), 두류(10.9kg), 채소류(148.2kg), 어패류(32.0kg) 등의 소비수준은 서구 국가들의 소비수준보다 비교적 높은 반면, 과일류(41.8kg), 육류(35.2kg), 계란류(8.7kg), 우유류(41.0kg) 및 유지류(15.2kg) 등의 소비수준은 아직 낮은 편이다. 특히, 육류와 과일류의 소비수준은 서구 국가들의 1/3~1/4 수준이며, 우유류는 약 1/6에 불과하다.

<표 1-2-17>                    주요 국별 1인 1년간 식품공급량 비교

(단위: kg)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키스탄
연 도	1997	1995-96	1994	1995-96	1995-96	1995-96
곡 류	170.3	131.8	102.2	114.6	90.9	136.5
서 류	15.2	35.0	22.3	63.1	78.8	9.1
설 탕 류	17.0	31.8	25.2	69.4	44.5	28.5
두 류	10.0	9.9	30.3	10.2	8.8	8.8
채 소 류	148.2	109.1	93.4	112.8	81.8	24.8
과 실 류	41.8	57.3	136.5	122.3	113.5	41.6
육 류	75.2	44.5	72.3	118.3	84.0	13.9
계 란 류	8.7	19.7	16.4	13.1	12.4	1.8
우 유 류	41.0	69.0	21.2	254.8	242.7	112.8
어 패 류	32.0	71.2	38.3	21.5	15.7	2.2
유 지 류	15.2	14.2	25.9	30.7	38.3	16.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우리 나라 국민 1인 1일 영양소별 섭취량을 보면, 철분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의 섭취량이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칼슘의 섭취가 크게 증가하였다.

1997년의 단백질 총공급량은 국민 1인 1일당 97.1g으로써 전년대비 0.9g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997년에는 전체 공급 단백질의 41.5%를 차지하였다.

1997년의 지방질 총공급량은 국민 1인 1일당 79.7g으로써 전년의 77.7g보다 2g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동물성 지방은 전체 공급지방의 31.2%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어 우리 나라 국민의 지방질 섭취 패턴이 동물성 식품에서 유지류 등의 식물성 식품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기질 중 칼슘공급량은 국민 1인 1일 공급량은 627mg으로써, 전년도에 613mg보다 14mg 증가하였다. 철분의 공급량은 1997년에 17.1mg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약간 증가하였으나, 섭취량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비타민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C, 나이아신 등의 영양소들은 전년도에 비해 조금씩 증가하였다.

<표 1-2-18>

1인 1일당 영양 공급량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연평균 증감률(%)
단백질(g)	89.3	91.7	94.5	96.9	98.0	97.1	1.2
동물성단백질비중(%)	(37.1)	(38.7)	(38.5)	(40.5)	(42.0)	(41.5)	-
지방질(g)	72.2	74.1	77.3	76.9	77.7	79.7	1.4
동물성지방질비중(%)	(35.3)	(34.4)	(33.7)	(34.3)	(34.5)	(31.2)	-
칼슘(mg)	495	601	573	623	613	627	3.4
철(mg)	26.6	25.1	25.3	16.7	16.5	17.1	△6.3
비타민A(IU) <sup>1)</sup>	4,296	5,750	6,020	1,309	1,271	1,358	1.8 <sup>2)</sup>
비타민B <sub>1</sub> (mg)	1.86	1.90	1.94	1.91	1.92	1.95	0.7
비타민B <sub>2</sub> (mg)	1.45	1.49	1.51	1.48	1.51	1.52	0.7
나이아신(mg)	20.0	19.1	19.8	20.7	21.0	21.0	0.7
비타민C(mg)	124	160	142	146	146	142	1.9

1) 1995년부터 비타민A는 단위가 IU에서 R.E.로 전환됨.

$$1R.E. = [\text{식물성(I.U.)}/300 + \text{동물성(I.U.)}/100] / 3.33$$

2) 1995-97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임.

영양소별 권장량(Recommended Dietary Allowance: RDA)<sup>2)</sup> 대비 섭취율을 보면,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섭취하는 총에너지는 권장량의 88.6% 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별로 보면, 단백질, 철분, 티아민, 나이아신, 비타민C 등의 영양소는 권장량보다 과다 섭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철분과 비타민C의 섭취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칼슘(75.4%)과 비타민 A(67.2%) 등은 권장량보다 과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영양소 섭취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3-6 참조).

<표 1-2-19> 영양권장량(RDA)에 대한 영양소별 섭취비율 추이

(단위: %)

영양소 연도	에너지	단백질	칼슘	철분	비타민 A	티아민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C
1990	90.0	127.8	82.0	173.3	76.5	109.9	101.4	156.2	154.9
1992	89.1	117.7	84.1	173.0	80.3	113.6	95.3	123.6	194.2
1993	90.0	117.9	84.0	176.0	67.7	140.1	97.3	120.6	175.6
1994	85.0	121.8	91.8	192.0	62.0	109.0	100.2	122.8	176.9
1995	88.6	116.7	75.4	159.5	67.2	108.8	96.0	119.8	185.4

자료: 보건복지부, 「'95 국민영양조사결과보고서」, 1997. 3.

국민 1인당 1일당 영양공급량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나라의 공급영양소는 소득 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반면, 선진국인 미국, 유럽 국가들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에 속한다. 1997년 우리나라 국민 1인 1일 공급에너지는 2,956kcal이나, 1995-96년에 미국, 독일 등은 이미 3,300kcal를 넘어섰다.

에너지원(源)을 보면, 한국과 파키스탄은 에너지원의 약 60%를 곡류를

2) 중등(中等)활동을 하는 몸무게가 60Kg이고 연령이 20~49세 사이의 성인남자 1인이 1일 동안 활동하는 데 필요한 권장량.

1인 1일 에너지 소비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에너지소비량}) = B_m \times t_s + \sum E_n \times t_w$$

$$\begin{cases} B_m: \text{기초대사량 (Kcal/분)} \\ t_s: \text{수면시간 (분)} \\ E_n: \text{각종 활동 중 에너지 소비량 (Kcal)} \\ t_w: \text{각종 활동시간 (분)} \end{cases}$$

통한 전분질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도 약 45%를 전분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서독의 에너지 공급량 중 전분질을 통한 식물성 에너지의 비중은 약 28~29%인 반면, 육류 소비를 통한 동물성 에너지의 비중은 22% 이상으로 우리 나라보다 훨씬 높다. 우리 나라도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원이 점차 전분질 식품에서 동물성 식품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우리 나라 국민 1인 1일 단백질 공급량은 97.1g으로, 미국의 110.9g(1995-96)보다는 낮지만, 일본의 96.7g(1995-96), 대만의 95.7g (1994), 독일의 94.5g(1995-96)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동물성 단백질의 비중은 서구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나라 국민이 동물성 단백질은 적게 소비하지만, 간장, 된장, 두부와 같은 식물성 고단백식품을 많이 소비하는 전통적인 식습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나라 국민 1인 1일 지방질 공급량은 국민소득의 증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1997년에 79.7g로 증가했지만, 대만의 135.1g(1994), 미국의 142.0g(1995-96), 독일의 142.1g(1995-96) 등과 비교하면 아직도 절반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통적인 식생활 패턴, 축산물의 섭취량 부족, 유지류의 공급 부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1-2-20>                    주요 국별 1인 1일당 영양공급량 비교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파 키 스탄
연 도	1997	1995-96	1994	1995-96	1995-96	1995-96
에너지(kcal)	2,956	2,907	3,012	3,621	3,311	2,379
- 전분질(%)	60.5	44.5	40.9	29.2	27.8	56.8
- 설탕(%)	6.1	9.9	8.7	17.8	13.0	11.6
- 동물성(%)	14.6	19.2	23.0	24.4	22.0	11.4
- 유지류(%)	12.5	11.3	21.0	18.4	22.5	15.9
- 기타(%)	6.3	15.1	6.4	10.2	14.7	4.3
단백질(g)	97.1	96.7	95.7	110.9	94.5	58.8
- 동물성(g)	40.3	54.6	49.2	70.6	58.2	19.1
지방질(g)	79.7	81.3	135.1	142.0	142.1	66.2
- 유지류(g)	41.5	37.1	70.8	75.1	83.5	42.6
1인당GNP(\$)	10,307	36,938	12,838	28,773	28,505	48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 나. 식품 공급

총생산량에서 수출입과 종자용 및 감모, 폐기 등을 감안한 1997년도 순 식용 식품의 공급은 전반적으로 199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곡류의 공급량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늘어났는데, 쌀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밀가루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과실류, 육류, 우유류의 공급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류나 두류, 채소류, 어류 등의 공급은 감소하거나 전년도에 비교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2-21>

연도별 주요 식품의 공급량

(단위: 천 톤)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곡 류	7,520	7,491	7,686	7,719	7,823	7,831
- 쌀	5,177	5,008	5,005	4,933	4,942	4,810
- 밀가루	1,274	1,318	1,447	1,521	1,538	1,548
서 류	473	648	540	491	715	699
두 류	440	429	495	493	514	502
채 소 류	5,685	6,760	6,253	7,163	6,930	6,817
과 실 류	1,241	1,547	1,562	1,744	1,677	1,923
육 류	1,010	1,258	1,323	1,457	1,550	1,617
- 쇠 고 기	177	228	264	296	313	352
- 돼 지 고 기	505	601	620	634	668	669
- 닭 고 기	172	236	240	189	200	197
계 란 류	338	375	373	383	396	402
우 유 류	1,364	1,534	1,459	1,718	1,914	1,884
어 패 류	1,307	1,390	1,446	1,488	1,567	1,471
- 어 류	899	866	1,017	966	1,046	988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1990년 이후 주요 식품의 자급률<sup>3)</sup>을 보면, 계란류와 돼지고기 등을 제외

3) 식품의 자급률은 해당 식품의 국내수요량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국내소



하면 전반적으로 자급률이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2-3-9 참조). 1990년도에 120%가 넘었던 어패류의 자급률이 98%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계란류의 자급률은 100%에 도달했다. 곡류의 자급률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특히 쌀의 자급률은 1990년의 108.3%에서 1996년 89.9%로 하락하였다가 1997년에는 105%로 증가하고 있다.

채소류의 자급률은 1997년에 97%로 꾸준히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과실류도 자급률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육류의 자급률은 1995년에 90% 수준이 무너졌으나, 1996년 90.8%, 1997년에 92.1%로 다시 상승하였다. 쇠고기 자급률은 1995년에 50.8%에서 1997년에 65.3%로 상승해 1990년대에는 지속적으로 5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자급률은 93%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2-22>

연도별 주요 식품 자급률 추이

(단위: %)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곡 류	43.8	34.4	28.3	30.0	27.2	31.7
- 쌀	108.3	96.8	87.7	91.1	89.9	105.0
두 류	24.5	16.8	14.9	11.7	11.7	10.3
채 소 류	98.9	98.4	97.8	99.2	98.7	97.0
과 실 류	102.5	92.1	92.1	93.2	92.6	92.1
육 류	92.9	93.1	91.0	89.2	90.8	92.1
- 쇠 고 기	53.6	55.6	54.6	50.8	53.8	65.3
- 돼지고기	100.3	100.9	98.3	96.6	99.3	100.1
- 닭 고 기	100.0	99.4	99.2	98.1	97.6	93.1
계 란 류	100.0	100.4	99.6	99.9	100.0	100.2
우 유 류	92.8	93.2	92.9	93.3	83.0	81.4
어 패 류	121.7	110.7	106.7	100.4	95.1	98.3
유 지 류	8.0	7.3	3.8	4.8	5.2	4.1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수급표」, 각년도

$$\text{식품의 자급도} = \frac{\text{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구했다. 즉, 국내생산량}}{\text{국내소비량}}$$

<표 1-2-23>

농업생산성 지표

구분	단위	'90	'94	'95	'96	'97	'98
노동생산성	원/시간	4,932	8,714	9,387	10,573	10,780	7,559
토지생산성	천원/10a	625	929	954	1,001	970	672
자본생산성	원/원	0.70	0.65	0.61	0.53	0.51	0.32
노동집약도	시간/10a	127	107	102	95	90	89
자본집약도	천원/10a	892	1,424	1,575	1,882	1,903	2,106

주: 1. 노동, 토지, 자본생산성은 농업부가가치 기준

2. 자본생산성 = 농업부가가치/농업자본액

자료: 통계청

### 3. 식품가공산업 현황

#### 가. 산업구조

식품가공산업은 '97년 생산액이 26조 8,370억원, 부가가치가 11조 3,520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업 전체에서 약 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 기준으로 식료품과 음료품의 구성비는 각각 81.4%, 18.6%로 식료품 제조업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제조업 중에서는 빵·과자·국수(15.4%), 유가공(13.1%), 곡물가공(11.6%), 육가공(10.6%) 순으로 규모가 크다.

식품가공산업은 소득수준의 향상, 도시화, 핵가족화, 여성취업인구의 증가 등에 따른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은 '90년에 비해 약 두 배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물가상승을 감안한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5.9%에 달하여 제조업 평균보다는 다소 낮지만 농수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표 1-2-24>

식품가공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및 사업체수

	생산액(10억원)		부가가치(10억원)		사업체수(개소)	
	'90	'97	'90	'97	'90	'97
제조업	177,309	435,016	70,925	181,159	97,144	92,138
음식료품	13,104	26,837	5,194	11,352	6,055	5,978
식료품	10,352	21,833	3,857	8,710	5,557	5,508
육가공	872	2,850	255	984	407	431
유가공	1,519	3,520	447	1,407	113	103
수산가공	1,420	2,227	567	881	1,804	1,784
과채가공	342	739	134	326	487	484
곡물가공	810	3,101	242	717	824	820
식용유지	646	721	275	176	76	73
빵·과자·국수	2,411	4,138	1,074	2,192	760	775
식품첨가물	687	1,800	297	786	317	305
기타식료품	1,645	2,738	566	1,241	769	733
음료품	2,752	5,004	1,337	2,642	498	470
알콜성음료	1,450	2,643	714	1,487	244	226
비알콜성음료	1,302	2,361	623	1,155	254	244

주: 종업원 5인 이하 사업체 제외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식품가공산업은 전 부문에서 성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부문간 성장률에는 차이가 많다. 특히 신장세가 두드러진 부문은 육가공, 유가공, 과채가공, 식품첨가물 제조업, 곡물가공으로서 연평균 성장률이 12% 이상이다. 반면에 식용유지 및 수산가공 부문은 거의 정체되어 있다. 한편 곡물가공부문이 연평균 20%의 높은 성장을 기록한 주된 원인은 그동안 산업통계

에 포함되지 않았던 5인 이하의 영세 도정업체가 미곡종합처리장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며 실제적으로 생산증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식품가공산업은 외형적 성장과 병행하여 기업의 대형화,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식품가공산업의 사업체수는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빵·과자·국수제조업과 육가공산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감소하여 사업체당 생산액이 '90년 21억 6천만원에서 44억 9천만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규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부문은 육가공, 유가공, 곡물가공, 식품첨가물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생산액당 부가가치로 나타낸 부가가치율은 식품가공산업 평균으로 볼 때 '90년 39.6%에서 '97년 42.3%로 미미한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육가공, 유가공, 빵·과자·국수, 기타식료품, 과채가공 산업부문에서는 부가가치율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이들 부문에서 제품의 고급화, 차별화가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나. 생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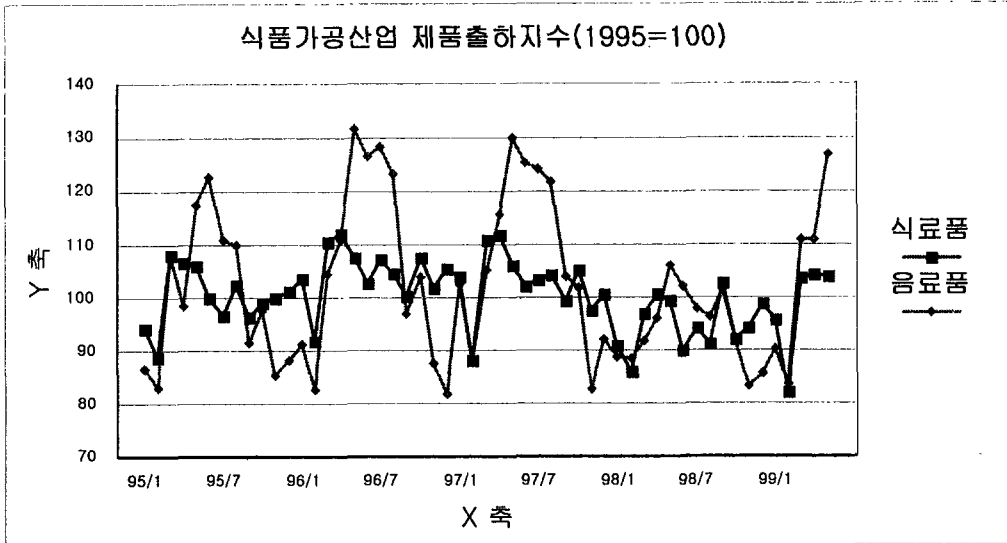
'98년은 IMF 관리체제하에서의 경기침체, 실업 등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음식료품의 내수시장이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식품가공산업의 생산과 매출실적이 크게 줄고 재고가 증가하였다. '98년도 음식료품 부문의 생산은 전년 대비 9.6% 감소하고 매출은 10.4% 감소하였다.

부문별 동향을 보면 육가공산업은 '90년 이후 육류 소비증가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연평균 18.4%씩 고도 성장을 하였으나 '98년에는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생산과 매출이 전년대비 90%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가공산업도 그동안 국내 소비증가와 유제품의 고급화에 힘입어 고도 성장추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97년에는 유제품 수입개방의 영향과 수입 모조분유를 이용하여 우유를 제조한다는 언론보도로 유발된 가공유 파동으로 생산이 전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98년에는 전년 대비 8% 감축되었다.

<그림 1-2-1>

식품가공산업 제품출하지수



자료 : 통계청, 산업생산연보

과채가공산업은 '90~97년 기간동안 김치, 단무지 등 절임식품의 내수와 수출시장의 확대에 의하여 연평균 11.6%씩 성장하였으며 장류가 주종을 이루는 식품첨가물도 14.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98년에는 전년 대비 10%의 생산 감소가 있었지만 편의지향적으로 식생활패턴이 점차 변화되고 품질 고급화가 이루어지면서 김치, 전통 장류 등을 가정에서 직접조리하지 않고 구입하여 먹게 됨에 따라 과채가공과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성장추세는 경기회복과 더불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2년부터 스포츠음료, 전통음료, 캔커피, 차류, 기능성음료 등의 다양한 음료제품이 생산되면서 비알콜성음료의 생산과 소비가 급성장하였다. 특히 사과주스, 식혜, 대추음료는 탄산음료 소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건강기능성음료와 채소음료의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97년에는 경기침체와 먹는샘물 소비확대의 영향으로 음료제품의 매출 증가가 크게 둔화되었다. 식품가공산업에서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한 음료산업의 생산은 '98년에 전년대비 17%가 하락하였다.

주류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맥주, 양주, 포도주 소비가 급속히 확

대되면서 '96년까지 고도성장을 하였으나 '97년에는 전년 수준을 겨우 유지하였다. 위스키의 경우 매년 20%를 상회하는 소비 증가가 있었으나 '97년에는 6.7% 감소하였고, 전체 주류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맥주도 3.8% 감소하였다. 포도주는 건강에 좋다는 소비자 인식으로 인하여 소비가 40% 증가하였으나 42%가 수입산 포도주다. 상대적으로 소주 소비는 증가하였다.

#### 다. 수출입동향

'98년도에는 환율상승으로 수입식품의 가격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가공식품의 수입은 전년 대비 36%나 감소한 25억 5천 5백만불을 기록하였다. 가공식품 수출은 25억 4천 8백만불에서 22억 1천 8백만불로 13% 감소하여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던 가공식품의 무역역조 현상은 '97년 14억 5천 9백만불에서 '98년 3억 3천 7백만불로 격감하였다.

<표 1-2-25>

####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1991	1995	1996	1997	1998	전년대비
수 입	2,267	3,587	4,021	4,007	2,555	△36%
수 출	1,813	2,359	2,539	2,548	2,218	△13%
무역수지	△454	△1,228	△1,482	△1,459	△337	△77%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 년도

환율 급등으로 수출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과일주스 등 수입 원료를 이용한 수출 가공식품의 원자재 비용의 증가, 국내 수산물 생산 감축으로 인한 수산가공식품의 수출이 격감,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한 수출업체의 과당경쟁과 수출단가의 하락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품목별 수입구조를 보면 '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수산가공품(22.5%), 유

가공품(20.4%), 기타식료품(19.2%), 과채가공품(10.8%) 순이며 주류도 3억 불로서 7.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은 수산가공품이 47.7%로서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빵·과자·국수류(16.0%), 기타식료품(12.2%) 및 유가공품(10.0%)이 우리 나라 가공식품 수출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가공식품 중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큰 품목은 수산가공품, 빵·과자·국수류, 전통장류가 포함된 식품첨가물과 과실주스가 포함된 음료제품으로서 '98년 기준 수산가공품이 5억 6천 5백만불, 빵·과자·국수류가 1억 4천 5백만불, 식품첨가물이 천 2백만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무역수지가 적자인 품목은 기타식료품이 3억 2천 8백만불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곡물가공품 2억 3천 6백만불, 과채가공품 1억 7천 백만불, 유가공품 1억 3천 9백만불 순이며 육가공품과 주류도 약 1억불 정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표 1-2-26>

품목별 가공식품의 수출입 실적

	수 입		수 출		무역수지	
	1997년	1998년	1997	1998	1997	1998
육 가 공	175	108	16	10	-159	-98
유 가 공	820	463	253	324	-567	-139
수 산 가 공	902	505	1,215	1,071	313	564
과 채 가 공	433	248	79	77	-354	-171
곡 물 가 공	301	257	28	21	-273	-236
식 용 유 지	7	6	7	7	-	1
빵·과자·국수	200	120	407	263	207	143
식품첨가물	60	38	68	50	8	12
기타식료품	769	604	311	276	-458	-328
알 콜 성음료	300	182	93	84	-207	-98
비알콜성음료	40	24	71	35	29	11
계	4,007	2,555	2,548	2,218	-1,459	-337

자료 : 관세청, 「무역통계연보」, 각년도

### 제 3 절 농산물 교역동향

#### 1. 농산물 수출입 동향

##### 가. 수출 동향

1998년에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35백만달러로 국가전체 수출액 132,313백만달러의 1.2%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1,753백만달러 대비 6.7%가 감소하였다. 수출품 구조별 내역을 살펴보면 농산물이 1,006백만달러(62%), 축산물이 385백만달러(23%), 임산물이 244백만달러(15%)을 기록하였다.

<표 1-2-27>

농림축산물 수출동향

(단위 : 백만달러, %)

	'90	'93	'94	'95	'96	'97	'98	전년대비 증가율
총 수출	65,016	82,236	96,013	125,058	129,715	136,164	132,313	△2.8
농림축산물	1,120	1,045	1,254	1,570	1,707	1,753	1,635	△6.7
농축산물	795	810	952	1,242	1,424	1,508	1,391	△7.8
임산물	325	235	302	328	283	245	244	△0.4

※ 석재류 제외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농림축산물 수출물량은 '97년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에 따른 원화가치하락의 영향과 가공식품의 주수출시장인 러시아, 홍콩, 동남아시아의 경기침체로 수출액이 6.7% 감소하였다.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을 보면, 돼지고기, 김치, 채소류, 화훼류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반면, 과일류, 인삼류, 산림부산물 등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주요 국가별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대일본 수출이 790백만달러로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액의 48%를 차지하였고, 대중국(홍콩 포함)의 수출액은 220백만달러로 13%를 차지하였으며 대러시아의 수출액은 145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 나. 수입 동향

1998년도 농림축산물 수입액은 6,406백만달러로 국가전체 수입액 93,282백만달러의 6.9%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10,105백만달러 대비 36.6%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농림축산물 수입이 격감한 원인은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에 기인하였다.

주요 품목별로 '98년 수입동향을 보면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물 가운데 옥수수 914백만달러, 밀 664백만달러, 쇠고기 268백만달러, 대두 379백만달러, 대두박 207백만달러가 수입되었다. 국내 자원개발이 어려운 목재의 수입은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원목, 제재목, 건축용 목제품 등의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다.

<표 1-2-28>

### 농림산물 수입동향

(단위 : 백만달러, %)

	'90	'93	'94	'95	'96	'97	'98	전년대비 증가율
총 수입	69,844	83,800	102,348	135,119	150,339	144,616	93,282	△35.3
농림축산물	5,382	7,225	7,931	9,587	10,827	10,105	6,406	△36.6
농축산물	3,754	4,571	5,426	6,899	8,152	7,619	5,423	△28.8
임산물	1,628	2,654	2,505	2,688	2,675	2,486	983	△60.5

※ 식재류 제외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주요 국가별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액이 2,105백만달러로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액의 33%를 차지하였고, 중국이 765백만달러로 12%, 호주 560백만달러로 9%를 차지하였다.

(무역진흥과 사무관 남동익, 윤명중)

## 2. 농산물 남북교역 동향

### 가. 농산물 교역규모

농림축산물 교역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햇별정책"에 따라 기아상태에 빠져있는 북한동포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각 종교단체 등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비료, 종자 등을 무상 지원하므로서 대북반출규모가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98년도 농림축산물 남북교역규모는 29.2백만달러로서 61.3%가 증가하였고, 국가전체 교역규모 222백만달러의 13.8%를 차지하였다.

<표 1-2-29>

남북교역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연도별 교역실적		
	'97	'98	증 감 륜
전 체	308.3	221.9	△ 28.0
농림축산물	18.1	29.2	61.3%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 나. 농산물 교역동향

#### (1) 반출입 통관실적 총괄

농림축산물 반출입 통관실적을 살펴보면, 대북반출은 19,242천달러로 전년의 7,744천달러보다 148.5% 증가하였고, 반입은 11,421천달러로 전년의 10,402천달러보다 9.6% 증가하였다. 총반출물량중 농축산물은 18,732천톤으로 97%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대한적십자사, 각 종교단체 등 민간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반입 농축산물과 임산물은 각각 7,895천불과 3,526천불로서 대부분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표1-2-30>

반출입 통관실적

(단위 : 천불)

		'97	'98	증감률(%)
반 출	계	7,744	19,242	148.5
	농 축 산 물	7,241	18,732	158.7
	입 산 물	503	510	1.4
반 입	계	10,402	11,421	9.8
	농 축 산 물	3,162	7,895	149.7
	입 산 물	7,240	3,526	△51.3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2) 주요 품목별 반출입 통관실적

(가) 반출실적

농림축산물 반출 총품목수는 43개품목으로 전년도 8개품목에 비해 35개 품목이나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축산물은 밀가루, 우유와 크림, 제조담배, 소, 식용유, 정당, 쇠고기 등 36개 품목으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활성화 되어 반출품목이 다양화 되었다. 또한 입산물도 '97년에는 펄프 1개 품목 이었으나 '98년에는 제재목, 재생개량목재, 단판등 7개 품목으로 다양화되었다.

<표1-2-31>

주요품목별 반출실적

(단위 : 천달러)

구 분		연도별 반출실적		
		'97	'98	증가율(%)
계		7,744	19,242	148.5
농축산물	밀 가 류	3,208	7,066	120.3
	우 유 와 크림	2,081	3,442	65.4
	제 조 담 배	-	3,059	-
	소	-	1,543	-
	식 용 유	598	919	53.7
	기 타	1,354	2,703	99.6
소 계		7,241	18,732	158.7
입 산 물	펄 프	503	-	-
	재 생 개 량 목 재	-	223	-
	제 재 목 재	-	197	-
	기 타	-	90	-
	소 계	503	510	1.4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나) 반입실적

농림축산물 반입품목수는 한약재, 쌀, 녹두, 채유용농산물 등 17개 품목으로 전년도 4개 품목보다 다양화 되었으나, 임산물은 전년도와 같은 10개 품목이다. 반입실적은 농산물이 7,895천만달러로 전년대비 149.7%가 증가하였고, 임산물은 3,526천달러로 전년대비 51.3%가 줄어들었다. 이는 농축산물의 경우는 국내생산이 부족한 쌀, 녹두 등 곡류와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노동집약적 채취물의 반입 증가하였고, 임산물은 버섯, 고사리, 더덕, 참나무잎 등의 반입이 없었기 때문에 감소하였다.

<표1-2-32>

주요품목별 반입실적

(단위 : 천달러)

구 분		연도별 반입실적		
		'97	'98	증가율(%)
계		10,402	11,421	9.8
농축산물	한 약 재	2,572	1,965	△23.6
	기 타 곡 류	-	1,836	-
	채유용농산물	-	1,460	-
	건 조 채 소	-	740	-
	들 깨	463	-	-
	기 타	127	1,894	1,462.2
소 계		3,162	7,895	149.7
임 산 물	버 섯 류	2,679	1,095	△59.1
	호두등 견과류	1,637	2,068	26.3
	소나무꽃가루	1,629	-	-
	기 타	1,295	363	△72.0
	소 계	7,240	3,526	△51.3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 사무관 황인용)

## 제 3 장 국제농업동향

### 제 1 절 국제곡물수급과 가격동향

#### 1. 국제곡물 수급동향

##### 가. 개 요

1998년도 하반기 일부 국가의 엘니뇨현상에 의한 홍수·가뭄피해 등으로 인해 1998/99년 세계곡물 총 생산량은 전년대비 2,750만톤(1.5%)이 감소한 18억 4,832만톤으로 추정되었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594만톤(0.3%)이 증가하였으나 생산량을 80만톤이나 밀들고 있어 기말재고율은 전년수준인 17.8%로서 FAO의 권장 재고율 17~18%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나. 쌀

세계 쌀생산량(중단립종+장립종)은 중국의 홍수피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22만톤(0.8%)이 감소한 3억 8,218만톤으로 추정되며, 소비량은 생산량을 438만톤이나 웃돌고 있어 기말재고율이 12.5%로서 1974/7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단립종 쌀의 교역량은 우리 나라 쌀생산량(510만톤)의 29% 수준밖에 되지 않은 좁은 시장구조로 되어 있어, 중단립종쌀 수출국의 생산이 약간만 변화해도 국제가격은 큰 폭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쌀의 자급 기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다. 밀

1998/99년 세계 밀 생산량은 중국의 홍수·러시아의 가뭄 등으로 전년대비 2,194만톤이 감소한 5억 8,794만톤으로 추정되고 소비량은 전년대비 486만톤(0.8%)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전년도 밀 생산의 최대풍작으로 이월재고가 많아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23.4%로 추정된다.

### 라. 옥수수

1998/99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주요 생산국인 미국 및 중국의 풍작으로 전년대비 1,897만톤(3.3%)증가한 5억 9,259만톤으로 추정되고, 소비량을 1,095만톤이나 웃돌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1.8% 증가한 16.8%로 전망된다.

### 마. 대두

1998/99년 세계 대두 생산량은 최대 생산국인 미국 생산이 증가한 반면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생산감소 등으로 전년수준인 1억 5,719만톤으로 전망된다.

<표 1-3-1>

세계 곡물수급 상황

(단위: 백만톤)

		'96/'97	'97/'98(A)	'98/'99(B) (잠 정)	증△감(%) (B-A)/A
전체곡물	생 산	1,870	1,876	1,848	△1.5
	소 비	1,834	1,842	1,847	0.3
	교 역	252	251	244	△2.8
	재 고	291	327	328	0.3
	(재고율, %)	(15.9)	(17.8)	(17.8)	
쌀	생 산	380	385	382	△0.8
	소 비	380	384	386	0.5
	교 역	20	27	24	△11.1
	재 고	51	53	48	△9.4
	(재고율, %)	(13.3)	(13.8)	(12.5)	

		'96/'97	'97/'98(A)	'98/'99(B) (잠 정)	증△감(%) (B-A)/A
밀	생 산	538	610	588	△3.6
	소 비	576	584	589	0.8
	교 역	125	123	116	△5.7
	재 고	113	139	138	△0.7
	(재고율, %)	(19.6)	(23.7)	(23.4)	
옥수수	생 산	591	574	592	3.3
	소 비	567	580	581	0.2
	교 역	73	72	72	-
	재 고	93	87	97	11.5
	(재고율, %)	(16.3)	(14.9)	(16.8)	
대두	생 산	132	158	157	△0.6
	소 비	136	149	153	2.7
	교 역	37	40	39	△2/5
	재 고	13	21	26	23.8
	(재고율, %)	(9.9)	(14.3)	(16.8)	
잡곡	생 산	907	880	878	△0.2
	소 비	877	873	871	△0.2
	교 역	107	101	104	3.0
	재 고	127	135	142	5.2
	(재고율, %)	(14.5)	(15.5)	(16.3)	

주: 전채곡물은 쌀, 밀, 잡곡(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호밀, 기장, 혼합곡 등)의  
합계이며, 대두는 제외됨

자료: USDA, '99. 6 발표자료 근거

## 2. 국제곡물 가격동향

'95/'96년도 밀, 잡곡류 곡물의 생산이 크게 감소되는 바람에 기말재고율이 14%대로 떨어져, 이에 따른 수급불안정으로 '96년도 봄부터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국제가격이 최고가격이 최고 수준까지 폭등하였다.

구후 '96/'97~'97/'98년도 연속 풍작으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국제가격이 '96년도 이전 수준으로 하락 추이를 보여왔다.

'98/'99년도 옥수수는 생산이 증가한 반면 밀과 쌀의 생산이 크게 줄어

들었으나 미국의 곡물생산 상황이 양호하였고, 러시아 및 아시아 국가, 브라질 등의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주요곡물의 국제가격 '98년도 가을이후 낮은 추이를 보여왔다.

<표 1-3-2> 국제 곡물가격 추이

(단위 : 달러/톤, FOB)

	'94	'95	'96	'97	'98		'99. 6월	전년동기 대 비 (%)
					연평균	6 월		
밀	146	174	188	153	120	112	122	8.9
옥수수	107	120	159	118	103	105	87	△17.1
대두	240	235	288	292	234	242	169	△30.2
미국산 중립종쌀	499	397	468	421	431	410	548	33.6

주 : (밀) US Portland 백밀 1등급, (옥수수, 콩) US Gulf 2등급,  
(미국산 중립종쌀) US California)

자료 : USDA, '99. 6 발표자료 근거

(식량정책과 사무관 이영조)

## 제 2 절 주요 국가의 농업동향 및 양국간 통상협력

### 1. 주요 국가의 농업동향

#### 가. 미 국

##### (1) 농업경제동향

미국은 선진산업국가인 동시에 세계최대의 농업국가로써 초지를 포함한 경작가능 농지는 약 4억ha이며 그 중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은 약 1억8천만 ha이다. 미국의 농업인구는 약 660만명으로 총 인구의 2.4%를 차지하며,



농업경영은 가족농이 중심이고 회사형태의 기업농도 있다. 1998년 현재 농업을 경영하는 농장수(연간 천달러 이상의 농산물 판매기준)는 219만호로 총 가구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농장의 평균 면적은 176ha 수준이며 경지면적의 감소에 따라 약간 감소추세에 있다.

미국은 연간 3억4천만톤에 이르는 곡물(밀, 쌀, 옥수수 등 사료곡물)과 7,900만톤의 유지작물(대두 등)을 생산하여 세계 주요 식량공급처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과채류와 축산물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1995년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이후 1998년까지 곡물, 유지작물, 과일류, 축산물의 생산은 증가(옥수수 32%, 콩 27% 등)한 반면 채소류의 생산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1997년에 미국의 농가가 농산물 시장에서 수취한 현금총액은 2,087억달러로 1996년에 비하여 4.7% 증가하였고, 축산물이 1121억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별로는 캘리포니아(253억달러), 텍사스(135억달러), 아이오와(128억달러), 네브라스카(101억달러)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998년도에 농가판매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농가는 전체농가의 16.3%에 불과하나 전체 농경지의 55.9%를 차지하며 농가당 평균 604ha의 농지를 경영하고 있는 반면 54.4%농가가 전체농지의 14.2%를 경영하여 가구당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5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농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98년도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537억달러로서 총수출액의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중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대두, 옥수수, 밀, 쇠고기, 채소, 과일 등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약94억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였고, 다음으로 캐나다(70억달러), 멕시코(59억달러), 한국(22억달러), 대만(19억달러)의 순이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자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이다. 1998년도 농산물 수입액은 370억달러로 총 수입액의 4.1%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입품목은 커피, 신선채소 및 과일, 와인, 육류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캐나다(77억달러), 멕시코(46억달러), 콜롬비아 등 미주국가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로 집중되어 있다.

<표 1-3-3>

미국 농업 주요지표

	단위	'98		단위	'98
○ 농업인구	천명	6,615	○ 옥수수 생산량	백만톤	247.9
- 총인구 대비	%	2.4	○ 밀 생산량	"	69.4
○ 농가호수	천호	2,191	○ 쌀 "	"	6.1
- 총가구 대비	%	2.1	○ 콩 "	"	75.0
○ GDP	억달러	85,089	○ 식육생산량	"	35.8
- GDP 대비	%	1.8	○ 농산물 수출	억달러	537.3
○ 경지면적	천ha	385,983	- 총수출대비	%	8.4
- 호당경지면적	ha	176.2	○ 농산물 수입	억달러	370.1
			- 총 수입대비	%	4.1

주: 1. 경지면적에는 휴경면적, 초지면적 포함, 그중 작물재배면적은 177백만ha

자료: 1. USDA, Agricultural Statistics 1999

2. FAO, Production Yearbook, Trade Yearbook.

(2) 농업정책동향

1998년 미국 농업정책 및 제도 동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시장중심의 “1996 농업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관련 농업계 및 해당지역 주의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으나, 의회 관련사안은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의 주요 원인은 세계전체 및 미국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한 주요 감소에 따른 국제 농산물가격이 하락하여 미국의 곡물 및 축산업계 등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과 관련이 깊다.

1998년 7월 민주당 의원들을 과거 밀 등에 실시했던 부족불제와 유사한 가격지지제도의 도입을 주장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10월 농업부분에 대한 77억달러의 긴급원조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양당이 약 60억달러로 합의했다. 1998년 4월 농무부는 학교

급식용 등 식량원조사업으로 3천만달러의 쇠고기 구매계획을, 12월에는 5천만달러의 돼지고기 구매계획을 발표 하였다. 1998년 4월 낙농농가들은 우유 기준가격의 최저보장제를 요구하였고, 8월 설탕 생산자들은 저가로 수입되는 설탕제품의 수입제한을 요구하였다. 1998년 6월 국제무역위원회는 유럽산 밀 글루텐에 대한 수입할당제를 3년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8월 농무부는 보리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였다. 1998년 10월 미국 북부지역 밀 생산농가들은 캐나다산 밀의 저가수출에 대한 보호대책을 국제무역위원회에 건의했다.

둘째, 식품의 안전성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물의 생산체계 확립등과 관련된 시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보장 요구와 환경보호론자들의 지속가능한 농업의 육성운동 등과 관련이 깊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대규모 낙농업자의 가축분뇨 및 폐수의 방류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천정화법에 반영하는 작업을 검토하였으며, 1998년 2월 의회는 하천과 강을 크게 오염시키는 집단적 대규모 양돈농가(500마리)의 시설확장등을 규제하는 법안을 심의한 바 있으며, 농무부 식품 안전 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s)은 주요 식육가공공장의 “위해요소 중점관리(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을 적용토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1998년 6월 농무부는 연간 35억달러의 시장규모에 달한 유기농산물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유기농산물법”을 개정하였고, 11월에는 유기식품의 표시기준을 설정해 발표하였다. 주요 기준은 유기농산물임을 표시하려면 ① 100% 순수한 유기농산물일 것, ② 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을 95%이상 사용할 것 등을 제시하였고, 유기농산물을 50~95% 포함하는 식품은 “일부 유기농산물 포함”을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유전자변형 농산물, 전자파를 쬐인 식품, 폐기물 처리 진흙 등의 유기 표시는 향후 정책과제로 남겨놓았다.

(통상협력과 서기관 윤기호)

## 나. 중 국

### (1) 농업경제 동향

1998년 중국 양자강 지역의 대홍수, 아시아 금융위기 등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북 3성의 쌀 농사가 대 풍작을 이룸에 따라 중국의 농업은 대체로 양호한 발전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 생산량은 1997년과 비슷한 4억 9천만톤이 생산되었으며, 면화 생산량은 '97년에 비해 5.9%가 감소되어 433만톤이 생산되었고, 유지, 당료, 과일, 채소작물 등은 '97년보다 증산되었다. 특히, 육류 총 생산량은 5,570만톤으로 '97년보다 4%가 증가하였고, 우유류 생산량은 '97년보다 9%가 증가한 845만톤이 된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주요품목별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소맥은 '98년도에 약 1,500만톤이 감소되었으나, 총 생산량은 1억 1,250만 톤으로서 중국사상 '97년 1억 2,232만톤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풍작을 이루었다. 각 지역의 보호가격 수매, 시장가격 방출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 따라 소맥의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그 보호평균 전국가격은 1.28RMB/kg, 시장 방출가격은 1.40RMB/kg으로 형성되었고, 7월이후에는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1.30RMB, 10월에는 1.40RMB가 되어 4,5월보다 8.7%정도 오른 상태에서 거래된 바 있다. 쌀은 1998년에 수도 파종면적이 3,133만ha로서 1997년에 비해 43만 ha 정도가 감소되었지만, 농업기술투입이 늘어나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어 총생산량은 1억 9,890만톤으로 '97년의 2억 73만톤과 비슷한 수준 또는 약간 감소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풍작으로 비축량이 늘어남으로서 쌀 수급조절 능력이 높아져 수급파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97kg정도로 전국 총 수요량은 1억 2,00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8년도 1-9월간 쌀수입량은 265톤으로 1997년 동기의 66만톤에 비해 298%가 늘어나 국내 쌀가격 조절에 기여토록 하였다. 한편, 쌀 주산지 국유 수매기업의 창고 여력이 부족하여 농민보유 쌀 수매가 어려운 실정으로 겨울에 벼 보관이 용이하나 춘절 이후 기후가 온난해져 많은 식량기업과 농민들이 쌀을 대량으로 방출함으

로써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옥수수는 '98년도 파종면적이 1997년에 비해 761무 (1무 : 200평)가 늘었고, 대부분 지역의 작황이 양호하여 총 생산량은 1억 1,600만톤으로 1997년의 1억 430만톤보다 약 10.8%의 증산이 이루어졌다. '98년도 옥수수의 소비량은 1억 1,500만톤으로 사료용이 약 70%를 차지하고, 양자강 중하류 지역의 대홍수로 인하여 축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주어 사료용 옥수수 수요량이 약간 감소되었다.

## (2) 농업정책동향

농업 생산에 있어 상대적인 발전추세를 보인 것은 중국이 아시아 금융위기에 적시 대처한 결과이며, 농업시설 건설강화, 농업에 대한지지 기반의 확충, 농촌 기본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농업보호 및 농민재배 의욕이 제고되고, 농산물 시장의 개선, 가격안정으로 농촌 개혁 및 발전이 잘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내린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농민소득의 완만한 증가로 빈곤층이 아직도 많으며, 농업생산구조 불합리로 농산물 종류, 품질 등이 시장수요에 부적정하며, 농업기초시설의 취약으로 자연재해 대응 능력약화, 일부지방에서 정책을 잘하지 못하여 농촌안정에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998년중에 제·개정된 중국의 농토관련 법령으로 '98.12.27일자로 토지관리법 실시조례를 국무령으로 공포한바 있다. 그 주요내용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토지 이용 구획, 농지의 보호, 건설용지, 감독 및 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8개장과 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 12월말 북경에서 개최된 전국 중앙농촌 공작회의에서 강택민 총서기는 '99년도의 중국 농업부 주요 농업 기본정책으로 첫째 농촌 기존정책을 안정시키고 농촌개혁을 심화하여 농민의 재배의욕 및 보호에 역점을 두며, 두 번째로 시장수요에 맞추어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거한 농업 및 농촌 경제 구조를 개선하며, 생산성 향상,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 등 농업분야에 있어 괄목할 만한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두면서 농촌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농업 순수익을 올리고자 하였으며, 셋째로 물 확보를 위한 중점사업으로 농업기초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농업생산 조건과 생태환경을 개

선토록 하였고, 넷째로 농촌기본 민주법 제정, 정신문명개혁, 당조직의 체계화를 통한 농촌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기에 기술한 농업의 기본정책달성을 위한 목표로 식량 총생산량을 작년과 같은 4억 9천만톤 이상으로, 면화 총생산량을 350만톤, 농민 1인당 순소득을 4%증가시키기로 하였으며, 농촌빈곤인구를 1,000만명 감소시키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중점시책으로

첫째, 농업구조를 개선시켜 높은 량의 식량생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등 농업 발전을 기하고, 두 번째로, 향진 기업과 소도시를 발전시켜 농업 유희노동력의 이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세 번째로, 물 확보를 중점으로 하는 농업 기반시설 건설을 강화시키며, 네 번째로,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농촌정책의 강력한 추진과 다섯번째로, 농촌 금융위험을 완화하여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농촌사회의 건설을 강화하여 농촌사회의 안정을 촉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고 각종 시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의 농업은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통제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됨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한층 높아져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중국의 농업의 발전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재 농업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한·중 농수산물협력위원회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간의 협력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협력과 사무관 이상진)

## 다. 일 본

### (1) 농업경제동향

일본의 1997년 농업인구는 총 인구의 4.8%인 6,01만명이며 경지면적은 국토의 11.5%인 4,34만ha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발이후 1998년까지 과일류의 생산량은 3.6% 증가하였으나 곡물은 15%, 식품은 6.6% 감소하였다.

한편, WTO 출범 이전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농산물 수출입규모는 거의 변동하지 않았으며 총 수출입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농산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1997년 세계농산물 총 수입액 4,643억달러중 일본은 382억 달러를 수입하여 8.2%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표 1-3-4> **일본 농업 주요지표**

	단위	'97		단위	'97
○ 농업인구	천명	6,010	○ 곡물류 생산량	백만톤	8.3
- 총인구 대비	%	4.8	- 쌀 생산량	"	8.1
○ 농가호수	천호	3,344	○ 과일류 생산량	"	5.4
- 총가구 대비	%	7.3	○ 식육 생산량	"	3.0
○ GDP	억달러	42,000	○ 농산물 수출	억달러	16.4
- GDP 대비 농림어업비중	%	1.9	- 총수출대비	%	0.4
○ 경지면적	천ha	4,336	○ 농산물 수입	억달러	382
- 호당경지면적	ha	1.3	- 총 수입대비	%	11.3

자료 : 1. USDA, Agricultural Yearbook, Trade Yearbook

2.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 (2) 농업정책 동향

1998년 일본 농업제도 및 정책동향은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크게 다섯가지의 특징을 보였다. 대내적으로 일본경제는 1997년부터 침체되기 시작하여 1998년은 마이너스 2.8%를 기록하였으며,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쌀시장의 관세화 수용여부 및 WTO 차기 농산물협상문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기였다.

첫째, 일본정부는 1998년 농림수산예산을 전년 35,922억엔에 비해 6.1% 삭감한 33,744억엔으로 재정하여 경제침체에 대응하였다. 이 예산은 국가 전체예산 776,692억엔의 4.3%, 일반 세출예산 445,362억엔의 7.6%에 해당한다.

둘째, 쌀시장의 완전개방을 위한 준비를 추진해 나갔다. 1998년 12월 농림수산성은 쌀의 관세화 수용방안과 생산조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하

였다. 1999년 4월 1일부터 관세화 방식으로 쌀 시장을 완전개방하고, 식량법에 의한 기존의 쌀 생산조정시책은 계속 시행하여 쌀 공급 과잉문제를 해소하고,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999년 쌀의 재고 수준은 200만톤으로 유지하고, 1998년은 논면적 2,701천ha중 35.6%인 963천ha(1997년 673천ha)를 일부 휴경하거나 밀·보리·콩 등을 심어 630만톤의 과잉 쌀을 감축하였다.

셋째,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 대한 대비와 21세기 새로운 농업여건에 맞는 농업관련 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해 나갔다. 농림수산성은 1998년 10월, 21세기 농업개혁방향에 대해 발표하면서 새로운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1999년내에 제정키로 하였다. 이 기본법에는 식량·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의 문제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을 반영시켜 나가는 한편, WTO 차기 농산물 협상에서도 이 기본방향을 견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넷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및 유기농산물의 품질보증제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준비하였다.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식품의 소비와 안전성 보장제도 등에 대해서 협의회를 가졌다.

다섯째,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방식과 농업재해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체계화하였다. 농가에 대한 자금지원제도를 “농업경영기반 강화자금”과 “농업경영개선 촉진자금”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하였으며, 시행을 확대해 나갔다. 농업경영기반 강화자금은 농지·농업용시설·가공 및 판매시설 등 하부구조 투자와 관련하여 연리 2~3% 수준으로 10년 유예후 15년 이내의 상환조건이며, 농업경영개선 촉진자금은 종묘·비료·사료·고용노임·비육용 가축 등의 구입비와 농업용 시설·농기계 등의 수리비 등 운영자금을 연리 2%대로 수시 융자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농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시 쌀 등 경종작물, 소 등 주요가축, 사과 등 과수, 화훼작물 등에 대해 농업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재해보험제도와 유사하다. 쌀·보리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다른 품목은 임의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통상협력과 서기관 윤기호)



## 라.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1) 농업경제 동향

EU 15개 회원국의 경지면적은 134백만ha, 농가수 737만호, 호당경지면적 17.4ha, 농림어업 종사자수는 약 743만명이며 농업총생산액은 2,175억ECU (유럽통화단위:European Currency Unit)정도이다. 농산물 생산액에 있어서는 우유생산이 17.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돼지고기 12.2%, 쇠고기 9.8%, 곡물류 9.3%, 신선채소 9.0%, 와인 6.0%, 가금육 5.5%, 신선과일이 4.1% 순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네덜란드를 제외한 10개국은 농업생산액 중 축산물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61.4%), 아일랜드(84.8%), 덴마크(67.5%) 등의 축산물 생산 비중이 높다. 프랑스(14.1%)와 영국(14.7%) 등은 곡물생산 비중이 비교적 높고, 이탈리아(20.2%), 스페인(19.4%), 그리스(19.9%) 등 지중해연안 국가에서는 과채류가 많이 생산된다.

EU 전체로 볼 때 농림어업종사자가 전체 고용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인데 영국(1.9%), 벨기에(2.7%), 스웨덴(3.2%) 등은 그 비중이 낮은 반면 그리스(19.9%), 아일랜드(10.9%), 포르투갈(13.3%) 등은 높은 편이다. EU 농업생산액이 전체 GDP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인데 스웨덴(0.4%), 독일(0.8%), 오스트리아(0.9%) 등 낮은 국가와 그리스(5.9%), 아일랜드(3.4%) 등 비교적 높은 국가가 혼재되어 있다.

EU의 농업생산은 공동농업정책추진, 가맹국확대, 기술변화에 의한 단위당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EU 농산물이 세계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맥 17.2%, 설탕 14.8%, 쇠고기 14.7% 돼지고기 19.7%, 탈지분유 33.9%, 치즈 44.1%, 버터 27.9%, 전지분유 36.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EU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공급증가가 수요확대를 상회하고 있어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곡물과 낙농제품의 과잉현상이 심한 편이다.

EU 역내 교역을 제외한 전체 역외 수출입액중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은 수출이 7.6%이며 수입은 10.6%이다. 농산물 역외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3.2%), 러시아(10.2%), 일본(7.4%), 스위스(6.0%) 등이며 최근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구권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음료를 비롯하여 곡물, 과채류, 육류 등의 비중이 크며, 농산물 역외 수입의 주요 대상국은 미국(13.3%)이 으뜸으로 높고 그 외 브라질(8.8%), 아르헨티나(4.3%) 등이며 주로 과채류, 목재, 동물사료, 수산물 및 커피 등이 수입되고 있다. EU의 농산물 교역은 역내 무역이 역외 무역에 비하여 비중이 크며 역내 무역 증가율이 역외 무역 증가율 보다 높다. 1997년도의 역외 농산물 무역적자는 163억 ECU이다.

<표 1-3-5> EU 농업의 주요 지표(1997)

국 가 (15개국)	농림어업 종사자 (천명)	농업총 생산액 (백만ECU)	식량 자급률 (%)	농산물 무역수지 (백만ECU)	농산물 비중(%)		
					수출	수입	가계비 <sup>1)</sup>
벨기에	102	6,592	50	424 <sup>2)</sup>	11.3 <sup>2)</sup>	11.9 <sup>2)</sup>	15.7
덴마크	100	6,932	119	5,353	26.6	15.8	19.7
독일	1,039	32,745	120	△16,786	5.2	10.5	14.2
그리스	765	8,815	-	△895	29.9	16.8	22.2
스페인	1,055	26,853	99	869	16.8	13.8	19.3
프랑스	1,029	46,953	-	9,489	13.6	10.6	17.8
아일랜드	149	4,435	98	2,836	12.5	9.3	30.7
이태리	1,307	35,081	-	△11,591	6.9	14.2	18.9
룩셈부르크	4	181	-	424 <sup>2)</sup>	11.3 <sup>2)</sup>	11.9 <sup>2)</sup>	18.2
네덜란드	251	16,385	26	15,504	21.4	14.0	14.1
포르투갈	601	4,347	-	△2,836	8.2	15.2	28.0
영국	493	18,997	123	△12,397	6.9	10.9	19.9
스웨덴	127	3,333	127	△278	6.1	8.3	18.4
핀란드	164	2,306	124	484	7.9	8.7	19.5
오스트리아	249	3,583	99	△1,252	6.7	8.3	16.8
전체	7,434	217,538	-	△16,304	7.6	11.8	17.5

## (2)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 (가) 공동농업정책의 변화

EU는 1957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농업의 생산성 향상, 적절한 농촌 생활 수준의 보장, 시장안정과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적절한 소비자 가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역내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역내 농산물 우대, 공동재정부담 등을 포함하는 공동농업정책(CAP : Common Agricultural Policy)을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1967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CAP의 시행으로 EU는 곡물, 육류 등의 지속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누적과 EU예산의 절반이상을 사용하는 농업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UR협상 타결에 따른 수출 보조감축에 대비한 전반적인 정책의 조정 필요성에 따라 1992년 5월 CAP 개혁을 단행하였다.

1992 CAP 개혁의 목적은 지지가격을 30% 낮추고 휴경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생산 감축을 유도하여 농업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며,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확대를 달성함으로써 UR 농업협정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사전적인 정책조정에 있었다. 새로운 농업보호장치의 도입을 제한하고 전체적인 지원 수준을 낮추도록 한 UR 협정의 테두리 속에서 지지가격의 인하에 따른 농민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시 EU의 중요한 과제였다. EU는 이와 같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부족불제도(deficiency payment)와 유사한 보상지불제(compensatory payment)를 도입하여 UR 협상에서 허용대상 정책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지지가격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농민에 대한 소득지지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 (나) AGENDA 2000과 CAP개혁

1997년 7월 EU 집행위는 1995년 12월 마드리드 EU정상회의의 요청에 따라 2000/06년간의 EU 활동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개혁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Agenda 2000」을 발표하였는데 그 일부로 CAP 개혁안을 제시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genda 2000」에

나타난 CAP 개혁안은 2000년의 차기 WTO 농산물 협상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에 대한 요구, 국제 경쟁의 가속화에 따라 열악한 경제환경에 처해있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책임문제 해결 등 대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동구권 국가를 EU에 포함시키는 EU 확대문제, 정부의 재정부담증가에 따라 농민들을 시장경제에 적응시켜야 하는 문제와 같은 내부적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에 의하여 마련되었다. CAP개혁의 주요 목표는 EU의 농산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차기 WTO농산물 협상과 EU의 확대에 대비하여 농산물 지지가격을 10~30% 감축하되 직접지불을 확대하며 농촌개발을 위한 지원을 효율화하는데 두고있다.

「Agenda 2000」에 포함된 CAP의 주요개혁방향은

첫째, 과잉 생산이 우려되는 곡물, 쇠고기 및 낙농분야의 지지가격을 축소하고 WTO에서 허용된 직접지불금액을 상향조정하고,

둘째, 농촌개발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업분야기금(EAGG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의 운영제도를 개선하며,

마지막으로 동구권확대와 관련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등 6개국을 1차 가입대상국으로 하여 '98년 이후 협상을 시작하여 2001/2004년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1998년 3월 EU 집행위는 EU집행위원 전체회의에서 CAP개혁, 2000/06년 예산지침, 구조 및 결속기금의 개혁, 가입예정국에 대한 지원 등 4개 분야에 대한 패키지 제안을 통과시킴으로서 'Agenda 2000'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동 조치의 규범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CAP개혁의 주요 내용은

곡물분야에 대한 지지가격(Intervention price)을 2000. 7월에 20%를 일시에 감축하고, 소득 손실보상을 위한 직접지불금을 상향지급하며, 직접지불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의무휴경비율을 현행 17.5%에서 0%로 설정하되 생산동향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쇠고기분야는 광우병(BSE)과동 등에 따른 공급통제로 제고가 낮아지고 있으나 2005년까지 제고가 늘어날 전망이므로 지지가격을 2000. 7월부터 3

년간 균등한 비율로 30% 감축하고 손실보상금은 상향지급하며, 공공수매 제도를 2002. 7월부터 폐지하고 민간보관 운영체제로 전환하며,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지지가격을 2002. 7월부터 4년간 균등한 비율로 15% 감축하고 지지가격 감축에 따라 보상금을 상향 지급하되 젖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것을 우유생산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현행쿼타제도는 2006. 3월말까지 연장하여 급격하게 생산쿼타제도를 폐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차원에서 CAP보조금 지급시 일정한 환경기군 준수를 의무화하여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접지불금에 대한 지급상한을 설정하여 보조금이 과다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EU 가입예정국에 대하여 2000/06기간중 연간 31억ECU씩 지원하도록 하며, 현재 낙후지역개발, 산업구조전환 지역지원, 장기실업극복지원, 취업상태개선지원, 농업구조조정 지속화 지원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구조조정기금을 낙후지역개발, 산업구조전환지역 지원, 교육훈련 및 고용 진작 필요지역 지원 등 3개 분야로 축소하여 낙후지역개발을 중점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CAP개혁안이 발표되자 EU의 농민단체는 유럽형 농업모델을 실현하고 차기WTO협상과 EU확대에 대비한 방안으로 환영하면서도 회원국의 재량권 금지, 지지가격 감축에 따른 농가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EU회원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은 개혁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U집행위는 CAP개혁안을 포함한 AGENDA2000을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패키지 제안을 타결하기 위해 농업위원회 등을 통한 회원국간 의견 절충을 계속하고 있으며, 1998. 6월 영국의 Cardiff에서 개최된 EU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의 이견만 노출된 상태로 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나, 12월 비인 정상회의에서 개혁안의 타결시한을 1999. 3월 베를린 정상회의로 설정함으로써 CAP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1999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

었다. 그러나 CAP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제안은 EU 회원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들이므로 각 회원국들은 집행위의 작업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국간의 타협과 조정이 예상되고 있어 패키지 제안이 상당히 변화된 모습으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협력과 서기관 윤기호)

## 2. 양자간 농업통상활동

양자간 농업 통상 및 협력활동은 WTO차기 농산물 협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었다. 각국이 제기하는 통상현안은 그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설명하여 상대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한국은 짧은 기간안에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를 이루었으며, UR협상을 비롯한 다자 및 양자무대에서 약속한 사항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갈 것임을 양자협상에서 강조하므로써 협상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여 현안 해결을 원만하게 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다수국이 제기하는 합리적 요구사항은 국내제도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농업정책과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 가. 미 국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최대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쇠고기, 쌀 등 우리나라에 대해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주요 농업 통상에 관한 협의는 한·미경제협의회(Korea-US Economic Council), 한·미통상실무협의체(TAG : Trade Action Group)회의 등 양국간 정례협약과 방문인사 면담 및 양국의 외교채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998. 11. 18일에는 글리크만(Dan Glickman) 미국 농무장관이 방한하여 양국 농업장관회담을 가졌으며, 1998. 11월초에는 미국의 워싱턴에서 '95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미 경제협의회가 개최되어 양국 경제현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1998년도에는 미국의 GSM-102자금 사용문제와 쇠고기 쿼타 소진 문제가 중요한 통상현안으로 등장하였다. 1997년말 외환위기로 초래된 원료 농산물의 수입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주한미국대사관 및 주미 한국대사관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미국 농무부 및 무역대표부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한 신속한 교섭활동을 전개하여 미국 상품신용공사의 GSM-102자금 15억불을 배정받아 원료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제위기에 따라 수입쇠고기의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자 미국은 쇠고기 수입쿼타 소진을 위해 한국의 수입쇠고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수입쇠고기 전문점제도 등에 대해 양측의 견해를 좁히기 위해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우리 삼계탕의 대미국 수출, 제주 산 감귤의 미국내 5개주 반입금지 문제를 양국간 통상관련 협의시마다 제기하고 양국 검역당국간 협의를 지속하여 우리 업계의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였다.

## 나. 일 본

일본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우리 농산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며,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하고 농업 통상분야에서 우리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 WTO, APEC 등 다자간 국제기구에서 상호 정보교류와 공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주재공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 10. 8일 한·일 양국 정상은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농업분야에 관한 고위급 실무대화를 강화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농업관련 고위급 협의채널을 구축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 양국간 상호관심사항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농업관련 각종 다자간 국제기구에서의 원만한 공조유지와 정보교류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간 상호보완적 농업기술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일찍부터 한·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농업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추진하여

왔으며 1998. 10월 동경에서 제31차 회의를 갖고 논농사의 지속성과 공익적 기능에 관한 연구,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험 등 시험연구협력사업과 18개분야 80명의 전문가 교류, 종자 및 기술정보자료교환 등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 다. 중 국

중국은 '92. 8월 한·중 수교이후에 우리나라와의 농산물교역이 급격히 증가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 2번째로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양국의 통상현안협이는 매년 개최되는 한·중경제공동위원회와 한·중무역실무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1998. 11. 11~15일간 김대중대통령은 중국을 국빈방문하고 양국간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21세기의 한·중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고, 농림분야 협력사업으로서 랑팡시범농장 건설, 곤명윈예박람회 참가, 산림보호·조림사업, 병충해 방제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국측은 우리와의 전체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에 관심이 매우 크다. 1998년도에는 가금육 등 육류의 수입허용과 중국산 옥수수 수입을 요구하였다. 1997. 12월 홍콩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하였으며, 중국측은 지속적으로 수입중단 조치의 해제를 요청하여 왔고, 우리측은 중국내 가금전염병 발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산 옥수수 수입문제는 양국 업계간 협의가 진행되어 1999년 1월 축협이 중국산 옥수수를 도입하여 미국에 집중되어온 사료곡물 도입선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양국간의 농업의 상호보완적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1996년 한·중 농업분야의 전반적인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양국간 한·중 농수산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1998. 12월 북경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국 농업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WTO에 가입하게 될 것이며, 중국의 경제규모나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APEC, WTO, FAO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특히 농림분야에서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라. 캐나다

캐나다는 경제분야에서의 높은 대미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나라 등 아시아국가와의 교역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농산물 교역에 있어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오고 있다. 캐나다와의 주요 현안협의를 주로 1년에 1회 개최되는 한·카 특별동반자관계작업반(SPWG : Special Partnership Working Group)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8. 4. 16일 밴클리에프(Lyle Vanclief) 캐나다 농업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농업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통상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98. 10. 27에는 우리농산물 특별판촉행사 참석을 위해 밴쿠버를 방문한 우리 농림부장관이 동장관과 Tele-conference를 갖기도 했다.

1998년초부터 한국이 미국 GSM-102자금을 사용함에 따라 캐나다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을 어렵게 한다고 인식하여 캐나다의 EDC(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자금 사용협의를 요청함에 따라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관과 협의를 통하여 '98. 3. 31 EDC자금 1억5천만불을 사용키로 합의하여 원료곡물 수입선이 미국으로 집중될 우려를 해소하고 양국간 농산물 교역상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양국 농업장관회담을 계기로 검역당국간의 협의를 거쳐 캐나다는 우리 사과·배에 대한 검역조치를 개선함으로써 캐나다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리 삼계탕의 수출문제도 검역전문가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측이 제기하는 통상현안은 알팔파, 유채, 맥아, 사료용 보리 등의 관세인하와 퀴타 증량이 대부분으로 이들 품목은 우리가 국내적으로 필요한 사료원료나 가공용 농산물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사정, UR협상 결과 등에 따라 할당관세 및 퀴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한·카 SPWG회의 등을

통해 설명하여 큰 쟁점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 마.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와 농산물 교역에서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농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식량안보를 중요시하는 등 우리나라와 공통점이 많은 편이다. 양측의 농업관련 통상현안은 주로 동식물 검역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며, 농업통상에 관한 협의는 매년 양측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한·EU 각료회의 및 고위급협의회와 주요인사의 방문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식물 검역, 위생검사 등에 대해 투명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관리제도는 UR협상에서 양허한 범위에서 운영됨을 EU측에 주지시키므로써 EU측이 제기하는 통상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동·식물 검역과 관련하여 EU측은 개별국가 중에 가축질병이 없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질병 비발생을 인정해 주는 동물검역상의 지역화원리(Principle of Regionalization)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적용에 관한 협정” 등에서 명시한 지역화개념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국제수역사무국(OIE/IOE :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된 후에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여 대응하였다. 개별국가와의 검역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국제규정과 국내규정에 따라 관련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일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우리측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수출국의 자료제출이 늦어지는데서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우리 삼계탕 및 경주용 말의 수입을 허용토록 EU측에 촉구하여 1998. 8월 EU측 전문가가 방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삼계탕의 대EU 수출과 관련하여 이미 프랑스와 네덜란드에 대한 수출이 허용되었으나 새로운 EU규정에 따라 EU집행위에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EU측의 이중적인 제도 운영임을 지적하며 삼계탕 수출작업장의 등록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 바. 호주 및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아시아 시장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케언즈그룹의 일원인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통상협약 협이는 매년 개최되는 한·호/한·뉴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98. 3. 13일 John Anderson 호주 1차산업·에너지부 장관이, 1999. 7. 8일 Harry Alfred Jenkins 호주하원 부의장 일행이, 1998. 12. 10일에는 Lockwood Smith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방한하여 농림부장관을 면담하고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간 주요 통상협약은 과실류, 야생조수의 고기(Game Meat) 등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동·식물검역 분야와 쇠고기 시장접근 문제 등이다. 우리측은 동·식물 검역 현안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및 우리의 검역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타조고기 등 Game Meat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 관습상 식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을 강조하여 대응하였다. 우리의 쇠고기 쿼타 문제에 대해 호주 및 뉴질랜드는 미국과 함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호주는 자국의 관심 품목인 일반육(grass-fed beef)을 많이 구입해 줄 것을 희망한데 대해 우리측은 급격한 경기침체로 쇠고기 소비가 감소하였음을 강조하고, 양측의 견해를 좁히기 위한 다각적인 협상을 전개하였다. 한편 그 동안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온 한국산 배의 수출허용문제는 큰 진전을 보여 1999년 산 우리 배가 호주 및 뉴질랜드에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 사. 기타국가

### (1) 아시아 아프리카국가

아시아 및 아프리카지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나 농업협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지역이나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클 뿐만 아니라 아세안 등 동남아국가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농업국가이며 미작위주의 농업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농업과 유사한 측면이 많아 이들 국가와의 농업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98. 5. 7일 Rafel Eitan 이스라엘 부총리 겸 농업부장관이 방한하여 양국 농업장관회담을 개최하여 양국간 농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1997. 8월 체결한 한·이스라엘 농업기술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제1차 농업기술협력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연구 수행, 농업분야 훈련 및 농업관계자교류, 종자 및 유전자원교류, 동식물 검역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합의하여 양국 농업기술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양측은 과실류 무역확대를 위해 한국산 배와 이스라엘산 감귤류에 대해 수입허용을 공정적으로 검토기로 합의하고 양측 검역당국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998. 12. 14일 솔하우딘(Soleh Solahuddin) 인도네시아 농업부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농업장관회담을 갖고 농업분야 협력방안을 협의하였으며 Soleh 장관은 한국의 농업기계화의 성공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인도네시아 농업기계화에 한국산 농기계공급을 확대키로 약속하여 우리 농기계업체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국가의 열대과일 수입허용 요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오렌지 및 육류의 수입허용 요청에 대하여 국제기준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필리핀산 망고, 파파야(1999년 1월), 남아공산 오렌지(1999. 4월) 등은 조건부로 수입을 허용하였고, 나머지는 WTO/SPS 규정 및 IPPC(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 국제식물보호협약), OIE 등 관련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입허용 절차가 운용되고 있음을 설명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예방하였다.

## (2) 중남미국가

중남미 지역의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은 농축산물 수출국으로서 우리나라와 교역에 있어 비중은 크지 않으나 육류 및 열대과일 등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1998. 11월 정부에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하여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1998. 4. 6일 칠레식품전시회 참관을 위해 방한한 플라디닉(Carlos Mladinic) 칠레 농업부장관과 양국농업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간 농업통상협력 및 APEC, WTO차기협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1998. 11. 17일 한·칠레 양국정상은 말레이시아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1998. 12월초 칠레에서 FTA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시하였다.

한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육류 및 열대과일 등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요청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동식물 검역현안은 WTO/SPS규정과 IPPC, OIE 등 국제기준이 설정한 범위내에서 상대국의 위생상황에 따라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되며, 다른 농산물의 경우에는 UR협상에서 양허한 범위내에서 수입관리제도를 투명하게 운용됨을 설명하여 통상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

### (3) 구소련지역

농업분야에 있어서 구소련지역과는 현재까지 특별한 현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성장잠재력과 시장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지역이다. 1998년도에는 카자흐스탄과 긴밀한 연락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의 농어촌진흥공사가 칩칸트반도에서 계획중인 대규모 개발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대러시아 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양국간 돼지고기 수출위생조건을 협의하여 양국 수의당국자간 서명이 이루어졌다.

(통상협력과 윤기호 서기관)

## 제3절 농업관련 국제기구 관련활동

### 1. WTO활동

#### 가. WTO 차기농산물협상 논의

##### (1) 차기농산물협상 관련 WTO 논의 및 주요협상국 동향

'98년중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5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농업·서비스 등 UR협상 결과에 따라 후속협상일정이 정해져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여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9월부터 협상의 범위, 방식, 일정 등에 대한 준비작업을 일반이사회에서 추진하였다. 한국, 일본, EU, 케언즈그룹 등은 UR협상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포괄적 협상방식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분야별 협상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농업·서비스 외의 새로운 분야를 추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다자간협상의 범위나 방식등은 '99년말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제 3차 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체 협상의 구도가 어떻게 결정되든 농산물협상은 '99년말에 시작될 예정이며, 타결까지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산물협상에 대해 각국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협상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이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데, 농업이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이고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 관련 논의의 장에서 의견대립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국들은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과 시장개방의 확대를 강하게 요구 하고 있으며, 특히 케언즈그룹은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시장이 개방되고 장벽이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각료회의를 통해 입장을 통일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분야에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원리를 확산해 나간다는 것이 농산물 분야 협상의 장기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국들의 주장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반면, 수입국들은 반대 입장에 서서 긴급적 보조금 감축과 시장개방의 속도를 늦추려 하므로 방어적으로 임하게 되어 있어 전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98년 중에 주요 협상국가들은 차기협상과 관련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은 '96년 농업법으로 가격지지를 없애고 생산과 관계없는 고정보조금 제도로 전환하여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생산결정에 있어 농민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일단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바 있으나, 최근 농업여건 변화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97년부터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이 줄어 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가격지지를 부활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98년말에는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60억달러 규모의 재해보상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행정부는 '98년도에 의회로부터 신속협상권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은 농산물협상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으며 강력한 경쟁력과 협상력을 바탕으로 시장개방의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보조금의 철폐, 보조금 및 관세의 대폭 삭감, 국영무역제도의 개선,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교역장벽 해소 등을 강력하게 주장해 오고 있다.

EU는 동구권 가입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줄이고 직접지불로 전환한 미국에 대응하여 차기협상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가격지지를 줄이고 직접지불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농업정책개혁안을 마련하여 회원국간 협의를 진행시켰다. 개혁안의 내용중 가격지지의 축소폭 등을 놓고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나타났다. EU는 다자간협상의 방식에 대해 서는 농업·서비스 외에도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상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고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UR협상의 결과가 미미하다고 보고 수출보조금을

철폐하는 등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은 수준으로 무역장벽을 낮추는 획기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자간협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방식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농산물협상은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농산물협상에서는 가격지정책의 생산중립적 직접지불로의 전환, 고율관세의 대폭 감축, 국영무역 등 시장접근물량 관리방법의 개선, 수출신용 규제, 수출보조 철폐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4년간의 연속된 풍작과 많은 최소시장접근물량 때문에 늘어난 쌀 재고와 휴경면적의 확대 등이 부담이 되자 '99년 4월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새로운 농업기본법을 통해 가격지지를 줄이고 중산간지역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책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차기 협상에서도 UR협상 때처럼 강력한 농업보호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량안보를 비롯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선진국·개도국간 그리고 수출국·수입국간의 이익균형 등을 강조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UR협상의 결과 농산물수출 기회가 확대되지 못하고, 식량안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재정지원·식량원조 등이 줄어드는 등 혜택을 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포괄적 협상을 진행시키기에 앞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2) 차기협상 대책 추진

협상개시가 가까워짐에 따라 정부는 국내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98.4월에는 협상대책단을 구성하여 협상에 대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진행하였다. 대책단 산하에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통상정책협의회를 두어 협상동향을 정확히 알리고 협상추진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하였고, 농림부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지원반을 두어 협상의제 및 정보를 연



구·분석하여 협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통상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협상담당자로 고정 배치하여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대외적으로는 WTO 뿐 아니라 OECD, FAO, APEC 등 협상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차기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9월에는 WTO 농업위원회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 특히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협상담당 고위급 책임자가 일본·EU·미국 등 주요 협상국을 주기적으로 방문, 협상 책임자간 정보 및 의견교환을 실시함으로써 주요국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농산물 수입국들과의 공조체제를 갖추는 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98.3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EU·스위스·노르웨이 등 5개국이 정기적인 비공식협의를 가지면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였다.

## 나.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

### (1)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 개요

'96년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 1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97.6월부터 WTO 농업위원회 비공식회의 형태로 개최된 분석 및 정보교환(AIE) 작업이 '98년에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AIE 초기에는 주로 수출국들이 제안서를 내고 논의가 수출국들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98년 중반부터는 수입국들이 주로 다원적 기능을 중심으로 많은 제안서를 내고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으로써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 (2) 분석 및 정보교환 작업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

### (가)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

수출국들은 국영무역 등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이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고 있어 농산물교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수입국들은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수입관리제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수요나 가격 등 시장여건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 (나) 농산물 관세의 감축

수출국들은 아직도 농산물의 관세가 높고, 특히 관세화한 품목은 관세가 너무 높아 사실상 수입제한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수입개방효과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수입국들은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융통성있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 (다) 특별긴급관세제도

수출국들은 특별긴급관세가 아주 적은 수입이 이루어져도 발동되거나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는 데도 발동되는 등 운용상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없애거나 대폭적인 손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수입국들은 이 제도가 비관세조치를 없애는 데서 오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부분적인 개선필요성은 있을지 몰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 (라) 허용보조의 요건 재검토

수출국들은 허용보조의 요건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감축 대상인 사업을 허용보조로 분류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요건이 너무 엄격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다 신축적인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 생산제한직접지불제도(Blue Box) 폐지

주요 수출국들은 생산제한직접지불제도는 기본적으로 생산 및 무역을 왜곡하고 있고 과도기적인 조치이며 사용국가도 소수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EU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이 제도가 감축대상 보조보다 무역왜곡효과가 적고 농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유용한 제도이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 수출보조 철폐

미국과 케언즈그룹국가들은 수출보조가 농산물시장을 가장 크게 왜곡시키고 있고 특히 개도국의 농산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조기에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조한 반면, 수출보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EU는 철폐에 반대하고 일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사)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

케언즈그룹 국가들은 수출신용이 수출보조와 함께 농산물교역을 가장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엄격한 규율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EU도 엄격한 규제를 요구하였다.

(아) 수출제한 및 수출세에 대한 규제

주요 농산물 수입국과 일부 수출국들은 수출제한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거나 없어 수입국의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자) 적절한 자제조항의 존폐

현행 농업협정에 따라 UR협상 양허범위 내의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상계조치를 강제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캐나다 등은 2004년 이후에는 상계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반면 EU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 조항의 연장을 주장하였다.

### (차) 농업의 비교역적/다원적 기능

수입국들은 농업이 식량생산 기능 외에 환경보전, 식량안보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협정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보조요건을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수출국들은 다원적 기능이 농업에 대한 지원 감축과 무역자유화를 방해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현재의 농업협정으로도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종철)

## 2. OECD 활동

### 가. OECD 농업위원회 활동

우리 나라는 '96년 12월 12일에 OECD 29번째 신규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로 매년 2~3회 개최되는 OECD 농업위원회에 참여 대응하여 왔다. 농업위원회의 활동은 당면한 농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농정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며, 무역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등 타위원회와 합동으로 공동작업반을 만들어 농업과 무역문제, 농업과 환경문제, 농업구조조정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국 산하 식량농업수산물국은 위원회 및 작업반회의에 참가하여 토의의 근거가 될 자료준비와 보고서를 작성한다. 농업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세계농업정책이나 농산물시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과거 UR협상시 주요쟁점이 되었던 농업보조금 삭감문제, 시장지향적 농업정책의 추진 등도 OECD에서 먼저 논의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98년에 회원국의 관심이 크게 집중되었던 OECD의 농업분야 회의는 '92년 이후 6년만에 개최된 각료급 농업위원회('98.3.5~6)였다. '87년 OECD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농업정책 개혁원칙에 비추어 지난 10년간의 농업정책 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회원국의 농업정책개혁 방향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농산물 수출국측은 농업정책 개혁과 무역자유화를 더욱 강화하자고 주장하였고, 한국, 일본,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측은 농업정책 개혁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원국 농업여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개혁의 및 자유화의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 융통성(flexibility)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수입국측은 농업이 식량생산외에 농촌개발, 자연경관유지, 고용제고, 환경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갖고 있다는 점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각료급 농업위원회의 성과로는 WTO 농업협정에 명시된 농업에 대한 보호와 지지의 점진적이고도 실질적인 감축이라는 장기적 농정개혁방향을 확인하면서도,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료공동선언문에 반영한 것이었다.

이후 '98년에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로서 제127차 농업위원회('98.5.26-28)와 제128차 농업위원회('98.12.7-9)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OECD 차원의 주요 의제로 발전되었다. 논의 배경은 '98.5월 농업위원회에서 다기능성을 '99/2000 OECD 주요 논의의 의제로 상정시킨 이후 '98.12월 농업위에서 농업의 다기능성에 대해 OECD 사무국이 작성한 첫 보고서가 논의되었으며 '99년 말까지 보고서를 완성키로 합의 하였다.

'98년 농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기능성의 요소로 환경보전, 농촌경제유지, 식량안보를 언급하고 공공재로서의 이러한 비식량서비스(non-food service)의 농업생산과의 결합측면, 내부화 가능성, 타산업활동을 통한 다기능성의 발휘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역기능의 포함여부, 개별 순기능을 농업생산과정 및 다른 순기능과 분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무역자유화와 다기능성의 조화방안 등이 논의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의 다기능성이 농업지지축소와 무역자유화과정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농업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사회적 최적량의 다기능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히 수입국에 있

어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각국 농업여건에 따라 다기능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평가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도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오랜 논의를 거쳐 온 교역자유화와 더불어 농업의 다기능성을 OECD의 주요논의의제로 확고히 함으로써 OECD 논의에 균형을 가져왔으며 다기능성에 대한 논의를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각국의 다양한 농업여건을 고려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였다.

그밖에도 농업무역쟁점에 관한 워크샵(10월), 곡물사료설탕그룹회의(10월), 육류낙농품그룹회의(11월)에 소관 부서가 참석하여 활동을 펼쳤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서해동)

#### 나. OECD의 한국농업정책 검토

OECD 농업위원회는 1987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합의한 ①농업 지원의 점진적인 감축 및 시장기능의 장기적 향상, ②식량안보, 환경보호, 고용 등 사회적 관심사항의 고려, ③가격지지보다 직접소득보조를 활용한 농가 소득 보장 등 농정개혁원칙에 따라 OECD 농업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별농정검토(Country Review)와 회원국 농정점검 및 평가(Monitoring and Evaluation)제도를 도입하였다. '96년 12월에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국별 농정검토는 '97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농림부는 '79~'97년간의 경제 및 농업현황, 주요농업정책, 주요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 농업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등 우리 나라의 농업과 농업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OECD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국은 '98년 4월 한국농정검토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후 최종 초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98년 5월에 OECD사무국의 식량농업수산국장 등 보고서 작업 실무작업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농림부의 정책담당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고, 장·차관 및 차관보와의 면담도 이루어졌다. 이후 '98년 6월말에 개최된 제40차 농업위·무역위 합동실무작업반(JWP)회의에서 김동태 차관을 수석으로 한 농림부 대표단을 파견하여 사무국 및 회원국들의 질의

에 답변하고 향후 농정 방향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은 직불제의 확대와 친환경농업, 농업관련 전후방산업의 효율성 제고, 구조개선의 지속 추진 등을 정책권고로 제시하였고 우리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 있는 영세 소농구조를 지닌 한국농업의 특수성과 IMF 경제위기에 따른 정책개혁 추진상의 어려움을 회원국들에게 적극 설명하였다. 약 2년여의 작업기간을 걸쳐 OECD에서는 '99년 상반기에 한국 농정검토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다. '97년까지의 농업정책에 대한 국별 검토를 마치게 되면 우리 나라의 '98년 이후의 농정변화는 연례 회원국 농정점검 및 평가보고서를 통하여 계속 OECD가 점검하고 평가하게 된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이명순)

### 3. FAO 활동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4,500여명의 직원과 177개 회원국을 갖고있는 UN산하 최대 기구로서 각국의 농업, 수산업, 임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이를 각 회원국과 UN기구에 분배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농림수산분야의 UN본부라 할 수 있다.

FAO는 총회, 지역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와 정부간 그룹회의 등을 개최하며 FAO에서 논의된 사항이 기초가 되어 각종 농림수산업에 관한 국제규범이 제정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FAO에 납부하는 기여금은 연간 280만불 수준이며 '99년에는 310만불로 정해져 회원국중 16위에 있는 주요 Doner국이다.

'98년도에는 FAO 제24차 아태지역총회(4월), 식량안보위원회(6월), 식량농업유전자원회의(6월), 이사회(11월) 등 여러 회의에 참가하여 세계식량사정 및 식량안보를 평가하고 식량안보 증진방안, 세계식량정상회의(WFS, '96.11) 행동계획 진전상황의 모니터링, 환경보전과 연계되는 농업생산, 식량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규약 협상, FAO 중장기 정책과 예산 등을 논의 하였는데, 특히 농산물 수출국의 무역자유화 논리에 대응하여 부존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주곡자급이 필수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농업과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농업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태지역총회에 참가한 농림부장관은 디우프(Diouf) FAO사무총장과 면담을 통해 FAO의 대북 지원문제와 FAO사무국에 한국인 진출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일본의 농림수산성 정무차관과 면담을 통해 앞으로 고위 상설대화창구를 마련하여 WTO협상과 쌀 수입개방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외에 중국, 미얀마 대표와도 양국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면담하였다.

FAO기술지원사업 유치를 위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비닐하우스 내에서의 수정별 번식 및 활용에 관한 기술” 프로젝트가 FAO본부에서 승인되어 FAO와 경북대학교가 공동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국제농업개발기금(IFAD)과 농협이 공동 주최하는 교육훈련사업을 '99년9~10월에 서울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국제기구에 한국인 진출을 돕고자 33명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세계식량계획(WFP)에 2명이 채용되었고 FAO에 3명이 채용 논의 중에 있다.

베르티니(Bertini) WFP사무국장(4월), 알 술탄(Al-Sultan) IFAD총재(8월), 바하르 무뇨(Bahar Munip) 아프리카아시아농촌재건기구(AARRO)사무총장(10월) 등 농업관련 국제기구 대표가 방한하여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과 개발도상국 지원 방안, 국제기구 및 회원국간 교류증진 등을 논의하였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조일호)

#### 4. 국제기구의 대북한 지원사업

북한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원은 '95년 수해에 따른 긴급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사회주의 경제의 비생산성과 북한당국의 자구적 노력이 부족한 결과 매년 100~200만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여 계속 지원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98년은 국제기구에서 2,197만\$을 지원하였는데 WFP와 UNICEF를 통한 긴급식량지원과 FAO/UNDP의 이모작 지원사업은 당초목표 대비 어느 정



도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기타 국제기구의 실적은 낮았다.

<표 1-3-6> 주요 국제기구별 대북지원실적 및 목표

	제1차 (’95.9 ~’96.6)	제2차 (’96.7 ~’97.3)	제3차 (’97.4 ~’97.12)	’98		’99목표	주요 지원내용
				목 표	실적(%)		
WFP	만\$ 592	2,652	13,434	34,580	20,922 (61%)	22,564	긴급식량지원
FAO	-	229	166	1,459	90 (6)	-	농작물생산, 시설복구
UNDP	136	228	249	515	0 (-)	7,422	농경지, 도로복구
UNICEF	134	349	1,728	641	570 (89)	2,044	아동영양 개선
WHO	22	6.5	160	773	117 (15)	728	의료시설 복구
OCHA	-	5.7	5.6	56	30 (54)	240	행정 및 모니터
FAO/UNDP	-	-	102	300	244 (81)	3,919	보리 이모작
NGO 등	43					693	학교급식, 감자생산
계 (목표대비%)	927 (46)	3,470 (80)	15,846 (84)	38,324	21,973 (57)	37,611	

※ WFP(세계식량계획), FAO(세계 식량농업기구), UNDP(유엔개발계획), UNICEF(유엔아동기금), WHO(세계보건기구), OCHA(유엔인도지원국, NGO(민간지원기구)

우리나라는 '95년부터 시작된 WFP의 대북식량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98년에는 정부차원으로 WFP를 통해 1,100만달러(밀가루, 옥수수 4만톤), 민간차원으로 남북적십자사를 경유하여 2,085만달러(밀가루, 옥수수, 비료, 한우 등)을 지원한 결과 '98년말까지 총 31,593만달러로 이는 국제사회 전체 103,663만달러의 30%에 이른다.

또한 WFP 정규 분담금 40만달러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외환위기에 따라 재고과잉인 국내분유로 대북 지원토록 추진하여 외화절약과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줄였고, 한-FAO신탁기금 50만달러도 북한의 채소와 축산사업에 지원되도록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에 적극 참여하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견해를 표명하여 북한 식량난의 객관적 평가, 분배의 투

명성 확보, 단기적 식량위주의 지원에서 농업기반시설 및 영농지원을 통한 북한의 농촌개발과 식량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방안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조일호)

## 5. APEC 관련활동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의 경제유대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1989년 호주 캔버라 회의에서 태동된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강화된 전향적인 성격을 가진 협의체이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하였고, 각종 APEC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는 분야별 조기자유화, 식량작업반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초 APEC은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6개국의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나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담당한 1991년에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 3개국이, 1993년에는 멕시코와 파푸아뉴기니아, 1994년에는 칠레가 1998년에는 러시아, 페루, 베트남이 추가로 가입하여 현재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은 정상회의를 필두로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각료회의, 각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회의(SOM)와 그 산하에 3개의 위원회, 2개 전문가그룹, 9개의 실무그룹 등이 조직의 근간을 이룬다. 연간 총 회의 및 행사가 50여회, 농림부가 참가하는 주요회의도 5~7회나 되며 이 모든 결과를 집약하는 정상회의는 1993년 미국 시애틀 회의 이래 매년 11월, 각료회의 직후에 개최되며, 제2차(1995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제3차(1997년 캐나다 밴쿠버), 제6차(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이르고 있다.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에서는 “1993.12.15일까지 UR협상타결 최대노력” 결의를 하였고, 선진국·개도국의 중장기 무역자유화 목표(2010/2020)를 정한 1994년 보고르 선언에 이어 우리나라가 확고하게 제기한 농업 등 민감분야에 대한 신축성 원칙(Flexibility)이 반영된 1995년 오사카정상회의에서

는 오사카 행동지침(OAA)을 통해 APEC의 양대 축인 무역자유화 및 원활화(TILF: 14개 분야)와 경제·기술협력(Eco-tech: 13개 분야)의 세부분야별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였고 “인구증가와 소득성장이 식량, 에너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과제로 채택되어 우리나라는 식량작업반에서 2년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여 식량수입국의 입장을 확보하였다.

1996년 필리핀 수빅정상회의에서는 당시 18개국의 구체적 실천계획인 마닐라 행동계획(MAPA)이 국가별 개별행동계획(IAP), 공동행동계획(CAP) 경제기술협력 공동계획으로 집대성·채택되고 조기자유화 대상분야 발굴을 검토토록 제시되었다.

1997년 밴쿠버 정상회의에서는 15개 분야별 조기자유화 대상을 정하고 임산물, 수산물 등 9개 우선분야(주로 관세분야)를 '98년 중에 논의하여 1999년부터 이행할 구상이었으나 1998 11월 각료회의 시까지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입장차이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후속 추진분야에 속한 농산물 등 6개분야는 1999년중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8년은 모든 국력을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집중시키는 정부 정책기조에 의거 농림부는 통상관련 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추진 9개분야에 포함된 임산물중 국내적으로 수용가능한 조기자유화 참여안(80%)을 제시하여 미국 등 전체회원국의 호응을 얻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회원국의 합의에는 실패하여 임산물 등 9개 분야는 1999년 WTO로 넘겨 EU등의 주요국 지지를 달성키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1998년 12월에 개최한 1999년 APEC 관련회의 사전 준비회의에서는 의장국인 뉴질랜드와 호주 등이 중심이 되어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가 제안한 APEC Food System 추진을 위한 식량특별작업반(Ad-Hoc Food Task-Force) 설립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기존 식량작업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주축으로 2년여 직접 작업에 참여하여 식량안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우리나라의 확고한 입장을 반영하였던 것처럼 새로운 작업반에서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일본과 공조·참여하기로 하였다.

(통상협력과 사무관 김상현)

## 6. 농업·환경·무역 연계 논의동향

“지구정상회의”라고도 불리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되어 지구환경보호와 개발의 일반원칙인 “리우선언”과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의제21”이 채택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지구환경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때부터 지속가능개발이라는 큰 목표아래에서 각 분야별로 환경과 연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농업의 경우에도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 도입을 비롯하여 다방면에 걸친 논의가 여러 국제기구를 통하여 추진되고 있다.

### 가. OECD 농업 및 환경회의

OECD에서는 경제·환경정책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지속가능한 개발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환경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OECD가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주창하면서 농업과 환경간의 관계분석을 위하여, 1993. 9월부터 농업위·환경정책위원회 공동작업반회의(Joint Working Party of the Committee for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 JWP)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이 분야에 관한 논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사항은 농업정책 개혁과 환경과의 관계, 농업무역자유화와 환경, 그리고 13개 분야별 농업환경지표개발 등을 들 수 있다. 농업정책개혁이란 그동안 OECD국가에서 채택해 온 농업정책이 가격, 생산 및 무역에 왜곡을 초래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농업정책이 생산연계보조금을 줄여나가는 대신 직접지불제등과 같이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친환경 농업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가하여, 환경농업분야에 있어서 OECD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OECD 논의동향을 파악하여 농업·환경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내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후 각국의 농업환경정책의 평가수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 OECD의 농업환경지표 개발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국토이용지표(land conservation indicator)는 주로 논농사에서 얻을 수 있는 수분 흡착기능, 홍수방지, 토양침식방지 및 산사태방지 등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강력히 주도하여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이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온난화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저감기술 및 정책현황을 소개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지속가능농업을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다.

#### **나. WTO 무역환경위원회 회의**

한편, 1995년 출범한 WTO에서는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를 설치하여 무역과 환경에 관한 10개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농업부문과 관련된 주요 의제는 “무역제한 및 왜곡 제거의 환경적 편익”으로써, 무역 왜곡조치(농업보조금, 고관세 등) 제거가 환경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농산물수출국(케언즈 그룹)은 농업보조금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환경편익을 증대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EU, 일본, 노르웨이 등과 공조하여 농업보조금은 다양한 환경효과를 지니며, 각국의 특수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환경과 연계된 농업보조금 논의가 차기 농산물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 **다. 다자간 국제환경협약 논의**

OECD, WTO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와는 별도로 환경보전을 위해 무역을 규제하고자 하는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가스로 주목받고 있는 CO<sub>2</sub>, CH<sub>4</sub>, N<sub>2</sub>O등을 지구촌차원에서 감축하도록 약속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사전통보

승인(PIC)협약, 그리고 멸종이 심화되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지속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다양성협약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1999. 2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 총회에서는, 유전자변형농산물 등 현대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생명 공학제품의 국가간 이동 및 자연방출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생태계에의 위해 방지를 주요목적으로 하여, 이른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채택을 위한 협상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이 논의를 통해 일본, EU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식용, 사료용 및 가공용으로 들어오는 유전자 변형농산물도 환경방출 가능성이 크므로 의정서상의 사전통보승인 절차를 거쳐 수출·입 되도록 하는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 그룹(Miami Group)이 동 의정서상의 무역절차 대상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가급적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함에 따라 의정서 채택을 위한 최종협상이 결렬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분야 생명공학 제품을 수입하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수입국의 새로운 환경에 들어 올 때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수입국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국의 주권을 보장하도록 주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세계적인 시장규모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및 개발정책을 병행하여 21세기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 및 개발과정에 있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균형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다.

(동상협력과 사무관 이상재)

## 7. WTO/SPS협정이행 관련 논의동향

### 가. WTO/SPS위원회

1995년 WTO출범과 함께 발효된 “WTO/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

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의거 설치된 WTO/SPS위원회는 매년 3차례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나, 협정발효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협정의 이행과 운영에 관한 검토작업 등 위원회에 부여된 과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1998년에는 4차례의 회의가 개최(3월 제10차, 6월 제11차, 9월 제12차, 11월 제13차)되었다.

SPS협정은 수입국이 유지하고 있는 SPS조치(수입식품 위생검사와 동·식물 및 그 생산품의 검역)가 국제교역을 왜곡시키는 비관세 장벽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WTO/SPS위원회 논의과정에서 SPS협정 이행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농산물 수입국과 협정상 주요원칙의 이행촉진을 의도하는 수출국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8년 회의에서는 협정 제12.7조에 의한 협정이행·운영상황에 대한 검토작업이 가장 중점적으로 취급되어 SPS조치의 투명성 확보방안, 국제기준과의 조화문제, 동등성관련 조항 검토, 지역조건 및 위험평가의 적용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협정 5.5조의 적정보호수준 적용상의 일관성지침 개발, 국제기준사용여부 모니터링 및 각종국제기구에 대한 SPS위원회의 옵저버 지위인정 문제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협정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논의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수입국과 수출국의 의견대립이 보다 극명해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이러한 논의동향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입국으로써 개도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함과 함께 농산물 수입국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수출국 위주의 검역·검사 규범 제정을 최소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협정이행검토와 관련하여는 WTO공식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은 국가의 SPS조치관련 통보내용에 대해 선진국이 비공식 번역처(unofficial translation)를 마련, 번역하여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 조치통보국가에 법적책임을 부여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였고, 협정 제5.5조(적정보호수준 적용상의 일관성달성)의 이행촉진을 위한 일관성지침 개발은 SPS

조치 설정에 대한 일정한 규율을 정하고자 하는 수출국들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응하여 ‘적정보호수준’이외에 협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은 ‘SPS’조치가 지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판단의 기초가 아니라 협정 제5.5조를 이행하기 위한 단순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다.

1998년 SPS위원회에서는 양자현안이 과거보다 많이 거론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편으로 동식물 검역기능의 강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소비자 및 산업 보호를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SPS조치의 투명성 제고(’98년 동·식물 검역·검사관련 규정 13건 통보) 등 성실한 WTO/SPS협정 이행을 통해 SPS조치와 관련된 통상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 **나. 동물·축산물 및 식물 검역·검사관련 국제기구 동향**

WTO/SPS협정상 가능한 한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SPS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는 국제식품규약위원회(Codex), 국제수역사무국(OIE)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으로서, 우리나라는 이들 국제기구의 국제기준 제정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Codex 위원회에서는 각 분과위별로 식품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격·기준과 식품위생검사 및 수출입 증명에 관한 표준·지침·권고사항을 논의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도에는 위험평가원칙, 유기농산식품 생산등 지침, 식품중의 수의약품 및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식품수출입검사·증명원칙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1998년 Codex위원회 논의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는 유기축산물 지침개발시 아국의 관련 분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료사용기준 등에 대한 position paper를 제시하였으며, 김치의 Codex표준 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2000년 가공과채류분과에서 총8단계 논의과정 중 7단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Codex 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Codex 대책협의회를 설치(1998.4월)하였다.

1997. 11월의 FAO총회에서 그간 논의되었던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회원국에서 수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998.11월 로마에서는 IPPC협약 제10조에 의한 식물위생조치 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1차 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는 식물검역관련 국제 최고위원회로서 국제기준의 개발 및 절차 제정 등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1차 잠정위원회 회의 결과 ‘특정지역의 병해충 상황결정’, ‘병해충 박멸프로그램을 위한 지침’ 등 2개의 국제기준을 새로이 채택하였다. 1997년의 IPPC협약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식물보호협약(APPPC:Asia-Pacific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을 포함한 각 지역협정들도 이와 조화를 위해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정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남미잎마름병(SAVB)의 의무이행조항을 고무재배국가에만 부여하도록 하는 등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협력과 사무관 이상진)

## 제 2 편 1998년도에 시행한 농정시책

여 백

# 제 1 장 농업 · 농촌발전을 위한 지원토대확립

## 제 1 절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재원확보

### 1. 예산편성 기본방향 및 규모

'98 예산은 IMF 위기로 인한 국가전체 재정의 어려움으로 삭감추경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IMF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에 우선권을 두는 한편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의한 1단계 42조원 투융자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신규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IMF 위기로 인한 정부예산의 감액편성에 따라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과 15조원 농특세사업예산을 모두 합친 1998년 농어업구조개선사업 예산규모는 7조9,276억원으로 1997년 예산대비 3.3% 감소하였다.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6조6,614억원으로 1997년 예산대비 0.6% 감소하였으며, 15조원 농특세사업은 1조2,662억원으로 1997년 예산대비 15.6% 감소하였다.

#### < 42조원 구조개선사업 및 15조원 농특세사업 예산규모 >

- 42조원 구조개선사업예산 : ('97)6조7,013 → ('98)6조6,614억원, 0.6% 감소
- 15조원 농특세사업예산 : ('97)1조5,000 → ('98)1조2,662억원, 15.6% 감소

### 2. 중점 투자분야 및 재원확보 내용

#### 가.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98년도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예산은 IMF 위기로 인한 국가재정

의 어려움으로 삭감추경을 편성하게 됨에 따라 IMF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과 투자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

농업생산성 향상, 영농기계화 기반확충,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전년보다 2.4% 늘어난 2조1,901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업기계화사업에는 농기계 구입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여 농기계공급 위주에서 마을보관창고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 전년보다 19.0% 감소된 3,661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업인력육성 사업에는 농업인후계자 8천명, 쌀전업농 6천명, 과수·화훼등 전업농 1,300호를 육성하기 위해 4,683억원이 책정되었다.

도매시장, 공판장건설등 농산물 유통시설의 하부구조 확충 및 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농산물 안전성 및 품질제고 등을 위한 유통 구조사업에 4,320억원이 책정되었다. 우리농산물의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시설현대화, 기술개발, 축산업구조개선 등의 사업에도 각각 3,302억원, 1,999억원, 6,827억원이 책정되었다.

농촌에 살면서도 다양한 취업 등을 통하여 도시인 못지 않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소득원개발사업과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복지개선사업에는 각각 5,965억원, 1,267억원이 책정되었다.

어업과 임업부문의 예산을 살펴보면, 어업구조개선 부문에는 '97년도 수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증액 책정에 이어 '98년도에도 전년보다 0.6% 증액된 4,742억원이 책정되었다. 임업구조개선 부문에는 4,107억원이 책정되었다.

아울러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농업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과실·채소·특작생산유통지원, 농산물가공산업지원, 농산물포장센터지원사업 등은 보조를 축소하고 융자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경지정리사업,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등의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였고, 전년도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과 유리

온실·축사등 투자규모가 큰 신규설치사업은 지원규모를 축소 조정하였다.

#### 나. 15조원 농특세 사업

15조원 농특세사업 예산은 IMF 위기에 따른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전년보다 15.6% 감액된 1조2,662억원이 책정되었다.

1998년 농특세사업 총예산 1조2,662억원중 경지정리, 유통구조개선, 기술개발 등 농업경쟁력강화사업예산은 7,595억원으로 60.0%에 해당된다. 농촌도로·하수도정비 및 주택개량, 폐수처리, 생활용수개발 등의 농촌생활여건개선 예산과 농어촌지역 국민연금·의료서비스, 공공도서관건립, 직업훈련, 학자금융자, 오지및낙도교통지원 등 농어촌 생활여건개선·농업인복지증진 예산은 5,067억원으로 40.0%이다.

<표 2-1-1> 42조원 구조개선+15조원 농특세사업 예산(1998)

(단위: 억원)

사 업 명	42조+ 15조계획	'92~'96	'97	'98	전년비 증가율(%)
1. 생산기반정비	129,063	57,727	25,157	25,550	1.6
2. 농업기계화	30,720	19,107	4,518	3,661	△19.0
3. 시설현대화	19,699	10,348	3,362	3,462	3.0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17,266	8,749	2,557	2,516	△1.6
5. 정예인력육성	26,076	15,328	4,748	4,828	1.7
6. 소득원 개발	24,682	15,226	5,554	5,965	7.4
7. 축산업구조개선	55,053	29,291	6,923	6,827	△1.4
8. 유통구조개선	37,027	16,641	5,672	4,831	△14.8
9. 영농규모화	25,408	16,241	3,808	3,840	0.8
10. 생활환경·복지개선	76,573	21,308	8,259	6,924	△16.2
11. 어업구조개선	37,760	18,066	6,530	6,247	△4.3
12. 임업구조개선	24,650	15,654	4,925	4,625	△6.1
계	503,977	243,686	82,013	79,276	△3.4

<표 2-1-2>

42조원 구조개선 투융자사업 예산(1998)

(단위: 억원)

사업명	42조계획	'92~'96	'97	'98	전년비 증가율(%)
1. 생산기반정비	86,063	50,853	21,397	21,901	2.4
2. 농업기계화	30,720	19,107	4,518	3,661	△19.0
3. 시설현대화	17,699	9,948	3,126	3,302	5.6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12,226	7,373	2,047	1,999	△2.3
5. 정예인력육성	23,576	14,619	4,463	4,683	4.9
6. 소득원 개발	24,682	15,226	5,554	5,965	7.4
7. 축산업구조개선	55,053	29,291	6,923	6,827	△1.4
8. 유통구조개선	22,477	12,457	4,543	4,320	△4.9
9. 영농규모화	25,408	16,241	3,808	3,840	0.8
10. 생활환경·복지개선	10,348	5,288	1,602	1,267	△20.9
11. 어업구조개선	24,225	14,117	4,713	4,742	0.6
12. 임업구조개선	21,500	14,354	4,319	4,107	△4.9
계	353,977	208,874	67,013	66,614	△0.6

<표 2-1-3>

15조원 농특세 투융자사업 예산(1998)

(단위: 억원)

사업명	15조계획	'92~'96	'97	'98	비고
1. 생산기반정비	43,000	6,874	3,760	3,649	※ '98까지 총 투자 계획의 41.6%
2. 농업기계화	-	-	-	-	
3. 시설현대화	2,000	400	236	160	
4. 기술개발 및 정보화	5,040	1,376	510	517	
5. 정예인력육성	2,500	709	285	145	
6. 소득원 개발	-	-	-	-	
7. 축산업구조개선	-	-	-	-	
8. 유통구조개선	14,550	4,184	1,129	511	
9. 영농규모화	-	-	-	-	
10. 생활환경·복지개선	66,225	16,020	6,657	5,657	
11. 어업구조개선	13,535	3,949	1,817	1,505	
12. 임업구조개선	3,150	1,300	606	518	
계	150,000	34,812	15,000	<sup>1)</sup> 12,662	

※ 1) 농특세회계 채무상환 269억원 제외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석희진)

## 제 2 절 농림업무 심사평가를 통한 투융자 효율성 제고

### 1.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사업 현황

#### 가. 농어촌 투융자계획 개요

UR 협상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92년에 착수한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획기간 : '92~'98)과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착수한 15조 농특세사업(계획기간 : '94~2004)의 총투융자규모는 56조 7천억원으로 과거에 비해 상당수준 확대되었다. 이중 42조 구조개선사업 투융자 계획의 총규모는 41조 7천억원으로 국고 35조 4천억원(보조 16조5천), 지방비 3조 8천억원, 자부담 2조 5천억원이다. 15조 농특세 사업은 '94년 계획수립 당시 부처간 합의에 의해 분야별·사업별로 소관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표 2-1-4>

#### 농어촌 투융자계획

(단위 : 억원)

	42조구조개선사업 ( '92 ~ '98 )	15조 농특세사업 ( '94 ~ 2004 )	계
국 고	353,977	150,000	503,977
지 방 비	37,916	-	37,916
자 부 담	25,128	-	25,128
계	417,021	150,000	567,021

#### 나. 농어촌 투융자 집행내역

'92부터 '98까지 42조 구조개선사업과 15조 농특세사업의 투융자 실적은 52조3천억원으로 총 투자계획대비 92% 수준이며, 그중 지방비, 자부담 등을 제외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고투융자 금액은 농특세사업 6조1천억원을 포함하여 39조5천억원이다.



<표 2-1-5 >

총 투융자 실적

(단위 : 억원)

	총 투융자계획			예산계획('92-'98)			집행실적('92-'98)		
	42조 ( '92~'98)	15조 ( '94~2004)	계	42조	15조	계	42조	15조	계
○국고	353,977	150,000	503,977	342,501	62,474	404,975	333,976	60,890	394,866
-보조	164,915	129,931	294,846	170,306	54,513	224,819	166,852	53,365	220,217
-융자	189,062	20,069	209,131	172,195	7,961	180,156	167,124	7,525	174,649
○지방비	37,916	-	37,916	46,687	-	46,687	57,693	-	57,693
○자부담	25,128	-	25,128	70,324	-	70,324	70,716	-	70,716
계	417,021	150,000	567,021	459,512	62,474	521,986	462,385	60,890	523,275

특히 '98년에 투융자가 마무리된 42조 구조개선사업은 '98년까지 총 46조 2천억원을 지원하여 당초 투융자계획대비(41조7천억원) 111%를 달성하였으나 국고투융자는 IMF로 인한 예산삭감 등의 요인으로 당초 투융자계획 35조4천억원 대비 94% 수준인 33조 4천억원에 머물렀다.

투융자 내용을 보면, 경지정리, 용수개발, 도매시장 건설, 농어촌 도로포장 등 SOC성격의 투자와 시험, 연구, 개발 등 정부직접시행사업에 19조3천억원(49%)이 투자되었다.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물류센터, RPC(미곡종합처리장), 포장센터 등 유통·가공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4조2천억원(11%)이며, 농기계, 축사, 온실 등 실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에게 직접 지원된 사업비는 16조원(41%) 수준이다.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에게 지원된 내용을 보면 농업인이 되겠다는 용자금은 13조1천억원으로 92%를 차지하고 있고, 순수한 보조금은 19%인 2조 9천억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농특세사업은 '94~'98 기간중 6조 1천억원이 투자되었으며, 그중 41%에 해당하는 2조5천억원은 농어촌주택 및 하수도정비, 오지·낙도교통 지원, 농어촌의료지원, 농어민연금, 농어촌도로정비 등 농어촌지역 복지 및

생활여건개선사업에 투자되었다. 농어업경쟁력강화 부문에 지원된 금액은 59%인 3조6천억원이며, 대부분은 대구획 경지정리, 물류센터 건설, 임도 건설, 어항 건설 등 SOC성격의 사업에 투자되었다.

<표 2-1-6 > 지원 대상별 투융자 실적

(단위 : 억원)

대 상 별	42조 ('92-'98)		15조 ('94-'98)		합 계			지원 비중
	보조	융자	보조	융자	보조	융자	계	
○농어업인 등 소득지원 사업등	32,058	160,035	4,061	6,184	36,119	166,219	202,338	51.2
- 농어업인지원	26,386	126,763	2,378	4,679	28,764	131,442	160,206	40.6
- 생산자단체 등	5,672	33,272	1,683	1,505	7,355	34,777	42,132	10.6
○생산기반확충 등	134,794	7,089	49,305	1,340	184,099	8,429	192,528	48.8
- SOC사업	110,276	4,851	37,114	-	147,390	4,851	152,241	38.6
- 교육복지, 기술 개발 등 정부사업	24,518	2,238	12,191	1,340	36,709	3,578	40,287	10.2
계	166,852	167,124	53,366	7,524	220,218	174,648	394,866	100.0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주사 정영환)

## 2. 농업투융자 사업의 객관적 평가 실시

### 가. 농림사업 심사평가 실시

농림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추진을 독려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함으로써 농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농림사업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9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규정된 75개 사업에 대해 사업성격에 따라 공정별 물량, 공정 및 과정, 사업물량, 사업비 등 네 가지 평가기준으로 나누어 사업추진실적을 확인·점검하고, 예산집행실적을 평가하여 개선·보완과제를 도출하였다.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 추진된 것으로 나타

났으나, 농수산물 물류센터, 축산물종합처리장 등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대상 75개 사업의 연간 예산은 88%의 집행실적을 보였으며, 불용액은 '97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이 감소한 것은 IMF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사전에 투융자계획을 조정하여 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한 데 기인하였으며, 이월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농특회계 세수부족과 IMF 이후 사업여건 악화에 따른 사업추진지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검결과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보완과제(37개)를 도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농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병홍)

## 나. 지방자치단체 평가

농림사업추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지자체 스스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노력고취를 통해 농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96년에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를 처음 도입하였고 '97년부터는 평가에 따른 실적가산금을 확보·지원함으로써 우수지자체가 지역특화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왔다.

올해 평가는 '97년도 한해동안 사업시행자의 예산사업추진상황, 농림사업실시규정 이행실태, 지방비지원실적, 사업진척상황 및 자금집행실적 등 진도관리 상황,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노력도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지자체를 선정, 실적가산금 150억원을 시도별로 차등 지원하였다.

올해 평가의 성과로는 훈령 제정등 평가의 제도화를 통해 평가가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도달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농림분야에 대한 지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농림사업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평가결과 주요농정시책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평가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세분화되어 지자체에 과다한 행정부담을 초래한 면이 있고 일부 불합리한 평가항목이 있어 개선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장농정 위주의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현장농정점검평가를 추가하였고 친환경농업, 직거래 등 농산물유통개혁, 농산물 수출촉진, 가축방역사업, 부존자원 활용 노력등 주요농정시책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노력 실적을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수행에 따른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고 평가결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진도관리 상황을 평가항목에서 삭제하고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대폭 간소화 하는 등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안용덕)

#### **다. 농어촌 투융자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향**

농어촌투융자 결과 경지정리, 수리시설, 유통시설 등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이 확충되고 농업기계화, 영농규모화, 전문화가 촉진되는 등 농업구조개선 및 경쟁력제고 기반이 상당수준 구축되었다. 아울러, IMF 경제위기속에서도 주곡자급을 이루고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업인의 경영능력, 유통체계 등 소프트웨어 부문 발전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능력·경험이 없는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부실화된 사례도 일부 발생하였고, 일부사업은 과도한 보조지원으로 자금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거나 보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업비를 신청한 후 이를 유용하는 등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이 부적당한 사례도 있었다. 더구나, IMF 위기에 따라 첨단영농, 고에너지 사용, 사료 등 해외의존형 축산사업과 원예사업등은 내수부진, 유가상승, 금융비용 증가 등 외부 충격에 극히 취약한 면을 보인 사례도 상당히 있었다.

앞으로 농림사업투융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농업경영주체인 농업인의 기술·경영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업인에 대한 보조지원은 크게 감축하고, 융자로 대폭 전환하여 농업인의 책임경영의식 함양과 자생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관련기금의 효율화 방안 마련과 지방농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확충, 현장 중심의 농정체계 확립

과 사후관리 강화 시책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주사 정영환)

### 3. 농림업투융자 제도개선 추진

#### 가. 농림사업 투융자 제도개선

##### (1) 농업인 보조지원사업의 융자전환

그 동안 농업인등에 대한 보조지원이 자금시장을 왜곡시키고 과잉수요를 유발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경영이 부실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농업인과 농업법인 경영체의 자율책임경영 의식을 함양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등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지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대신 융자비율을 높혀 지원토록 하였다.

예를 들면, 과실·채소·특용작물생산유통사업과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융자지원으로 대체하고, 시설·원예생산유통사업 미곡종합처리장, 농기계구입 등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율을 축소하였다. 그러나, 농업생산유통기반시설 등 SOC 성격의 공공사업과 환경농업 등 외부효과 큰 사업, 기술개발·교육·복지 등 정부정책사업, 소득보상적인 직접지불 등은 계속해서 보조로서 지원할 계획이다.

##### (2)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 도입

정책자금 지원이 개별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사업대상자 선정기관과 자금대출기관이 서로 달라 책임이 분산되는 등 자금의 효율적 지원이 문제가 있어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대출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농업경영종합자금을 도입,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는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인 농·축협에 제출하면, 대출취급기관은

직접 또는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해 사업수익성 등 경영분석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적정금액을 지원하되, 상환능력과 경영능력 중심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단계적으로 대상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99년에는 원예·특작분야 17개 시·군 35개소에 대하여 70억원을, 축산분야 17개 시·군 40개소에 대하여 80억원을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0년이후에 연차적·단계적으로 종합자금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 (3) 국고 포괄보조 및 차등보조제도 도입

지방농정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종전의 「소액보조사업」 명칭을 「지역특화사업지원」으로 변경하고 실질적인 포괄적 보조금 형태의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보완하였다. 즉 농림부에서는 시·도로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메뉴를 신청받아 추천사업으로 제시하고 사업의 선택, 시·군별 사업계획의 확정,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을 시·도지사 책임하에 추진토록 하였으며 추천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도 농림부의 별도 승인을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지방재정능력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 지원해 오던 농림사업 국고보조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99년에 우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추진성과와 사업규모, 시행지역, 지자체의 사업선호도, 지방비 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주사 정영환)

## 나. 농림사업실시제도 보완

농림사업의 투융자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농림사업실시규정」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개정하고 '99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대폭 보완하였다.

### **(1) 농림사업지원대상자 선정 내실화**

앞으로 농림사업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영능력과 장래 성공 가능성이 있는 성실한 농업인이 선정되어 부실경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적이고 객관성있는 사업성 검토를 사전에 실시하도록 사업 추진절차를 보완하였다.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시설원예(유리온실 등) 생산유통사업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의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다. 축산단지조성 및 가축계열화사업은 축협중앙회에서, 농촌가공산업육성사업은 민간컨설팅기관의 전문적인 사전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중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표준경영진단자료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또한 농업법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부실한 법인이 무리하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인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으로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사업규모가 1억원이상인 경우는 경영 및 영농기술능력 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다. 지원법인에 대하여는 법인명의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재무재표 징구 등으로 경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정책자금지원 요건과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

### **(2) 사업자금집행 정산절차 보완**

농림사업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농업인과 시공업자 등이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정책자금을 유용하는 등 잘못된 관행과 비리·부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에는 사업집행 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자금집행 확인 및

검정·정산 절차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강화하였다. 자금집행 확인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발행한 자필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의 거래자료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증거자료로 증빙토록 하고 사업비 정산시에는 수입재원과 지출사항을 세부적으로 검정한 후 정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농림사업자(농업인)가 정책자금을 유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지원받을 경우에는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자금에 대해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고 향후 1~5년 범위내에서 다른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 **(3) 대규모 시설공사 추진방식 개선**

대규모 사업장 및 첨단시설을 설치할 때는 토목·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계약 체결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업체선정, 설계·시공·감리 준공 등의 절차를 강화하고 모든 사업이 설계·시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전문기관에서 공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촌정비사업, 시설원예생산유통사업, 축산단지조성, 가축계열화사업 등에 대한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의계약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하였다.

### **(4) 농림사업의 사후관리 보강**

농림사업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부, 시·군 등 관계공무원과 자금대출 관련기관 임직원은 관련자료에 실명을 표기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기록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농림부 사업주관 부서에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하여 사업담당 실무책임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추진 상황을 확인·점검하도록 사업현장 모니터제를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보강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보완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투자심사담당관실 서기관 이기두)



## 제 3 절 농림행정쇄신 및 농정조직 개혁

### 1. '열린농정'의 구현

국민의 정부 내각이 출범한 후 농림부는 '열린 농정'을 적극 표방하고 IMF 위기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당면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되는 21세기에 대비한 농정틀을 정립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열린 농정'이란 농업인과 소비자를 주인으로 받들고 정책입안단계부터 집행단계까지 농업이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참여농정'과 농촌현장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업인의 애로를 찾아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현장농정' 그리고 농림공직자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중앙 및 지방단위의 농정추진조직과 기능을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위주로 개편하는 '봉사행정'이다.

'98년 3월 4일 농업인·소비자·학계대표들을 초청하여 농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농정개혁추진위원회, 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개혁위원회 및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인, 시민, 소비자단체 대표를 참여시키고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농업인 소비자의 참여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정부의 농정의 틀과 농정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협동조합개혁과 농산물 유통개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차기농산물협상 대응책을 논의하였다. 이외에 각종 정책 결정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하여 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간담회(1998.3.3), 농·소·정원로회의(1998.5.29)등 장관주재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장관이 직접 농업현장을 방문하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주는 이동장관실을 '98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총 62회를 운영하여 지역농업인, 농업인단체관계자,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 총 3,300여명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총 47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검토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였다.

이외에 장관은 농민이 되고 농민들은 장관이 되어 함께 농정을 펴야 한다는 철학으로 일일명예장관제를 실시하여 매월 2회씩 선진농업인 명예장

관을 위촉하여 주요농정추진사항과 정책과제에 대해 보고하고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한편 농정추진기관·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농업인에 대한 무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혁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매각하고 수출지원전담기관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그동안 기능중복 등 비효율성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통합하여 2000년 1월에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기로 개편방향을 확정하고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정을 완료하는 등 준비작업을 추진하였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정희)

## 2. 농림행정 쇄신 및 규제완화

### 가. 주요 추진상황

정부는 WTO체제의 출범등 국제화, 지구촌화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성장 위주의 정책에 따른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수 있도록 '92년 이후 지속적으로 행정쇄신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종전의 규제완화는 사안별로 추진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으며 별도의 검증절차없이 각종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후 따라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존하는 규제의 존재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였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경제활동 관련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환경·안전·보건등 국민 전체의 공익과 관련하여 존속이 불가피한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의 수단과 기준을 합리화하여 규제의 질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다.

농림부는 농림분야의 각종규제에 대하여 국민들에 대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위생 및 품질관리등 국민의 식생활 및 보건과 관련된 규제는 엄격하게 보호하는 한편으로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산업·행정여건으로 실효성이 없어지거나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여 영농의 규모화 및 기계화를 촉진하며, 사업자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규제와 농업기반정비사업이나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산업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철폐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면서 농민·생산자단체 등에 과도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각종보고, 제출서류, 과도한 시설기준등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이에 따라 '98년중 농림부는 전체규제 701건중에서 74%에 해당하는 518건을 대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그중 352건을 폐지하고 166건은 규제를 완화하는등으로 실질적인 농림분야의 규제개선을 달성하였다.

<표 2-1-7> '98농림부분 규제완화 추진실적

규제 총 건수	정비 실적			'99이후 정기 또는 존치
	폐지	개선	소계	
701 건	352(53)	166(18)	518(71)	183

\* ( )내는 농수산물의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국회계류중)과 약사법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임

## 나. 주요 개선내용

'98년도 전체규제의 50%정도를 폐지하는 규제개혁방안을 수립하여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행정편의적 규제는 폐지하는 등 목표를 설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 <농지분야>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소유상한 확대
  - 농지소유상한을 세대당 3ha → 5ha 확대
-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등

-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 생략 및 중소기업 창업공장에 대해 3년범위내에서 농지조성비 분할납부 허용

<양곡관리 및 농산물 검사분야>

- 양곡매매업의 신고제 폐지 및 양곡도정업의 등록제 개선
  - 양곡매매업의 신고제를 폐지하여 진입을 자유롭게 하고,
  - 양곡도정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되 농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없이 영업을 가능토록 자유화하여 자가도정을 용이하게 함

<농자재산업 분야>

- 농약제조 품목등록시 제출하는 시료량의 최소화
  - 품목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시료량을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감량하여 업체의 비용부담 경감
- 농기계 구입의무자에 대한 교육의무 폐지
  - 업체의 교육필요성 정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여 자율성제고 및 부담경감

<축산분야>

- 축산업(양돈·양계업) 등록·허가제 폐지
  - 축산업 등록·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허가 축산업자에 대한 수급조절명령, 초과사육부과금, 납부명령 및 사육가축 감축명령 등을 폐지하여 축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자율경영 강화

<산림분야>

- 조림비용 사전예치제 폐지 등
  - 조림비용 사전예치를 폐지하여 벌채업자의 부담경감

<기타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분야>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제한 폐지 등
  -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제한을 폐지하여 투자촉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세민)

### 3. 농정조직 및 추진체계 개혁

#### 가. 농림행정조직 통합 및 축소개편

##### (1) 범정부적인 정부조직개편

세정부는 당면한 국가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새로운 국가도약을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먼저 정부부문의 경재력강화와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 범정부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첫째, 행정의 종합성·전략성·기동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행정조직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정부생산성을 제고시킨다

셋째, 행정규제를 완화해 시장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전환해 나간다

넷째, 정책수행에서 시장원리와 경영효율성의 개념을 도입한다

다섯째, 고객지향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행정조직 체계를 만든다

여섯째, 중앙기능을 지방에 이양하고, 정부기능을 적극적으로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한다.

일곱째, 환경과 사회복지 분야의 행정기능은 확충하고, 통일에 대비한 행정체제를 구축해 나간다

정부의 조직개편은 1998. 1. 7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4인의 심의위원과 8명의 실행위원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위원장 박권상, 심의위원겸 실행위원회 위원장 김광웅)”를 구성하여 동위원회가 공청회 등의 견수렴과정을 거쳐 1998. 1. 26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 (2) 농림조직개편 실적

농림부 및 외청의 조직개편은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편방향에 따라 1998. 2. 28 정부조직법개정과 병행한 1단계 직제개정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직제를 개정하였다.

- ① 농업센서스 등 농업기본통계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한다
- ② 농림부의 집행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
- ③ 본부 및 소속기관을 과감히 정비한다
- ④ 동·식물검역기능을 보완·강화한다.
- ⑤ 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의 관리기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한다

(가) 농림부

농림부는 정부조직개편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98. 2. 28 1단계 직제개정을 시작으로 '98. 7. 1, '98. 8. 1 등 3단계에 걸쳐 직제를 개정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99. 1. 1자로 농업공무원교육원을 폐지하는 직제개정도 추진하였으며 단계별 직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단계 직제개정('98. 2. 28)

- 농업정책실(1급)을 폐지하여 이에 소속되었던 농정·식량·농산정책심의관과 원예특작국을 재편하여 농업정책국·식량정책국·농산원에 국으로 정비하였다
- 생산통계담당관과 유통경제통계담당관을 농업통계담당관으로 통합하고, 통계정보처리담당관을 정보화진흥담당관과 정보화지원담당관으로 분리하여 정보화기능을 보강하였다
- 개발기획관(3급), 기반정비과, 기술협력과를 폐지하고, 기획관리실에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하였다.
- 이와같은 기구개편을 통해 본부공무원 정원을 1급 1인, 2~3급 2인, 4급 2인, 6급이하 3인, 기능직 32인 등 총 40인을 감축하였다.
- 농촌진흥청장소속의 수의과학연구소(정원 146명 이체)를 농림부장관소속으로 이관하였다.

□ 제2단계 직제개정('98. 7. 1)

- 농산물검사소(11개소, 118개 출장소)에 농업통계사무소(9개 사무소, 142개 출장소)를 통합하여 6개지소, 80개 출장소로 광역화하였다.

- 검사소장직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생사검사과를 폐지하고 각 지소에 농업정보통계과 신설
- 농업총조사·농업기본통계조사·농가경제조사·농산물생산비조사·양곡소비량조사 등 기본통계기능과 이에 따른 통계조사인력 410인을 통계청으로 이관·이체하였다
-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136인, 농업통계사무소에서 162인의 인력을 각각 감축하였다.

□ 제3단계 직제개정('98. 8. 1)

- 농업경영 및 농산물유통정보화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화지원 담당관을 경영유통정보담당관으로 개편하였다
- 농산물검사소와 농업통계사무소 통합에 따른 조직운영체계정비를 위하여 본부의 농업통계담당관실을 폐지하고, 농산물검사소에 농업정보통계과를 신설(본부에서 10인이체)하였다
- 동물 및 축산물검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통합하였다.
- 또한,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농업통계인력 100인, 농업공무원교육원 6인, 수의과학검역원 7인을 각각 감축하고, 검역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동물검역인력 26인과 식물검역인력 32인을 각각 증원하였다.

□ 농업공무원교육원 폐지('99. 1. 1)

- 한편, 행정자치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정비계획에 의하여 지방행정연수원(행정자치부), 교육행정연수원(교육부), 농업공무원교육원(농림부), 건설교통부공무원교육원(건설교통부), 국제특허연수원(특허청), 통계연수원(통계청) 등 6개 교육훈련기관을 통합하여 행정자치부소속하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신설하게 됨에 따라 농업공무원교육원을 폐지하였다
- 이에 따라 정원 54인중 35인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농업연수부에 파견, 5인은 행정자치부에 이체하고, 나머지 14인(3급1인, 4급3인, 6급

1인, 기능직 9인)은 감축하였다

이와같이 4회에 걸친 직제개정결과 농림부조직은 종전 “1차관보 2실 5국 8관 30과 12담당관 14소속기관(수의과학연구소 포함)”에서 “1차관보 1실 7국 4관 27과 12담당관 3소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

정원은 본부가 593인에서 542인으로 51인이 감소되고, 소속기관은 3,975인에서 3,314인으로 661인이 감소되어 총 4,568인에서 3,856인으로 712인이 감소되었다.

<표 2-1-8>

농림부 조직개편 현황

	차관보	실	국	관	과	담당관	소속기관
'98. 1	1	2	5	8	30	12	14
'98. 12	1	1	7	4	27	12	3
증 감	-	-	+2	△4	△3	-	△11

<표 2-1-9>

농림부 공무원정원조정현황

(단위: 인)

	계	정무	별정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
'98. 1	593	2	9	2	11	1	14	29	50	130	183	46	116
'98. 12	542	2	9	1	9	1	14	27	49	127	178	44	81
증 감	△51	-	-	△1	△2	-	-	△2	△1	△3	△5	△2	△35

<표 2-1-10>

농림부 소속기관 공무원정원조정현황

(단위: 인)

	계	별정	일반직			연구직		기능
			소 계	5급이상	6급이하	연구관	연구사	
'98. 1	3,975	449	2,942	225	2,717	-	-	584
'99. 12	3,314	331	2,432	215	2,217	24	61	466
증 감	△661	△118	△510	△10	△500	+24	+61	△118



(나)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정부조직개편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98. 2. 28 및 '98. 8. 1 2단계에 걸쳐 직제를 개정하였다

□ 제1단계 직제개정('98. 2. 28)

- 기술협력관과 그 소속의 국제협력담당관 및 국제농업담당관을 폐지하여 기획관리관 소속하에 국제협력담당관(4급)으로 축소하였다
-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을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통합하고, 비상 계획담당관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로 이관 하였다
- 기술지도국을 기술보급국으로 개편하고, 작물보호과를 폐지하였다
- 종자산업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종자공급소를 종자관리소로 개편하고 기존의 보급과와 생산과를 생산보급과로 통합하였다
- 동물 및 축산물검역기능강화를 위하여 수의과학연구소를 농림부소속으로 이관하고 소속인력 146인을 함께 이체하였다

□ 제2단계 직제개정('98. 8. 1)

- 잠사곤충연구소(5과)와 잠종관리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농업과학기술원으로 이관하여 잠사곤충부(4과)로 축소하였다
- 농업과학기술원의 농약개발과를 폐지하고, 병리과를 식물병리과로, 곤충과를 농업해충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축산기술연구소의 유전육종과와 번식생리과를 통합하여 육종번식과로 개편하였다
- 농업기계화연구소의 재배기계과·가공기계과·시설기계과를 기초기술기계과·생물생산기계과·농산가공기계과로 개편하였다
- 원예연구소의 화훼1과와 화훼2과를 각각 초본화훼과와 목본화훼과로 개편하고, 종자관리소의 생산보급과를 종자유통과로 개편하였다.

이와같은 직제개정결과 2국 3관 10과 10담당관 14소속기관에서 2국 2관 9과 7담당관 12소속기관으로 개편되어 정원은 287인(본청 34인, 소속기관 253인)이 감축되었다.

<표 2-1-11>

농촌진흥청 조직개편 현황

	국	관	과	담당관	1차소속기관	2차소속기관
총 전	2	3	10	10	14	27
개 편	2	2	9	7	12	26
증 감	-	△1	△1	△3	△2	△1

<표 2-1-12>

농촌진흥청 공무원정원조정현황

(단위: 인)

	계	정무	별정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98.1	354	1	26	4	2	10	5	14	31	30	57	38	37	99
'98.12	320	1	26	4	2	9	5	15	31	26	55	36	37	73
증 감	△34	-	-	-	-	△1	-	+1	-	△4	△2	△2	-	△26

<표 2-1-13>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정원조정현황

(단위: 인)

	계	별정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교육직	기능직
			소 계	5급이상	6급이하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98.1	2,326	8	270	68	202	322	910	6	8	25	777
'98.12	2,073	8	254	64	190	321	810	4	6	25	645
증 감	△253	-	△16	△4	△12	△1	△100	△2	△2	-	△132

다) 산림청

산림청은 정부조직개편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98.2.28 및 '98.8.1 2단계에 걸쳐 직제를 개정하였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99.1.1자로 임업연수원을 임업연구원에 통합하였다.

□ 제1단계 직제개정('98. 2. 28)

- '98.2.28 공보담당관과 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하고, 공무원정원44인(본청5인, 소속기관 39인)을 감축하였다

□ 제2단계 직제개정('98. 8. 1)

- 임업연구원의 산림경영부를 산업자원부로 개편하고, 산림보전과를 임지보전과로, 야생물동물과를 산림생물과로, 재료시험과를 재료공학과로, 임산화학과를 화학미생물과로, 임업경제과를 자원계획과로, 자원관리과를 산림조사과로, 산림개발과를 산지이용과로 변경하고, 산림생물부 및 임지환경과, 산림미생물과, 산림곤충과를 폐지하였다.
- 임목육종연구소를 임업연구원에 통합하여 임목육종부로 개편하고 그밑에 육종과, 유전생리과, 생물공학과 및 특용수과를 두도록 하였으며, 임목육종연구소밑에 있던 중부육종장 및 남부육종장을 각각 서부임업시험장 및 제주임업시험장으로 개편하였다
- 또한, 산불진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관리소장, 소속하에 원주지소를 신설하였다
- 공무원정원은 본청 5인, 소속기관 47인 등 52인을 감축하였다

□ 임업연수원 폐지

- 한편, 행정자치부의 공무원교육훈련기관정비계획에 따라 '99.1.1자로 임업연수원을 임업연구원에 통합하여 공무원정원 13인을 감축하였다.

이와같은 직제개정 결과 종전 3국 2관 11과 8담당관 9소속기관에서 3국 2관 11과 6담당관 7소속기관으로 개편되어 정원은 109인(본청10인, 소속기관 99인)이 감축되었다.

<표 2-1-14> 산림청 조직개편 현황

	국	관	과	담당관	1차소속기관	2차소속기관
종 전	3	2	11	8	9	40
개 편	3	2	11	6	7	40
증 감	-	-	-	△2	△2	-

<표 2-1-15>

산림청 공무원정원조정현황

(단위:인)

	계	정무	별정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연구직		기능직
											연구관	연구사	
'98. 1	196	1	5	4	1	6	13	11	32	78	-	-	45
'98.12	186	1	4	4	1	6	12	11	32	77	-	-	38
증 감	△10	-	△1	-	-	-	△1	-	-	△1	-	-	△7

<표 2-1-16>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정원조정현황

(단위:인)

	계	정무	별정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소 계	5급이상	6급이하	연구관	연구사	
'98. 1	1,442	-	11	765	81	684	79	182	405
'98.12	1,343	-	10	749	76	673	75	148	361
증 감	△99	-	△1	△16	△5	△11	△4	△34	△44

(행정관리담당관실 서기관 정희준)

나. 농업기반공사 설립 추진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어 기능중복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농업생산기반정비업무중 기본조사·설계·감리업무는 농지개량조합 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가, 수리시설 유지관리업무는 사업규모에 따라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분담하고 있다. 또한 수리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는 농지개량조합이 분담하고 있어 시공자와 관리자가 이원화되어 하자보수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발생 등 분쟁원인이 되어왔다.

그리고, 농업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는 너무 많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관리체제의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아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농업정비관련 기관조직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1998.7.20. 농업인단체, 학계대표, 공무원,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대표 등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작업에 착수하였다.

3개 기관 통합에 필요한 법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기관의 통합반대 등 어려움도 따랐으나, 1999.1.5. 국회의결을 거쳐 1999.2.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이 제정·공포되어 2000.1.1.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게 되었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자본금 5조원으로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을 종합 관리하며 둘째, 농업기반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사업,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농업기반공사는 이해관계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관리지역을 설정, 관리·운영하도록 하였고 넷째, 공사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부터 농업용수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및 농지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농업인에 대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물관리로 농번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지개량조합과 영농규모적정화사업으로 농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를 통합하여 인력을 연중 지속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1-17>

농지개발조합, 농지개발조합연합회 및  
농어촌진흥공사 주요현황

구 분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조연합회
법인성격	-정부투자기관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비영리공법인 (농지개발조합법)	-비영리공법인 (농지개발조합법)
주요기능	-농업생산기반조성· 정비, 영농규모확대, 생활환경개선	-농업생산기반정비,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농조의공동이익증진, 국가 및 농조동이 위탁한 사업
운영비 조달	-정부출자금, 사업수익	-국고보조금, 조합비 기타	-사업수익
연간사업규모 (‘97결산)	- 7,947억원	-1조 5,546억원	- 635억원
조직 및 정원	-정원 2,478명 -본사 : 5본부 1원19부서 -지방 : 9지사7사업단 83지부	-정원 4,024명 -조합수 : 105개	-정원 : 672명 · 본회: 2이사10부서 · 지방: 8지회 1출장소

(개발정책과 행정사무관 조재호)

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 개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967년 설립이래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농수산물 저장·가공산업의 발전과 농수산물 수출입 및 수매비축사업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생산자 보호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최근 개방화에 따라 수매, 비축기능 역할이 축소되고 생산자단체나 민간의 저장, 가공, 유통분야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계획 및 21세기 농정방향에 맞게 그 기능과 역할을 조

정하였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수출농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산물수출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고 국영무역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사업 및 유통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였다.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수출유망품목의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 제공 등 수출지원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고, 국영무역을 종합관리를 통해 수급관리 효율성을 제고 시켰으며, 새로운 유통여건에 부응하여 물류표준화, 유통경영체 컨설팅기능을 강화하였다.

유통개선 시범선도사업으로 운영해 왔던 화훼공판장, 직판장, 물류센터 등은 생산자단체나 민간에 이관을 추진중에 있으며, 자회사인 한국물산(주)를 정리하여 해외농업무역관체제로 전환하였고, 매일유업(주)도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하여 민영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98년말 정원 948명을 현재 510명으로 감축했으며, 2000년까지 500명으로 감축하는 등 저비용·고효율체제로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중에 있다. 한국냉장은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축산물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되 2001년까지 민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통정책과 서기관 이천일)

#### 4. 농정모니터제 운영

1990년대 들어 농업투용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농정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PC통신(농림수산정보, 약칭 AFFIS)을 이용한 농정모니터제도가 도입 되었다

1996년 4월 “농촌현장의 목소리”(VOICE)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농정모니터제도는 제반 농정시책에 대한 현장 농업인, 일선 농정 실무자 및 농업관계자들의 평가·비판·문제제기·제안 등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우리 농업과 농정의 개선·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총 1,200명의 농업인·공무원 및 생

산자단체 직원만을 연결하는 폐쇄형 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1997년초에는 회신체제가 확립되었고, 1997년 4월 15일에는 개방형 회신체로 전환됨으로써 농업인·농업관계자들과 농림부간에 폭넓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모니터 선정도 자발적 가입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98년 12월말까지 농정모니터망을 통해 총 803건의 건의와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자발적으로 가입한 모니터의 비중('99. 6. 30 전체모니터 642명중 245명)이 증가하면서 의견제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2-1-18> 건의·제안 수신 추이

	'97					'98					'99 (6.30현재)
	1/4	2/4	3/4	4/4	계	1/4	2/4	3/4	4/4	계	
모니터 의견 수신건수	66	41	46	53	206	117	103	52	45	317	130

농정모니터망은 전자게시판과 전자메일기능을 이용, 의견·제안을 접수·회신하는 것 외에도 1998년도에는 온라인 토론을 120회 개최하여 농촌여론을 수집하였으며, 모니터 활동을 돕기 위해 주요 시책정보도 제공하였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사무관 김낙신)

## 제 4 절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및 법령제도 개선

### 1.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

#### 가. 제정 배경

'95년말 UR농산물협상이 끝나고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 농업은 개방과 경쟁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관세화를 통하여 개방되어 우리 농산물은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게 되었고 농업지원정책은 AMS한도를 준수하는 한도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대내적으로도 농업과 농촌의 환경보전, 농촌지역사회의 유지,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공익적 기능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농업은 이제 생산·가공·유통까지 연계되는 종합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농촌은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는 활기있는 생활공간·산업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당연히 농업정책의 접근방식과 정책포커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21세기를 맞는 새로운 농정의 추진방향과 큰 틀을 제시하는 guideline으로서의 기본법의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나. 제정 과정과 제정 추진원칙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98년 6월 농업·농촌기본법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본법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농업인단체장과 학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수차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였다. '98년 11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후 국회상임위에서의 논의를 거쳐 '98년 12월 29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고 '99년 2월 공포되어 2000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은 기존의 농업기본법('67년)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0년)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을 조화롭게 정비하여 21세기 농정방향에 여전히 유효한 조항은 흡수하고 증산중심·농업보호·수입제한 중심의 농정시대의 조항은 삭제하였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농정과제에 대한 시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 농정비전과 정책방향제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농정시책으로는 직접지불제도, 재해농가지원 등 농가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벤처농업의 육성과 농업분야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해 농

정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생산·유통·품질 안전성등 종합적인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도록 하며 농업인·소비자·정부의 협력과 역할 분담, 지방농정의 활성화 도모하는 등 상향식 농정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제정과정에서 국가, 농업인, 소비자들에게 농정방향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도록 선언적 성격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1967년 제정된 농업기본법이 선언적 규정만을 담아 제정된 후 사문화되었던 것을 반성하고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 기본법의 사례, 외국 기본법의 실용주의 경향을 감안하여 집행적 성격과 선언적 성격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되었다.

#### **다. 농업·농촌기본법의 주요내용**

농업·농촌기본법은 제8장 48조로 구성되었다.<법 全文은 부록 참조>

##### **(1) 총칙 및 기본시책**

농업·농업인·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역할을 제시(제2조)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인의 책무를 규정(제4조)하였다. 농업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도록 선언하였으며(제5조)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제6조)하였다. 또한 농업의 환경보존효과를 높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기본시책으로 인정(제9조)하고 통일에 대비한 농업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제10조).

##### **(2) 농업구조개선**

가족농의 경영안정시책(제11조)과 전업농·여성농업인 등 농업인력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지원의 근거를 마련(제12조~제16조, 제18조)하였다. 농업인의 경영혁신과 자금지원의 효율화(제17조), 농지보존강화와 이용의 증진, (제19조~제21조, 제41조) 농업기반의 정비 및 농업기계화 촉진(제22조, 제24

조), 농업과학기술진흥과 정보화(제25조, 제28조)의 촉진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여 벤처농업 육성근거(제26조)와 지적재산권 보호(제27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3)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

농업관측, 생산조정,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 등 농산물 수급안정책을 명시(제30조)하고 도매시장 등 유통인프라 구축 및 농산물의 포장 규격화 등 물류의 표준화 촉진근거(제31조)를 담았다. 그외에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과 가공산업의 육성 (제33조)하도록 하여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가공·유통등 농업관련산업의 육성근거를 마련하였다.

### **(4) 농산물의 교역 및 국제협력**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 수립(제34조)와 외국과의 인력 기술교류등 국제협력의 근거를 함께 마련하였으며 해외농업 개발 실시와 농산물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강화에 관한 규정(제35조, 제36조)을 두었다.

### **(5) 농촌지역개발 및 소득지원**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있는 종합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지역개발시책을 추진할 의무(제38조)를 규정하고 도농간 교류확대 및 지역문화시설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세계적인 농업정책의 변화에 부응하고 가격지지정책의 축소추세에 대응하여 WTO규범상 허용된 각종 직접지불제의 도입근거(제39조)를 두었고 농업재해에 대한 보험·공제 등 시책을 추진할 근거(제40조)를 마련하였다.

### **(6)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추진**

농업기본법 상의 농업정책심의회와 농발법상의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통합

하여 중앙·지방농정심의회를 신설(제43조)하고·중앙 지방계획의 연계성 및 계획수행정도를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지원(제44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정부의 연차보고서작성 의무를 지방정부까지 확대(제45조)하여 지역농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정희)

## 2. 농림분야 법령 및 제도개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도개선과 규제정비 차원에서 총 24건의 농업관련법률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였다.

농업·농촌관계법령의 기본이 되는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익적 기능을 강화시키며, 농업을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업인을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시키며, 농촌을 쾌적한 산업·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농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등 3기관을 통합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조직을 효율화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수산물에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해 주는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관리제도 관련규정과 농산물검사법을 통합하여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였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법을 전문개정하여 가축, 종축업, 부화업, 축산업 및 가축시장 등에 대한 허가,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 관련규제를 대폭 폐지 또는 개선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정액 등 처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가축인공 수정소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고, 가축의 교배제한·거세,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에 대한 등록·허가제 및 가축도살의 제한제도 등을 폐지하여 축산농가의 자유로운 양축활동을 보장하였으며, 가축시장의 개설허가제도 폐지 및 거래방법과 가축매매수수료의 결정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여 축산업협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가축시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제도를 보완하여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였으며,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가축공제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이를 개방하여 민간보험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개별법에 의하여 발행하던 국채의 발행을 국채법에 의한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하여 발행하도록 하는 국채발행제도개선에 맞추어 양곡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양곡증권법을 폐지하고,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제정하여 양곡증권의 원리금의 미상환 잔액 등 부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삼산업법을 개정하여 인삼경작지정제를 폐지하여 농업인이 자율 경작하도록 하고, 인삼수확시 검사원 입회제도 및 홍삼·태극삼·백삼 등 제조확인제도를 폐지하여 생산자 및 제조자의 자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며, 홍삼이나 5년근 이상의 태극삼 또는 백삼의 제조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자유롭게 하였다.

잠사류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잠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잠업법이 제정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잠사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잠업의 목적도 잠사류 생산보다는 오히려 식·의약품 생산을 위한 것으로 전환되어 동 법이 더 이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잠업법을 폐지하였다.

양곡유통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정부관리양곡의 가공·판매방법 등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고, 양곡의 매매업을 완

전 자유화하였고, 종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종자산업법을 개정하여 종자 매매업의 신고 및 종자업자에 대한 종자비축명령제도등을 폐지하였고, 수입적응성 시험대상작물의 범위를 축소하여 우수한 외국의 종자를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료관리법을 개정하여 사료조절 단체의 지정 및 수입사료 등의 판매방법 지정제도 등을 폐지하고, 배합사료제조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도모하였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농어업인의 농공단지 취업에 관한 등록제도 및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편의를 도모하였고,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민박농어가의 지정제도, 농어촌휴양지의 입장료·시설이용료에 대한 신고제도 등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초지법을 개정하여 초지조성지구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초지조성완료후 30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는 신고로써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초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였다.

식물방역법을 개정하여 지정종묘에 대한 의무검사제도 등을 폐지하여 자율적인 농업생산체제를 확립하였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 제조영업의 신고제도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제도 등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며, 농약관리법을 개정하여 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자유업화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한편, 농약의 생산·판매 등의 기록 및 보존의무 등을 폐지하여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였고, 비료관리법을 개정하여 비료의 생산·판매, 수출입명령제도 및 최고판매가격지정제도 등을 폐지하였으며, 비료수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의 범위를 세대당 3ha에서 5ha로 상향조정하고, 농지의 임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였고, 농업협동조합법 및 축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협동조합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제도를 폐지하

였으며,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검사합격필증 부착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품질유지 등을 위하여 사후검사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을 개정하여 진도개에 대한 의무등록제를 준수가 판단하여 신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진도개의 사육가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였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여 가축방역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방역 등 농가자율방역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리수의사를 두게하는 제도 등을 폐지하였으며,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수의사의 결격 및 면허취소사유와 국가 시험응시자격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투명화하고 동물병원 개설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강학원)

<표 2-1-19>

1999년 제·개정된 농림법률

법률명	주요제·개정내용	공포일 (시행일)
1. 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채발행제도를 개선하여 양곡증권을 국채관리기금채권으로 통합 발행</li> <li>○ 2000년부터 양곡증권법에 의한 양곡증권의 발행을 중단하고, 국채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양곡증권 원금의 상환재원으로 함.</li> <li>※ 양곡증권법폐지</li> </ul>	'99. 1. 21 (2000. 1. 1)
2. 인삼산업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삼의 품질관리를 생산농업인, 제조사업자가 자율관리토록 함.</li> <li>○ 인삼조합의 연근확인은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경작승인제도 및 수확입회제도 폐지</li> </ul>	'99. 1. 21 ('99. 7. 1)
3. 양곡관리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정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양곡소매에 대한 신고의무제 폐지</li> <li>○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공방법 등에 관한 제한규정 삭제</li> </ul>	'99. 1. 21 ('99.7.22)

법 률 명	주 요 제 · 개 정 내 용	공포일 (시행일)
4. 잠업법(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잠사업의 급격한 쇠퇴와 양잠의 목적이 잠사류 생산보다 오히려 식·의약품 생산을 위한 것으로 전환되어 법이 존속할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li> <li>- 잠종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li> </ul>	'99. 1. 21 ( '99. 7. 1)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규정</li> <li>○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농산물에는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물임을 표시하여 주는 지리적 표시제도를 도입</li> <li>○ 잔류농약 등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하여 폐기하도록 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li> <li>※ 농산물검사법 폐지</li> </ul>	'99. 1. 21 ( '99. 7. 1)
6. 종자산업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을 위해 UPOV협약에 맞추어 품종보호제도를 보완</li> <li>○ 종자매매업의 신고제도, 종자업자에 대한 종자비축명령제도 및 재배금지명령제도 등 폐지</li> <li>○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옥수수의 품종은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에서 제외함.</li> </ul>	'99. 1. 21 ( '99. 7. 1)
7. 축산법(전문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업의 등록·허가제도, 교배제한 및 거세·보호종축 지정 제도 폐지</li> <li>○ 정액 등 처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가축인공수정소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li> <li>○ 가축의 재해에 대한 공제사업을 생산자 단체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민간보험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li> <li>○ 축산물등급판정제도를 보완하고, 가축매매 수수료의 결정을 자율화 함.</li> </ul>	'99. 1. 29 ( '99. 7. 30)



법 률 명	주 요 제·개 정 내 용	공포일 (시행일)
8. 한국진도개보호 육성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도개 사육실태 의무조사를 임의조사로 완화하고, 진도개 소유자에 대한 등록 및 수수료 납부제도 폐지</li> <li>○ 혈동보호를 위한 군수의 개압류 및 공매 권한 등 폐지</li> </ul>	'99. 1. 29 (’99.4.30)
9.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세기를 대비한 새로운 농정의 틀과 제 도를 법제화</li> <li>○ 농업·농촌시책의 기본원칙,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환경친화적 농업, 통일대비 농정 등 농정의 기본좌표 제시</li> </ul>	'99. 2. 5 (2000. 1. 1)
10.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 조합연합회 3등 3개기관을 통합하여 「농 업기반공사」를 설립</li> <li>○ 통합되는 기관의 모든 권리·의무를 농업 기반공사가 승계함.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지개량조합법 폐지</li> </ul>	'99. 2. 5 (2000. 1. 1)
11.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공단지의 취업등록제도 및 농어촌특산 물 생산단지지정 폐지</li> </ul>	'99. 2. 5 (99. 2. 5)
12. 농어촌정비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주택·토지·시설분양의 전매제한제 도, 민박농어가 지정제도, 농어촌휴양지 사업의 양도·양수·휴폐업 신고제도 등 폐지</li> </ul>	'99. 2. 5 (’99. 2. 5)
13. 조치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지조성지구고시제도 및 초지전용허가 신청수수료제도 폐지</li> <li>○ 초지조성지구내 행위제한 및 초지전용요 건 완화</li> </ul>	'99. 2. 5 (’99. 5. 6)

법 률 명	주 요 제·개 정 내 용	공포일 (시행일)
14. 식물방역법(개정)	○ 지정종묘에 대한 의무검사제도, 지정종묘의 불법반출 폐기처분 명령제도 및 공동방제명령제도 폐지	'99. 2. 5 ( '99. 8. 6)
15.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 “용기 등 제조업”의 영업신고제도 폐지 및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에서 “용기 등”을 제외	'99. 2. 5 ( '99. 2. 5)
16. 농약관리법(개정)	○ 일반방제업 및 항공방제업의 등록제도 폐지 및 수출입방제업은 신고제로 완화 ○ 농약의 생산·판매 등의 기록·보존의무제도 등 폐지	'99. 3. 31 ( '99. 7. 1)
17. 사료관리법(개정)	○ 동물용의약품중 사료첨가제로 사용가능한 물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사료조절단체의 지정제도, 정부관리양곡 또는 수입양곡부산물등에 대한 판매방법 지정제도 폐지	'99. 3. 31 ( '99. 7. 1)
18. 비료관리법(개정)	○ 비료의 생산·판매, 수출입명령제도 및 최고판매가격 지정제도 폐지 ○ 비료의 수입업을 신고제로 완화 ○ 비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보완	'99. 3. 31 ( '99. 7. 1)
19. 농지법(개정)	○ 농어진흥지역 밖의 토지소유상한을 3ha로 확대 ○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 폐지	'99. 3. 31 ( '99. 3. 31)
20.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 농업협동조합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단체의 해산명령제도	'99. 3. 31 ( '99. 3. 31)
21. 축산업협동조합법 (개정)	○ 축산업협동조합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단체의 해산명령제도 폐지	'99. 3. 31 ( '99. 3. 31)

법 률 명	주 요 제 · 개 정 내 용	공포일 (시행일)
22.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	○ 농기계 검사합격필증 부착 및 유사표시 부착금지제도 폐지 ○ 농업기계 사후검사제도 실시	'99. 3. 31 ( '99. 3. 31)
23.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 일정규모이상 가축사육자에 대한 관리 수의사 제도 ○ 종축장 등 가축집합시설의 정기검사명 령제도 폐지	'99. 3. 31 ( '99. 7. 1)
24. 수의사법(개정)	○ 동물병원 개설허가를 신고로 완화 ○ 수의사회 가입의무를 폐지	'99. 3. 31 ( '99. 7. 1)

### 3. 재해지원 기준 개선

'98년도에는 집중호우(4회), 폭풍설(2회), 태풍(1회) 등 12차례의 크고 작은 재해가 있었다

- 농작물피해 : 344천ha, - 농경지 유실.매몰 : 8,954ha
- 수리시설 파손 : 3,448개소, - 비닐하우스파손 : 458ha
- 축사등 파손 : 514동, - 가축피해 : 닭등 3,371천마리

특히 7월 31일~8월 18일 기간중 중국 양쯔강유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연평균 강수량(1,305mm)에 육박하는 돌발적 집중호우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또한 9월 29일~10월 1일 사이에 제9호 태풍 “예니”로 인하여 수확기를 앞둔 벼 300천ha가 도복되거나 침수되어 일으켜세우기가 늦거나 물빠짐이 불량하여 수확이 늦은 벼는 싹이 나는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와같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지원기준단가를 상향조정 또는 현실화하여 고시(농림부 고시 제 1998-7호. '98. 5. 25)하므로서 재해농가 복구비용부담을 줄일수 있었다

<표 2-1-20>

복구지원단가 상향조정 및 현실화 내역

	종 전	개 선	비 고
○ 농약대	39,500원/ha	53,760원/ha	36.1%인상
○ 대파대			
- 일반작물기준	1,318,000원/ha	1,421,490원/ha	7.8%인상
○ 초지복구비			
- 경운초지	3,130,000원/ha	3,300,000원/ha	5.4% 인상
- 불경운초지	2,290,000원/ha	2,500,000원/ha	9.2%인상

또한 농지소유규모 2ha미만인 농가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중.고생학자금면제지원대상범위를 5ha미만 농지소유농가까지 확대하여 지원이 되도록하여 영농의욕고취와 함께 생계안정을 도모토록하였고 또한 유실.매몰된 농경지 복구비의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소유농지2ha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하여 10~20%를 부담 하였으나 이를 3ha로 하여 일률적으로 10%를 부담토록 하향조정하는등 관련규정인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을개정(대통령령제15900호. '98.9.26) 하는 등 재해지원제도를 개선하였다.

-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중고생학자금면제 지원대상범위확대  
: (종전) 농지소유규모 2ha미만농가 →(확대) 5ha미만 농가
- 유실.매몰 농경지 복구비 농가부담 완화(국고부담율 상향조정)  
: (종전) 2ha미만(이상) : 국고50%(15), 지방비10(5), 융자30(60),  
자담 10(20) → (개정) 3ha미만(이상) : 국고 50%(30),  
지방비 10(10), 융자 30(50), 자담 10(20)

<표 2-1-21>

'98 재해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지원액 합계	직접 지원		간접 지원					농업 시설
	계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계	영농자금 이자감면	수업료 면제	무상양곡 지원	이재민 구호	
395,405	100,506	19,751	80,755	26,155	3,548	44,380	6,672	214,144

\* 지원액 : 국고+지방비+의연금+융자금

(농산과 식물검역사무관 김후동)

## 제 2 장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들의 정립

### 제1절 IMF위기 극복을 위한 농가경영안정대책 및 귀농대책

#### 1. 사료곡물과 영농자재의 안정적 공급

국내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불안으로 시작된 IMF외환·금융위기는 1997년 10월현재 달러당 853원 수준의 환율이 1,400~1,600원까지 급등했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수입신용장(L/C)개설이 어렵게 되고 해외수출업체는 현금결재를 요구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급기야 IMF라는 국제금융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가 총체적인 어려움을 맞이하였다.

IMF체제는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료곡물을 비롯한 농업용원자재의 조달이 어려워 국내 수급불안이 심화되었고 이로인해 배합사료가격은 IMF체제 이전에 비해 36%가 상승되고 면세유가격은 107%, 비료가격은 29%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국내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소비가 위축되고 농산물소비도 크게 감소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등 농업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됨으로써 국내농가에 대한 경영안정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1997년 12월 16일 「농산물수급안정대책상황실」을 개설·운영하면서 농가지원대책을 추진하였다.

## 가. 사료곡물의 수급안정

사료곡물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협과 축협을 중심으로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하게 하는 한편, 미국 농무부 수출신용자금(General sales Manager: GSM-102)을 총 8억9천만달러를 확보하여 8억 8천만달러를 밀, 대두, 옥수수 등 사료곡물 등의 수입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그외 캐나다의 CWB, 호주 소맥위원회의 AWB로부터 수출신용을 제공받았으며 캐나다 수출신용공사(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와 총2억 900만 캐나다 달러의 수출신용의 사용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대상에 사료협회가 포함되도록 보증특약 조항을 개정하고 영세사료업체의 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담보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료업체에 대하여 사료원료 구입을 위한 600억원의 자금을 긴급지원하였다.

또한 배합사료의 국내유통과정에서 사재기와 가수요발생, 출하기피 등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한 일일점검 등을 실시하고 환율의 하향안정과 국제사료원료가격의 하락등 가격인하요인을 반영토록 하여 배합사료 가격을 IMF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원시킴으로써 국내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표 2-2-1> 밀·사료 원료곡물 L/C개설·지원('98년기준)

(단위 : 백만\$)

	밀 (제분협회)	사 료			총 계
		사료협회	축 협	소 계	
'97.12.16~12.31	295.4	1,056.1	384.3	1,440.4	1,735.8
(농·축협, L/C개설분)	(53.4)	(207.0)	(384.3)	(591.3)	(644.7)

<표 2-2-2>

GSM-102 자금 사용실적('98기준)

(단위 : 백만\$)

품 목	계 획	배 정	CCC 승인 실적			계획대비(%)
			L/C 개설	L/C 미개설	소계	
사료원료	284	284	257.4	26.6	284.0	90.6
밀	179	179	164.0	11.9	175.9	98.3
대두	250	250	230.2	18.9	249.1	99.6
옥수수	173	173	170.0	-	170.0	98.3
소 계	886	886	821.6	57.4	879.0	99.2
육류기타	170	170	59.0	109.2	168.2	98.9
계	1,056	1,056	880.6	166.6	1,047.2	99.2

\* 원면 3억 2천만달러, 원피 1억달러, 목재 2천만달러는 별도

나. 영농자재의 안정적공급

농업용 유류에 대한 면세는 199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되어 있었으나 IMF체제에 따른 영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1998년에도 면세유 공급을 실시하고, 물량은 1997년에 비하여 27%가 줄어든 1,959천kl를 공급하였으며, 농업용 LPG에 대하여도 1998년도 부터 면세로 1천600톤을 공급하였다.

비료와 농약도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위해 농협을 통한 조기구매를 추진하여 1998년에는 1997년대비 30.5%가 늘어난 2천 60억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구매토록 하고 생산선도금으로 농약제조업체에 500억원, 비료제조업체에 430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환율급등으로 발생한 농기계가격의 인상요인을 해당업체의 인건비 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하고, 농기계 생산비축자금 500억원을 조기에 지원하는 한편, 농가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금리도 일반정책자금



금리 6.5% 보다 2% 낮은 연리 4.5%로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영농자재에 대한 가격을 IMF이전에 비해 면세유 △1.1%, 비료 30.1%, 농약 35.1%상승된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여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 되도록 하였다.

<표 2-2-3> 농자재 가격동향

	'98. 4	'98. 8	'98. 12
면 세 유	51.9%	10.5	△1.1
비 료	30.1	30.1	30.1
농 약	36.1	35.1	35.1
농 기 계	9.0	8.2	8.2

※ 인상률은 IMF이전('97.11월)과 비교한 인상률임

(유통정책과 김병은 사무관)

## 2. 농가경영 안정대책의 추진

IMF경제위기아래 농자재 가격상승과 이자비용 증가 및 농산물 소비 감소로 농업인의 부담이 가중되어 농가경영안정대책이 추진되었다. 축산 및 시설원예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5,752억원)을 3~9개월 유예 조치하였으며 저리의 농업·축산경영자금을 지난해보다 6,500억원이 늘어난 4조4,700억원을 확보·공급하였다. 이와 함께 11조 2,842억원에 달하는 농특회계와 농·축산경영자금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3.5%P의 금리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1,7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 가운데 2%P를 인하 조치하였다. 또한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 6조 1,619억원에 달하는 농림부소관 기금에서 자원되는 각종 농업자금은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금리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농·축협도 농가부채 경감조치에 동참하여 금년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6조원)을 6~12개월 연기 또는 대환조치하고, 이미 연체된 상호금융자금(3조 5천억원)에 대해서도 연체이자의 징수를 6~12개월 유예하기로 조치하였다.

또한 부채대책에 대한 합리적 방안마련을 위해, 농민단체, 학계,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8차례 회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98.10월부터 '99말까지 상황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중 IMF로 어려운 사업분야 자금만을 선별하여 2년간 상환을 연기하였고, '99년 1월부터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를 6.5%에서 5.5%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상호금융자금은 협동조합 책임하에 금리를 2%p 수준 인하하고 '99말까지 상황이 도래하는 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유예하기로 하였다.

(협동조합과 사무관 안형준)

### 3. 귀농자에 대한 영농정착 지원추진

#### 가. 귀농가구 동향

최근 2~3년전부터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이 늘어나면서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농업도 자기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귀농가구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998년도에는 6,409가구가 귀농하여 IMF사태로 인해 급속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2-2-4>

#### 연도별 귀농가구 현황

구 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귀농가구수	371	299	413	618	662	922	2,060	1,841	6,409
누 계	371	670	1,083	1,701	2,363	3,285	5,345	7,186	13,595
구성비(%)	2.7	2.2	3.0	4.6	4.9	6.8	15.2	13.5	47.1

- 귀농연령 : 30대 54, 40대 25, 50대 15, 60대이상 6%
- 주영농분야 : 경종 56, 원예 12, 축산 12, 과수 10, 기타 10

## 나.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대책

IMF한파로 기존농업인도 영농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영농경험, 영농기반이 없이 귀농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통한 가능한 젊고 능력있는 인력이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먼저, 정확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농림부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상담실(전국 157개소)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농림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농촌생활, 주택, 농지구입,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품목선택, 기술·경영지도, 선도농가견학 및 실습알선 등을 지도·상담해 주고 있다.

둘째로, 귀농인의 영농기술 습득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각 시·도 지도기관 및 농협, 귀농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영농기초지식, 소양교육 등 귀농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귀농후에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 등 130여개 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98년에는 귀농자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00억원의 재원(예비비 200, 농업경영자금 200억원)을 확보하여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귀농교육을 이수하고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긴 55세 이하의 귀농자에 대하여 영농기반시설 및 농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1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년리 5.0%, 2년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농협을 통해 2,332명에게 융자지원하였다.

<표 2-2-5>

귀농창업자금 자원실적

계 획 (A)		실 적 (B)		비 율 (B/A)	
인 원	예 산	인 원	자금집행	인 원	자금집행
2,000명	400억원	2,332	400억원	116.6%	100%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을 특별지원하여 IMF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도시실직자의 영농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경제위기하에서 농업·농촌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그 동안 계속된 이농으로 침체된 농촌사회에 젊고 의욕있는 귀농자의 영농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준 계기가 되었고, '99년도에는 1,750명에게 350억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농촌인력과 사무관 이진원)

#### 4. 농림분야 실업대책 추진

##### 가.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조사업무에 보조인력 채용

1998년 4월 20일~7월 31일까지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인원 111천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다.

본 사업은 농정시책 추진의 기초자료인 농지원부 일제 정비사업에 실직자를 업무보조요원으로 고용하여 실직자에게 일시적인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시·군·읍·면 등 일선행정기관에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전산처리 능력을 보완함으로써 농지원부 정비의 내실화와 정책활용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 나.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IMF라는 위기상황을 맞이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해 정부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현안과제였고 그러한 차원에서 실업대책이 추진되었다. 정부실업대책중의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인데 도시실직자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여 사업의 생산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실직자를 고용하여 숲을 가꾸어 주는 것은 숲의 경제적가치를 3배, 환경적 가치를 2배를 증진시킴은 물론 숲가꾸기 추진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

하는 간벌재등 부산물을 수집·활용하여 국내재 공급률을 높혀 외재대체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또한 부가가치가 낮은 간벌재, 작은 가지 등은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정화용 톱밥과 조사료 원료로 공급함으로써 축산농가와 환경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정부 실업대책 부처의 현지점검 결과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

<표 2-2-6>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실적

사 업 량						고용실적 (천명)	
숲가꾸기(ha)		도시근교 산림정비					
		등산로정비(km)		산지정화(ha)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34,700	39,357	1,500	1,565	2,850	2,969	1,377	1,475

\* 예산 : 549억원(국비 : 530억, 지방비 19억, 산물수집활용 : 38천m<sup>3</sup>)

#### 다. 서울역 광장에 「농촌 일자리 합동안내센터」 설치·운영

IMF이후 늘어나고 있는 도시의 노숙자를 포함한 실직자들이 농번기농촌의 일터와 연결되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1998년 6월 1일~6월 16일까지 서울역 광장에 「농촌인력은행·숲 가꾸기·귀농합동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하루 평균 299명이 상담에 응하여 총 3,585명에 대해 상담을 받아, 농협 249명, 축협 51명 등 345명을 농촌일자리에 투입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농·축·임협 등에 상시 구직창구인 「취업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여, 도시실직자의 농촌일자리를 알선할 계획이다.

#### 라. 농어촌 용·배수로 준설사업 추진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배수로에 퇴적된 흙 준설과 수초제거로 용·배수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기간인 1998

년 8월~12월까지 299억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 17,709km를 준설하고, 수초 제거사업으로 하루 8,300여명을 고용하여 연인원 78만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여 실업자 생계안정지원과 용수로 기능회복을 양수장 가동시간단축 및 말단부 물부족 해소와 배수소통의 원활로 농경지 침수방지에 기여하였다.

(농촌인력과 사무관 이진원)

## 제2절 농업전문경영체의 육성 및 여성농업인의 육성

### 1.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업인 육성

국내 농림업이 생산성 높은 기술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고급경영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이농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하에서 앞으로 우리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후계자를 '81년도부터 선정하기 시작, '92년부터는 매년 9,000(어업인후계자 1,000명 제외)수준으로 증원하여 선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정수준의 경영기반과 경력, 발전가능성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육성사업은 '96년 14,640명, '97년에는 11,644명, '98년에는 11,848명을 선정, 지원하였다.

<표 2-2-7> '98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 업	축 산
계	19,710	16,649	3,061
농업인후계자	7,862	4,801	3,061
전업농	11,848	11,848	-

주: 축산전업은 '95년부터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별도 추진  
자료: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농업인후계자는 평균 2,500만원, 전업농 육성대상자는 평균 50~100백만원을 지원하되, 개인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자금지원 이외에도 기술교육, 해외연수 실시, 각종 정보제공 등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95년도부터 경영규모확대와 시설·장비 현대화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정도로 발전한 농업경영체를 선도농업경영체로 선정, 그 사업장을 모델농장으로 조성하여, 농과계 학생과 농업인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7년도에는 55개소를 선발하여 총 4,400백만원을 지원하였고 '98년에는 20개소를 선발하여 총 1,2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농촌인력과 사무관 이진원)

## 2. 품목별 농업인교육

개방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술농업의 조기실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안정된 소득원 확보를 위한 농가의 농업기술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도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17만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관별로 영농기술, 농업기계, 농촌생활과학, 4-H회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높은 수준의 영농기술과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습득은 물론 수입개방에 대한 적극적인 태세와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 (1)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앙에서 수출 유망품목 또는 고소득 작목에 대한 새기술 습득을 희망하는 농업인 884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기술 해결 중심의 전문교육 실시로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농업인으로서 역량을 증진토록 하였다.

### (2) 전업농가 및 선도농업경영체교육

21세기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의 주역을 육성하기 위한 전업농 육성사업

은 '98년 자금수혜자 7,498명(중앙 1,733, 지방 5,765)을 대상으로 전업농가로서의 사명감 고취와 전문 경영인으로서 능력함양을 위한 농정시책·정신교육,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 밭작물인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분야는 중앙에서 2~3일간, 쌀 분야는 지방단위에서 2일간씩 최신 기술정보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생산기술, 경영기법 등 선도 농업경영체로 선정된 17명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모델화를 위하여 정부시책, 교육기법, 교육장 설치 운영, 현지견학 등 교육을 실시하였다.

### **(3) 신규농업인후계자 교육**

농업후계인력에 대하여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98년에 선정한 농업인 후계자 및 사업 승계자 8,010명에 대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일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농업인 예비후계자 811명을 대상으로 각도 농업기술원에서 2일간에 걸쳐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농정시책과 영농기술 및 경영교육을 실시하여 미래 농촌의 주역 양성에 기여하였다.

### **(4) 영농공개강좌**

KBS와 공동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전국 19개 지역에서 5,721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품목에 대한 공개강좌를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기술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였다.

### **(5)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지역별 주력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품목별 조직중심의 상설교육 실시로 자율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군별 3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83,087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생산 및 유통단계별로 연 4회에 걸쳐 상설교육을 실시하였다.



## (6) 새해영농설계교육

1~2월중 전국적으로 실시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역실정에 맞게 품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총 666,985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영농현장 애로기술과 새기술, 정보 및 농정시책 교육으로 농가별 새해영농계획을 반영하고 농업인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통하여 농업생산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 (7) 농업기계 교육훈련

요즈음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농사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각종 기계가 농가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정부의 농업기계화 시책에 의한 각종 기계의 생산공급에 주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책에 부응하여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중앙단위교육에서는 전국 농업기계교관 200명을 대상으로 새로 보급되는 기종의 취급조작 및 정비수리 전문기술 등 신기종 농업기계교육을 1주일간 실시하였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농업계 실과교사 25명을 대상으로 정비수리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후계기능인력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1급 자격소지자 60명에 대한 보수교육과 사후봉사업소 요원 89명(대리점요원 35명, 수리점요원 54명)에게 사후봉사업소의 역할, 농업기계의 현황과 발전전망, PC통신 활용방법 등을 교육하여 농업기계의 발전과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농업전문학교 신입생에게는 1학기에 공통과목으로 농업기계 전반에 걸쳐 1주간씩 242명을 교육하고, 2학기에는 식량작물학과 등 전공분야별 4개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5일간 151명을 교육하였다.

농업기술원과 농민교육원이 주관하는 도 단위 교육에서는 기계화영농사 944명과 일선 농촌지도사 290명을 대상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의 기종을 단일반으로 편성하여 1~3주간의 심도 깊은 정비수리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의 기계화 영농을 선도하는 핵심인력을 양성하였다.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실시하는 시군 단위 교육에서는 이앙기 관리기

경운기 등 소형기종 구입농가 중심의 농업기계 실수요자 16,393을 대상으로 포장작업과 고장이 많은 부분에 대한 점검정비요령 등을 교육하였으며 농촌부녀자의 영농역할 확대에 따라 농업기계보유농가 부녀자 5,190명에게 운전조작과 포장작업 위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촌 노동력 부족 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도로주행형 기종 보유농가 162,525명에게 주행 중 안전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150개소의 농업기술센터에서 422명(농기계 교관 148명, 수리요원 274명)의 수리 전문지도반을 편성, 196대의 순회차량을 이용하여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31,200개의 오지마을을 22,000회에 걸쳐 순회하면서 238,232대의 고장기계를 수리해주는 동시에 257,000명에 대한 개별적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자가정비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 농촌지도사 김이기)

### 3. 농업계 학교교육 활성화

전국에 약 3만여 명의 농림계 고교생이 재학중이나, 입학정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졸업후의 영농 종사율도 20% 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농업 여건이 타 산업에 비하여 어렵기 때문이지만 그보다는 농림계 학교가 실험실습을 위한 첨단시설장비의 부족으로 내실 있는 농장 경영실습과 선진기술교육이 어려워 영농기반 및 의지가 있는 학생들도 농림계 학교 입학에 기피하기 때문이다. 농업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과 농림계 대학도 연구시설 미비와 시설장비의 노후 등으로 선진 과학기술 교육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제화·개방화 속에 농림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기업농 체제로의 이행 등 농업의 구조개선을 선도할 전문경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림계 고등학교 중 농고는 도별 1개교씩 9개교를 자영자 양성학교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였고 우리나라 유일의 전문

대학인 익산대학과 자영농고에서 제외된 6개 농고도 지원하였다. 농업계 전문학교는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전문학교를 설치하고, 농림계 대학은 지역 및 기능 분야를 고려하여 14개 특성화대학을 선정하여 지역 농림업 발전과 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였다.

1998년 12개 자영자 양성 농수산고등학교에 63억원, 일반 농림계 고등학교에 35억원, 10개 특성화대학에 82억원 등 총 180억원을 실험실습 시설·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원하였으며 한국농업전문학교에 28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8>

농림계 학교 지원실적

(단위: 억원)

구 분	'94	'95	'96	'97	'98
자영농·수고	-	184	138	138	63
한국농업전문학교	-	127	99	23	28
농업전문대	-	13	-	4	-
농림계 고등학교	-	-	-	40	35
특성화대학	20	50	60	80	81

자료: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 사무관 이진원)

#### 4. 농업경영혁신종합지원

농업 투·융자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영농이 규모화, 현대화 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부실사태가 발생하고 동일한 영농조건으로 경영체의 기술, 경영 여하에 따라 생산량 및 수익성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경영 및 정보화 교육실시, 컨설팅서비스 제공, 종합자금 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표준진단표를 '98말까지 주요품목 30개를 보급하여 스스로 문제점을 보완토록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및 농촌지도계통 조직에 학계, 컨설팅업체, 관계기관, 선도농가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 전문가 팀을 구성하였고, 농·축협을 통한 각종 경영정보제공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제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예산 150억원도 확보하였다.

둘째, 농업인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의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농업인 경영교육 과정에 활용토록 보급하였다.

셋째,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전문경영체에 대한 집중경영교육실시가 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경영체,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현장교육 등 집중경영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넷째, 농업인의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인들은 진단표 작성과 다른 농가와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 농업경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농촌인력과 행정사무관 남태헌)

## 5. 법인경영체의 육성

###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경영체로서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은 '91년 25개소, '92년 64개소, '93년 231개소, '94년 1,015개소, '95년 1,261개소, '96년 1,143개소, '97년 634개소, '98년 338개소 등 총 4,711개소가 설립되었다.

이와같이 매년 설립이 증가하는 이유는 첫째, 개별경영보다 법인화하여 경영하는 것이 영농의 규모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본·기술집약형

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더 유리하고, 둘째, 정부의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농업정책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도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97.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자격요건 강화로 자금 수혜목적의 설립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크게 영농조합법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농지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기타 소득은 조합원당 1,200만원 공제후 그 잔액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조합법인 고유의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분리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는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교육세가 감면되고 법인의 농지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은 면제되며, 농지이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감면된다. 둘째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영농조합법인이 지역농업을 유지·발전시키는 중심적인 농업경영체로 자력성장할 수 있도록 농협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경영 및 기술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대행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91년부터 위탁영농회사제도를 보완·발전시킨 제도로서,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까지 허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기 하는 등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4.12.22)에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자격은 농업인과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시행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로서 설립자가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법인세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농업경영이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농업회사법인이 구입하는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면제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는 농업기계 구입자금, 농업기계의 보관창고 및 간이수리시설자금, 농업경영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지원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은 '90년에 5개소를 시작으로 '91년 63개소, '92년 164개소, '93년 281개소, '94년 341개소, '95년 341개소, '96년 297개소, '97년 133개소, '98년 45개소 등 총 1,670개소가 설립되었다.

#### **다.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경영체 지원**

법인경영체는 생산뿐 아니라 관련 2·3차 산업기능을 포괄하는 Agribusiness의 중심체로서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경영체의 경우 사업에 대한 비전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향이 있고, 경영체 운영 경험 및 세무, 회계,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등과 규모확대,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추가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체제 미비 등으로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는 출자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도록 유도하고, 법인경영체의 정책사업 대상 신청자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실적, 구성원의 자질, 자본(출자)규모,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정책사업 대상자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성실하게 운영하는 법인경영체만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법인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여 경영장부 기장을 의무화하고,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인명의의 등기 실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인경영체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마케팅, 회계, 세무,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 등에 필요한 경영교육, 정보화교육을 실시 하였다.

또한, 우수경영체에 대한 후속자금으로 '98년도에 농기업경영자금 5,000억원을 지원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농촌인력과 서기관 이능완)

## 6.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 가. 추진배경

'7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농촌 청장년층이 농촌을 떠남에 따라 농촌여성의 영농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농업생산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97년말 현재 전체 농가인구의 51.9%와 전체농업종사자의 51.1%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표 2-2-9> 농업인구 및 농업종사자중 여성비율 추이

(단위 : 천명)

	'70		'80		'90		'95		'96		'97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농가 인구	농업 종사자
전체	14,422	7,497	10,827	6,661	6,641	4,240	4,851	3,294	4,692	3,419	4,468	3,265
남성 (%)	7,164 (49.7)	3,666 (48.9)	5,415 (50.0)	3,279 (49.2)	3,331 (50.2)	2,123 (50.1)	2,373 (48.9)	1,633 (49.6)	2,263 (48.2)	1,673 (48.9)	2,149 (48.1)	1,604 (49.1)
여성 (%)	7,258 (50.3)	3,831 (51.1)	5,412 (50.0)	3,383 (50.8)	3,310 (49.8)	2,117 (49.9)	2,478 (51.1)	1,661 (50.4)	2,429 (51.8)	1,746 (51.1)	2,319 (51.9)	1,661 (50.9)

자료 : 농림부 농업총조사 1998년

이와같이 농촌여성이 농업의 주요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98년 3월에는 농촌여성 전담부서로 종전의 농촌인력과 여성계를 확대·개편하여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운영하였다.

## 나. 주요정책내용

'98년에는 여성농업인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여성농업인의 주류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98. 3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한 이래 '98. 8 여성농업인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여성농업인정책기본계획은 증대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보장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시로 요약될 수 있다.

### (1)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 (가) 전문여성농업인력의 육성

여성농업인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전문여성농업인력의 확보 선행되어야 하므로 「여성농업인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후계인력육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후계자의 현실과 수요조사를 거쳐 농업인후계자 선발시 여성농업인이 우선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이에 따라 연차별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둘째, 그동안 개발된 농기계는 남성농업인 위주의 농기계로 되어 여성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점과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여성농업인이 쉽게 시동을 걸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를 개발하고, 농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연구에 더욱 힘쓰기로 하였다.

셋째, 남성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여성농업인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의 교육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영농교육, 정보화교육, 의식교육, 최고경영자과정 등 각주제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나) 여성농업인의 농정참여 확대

여성농업인의 의사를 농업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농림정책관련 각종 위원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확대하고, 지역내의 농업관련 협의체에도 여성참여율을 확대하도록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 (다) 도·농여성단체 교류의 활성화

여성농업인의 요구나 지위향상은 농업인들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도시민들도 함께 해결하여 할 공동과제이다. 따라서 도·농간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시민을 끌어들여 도시여성과 여성농업인의 지위를 함께 향상시켜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요소를 타파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농산물의 직거래와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도록 하고 있다.

### (2)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가) 여성농업인의 산후휴식보장 등 모성보호를 위한 농가도우미 제도 도입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가사나 농업노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도우미가 이를 대행토록 하고 시·군에서는 인력은행을 설치·운영하여 수요자와 도우미(영농공급 희망자)를 접수·관리·하여 여성실업자(희망여성), 농업경영이양자들로 하여금 영농을 대행토록 하여 농촌지역의 영농부족인력 해소와 모성보호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나) 농촌보육시설 확충과 질적수준 향상

젊은 인력의 이농은 농촌의 보육 및 교육시설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개정 또는 각종 교육관련 법령개정시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협의 여성농업인의 의지를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및 보호를 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98년에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각종 정책위원회와 지역협의체에 여성들의 참여가 강화되었다.

- 여성농업인을 영농후계인력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영농후계자 선발과정에 가점(50점)을 부여하고, 평가점수 400점이상(700점 만점) 취득자는 20%범위내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이와 함께 각종 정책위원회와 지역협의체에서의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강화하여 구성인원의 10%이상이 여성농업인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10월에는 여성농업인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농업인현장 및 실천다짐을 선택하여 21세기 여성농업인 주류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한해였다.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전종철)

### **제3절 식량안보를 위한 주요곡물 자급기반 확충**

#### **1. 주곡의 안정적 공급기반 유지를 위한 노력**

##### **가. 추곡약정수매가 인상 및 적기수매**

IMF한파로 나라전체가 매우 어려웠지만, 주곡인 쌀 만큼은 자급을 유지하여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한 점과 영농자재비 상승, 국민적 고통분담 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98년도 추곡약정수매가격은 '97년 137,990원/80kg에서 5.5% 인상한 145,850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외환위기에 따른 봄철 영농기 농가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하여 추곡수매 약정을 체결한 535천 농가에 대해 7,002억원의 선금을 조기에 지급하였다.

'98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3배에 달하는 병해충과 집중호우, 태풍 “예니” 등 사상최악의 기상이변으로 풍작을 이루기가 가장 힘든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가 인상으로 벼재배의욕을 고취 시켰으며, 농지보전 및 관리강화로 벼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쌀 생산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병해충 방제 총 동원령을 내려 병해충 방제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연인원

1,300만명을 동원하여 수해복구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침수·도복된 벼가 싹이 트는 현상이 발행하여 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매시기를 당초보다 10일 앞당긴 10.19일에서 12.31일까지 74일간으로 조정하였으며,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물벼수매를 170만석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다.

- RPC 물벼 수매량: ('97)143만석 → ('98당초)155만석 → (조정)170만석

또한 태풍피해로 수발아 벼, 착색벼 등 품질 저하품에 대해서는 농가판로 해소와 소득지지차원에서 잠정등의 규격으로 3천석 수준의 “피해벼 특별매입”을 실시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추곡약정이행이 어려운 6천농가에 대하여 선금이자를 면제하고 선금 960백만원의 반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곡자급 및 민간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96, '97년 연속 풍작에도 불구하고 정부벼의 공매시기·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난해 8.6%보다 4.8%포인트가 상승한 13.4% 수준의 계절진폭을 유지함으로써 단경기 값을 현실화하고 영농의욕을 고취시켰다.

보리의 경우 수매가를 4년만에 5.5% 인상하였고, 출수기때 잦은비 및 이상고온으로 14년만에 붉은곰팡이병과 이삭겉마름병이 전남북, 경남북 일원에 만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지원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에 포함시켜 157억원을 지원하고, 현행 보리검사규격외의 추가로 「잠정등의 규격」을 신설하는 등 생산량의 72%인 962천석을 수매하였다.

(식량정책과 사무관 최병국)

#### 나. RPC 중심의 쌀 생산·가공·유통혁신

2004년까지 쌀생산량의 40%수준을 RPC에서 산물상태로 일관처리하기 위해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총 5,698억원(국고보조 1,712, 국고융자 1,412, 자부담 2,574)을 투자하여 301개소의 신규RPC를 설치하였고, 192개소의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였다. '98말현재 RPC의 부문별 시설능력은 전체 쌀

생산량대비 건조 13.5%, 저장 9.4%, 가공 40.4%수준이다.

쌀주산지 중심으로 설치된 RPC는 벼 수확후 건조·저장·가공·판매과정을 일관처리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미질향상은 물론, 유통단계와 유통마진도 크게 줄이고 있는데 '98년도의 경우 물벼처리량 약 288만석기준으로 약 924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2-10> 관행방식 대비 미곡종합처리장 처리효과

구 분	관행방식 (A)	R P C (B)	증 △ 감 (C=B-A)	절감율(%) (C/A)
처리비용(원/톤)	246,646	162,281	△84,365	34.2
노동시간(hr/톤)	33.72	12.17	△21.55	63.9
양곡손실율(%)	6	1	△5	

<표 2-2-11> RPC유통시 마진 감축효과

구 분	최종소비자가격	농가수취가격	유통 마 진
○ 도매상 유통시	150,000원	121,073원(80.7%)	28,927원(19.3%)
○ RPC 유통경로	148,000	126,907 (85.7%)	21,093 (14.3%)

※ 유통비용: 건조·도정비, 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이윤

주: '97.11 김제→서울, 80kg 기준

뿐만 아니라, RPC는 정부수매량 감축을 보완하여 풍작의 경우에도 판로 보장, 쌀값안정등 산지민간유통의 중심체로 성장하고 있다.

'98년에는 쌀 총생산량 3,540만석의 24.4%인 863만석을 PRC에서 매입·처리함으로써 RPC사업시작이후 처음으로 RPC매입량이 정부수매량(645만석)을 앞서게 되었다.

<표 2-2-12>

RPC 유통비율

(단위 : 천석)

년도별	생산량(A)	정부수매량	RPC 매입량		산 지 쌀 값
			(B)	B/A	
'94	35,134	10,500	2,462	7.0	105,508원/80kg
'95	32,601	9,550	4,550	14.0	130,670
'96	36,959	8,618	7,107	19.2	136,110
'97	37,840	8,500	7,952	21.0	137,396
'98	35,400	6,445	8,633	24.4	147,660

한편, 정부수매량이 연차적으로 감축됨에 따라 RPC의 공매곡 의존율은 '95년의 62%(총 384만석)에서 '98년에는 27%(총 231만석)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RPC의 농가벼 자체매입량은 '95년에 171만석에 불과하였으나, '98에는 623만석으로 급증하였다. 산물처리시의 경제성과 편리성에 대한 이식이 확산되면서 생산농가의 산물출하희망물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RPC 업체들은 건조·저장시설 확충에 주력하는 한편,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품종을 통일하고 공동 농작업을 추진하는등 고품질의 원료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생산·유통계열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98년의 계약재배면적은 RPC개소당 약 400ha, 301개소 RPC 전체적으로는 12만 ha에 이르렀다.

(식량정책과 농업사무관 민주석)

다. 농지보전 및 관리강화

1998년말 농지면적은 191만ha로 지난 1968년 최고 230만ha보다 41만ha가 감소하였다. 1990년대 중·후반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흐름을 타고 농지의 타용도 전환, 유휴지 증가 등으로 1994~1998(5년간) 평균 29천ha씩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IMF관리체제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용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농지감소추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 농지전용허용면적을 축소하고, 농지전용허가권한 상향조정,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용시설 설치허가제로의 전환, 준보전임지를 70% 이상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산림적용부담금의 면제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시행령 및 산림법시행령을 개정·시행(1997. 1. 1)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이를 착실히 운영한 한해였다.

농업진흥지역이 '98말현재 1,056.2천ha로 '97년보다 1,400ha늘어났다. 농업진흥지역이 증가한 사유별로 보면 대체지정 449ha, 경지정리지역 편입 259ha, 주민희망 709ha 등이다.

또한 '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휴경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통지를 하게 되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투기적 목적의 농지소유를 방지해 나가고 있다. 1998년도에는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후 휴경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 1,209ha를 처분토록 한 바 있으며, 1996년 본 제도 실시 이후 점차 농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농림부 및 시·도, 시·군 합동으로 농지의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하여 농지가 불법으로 타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농지보다는 가급적 산지·구릉지를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내 준보전임지가 70% 이상인 경우 사실상 산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골프장, 관광단지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지조성비·농지전용부담금·산지전용부담금을 전액 감면토록 한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시행자들이 본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점차 달리고 있으며, 우량농지 보전 및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1998년 농지전용면적은 1997년 15,395ha 대비

1.6%가 rkat하여 15,141ha로 집계되었는바, 산지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농지보전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 등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 2. 식량 생산기반의 확충

### 가. 일반 경지정리사업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기반 확충을 통한 노동력 절감 등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핵심사업으로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하여 왔다.

그 동안 경지정리사업은 연간 2~3만ha 규모로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1980년대 국고 50%, 지방비 30%, 주민부담 20%이던 보조율을 지방비 및 농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왔다. 1993년도 봄 마무리부터는 주민부담을 없애고 국고 80%, 지방비 20%로 전액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1993년 봄마무리사업까지 총 소요사업비의 80%를 국고에서, 20%를 지방비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1993년 가을착수부터 사업비 상승억제를 위하여 시행면적 기준으로 예산단가의 80% 해당액만 국고에서 정액지원하고, 국고지원액 이외의 소요사업비는 지방비로 부담토록 하였다. 이는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지정리 대상면적이 많이 남아 있는 농어촌 시·군에서 추가되는 지방비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기피하는 등 계획물량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5년 가을착수분부터는 예산단가의 10%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역여건에 따라 국고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고 지원방식을 제한적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수준을 다소 향상시켰다.

그러나, 아직도 소요사업비에 비해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며, 정부는 실제 소요 사업비 수준으로 예산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지정리사업은 쌀 뿐만 아니라 채소 등 국민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식량자급향상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운, 이앙, 방제, 수확 등 일련의 영농과정을 기계화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998년 봄까지 경지정리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목표 논면적 80만ha의 85%인 67만 8천ha를 국고 3조 7,594억원, 지방비 1조 4,277억원, 농민부담 2,711억원 등 5조 4,582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다. 1998년에는 국고 4,457억원과 지방비 2,065억원 등 총 6,522억원을 투자하여 1997년 가을에 착수한 2만 3천ha를 5월에 완료하였고, 1998년 가을에 1만 4천ha를 착수하여 1999년 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표 2-2-13>

**일반경지정리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 분	총논면적	목 표	'98봄까지	'99계획	2000년이후
사업량(천ha)	1,157	800(915)	678(778)	12(14)	110(123)
- 진흥지역	742	665(760)	592(678)	12(14)	61( 68)
- 진흥지역밖	415	135(155)	86(100)	-	49( 55)

주 : 면적은 마무리 논면적 기준, ( )는 구역면적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984년 이전에 경지정리된 지역은 평야부의 집단화된 쌀생산 핵심 우량농지이나 당시의 영농수단인 경운기 등을 이용한 영농방식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다. 따라서 필지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고,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며, 용수로와 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어 대형 농기계작업과 물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평야부의 집단화된 쌀 생산핵심지역의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쌀생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하고자 1994년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고 이를 재원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천ha



를 개발목표로 설정하고, 1994년 가을에 5천ha를 시작으로, 1998년 봄마무리까지 5만5천ha를 완료하고, 1998년 가을에 1만2천ha를 착수하여 1999년 봄에 1만2천ha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이미 경지정리된 집단화된 우량농지 중 지역주민의 사업시행 희망도와 생산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필지규모를 3천평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용수로와 배수로를 매필지마다 접하도록 설치하는 동시에 콘크리트 구조물화하는 등 시설을 현대화하며, 농로는 기존의 폭 1.5~4m를 4~7m로 확장·정비하여 대형기계화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2-2-14>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98까지	'99계획	2000이후
사 업 량	200	55	12	133

주 : 봄마무리 기준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 다. 발기반정비사업

발기반정비사업은 발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을 위하여 생산기반 시설이 취약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암반관정 등의 수원공개발, 농로개설, 밭경지정리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1970년대에는 일부지역에서 밭용수개발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쌀증산 및 고미가정책 등의 영향으로 우량밭이 논으로 전환되어 밭정비가 정착되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국민소득증대와 더불어 식생활이 변화하면서 신선채소, 과일 등에대한 선호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밭작물의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밭기반정비 여건이 성숙되어 1994년부터 전국 단위로 밭기반정비를 시행하게 되었다.

사업 초년도인 1994년에는 국고지원율이 60%로 지방비 부담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는 지방비(40%)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였고, 사업추진방식도 착수 당해년에 완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업추진에 어려

움이 많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고지원율을 1995년에 70%, 1996년에 80%로 상향 조정하였고, 사업추진 방식도 착수 당해년도 완료방식에서 2개년차 사업완료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발관정의 전기요금이 양곡생산 전기료보다 과중하여 1997년 6월부터는 양곡생산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곡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도록 하여 농민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발기반이 정비된 지구에 문화마을 조성, 생산유통지원 사업 등 관련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발기반정비사업은 국민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농업경쟁력 제고, 아름다운 국토공간을 가꾸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논으로 확산 재배되고 있는 발작물을 밭으로 유인하여 쌀자급면적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15> 발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천ha, 억원)

구 분	총발면적	목 표	'98까지	'99계획	2000이후
사 업 량	753	110	30	6	74
사 업 비	-	25,794	6,292	1,550	17,952

자료: 농림부 농촌개발국

## 라.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사업

농어촌지역의 도로 확·포장사업은 1970년대에는 새마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추진되었고, 1985년부터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으로 농림부 주관하에 추진되었다.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과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정으로 농어촌소득원 도로사업이 내무부로 이관되어 1991년부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통합되어 추진되고 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생활권 위주의 개발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대형농기계의 보급확대 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1995년도에 별도의 기계화경작로사업을 농림부 주관하에 시작하였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로는 개설되었으나 농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되어 나타났던 기계화영농, 농산물 운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주산단지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농업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의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구조개선에 기여하였다.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농업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생활도로로도 이용되고 농촌에 개발 파급효과가 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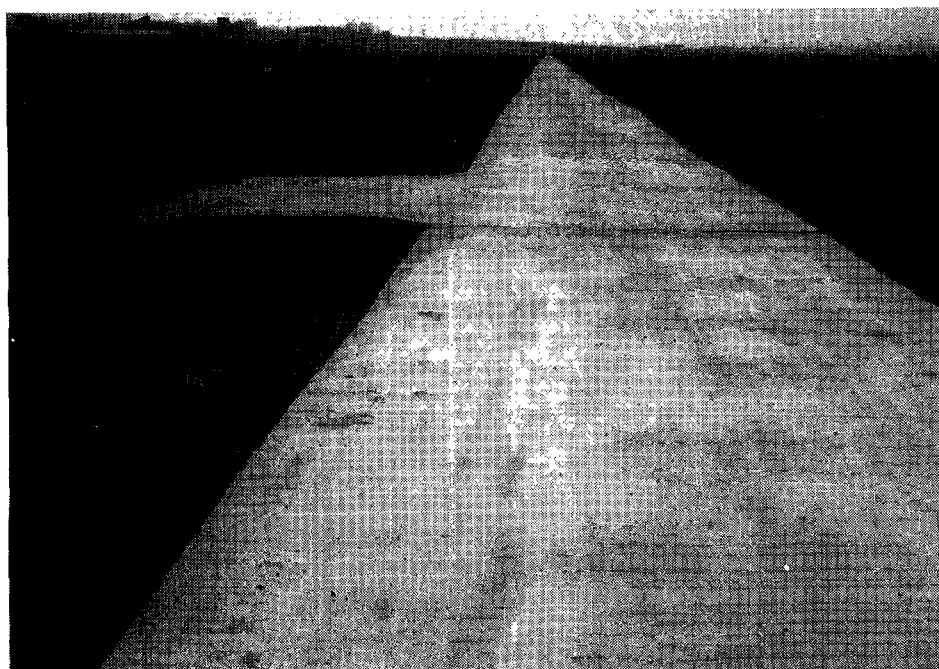
<표 2-2-16>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천km, 억원)

구 분	목 표	'98까지	'99계획	2000이후
사 업 량	22	5.6	1.8	14.6
사 업 비	29,262	5,607	1,880	21,775

자료: 농림부 농촌개발국

<그림 2-2-1>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 마. 배수개선사업

수해상습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1998년에는 1,795억원을 투입하여 약 3천ha를 준공함으로써 총 대상면적 23만5천ha중 8만4천ha를 완료하였다. 호우시 하루이상 침수되는 지역에는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을 설치하고, 지하수위가 높아 과습한 지역에는 흡수관 등 지하암거 배수시설을 설치하였다.

<표 2-2-17>

배수개선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ha)

구분	총대상		'98까지		'99계획		2000이후	
		%		%		%		%
지표배수	180	100	82	46	6	3	92	51
지하배수	55	100	2	4	-	-	53	96
계	235	100	84	36	6	3	145	61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 바.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방조제 등 이미 설치되어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영농급수에 지장이 있으며, 재해에 위험이 있는 시설을 보수·보강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1998년도에는 재해취약시설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로중 흡수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용수로에 2,739억원을 투입하였다. 사업별로 보면 농조수리시설개보수에 2,198억원,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에 261억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에 200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토사가 퇴적되어 저수량이 부족한 저수지를 준설하는데 80억원을 투입하여 물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표 2-2-18>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개소)

구분	총대상		'98까지		'99계획		2000이후	
		%		%		%		%
농조수리시설	12,708	100	4,816	37.9	95	0.75	7,797	61.35
국가관리방조제	91	100	56	61.5	9	9.9	26	28.6
지방관리방조제	1,495	100	467	31.2	68	4.5	960	64.3
저수지건설	2,189	100	1,108	50.6	80	3.7	1,001	45.7

자료:농림부 농촌개발국

사. 농업용수 개발사업

농업용수개발은 모든 농사에 기본이 되는 물을 개발·공급하는 사업으로서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농민의 열망도 역시 높은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예산지원규모가 실제 소요보다 크게 부족하여 준공이 지연되고 사업효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시행중인 지구의 준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하며 예산규모 확대 등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은 경북 성주, 경남 하사, 전북 동화 3개 지구에 547억원이 투입되어 11,746ha를 공사중에 있다. 1998년도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은 157개 지구에 3,883억원을 투입하여 24개 지구 5,288ha를 준공하는 등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하였다.

<표 2-2-19>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천ha)

총담면적	개발대상면적	'98까지	'99이후
1,173	1,100	882	218

자료:농림부 농촌개발국

## 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지역을 권역으로 하여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등 각종 농업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수자원 확보와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은 물론, 상습침수를 해소하고 우량농지 창출 등으로 영농환경개선 및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1970년에 금강·평택지구를 시작으로 1997년까지 총 21지구 26만 7천ha를 추진하여 그중 1980년에 착수한 대호지구('96완공)등 14지구 14만 1천ha를 완공하고 7지구 12만 6천ha는 계속 사업시행중이다.

1998년에는 국고 1,675억원, 농지관리기금 1,520억원 등 총 3,195억원을 투입하여 새만금지구 등 7지구를 추진, 1976년에 착수한 영산강Ⅱ지구 2만 1천ha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1991년에 착공한 새만금사업은 국고 880억원, 농지관리기금 1,030억원등 총 1,910억원을 지원하여 어업보상과 방조제 몰막이공사를 추진하여 전체 공정의 40%를 달성하였다.

<표 2-2-20>

###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단위 : ha, 억원)

구 분	지구명	개발면적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규모			사업기간
				'97까지	'98실적	'99이후	
계	21 지구	266,937	52,135	24,679	3,195	24,261	
준 공	14 지구	141,407	10,223	10,223			
시행중	7 지구	125,530	41,912	14,456	3,195	24,261	
	영 산 강Ⅱ	20,700	3,536	3,301	235	-	'76~ '98
	금 강Ⅱ	43,000	4,677	1,016	300	3,361	'89~2004
	미 호 천Ⅱ	4,430	1,648	681	212	755	'89~2000
	홍 보	8,100	2,224	989	200	1,035	'91~2001
	영산강Ⅲ-1	13,160	5,723	1,083	240	4,400	'85~2003
	영산강Ⅲ-2	7,840	2,414	675	98	1,641	'89~2004
	새 만 금	28,300	21,690	6,711	1,910	13,069	'91~2004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 3.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 가. 원예특작부문 지원

원예사업은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에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4,545억원을 지원하여 시설채소 20개소, 노지채소 30개소, 과수 128개소, 화훼 15개소, 특작 111개소 등 총 389개소의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였다.

개소당 사업비는 시설채소 33억 5,500만원, 노지채소 200~3,268백만원, 과수 1,483백만원, 화훼 3,862백만원, 특작(버섯) 564만원이다.

현대화된 자동온실 보급은 유리온실 44ha, 경질판온실 1ha, 파이프비닐온실 100ha 공정육묘장 0.5ha, 시설개선 112ha, 예냉시설 364평, 저온저장고 436평, 집하장 2,005평 저온수송차량 13대를 설치·지원하여 품질고급화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 및 첨단기술농업의 확산을 촉진하였다.

<표 2-2-21> '98 원예특작부문 지원실적

	사업량 (개 소)	'98 지원내역(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계	389	454,514	91,578	91,128	180,905	90,903
노지채소	30	33,596	4,260	3,810	17,886	6,719
시설채소	20	87,230	17,446	17,446	34,892	17,446
화    훼	15	42,482	8,496	8,496	16,993	8,496
과    수	128	190,166	19,279	19,279	113,050	38,558
특    작	111	59,446	5,675	5,675	33,627	14,469

#### 나. 인삼산업 육성지원

인삼산업은 「인삼사업법」에 의거 전매제에 의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1996년 7월 1일 「인삼산업법」이 제정 발효됨에 따라 전매제가 폐지되고 인삼관련 업무가 재정경제원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농림부는 1998년도에 376억원을 인삼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제고사업에 투자하여 인삼 재배농가에 식재자금으로 33억원을 용자 지원하였고, 우량 묘삼 생산 및 보급사업 82ha, 21억 5,300만원, 토양개량사업 665ha에 12억 6,550만원 등 시설기자재 현대화사업 총 7개사업 60개소, 965ha에 46억 2천 만원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에 기여했다.

또한 그동안 유지해온 인삼의 생산·제조 및 판매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제도가 오히려 생산자·제조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여 인삼산업활성화의 제약요인이 됨에 따라 인삼경작지정제 및 제조확인제를 폐지하는 등의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삼산업법을 개정추진하여 '98년 12월 국회를 통과, '99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표 2-2-22>

'98 인삼산업 지원실적

	단위	사업량	'98 지원내역(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용 자	자 담
계			226,600	660	660	36,960	188,320
○ 인삼생산지원							
- 인삼식재자금	ha	2,750	220,000	-	-	33,000	187,000
- 시설기자재현대화	개소	60	6,600	660	660	3,960	1,320

(채소특작과 농업서기관 장승진)

#### 다.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

1993년까지는 축사시설개선사업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1994년부터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생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은 2000년대 축산업을 이끌어나갈 전문화·규모화된 경영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사육기반시설, 축사시설 현대화 및 장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1998년도에 한우는 사육두수 과잉과 IMF 사태에 따른 소값폭락으로 인한 기존 투자농가의 경영난 해소에 중점을 두어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였다.

돼지는 시설현대화에 의한 사육여건 개선과 공동관리 및 운영에 의한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사육농가의 계열화를 계속 추진하여 돼지고기 수출을 대폭 확대하는데에 기여하였고, 분뇨처리시설 또한 지원하여 환경오염 방지에도 노력하였다.

닭은 사육수수의 증가보다는 시설현대화와 자동화 및 규모화에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표2-2-23>

'98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지 원 내 역		
		계	용 자	자부담
한 우	69개소	20,657	15,890	4,767
젓 소	54	3,162	2,198	964
돼 지	168	21,313	16,045	5,510
닭	88	14,147	9,587	4,560

자료 : 농림부 축산국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으로 1998년까지 한우 5,015호, 젓소 2,976호, 돼지 1,932호, 닭 862호 등 총 11,070호가 축산 전업농 수준으로 규모화 되었다.

(축산경영과 서기관 노수현)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동훈)

## 라.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 낙후된 국내 축산물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복잡한 유통구조의 단순화 시키고 육류의 유통을 부분육·냉장육·브랜드 육 유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축산물 종합처리장(Livestock Packing Center)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기존2, 신규8)를 건설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육류를 공급할 계획으로 1994년 12월부터 1997년 3월까지 3차에 걸쳐 신규 사업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였으나 2개업체가 사업취소되고 현재 8개소중 2개소가 완공되었으며 6개소는 건설중에 있다. 1998년까지 축발기금에서 366억원을 지원하였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은 가축의 생산·도축·가공·판매(수출)를 일괄 처리하는 선진국형 유통시설로 축산물 유통단계를 현행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하여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유통 비용 및 마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물유통과 사무관 최이규)

## 4. 농업기계화 및 영농자재의 수급안정

### 가. 농업기계 공급지원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영개선을 위해 1998년도에 경운기 1만80대, 이앙기 1만5,720대, 콤바인 9,280대, 곡물건조기 4,140대, 바인더 1,060대, 관리기 7,190대, 트랙터 2만5,380대등 총 11만7천대를 공급하였다.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은 1997년 98%에서 1998년에는 97%로 1% 감소했다. 밭작물분야는 파수, 채소 주산단지 중심으로 기계화가 추진되었으나,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이 아직 42% 수준에 머물고 있어 밭작물분야의 기계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표 2-2-24>

연도별 주요 농업기계공급 및 자금지원

(단위: 대, 백만원)

	'94	'95	'96	'97	'98
○농기계공급	222,113	245,902	281,559	278,990	116,719
- 경운기	81,799	79,750	83,269	79,171	10,077
- 트랙터	14,523	17,282	19,605	22,652	25,377
- 이앙기	29,193	34,234	38,524	46,108	15,719
- 바인더	4,844	3,597	4,189	3,731	1,058
- 콤바인	8,063	8,047	7,611	8,091	9,275
- 곡물건조기	4,880	5,313	7,311	7,467	4,144
- 관리기	44,194	47,617	44,581	41,058	7,190
- 기타	34,617	50,062	76,469	70,712	43,876
○자금지원	617,835	679,798	743,875	819,138	710,723
- 보조	285,465	310,864	355,852	311,425	55,240
- 융자	332,370	368,934	388,023	507,713	655,483

자료: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업기계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3~1997년까지 「농기계 반값공급」을 실시하여, 일반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200만원 이내에서는 구입비의 50%, 200만원을 초과시는 100만원을 보조 지원하였다. 농기계 이용조직(농업회사법인, 작목반등 공동이용조직) 및 쌀 전업농에게는 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였다. 농기계 반값공급기간 동안 총 3조 4,924억원의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하여 122만6천대의 농기계가 공급되었다. 이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줄어들고 생산비가 하락하였으며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에도 불구하고 적기영농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대형 트랙터와 축산용 농기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기계 생산을 국산화 생산함으로써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하였다.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반값공급이 소형농기계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소형 농기계 중심의 단순기계화를 촉진시켜 일손부족 해소에는 기여하였으나, 저비용의 대형 일관기계화는 미흡하였다. 영농의 규모화와 대형농기계

의 일관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농규모가 큰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과 전업농에 한하여 대형 농기계 중심의 보조지원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에 대하여는 40% 보조, 50% 용자로, 쌀전업농에 대하여는 20% 보조, 70% 용자로 지원하였다.

1998년에 주요 농업기계 11만7천대를 공급하였으며, 1998년말 주요 농업기계의 보유량은 334만9천대로, 농기계의 보급률은 농가 100호당 경운기 67.9대, 트랙터 9.3대, 이앙기 23.0대, 콤바인 5.5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1989년 1월 1일부터 농기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기계 가격이 9.1%인하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1986년부터 농업 기계용 면세유 공급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에 농업기계용 면세유 1,959천kl를 공급하여 4,399억원의 농가부담을 경감시켰다.

<표 2-2-25>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단위 : 천대)

	'94	'95	'96	'97	'98
계	2,920.9	3,042.9	3,201.2	3,331.5	3,348.7
경 운 기	836.8	868.9	910.4	945.8	960.0
트 랙 터	88.7	100.4	113.3	131.4	157.9
이 앙 기	229.4	248.0	271.1	302.9	325.1
바 인 더	66.4	67.0	67.9	68.9	73.0
콤 바 인	70.2	72.3	73.8	74.3	78.1
관 리 기	201.5	239.5	272.8	315.9	348.7
방 제 기	717.0	712.9	716.8	703.4	640.9
양 수 기	375.1	384.9	407.6	397.4	345.0
탈 곡 기	138.2	122.0	109.9	95.8	78.2
곡물건조기	34.4	28.4	38.1	44.1	49.8
기 타	301.4	320.6	329.4	251.6	292.0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업기계자재과 공업서기관 한한수)

## 나. 농업기계 이용조직 육성

### (1) 농업회사법인 지원

농업회사법인은 1991년에 16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립한 이래, 1998년까지 총 1,450개소에 대해 1,312억원의 농기계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중대형 농기계를 중점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기계 구입자금은 보조 40%(국고 20%, 지방비 20%), 용자 50%, 자부담 10%의 비율로 보조금 32억원과 용자금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도 37개소를 용자 지원하였다.

또한 기 육성한 농업회사법인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는 경영이 건실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5천만원 사업비 이내에서 대체 농기계 구입자금을 20% 보조 지원할 계획이다.

<표 2-2-26> '98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98까지	'98 사업량	지 원 내 역			
		계	국 고	지 방 비	용자 및 자담
1,450개소	110개소	8,086	1,617	1,617	4,852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 (2) 공동이용조직 육성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률 제고와 농업기계 구입비 경감을 목적으로 1981년부터 조성해 온 기계화영농단은 1994년말까지 총 44,960개소로 이 기간중 해체된 영농단 28,043개소를 제외하고 1998년말 현재 16,917개소가 운영중이다.

기계화영농단은 5호 이상이면 임의로 조직이 가능하여 법인체와 같은 주체가 없어 농기계가 사유화되거나, 공동관리로 인한 관심 소홀로 고장이

빈발하거나, 내용연수 이내에 폐지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1995년부터는 영농조합법인과 지역농협에 등록된 작목반 등 공동작업 요건을 갖춘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전환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직에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명칭도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바꾸었다. 1998까지는 사업비의 40%를 보조(국고 20%, 지방비 20%) 50%를 용자지원하였으나, 1999년도에는 보조 20%(국고 10%, 지방비 10%), 용자 70%의 조건으로 보조율을 축소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1998년도에는 보조금 242억원과 용자금 322억원을 지원하여 1,649개소의 공동이용조직을 육성하였으며, 4,262대의 농기계를 지원공급하였다. 또한 농기계 이용율을 제고하고 자금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 이용 조직에 대하여는 동력경운기, 보행형 동력이앙기, 관리기의 보조 지원을 제외하였다.

<표 2-2-27> '98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98까지누계	'98사업량	지 원 내 역			
		계	국 고	지 방 비	용자 및 자담
6,513개소	1,649개소	66,536	12,091	12,091	42,354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업기계자재과 공업서기관 한한수)

## 다. 농업기계 사후관리 및 기술훈련 강화

### (1) 사후봉사 및 기술훈련

농업기계의 공급확대에 따라 공급된 농업기계의 이용율을 높이며,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품공급과 수리 등 사후관리지원을 강화하고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로 하여금 공급한 농기계에 대하여 부품공급과 신속한 수리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1981년도부터는 일정기준의 수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춘 농기계 사후 봉사업소를

면·군·도단위로 구분하여 지정, 육성해 오고 있다.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의 전문수리기사 확보를 위해 1998년에는 수리 기사 169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농업인 스스로 농기계를 점검 수리할 수 있도록 기계화 영농사 944명을 양성하였다.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의 수리용 부품 확보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의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1998년에도 18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농기계 제조업체나 사후봉사사업소의 수리용 부품확보 현황을 신속히 파악, 공급할 수 있도록 부품관리 전산망을 확대 설치하였다.

또한 봄철과 가을철 년 2회 전국농기계 순회수리봉사를 실시토록 하여 영농기 이전에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봉사 해 줌으로써 적기 영농에 차질없도록 하고 있다.

<표 2-2-28> 농업기계 사후봉사 지정업소 설치현황

(단위 : 개소)

	'94	'95	'96	'97	'98
도 단 위	40	35	34	34	37
군 단 위	889	897	903	948	992
면 단 위	2,237	2,155	2,096	2,099	2,130
계	3,166	3,087	3,033	3,081	3,159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업기계의 운전조작과 정비능력을 배양하여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 농업기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업기계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단위인 농촌진흥청에서는 교관요원 및 수리기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교육하고, 도단위 농업기술원에서는 기계화영농사와 시·군지도사를 중심으로 대형기종을 포함한 기종별 전문훈련을 실시하며, 군단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녀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조작훈련 및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계 생산업체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정밀기종에 대한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훈련시설 및 장비의 확충으로 기술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22억 3,400만원을 보조지원(국고 11억 1,700만원, 지방비 11억 1700만원)하여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훈련용 농업기계 220대를 공급함으로써 1998년말 현재 훈련용 농업기계 4,997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표 2-2-29>

**농업기계 기술훈련 실적**

(단위 : 천명)

	'94	'95	'96	'97	'98
계	77.6	86.4	184.9	194.8	214.4
전문기술인력	4.6	4.3	3.8	3.0	3.6
부녀자	5.1	5.0	5.4	5.2	5.2
실수요자	67.9	77.1	175.7	186.6	205.6

자료 : 농림부 식량생산국

**(2)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농업기계는 사용하는 기간이 짧아 농기계를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고장 예방과 내용연수 연장의 관건이 됨에 따라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1995년도부터 5호 이상의 농가가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를 80% 보조지원하여 설치하기 시작하여 1988년도에 2,541개소의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함으로써 1998년도까지 6,177개소를 설치하였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에 대하여도 '91부터 80% 용자 지원하여 보관창고 설치를 지원하기 시작하여 1998년도에 37개소를 설치하였다.

(농업기계자재과 기계사무관 박상민)

**라.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농업기계를 지정·고시하고 생산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1994년 11월 11일자로 「농업기계화촉진법」을 개정하여 신기술 농업 기계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요령을 1995년 7월 6일자로 고시하였다.

1999년 6월까지 지정·고시된 신기술 농업기계는 유도케이블식 과수무인 방제기 및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등으로 현재까지 11종이 개발되었다.

<표 2-2-30>

신기술 농업기계 주요 특성

농기계명	제조업체명	형식	주요특성
무인자동방제기	중앙공업(주)	배터리 구동형	온실내부 또는 노지에서 유도선을 따라 무인자동주행하면서 방제작업 실시
원거리용 고성능방제기	(주)한성농산 기계제작소	견인 및 탑재형	농약살포장치외 상하, 좌우 등을 원격 조절하여 과수, 벼, 감자 등의 방제작업 실시
채소자동접목기	(주)유풍기연	호접형	수박등 채소류를 자동으로 접목하고 클립핑
과수형 승용관리기	아세아 산업공사	4륜구동형무한궤도형	전·후방의 동력취출축과 작업기 부착장치를 이용 여러가지 작업기를 부착하여 병해충 방제등 10여가지의 과수원 관리작업 실시
벼섯자동 천공접종기	(주)한농정공	4조식	원목을 이용한 벼섯재배시 천공, 종균 접종, 마개봉합작업을 일관자동화
벼 품위 자동판정기	쌍용기계 산업사	탈망정선식	소량의 벼를 이용 체현율과 설현미율을 정확히 자동계측하여 벼 품위 판정의 정밀도를 향상
승용관리기 (논용, 밭용)	아세아종합기계(주) 중앙공업(주)	승용형	승용관리기 본체에 여러 가지 작업기를 부착하여 논농사와 밭농사에 이용
자동관수분배기	보경산업	무인 자동형	양수기에 연결하여 관수예약일, 관수시간, 관수주기 및 관수 토출구를 작목과 생육상태에 따라 임의로 선정하여 무인 자동형으로 급수 가능

농기계명	제조업체명	형식	주요특성
종자봉입기	화성농산	공기흡입식	작은종자를 종이테이프로 봉입하여 파종함으로써 50% 종자 절감 가능
유도케이블식 과수무인방제기	아세아 산업공사	무한케 도무인 자주식	지하에 매설된 유도케이블을 따라 무인주행하면서 방제 작업할 수 있어, 농업인을 농약중독위험에서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센터를 이용하여 정상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주행 및 방제작업이 자동정지
벼도정수율 자동판정기	쌍용기계 산업사(주)	종합판 정식	제현율, 현백율 및 도정수율을 자동으로 동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로서,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 현미기, 정미기, 선별기 등의 단위기계를 농산물검사표준계측법의 기준에 맞게 개발·개량 미곡종합처리장 등에서 사용하여 고품질의 쌀생산 의욕 고취, 도정수율관리에 따른 양곡손실 예방이 가능

#### 마. 농약의 수급관리

전체 농약품목수는 '98년에 약효·약해·독성·잔류성 등 안전성이 확인된 신규 농약 56개 품목을 추가 등록함으로써 '97년 734개에서 790개로 늘어났다. 농약의 소비는 최대 소비량을 보인 1991년의 27,476톤에 비해 19.6%가 감소하였으며, 전년보다는 8.6% 감소하였다. '97년에 비해 원예용의 소비량이 14.1% 감소한 반면, 수도용은 벼멸구 등 각종 병해충방제로 인하여 전년대비 3.4%가 증가하였다.

<표 2-2-31>

연도별 농약 소비상황

(단위 : 성분량, 톤)

연도별	계	수도용	원예용	제초제	기타
'91	27,476	9,254	9,719	5,631	2,872
'94	26,282	5,512	12,606	5,506	2,658
'96	24,641	5,526	10,490	5,962	3,116
'97	24,814	6,526	9,967	6,043	2,278
'98	22,103	6,749	8,559	5,116	1,679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약의 공급은 농약판매 자율화계획에 따라 1990년부터 농약제조업체가 연간 수요량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농약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1998년 총 수요량의 35%정도는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이 농가로부터 신청받은 수요량 전량을 제조업체와 일괄 구매계약을 맺어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65%정도는 시판상을 통하여 공급하였다.

(생산지원과 농업사무관 김진진)

바. 종자의 수급관리

주요 식량작물 우량종자 공급의 생산은 농업생산성 향상의 기본이 되고 있지만, 채산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주도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70년대초까지는 각도가 국비 보조로 원종을 생산하여 독농가에 무상으로 채종농가와 일반농가간에 자율교환 방식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채종종자 전량이 교환되기 어렵고 종자의 생산, 정선, 저장방법의 낙후로 품질이 떨어져 종자갱신 효과가 미흡하였다.

주요 식량작물 우량종자의 원활한 수급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75년부터 종자기금을 설치하여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 5개 곡종의 종자를 저가로 생산하여 수요농가에 직접 공급하고 있다.

'98년도 현재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종자 24,458톤을 생산하여 수요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벼종자의 24%, 보리 21%, 씨감자 27%, 옥수수 42%,

콩종자의 9%를 갱신하여 식량증산에 기여하고 있다.

<표 2-2-32>

연도별 보급종 공급량

(단위:톤)

	계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
'76	9,976	933	745	6,191	-	107
'80	4,056	2,035	275	412	886	448
'90	15,199	8,265	2,139	4,047	442	306
'95	18,629	9,021	1,548	7,476	188	396
'98	24,458	12,620	1,477	9,665	194	502

자료: 식량생산국

<표 2-2-33>

곡종별 증수율

(단위:%)

벼	보리	감자	옥수수	콩
106	112	150	165	110

자료: 식량생산국

(농산과 농업사무관 이재현)

사. 비료의 적정공급 및 가격안정

(1) 농업용 비료 소비량

'98년의 농업용 비료 총소비량은 성분량 기준 860천톤으로 이는 '97년 882천톤의 97.5% 수준이며, 비료 소비량을 성분별로 보면 질소질 447천톤(52%), 인산질 187천톤(22%), 가리질 226천톤(26%)으로 나타났다.

<표 2-2-34>

비료 소비량 추세

(단위 : 성분량/천톤)

		'90	'96	'97	'98
3요소별	질 소 질	562	456	446	447
	인 산 질	256	209	199	187
	가 리 질	286	243	237	226
계		1,104	908	882	860
단복비별	단 비	333	241	228	232
	복 비	771	667	654	628
ha당 소비량(kg)		458	424	421	406

자료 : 농림부 식량정책국

비료 공급체계는 '88년 1월부터 정부의 비료판매가 자율화 조치에 따라 종전에 정부에서 취급하던 비료 공급업무가 농협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다.

'98년 농협취급 비료의 공급량은 801천톤으로 전체 비료 공급량 860천톤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7%(59천톤)는 시판으로 공급되었다.

(2) 농업용 비료가격 안정시책 추진

농업인 영농비 경감과 비료가격 안정을 위하여 '62~'87년까지는 정부가 비료가격을 결정하고 비료공급에 따른 판매가격 차손을 비료계정에서 부담 하였으나, '87년 『비료산업개선대책』에 따라 '88년부터 비료판매 자율화를 실시하고 비료의 생산 및 판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비료의 품질개선을 유도하였고, 비료판매 원가절감을 위하여 '89년 10월부터 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비료가격 인하효과를 가져온 바 있다.

비료 판매가격은 '88년부터 자율화하였으나 '90년 8월에 발생한 걸프전으로 비료원료인 나프타 등의 가격이 급등하여 국내비료가의 대폭 인상(25%)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 부담경감과 비료 공급가격 안정을 위하여 '91년부터 농협취급 비료는 구매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농업인에게 판매하고 판매가격 차손을 매년 재정에서 보전해 오고 있다.

('91~'98년 지원액 : 5,170억원)

<표 2-2-35> '98 주요비종별 대농업인 판매가격(20kg당)

(단위: 원, %)

비종별	구매가격(A)	판매가격(B)	차액(C)	보조율(C/A)
요소	6,466	5,300	1,166	18.0
용성인비	5,642	3,650	1,992	35.3
이목작복합비료	6,742	5,800	942	14.0
일모작복합비료	6,938	5,500	1,438	20.7
평균	6,466	5,173	1,293	20.0

주: 평균은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체비종(20종)의 평균임  
 자료: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계자재과 농업사무관 김철)

## 제4절 고부가가치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 혁신과 정보화

### 1. 농업기술혁신

#### 가. 개요

우리나라 농업기술개발사업은 농특세 재원을 활용하여 산·학·관·연 협동 연구를 추진하는 농림기술개발사업과 민간참여가 어렵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농업기반기술을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국가연구기관을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는 공공기술개발사업, 두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은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중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은 영농·영립 현장에서 재배·사양·생산기반·기계·시설·유통·가공·생활·환경·정보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애로기술을 산·학·연 협동으로 개발하는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와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특수농법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농업인개발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첨단기술개발사업은 생물·물리·화학·기계·전자·생명공학·환경공학 등을 응용하여 생산성의 향상, 농림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개발과제와 정부정책상 긴요한 기술을 일관 연구개발하는 기획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통한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연구기관을 통하여 추진하는 공공기술개발사업은 경상연구사업과 공동연구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경상연구사업은 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연구를 실시하는 기본연구와 작황시험 및 위탁시험연구로 구분된다.

또한 공동연구사업은 신기술 및 농자재를 개발하는 대형공동 연구와 선진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국제공동연구, 중앙과 지방연구기관이 지역적응성 검토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신품종 개발 공동연구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 나. 농림기술개발사업

'98년도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개공모한 결과,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는 216과제, 첨단기술개발과제 379과제,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43과제, 기획연구과제 28과제가 접수되어 기술개발과제관리 전문기관인 농림기술관리센터의 3단계 평가와 농업과학기술정책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는 73과제, 첨단기술개발과제는 91과제,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11과제, 기획연구과제 10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농업인개발과제는 총 358과제가 접수되어 농촌진흥청의 3단계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138과제가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98년도에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이에 따른 투자소요 및 투자리스크를 적극 분담·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벤처형 중소기업기술 개발 지원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하였다. 본 제도는 연간 300억원 이상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10개 정부부처와 8개 정부투자기관이 R&D 예산의 일정부분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또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은 '94년 말부터 시작하여 '98년 말까지 총 1,261과제를 선정 지원하였으나, 이중 '98년 말까지 완료된 과제수는 총 294과제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활용 중인 과제가 43건,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중인 과제가 201건, 영농현장적용 및 정책자료활용 과제가 16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특허출원 313건 특허등록 59건에 이르고 있다.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계약을 체결한 기술개발과제는 총 14과제로서 우수과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2-36>                      **기업체 기술이전 우수과제 내역**

과    제    명	주관연구기관	기술이전기업체	기술료징수액
○ 온라인 컴퓨터 건조제어기 개발	안동대학교	영농농기기제작소	11,335천원
○ 축산분뇨 액비처리를 위한 연속 발효시스템 개발	(주)과학축산	(주)우진테크	52,740천원
○ 고추공동집하 및 자동화처리시설 개발	상주산업대	신흥기업사	9,000천원
○ 식이버섯 자실체 및 균사체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포천중군배양소	포천버섯개발	기술료감면
○ 밀납의 제법과 활용에 관한 연구	농협전문대	마천농협	기술료감면
○ 솔잎흑파리 방제용 자동수간주사기 개발	임업연구원	남산엔지니어링	22,200천원
○ 다목적 승용관리기 본기 및 작업기 개발	대동공업기술연구소	(주) 대동공업	450,000천원
○ 양돈장에서 간이휴대용 돼지생체징육량 측정기 개발	한국양돈연구회	(주)메디슨	33,500천원

한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성과활용 활성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기술개발 연구자 및 활용자에게 시상을 통하여 연구개발 동기를 유발



하고 우수기술의 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제도를 제정·시행하였다.

제1회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시상식을 '98.7.10 농촌진흥청 연찬관에서 기술개발 관련 연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분야 우수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과학기술부장관 표창 3점, 농림부장관 표창 10점 총 20점을 수여하고, 성공사례를 발표하였다.

(환경농업과 사무관 이상혁)

## 다. 분야별 농업기술개발

### (1) 벼 안정생산 기술개발

국내의 벼 재배면적은 '93년에 1,136천ha에서 '98년 1,059ha, 2004년에는 920천ha로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업위주의 성장전략 및 기상이변 등의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한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고품질 다수성 벼 품종 개발을 위하여 재래벼의 유전병 탐색 및 미질관련 특성 유전자 분석,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에 의한 벼 육종효율증진, 벼 유전자지도와 유전자 정보 전산망 구축, 반수체 육종에 의한 신품종 조기육성 및 약배양 분화 효율증대기술 개발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벼 품종육성 연구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92년 이후 수량 500kg/10a 이상인 양질 다수성 벼 54품종을 육성하였으며 '98년에도 극조생종인 운두벼, 단간 내도복성인 수라벼, 직파적응성인 광안벼, 10a당 727kg을 올릴수 있는 초다수성이며 복합 내병충성인 안다벼, 중만생 내도복성 찰벼인 동진찰벼 등 13품종을 개발하였다.

계통명	품종명	주요특성	수량(kg/10a)
수원427호	수라벼	중생, 양식미, 내도복성	552(103)
수원429호	광안벼	중생, 내냉성, 직파적성	543(102), 직파517(103)
수원431호	안다벼	중생, 초다수성, 복합내병충성	727(100)
진부 25호	운두벼	극조생, 내냉성, 내도복성	512(106)
익산420호	호안벼	중만생, 담수직파용, 양식미	539(102)
익산425호	동진찰벼	중만생, 찰벼, 내도복성	549(102)
익산426호	미향벼	중만생, 양질다수성, 향미	557(105)
운봉 19호	인월벼	조생, 내냉성, 양식미	537(104)
밀양138호	화봉벼	중생, 내도복성, 내병성	552(103)
밀양149호	농호벼	중만생, 직파적성, 내도복성	562(104), 직파530(102)
밀양151호	만안벼	조생, 내만식성, 소득작물후작단기성	530(110)
영덕 22호	원황벼	중생, 양질, 내도복성	551(106)
상주 19호	상미벼	준조생, 양질, 내냉성	531(102)

벼 안정생산을 위해 초다성벼의 다수확 재배기술을 확립하였으며, 생육 시기별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도와 유형을 심층분석하고 내도복 및 내재해양질다수성 벼품종에 대한 선발육성으로 기상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2-2-2>

도복에 강한 “수라벼” 생육상황  
(수원 작시 시험포장)

벼 생력안전재배기술 확립을 위하여 오봉벼, 주안벼, 동안벼 등 직파재배 적품종 17품종을 선발하고, 동력살분기 이용 파종, 파종전 침종방법, 파종 후 낙수 및 배수로 설치, 답수직파 전용약제처리기술 등을 확립하여 입모 향상, 도복경감 등의 재배안정화로 노력 27%, 쌀생산비 9.5%를 절감하였으며, 어린모 한계일수 설정에 의한 안전성을 향상하였고, 벼 이앙과 동시에 제초제를 살포할 수 있는 승용이앙기 부착제초제 살포장치를 개발하여 생력효과를 도모하였다.

## (2) 발작물 고품질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발작물은 신선한 먹거리 제공, 농지의 효율적 이용, 고부가가치 작물의 생산과 벼보리 이모작 재배에 의한 식량자급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 농촌 진흥청에서는 그 동안 발작물의 용도별 고품질 품종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98년에는 도복에 강하고 찰성이며 백도가 높은 진미찰쌀보리, 조숙 내도복성 양질 단원보리 등 보리 4품종과, 제분율이 높고 양질 다수성이면서 생면특성이 우수한 진품밀 등 밀 2품종, 2모작 작부체계에 적합한 장류용 새울콩, 유색이면서 내탈립 제과용인 흑대 풋콩1호 등 콩 7품종, 안토시아닌함량과 항산화활성이 높으면서 육색이 자색인 자미 등 고구마 3품종, 옥수수1종, 메밀1종, 참깨3종, 들깨3종, 땅콩1종 등 총 29품종을 개발 보급하였다.

발작물의 재배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식량의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 답리 작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한성이 강하고 찰기가 있어 식미가 뛰어난 찰쌀보리를 개발보급하여 보리재배 한계선을 대전이남에서 경기·강원지역까지 북상시키는 한편, 논에서 조생종벼를 재배후 보리는 찰쌀보리를 재배하는 작부체계와 이를 생력화하는 대단위 기계화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파종·수확노력을 64% 절감하였고, 생산된 찰쌀보리는 소포장 판매하여 보리생산 소득을 83% 증대시켰으며 앞으로 겨울철 푸른 들 가꾸기 운동과 연계하여 보리재배면적을 100천ha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맥류재배 후작으로 재배하는 콩의 잡초방제기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리 쪼 사용기술을 개발하여 잡초발생량 30% 감소, 유기물함량을 13% 증대시켰으며, 맥후작 콩 무경운재배시 제초제 사용방법을 확립하여 잡초방제가를 87%에서 97%로 제초제 살포회수를 2회에서 1회로 절감하였고, 참깨 등의 소립종자 파종을 위해 과립종자 제조기를 개발, 소립종자를 과립화하여 기계파종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를 이용 참깨의 두둑형성+비닐피복+파종+복토 작업 기계화 일관작업체계를 확립하여 수량 8% 증수, 파종·숙음노력 82%를 절감하였다.

### (3)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원예작물은 시설재배가 많고 수출농산물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작목으로 IMF 한파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었으나 국내 소비는 물론 수출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수출 주력작목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작목이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98년에도 원예작물의 우수품종 개발, 생산성향상 기술개발·보급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품종개발에 있어 과수의 경우 과즙이 많고 식미가 우수하며 고품질 여름배인 “조생황금”, 중만생 백육계 고당도 복숭아 “진미”, 조생종 대립 고당도 포도 “탐나라” 등 3품종을 육성하였다.

화훼의 경우 구색이 선명하고 증식력이 우수한 비모란 접목 선인장 “홍실” 등 9품종, 착화성이 우수하고 스프레이절화용 카네이션 “다홍별” 등 5품종, 개화기가 균일하고 꽃잎이 분홍인 국화 “아람이” 등 6품종, 대륜, 조생종이며 종구생산이 유리한 탐나리 “예지” 등 7품종, 그리고 개나리1종, 칼랑코에 3종, 필레 1종 등 총 35품종을 육성하였으며, 채소의 경우 발효과발생이 적은 금항아리 등 참외 2종, 멜론 2종, 호박 1종 등 총 44품종의 원예품종을 개발하였다.

과수경쟁력 제고를 위해 황금배 및 온주밀감의 수확적기 판정용 칼라차트를 개발하였고 문제응애류에 대한 형태학적 분류기법을 개발하여 비검역대상인 점박이용애를 타응애와 구분하여 사과, 배 수출시 검역장벽을 해소

하였으며, 구미사람 기호에 적합한 황금배의 동녹 및 과육 붕괴 방지기술을 개발하여 고품질 상품과 생산 및 수출경쟁력을 향상시켰다.

화훼류 경쟁력제고를 위해 생물반응기를 이용 나리 자구비대 액체배양기술을 개발하여 나리종구 무게를 450mg 에서 2.5g/자구로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양구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던 종구의 국산화 기틀을 마련하였고, 오리엔탈나리 상자재배법을 개발하여 나리의 하우스 토경재배시 발생하는 연작장해, 병해충 발생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CO<sub>2</sub>를 이용한 절화장미 살충기술 개발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살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채소류에서는 시설과채류 수확용 공중이동식 간이운반기를 개발하여 온실내 수확·운반작업의 생력화를 달성하였으며 토마토 양액재배시 리도밀동 양액혼입에 의한 역병방제체계를 확립하였으며 마늘 파종작업의 기계화를 통해 파종노력 및 비용을 절감하였다.

시설원예의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에서는 생산비의 30~40%를 점하고 있는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68개 지역별 난방 적산온도를 산정하여 지역별, 시설종류별, 작물별, 난방연료 소비량을 설정하였으며, 가변공간식 수평커튼을 개발하여 작물이 필요한 최적공간만을 난방함으로써 수량 25%증수 및 난방비용 30%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4) 축산물의 품질향상 및 조사료 증산 기술개발

식생활 변화로 육류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고품질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국내산 축산물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 국내산 1,122천톤중 4.6%인 52천톤이 해외로 수출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축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육류를 생산하여 국내육류의 자급을 향상 및 수출증대 도모는 우리 축산업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료수급은 배합사료 원료의 약 76%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외 곡물가격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

을 받고 있어, 해외 곡물가격 변화에 따른 생산비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사료자급도 향상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축산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한우의 경제형질별 우수계통 조성 및 종모우 선발과 가축개량정보 D/B화 및 인터넷 서비스 실시로 한우개량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한우고기판별을 위한 유전자 감식법을 개발하는 등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축산연구 기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국제 육류유통 및 교역이 안전성과 품질을 중요시하고 있어 국내산 육류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규격육 생산, 육질향상 및 신선도 유지기술 등이 요구됨에 따라 중점관리단계를 설정하여 평가토록 하였으며, 단미사료의 농약잔류량 검정방법 등을 개발하였다.

소 사육기반 유지를 위한 자급 조사료 증산기술 개발에서는 소의 생산능력 향상과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현행 조사료 및 농후사료 급여비율인 38:62를 2004년까지 60:40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부존자원인 벼짚의 사료이용 확대에 역점을 두고 생벼짚 원형근포 담근먹이 이용체계 및 벼짚처리용 유산균 첨가제 개발 등 건조벼짚과 생벼짚 이용기술을 확립하였으며, 보리, 호밀,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등의 사료작물을 3개 권역별로 최적 작목을 선발하였고, 1월 최저 평균기온  $-10^{\circ}\text{C}$  이상 지역인 한강이북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중부지방 담리작용 내한성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연천101호”를 육성하였다.

#### (5)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술개발

농촌진흥청에서는 쾌적한 농촌환경유지와 지속 가능한 환경보존형 농업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경지 토양오염 경감 및 안전농산물 생산 대책을 수립코자 농경지토양에 대하여 비옥도, 중금속, 잔류농약, 미생물상 등을 4년주기로 조사하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COD, NO<sub>3</sub>-N, SO<sub>4</sub>, EC 등을 2년주기로 조사하고 있으며, 공단지역, 고속도로주변 등 환경오염 우

려농경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을 제시하고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또 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관리기술을 확립하기 위하여 밭토양 117천ha를 세부 정밀조사하여 필지별 토양특성을 파악하고, 토양시료 275천점을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였으며, 토양을 필지별로 관리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 중이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환경 정보제공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토지이용면적, 작물재배면적, 작황 및 침수지역 등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정하기 위한 원격탐사기술을 개발하였다.

다수확 위주의 농업기술 개발보급과 시설원에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과다한 농자재 투입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71개군 69개 작목에 대하여 농경지 시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별 기상 및 환경특성을 고려한 표준시비량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보전과 농업생산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농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지렁이를 이용한 우분처리, 논 유기질비료 시용에 의한 농업생태계 환경정화 기술을 개발하였고, 농업생태계의 지표동물 탐색 및 OECD농업환경지표를 개발 중에 있다.



<그림 2-2-3>

축산분뇨 퇴비화 공정

목초액, 천혜녹즙, 아미노산, 한방영양제 등 21종 40품목의 민간환경농업 활용자재와 유기·자연농업 실천농가의 사용기술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벼 논 오리농법에 대한 표준경중법을 확립하는 등 민간환경농업의 활용자재 검증 및 기술체계화를 추진하였으며,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종별 배설량 재정립, 경량기포 콘크리트 이용 가축분뇨 우수 처리기술 개발, 가축분뇨 슬러리에 대한 벼 시용기준 설정 및 남은음식물 발생실태조사와 사료가치분석, 이용기술서를 발간보급함으로써 가축분뇨처리 및 유기성 폐자원 활용기술을 확립하였다.

#### (6)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확립 및 농산물의 안전성 향상

WTO/SPS 협정발효에 따라 수출입 농산물의 검역체계가 강화되고, 농약 저투입 방제기술개발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생산 요구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 정밀조사에 대한 5개년 계획 ('96~2000년)을 수립하여 병해충 발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98년 수행한 77작물 2,908종 병해충을 추가 입력, 총 118,585건의 정보를 제공중이며, 화상병균·수입곡물 함유 잡초종자 등에 대한 검역진단기술을 개발하고, 미국등 23개국에서 수입되는 33농산물 3,240종과 일본등 7개국으로 수출되는 41농산물 2,423종의 수출입 농산물 병해충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새롭게 발생하는 병해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배추무사마귀병의 방제방법 및 저항성 품종선발 등 외래병해충에 대한 신속정밀 진단법 개발, 방제약제 선발, 저항성 품종 선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아인산염( $\text{KH}_3\text{PO}_3$ )처리에 의한 양액재배 상추역병 완전방제 기술, 차아염소산소다에 의한 양액재배 토마토폏마름병균 방제기술 및 화훼류 진딧물 방제용 신제형 농약 「Pin제」개발과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직권등록시험을 긴급 추진하여 들깨잎, 쑥갓 등 6작물 9병해충 12농약에 대한 농약등록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제조용 부자재 안전관리 D/B화 등을 통하여 농약 저투입에 의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였다.



병해충의 생물적 방제를 위해 오이탄저병, 담배들불병 등에 대한 유도저항성 발현연구, 포식성 곰팡이를 이용한 뿌리혹선충 방제법을 연구추진 중이며, 천적을 수집·분류동정하고 인공대체먹이를 개발하여 우수천적의 대량증식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하였고 칠레이리응애를 이용한 딸기 점박이용에 방제 실증시험을 통해 90%이상 방제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7)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농업이용 및 실용화

생명공학기술을 농업에 이용하기 위해 유전자조작에 의한 신기능성 작물 창출과 벼 육종기간 단축을 위한 8,011종의 유전자를 개발하고, 밀양23호/기호벼 RI 164계통의 분자유전자지도를 작성하였으며, 유전자 분리시 중복성제거기술, 유도유전자 선발 기술, 대형 유전자단편 제작연결 등 Genome 연구 기초기술을 확립하여 벼 형질관련 유전자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비선택성 제초제 바스타 저항성 유전자전환 벼를 육성하여 2001년 제초제 저항성 품종으로 등록할 예정이며, 미생물에서 분리한 glucose oxidase 유전자 형질전환 78개체, 기능성물질 생산 유전자 전환작물인 RIP 유전자전환 고추, 토마토바이러스 저항성 계통검정, 혈압상승억제물질 생산 토마토, 잎 지방산 함량이 10% 증가한 오메가3 지방산 엽실들깨 등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유전자전환 농산물의 인축에 대한 위해 가능성과 형질전환유전자의 타식물 유입에 의한 생태계 파괴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입콩에 대한 제초제 저항성 개체검정과 재조합 유전자의 타식물과의 교잡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후 제초제 저항성 벼, 콩 등에 대한 유전자 산물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 센서 등 주변 첨단공학기술을 이용한 우수농기계 개발연구에서는 경운, 정지, 운반, 약제살포, 파종 등 농작업에 근간이 되는 트랙터를 무인자동화 함으로써 타기종의 무인화를 유도하고 농작업의 초생력화와 저비용으로 정밀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GPS, GIS, 영상처리, 무선통신 등을 이

용하여 미래기반기술의 중심이 될 인공지능형 무인자율주행트랙터를 개발하였다

또 대부분 육안이나 중량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하는 청과물의 등급판정체계를 근적외선을 이용하여 당도·산도 등 내부적 요인까지 고려하여 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과일 비파괴 당도판정기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금후 주산단지 선과장 중심으로 시범보급하고 선별적용대상 과종도 사과에서 배, 복숭아, 감귤 등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라. 농업기술 보급

### (1) 새기술·정보의 신속한 제공

#### (가) 지방지도기관에 대한 새기술·정보의 제공

1998년 단행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농촌지도공무원 6,699명중 18.5%에 해당하는 1,239명이 감축되었고, 도농촌진흥원은 1국 19과, 시군농촌지도소는 4개소, 읍면농업인상담소는 534개소가 폐지되었다. 한편 지방농촌진흥기구를 농업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기관으로서의 개념을 도입하여 도농촌진흥원은 도농업기술원으로, 시군농촌지도소는 시군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1997년 1월에 단행된 농촌지도공무원 지방직화와 1998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에 따른 중앙-지방간 사업의 연계성 약화를 방지하고, 지방농촌지도공무원의 현장지도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농업인의 기술지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지도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 지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료로 가공하여 「농촌지도사업 활용자료」를 제작 지원하고, 매주·매월 간격으로 다음주(달)에 농업인에게 보급·지도할 핵심기술지도내용을 전산망을 통하여 전 시군에 동시 제공하고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다.

(나) 농업과학기술지원단 편성으로 현장애로기술 지원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 교수, 연구·지도관 등 분야별 전문가 82명을 2개분야 10개반으로 편성하여 중앙농업과학기술지원단을 구성하였다. 식량작물, 원예축산 등 분야별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기술 보급,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해결, 농업인대상 전문교육 강사지원 등 일선 지도기관의 요청시, 혹은 영농상 문제점 발생시 현장을 찾아 1998년에는 18회 162명이 지도활동을 지원하였다.

(다) 농업인 한자리 종합상담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

농업기술센터를 농업현장과 가까운 쪽으로 이전하고 조사, 시험, 상담기능을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을 선도하고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독립적 지도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의 유망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특화가 유망한 2~3개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새기술실증시범포를 2ha내외로 설치 운영하고, 농업생산의 기본요소인 토지, 수자원, 기상을 정밀 분석 처방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재해경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에서 필요한 우량종자, 종묘를 조직배양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대량생산 시설을 갖추고 우량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가축의 질병과 임신여부를 진단 처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기계의 운전조작과 고장수리에 관한 실습과 현장순회수리 장비를 갖추고 교육, 실습, 수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여성을 중심으로 생활과학기술, 생활예절, 농업인 건강과 편의시설을 갖춘 생활과학실을 연중 개방 운영하여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영상담실을 설치하여 기술수준, 영농규모 등 개별농가수준에 맞는 심층 상담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농사기술백과 등 농업기술이나 경영관련 정보를 D/B화 하고 농림사업의 홍보, 사업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휴대용컴퓨터 및 CD-ROM에 의한 이동식 상담지도

도 병행 실시함으로써 농업인이 한자리에서 기술, 경영, 생활상담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2-38>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확충 지원현황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94	'95	'96	'97	'98	'99이후	비고
계	397개소 (28,988)	111 (4,556)	115 (5,391)	98 (6,641)	44 (7,474)	21 (3,567)	8 (1,359)	
○ 새기술실증 시범포	121개소 (19,520)	9 (1,335)	9 (1,335)	30 (4,450)	44 (7,474)	21 (3,567)	8 (1,359)	'99까지 완료계획
○ 과학영농시설	276개소 (9,468)	102 (3,221)	106 (4,056)	68 (2,191)				'96까지 지원완료
- 우량종묘생산 시설	67 (5,643)	21 (1,710)	28 (2,394)	18 (1,539)				
- 농기계공작실	69 (2,404)	26 (875)	30 (1,052)	13 (477)				
- 가축질병진단실	60 (1,200)	26 (520)	28 (560)	6 (120)				
- 생활과학실습실	64 (115)	16 (30)	17 (30)	31 (55)				
- 종합검정실	16 (106)	13 (86)	3 (20)	- -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 농촌지도관 김태석)

## (2) 새기술보급 및 지역특화시범사업

### (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 농업기술보급을 위하여 시험연구결과 개발된 새로운 품종, 재배기술, 기계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하여 기술농업의 조기실현과 농가소득증대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기술 시범사업을 전국에 1,426개소(식량작물 6종 352개소, 소득작목 8종 247개소, 환경보전농업기술 10종 817개소, 농촌여성 일감맞기 1종 10개소) 설치하여 새로 육성된 품종과 신기술을 집중 투입 전시하여 농

업인들에게 실증시범하고 생육중기 및 수확기에 인근 농업인들을 다수 참석시켜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대농업인 지도자료로 활용하는 등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였다.

#### (나)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새소득작목을 개발 보급하여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선진농업 기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작목별 주산지 중심으로 13종 342개소 설치운영하여 새로 개발된 기술의 종합투입으로 농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 협업경영, 시설 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생산물의 저장, 가공, 포장, 공동출하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특산품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대외 경쟁력 확보로 수출 농업을 육성한 결과 농가 소득이 인근농가보다 46%가 증가된 408,023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특히 IMF체제에 대응 할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농업기술인 수막하우스, 지중난방, 피복자재 개선 등 난방비 절감 새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인들로 하여금 많은 호응을 받았다.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 농촌지도사 김완석)

(농촌진흥청 원예축산과 농촌지도사 오대민)

### (3) 병해충 발생 및 방제

병해충으로 인한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150개소, 소득작물 병해충 발생 예찰포 50개소와 벼 병해충 관찰포 1,341개소, 보리, 과수, 채소, 특작, 고추 등 기타작물 관찰포 309개소를 설치하여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적기방제 지도자료로 활용하였다.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발생정보를 신속히 농업인과 관계 기관에 제공하여 농업인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발표를 4.17~9.18일까지 총 13회(예보 1, 주의보 6, 경보 6회)에 걸쳐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였다.

금년도 벼 병해충 총발생면적은 1,153천ha로서 전년의 106%, 평년의 61% 수준이며 병해 발생은 전년의 106%, 평년의 56% 수준으로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은 전년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해충 발생도 전

년의 106%, 평년의 65%의 수준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전년에 비하여 벼물바구미는 129%, 흑명나방은 153%가 발생되었다.

<표 2-2-39>

병해충 발생현황

(단위: 천ha, %)

구분	계	도열병	잎집무늬 마름병	흰잎 마름병	벼멸구	이화명충 기타
'98발생면적(%)	1,153	58	358	8	145	584
'97대 비(%)	106	120	100	344	98	109
평년 대 비(%)	61	40	65	17	82	61

금년도 병해충 총 방제면적은 14,150천ha로 재배면적 1,059천ha의 13.4회 방제에 해당되며 전년대비 127%에 해당한다. 특히 벼멸구 발생이 많아 재배면적의 3.4회에 해당하는 3,571ha를 방제하였다. 또한 벼 병해충 방제 현장지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7월부터 9월까지는 쌀생산중앙기술지원단 29명을 병해충방제기술지원단으로 전환하여 4회에 60명을 담당지역 별로 출장토록 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였다. 병해충 방제지도를 위한 대농업인 홍보활동으로는 리후렛 3종 15만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TV·라디오 53회, 신문 41회 및 농업기술지, 농약유통정보 등 전문잡지에도 총 11회에 걸쳐 방제기술을 게재하였으며 연 추진상황과는 별도로 「농작물 병해충의 생태와 방제」팜프렛 1만부를 제작 일선기관에 배부 활용하였다.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 농촌지도사 김상남)

## 2. 농업정보화촉진

우리 농업이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타산업과 타국의 농업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산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하는 새로운 농업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새로운 영농기술개발·보급과 선진화된 농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농림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중점과제는 농업정보화 기반의 확충, 이농자편의 위주의 실용적인 농업정보 개발·보급, 농업경영 및 유통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지원사업, 정보통신 이용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향상 등이다.

### 가. 농업정보화 기반의 마련

정부는 기관간 역할분담을 통하여 정보를 전문화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방지는 물론 농업인이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림수산물관련 기관·단체를 연결한 농림수산물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물정보센터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농림수산물정보망(AFFIS)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확산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홈페이지(주소: <http://www.maf.go.kr>)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별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표 2-2-40>

### 농림수산물정보망(AFFIS) 이용현황

구 분	접속건수(회/월)	이용시간(시간/월)	가입자수(명)(누계)
'94.	9,507	1,559	837
'95.	32,388	5,754	7,020
'96.	87,689	16,031	17,734
'97.	55,011	7,635	36,871
'98.	74,526	10,163	62,037
'99. 6	81,888	13,544	70,440

자료: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농림부를 비롯하여 관련기관·단체별로 농업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나, 정책정보, 통계정보 등이 정보제공기관 위주로 되어 있어 농산물 출하관련정보, 영농기상정보 등 실제 농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사용자 위주의 정보개발 및 정보서비스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경영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현재 17종의 농업경영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켜 예측, 분석, 진단, 의사결정에 이르는 생산·경영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 나. 농업기술정보시스템 구축

농업진흥청에서는 농업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농업정보 제공 항목들을 28개정보 9,100천여건으로 확대 구축하고, 인터넷 웹서비스 정보를 농업기술정보 등 16개분야 49개 정보로 확대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농업기술정보를 작물, 채소 등 14개분야 4,131건에 대하여 CD-ROM을 제작하고 4,100조(작물, 원예, 축산)를 보급하였다.

또한 전화, FAX, 인터넷 통신상담 등을 통하여 농업현장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는 농업기술 알림상설장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진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정보들을 조기에 DB화하여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자 '98 농업기술정보화 사업으로 농작물병해충, 유전자원, 작물 교배대장, 식품 및 사료성분표, 연구기관 홈페이지 제작 및 농업기술전문인력 DB, 농업과학기술도서 및 지역농업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등 12과제에 대한 농업기술정보화 DB를 구축하였다.

또한 농업연구기관과 지도기관을 연결하는 전산정보망의 고속화를 추진하고 연구·지도기관(17기관 1,730명)에 근거리통신망 및 전자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원격영농기술지도 시스템을 연구기관 5개소 및 지도기관 7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주요 영농기술, 현장애로기술에 대한 교육, 상담 및 사례발표, 새로운 농업기술 소개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47회 2,055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술개발보급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전국의 시·군별로 농업 기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농업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농업기상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공중정보통신망(DNS) 및 인터넷, 전용회선 등으로 이용 가능한 벼 병해충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의 병해충 정보를 종합관리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온실내 환경을 컴퓨터 전산망을 통하여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 하는 온실환경제어관리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농업문헌 정보제공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해외 농업문헌정보 1,500종과 국내 농업연구문헌정보 8종 17,000천여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FAO/AGRIS 센타 자료 등 농업과 관련된 국내외의 최신 정보들을 CD-ROM 과 ON-LINE JOURNAL 등을 통하여 컴퓨터상에서 정보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화**

농업·농촌지역에 정보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1998년 1만 3천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1만5천~2만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2004년까지 15만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을 기본과정, 전문과정으로 체계화하고, 기본과정은 지자체에서 주관하여 농촌지역의 학교시설, 시·군청 정보화교육장 등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인이 현지에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과정은 농림수산정보센타 교육원에서 PC이용교육, 영농S/W활용방법 및 기본과정 교관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업계특성화대학의 학생으로 구성된 「농업정보 119서비스」 요원을 선정하여 PC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사용시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이 전화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신청을 하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PC통신환경설정, 농업정보활용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문교육을 2개 대학(강원대, 경상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2-2-41>

농업인정보화교육현황

(단위:천명)

년 도	'97 까지	'98	'99	2000	2001~2004
교육인원	12	13	15	18	100

라. 농산물 유통분야 정보화 본격추진

정보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였다. 농업인 등에게 농산물 시장출하 및 매매의 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공영도매시장의 유통정보망을 16개 시장으로 확대하였고, 소비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부산 등 주요도시의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을 포함한 주요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농림부, 농협, 마이다스동아가 협력하여 농산물특산물판매장인 「우리농산물장터」와 생산자, 유통업체, 직거래상품정보 등 직거래 관련정보를 소개하는 「직거래마당」을 인터넷에 개설하여 농산물 분야에서도 전자상거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농산물 물류센터와 거래소매점인 하나로클럽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출하관리 등의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별 출하분산과 역류방지 등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였고, 산지포장센터와 시범적인 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지와 산지가 연계된 농산물 물류체계 효율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거래되는 농림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등 총 6,748개 품목에 대한 표준코드를 제정하였고, 제정된 표준코드는 전자경매, EDI 등 전자거래 및 유통정보교환에 활용 가능함에 따라 농산물 유통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마. 정보화응용 지원사업 확대

농업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선 영농현장이나 농업행정부문에 응용할 수 있는 각종사업에 대한 정보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래알선, 수출사례정보, 국가별 수입규제, 관세율 등 무역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각종 무역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가축질병을 진단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주요 가축질병에 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검색 관리할 수 있는 가축질병 예찰·방제시스템도 개발 운영중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토양, 지형, 용수, 경지정리 등 농지 및 농산자료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농업지형정보시스템(RGIS)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 바. 농림부 홈페이지 개설·운영(<http://www.maf.go.kr>)

농업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농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농림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농림부 조직·업무, 공지사항, 농림정보마당, 국민과의 대화, 신지식농업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부 조직·업무에는 현재 농림부의 조직별 업무를 알려주며, 공지사항에는 보도자료, 귀농정보, 이달의 농림공무원, 농림부소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농림정보마당에는 정책부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책정보, 통계정보, 관측정보, 병해충정보, 해외농업정보 등을 제공하며, 국민과의 대화 코너에는 국민이 농정당국의 정책에 대한 문의·건의 또는 불편사항 등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국민상호간에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대화마당과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열린농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다.

신지식농업인 코너를 통해 신지식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부 Y2K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추진상황을 나타내는

코너도 개설되어 있다.

농림부 홈페이지는 향후 농림정책정보의 공식 제공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개선·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2-2-42>

농림부 홈페이지 이용현황

구 분	접속건수(회/월)
'97	2,263
'98	10,282
'99. 6	24,726

자료 : 농림부 농업정보통계관실

(농림부 정보화진흥담당관실 사무관 이동원)

(농촌진흥청 기술정보화담당관실 농업연구관 한원식)

## 제 5 절 수급안정과 물류효율화를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

### 1. 농산물유통개혁

'97년 말 한국경제의 IMF관리체제 이행은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국민소득감소에 따른 농산물 수요의 급격한 위축, 재정긴축에 따른 투융자 사업의 축소, 금융긴축에 따른 시설 및 영농자금 금리부담의 가중, 환율인상으로 인한 영농자재가격의 등귀현상 등 제반측면에서 심각한 타격을 미침으로써 특히 시설원예부문은 축산과 더불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의 가계안정을 위해 농산물유통구조개혁이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과는 별도로 전 세계적인 농업정책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즉 농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의 창출이 생산에서 유통부문으로 이전되면서 단순한 농업생산과 전·후방 연관산업과의 연계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유통부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특히 '96년 유통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농정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여건하의 유통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98.3~7월까지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계, 학계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산물유통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98.7.23 대통령 보고 후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가.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IMF체제하에서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농산물만이라도 값싸게 공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산물직거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우선 전국 주요도시 50개소에 대하여 500~3,000평 정도의 규모화된 정기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농·축협 금융점포내 직판장(760개소)개설과 차량순회판매, 산지-소비자매결연확대(1,814개소) 및 인터넷에 전자직거래마당개설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정('98.12)으로 직거래촉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직거래운영자금(110억원)을 특별지원하는 등 직거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4조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로인해 약 1조원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농가소득증대와 소비자가계부담완화에 기여하였다.

### 나. 물류센터 개장으로 유통단계축소 및 물류비절감

지난 '95년에 착수한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98년에는 3개소(양재동, 창동, 청주)가 개장되어 '98년중 8,572억원을 판매하였으며, 특히 이중 창동물류센터는 추석전 1일 36억원 매출로 전체소매유통업체 중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물류센터에서는 기존의 도매시장과는 다른 예약수의거래 및 물류시스템 도입으로 유통단계축소와 물류비절감효과를 제고했다. 포장화된 농산물의 파렛트 적재출하를 촉진하여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시장내 쓰레기문

제도 해결하고 있으며 전산수발주로 거래의 신속성 및 정확도도 제고하고 있다. 이렇게 물류센터가 활성화 됨으로써 출하자 수취가격이 10%수준 상승되고 소비자가격은 15%수준 하락되는 등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아울러 주변상점의 가격인하와 직거래확산 등 간접효과도 가져왔다.

#### 다. 다양한 농산물 가격지지 Program도입

농산물 가격지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계약재배 물량을 '97년 247천톤에서 '98년에는 357천톤으로 확대하여 수집상을 견제하고 농가소득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주요 채소류의 가격을 예시하여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토록 했다.

<표 2-2-43>

주요품목의 예시가격

구 분	배 추	무	마 늘	양 파
원/kg	50	60	1,200	180

또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안정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를 도입키로 하고, '98.5월에는 농·소·상·정이 5cm이하 양파의 거래를 금지하는 유통협약을 맺은데 이어 '98.10월에는 출하조절기획단을 설치하여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유통협약을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유통명령제는 도입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현재 농안법개정(안)에 그 근거를 반영하여 국회상정 중에 있다

#### 라. 도매시장 상장수수료인하

개장 운영되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출하자의 상장수수료를 1~0.5%P 인하하였다. 먼저 가락,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상장수수료를 1%P인하하였고, 대전, 수원, 창원, 청주, 천안, 충주 등 도청소재지 및 주요 지방도시에 소재한 도매시장에 대

하여는 상장수수료를 0.5%P인하하였으며, 또한 구리, 안양, 안산, 익산도매 시장은 상장수수료인하대신 하역비(1.5%P)를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토록 조치하였다.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상장수수료 인하는 연간 300억원의 출하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도매시장법인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등의 간접효과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마. 안전성조사 및 품질차별화 강화

소비자의 안전식생활보장을 위해 안전성조사 대상 농산물을 '97년 58개 품목 3,557건에서 '98년에는 80개 품목, 10,607건으로 대폭 늘렸으며, 조사결과 고지사항 미이행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처벌규정(1년이하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농산물 품질인증을 '97년 85개 품목 17만톤에서 '98년에는 90개 품목 20만톤으로 늘려 농산물의 품질을 강화하였으며, 리콜제도입으로 품질인증 농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한편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을 '97년 399개 품목에서 '98년에는 428개 품목으로 늘렸으며, 798명의 사법경찰 관리운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10,411건의 단속실적을 나타내었다.

## 2. 농축산물 수급안정

### 가.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재배면적의 증감과 기상여건에 따라 풍·흉의 차가 크고, 가격의 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무·배추·마늘·양파·파에 대해서는 재배의향 파종실적, 작황, 가격동향 등 농업관측 정보를 조사하고 동 관측자료를 농업관측협의회에서 심의 분석한 후 농업관측월보를 매월 6만부씩 제작, 배포하였으며, 이를 전산정보화하여 이용자들이 농림수산정보망(AFFIS), 인터넷 등 공중통신망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95~1998년에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채소수급안정사업자금 2,810억원을 조성하여 1998년에 무·배추(봄, 고랭지, 가을), 마늘·양파, 대

과·고추·당근에 대하여 산지농협과 농업인간에 35만 7천톤을 계약재배한 후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하도록 함으로써 성출하기 수급 및 가격을 안정시켰다.

특히 봄배추는 재배면적 증가와 엘리뇨 현상에 의한 작황호조로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26천톤을 수매하여 시장격리하는 한편, 51톤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하는 등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급을 안정시켰다.

<표 2-2-44> 주요 채소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천톤, 백만원)

구분	'90		'93		'94		'95		'96		'97		'98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총계	74.0	28,472	342.2	75,203	61.2	24,914	219.0	60,470	387.4	127,479	289.7	215,559	416.5	301,858
정부수매비축	8.9	17,914	12.0	40,562	-	-	57.6	24,982	1.1	1,234	-	-	-	-
고추	3.5	15,204	7.6	35,769	-	-	-	-	-	-	-	-	-	-
마늘	1.1	1,602	4.4	4,793	-	-	14.6	16,832	1.1	1,234	-	-	-	-
양파	4.3	1,108	-	-	-	-	43.0	8,150	-	-	-	-	-	-
민간수매	42.3	8,805	87.1	24,361	27.9	18,478	76.6	17,969	44.6	47,492	42.5	38,006	33.9	19,367
마늘	20.2	8,093	29.6	17,212	11.3	13,578	14.1	11,566	16.6	13,472	14.1	14,245	8.2	13,721
양파	22.1	712	57.5	7,149	16.6	4,900	62.5	6,403	18.0	4,074	22.4	4,199	25.7	5,646
고추	-	-	-	-	-	-	-	-	10.0	29,946	6.0	19,562	-	-
정부출하조정	22.8	1,753	243.1	10,280	33.3	6,436	3.8	217	98.0	4,300	0.2	353	25.6	1,491
계약재배	-	-	-	-	-	-	81	17,302	233.0	72,300	247	177,200	357	281,000

자료: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농업서기관 김남수)

#### 나. 과실류 수급안정 지원

1998년도 과실재배면적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 포도 등이 증가하였으나 사과재배면적이 감소하여 1997년도 보다 0.4천ha가 감소하였으며, 과실생산량이 생육기 잦은 강우와 수확기 태풍 “예니” 피해로 1997년 대비 12%가 감소한 215만3천톤이 생산되었다.

과실생산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과종의 수확기 가격이 전년 동기



보다 안정세를 보인 반면, 사과·배의 경우 1995년 이후 재배면적 및 생산량 감소, 배의 경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증가 등 영향으로 수확기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주요과실(사과·배)의 정부비축사업 및 민간수매지원을 통해 수급안정 및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단경기 출하조절을 통하여 소비지 가격을 안정시켰다.

(과수화훼과 행정사무관 이주영)

<표 2-2-45>

과실류 가격안정사업 추진실적

(단위 : 톤, 백만원)

구분	'94		'95		'96		'97		'98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물량	지원액
합계	99,349	27,264	216,981	43,910	75,768	18,401	54,763	17,031	1,282	1,923
정부비축 사과수매	273	361	3,060	3,098	1,308	1,770	2,000	2,799	9,850	8,695
민간수매	99,076	26,903	213,921	40,812	74,460	16,631	52,763	14,232	9,850	8,695
(저장용)	14,503	11,644	20,173	15,905	8,150	6,033	5,878	4,535	9,850	8,695
사과	9,397	7,212	15,359	11,225	5,398	4,051	4,219	3,353	6,490	5,089
배	3,355	3,211	2,952	3,270	2,227	1,519	1,038	811	1,360	1,686
단감	1,347	855	1,268	1,141	525	463	621	371	2,000	1,920
참다래	404	366	594	269	-	-	-	-	-	-
(가공용)	84,573	15,259	193,748	24,907	66,310	10,598	46,885	9,697	9,697	-
사과	42,800	7,671	107,694	15,130	34,668	4,642	31,792	5,360	5,360	-
복숭아	4,770	1,125	11,212	1,591	5,026	1,456	2,717	873	873	-
포도	6,276	1,813	27,615	3,536	14,883	2,500	6,204	2,242	2,242	-
감귤	30,727	4,650	47,227	4,650	11,733	2,000	4,320	300	300	-
배	-	-	-	-	-	-	1,852	922	922	-

자료 : 농림부 과수화훼과

#### 다. 축산물 수급안정 지원

쇠고기는 IMF사태 영향으로 '90년이후 연평균 11.6% 증가되던 쇠고기 소비가 '98년에는 14.5% 감소하였다. 산지소값은 환율폭등으로 사료값이 36%이상 인상되어 양축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농가의 심리적 불안요소까지 가세하여, 148만원까지 일시적으로 폭락하여 한우산업기반의 붕괴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98년 소 사육농가 동향은 '89년부터 '96까지 매년 180~190천두씩 계속 증가하였으나 '98년 2,383(천두)로 감소세로 반전하고 소규모 사육농가의 급속한 탈락과 빠른 규모화 추세를 보였다.

'98년 소값안정대책 추진으로 첫째, '98.1월부터 8.31일까지 2,881억원을 투입하여 112,774두를 수매하였으며 재원한도내에서 수매비용 절감으로 수매두수를 증대하고 쇠고기 공급량을 조기에 감축하여 향후 수급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함과 동시에 수매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큰소 수매를 중단하고 6.19일 중소수매(19,925두) 및 7.27 가임암소 수매를 실시하였다. 둘째, 조속한 소값회복을 위해 7.18일 이후 수매육의 방출을 중단하였으나, 산지소값 급등에 따라 안정적 상승세를 유도하기위해 9.3일부터 1일 100톤 수준의 방출을 재개하였고 추석이후 소비감소에 따른 산지소값하락에 대비하여 10.1일 방출 중단후 10월과 11월 산지소값 상승에 따라 11.12일부터 방출을 재개하였다. 셋째, 소비확대를 위하여 슈퍼, 편의점, 식당의 식육판매 유도 등 쇠고기 판매처를 대폭늘려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국세청, 공정위에 1,564개 고가격유지업소 및 21개 가격담합업소명단을 통보하였다.(8.7,9.2) 또한, 축협과 한냉 주관으로 할인 판촉행사개최(8.5~8.15, 9.21~9.27)를 하였다. 이러한 수급안정대책 추진으로 '98상반기중 전년동기대비 11.9%나 크게 감축되었던 쇠고기 소비가 점차 전년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쇠고기 소비자가격 또한 '98.10월에는 전년말 대비 10.2%하락하여 '97년 동기대비 4.8%하락에 비해 상당수준 하락하였다. '98년중 사육두수는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어 '98.6월에서 12월까지 367천두가 감소하고 IMF위기 상황을 한우산업 구조조정 기회로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비 확대와 사육두수 감소등에 따라 큰수소 가격은 8개월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8.3일 1,487천원을 바닥으로 하여 12.31일 현재 2,147천원까지 상승하여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되었다.

돼지고기는 IMF영향으로 국내소비가 위축되어있는 반면 환율급등으로 사료 가격인상과 과잉생산 전망으로 양돈불황이 예상되어 농가사육 불안심리가 팽배해 졌다. 따라서 '98년도 돼지수급 및 가격은 예년에 비해 훨씬 큰 변동주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산지가격안정을 위해 일본수출촉진단을 파견하여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육가공업체에 유통자금 121억원과 비축자금 166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여 산지가격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출하물량조절, 소비촉진홍보, 생산자 교육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였다. 돼지고기 수출은 88천톤으로 전년대비 71%가 증가하여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였고 일본내 수입점유량도 18%로 증가하였다. 돼지고기 수입은 자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급등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한 56천톤에 그쳤다. 유통부분에서는 국내 육가공업체가 전체 도축두수의 54%인 5,720천두를 구매 유통함으로써 향후 유통체계가 부분육, 냉장육 중심으로 변화될 것을 예고하였다. 돼지사육두수는 전업규모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여 '98.9월에는 사상최고치인 7,788천두에 이르렀으나 모돈감축등 영향으로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돼지고기 가격은 비수기, 성수기로 구분되어 가격이 변동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나 '98년에는 수출증가로 인하여 연중가격이 높게 유지되었으며 특히 비수기에도 가격이 급등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1998년도 우유 총수요는 229만 9천톤이며, 이중 228만 6천톤은 국내에서 소비하고, 1만 3천톤은 수출하였다. 공급측면에서 보면 211만 3천톤은 국내산으로 공급되었고, 나머지 28만 2천톤은 수입되었다. 우유 자급률은 88% 수준이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우유소비량은 49.2kg이었다.

1998년말 분유재고(탈지분유·전지분유)는 전년동기대비 8만6천보다 3.5%가 감소한 8만 3천톤이었다. 외환위기('97년말) 이후 경기침체와 계절적 수급 불균형이 겹쳐 분유재고가 증가했으나 '98년말 경제가 안정되면서 다시 감소하였다.

모든 유제품의 수입이 자유화 됨에 따라 탈지분유·전지분유·제조분유·버터·치즈 등은 수입물량이 늘었으나 모조분유는 산업피해 구제조치 및 IMF영향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12.5천톤으로 '96년도 32천톤보다 61% 감소 하였다.

(축산물유통과 이재성 서기관)

(축산물유통과 신대식 사무관)

(축산경영과 이상수 사무관)

## 제6절 농축산물 안전성 제고 및 친환경농업의 기반마련

### 1. 농축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안심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데 있다.

'96년 하반기부터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작한 농산물 안전성조사는 초창기에 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에 충실히 따라주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 되었다고 본다.

금년도 안전성조사의 목표는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의 공급이며, 이를 위하여 분석인력(266명) 및 시설·장비(942대)를 확충하고, 주산단지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물량(27,000점)을 크게 늘려 산지에서의 안전성조사를 대폭 강화토록 하였으며, 생산단계에 적용할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 농업인 지도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 출장소에 간이속성검사기를 보급(80대) 산지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없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안전성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부적합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출하연기, 자율폐기등의 처리방법을 정하여 고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도를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농업인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등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품질 좋은 농산물이 생산·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산업과 사무관 이영구)

## 2.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대책

### 가. 축산식품 가공업무 관리일원화 및 위생검사체계

축산물가공처리법이 1998. 6.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축산식품 가공업무가 13년만에 농림부로 환원되었다. 축산식품 가공업무 관리가 농림부로 일원화 됨으로써 가축의 사육·도축·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에 의한 일관성 있는 위생관리로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생문제 발생시 축산식품위생과 가축방역을 연계하여 역추적함으로써 원인 규명 및 대책마련이 용이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 및 수입축산물의 위생검사를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함으로써 국제협정(WTO/SPS) 및 협상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축(계)장 등의 인·허가 관리형태가 작업장의 설치 허가후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에서 영업의 허가(또는 조건부 허가후 조건이행의 신고)만을 받도록 변경되었다. 축산물의 범위도 기존 「축산물위생처리법」의 수육 및 원유에서 식육(수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으로 확대되고, 축산물작업장의 범위도 도축(계)장 또는 집유장에서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기존 식품판매업소 중 식육판매업소·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소·우유류판매업소·축산물수입판매업소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판매업소로 영업신고 대상이 되었다.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는 축산물의 위생문제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가공하기 위한 작업장별 HACCP제도 등이다. 아울러 도축장 과 집유장에서의 축산물검사를 강화 하기 위하여 검사보조원제도를 도입하고, 축산물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회수(Recall)제도를 도입하였다

축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판매까지(Farm to Table) 일관적·전문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의과학연구소와 국립동물검역소를 통·폐합('98.8.1)한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을 새롭게 설립하였다. 축산물 위생 관리 및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인력 및 시설을 보강하고, 복지부로부터 이관되는 업무를 담당할 인원을 시·도에 전담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가축위생시험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6개지방청포함), 한국식품위생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축산물위생심의위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업체,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 단체 관계자도 위촉하여 축산물관리를 위한 포괄적 관리체제를 구축하였다

(가축위생과 사무관 김서중)

#### 나. 가축질병근절을 위한 방역시책

정부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 '96년부터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일본이 자국내 돼지콜레라 비발생국 선언을 계획하고 있어 200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돼지콜레라를 근절하지 못할 경우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중단으로 우리 양돈업은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되기 때문에 특히 금년의 경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예방접종 100% 실시목표로 현재 특단의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일본은 지난 '93년 이후 동 질병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97년 20건, '98년 6건, '99년도 상반기에 4건의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정부의 '99돼지콜레라 대책은 예방접종 100% 실시 및 현장 확인체계의 확립,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규제강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양돈인의 참여확대를 목표로

첫째, “돼지콜레라 근절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는 캠페인 운동 및 교육·홍보를 강화, 양돈인의 공감대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하였고

둘째, 돼지콜레라 예방약의 공급을 과거 농가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괄 지원하여 왔던 방식을 개선하여 예방약 쿠폰제를 시행, 농가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정부공급 예방약 물량도 '97년 37%에서 '99년 100%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돼지콜레라근절사업단”을 설치하고 지역담당관 180명을 지정, 현지 점검체계를 강화하여 전 양돈농가 23천호 현황을 전산입력하고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돼지 혈청검사 40만건을 실시중에 있으며, 혈청검사 결과 예방접종을 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하여는 100만원('99. 7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하여 '99. 6. 14부터 예방접종 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돼지는 도축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도 강도 높은 근절대책 추진결과 상반기 예방접종 항체양성율(88%)과 예방접종율(82%)이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99하반기부터는 상반기 근절대책 추진실태 분석결과에 따라 예방접종율이 낮은 10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15천호에 대하여 시장·군수 책임하에 예방접종반을 편성,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강도높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등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축위생과 사무관 김창섭)

### 3. 친환경농업의 기반마련

#### 가. 「친환경농업의 원년의 해」 선포

'98년에는 '97년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그동안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을 중점농업시책으로 추진해옴으로써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업을 이해하고, 농사를 환경친화적으로 할려는 쪽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와 흐름에서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8년 11월 11일 제3회 농업인의 날에 “농업·농촌 재도약”과 아울러 “친환경농업 원년”을 선포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 발전을 다짐하였다.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를 계기로 친환경농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농업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 나.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추진

우리농업을 영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 건전한 작물재배와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방제, 천적이용 등 환경에 부담을 덜 주는 방제방법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토양양분의 누수손실을 막고 작물이 필요로 하는 적정량의 양분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토양정밀검정으로 토양특성과 작물에 맞는 적정량의 화학비료를 공급하고, 퇴비와 완효성 비료 등 환경친화형 비료의 사용을 확대하였다.

가축분뇨는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 등으로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톱밥이나 팽연왕겨 등의 공급을 확대하고,



아울러서 축분퇴비의 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98년에 축분퇴비 20만톤에 대하여 일부 보조지원을 하였다.

다음으로 농업의 자원인 흙과 물을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토양 개량제를 '97년 438천톤에서 '98년에 586천톤으로 확대공급하고, 15,948ha에 객토를 실시하여 토양을 개량하는데 주력하였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산간지 등 규모화가 어려운 지역의 농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80개소의 단지에 시설·자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98년에 신규로 5개소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 나갔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의 하나로마트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97년 18개소에서 '98까지 21개소로 확대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자금을 35억원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소비자의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 **다. 민간의 친환경농업 실천운동 확산**

화학비료·농약의 과다사용을 방지하고 사료·녹비작물 재배를 통하여 조사료의 자급기반을 확충하면서 지력을 높여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다져나가기 위해 민간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흙살리기운동”과 “푸른들가꾸기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분위기를 새롭게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흙살리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98년에 토양검정기 9,400대를 우수작목반 등에 공급하여 농업인 스스로 토양을 진단, 특성에 맞는 시비등의 토양관리를 유도하였으며, 푸른들가꾸기운동을 전개하여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 등의 사료작물과 자운영 등의 녹비작물을 심고 여름철에는 산야초 등을 이용한 퇴비생산을 늘려감으로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를 국내에서 생산된 조사료로 대체해 나가고 토양유기물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서 그동안 수입농자재에 주로 의존해온 우리농업을 국내부존자원을 최대

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 추진하였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98년도 사료 작물 69천ha, 자운영 4천ha를 재배하였다.

## 제7절 농산물 수출확대 및 수입관리

### 1. 농산물 수출진흥 대책

농산물 수출은 그동안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경쟁력강화 시책과 적극적인 시장개척활동에 힘입어 90년대 이후 정체상태에서 벗어나 1994년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고, 1998년에는 16억 3,500만불을 수출하여 UR협상이 타결된 1994년에 비해 30.5% 증가하였다.

수출의 획기적 증가가 어려운 이유는 외국바이어가 원하는 고품질 규격 농산물생산기반이 취약한 상태이고, 생산농가와 수출업체가 영세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워 지속적인 수출이 곤란할 뿐 아니라, 국내 수출품의 규격화, 등급화 및 디자인과 포장 등 상품화 기술에 대한 수출지원 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내의 노력으로 눈에 띄는 수출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수출기반조성을 위해 대내적으로 수출유망품목을 개발하여 규격을 표준화하고 포장을 개선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하는 한편, 1998년까지 수출단지 88개소를 조성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해외 시장 정보조사 및 신속·전파체계 구축과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다.

#### 가. 해외시장 개척

#####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박람회 참가는 제품 판매활동, 기업 이미지 제고, 정보수집, 바이어 확보 등 수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업 활동을 한자리에서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우리 나라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장기적인 수출기반 조성, 바이어 발굴, 세계시장정보 입수 등을 목적으로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왔다. 박람회 참가를 위한 자금, 정보, 인력 등은 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지원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증가하였으며 수출의욕도 상승하였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는 1988~92년 기간에도 9회의 참가실적이 있으나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 이후이다. 지난 6년간(1993~98) 참가 실적은 총 88회에 달한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대상 지역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1993년에는 유럽, 일본, 미주, 한국에 국한되었으나 1998년에는 유럽 2회, 일본 2회, 미주 1회, 중국 2회, 브라질 1회, 호주 1회, 싱가포르 1회, 한국 2회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박람회 참가가 증가하고 있다.

1998년에는 399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품목수는 1,435개로 증가하였다. 박람회 현장에서 외국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통해 이루어진 수출계약액은 1993년 2,656만달러에서 1998년 1억 7,677만달러로 급증하였다. 또한 박람회 참가 규모와 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참가에 필요한 사업비도 증가하여 1998년에는 총 28억원이 소요되었다.

<표 2-2-46>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실적

(단위 : 천불)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참가회수(회)	10	18	15	17	16	12
참가업체(수)	212	299	365	508	470	399
출품품목수(개)	915	1,221	1,322	1,826	1,977	1,435
수출계약액(1천달러)	26,856	76,873	107,609	140,691	164,122	176,773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 (2) 해외홍보

우리 농산물의 특성과 좋은 이미지를 외국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알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홍보사업은 전문성과 막대한 비용이 요구되어 영세한 농산물 수출업자가 이를 담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사업의 기본방향은 주요 수입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수요창출과 이미지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홍보대상 상품의 수출시기를 감안한 집중적 홍보활동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 널리 알려나가는 것이다.

주요 홍보 수단으로 책자, 전문지, 방송, 옥외광고, 리플렛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무역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 유망상품 디렉토리는 1993년부터 매년 3000~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발간되고 있다. 광고사업은 1993년 2회를 시작으로 1998년에는 22회의 광고를 해외유명식품 전문지에 게재하였다. 주요 전문지로는 「International Fruit World」(스위스), 「Her World」(싱가포르), 「Asia Fruit」(영국) 「Nikkei Restaurants」(일본)등을 이용하고 있다. 그밖에 홍콩의 시내버스외벽 광고와 라디오 등 전파매체를 이용한 방송광고도 이용하고 있다. 1996년부터 일본의 오사카, 시부야, 나고야에 TV식 전자 광고판을 설치하여 김치, 청과류, 돼지고기, 인삼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밖에 홍보용 VTR(영·중·일어)을 제작하여 국제박람회를 통해 상영, 배포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한국의 식문화를 소개 하고 있다.

### 나. 농산물 수출지원체제 강화

농산물 수출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원료 구매자금, 유통자금, 시설자금 등을 1997년의 1,986억원에서 1998년에는 3,003억원으로 확대 지원하였으며, 대출절차의 간소화와 서류감축 등을 통하여 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95년 3월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처음 실시한 농수산물 수출보험제도는 1996년 6월에는 보험료 부담액을 50% 경감하였으며, 1996년 10월에는 가격상승위험에 대한 가입대상품목을 종전의 24개 품목에서 전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1998년 7월에는 보상비율을 보험 계약액의 60%에서 70%로 확대하였다.

이 결과 농수산물 수출보험의 계약체결 실적은 1997년도에 483억원에서 1998년에는 68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1998년도에 「농산물수출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한 결과, 총 258건에 달하는 수출애로 사항을 발굴하여 장단기 해소대책을 마련·추진하였다.

(무역진흥과 사무관 남동익, 윤명중)

## 2. 수입관리

### (1)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시장접근물량 64개 품목중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18개 주요품목은 국영무역으로 수입관리하고 있으며, 연유, 전지분유, 참기름, 밤, 대추등 5개품목은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동 품목에 대한 수입은 국내 생산시기, 생산량, 유통가격 등 국내 수급 상황을 감안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수급안정과 수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이들 품목의 수입으로 발생한 수입이익금은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에 각 품목관련 기금에 납입토록하여 관련품목의 경쟁력제고사업에 재투자토록 하고 있다.

국내생산이 부족하여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종우, 종계, 사료용대두, 사료용옥수수 등 10개 농업용원자재 품목과 국내 가공산업 원료로 사용되는 식용옥수수, 식용대두, 맥주맥, 참깨 등에 대하여는 국내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량을 저율관세로 수입토록하여 국내 관련산업을 보호하였다

## (2) 수입관리 운용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고율관세를 부과 하여 수입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특히 관세화 대상품목인 땅콩, 메밀 등 60개품목에 대하여는 수입물량과 가격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자동적으로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므로써 국내의 시세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수입을 막도록 하였다.

이미 자유화된 품목중 저가로 수입되는 당면, 표고버섯, 고사리 등 13개 품목에 대하여는 최고 90%까지 관세를 인상조정(조정관세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였다. 특히 모조분유에 대하여는 산업피해구제 제도를 활용하여 그동안 수입증가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하고 있다.

(무역진흥과 사무관 황인용)

## 제 8 절 농촌활력증대 및 농업인 복지증진

### 1. 농촌생활환경의 지속적 개선

#### 가. 정주생활권 개발

정주권개발사업은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과 함께 주택 등 생활환경을 마을단위로 집중 개발하되,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중심마을 위주로 신규택지 개발 또는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지구당 2~3만평에 100~300호 규모의 현대식 기반을 갖춘 마을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가 가능한 마을에 대해서는 일반정주권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생활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1998년에는 총예산 2,826억원(국고 68, 지방양여금 1,509, 지방비 642, 융자 607)을 투입하여 일반정주권개발사업으로 270개면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여 64개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신규 12개 지

구를 포함하여 54개 지구에 대한 마을기반조성을 추진하여 21개 구를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주권개발면과 기반시설이 완료된 문화마을지구에 2천3백동의 농어촌 주택을 개량 정비하였다. 또한 농어촌의 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마을조성과 연계하여 17개 지구에 대한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였다.

2004년까지 전국 771개면에 대하여 정주권개발사업의 제1단계 지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면당 1개소 수준의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화된 농어촌마을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마을 정비는 면당 2~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최고 45억원(보조 30, 용자 15)을, 문화마을조성 사업은 지구당 3년 내외의 사업기간 동안 35억원(보조 20, 용자 15) 수준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지역의 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문화마을과 연계하여 지구당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나. 농어촌도로 확·포장

<표 2-2-47>

도로포장 현황

(’95년말 현재)

구 분	총 연 장(km)	포 장 도(km)	포 장 륜(%)
고속도로	1,825	1,825	100
일반국도	12,043	11,993	100
특별시·도	14,082	12,759	91
지방도	12,925	9,853	76
시·군도	29,439	19,958	68
농어촌도로 (’96년말)	62,459	14,077 (15,398)	23 (25)

자료 : 1996년 「건설교통통계연보」(농어촌도로는 내무부 제공)

낙후된 농어촌도로를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의 농어촌도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농특세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농어촌도로 포장률을 1996년 25%에서 2004년에는 47%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표 2-2-48>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

구 분	계	'94~'98	'99계획	2000~2004
사 업 량 (km)	17,168	5,515	517	11,136
사 업 비(억원)	44,210	17,185	3,580	23,445

자료 : 내무부 지방재정경제국

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표 2-2-49>

상수도 보급현황(1997년말 현재)

(단위 : 천명)

구 분	총 인 구	급수인구	미급수인구	보급률(%)
○ 도시지역	37,612	35,976	1,656	95.7
- 특별시, 직할시	22,872	22,325	547	97.6
- 도의 시지역	14,740	13,651	1,109	92.6
○ 농촌(군)지역	9,266	3,631	5,635	39.2
계	46,878	39,607	7,271	84.5

자료 : '97 상수도 통계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1997년말 39.2% 수준으로 도시지역(95.7%)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었으며, 특히 면단위 이하에 산재된 자연마을중 상수도 공급을 받은 마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 마을은 우물·하천 등 자연수나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지역 수질오염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다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암반지하수개발)을 1994년부터 추진하여 1998년까지 1,864개소를 개발하였으며, '99년에는 425개소 722억원 투자할 예정이며 2004년까지 5,000개소의 암반관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구 분	추진목표	'98까지	'99계획	2000년계획	2001이후
사업량(개소)	5,000개소	1,864	425	500	2,211
사업비(억원)	8,500억원	3,210	722	850	3,718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 2. 다양한 소득원 개발

### 가. 농공단지 조성 지원

농공단지 개발의 활성화와 기지정 농공단지의 내실화를 위하여 1994년 5월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을 개정하여 1991년 12월부터 중단된 지방비 융자재원에 대한 여신을 재개하였다.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체조립비 납부를 면제시켰으며,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을 1994년 9월과 1996년 5월, 1997년 12월 및 1999년 4월에 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 보완과 지원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2004년까지 312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며, 1999년도에는 2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 나.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과수, 화훼, 축산 등 작목입식과 휴게소, 식당, 농특산물직판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흡수하여 도·농간 교류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농원과 휴양단지, 민박마을 등을 개발·육성할 계획이다.

<표 2-2-51>

농촌휴양자원 개발 계획

구 분	합 계	'98까지	'99계획	2000이후
사업량 (개소)	974	640	21	313
- 휴양단지	22	8	1	13
- 관광농원	544	397	(24)	147
- 민박마을	408	235	20	153
지원액 (백만원)	248,492	152,432	8,800	87,260

주 : 자부담 개발 사업량은 제외, ( )는 계속지구 물량임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 3. 농어업인 복지제도 확충

#### 가. 농어촌 교육여건과 개선대책

##### (1) 농어촌교육환경 실상과 문제점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은 질적·양적으로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이는 농어촌학생의 학습결손을 초래하고 도시학교 학생과의 학력격차를 심화시켜 농어업인 자녀의 도시유학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다.

열악한 교육현실로 단기적으로는 농촌주민의 복지 수준과 영농정착 의욕을 저하시켜 청·장년층의 이농을 심화시켰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더불어 구심점을 약화시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 (2) 농촌교육환경 개선방향

농촌사회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후계세대의 육성이 농정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종합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 (3) 농어촌교육 환경개선 추진상황

#### (가) 농어촌 초·중·고교 학교급식 확대

학교급식은 학교환경 위생관리, 건강교육, 전염병 관리, 건강진단 등과 더불어 학교보건을 실현해가는 가장 중요한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학교보건의 한 분야로서의 학교급식은 성장발육기의 아동들에게 심신발달에 필요한 영양공급과 합리적인 식생활에 관한 지식 및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을 위하여 일정한 지도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집단급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 급속한 성장과 발육이 이루어지고 정신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학령기 아동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므로 학교급식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규칙적인 급식이 이루어진다면 하루의 1/3, 일주일의 1/4, 1년의 1/6의 영양이 학교급식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공급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급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다.

1998년 12월말 현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10,463개교 중 7,256개교(69.4%)이고, 급식학생수는 378만명(46.1%)에 달한다.

<표 2-2-52>

#### 학교급식 실시현황

(단위 : 개교)

구 분	학 교 수 (교)			학 생 수 (명)		
	전 체	급 식	비 율(%)	전 체	급 식	비 율(%)
초 등 학 교	5,688	5,640	99.2	3,834,561	3,315,511	86.5
중 학 교	2,736	828	30.3	2,011,468	232,626	11.6
고 등 학 교	1,921	673	35.0	2,326,880	212,455	9.1
특 수 학 교	118	115	97.5	23,256	21,629	92.9
계	10,463	7,256	69.4	8,196,165	3,782,221	46.1

자료 :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

한편 지역별로 살펴볼 때 농어촌지역의 급식 실시율이 76.8%(3,923개교)이고, 도시지역의 급식실시율이 61.4%(3,218개교)로 농어촌지역의 급식율이 훨씬 높다. 또한 농어업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도서벽지형은 식품비의 전액을 농어촌형은 식품비의 1/3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2-2-53>

형태별 급식 실시현황

(단위: 개교)

구 분		학 교 수 (교)			학 생 수 (명)		
		전 체	급 식	%	전 체	급 식	%
초등학교	도서벽지형	717	713	99.4	75,407	73,327	97.2
	농어촌형	2,515	2,515	100	638,171	613,722	96.2
	도시형	2,456	2,412	98.2	3,120,983	2,628,512	84.2
	계	5,688	5,640	99.2	3,834,561	3,315,511	86.5
중학교	농어촌형	1,224	455	37.2	330,008	76,149	23.1
	도시형	1,512	373	24.7	1,681,460	156,477	9.3
	계	2,736	828	30.3	2,011,468	232,626	11.6
고등학교	농어촌형	651	240	36.9	374,064	45,222	12.1
	도시형	1,270	433	34.1	1,952,816	167,233	8.6
	계	1,921	673	35.0	2,326,880	212,455	9.1

자료: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

(나)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농어촌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각종 문화 및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토록하여 농어촌에 대한 애향심과 문화적 욕구충족 및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1995~2004년까지 총100관(군지역 60, 면지역 40)을 건립할 계획이며, 1995~98년까지 33개관을 건립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총 10억원의 장서구입비 지원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1995~98년까지 648관에 40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54>

공공도서관 지원 추진실적과 계획

		지 원 실 적				'99~2004 계 획	계
		'95	'96	'97	'98		
건립비	개 소	9	9	8	7	67	100
지원	지원액(억원)	90	90	80	50	530	840
자료	개 소	154	160	154	172	-	-
구입지원	지원액(억원)	10	10	10	10	60	100
지원액 계(억원)		100	100	90	60	590	940

자료 :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

(4)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경감 추진상황

(가) 농어업인의 교육비 지출현황

농어촌지역은 열악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높다. 농어가의 교육비 지출은 1988년도에 67만원에서 1994년에 135만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농어가 소비지출중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은 자녀의 도시 유학으로 인한 추가비용이다.

<표 2-2-55>

농어가와 도시가계의 교육비 지출 비교

(단위 : 천원)

	농 어 가		도 시 가 구		도시가구대비 농어가교육비
	총소비지출	교육비(%)	총소비지출	교육비(%)	
1998	6,031	670(11.1)	5,612	405(7.2)	1.65배
1992	10,046	1,041(10.4)	11,303	1,014(9.0)	1.03
1994	13,334	1,350(10.1)	13,685	1,273(9.3)	1.06
1996	17,039	1,735(10.2)	16,745	1,637(9.8)	1.06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나)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경감시책 개요

농림부에서는 농어업인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발전종합대책실천계획』(1989. 4)에 의한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1994년에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용자와 농어촌지역 출신 도시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비롯하여, 기타 자영농과생 급식비지원, 새마을장학기금 설치를 통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56> 농어촌지역의 교육비 부담요인별 비중

	납입금	과외비	교재비	유학비	잡부금·기타
시 지역	38.4 %	54.9	3.7	2.5	0.6
군 지역	46.5 %	28.8	9.7	13.7	1.3

자료: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다)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농어촌 중·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지원 사업은 1990년도에 면지역에 거주하는 중학생 전원과 실업계고교 1, 2학년생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추진하였다.

<표 2-2-57>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정책의 변천

연도	대 상	비 고
1990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고교 1, 2학년생	전액 국고 지원
1991	면지역 중학생, 실업계 고교생	실업계 고교생 3학년 추가
1992	면지역 중 2, 3학년,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중 도서벽지 실업고생 추가 지원 1993부터 지방비 2/3부담
1994	면지역 실업계 고교생	중학생 의무교육 전면 실시 (교육부 지원)
1997	읍·면지역, 시의 개발제한구역 실업계 고교생	읍지역 전체, 시의 개발제한구역 확대 지방비 70%부담

자료: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지원대상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경지소유규모 1ha미만의 영세농가와 이에 준하는 양축가·임가·어가의 자녀로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1990~96년까지 실업계고교생 및 중학생 102만 9천명에 대하여 3,20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7년 이후에는 대상자를 읍지역과 시의 개발제한구역까지 확대하여 18만 2천명에게 984억원을 지원하였다.

<표 2-2-58>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

(단위 : 천명, 백만원)

'90~'92		'93~'94		'95~'96		'97		'98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624	148,038 (148,038)	230	85,308 (28,397)	175	86,805 (28,152)	95	50,663 (15,187)	87	47,746 (14,311)

주: ( )내서는 국고지원액이며 익년 3월의 정산기준임  
자료: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이 사업은 영세한 농어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어 공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농어가의 총 소비지출액중 교육비 비중을 감소시켰다.

(라) 농어촌출신 도시유학생 기숙사 건립

정부는 도시지역에 진학(유학)하는 농어촌출신 학생을 위해 1995~2000년까지 농특세 재원 360억원을 투자하여 각 도에 1개소씩 전국 9개 시지역에 기숙사를 건립중이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교육비(하숙비) 부담경감은 물론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표 2-2-59>

**기숙사 건립 투자계획**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투자계획(억원)	40	60	80	80	80	20
사 업 량(개소)	신규 2	계속 2 신규 4	계속 4	계속 4	계속 2 신규 1	계속 1

주: 1995년 신규지역: 충남(대전), 경남(창원)  
1996년 신규지역: 충북(청주), 경북(경산), 전남(화순), 전북(전주)  
1999년 신규지역: 제주(서울)  
부지 미확보 지역(2000년 이후 착수예정): 강원, 경기  
자료: 문화관광부 청소년기획과

(마)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부양의무자의 자녀로서 대학 및 전문대 등에 입학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어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였다.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추진중인 이 사업은 매년 2만명에게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한도로 지원하여 1994~2004년까지 농특세 재원 총 2,100억원으로 21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표 2-2-60>

학자금 융자 실적

(단위 : 명, 백만원)

	'94	'95	'96	'97	'98	비 고
지원학생	1,724	19,177	19,301	19,936	19,563	
지 원 액	1,713	19,088	19,250	19,394	19,394	

자료 : 교육부 교육진흥과

(5) 농어촌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

(가) 특별전형입학제도의 도입 배경

정부는 도·농간에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여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입학제도』를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995년 「교육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996학년도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나) 특별전형입학제도 시행 성과

1998학년도에는 전국 344개 대학중 315개 대학이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17,508명이 합격하였으며, 이중 16,055명이 진학하였다.



<표 2-2-61>

'98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입학 현황

(단위 : 교, 명)

구 분	실시대학	모집인원	합격생수	진학생수
계	315	18,610	17,508	16,055
일 반 대 학	163	9,568	9,161	8,768
전 문 대 학	152	9,042	8,347	7,287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이 제도는 농어촌발전대책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농어촌학생의 사기진작과 자신감을 고취함으로써 농어촌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농어업인의 농어촌 정착 유인을 제공하고 이농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특별전형제도 시행후 농어촌지역 고교생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2-2-62>

농어촌소재 고등학교 학생수 변화 추이

	1993	1994	1995	1996	1997
학생수(명)	372,920	367,348	378,603	382,473	389,736
증감률(%)	△3.18	△1.49	3.06	1.02	1.90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한종현)

나. 농어업인 후생복지 증진

(1) 농어업인 후생복지정책의 본격적 추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과 농정개혁방안』을 확정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의료공급기반과

연금제도 도입 등 복지현안 사항이 농어촌특별세의 재정적 지원하에 본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 (2) 농어업인 연금제도의 도입

### (가) 농어업인연금제도 도입배경

1960년대이후 급속한 산업화에 영향을 받아 우리 농어촌은 청장년층의 계속적인 이농과 평균수명의 연장 및 직장 퇴직고령자의 귀향 등으로 농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60세 이상의 인구는 1970년대에 총인구의 1.4%에서 1990년도에는 7.7%로 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10.3%, 2021년에는 18.5%로 늘어날 전망이다.

<표 2-2-63> 우리나라 노령인구 증가 추이

(단위 : 천명, %)

	'70	'80	'90	2000	2021
총 인 구(A)	31,435	37,407	43,390	46,489	50,586
60세 이상인구(B)	1,704	2,268	3,320	4,809	9,358
60세 이상인구비율(B/A)	5.4	6.1	7.7	10.3	18.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한편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의 증가는 전통적 대가족 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그에 따른 노인부양여건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노인들은 대부분 자신의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 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이 두드러지는 농어촌지역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 안정적 노후대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 도입경과

정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내에 농어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을 농어촌지역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1994년 3월 14일~5월 4일까지 충남 홍성군내 3개 읍·면에

대한 1차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994년 6월 농어업인연금제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1994 정기국회에 국민연금법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1994년 11월 21일~12월 27일까지 강원 명주, 전남 담양, 경북 예천 지역에 2차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하여 적용대상 관리, 보험료 부과체계, 농어업인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준비단계, 일제신고단계, 전산화일구축 등 단계별로 농어업인연금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98년도말 현재 총 가입자는 222만이며, 이중 농어업인 가입자는 88만 6천명으로 나타났다.

<표 2-2-64> '98 농어업인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 천명)

가입대상	가 입 자				미가입자
	계	농어업인	비농어업인	납부예외	
2,220	2,128	886	696	546	92

※ 미가입자 대부분은 비농업인이며 납부예외자는 학생·군인 등 무소득 가입대상자임.

자료 : 보건복지부 연금제도과

(다) 연금보험료 등 농어업인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확대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매월 보험료 2,200원(최저 등급보험료의 1/3)과 관리운영비 전액을 농어촌특별세 재원으로 2004년까지 지원하며, 보험료의 납부편의를 위해 분기납·선납·납부예외 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연금제도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농어업인을 당연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노령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1995년 시행당시 60세이상 65세미만의 고령농어업인에게 '9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기회를 부여하는 특례노령연금제도도 도입하였다.

<표 2-2-65>

농어업인연금 지원현황 (농특세)

(단위 : 억원)

총소요액	'94	'95	'96	'97	'98~2004
8,000	10	455	598	696	6,241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3)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가) 농어촌의료서비스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의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은 대부분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의 도시집중율은 더욱 심한 편이다.

이처럼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의료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는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2004년까지 4,78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농어촌 군단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읍·면 단위의 보건지소 및 도서벽지 지역의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보강을 위한 진료시설·장비 등의 개선과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의 시설개선 지원(융자) 등 종합적 의료공급기반의 정비·확충 사업에 착수하였다.

(나)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사업 추진상황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기능 확충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에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간 경쟁방식을 도입하여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확충계획과 사업추진 방법을 제시토록 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1994~98년까지 농어촌 공공보건의료기관에 1,801억원을 투자하여 의료기관(병원)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농어촌주민에게 친근감과 친화도를 높이도록 외관을 정비하는 한편, 진료업무의 질적향상, 원거리 주민에 대한 순회진료체계 마련 등 내실있는 진료여건을 구비하여 농어업인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 육성에도 428개 의료기관에 1,305억원을 지원하였다.

#### (4) 농어촌 보건소의 한방진료와 공중보건한의사 제도 도입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질병은 장기간의 무리한 노동에 따른 통증과 관절 부위의 질병이 많아 물리치료의 요구가 높고 한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러한 농어촌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는 1997년부터 농어촌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고 1998년부터 공중보건한의사를 배치하는 『농어촌 보건소 한방진료서비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66> 농어촌보건소의 한방진료실 설치 및 공중보건 한의사 배치계획

		계	1997	1998	1999	2000	2001
한방진료실	사업량	138 개소	48	40	50	-	-
	사업비	1,288백만원	460	368	460	-	-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229 명	-	10	59	80	80

자료 : 보건복지부 한방제도담당관실

#### (5) 의료보험료 부담경감과 급여 확대

지역조합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공동사업은 노인의료비·고액진료비를 직장·공교·지역조합이 공동부담하는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으로 1998년중 농어촌조합에 총 1,077억원의 지원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보험급여비 국고지원 예산의 일정액을 소득수준과 노인인구비율 등을 산정하여 농어촌지역에 유리하게 차등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는 국고차등지원사업의 추진으로 1,182억원을 농어촌조합에 추가 지원하였다.

'98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의료보험법」에서는 농어촌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5%를, 도서·벽지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밖에도 농어촌주민에 대한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노인 단독세대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감면, 노인의 의원급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3,200원(치과 3,700원)에서 2,100원으로 경감, 65세이상 노인의 연중 보험급여 실시 등을 시행하였다.

농어촌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에 대비하여 물리치료실 등을 확충하고, 의료보험 연간적용기간을 1998년 300일에서 1999년에는 330일로 연장하여 시행하며, 2000년부터는 연중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 (6) 의료보험 조직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98.10)

### (가) 조합방식의 실상과 문제점

현재의 소규모 조합운영방식은 직종별·지역별 재정력 격차를 크게 하고 위험분산이나 규모의 경제성 면에서 취약해 조합 운영난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직장 취업과, 퇴직, 거주지 이동 등 자격변동에 따른 조합간 자격관리의 연계성 문제가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누락자와 이중자격자 등도 생겨나, 의료보험의 질서가 문란해져 의료보험조합 통합이 사회 문제화되었다.

### (나) 의료보험조직의 통합을 위한 각계의 노력

정부는 이러한 관리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조합의 재정 안정화와 농어업인 등 피보험자의 의료보험료 부담경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보험 관리조직을 시·도별 조합으로 통합하는 방식과 지역조합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 등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한 각 정당에서도 각급 사회단체 등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농어촌 의료보험 관리체계 개선과 보험료 부담경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나름대로 통합의료보험법안 마련을 추진해 왔다.

(다)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과 통합의 기대효과

그 결과, 전국의 227개 지역 의료보험조합을 통합 일원화하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관리 및 운영을 통합하는 『국민의료보험법』이 1997년 11월 18일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가결되고, 1997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국민의 편익은 우선 시·군조합간 장벽이 사라졌으므로 보험종 없이도 주민등록 신고에 의해 관리될 수 있으며, 여행이나 출장 중 어느 곳에서라도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보험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의료보험료의 징수관리가 전산화되면 자격관리 누락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은 의료보험제도에 있어 상당한 발전과 국민편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료 등의 부담경감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한종현)

## 제 3 편 1999년 농정시책



여 백

# 제1장 1999년도 농업정책 방향

## 제 1 절 1999년도 농정목표

1999년은 IMF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농업을 되살리고, 21세기와 새천년 농업원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한해이다.

지난해에는 IMF한파로 경영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유사 이래 보기드문 집중호우와 태풍이 몰아쳐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생산비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IMF 환란으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 농가경제가 서서히 회복되어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농업은 적지않은 어려움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라경제가 급변 하반기부터 성장세로 돌아설 전망이나 그 효과가 모든 경제분야에 미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농산물 소비위축이 당분간 계속되는 등 농업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식품 소비구조가 고도화·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안전성, 품질 차별화, 유통 및 가공방법의 다양화 등 비가격적 경쟁요소의 중요성이 더해갈 것이며, 생산은 양중심의 공급자위주에서 질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갈 것이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공익적·다면적 기능이 중시되어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농정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가격지지·수입제한 등 보호위주에서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시장지향적 정책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한 토지·노동·자본이 생산요소로 중시되던 산업 사회에서 비교열위에 있던 농업은 지식·기술·정보가 중요시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

회에서는 지식농업으로서의 우위성을 회복할 것이며 농촌은 삶의 질이 높은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농정여건의 변화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농업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99년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하에 농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곡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잦은 재해에 대비한 항구적인 안전영농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둘째, 유통부문의 예산을 대폭 늘이고 산지에서부터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 등 유통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생산자 조직을 적극 육성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산업사회에서 비교열위에 있었던 농업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선도산업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신지식농업을 강화할 것이며,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강화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것이다.

넷째,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수부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에 역점을 둘것이며, '99년말부터 시작되는 차기 WTO 협상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다섯째, 아직 회복기에 있는 농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금리·자금부족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에 대한 농가부채경감대책 확대와 우리농업의 구조적이고 태생적인 소농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21세기에 경쟁력있는 세계속의 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다.

여섯째, 농정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농정개혁과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동장관실』, 『일일명예장관』 등의 제도를 통해 『열린농정』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 제 2 절 1999년도 농정방향

### 1. 주곡자급기반 확충 및 재해대비 안전영농대책

「국민의 정부」는 세계식량수급불안에 대비하여 주곡인 쌀만큼은 반드시 자급해야 한다는 것을 농정의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우선 적정 논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우량농지보전시책을 강화하면서 간척지·휴경논 등을 생산화하고, 쌀농사로도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쌀값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계절진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또한 미국종합처리장(RPC)의 쌀 유통비율을 높이고 『얼굴있는 쌀』유통으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RPC의 비매입 자금을 늘리며 농민들이 원하는 물벼 수매확대를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WTO 협정에 따라 쌀수매 지원금이 축소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이 널리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직접 지불제(Direct Payment) 확대도입을 검토하여 현재의 쌀 약정수매제를 보완할 것이다.

또한 잦은 기상이변과 재해에 대비하여 배수개선과 수리시설 개보수 등 생산기반시설을 조기에 완비하고 병해충과 재해에 강한 품종의 보급을 늘려 농업인의 안전영농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2.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

재정적자의 어려움속에서도 작년보다 77%나 늘어난 농산물 유통부문 예산을 기초로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농산물 유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추진중인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일선 협동조합이 산지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도매시장의 운영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추진중인 물류센터는 현재 개장중인 양재·창동·청주 이외에 천안·군위·전주·용인·성남 등 5개소를 추가로 개장하고, 서울·인천·광주·목포에 4개소를 신규 건설할 것이다.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99년에는 농업인이 참여하는 Farmers' Market 등 20개소를 신규로 지원하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생산자 협동조합간 연계를 강화하며, Internet상에 농산물 통합쇼핑몰을 개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직거래의 비중을 전체 유통량의 12%(4.5조원)에서 '99년에는 15%(5.5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물류비용이 높은 채소·과일류의 물류비를 30% 수준 절감시키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신규로 지원하고, 포장재 구입비와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장비 지원은 '98년 58억원에서 140억원으로 대폭 늘릴 것이다.

과실·채소 등 가계에 영향이 큰 농산물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특히 풍흉에 따라 가격등락이 큰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해 농업관측을 강화하고 유통협약 및 유통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안정시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민생안정에 철저를 기해 경제재건의 기반을 다질 것이다.

### 3. 신지식·친환경농업 적극 육성

산업사회에서 비교열위에 있었던 농업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선도산업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농촌의 정보통신환경이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할 것이다. 신기술개발능력을 갖춘 농업인, 벤처형기업 등에 최고 10억원까지 330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신지식을 창출하고, 지역대학생을 활용한 『농업정보 119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며 『신지식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여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추세에 맞추어 비료와 농약을 덜 쓰는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이를 실천하는 마을을 들녘별로 조성할 것이다.

금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서 비료와 농약을 덜 쓰고 농사를 지을 경우 ha당 52만원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석회와 규산의 토양개량제 공급을 늘려 논과 밭의 지역을 증진시키고 자운영·호밀 등 사료와 녹비작물의 재배를 늘리는 『푸른들 가꾸기 운동』을 확대 추진할 것이다.

#### 4. 농산물 수출 강화 및 WTO 차기협상준비 철저

『도농연대』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내수부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에 역점을 둘 것이다.

돼지고기·화훼·시설채소 등 수출농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자금지원과 수출경영지도를 확대하고 국제박람회 등을 통한 우리농산물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수출애로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수출 과정에서 겪는 기술·자금·정보부족 등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년말부터 시작되는 WTO 차기 농산물협상에 대비하여 통상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이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농업인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상대책반을 본격 운영하고, 현재 진행중인 국제기구들의 준비회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 5. 농가경제안정과 『국민의 정부』농업·농촌투융자계획 수립시행

지난해 추진한 농가부채대책은 옥석을 엄격히 구분하여 실시하여 당초 계획보다 5천억원 적은 9천억원 수준으로 마감하였다.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방지하였으나, 상당수 농가들이 아직도 고금리·자금부족 등으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 금리인하 및 저리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부실경영체의 퇴출·인수지원과 함께 농산물 소비촉진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농가의 경영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농업의 구조적이고 태생적인 소농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여

21세기에 경쟁력있는 세계속의 농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중기 재정계획('99~2002) 선상에서 2004년까지 6개년 중장기계획인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을 확정하고, 범정부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도별·사업별 세부계획을 확정하여 2004년까지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것이다.

1차 투융자의 추진계획에서 나타난 부실과 비효율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가동하여 농업투융자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SOC 성격의 보조는 늘리되, 농업인에 대한 직접보조는 장기저리 융자로 전환하여 농업인의 자생력과 책임의식을 배양하겠으며, 농업용수개발·배수개선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완공위주로 집중 투자하도록 할 것이다.

## 6. 지속적인 농정개혁과 규제개혁

농정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농정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림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착실히 추진하여 농업관련기관과 단체들이 명실공히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봉사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먼저 기능이 중복되는 3개의 농업생산기반정비기관(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을 하나로 통합한 농업기반공사가 2000년 1월에 차질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인력감축 등 경비절감과 조직효율화로 대농업인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협동조합중앙회가 품목별로 농·축·인삼협의 3개로 나누어져 있어 조직과 기능이 중복되고 과잉투자 등으로 비효율이 만연하고 있고, 일선조합은 영세하여 수지맞는 경제사업을 하기에 역부족이고 책임경영체제가 미흡하여 경영부실상태가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3개 중앙회를 통합하여 저비용·고효율 구조를 실현하고, 협동조합의 중심적 역할을 중앙회 중심에서 일선조합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선조합을 농산물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용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동조합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다.

또한 농업분야 총 규제 701건중 지난해에 규제개혁하기로 한 527건(75.2%)이 당초 목표대로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지장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다.

농업투융자 제도를 시장시향적으로 개혁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융자 우선순위 조정, 보조의 단계적 감축, 사업집행체계 개선과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실과 낭비요인을 철저히 방지할 것이다.

현재의 세분화된 개별사업별 자금지원방식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 농업경영체가 필요한 자금을 종합하여 경영컨설팅과 함께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농업금융시스템을 선진화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장관이 직접 농촌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지도와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이동장관실』, 장관은 농업인이 되고 농업인은 장관이 되어 농정을 점검하는 『일일명예장관』, 농정시책이 농촌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정책을 입안한 실무책임자가 직접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현장농정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수요자중심의 『열린농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서기관 이준원)

## 제 3 절 1999년도 농림부문예산 확보

### 1. 1999년 농림예산 편성방향

1999년 농림예산은 농업·농촌제도약을 위한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농림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다음사항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첫째, 농산물 유통비용을 최대한 줄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 농산물 유통개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주요도시에 건설중인 농산물도매시장의 완공시기 단축, 농산물공판장 신규증설, 소비자유통 주체간의 경쟁촉진과 유통경로를 다양화 하기 위한 물류센터 설치, 산지에서부터 농산물을 선별·규격화하고 공동출하와 물류표준화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포장센터 지원, 규격출하·물류표준화 지원, 상설직거래장터와 농민시장건설 운용, 기존유통시설의 보완확대 등 유통개혁의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둘째, IMF위기로 농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한 반면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여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워진 현실을 감안하여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농가부채상환 부담경감을 위해 농가부채경감및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반영하여 중장기 정책자금중 생산성자금을 대상으로 2년간 상환을 연기토록 하였다.

셋째, WTO/IMF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산물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를 증액하고, 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 및 환경농업직접지불예산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우리농산물의 판매망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 판매촉진 사업비를 대폭 증액 하고, '99하반기부터 본격화될 WTO 차기협상을 준비하기 위한 소요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다.

넷째, 기존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는 완공위주로 지원하고 농업기계화 분야는 신규공급보다는 수리봉사·이용을 제고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원예특작생산유통, 농촌생활환경개선 분야에서도 신규시설 투자를 줄이고, 기존농업경영체의 운영내실화에 중점을 두었다.

다섯째, 농림사업의 투융자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생산기반, 유통시설등 농업인프라 분야 지원사업은 보조를 유지하되 개

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농업인들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보조를 용자로 전환하여 부실사업자 선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여 농업인의 사업선택 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경영지도 등을 병행하는 종합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종합자금지원시범사업비 및 경영컨설팅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였다.

## 2. 1999년 농림예산 규모

1999년도 농림부분 예산은 7조7,650억원으로 1998년도보다 0.5% 감소되었다.

기능별·재원별 규모와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1-1> 1999년 농림예산기능별·재원별 규모(2청예산 포함)

(단위: 억원)

구 분		'98예산 (A)	'99예산 (B)	증 감 (B-A)	%
기 능 별	○ 투융자사업	53,275	41,997	△11,278	△21.2
	○ 부담경감 등	7,767	11,039	3,272	42.1
	○ 채무상환	7,931	10,490	2,559	32.3
	○ 양곡지원	6,472	9,812	3,340	51.6
	- 수매지원	1,159	1,828	669	57.7
	- 양곡증권기금	5,313	7,984	2,671	50.3
	○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	-	1,955	1,955	-
	○ 기본적경비	2,629	2,357	△272	△10.3
계		78,074	77,650	△424	△0.5
재 원 별	○ 일반회계	20,965	25,099	4,134	19.7
	○ 농특회계	52,784	48,841	△3,943	△7.5
	○ 재특회계	4,325	3,710	△615	△14.2
양곡관리특별회계		12,837	13,226	389	3.0
농특세관리특별회계		269	495	226	84.0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704	1,289	△415	△24.4

※ '99. 2회추경예산 기준임

<표 3-1-2>

1999년 농림예산 사업별 규모

(단위: 억원)

구분	'98예산 (A)	'99예산 (B)	증△감 (B-A)	%
합계	78,074	77,650	△424	△0.5
1. 투융자사업	53,275	41,997	△11,278	△21.2
○ 생산기반조성	22,894	17,806	△5,088	△22.2
○ 농업기계화	3,638	2,553	△1,085	△29.8
○ 생산 및 유통개선	10,953	11,509	556	5.1
○ 기술개발 및 정보화	2,440	2,388	△52	△2.1
○ 인력육성	4,483	2,782	△1,701	△37.9
○ 농촌소득원개발 및 농가자금지원	4,502	803	△3,699	△82.2
○ 생활환경개선	1,607	1,267	△340	△21.2
○ 임업구조개선	2,640	2,751	111	4.2
○ 기타(경상)사업	118	138	20	16.9
2. 부담경감 및 소득보전	7,767	11,039	3,272	42.1
○ 비료계정적자보전	1,380	1,450	70	5.1
3. 채무상환등	7,931	10,490	2,559	32.3
4. 양곡수매	6,472	9,812	3,340	51.6
○ 수매지원	1,159	1,828	669	57.7
○ 양곡증권정리기금지원	5,313	7,984	2,671	50.3
5.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	-	1,955	1,955	-
6. 기본적 경비	2,629	2,357	△272	△10.3

※ '99. 2회추경예산 기준임

(기획예산담당관실 사무관 석희진)

# 제 2 장 1999년도 주요농정시책

## 제 1 절 농업·농촌 투융자계획

### 1. 투융자계획의 필요성

UR협상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1992년부터 1998년까지 42조원을 투입키로 한 1단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2단계 투융자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WTO협정 이행이 완료되는 2004년까지 농업·농촌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농업·농촌투융자계획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WTO 차기협상과 정보·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 21세기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농촌부문에 대한 투융자사업의 내용과 범위, 집행 및 관리체계를 개혁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시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 농업·농촌의 여건변화

WTO체제가 출범하고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함에 따라 국제기구의 규범이행이 더욱 강화되어 WTO에 제출한 시장개방일정에 따라 품목별로 수입개방을 확대하여야 하며, 각국의 농업정책도 시장지향적 정책과 허용보조정책을 조화시키기는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하는 등 개별정책이 국제규범에 더욱 구속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기술·지식의 발달과 국경을 넘어서는 생산요소의 이동으로 무한경

쟁의 시대가 도래되어 개별 국가의 경쟁력이 새로운 요소에 의해 결정되고, 세계인구의 증가 및 중국의 식량수입국으로의 전환 등 세계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되고, 국가별로 식량안보(Food Security)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국민경제에서 재정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재정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국제화·지방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자율·개방·정보화의 촉진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상응하는 농업·농촌 투융자 운용을 요구받고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어느 때보다 증대됨으로써 농업 생산도 소비지향적으로 변화하고, 과학기술 발달과 정보화로 생산·경영·유통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아울러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농업과 농촌의 다면적·공익적 기능과 이로 인한 경제·사회적 안전망(Safety Net)기능에 대한 인식도 국민들 사이에 새로워지고 있다.

### 3. 투융자 규모 및 지원분야

국민의 정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총투융자규모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 45조 526억원이며, 이중 중앙정부 투융자액은 37조 8,384억원으로 84% 수준이고, 지방정부 부담액은 4조 7,169억원으로 10% 수준이며, 사업자 부담액은 2조 4,973억원으로 6% 수준이다.

<표 3-2-1>

농업·농촌 투융자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1999	'99~2004	비 고
중 앙 정 부(A)	54,902	378,384	
지 방 정 부	8,214	47,169	
기 타	5,136	24,973	
계 (B)	68,252	450,526	
A / B	80.4	84.0	

※ 기타는 주로 유통시설, 도매시장,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등 대형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가 부담하는 사업자 부담액임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의 중점지원분야는 1998년도에 수립한 「농업·농촌발전계획」에서 제시된 중점시책을 토대로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발전 등 6개 분야에 중점 지원된다.

<표 3-2-2> 주요분야별 투융자 규모

(단위 : 억원, %)

투 융 자 분 야	투 융 자	구 성 비
○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유지 발전	149,663	33
○ 건실한 농림업경영체 육성	77,811	17
○ 농림업 부가가치 제고 지원	18,063	4
○ 농림산물유통개혁 및 수출농림업 육성	87,142	20
○ 농촌지역 개발과 농업인 복지지원	81,304	18
○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 등 농업인 경영안정	36,543	8
계	450,526	100

#### 4. 투융자 효율성 제고 방안

정부는 1단계 투융자계획이 경지정리, 수리시설, 유통시설, 농업기계화, 생산시설 투자 등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품목별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과정에 일부 부실과 비효율이 발생하였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서는 이러한 투융자의 부실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첫째, 투융자 지원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개별 경영체에 지원하는 투융자 사업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한 「농업경영종합자금」을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시범사업 실시후 2001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 투융자 지원사업을 시설과 장비공급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유통·환경·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투자로 전환, 1998년 47% 수준에서 2004년에는 60% 수준으로 확대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산

지식농업인과 아이디어농업」육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기 투자된 하드웨어 부문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개발·지원으로 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투융자사업의 평가 및 사후관리체제를 강화하여 주요 투융자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융자계획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고, 농림부 공무원으로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을 구성 사업집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현장모니터링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1단계 투융자계획과의 차이점

#### <1단계 계획>

- 사업별 연도별 재원배분 계획
- 공급자 중심계획
-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

#### <앞으로의 계획>

- 계획범위내에서 여건변화에 따라 재원배분 수정·보완
- 수요자 중심계획
- 소프트웨어 중심의 투자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연호)

<표 3-2-3>

### 분야별·재원별 투융자 사업비

(단위: 억원)

	합 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 타
<b>합 계</b>	<b>450,526</b>	<b>378,384</b>	<b>47,169</b>	<b>24,973</b>
<b>1. 농림업의 공익적 기능 확충</b>	<b>149,663</b>	<b>130,593</b>	<b>15,290</b>	<b>3,780</b>
○ 재해에 대비한 영농기반 정비	50,884	50,854	300	-
○ 농지의 정비 및 관리	62,103	53,336	8,767	-
○ 친환경 농림업의 육성	14,312	11,795	1,859	658
○ 산림자원의 확충	22,364	14,878	4,364	3,122
<b>2. 건설한 농림업 경영체 육성</b>	<b>77,811</b>	<b>71,927</b>	<b>1,986</b>	<b>3,898</b>
○ 교육 및 훈련	9,080	8,936	144	-
○ 농업경영종합자금의 지원	45,628	45,468	160	-
○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23,103	17,523	1,682	3,898

	합 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 타
<b>3. 농림업의 부가가치 제고</b>	<b>18,063</b>	<b>15,842</b>	<b>1,579</b>	<b>642</b>
○ 첨단 농림업기술 개발	14,449	12,556	1,578	315
○ 농림업의 정보화 지원	1,057	947	-	110
○ 농림업 관련 산업의 육성	2,557	2,339	1	217
<b>4. 유통개혁 및 수출확대</b>	<b>87,142</b>	<b>67,959</b>	<b>5,118</b>	<b>14,065</b>
○ 산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	48,826	37,733	351	10,742
○ 소비지 유통기반 조성 지원	11,211	7,283	3,071	857
○ 물류체계, 정보·교육 지원	5,311	4,749	161	401
○ 농산물 가공산업의 지원	1,169	838	-	331
○ 소비자보호의 강화	2,365	1,981	360	24
○ 축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6,628	6,343	33	249
○ 임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	4,169	2,850	282	1,037
○ 농림수산물수출기반 조성 지원	7,463	6,179	860	424
<b>5.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의 증진</b>	<b>81,304</b>	<b>55,520</b>	<b>23,196</b>	<b>2,588</b>
○ 농촌의 다양한 산업 유치	19,965	13,290	5M009	1,666
○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지원	41,404	26,741	14,663	-
○ 농업인의 복지증진 지원	19,935	15,489	3,524	922
<b>6.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b>	<b>36,543</b>	<b>36,543</b>	-	-
○ 농업자금의 원활한 공급 지원	26,488	26,488	-	-
○ 농업인의 부담경감 지원	10,055	10,055	-	-

## 제 2 절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과 양곡관리제도 개선

### 1. 우량농지 보전시책의 지속추진

우리국민의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산지가 전체국토면적의 6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인



구증가 및 경제성장에 따라 비농업 목적의 토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정된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농업생산의 기반인 농지를 적절히 보전·유지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량농지의 보전시책은 근본적으로 일정한 규모의 농지를 양적·질적으로 확보하여 농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존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환경을 보호하여 농지가 농업생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는 물론 진흥지역밖의 농지라 하더라도 우량화·집단화되어 있어 보전가치가 큰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목적으로 활용되도록 그 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도시용토지 수요에 대하여는 농지보다는 산지와 구릉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우량농지의 보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산지활용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산지활용시 자연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산지개발에 따른 비용절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지법시행령을 개정('99. 4. 19)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감면시켜 주는 준보전임지(산지)편입비율을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이와같은 산지활용유인제도를 민간에 적극 홍보하여 우량농지보다 산지를 활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기존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반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인구의 고령화·과소화에 따라 휴경농지면적이 최근 5년간('94~'98) 연평균 42천ha에 달하는 등 농지감소가 타용도 전용등 외부적 요인보다는 농업내부적 요인으로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리경작지정제도를 적극 시행하여 휴경지 생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96년 이후 농업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이용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등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

우에는 처분의무를 부과할 것이다.

'98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4,264명(1,209ha)에게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바 있으며, 특히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후 1년 이내에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에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의 2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조치를 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우량농지 보전시책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법시행령을 개정('99. 4. 19)하여 준농림지역의 농지 보다 보전가치가 크고 농업환경보호에 영향이 큰 농업보호구역에서의 음식점·숙박시설의 설치제한을 강화하였고,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금년에는 이러한 개정법령을 바탕으로 농업보호구역내에서 음식점 숙박 시설 등 농업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들의 설치를 억제하여 농지 및 농업환경을 보호해 나갈 것이며,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토록 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농지과 행정사무관 김덕호)

## 2. 생산기반 확충

### 가. 일반 경지정리사업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지와, 이에 부설된 용·배수로, 농로를 기계화 영농에 맞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편리한 영농을 도모한다. 또한 환지를 통하여 분산되어 있는 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마을 주민들간 공동영농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업농 등 전문농업경영체가 대규모로 영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등 농촌의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부문의 기초 사업이다.

그동안 경지정리사업은 사업비가 저렴한 평야지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 앞으로 경지정리 대상은 급경사 지역, 산간 지역 등 주로 산간농촌지역인데 사업여건이 열악하며 소요사업비가 정부에서 책정·지원하고 있는 예산단가보다 높아 지원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1997년에 경지정리 대상지를 보완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농업진흥지역밖 등 대상지를 정밀재조사하여 대상지를 조정하였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써 쌀 생산비를 줄이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1999년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대상으로 국고 2,649억원과 지방비 643억원 등 3,292억원을 투자하여 1998년 가을에 착수한 14천ha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10천ha를 착수할 계획이다.

<표 3-2-4>

**일반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총면적	총계획	'98까지	'99계획	'99이후
사업량	1,163	800(915)	678(778)	12(4)	110(123)
- 진흥지역	745	665(760)	592(678)	12(4)	61( 68)
- 진흥지역밖	418	135(155)	86(100)	-	49( 55)

주 : 면적은 마무리 논면적 기준, ( )는 구역면적 기준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1984년 이전에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평야부의 우량농지이나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고, 용수로와 배수호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으며, 필지규모가 600~1,200평으로 작아 대형 농기계 작업과 물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필지 규모를 3천평 이상으로 대형화하고 용·배수로를 분리 정비 및 구조물로 현대화하며, 농로를 대형기계통행과 농산물의 운반에 편리한 규모로 확장·정비하는 사업으로써 1994년부터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목표는 200천ha인데, 1998년까지 55천ha를 마무리하였고, 1999년에는 지난 가을에 착수한 12천

ha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등 쌀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5>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98까지	'99계획	2000이후
사업량	200	55	12	133

주 : 봄마무리 기준

자료 : 농림부 농촌개발국

#### 다. 밭기반정비사업

전체 밭면적 76만ha중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품목별 주산단지(과수, 화훼, 채소, 특용작물단지 등)를 중심으로 생산자 단체가 잘 조직되어 있고, 농업인의 사업희망도가 높은 지역 그리고 지형, 경사, 토양, 토심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밭 11만ha를 대상으로 2조 5,794억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1994~1998년에 6,292억원(국고 4,869억원, 지방비 1,423억원)을 투자하여 채소, 화훼, 과수, 특용작물단지 30천ha에 진입도로, 경작로, 용수원 개발, 용·배수로 등을 설치하는 등 밭작물의 생산기반을 정비하였다. 1999년에는 1,550억원(국고 1,245억원, 지방비 305억원)을 투자하여 6천ha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업무 개선을 통한 내실있는 개발로, 밭농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표 3-2-6> 연차별 밭기반정비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목 표	'98까지	'99계획	2000이후
사업량	110	30	6	74
사업비	25,794	6,292	1,550	17,952

자료: 농림부 농촌개발국

## 라. 기계화경작로 확장·포장사업

영농작업은 농기계 확대 보급으로 첨단화·대형화 되어가는 반면, 영농작업의 근간인 경작로는 비포장 상태이기 때문에 쌀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경지정리 대상면적 80만ha안에 있는 주요 농로 22,000km를 확·포장할 계획이다.

1995~1998년에 5,608km를 추진한 결과, 영농시간 단축, 농산물 운반 용이, 생활환경개선,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등 사업효과가 높아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1999년도에는 1,880억원을 투자하여 1,800km를 확장·포장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사업량 사업비를 증액 지원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표 3-2-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단위:천km, 억원)

구 분	총 계획	'98까지	'99	2000이후
사업량	22	5.6	1.8	14.6
사업비	29,262	5,607	880	21,775

자료: 농림부 농촌개발국

## 마.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기타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96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영농기반조성사업으로 최근 계속적인 풍년농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수리답률은 7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용수개발 10개년계획(1995~2004)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리답율을 88%로 제고하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용수개발을 완료한 예정이다.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수혜면적 규모에 따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다. 수혜면적 3,000ha 이상의 대규모 농업용수개발은 경남 하사, 경북 성주, 전북 동화등 3개지구 11,746ha에 추진중이다. 수혜면적 50~3,000ha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은 133개지구 53,270ha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그중 11개지구 2,151ha를 1999년에 준

공할 계획이다.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고, 농지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영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절감, 단위 생산량 증가로 소득 증대 등에서 효과가 크다. 앞으로 2014년까지 235천ha에 대한 방재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며, 수렁논 개량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하배수개선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은 농업용수개발,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자원 확보는 물론 기계화 영농기반구축, 상습 침수 해소, 우량농지 창출 등으로 영농환경개선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1999년에는 시행중에 있는 새만금지구 등 6개 지구에 국고 1,672억원과 농지관리기금 900억원등 총 2,572억원을 투자하여 총공정을 40%에서 48%까지 높일 계획이다.

농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등 수리 시설 12,70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저수지를 비롯하여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11,233개소의 수리시설 중 1966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 38%인 4,316개소이고, 용수로 6만km중 67%인 4만km가 토공으로 되어 있어, 용수로의 콘크리트화 등 시설 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91개소, 지방관리방조제 1,495개소 등 전국 1,586개소의 방조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61년도 이전에 설치된 노후시설이 67%인 1,061개소에 달할 뿐 아니라, 방조제 외측보호 사석의 유실,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재 문짝의 부식 등이 심하여 해일 발생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1999년에는 647억원을 투입하여 77개구의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 3.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기상이변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의 곡물생산이 감소되어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바가 있으며,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와 일본의 농림수산성에서도 인구증가, 농업용수 부족, 환경악화 등으로 생산량 증가 추세가 둔화되어 중·장기적으로 세계곡물 수급사정은 불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양곡의 총수요량 2,000만톤중 1,400만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1,000만톤은 옥수수, 밀, 콩, 중심의 사료용이고, 400만톤은 밀, 옥수수 중심의 식용으로서 소득증가와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사료용 곡물수요가 884백만톤으로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생산되는 612만톤 중 89%인 545만톤은 쌀로서 우리나라의 곡물자급은 쌀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고 밀, 옥수수 등 기타곡물은 수익성이 낮아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

우리의 주곡인 쌀의 공급량은 '98년도에 평년작 수준의 5,097천톤 생산과 전년이월재고 및 MMA쌀 증가로 '98년보다 71천톤이 늘어난 6,095천톤으로 예상되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재고량은 FAO 권장수준인(62일분)을 219천톤 초과하여 안정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해만 흉작이 들더라도 수급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라도 쌀의 자급은 매우 중요하다.

<표 3-2-8>

최근의 쌀수급 현황

(단위 : 천톤)

양곡년도	생 산	수 요	재 고
1995	5,060	5,557	659
1996	4,695	5,225	244
1997	5,323	5,070	497
1998	5,450	5,216	806
1999(P)	5,097	5,112	983

이를 위해 정부는 주곡의 자급의지를 확고히 하여 농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쌀생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해 나가는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하여 농지의 안정적 보전,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을 조속히 정비하고, 재해에

강한 품종·기술개발을 통해 쌀 생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쌀 유통을 개선하여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우량농지의 최대한 보존을 위해서 산업·주택용 토지는 산지와 구릉지 활용을 유도하고 진흥지역내 행위제한 강화 및 대체농지조성비 부과단가 현실화, 농지 불법전용 단속강화 및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여 논 면적을 2004년 기준으로 110만ha 확보할 계획이며, 발작물의 논 잠식을 방지하고 밭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밭기반정비를 '98년 3만ha에서 2000년 11만ha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이변에 대응, 항구적인 안전영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목표 논면적 110만ha를 2014년까지 10년 빈도의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답을 조성하고 농업진흥지역 논 735천ha를 2004년까지 100% 수리답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배수개선 대상지 207천ha를 2010년까지 배수시설을 완비하고, 수리시설을 '98까지 4,816개소에서 2004년 5,411개소로 개보수하며, 노후화된 지방관리 방조제 810개소('98~2002)의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병해충과 기상재해에 강한 양질 다수성 품종을 '98년 38종에서 2004년까 50종으로 개발보급하고, 재배면적 점유비율을 60%('98)에서 80%(2004)로 높여 나갈 것이다.

쌀 주산지 중심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확대설치하고 생산·유통을 계열화하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브랜드 쌀 생산으로 제값받는 쌀 유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RPC를 301개소('98년까지)에서 360개소(2004년)로 확대하고 쌀값의 적정한 계절진폭을 허용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불안한 세계곡물 수급상황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곡물수급 조기경보체제』를 구축, 수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조기경보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곡물비축량 확보를 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분석·발표하고 있다.

(식량정책과 사무관 최병국)



## 4. 양곡관리제도의 개선

현행의 정부수매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매년 750억원씩 추가로 감축되는 보조금의 범위내에서 수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수매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1% 인상시마다 8만석 수준을 추가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풍작시 수매물량을 확대하거나 작황부진시의 가격인상이나 정부의 안정적인 비축미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외관상 단순규격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가격으로 수매되고 있어 소비자기호가 반영되지 못하는 등 양질미 생산 유인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쌀유통의 민간시장 기능을 더욱 활성화하여 WTO 보조금 감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쌀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쌀값 계절진폭 유지를 통한 시장여건 조성과 RPC의 건조·저장시설 확충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수확기 벼 매입능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약정수매제 개선과 함께 직접지불제 확대, 소비자기호에 맞는 「얼굴있는 쌀」 유통체계 확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식량정책과 사무관 최병국)

## 제 3 절 농산물유통구조의 획기적 개혁

### 1.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방향

'98년에 수립한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을 '99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우선 농업인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격 진폭이 큰 채소류 등의 구조적인 가격안정프로그램을 정착시켜 나가고, 산지에서부터 수요자가 요구하는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체계구

축 및 표준화·정보화·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해 나가며, 물류센터 및 직거래망 조기확충으로 다양한 유통경로간 경쟁에 의한 유통효율화 및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외 유통여건변화에 대처하고 출하자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해 나가고, 대형유통업체의 산지활동지원 등 소매단계유통마진을 절감하고, 소비자조직과 생산자조직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농산물유통 개혁대책의 기본방향을 정하여 본격 추진해 나가고 있다.

## 2. 농산물유통체계의 효율성 증진

### 가. 새로운 수급안정제도 정착

『농·소·상·정』이 중심이 되어 생산·출하 등을 자율조절하는 유통협약 실시 및 경영비 수준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예시제 도입으로 농산물가격안정을 기해 나가고 있다.

무·배추·마늘·양파 등의 주요 채소류는 재배면적, 기상조건에 따라 일시적, 계절적으로 가격등락이 심하고 자율적인 유통협약만으로는 무임승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근본적인 수급안정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의 가능하도록 수급안정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관측센터』를 설치('99.1)하여 생산·출하의 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배면적·출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공급하고, 유통협약의 강화와 가격예시제 품목의 확대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과 수급안정을 기해 나가고 있다.

### 나.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혁신

산지에서의 소량, 분산출하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유통센터 등을 확충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출하를 확대해 왔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공동출하율은 41%에 불과하고, 브랜드 출하율은 10%미만이므로 산지유통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기본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전문성·수익성이 부족하여 유통사업에 소극적임으로 인하여 조합원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일선 협동조합이 생산단계부터 품목단일화, 영농지도,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산지유통센터를 거점으로 기계화·자동화에 의한 선별·포장·브랜드 출하비용을 10%수준에서 2002년 40% 이상으로 제고해 나가고, 주산지 협동조합에 계약재배 자금지원을 '98년에 2,810억원에서 '99년도에는 3,000억원으로 확대해 나가며, 적시·적소 배송을 위한 농협의 수송망체계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생산·유통의 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공급 및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각종 운영자금을 통합,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자율적·창의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00년부터 협동조합유통 활성화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다. 도매시장거래제도 다양화 및 물류효율화 촉진**

공영도매시장에서의 거래제도가 경매를 원칙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형식경매, 기록상장 등의 부조리가 있어 경매에 대한 불신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현행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지 유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 거래방식을 다양화하여 출하자 선택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재의 경매제도 외에 도매상제도를 지방도매시장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택하에 시범실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개방하고, 중앙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원칙으로하되, 출하자의 선택에 따라 수의매매거래가 가능한 품목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의 고비용구조를 타파하고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00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는 14개 공영도매시장은 기계하역시설과 정보화 시스템을 갖춰 건설하고 있으며 기존도매시장의 하역시설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2002년까지 경매가 실시되는 모든 도매시장에서 전자경매가 실시되도록 하여 경매비리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도매시장의 정보망구축, 도매시장가격정보의 실시간제공 등으로 도매시장간 출하량이 사전에 조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 **라. 규격포장화 및 하역기계화 추진**

지난 '97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물류센터는 첨단물류설비를 갖춘 대형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의 하역기계화율은 15%수준까지 제고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규격포장 및 기계화하역을 할 수 있는 기반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 물류센터, 산지유통센터, 생산자조직 등에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된 예산으로 규격포장화 및 기계화적재, 하역기계화추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무·배추에 대해서는 박스형 파렛트 이용료(매당3,500원중 3,000원)를 지원하고, 수박 등에 대해서는 대형 8각형 포장박스(Octagon Box) 구입비(개당1,900원 중 1,580원)를 지원하는 한편 비포장농산물의 공영도매시장 반입제한을 병행하여 포장규격출하를 유도해 나가는 동시에 파렛트, 지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하역노조에 의한 하역방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마.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

주산지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마늘·양파 등 양념채소류의 장기간 보관은 가능해졌으나 저온수송체계 및 도매시장의 저온저장 시설은 미비하여 콜드체인에 의한 유통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산지저온저장고를 계속 확충하고 '99년부터 냉장탑차 및 기존 도매시장내의 저온저장시설 설치 등을 본격 지원(280억원)하여 채소류의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김치가공공장운영을 활성화하여 배추의 가공 또는 반가공 처리 유통량을 점진적으로 확대 해 나갈 것이다.

## 바. 직거래확대 및 소매유통개선

물류센터, 직거래장터, 도·농 자매결연 장터 개설 및 차량순회판매 등 다양한 직거래를 추진한 결과 직거래 비중이 '97년 5%에서 '98년 12% 수준으로 확대되어 약 1조원의 직접적인 유통비용절감과 인근 도·소매상의 가격인하효과를 나타내었다.

금년에도 보다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직거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물류센터는 현재 3개소외에 '99년중 5개소(천안,군위, 전주, 용인, 성남)를 개장하고 6개소의 건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중소도시 중심으로 농업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직거래 형태인 Farmers' Market을 2002년까지 150개소가 건설되도록 지원해 나가고, 생산자단체의 전자쇼핑몰 개설과 이를 민간의 전자쇼핑몰과 연계한 통합쇼핑몰인 농산물 Cyber Market을 개설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직거래사업 추진에 있어서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업인이 직거래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힘써 나가고 있다.

직거래로 소매단계 유통마진을 축소해 나가기 위해 민간대형소매유통업체의 물류센터 직배송 가맹점(326개소)을 확대하고, 민간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점포를 직판점으로 활용해 나가며 민간유통업체가 산지유통센터와 직거래 할 경우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사.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농업인들의 의식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되도록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출하연기·폐기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표 3-2-9>                      농산물 안전성 조사실적과 계획

'96	'97	'98	'99계획
750점33품목	3,557점58품목	10,607점80품목	27,000점80품목

원천적으로 생산·출하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에 대한 지도와 조사를 강화하여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유통단계 안전성조사기준외에 생산단계의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농약잔류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안전성 부적합률을 현재의 4%수준에서 2002년까지 1%미만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 제 4 절 신지식농업을 향한 인력육성과 정보화 추진

### 1. 농업인력육성의 내실화

가격경쟁력 위주의 농업구조개선사업에 대한 반성과 발전대안으로 제시된 가족농 중심의 농업인력육성발전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식기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신지식인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족농을 규모화·전문화·협동화 함으로써 『규모의 경영』과 『소득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고 생산뿐만아니라 저장·유통·가공등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범위의 경제』를 추진하여 저비용 고효율 농업구조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후계자, 전업농등 정예인력육성사업은 내실있게 개편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가족농으로 계속육성해 나가면서 규모화·전문화가 어려운 가족농을 중심으로 품목별, 분야별 협동화, 조직화, 법인화를 유도하여 공동생산, 공동출하등 규모의 유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장·유통·가공분야에 농업인의 참여확대로 범위의 경제를 도모하고 품질, 안전성, 브랜드화 등을 통한 상품차별화와 친환경농업육성, 직거래등으로 가족농의 소득증대를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농업에 있어 경영마인드 도입과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 개인별 사업계획서에 바탕을 둔 종합자금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경영컨설팅 체계를 실시·강화하며, 회계, 경영교육 및 정보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로운 지식기반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농촌인력과 사무관 이진원)

### 가.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업인 육성

국내 농림업이 생산성 높은 기술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생산기술과 고급경영기법을 실천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젊은층의 이농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후계자를 '81년도부터 선정하기 시작, '92년부터는 매년 6천명 수준의 농업인후계자를 육성하였으며, 2004년까지 14만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

아울러 일정수준의 경영기반과 경력, 발전가능성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업농육성사업은 '96년 14,640명, '97년에는 11,644명, '98년에는 11,848명을 선정, 지원하였으며, 2004년까지 쌀 10만호(5ha이상, 3~5ha 4만호), 축산 2만호, 과수·화훼 등 원예특작 3만호 등 15만호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다.

<표 3-2-10> '98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농 업	축 산
계	19,710	16,649	3,061
농업인후계자	7,862	4,801	3,061
전업농	11,848	11,848	-

주 : 축산전업은 '95년부터 축종별 경쟁력제고 사업에서 별도 추진

자료 :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촌인력과 사무관 이진원)

### 나. 농업경영혁신 종합지원

농업 투·융자 확대 및 구조개선으로 영농이 규모화, 현대화 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부실사례가 발생하고 동일한 영농조건으로

경영체의 기술, 경영 여하에 따라 생산량 및 수익성의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경영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 노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경영진단, 경영 및 정보화 교육실시, 컨설팅서비스 제공, 종합자금 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98말까지 개발된 30개 품목 표준진단표를 확대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 문제점을 보완토록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지도계통 조직에 학계, 관계기관, 선도농가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2만농가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진단표에 의한 경영진단 결과를 D/B화 하여 벤치마킹 기법을 이용한 농가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최근 원예특작, 축산 등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 농장규모 확대에 따라 경영합리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전문컨설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 하고자 컨설팅료의 50%를 보조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농업경영종합자금제의 도입과 병행하여 대출심사시 사업타당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자문, 기장·회계서비스 제공 등 용자기관 컨설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넷째, 농업인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의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농업인 경영교육 과정에 활용토록 하며,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농업법인경영체,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현장교육 등 집중경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인력과 사무관 남태헌)

#### **다. 농업법인체 내실화 추진**

농업법인체(영농조합, 농협회사)는 '90년부터 '98까지 6,381개소(영농조합법인 4,711개소, 농업회사법인 1,670개소)가 설립되어 농촌의 경영주체로서



농업생산성 향상, 농작업 대행, 유통·가공·판매 등 복합경영으로 농촌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농업법인체는 양적성장에 비해 무리한 시설투자, 운영자금 조달능력 부족, 방만한 경영, 재배기술부족, 판로애로 등으로 전체법인중 운영중단 또는 설립후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이 2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업법인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첫째, 회생가능성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는 정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주도하에 정상운영 또는 퇴출을 유도하고, 영세법인의 경우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지원 수혜를 목적으로 한 신규설립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발전가능성이 있는 우수법인만을 선별지원하여 법인설립 본래목적에 부합되도록 육성·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둘째, 운영중단 또는 설립후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셋째, 농업경쟁력과 경영능력제고를 위해 농업법인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교육, 정보화교육 세무·회계실무 등의 농업법인 경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넷째, 자체경영진단이 어려운 법인체에서는 선별적으로 경영진단 서비스를 확대 제공코자 하며, 시·군에서는 행정지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과 지도사업, 농협에서는 금융서비스 등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다.

## 라. 농업계 교육 활성화

현재 전국에 약 3만여명의 농림계 고교생이 재학중에 있으나 매년 입학정원이 줄어들고 졸업후의 영농종사율도 20%미만에 불과하다. 이는 농업여건이 타산업에 비하여 진로가 어려운 것으로 연유하나 그보다도 전문농업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농업계학교가 연구시설미비, 시설장비 노후화 등 실험실습을 위한 첨단시설장비의 부족으로 내실있는 농장 경영실습과 선진기술교육이 어려워 영농기반 및 의지가 있는 학생들도 농림계 학교입학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국제화·개방화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농림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 노력절감, 부가가치 향상, 기업농 체제로의 이행 등 농업구조의 개선을 선도할 전문경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98년도까지는 농림수산계 고등학교 중 농고는 도별 1개교씩 9개교를 자영자양성학교로 지정하여 '95년부터 '98년까지 523억원을 집중 지원하였고, 농업계 전문학교는 농촌진흥청산하에 농업전문학교를 설치하여 지원하였으며, 농림계대학은 지역, 기능 분야를 고려하여 14개 특성화대학을 선정, 지역 농림업 발전과 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로 활용하도록 94억원을 지원하였다.

'99년도에는 자영자 양성 농고의 자원은 제외되었으나 익산전문대학 천안농고에 9.8억원을 축산교육시설을 위해 지원하여 9개 특성화대학에 98억원 등 총 89.6억원을 실험실습시설·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지원하며, 한국농업전문학교는 농촌진흥청 소관으로 36억원을 지원한다.

<표 2-2-11>

**농림수산계 학교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94	'95	'96	'97	'98	'99
자 영 농 · 수 고	-	184	138	138	63	-
한국농업전문학교	-	127	44	23	28	36.4
농 업 전 문 대	-	13	-	4	-	4.5
농업계고등학교	-	-	-	40	35	5.3
특 성 화 대 학	20	50	60	80	94	9.8

자료: 농림부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청 지도기획과 농업연구관 권혁모)

## 2. 농업의 기계화 및 현대화

### 가. 농업의 기계화

#### (1) 농업기계화 추진방향

1999년도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에 있어 벼농사는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규모화와 대형기계의 일관기계화로 추진하고, 발농사는 아직도 기계화가 저조하므로 신기술농기계로 지정된 발농사용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기계구입자금의 20%를 보조지원 함으로써 발농사 기계화를 촉진키로 하였다.

또한 농기계산업의 구조조정과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기계 업체별 주력기종의 특화로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소농구조하에서 농업기계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진출을 활성화하여, 수출이 촉진되도록 시장개척에 노력하고 농업노동력 구조의 여성화 추세에 대응하여 여성용 농기계 개발 보급에 힘 쓸 것이다. 더욱 공급된 농기계의 이용을 증진을 위해 농기계사후관리분야의 농기계부품공급확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등 사후관리도 강화키로 하였다.

## (2) 농기계 지원공급

농기계 반값공급은 중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보조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 소형농기계는 필요이상으로 공급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1998년부터는 일반농가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지원을 중단하고 융자지원으로 전환하였다.

1999년도는 영농의 규모화와 대형농기계의 일관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조직 70개소, 농기계공동이용조직 540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00백만원 범위내에서 대형농기계 구입지원을 위해 보조 20% 융자 70%를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쌀전업농 4천호에 대하여도 호당 사업비 23.5백만원 범위내에서 보조 20%, 융자 70%조건으로 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구입자금 융자지원 금리를 1998년의 연리 4.5%에서 1999년 5월 1일부터 4%로 인하하였다.

또한, 농기계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한 지역별 주요농기계의 적정공급모델을 기초로 트랙터, 동력이앙기, 콤파인 등 6개 주요농기계에 대하여 시·군별로 경지면적, 기종별 부담면적 등을 감안하여 보유목표를 설정하고 실제 농기계 보유현황을 분석하여 적정대수의 농기계 공급을 유도하고, 이후의 농기계 지원공급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할 것이다. 그리고 작목별 경영규모별로 최적기종 및 규격의 농기계를 공급하여 과투자를 방지하고 저비용의 일관 기계화를 추진하므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 개발한 작목별 경영규모별 기계화 모델을 농업회사법인이나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쌀전업농 등 경영체에서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한편 이미 보급되어 있는 중고농기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농기구써비스센터가 설치된 지역농협에 중고농기계 매매 알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중고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비율도 1997년까지는 구입가격의 80%이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90%선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농기계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수리용부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적기영농을 가능케하고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리용부품 확보자금을 1998년의 187억원에서 1999년에는 360억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트랙터, 콤파인등 대형정밀농기계의 원활한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2개군에 개소당 9억원씩을 지원하여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2개소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고장을 예방하고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850개소와 농업회사법인 농기계보관창고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보조지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9년부터 보조지원을 80%에서 40%로 낮추고 40%를 국고융자로 전환하였다. 영농기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수리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토록 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마을단위 순회수리봉사도 수시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농기계 사후봉사업소의 수리기사와 농업회사법인의 농기계 운전요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기계 수리기사 및 운전요원에 대한 병역특례 179명을 배정하였으며,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을

단위에 기계화영농사 1,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4) 발작물 및 축산분야의 기계화 촉진

벼농사 주요농작업의 기계화율은 1998년 현재 97%에 달하고 있으나 밭농사 주요농작업의 기계화율은 42%에 머물고 있어 기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발작물과 축산분야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늘, 사과, 시설오이, 시설장미, 양돈 5개작목을 대상으로 14개의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을 개발 보급하였으며 1998년에 양파, 양계를 대상으로 경영규모별 기계화모델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심토파쇄기, 벼도정수율자동판정기, 승용관리기용쟁기 등과 같은 농기계를 1999년부터 추가로 지원공급하고 있으며, 자동관수분배기등 생력기계화 효과가 큰 발작물용 농기계 9개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하여 생산 및 구입자금의 20%를 보조 지원하고 있으며, 무, 배추, 고추 등 5개작목에 대하여 기계화재배양식의 표준화를 추진하므로써 발작물용 농기계의 개발 비용을 줄이고 이용율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첨단 농기자재의 국산화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농업기자재 생산자금도 2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보다 발작물 분야의 기계화가 앞선 유럽이나, 일본, 미국 등의 농기계 개발보급 상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발작물 농기계의 개발 보급을 촉진함과 아울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부가 300백만원을 지원하여 2000년 11월 13일~18일(6일간) COEX에서 2000서울국제농림축산기계박람회(SIEMSTA 2000)을 개최할 계획이다.

(농업기계자재과 공업서기관 한한수)

#### (5) 여성용 농기계의 개발 보급

농촌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여성화·노령화 추세에 따라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며 영농에 참여하는 여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남성위주로 농기계가 개발보급됨에 따라 여성이 농기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여성이 사용하기 쉬운 농기계를 개발 보급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중심으로 기허 보급된 농기계중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중소형 농기계를 여성이 다루기 쉽게 개량하는데 목표를 두고 농촌여성의 농기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량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 2000년도까지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기계자재과 기계사무관 박상민)

## 나. 농업시설의 현대화

### (1)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확대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가 생산한 벼를 산물로 수집하여 건조·저장·가공 및 판매하는 과정을 일괄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를 확대하여, 농촌노동력 절감 및 물류유통 합리화로 생산비 및 유통비용을 낮추고, 자동화시설을 이용한 포장의 규격화 및 미질의 차별화로 상품성을 높여 소비자의 입맛에 부응한 고품질의 “지역특산미”를 생산·공급함과 아울러 수확기 농가보유물량을 흡수 처리하여 산지가격을 지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같이 산지 쌀 유통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미곡종합처리장은 1991년 농협에 2개소를 시범 설치하였고 1998년까지 253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1990년에는 48개소를 설치하였다.

1999년에도 15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4년까지 쌀 주산지를 중심으로 36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표 3-2-12>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현황

(단위: 개소, 억원)

	'91~'97	'98	'99계획	'99~2004	계
개 소 수	253	48	15	44	360
사 업 비	4,166	690	216	616	5,688

###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시설원예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

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1999년에는 시설원에 농업경영체에 신규시설화 개보수사업을 위하여 42,22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노지채소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 시설과 산지유통시설 및 기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을 종합지원하기 위해 27,38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특용작물은 품목별로 재배를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므로써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57,44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밖에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137,35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3. 농업기술의 혁신 및 보급

#### 가. 개요

21세기 농업의 경쟁력은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첨단기술력과 정보화의 정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농업은 종합생물산업으로서 유전공학·생물공학·기계공학·전자·화학 등 수많은 연관 학문과 관련분야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다

특히 농업기술은 타분야의 기술과는 달리 자연환경에 따른 지역성을 갖기 때문에 기술이전이나 모방이 극히 제한되며, 국제기술질서는 유용물질이나 기술의 배타적 권리를 점차 엄격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우리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다.

우리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고유의 토착기술을 현대 과학기술에 접목시켜 우리실정에 맞는 한국형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한 실용기술을 개발하고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을 농업분야에 응용하여 실용성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과제의 선정 및 연구수행과정에 농업인과 민간연구소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기술개발자 및 활용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을 시상하여 우수한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 나. 첨단기술개발사업

농업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거나 타 산업분야에서 개발된 첨단기술을 농림분야에 접목하여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대외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첨단기술개발과제와 기획연구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첨단기술개발과제는 자유공모과제로서 지원대상기술은 품종 및 첨단 생산기술, 기계화 및 자동화시스템개발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 및 정보기술 등이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3년 이내, 연구비는 5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또한 체계적인 연구기획에 바탕을 둔 과제지정 공모방식에 의한 품목별 일관기술을 개발하는 기획연구과제는 에너지절감 등 비용절감형 기술, 농업을 종합생물산업화 할 수 있는 기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첨단가공·저장·유통기술, 산림자원의 이용·보전 및 새로운 용도개발 기술, 통일대비 북한농업 공여기술, 국가정책 목표달성 및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중점기술 등이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3년 이내, 연구비는 10억원 이내로서 『농업기술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원예, 축산 등 10개 분야별 중점개발대상과제를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연구성과의 산업화 등 필요시 첨단기술개발과제는 2년, 기획연구과제는 3년 이내 추가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다.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농업인들이 영농현장 또는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한 실용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와 농업인개발과제로 구분하여 자유공모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는 기술개발 수준이 첨단기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로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농업용 기계·자재개발기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등이 이에 해당되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3년이내이며 지원금은 2억원이내이다.

또한 농업인개발과제는 농업인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는 실용기술로서 시험·연구가 미치지 못하는 국지적인 지역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기술, 이미 개발된 기술의 현장적용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적인 보충기술 등의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애로기술을 개발하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2년이내, 연구비는 3천만원 이내로써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라.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농림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지원함으로써 벤처형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육성·발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우리 농림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사업이다.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로서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등이며 특히, 하이텍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연구과제당 지원기간은 3년이내, 연구비는 3억원이내로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마. 농업기술개발 촉진대회 개최**

우리나라 농업기술은 기초·응용·개발연구 등 전반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세계 평균수준으로 평가되나 아직도 국제수준과 비교하여 낙후된 부분이 많다. 21세기 농업은 첨단과학기술 주도의 농업이 될 전망이며, 이러한 시

대적인 조류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새로운 첨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농업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한 우수한 연구개발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연구인력의 참여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우리농업을 21세기의 종합생물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을 제정, '98년도 7월에 제1회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제2회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시상식을 '99년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94년 말부터 시작하여 '98년 말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한 과제는 총 473개 과제로서 이중 43과제는 산업체에 관련기술을 이전하였으며, 201과제는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96과제는 농업인 교육 및 지도자료로 활용중이며, 또한 67과제는 정책자료로 활용 중에 있으며, 66과제는 활용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앞으로 이들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3>

기술개발 성과활용 내역

구분	계	이전활용	이전추진중	교육지도	정책자료활용	계획수립중
계	473 (100%)	43 (9.1)	201 (42.5)	96 (20.3)	67 (14.2)	66 (13.9)
'95완료	15	1	6	5	3	-
'96완료	78	15	26	17	20	-
'97완료	141	19	55	40	27	-
'98완료	239	8	114	34	17	66

\* 특허출원 313건 (등록 59건)

(환경농업과 사무관 이상혁)

## 4. 지식농업을 위한 농업정보화의 확대 추진

### 가. 농업정보화 기반의 확충

농업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의 정보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4년부터 추진하여 온 농림수산종합정보망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업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998년 현재 농림부,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농림관련 기관·단체에 구축되어 있는 종합정보망을 산하기관과 단체 및 연구소 등으로 확충하여 2000년까지 50개 기관·단체를 연결할 예정이다.

현재 농림수산정보서비스(AFFIS)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108개 정보제공기관(IP)을 2000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대가를 지불하는 등 IP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으로의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업정보활용,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이 용이하게 추진되도록 AFFIS 운영기관인 농림수산정보센터를 인터넷서비스 제공기관(ISP)으로 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나.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및 정보문화의 확산

#### (1) 정규교육

2004년까지 15만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만 5천명 이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마인드를 제고하고 정보이용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업계특성화대학생이 농가를 방문교육하는 「농업정보 119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이 정보기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키고, 농업·농촌정보화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정보문화확산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우수사례발굴·보급, 경진대회, 표어

보급등의 각종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이 쉽게 접근가능한 인쇄매체(팜플렛, 농업정보 소식지등)를 통한 홍보사업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정보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2) 특별교육

농업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컴퓨터전문가를 농촌현장에 파견해 농업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99. 9월~2000. 2월까지 6개월 동안 정보화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무료로 현장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컴퓨터활용기초, 농업종합정보망이용, 인터넷활용, 농업용소프트웨어 이용법 등이다. 자치단체별로 2~4명씩 컴퓨터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약 30,000농가에 컴퓨터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정보화를 한 발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 다. 농업경영 및 유통정보화 촉진

### (1) 이용자 편의위주로 농업정보 정비·체계화

기존의 기관별, 분야별 농업정보를 품목별로 종합하여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위주의 농업정보 체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수혜자인 농업인과 소비자의 정보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기관단체의 DB를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소재 안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이로써 어떤 기관단체나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생산한 정보라도 농업인이나 소비자가 한번의 접속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는 사실전달 수준에 머물고 있는 농업정보서비스를 생산·출하조절 등 농업인의 영농·경영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된 정보서비스체계로 개선함을 뜻한다.

## (2) 유통분야 정보화 강화

새로운 유통형태인 전자상거래를 농업분야에 도입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EDI표준거래서식을 금년에 표준화하여 그 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인이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설 지원을 2004년까지 1만 명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에는 신지식 농업인을 위주로 품질인증 농업인, 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등 우수농업인 100명을 선정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는 쇼핑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별 생산자의 단품위주의 취급농산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축산물 취급 Shopping Mall을 연계하는 통합 Mall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산물 출하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이 농산물 출하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지원하고, 단순가격 위주의 유통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시간대로 제공함으로써, 생산자가 적기에 출하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통정보 제공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주요도시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등 주요생필품의 판매가격 정보를 개선하고, 정보제공유통업체를 확대시켜 소비자가 농산물 비교구매가 가능하도록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정보 유용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 (3) 품목별 농업경영진단 소프트웨어(S/W) 개발과 보급

농업생산비 절감 및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S/W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농업인 스스로가 경영상태를 분석·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S/W를 개발·보급하고, 농업인들의 농업경영S/W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까지 시설원예 및 낙농 등 10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농업인 스스로가 농업용S/W와 온라인 통신망을 활용하여 동일 품목의 다른 생산자의

경영상태를 분석함으로써 자기경영을 개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지난해 강원, 경남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가방문지도로 농업인 등의 호응이 높았던 「농업정보119서비스」를 금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3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정보화 공공근로요원을 방문시켜 S/W 이용방법을 지도하고, (재)농림수산정보센터 교육원에서 경영정보화 등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농업경영S/W 이용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기보급된 S/W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 앞으로는 더욱 영농현장에 밀착된 S/W를 개발하여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 5. 신지식농업인 육성

정부에서는 '98.12.4 개최된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신지식인운동을 지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98.12.9 신지식인운동 확산을 위하여 청와대에서 개최된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신지식인 발굴·확산을 범부처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지식인운동 추진반」이 구성되었다. 농림부에서는 '98.12.18 농업부문 신지식인 발굴·홍보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농업부문 신지식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정의하고 발굴·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농림부에서는 '99.1.14까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을 통해 신지식농업인 후보로 발굴된 사례 70명을 청와대에 추천하였으며, '99.1.15~1.20 기간중 신지식농업인으로 발굴된 사례 57건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99.2.1 전국민 신지식인 운동 추진방안중 신지식인 활동현장 방문, TV 방영, 경연대회 등을 통해 확산 등 농림부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99.2.3 개최된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에서는 농업인 홍도현, 이종민씨의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신지식인운동을 제2건국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99.2.13 농림부에서는 현지실사 및 서류심사를 거쳐 1차로 35명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정·발표하였다. 아울러 선정된 농업인의 사례를 책자 및

홍보용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배포하였다.

신지식농업인은 학력과 전문자격증에 관계없이 새로운 발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능율을 실현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으로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PC를 이용하여 정보를 활용하고 직거래등으로 부가가치 창출하거나, 독특한 생산기술로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기타 새로운 발상으로 농업·농촌의 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을 선정하였다.

신지식농업인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지식농업시대의 중심인력으로서 소규모 토지와 자본으로도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식농업시대에 부합하도록 농업인 의식구조의 전환을 주도하여 농업인이 창의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도록 선도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에서는 신지식농업인을 확산하기 위하여 신지식농업인 선정·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선정된 농업인에게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하며, 언론 및 TV드라마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시 수범사례 및 특별강사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14> 신지식농업인 선정 현황

연 번	성 명	학 력	주 소	나 이	분 야
1	배문열	고졸	경북 칠곡군	61년생	홍화씨
2	송화수	고졸	전북 진안군	33년생	인삼
3	안근주	중졸	강원 원주시	55년생	버섯
4	이종민	중졸	충북 음성군	54년생	고추
5	조정형	대졸	전북 전주시	41년생	전통주
6	류충현	대졸	경북 안동군	64년생	버섯
7	정득기	고졸	경남 의령군	64년생	버섯
8	김기일	고졸	경남 김해시	55년생	단감
9	전재학	고졸	경북 칠곡군	49년생	화훼

연 번	성 명	학 력	주 소	나 이	분 야
10	이동운	대졸	경기 고양시	47년생	선인장
11	조남상	국졸	경기 양평군	52년생	더덕
12	김현웅	대졸	경기 화성군	41년생	배
13	권상탁	대졸	경기 용인시	61년생	양계
14	임영식	고졸	강원 평창군	56년생	감자
15	이상천	고졸	충북 괴산군	52년생	양돈
16	정창용	고졸	충북 영동군	48년생	포도
17	홍성남	고졸	충남 서산시	58년생	오이
18	이진규	대졸	충남 당진군	38년생	벼
19	이학상	고졸	전북 고창군	41년생	배추
20	이재진	고졸	전남 영암군	55년생	인삼
21	손계용	대졸	경북 청송군	36년생	사과
22	구점식	고졸	경북 안동시	59년생	양돈
23	박동하	대졸	경남 창원시	54년생	단감
24	변태안	고졸	경남 마산시	55년생	국화
25	이성호	무학	경남 진주시	31년생	도라지
26	박봉성	대졸	경남 김해시	59년생	장미
27	이종국	중졸	경남 밀양시	54년생	풋고추
28	김도진	고졸	제주 남제주군	50년생	감귤
29	강창준	초졸	제주 서귀포시	44년생	장미
30	이명규	초졸	경북 안동시	54년생	양계
31	라상호	대졸	전북 김제시	59년생	토마토
32	안재욱	고졸	경기 포천군	51년생	장미
33	정운천	대졸	전남 해남군	54년생	참다래
34	홍쌍리	중졸	전남 광양시	43년생	매실
35	홍도현	고졸	경북 군위군	49년생	장미



## 제 5 절 수출농업의 기틀 구축

### 1. 수출여건과 전망

1999년도 농산물 수출은 돼지고기, 김치, 인삼류 등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년실적대비 19.8%늘어난 20억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2-15> '99년도 농산물 수출전망

(단위 : 백만달러, %)

	'95	'96	'97	'98	'99(전망)	전년대비 증가율
국가전체	125,058	129,715	136,164	132,313	134,000	12.7
농림산물	1,747	1,829	1,847	1,635	1,960	19.8
농 산 물	1,087	1,164	1,190	1,005	1,248	24.2
축 산 물	156	260	318	385	427	10.9
임 산 물	504	405	339	245	285	16.3

주 : 수출전망추계 : 국가전체(산업자원부), 농축산물(농림부), 임산물(산림청)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일반적으로 우리 농산물은 해외농산물에 비해 생산가격이 높고 품질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수출되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국내수급과 수출선유지·확보가 향후 수출확대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이후 국내생산기반 정비 등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해외시장개척 활동에 힘입어 수출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특히 IMF체제하에서 국내수요부진을 수출로 돌파하기 위해 생산농업인, 수출업체, 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그만큼 수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진흥과 사무관 남동익, 윤명중)

## 2. 농산물 수출진흥대책 추진

국민의 정부에서는 기존의 비용절감 접근방식 뿐만 아니라, 시장성·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농산물의 품목별 경쟁력 실태를 재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선농산물의 대일수출확대를 포함한 수출농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추진방식, 지원내용 등에 대한 기존의 수출확대대책을 개선·보완하여, 품목별 수출목표설정 및 목표관리제를 운영하여 나갈 계획이다.

### 가. 국내 소비안정에 기반을 둔 수출규격품의 생산지도 강화

화훼, 과실 등을 중심으로 현재 88개소의 수출전문생산단지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단지조성시에만 우선 지원될 뿐 지속지원 등 수출에 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1999년까지 조성하기로 한 100개 수출전문생산단지에 대해서는 품종선택에서 재배, 생산시설, 선별 포장, 가공저장시설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농산물의 구매자금과 포장자재비, 운송비, 디자인 개발비 등의 자금지원도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돼지고기, 김치, 배 백합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10대 수출전략품목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 9개 기관에 전담연구팀을 설치·운영하여,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고 생산·유통자금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나. 농산물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제를 대폭 강화

1996년부터 설치 운영중인 「수출애로 상담실」을 1998년도에 「수출대책상황실」로 확대 설치하여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품종선택, 재배, 포장, 가공, 수송 등 생산·수출과정에서 겪는 현장애로 요인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소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999년

도에는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농산물 수출확대대책회의」를 수출현장 중심으로 운영하여 월별 수출동향과 대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에 소요인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또한 수출농가와 업체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수출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기 위한 이동수출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농수산물수출전담기구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하여 정보·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며 수출검역, 통관, 선적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교환(EDI)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수출전략품에 대한 「주문정보서비스제도」, 팩스신문(농수산물 수출입 뉴스), Green Bell Service 등을 통해 생산자, 수출업체 및 해외바이어가 원하는 국내·외 시장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수산물무역진흥센터 건립을 1998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1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제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등 각종 농업관련 대규모 전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농수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바이어 상담, 자금지원, 무역정보제공 등 수출입과 관련해 수출입 종합지원 기능(one-stop 서비스체제)을 수행하고, WTO 개방체제 하에서 선진농업국가건설을 위해 공세적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 **다.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활동 강화**

농산물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하여 수출농산물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보험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격상승 위험품목의 확대, 보험요율 인하 및 보험보상비율 인상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개척사업은 우리 농산식품에 대한 잠재수요를 발굴하고 농산식품문화를 전파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참가비용지원을 통해 수출업체의 국제박람회(1999년:12회) 참가를 유도하고 전시·홍보·수출상담 등으로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 신규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특히, 일본, 홍콩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는 특별기획전, 시사회, 간담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와 병행하여 해외판촉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동경, 홍콩 등지는 옥외 전광판을 설치하여 인삼, 김치, 돼지고기 등 주요 수출상품을 소개하고, 국제전문지 광고게재, 홍보용 VTR제작·배포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전시회도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동경, 뉴욕 등 해외 주요 수출시장에 설치·운영중인 6개의 해외 농업무역관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현지적용상품개발, 주요 전통품목 전시·홍보, 이벤트행사 개최 및 일일사무소 제공, 수출안내 등 수출지원기능을 전담해 나갈 것이다.

(무역진흥과 사무관 남동익, 윤명중)

### 3. 수입관리대책

#### 가. 1998년도 평가

'98년도 농림산물 전체수입액은 64억달러로서 '97년도 101억달러 대비 36.6%가 감소하였다. 이는 IMF상황으로 환율상승,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대부분 품목에서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축산물은 전년대비 43.3%가 감소한 7억달러 수준이고, 임산물은 건설경기침체로 인하여 원목, 합판 등 목재류의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60.5%인 10억 달러만 수입되었다

다만, 밀, 고추, 마늘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밀의 경우는 사료용으로 수입대체되는 옥수수 및 대두보다 가격경쟁력이 높아 수입이 대체된 것으로 판단되며, 고추·마늘은 국내 작황부진에 따른 국내수급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의 경우는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WTO 협정에 따라 개방된 품목의 관세율이 연차적으로 하락하도록 되어있어 우리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세율 하락이상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3-2-16>

농축산물 개방 일정표

년도별	개방품목수	주요 품목	수입자유화율
'94말까지	1,178	바나나, 배, 키위, 유채 등	83.1%
'95. 1. 1	166	보리, 옥수수, 대두, 고추, 마늘, 참깨 등	94.6
'96. 1. 1	2	포도, 사과주스	94.8
'96. 7. 1	13	버터, 연유, 유당, 인조꿀, 누에고치 등	95.7
'97. 7. 1	37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감귤 등	98.3
2001.1.1	8	소, 쇠고기 등	98.9
잔여품목	16	쌀 관련품목	98.9
계	1,420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나. 1999년도 수입관리 대책

(1)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한 수입관리 추진

WTO협정 내용과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쌀, 쇠고기, 고추, 마늘 등 79개 세 번별 주요품목은 국영무역 형태로,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 16개 세번별 품목은 수입권공매방식으로 수입하여 그 이익금을 농업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시기 등을 감안하여 수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등 시장접근물량의 적절히 조절한 수입관리로 국내 농업보호와 WTO협정 이행을 동시에 조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관련법상 각종제도의 적극 활용

수입자유화에 따라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관련된 국내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당면, 조제팔, 메주 등 10개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부과 하여 관세율을 인상하였다(당면: 기본세율 8% → 조정관세 57%) 또한 최근의 수입현황으로 볼 때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낙화생, 메밀, 녹두, 인삼, 감자 등 4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이 기준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

였고, 낙화생, 메밀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가격보다 수입가격이 낮을 경우에도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도록 '99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명 발동기준 및 세율을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직접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국내관련법상의 각종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 (3) 원산지표시제 실시 및 단속강화

품질이 낮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위장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산(175개), 국내산(148개) 및 가공품(105개)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98년부터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단속공무원을 활용하여 수입농산물의 국내 유통질서 및 차별화를 확립하도록 할 것이다.

### (4) 동·식물검역기능 강화

WTO출범에 따른 검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3~1997까지 1단계 동식물검역기능 강화대책을 마무리하고, 1998~2000년까지 3개년간 511억원을 투자 하는 3단계 동식물검역 선진화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이제 3단계 선진화대책은 그동안 hardware 중심의 기능강화를 software중심으로 전환하여 검역기술의 선진화를 꾀하여 나갈 계획이다.

(무역진흥과 사무관 황인용)

## 제 6 절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1. 국제적 동향

환경문제는 특정지역, 한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지구의 온난화, 열대우림의 감소, 산성비, 사막화 등 산업

혁명이후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및 지속적인 산업화로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지구전체의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는 특정분야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피해 및 영향 또한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국가,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개별국가의 대응노력과 함께 세계 각국이 공동 참여하는 국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농업분야에서는 1992년 6월 『리우선언』 및 그 세부실천계획인 『의제 21』의 채택으로 모든 참여국이 농업정책을 친환경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토지 자원의 합리적 이용, 토양의 보전 복구, 수자원 관리, 병해충종합관리 등 지속적 농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실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OECD 농업/환경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작물양분관리, 농약사용, 농업용수 사용, 농지이용 및 보전 등 농업부문에서 13개의 환경지표를 개발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정지표 이상으로 농업환경이 유지되도록 해나가고 있으며, 세계식품규격위원회인 Codex에서는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 및 국가간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유기적으로 생산된 식품에 대한 국제지침을 작성 중에 있는 등 각종 국제기구 및 협약에서 현행 농업을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농업환경은 그동안 농업정책이 생산성 증대와 다수확 등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농약, 화학비료 등의 과다사용과 가축분뇨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경지, 농업용수 등이 오염되고 유기물 함량이 낮아지는 등 지력이 떨어져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환경기반의 유지·보전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농산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향후 예상되는 GR에 대비하는 친환경농업정책의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 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도입

UR타결이후 세계각국은 종래의 가격지지 및 수출보조 정책등과 같은 정책은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즉 시장을 왜곡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를 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직접지불제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기능이 강조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1998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직불제 도입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를 1999년부터 도입키로 하고, 예산 57억원을 확보, 환경규제지역내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대상농가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정부가 제시하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토양검정과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결과에 합격하면 ha당 524천원을 농가에 직접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은 화학비료의 경우는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작물별 적정시비량을 사용하면 되고, 농약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의 2분의1 수준을 사용하되 최종적으로 수확된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결과 허용기준치의 2분의1 이하가 되면 된다. 시·군별로 행정, 지도, 농협, 농검의 관계자로 합동지도팀을 구성하여 농업인들을 지도하게 되며, 농업인들의 이행여부 판정은 재배전후의 토양검정과 수확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 의하게 된다.

## 3. 친환경농업육성방향 및 추진시책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극대화하고 환경저해요인을 최대한 감축하여 우리 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 중·장기적인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97년 12월 환경농업육성법이 공포되고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을 '98.12월에 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갈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98.11월에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한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보아 『친환경농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친환경농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기로 다짐하였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 화학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의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둘째는 농토의 지력과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자원을 유지·개량해 나가며, 셋째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를 지원·육성하고, 넷째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여 농가가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이 원활하게 판매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 **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약, 비료 등 환경오염원의 경감시책**

우리나라 농약사용량은 '91년 27천톤(성분량)을 정점으로 그 이후 매년 감소하여 '98년에 22천톤 정도로 5천톤 정도가 줄었다. 앞으로 2004년까지 농약사용량을 50%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에 목표를 두고 농약사용량을 줄이는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기본적인 기술이 병해충종합관리(IPM)이다. 이를 위해서 벼농사의 경우 전국적으로 병해충 관찰포 1,650개소, 예찰포 200개소를 통한 과학적 정밀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적기에 경제적 방제가 실시되도록 하고,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를 점차 확대하여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대농업인 지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농약도 생물농약 등 환경친화적인 농약의 개발·보급도 병행하여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부하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화학비료의 경우 '98년도 연간 86만톤(성분량)정도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농촌진흥청이 추천하고 있는 작물별 적정시비량 보다 16만톤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농경지 토양에 인산·가리의 과다 집적과 잉여 비료성분의 지표수 유입으로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료사용량을 2004년까지 40%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토양양분을 종합관리하는 INM을 실천해나가고 있다. 전국 146개 농촌지도소에 토양종합검정실을 설치하여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토양에 부족한 성분만을 적정량을 시비토록 하는 한편 완효성비료, 주문 배합비료, 저농도비료 등 환경보전형 비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비료 사용량 및 유실량을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양의 특성을 D/B화하여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작업 추진으로 과학적인 토양관리기반의 마련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축산분뇨는 연간 약 46백만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자원화에 목표를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97년까지 농림부에서는 75천개소의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설치대상의 89%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으로 축산분뇨를 오염원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다.

또한 농약빈병이나 폐비닐, 폐농기계 등 폐영농자재로 인해 농업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수거하고 있다. 농약빈병은 70백만개, 폐비닐은 92천톤이 매년 발생하고, 폐농기계는 '98년말 85천대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나, 농약빈병·폐비닐의 수거율은 50~60%정도인 실정이다. 농약빈병과 폐비닐은 평상시의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순회 수거와 아울러 영농기전후(4,11월)에 정례수거기간을 정하여 집중수거하고 있다. 특히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마을단위 순회수거와 병행하여 지역농협에서도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등 수거체제를 개선하였다. 폐농기계는 76%정도가 수거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IMF체제 이후는 고철 등 폐자원이용 측면에서 폐농기계를 적극 수거해 나가고 있다.

## 나. 농업자원 유지·개량시책

농업의 기본적인 자원은 토양과 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토양은 모암자체가 산성인데다 화학비료에 의존하여 농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생산력이 떨어지고, 지력은 일본에 비하여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용수 또한 점차 오염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산성토양 개량 및 논토양의 규산성분 공급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97부터 100%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살포도 지역농협주관 하에 공동으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98년에는 공급물량을 확대하여 필요한 농경지를 대상으로 6년1주기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99년에는 규산의 경우 5년 1주기 물량으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사질토양 등 생산성이 낮은 토양에 대한 객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의 객토사업은 '97년부터 용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지원 중에 있다.

그리고 '95~'97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전국 70개 급속광산 인근 농경지를 조사한 결과 오염농경지로 나타난 200ha를 개량하기 위하여 30cm이상의 복토와 석회를 시용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98년까지는 사업자금을 용자지원해 왔으나, '99년부터는 지역특화 사업에 통합하여 보조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흙살리기운동”과 “푸른들가꾸기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화학비료·농약의 과다사용을 방지하고 사료·녹비작물재배를 통하여 조사료의 자급기반을 확충하면서 지력을 높여 친환경농업의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흙살리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98년에 공급된 토양검정기를 이용율을 높여 농업인 스스로 토양을 진단, 특성에 맞는 시비 등의 토양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푸른들가꾸기 운동을 확대하여 겨울철 노는 땅에 호밀 등의 사료작물과 자운영 등의 녹비작물을 심고 여름철에는 산야초등을 이용한 퇴비 생산을 늘려감으로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를 국내에서 생산된 조사료로 대체해 나가고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시킴으로서 그 동안 수입농자재에 주로 의존해온 우리농업을 국내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이 운동의 일환으로 '99년도에는 사료작물 75천ha, 자운영 8천ha를 할 계획이다.

농업용수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전국의 28천개 주요 농업용수원을 대상으로 수질측정망을 '98까지 200지점을 설치하였으며, '99년 말까지 350지점으로, 향후 2001까지는 550지점으로 확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용수 수질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수질개선공법 연구 등을 실시

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도모하고, 수질이 나쁜 농업용수원에 대하여 수질개선대책을 수립, 99년부터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농업과 서기관 안영수)

#### 다. 축산분뇨의 자원화

'99년도에는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자원화 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투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축산분뇨관리의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추진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이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수질오염을 방지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시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99년도에도 950억원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자원화를 위한 퇴비화·액비화 시설등 축산분뇨처리시설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축분퇴비·액비의 이용 확대를 통해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이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축분퇴비의 토양환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인 지역축협과 농협에 축분퇴비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축분퇴비·액비 생산농가와 이용농가를 연계시켜 축분퇴비·액비의 이용을 활성화해 나간다.

또한,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해 부산물비료(축분퇴비)에 대한 가격차손보전을 확대(400천톤, 140억원) 실시함과 아울러 축분퇴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한편, 가축노를 이용한 액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와함께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축종별·규모별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모형과 축산분뇨 자원화 표준 설계도(8종)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축산농가에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축산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축산정책과 사무관 최염순)

## 라.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지원·육성

친환경농업실천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생산·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친환경농업기술을 수용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고 있다.

'95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은 중산간지의 중소농가 등 규모화가 어려운 농가 등을 대상으로 토착미생물생산시설,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적 이고 안전성면에서 고품질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사업”은 '95~2004까지 10년간 1,000개소의 지원을 목표로 1개소당 250백만원씩 총 2,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5~'98까지 995억원을 투자하여 398개소를 조성하였으며, '99년에는 175억원을 투자하여 7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98년~2004까지 지구당 20억원씩, 총 3,780억원을 투자하여 189개소의 환경농업지구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98년에는 100억원을 투자하여 5개지구를 조성하였으며, '99년에는 100억원을 투자하여 6개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99년에 726백만원을 투자하여 병해충종합방제기술과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을 실천하는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16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IPM과 INM 기술지도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의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사용되어져 오고 있는 친환경농업 관련 농법이나 자재중 16건을 대상으로 약 3년에 걸쳐 사용량, 방법,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검정할 계획이다. 검증결과에 따라 효과가 좋은 농법이나 자재는 적극 보급·발전시켜 나가는 등 친환경농업의 기술 및 보급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친환경농업관련 첨단자재의 개발·보급에도 역점을 두고 농

진청, 연구기관 등을 통한 기술개발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 마.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 추진

친환경농산물은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고 생산·출하시기가 편중되는 등으로 수급이 불안정하며,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신뢰가 아직 부족하여 일부 친환경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등 유통·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현재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9개소(양천, 강남, 관악, 은평, 용산, 광진, 강북, 강서, 성동)를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도 유기농산물유통본부, 슈퍼, 하나로마트 등에 전문 판매코너를 설치하는 등 소비자 등이 친환경농산물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판매장소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보증을 위하여 국립농산물검 사소에서 '93.12월부터 유기·무농약재배 농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말 현재 모두 57개 품목에 965농가, 24천톤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99년부터 친환경농 산물 표시신고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친환경농산물이 계속 확대되도록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자체, 농협, 민간단체 등 의 자체품질보증을 통하여 얼굴있는 상표를 개발하므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과 차별화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량 소비처와의 직거래 알선, 도시 소비자와 생산작목반과의 자매결연 추진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환경농업과 서기관 안영수)

## 제 7 절 농업인 소득지원과 복지지원 강화

### 1. 직접지불제 단계적 확대

UR협상 타결이후 전세계적으로 농정의 커다란 전환점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종래의 가격지지 및 수출보조 정책 등과 같은 정책은 연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신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생산중립적으로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를 하는 정책은 허용가능한 보조로 분류되어 WTO체제 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직접지불정책은 EU를 중심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 도입되어 왔으나 UR타결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996년 농업법(Farm Bill)을 개정하면서 종래의 차액지불제(Deficiency payment)를 폐지하고 「생산탄력계약지불제(Product Flexibility Contract Payment)」등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도 1998년부터 도작경영안정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는 '95년 제정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2항에서 직접지불제도를 강구하도록 규정하였고 '96년부터 직접지불제의 도입시기 및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행해졌다. 그 결과 1997년부터 고령농가의 경영안정과 전업농 등의 경영규모확대를 위하여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였고, 이를 위해 '97.2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과 동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97년부터 65세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쌀 전업농에 매매 또는 5년 이상 장기임대시 ha당 268만원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사업을 추진하여, '97, '98 2년간 21천 ha의 논을 대상으로 550억원의 예산으로 고령농업인 27천명의 논 18,720ha를 경영이양시키고, 490억원의 소득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89%의 실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단가 수준이 낮아 경영이양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99년에는 사업물량을 8천ha(223억원 예산)로 축소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개

정하여 경영농지 전부를 일시가 아닌 연차적·단계적으로 경영이양하는 경우에도 소득보조금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강조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99년 예산에 사업비 등을 확보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ha당 524천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직접지불제를 본격적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하여 논 농사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의 세부시행방안과 시기에 대한 연구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후에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와 소득안정직접지불제도의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윤중)

## 2. 농가경영 안정대책 추진

IMF로 농업부문의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중 축산 및 시설원예농가의 정책자금 5,752억원을 3~9개월 유예 조치하고 경영자금 6,500억원을 추가 지원 하였다.

또한 조달금리 상승으로 농특회계와 경영자금의 금리를 3.5%p 인상하여야 하는 여건에서 2%p를 흡수하여 1.5%p만 인상하고 농림부소관 기금에서 지원되고 자금은 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농민단체, 학계,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한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 8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농가부채대책을 시행하였다.

'98.10~'99.12중 상환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9,000억원을 2년간 상환 연기하고 금리도 1.5%p 인하하였으며 상호금융자금에 대하여도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상환을 연기하고 금리도 2%p인하하였다.

특히 정책자금대출액이 5억원이상인 경영체에 대하여는 work-out 제도를 도입하여 정밀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추가자금 지원시 경영회생이 가능한



경영체에 대하여는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고, 인수희망자에게는 인수자금을 지원하여 농가경영회생 및 고액시설물의 유희화 방지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99 3월에는 농업생산 목적의 상호금융 부채 차입으로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저리의 특별경영자금 7,000억원을 지원하여 금리부담을 완화하였으며 7.1부터는 지난해 1.5%p인상되었던 경영자금 44,700억원에 대하여 금리를 IMF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켰다.

또한 농신보 무입보 신용보증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농신보 제도개선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앞으로 현재 추경예산에 요청하고 있는 특별경영자금 1조원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지원할 계획이다.

'99년 부터 추진되고 있는 농가경영안정대책은 도적적해이를 최소화하여 농업금융질서의 건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견지해 나갈 계획이다.

(협동조합과 사무관 안형준)

### 3. 농어촌교육·의료 등 복지지원 강화

#### 가.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 (1) 농어촌 초·중·고교 학교급식 확대

중등학교 급식 확대는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 및 교직원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급식을 희망함에 따라 고등학교는 '99년 전반기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급식확대 방안으로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급식비로 제공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내식당 등 기

존 급식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충하고, 인근 학교와의 공동조리 급식과 급식 시설을 신축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에서도 학교설립경영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 외에도 학교급식공급업자에 의한 운영위탁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어 '99년 7월 현재 전체고등학교 1,943개교중 59%인 1,146개교가 급식을 실시중에 있고, 나머지 797개교가 시설공사를 마치고 급식을 준비하고 있거나 급식시설 공사중에 있어 금년 2학기부터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전면급식이 완료되는 '99년도 후반기부터는 중학교 급식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7>

**중학교 급식 추진계획**

(단위 : 개교)

구 분	전 계 학교 수	급 식 학교 수	'99~01 확대계획			
			'99	'00	'01	소 계
학 교 수	2,741교	828교 (30.3%)	286교	814교	813교	1,913교

자료 : 교육부 학교시설 환경과

**(2) 농어촌지역 문화여건 개선**

농어촌학생과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보·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1999년도중 5개관에 50억원의 건립비와 10억원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3) 농어촌학생 대학입학기회 확대**

199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는 농어업인이 피부로 실감하는 농정개혁의 성과로 정착되어 가면서 농어촌사회의 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학년도에는 전국 347개 대학중 327개 대학이 농어촌학생에게 특별전형을 실시하였으며, 19,900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2-18>

1999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현황

(단위 : 개교, 명)

구 분	실 시대 학	모 집 인 원	합 격 생 수	진 학 생 수
계	327	19,894	19,900	15,185
일 반 대 학	170	9,864	10,956	9,118
전 문 대 학	157	10,030	8,944	6,067

자료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4) 농업인 자녀교육비 부담경감사업 추진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업계고교생 학자금 지원,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새마을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1999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1999년도 사업별 투자규모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92천명에게 592억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15,000명에게 237억원, 자영 농과생 급식비는 2,709명에게 18억원, 새마을장학금은 3,000명에게 5억원을 지원하고, 농어업인 자녀의 하숙비 부담경감을 위해 기숙사 건립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나. 농어업인 연금제의 내실화

1999년 3월 현재 농어촌지역의 연금가입자는 209만명(농어업인 86만명, 비농어업인 67만명, 납부예외자 56만명)으로 94%에 해당되어 정착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미가입자는 대상자의 6.0%인 13만명으로 그 대부분이 비농업인이다.

앞으로 농어업인연금의 성공적인 정착과 내실화를 위하여 보험료 납부제도 개선, 『효도연금보내기운동』 등을 사회운동 차원에서 전개하고, 연금수급사례 등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료 장기체납자 일소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고, 도시지역까지 연금제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늘어나는 연금관리직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어가마다 방

문을 통한 이해·설득 노력과 계몽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 다.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

### (1)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기반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권역별 민간병원을 지역중심병원으로 집중 육성하는 등 1999년중에 병·의원에 10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진료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개선에 439억원을 지원하는 등 농특세 재원 539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지속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 전체 의료보험료 통합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98.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직장의료 보험을 포함한 전체 의료보험을 통합일원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1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1999년 2월 8일 제정되어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98년 제1차로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데 이어 금년에 제2차로 전체 의료보험을 통합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능력에 비례하는 보험료 부담」의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이 제고될 전망이며, 위험분산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사람이 덜 건강한 사람을 돕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돕는 사회연대성의 원리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 종전까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에 국한되던 급여범위가 예방·재활까지 포함되어 명실상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진료비용의 심사기능외에 진료의 적정성(질)을 평가하는 기능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설로 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사무관 한종현)

## 4.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

'99년도에는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한해이다.

'99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에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의 근거를 명기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성농업인들이 전문농업인격으로 육성되고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양성 평등의 실현과 지위향상 그리고 삶의 질도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 (1)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여성농업인의 실태는 농림부에서 농업총조사 등을 통해 농가인구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전체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도 특정주제와 관련하여 부분적인 조사·연구를 하였으나,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 '98. 8.」의 수립·집행과 관련하여 정책자료로 쓰기에는 미흡하였다.

올바른 여성농업인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였다.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정치·평등·생활의식, 작목에 따른 노동환경, 경제·사회적 생활만족도, 건강문제, 농업에 대한 전망, 농업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및 선호도 등 여성농업인정책 수요를 위한 일반적인 조사를 3천4백 만원을 투입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이를 분석하여 여성농업인 관련정책의 현실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여성농업인정책의 수요조사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 여성농업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현재 전체농가 여성의 84%가 중졸이하, 60세이상 고령인구가 31%이며,

농촌진흥청, 농협,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농기계·전산·취미·교양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사부담으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교육참여 기회가 낮고 교육시·교육내용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관련교육의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이들 교육프로그램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여 여성농업인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할 계획이다. 농림부에서는 연구를 위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3) 여성농업인 도우미 제도(Helper System)도입 연구

여성농업인이 축산 등으로 가사나 농업노동을 일시 중단할 경우 도우미가 이를 대행하는 제도의 도입을 연구하는 것으로 선진유럽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가도우미 제도(Helper System)」의 조기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 제도가 연구되어 정책에 접목되면 시·군별로 인력은행을 설치·운영하고 도우미 수요자와 공급희망자를 연결시켜 여성실업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농촌지역의 부족한 노동력확보를 하고 이와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젊은 후계인력의 농촌 정착 유도에도 특히 기여하게 될 것이다.

#### 나. P·C통신 「여성농업인 열린광장」개설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보화시대에 맞게 PC통신을 이용하여 쌍방향 대화 통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PC통신망의 하나인 농림수산정보망(AFFIS)를 이용하여 AFFIS 농림부 소개란에 「여성농업인 열린광장」코너를 개설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여성농업인들의 농정에 관한 정책질의·건의 사항을 접수 답변·반영토록하여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 **다. 농업관련 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의 지위향상과 삶의질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관련 전문여성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 생산자단체등 소비자단체 농업관련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여성의 인적사항을 수록하도록 하여, 앞으로 이들 전문여성을 활용하여 농업정책수립, 지역협의체 등에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대표성제고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 들이 여성농업인의 권익신장 및 사회적 지위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라. 도시·농촌여성간 교류활성화**

농림부에서는 친환경농업, 농업물직거래 등 농정을 적극 홍보·추진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도·농간 갈 등을 해소하고 도·농연계를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농업·농촌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도시여성과 농촌여성간의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에서는 농·소·정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심포지움 개최, 도농캠프, 농촌현장 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외에도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농림정책관련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 농·축협등 조합에 여성정회원 가입촉진 등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전종철)

## 5.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

### 가.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지속추진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투자의 성과로 농업생산성 향상 등으로 소득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으며 생활환경개선부문도 1990년도 이후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왔으나 아직도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1999년에도 총 2,881억원(국고보조 84, 지방양여금 1,549, 지방비 664, 국고융자 584)을 투융자하여 일반정주권개발사업으로 255개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35개면을 완료,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마을기반시설 43개 지구를 추진하여 21개 지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신·개축 및 개량 등 1,238동의 주택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문화마을의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농어촌 생활환경개선과 수질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하수처리시설 2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나. 시행체계개선 및 주민참여 확대

그간에 추진되어온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 주로 관주도로 추진되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앞으로는 정주권개발 및 문화마을조성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어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주민합의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며, 장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중심생활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문화마을조성사업도 주택용지조성 후 분양에 따른 입주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외지인의 유입 등으로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의 참여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규주택용지조성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존의 중심마을을 현대식으로 정비하여 현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 다. 다양한 농어촌주택표준모델 개발·보급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시 건축설계에 소요되는 설계비 등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5년도와 1997년도에 28개의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보급하였고, 1999년도에 추가로 4개의 모델을 추가 개발·보급하였으며, 앞으로 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적합한 가변성을 수용한 다양한 농어촌 주택표준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여 주민이 주택건축시 편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정비과 시설서기관 이승찬)

### 6. 재해농가 지원 강화

재해농가에 영농의욕고취 및 생계안정도모와 복구비부담경감을 위하여 그간 지원기준강화 및 지원대상범위확대, 지원기준단가 상향조정 및 현실화등을 꾸준히 개선하여 왔다

금년에도 피해농가의 복구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원기준단가를 상향조정 및 현실화하였다( '99. 6. 7. 농림부고시 제1999-30호)

<표 3-2-19> '99재해지원 기준 단가

	종 전	개 선	비 고
○ 농경지복구비 - 유실.매몰복구비	5,430원/m <sup>2</sup>	유실 : 5,660원/m <sup>2</sup> 매몰 : 2,940원/m <sup>2</sup>	유실.매몰구분
○ 초지복구비 -경운초지	3,300천원/ha	3,447천원/ha	4.5%인상
-불경운초지	2,500천원/ha	2,631천원/ha	5.2%인상

	종 전	개 선	비 고
○ 철재파이프하우스	6,070원/m <sup>2</sup>	7,660원/m <sup>2</sup>	26.2%인상
○ 회훼류 대파대			
- 국 화	-	7,836,000	신설
- 선 인 장	-	29,530,000	"
- 카 네 이 션	-	37,860,000	"
- 글라디오러스	-	13,990,000	"
- 심 비 디 움	-	16,666,000	"

한편 재해에 대한 경각심유발 및 피해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포스터(50,000매)를 제작 각 마을, 공공기관계시판에 부착토록하였으며, 농업재해 예방 및 사후복구지원대책등 행동요령을 담은 농업재해대책업무편람(8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재해위험이 많은 저수지, 보, 제방등 수리시설(26천개소)을 사전점검하고 마대, 말뚝, 비닐등의 수방자재와 도자, 포크레인등(2,320대)를 확보하여 언제닥칠지 모르는 재해에 사전대비코자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의 재해를 거울삼아 앞으로도 예고없는 기상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특보발령등 전국적으로 기상재해가 우려될 경우 상황실 합동근무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최소화를 위해 재해예방대책강구 및 피해발생시 신속히 피해복구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농산과 식물검역사무관 김후동)

## 제8절 농정추진체계의 강화

### 1. 농림사업의 투융자 방식 개선

#### 가. 농업관련기금의 정비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조성 운용되고 있는 농업관련 기금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종자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 임업진흥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7개가 있다. 이들의 외형적인 운용규모는 '99년 기준 7조 2,569억원으로 농업부문 전체 재정운영 규모의 48.8%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2-20> 농림부문 예산 및 기금 운용규모

(단위 : 억원)

	정부예산('99)			기금('99)			계 (E)	대 비(%)	
	투융자 사업(A)	채무상환 기타	소 계 (B)	사업비 (C)	기타	소 계 (D)		D/E	C/A+C
○ 운용규모	41,086	34,993	76,079	29,974	42,595	72,569	148,648	48.8	42.2

<표 3-2-21> 농업관련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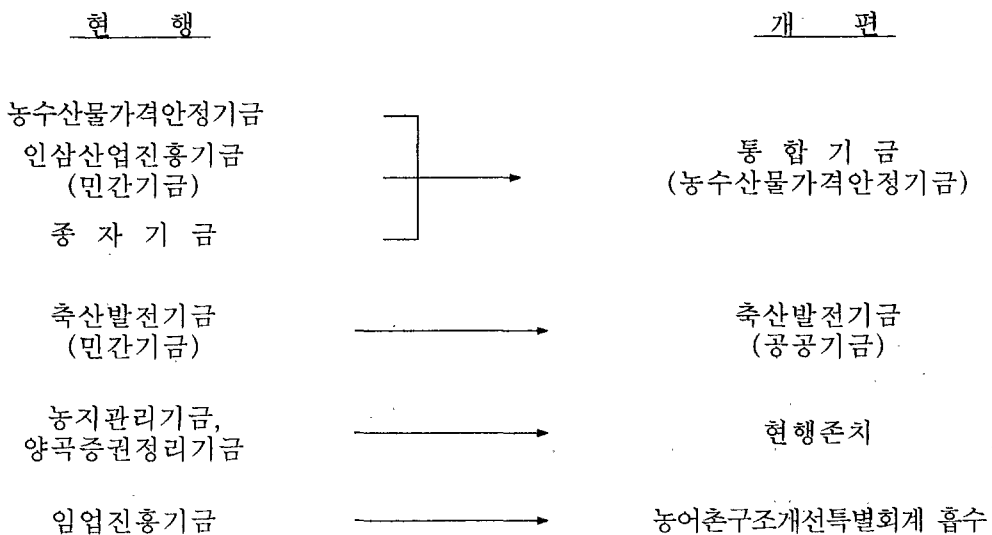
	조 성('98말)			'99운용계획		
	총조성	사 용	순조성	계	사업비	기 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26,923	5,275	21,648	18,720	18,202	518
종자기금	296	27	269	334	299	35
농지관리기금	62,075	19,310	42,765	6,803	4,237	2,566
축산발전기금	40,934	11,387	29,547	8,585	6,696	1,889
인삼산업진흥기금	165	8	157	165	87	78
임업진흥기금	1,982	2	1,980	454	453	1
양곡증권정리기금	250,948	193,816	57,132	37,508	-	37,508
계	383,323	229,825	153,498	72,569	29,974	42,595

이러한 농업관련 기금이 개별 법에 의해 각각의 사업목적에 따라 기금이 설치되다보니 품목중심으로 운용되어 자금사용이 경직화되고 여건변화에 따라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비슷한 기능을 가진 사업이 여러 기금에서 분산·중복 지원되어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로는 기금운용 규모와 기금사업 수요와의 불균형이 나타나 유사성격의 사업을 타기금 재원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예산과는 달리 기금편성 및 운용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행정부내에서 결정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특히 민간기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99년 6월에 기획예산처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사기금 등의 통폐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농림부에서는 농업관련 부문의 기금정비 방안으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인삼산업진흥기금, 종자기금을 단일기금으로 통합하고, 민간기금인 축산발전기금은 공공기금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며, 임업진흥기금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흡수통합하는 등 현행 7개 농업관련기금을 4개로 축소 통폐합하고 2개의 민간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기금이 정비될 경우 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경영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 투융자 효율성 제고

농업인·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보조지원을 지속적·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유사사업의 통합 추진으로 농업인의 자생력 배양과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칙적으로도 보조는 생산기반, 유통 등 농업 SOC적 성격의 공공사업과 친환경농업 등 외부효과가 큰 사업에 지원하고 농업인·법인경영체, 생산자조직 및 단체 등에 대한 보조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00~2002년까지 용자로 전환함으로써 자생력 배양과 함께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림사업중 유사사업도 과감히 통폐합하여 '99년 87개 사업을 2001년까지 70개 수준으로 단순화하여 농업인과 지자체의 사업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와 병행하여 유사기능과 유사지원 조건을 가진 사업을 예산상 단일 세항으로 통합·그룹화하여 예산 내역화하고 사업지침상에도 세부단위 사업을 메뉴화하여 농업인의 사업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한편,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22>

### 유사사업 통합그룹화 방안

	현 행	개 편
- 원예·특작사업군	2개 세항	2개 세항
(기타전업농, 원예·특작생산유통)	6개 단위사업	2개 단위사업
- 축산사업군	1개 세항	1개 세항
(축종별 경쟁력강화, 축산단지 등)	11개 단위사업	1개 단위사업
- 농업기계화 사업군	6개 세항	3개 세항
(쌀전업농, 생산자조직, 농기계 구입, 사후관리, 기자재 생산비축 등)	7개 단위사업	5개 단위사업
- 소득원개발 사업군	1개 세항	1개 세항
(관광농원, 민박, 휴양단지)	3개 단위사업	1개 단위사업

농업경영체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요자가 필요한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해주는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99년의 시범사업에 이어 2000년에는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동 제도를 한층 보완발전 시켜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에 대한 경영컨설팅과 경영혁신지도 등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성 검토, 사후관리 등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차등보조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9년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재정사정이 어려운 하위 20% 지자체에 대하여 지방비 부담을 5% 수준 경감한바 있으며, 지자체의 호응도가 높아 2000년에는 받기반 정비사업까지 확대하고, 차등보조율도  $\pm 10\%$ 로 상향조정하여 국고보조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한층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농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포괄보조금 형태의 지역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7년부터 종전의 소액보조사업들을 묶어 단일세항으로 예산통합 편성하여 추진하던 것을 '99년부터 사업명칭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및 농정시책 추진」에서 「지역특화사업지원」으로 변경하고, 추천사업도 7개에서 11개로 확대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사업추진 방식도 시도지사가 추천사업중 세부사업을 정하여 농림부 승인후 추진하던 방식을 추천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확정하여 농림부에 보고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실적가산금 사업도 농림부의 승인후 추진하던 방식에서 농림부에 보고후 추진하는 방식으로 시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농정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의 추진·사후관리 등에 책임을 부여하여 책임행정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 **다. 농림사업 종합평가**

UR협상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92년도에 착수한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98년에 마무리됨에 따라 추진성과와 문제점 등 추진상황 전반을 객관적 총체적으로 종합평가

정리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려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하여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WTO 체제 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소관부처별로 추진해온 1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획기간 : '94~2004)이 6년차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동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당초 농특세 취지에 맞게 앞으로의 투자방향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투융자 효율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주사 정영환)

## 라. 현장농정 점검지원 평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사업과 농정추진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평가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초에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중견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현장농정 점검지원단을 구성·운영하였다.

이 제도는 농림부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기획·입안·지원하는 농정이 도, 시·군단위 농촌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농림부 중견간부들이 정기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점검하며, 제기된 문제점과 여론을 정책수립에 유효 적절하게 환류(feedback)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농림부 중견간부들을 지역별(도, 시·군별) 담당관으로 임명하여 현장의 주요 농림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한편, 지역현안과 민원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사업과 농정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평가에 반영하여 실적가산금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등 지자체의 농정활성화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농정점검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림부 정책담당자들이 현장감 있는 농정을 추진하게 되고, 나아가 그동안 제기되어온 농업투융자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아울러 지역농업인, 농업관련기관 등에 대해 현장에 다가가서 주요 농정시책을 이해·설득하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 농정시책의 이해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투자심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안용덕)

## 2.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제도 도입

### 가. 도입배경

'90년대 들어 농산물시장개방등·농업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업구조개선투자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작목반등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도 크게 증가하였다.

개별경영체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세분화된 품목·축종별로 별도의 예산과 시행지침에 따라 시행되어 농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 종류도 많고 복잡하여 정부지원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하나의 농업경영체가 수행하는 사업이 생산에서부터 저장·유통·가공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이들 기능 각각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아야 하고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지원도 분리되어 있어 경영체의 사업계획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자금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한편 그동안의 자금지원프로그램은 행정기관과 각 지역의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심사 및 선정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대출취급기관은 기초적인 신용상태만 점검한 후 대출실행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왔다.

이렇듯 사업계획심사와 대상자 선정권한을 행정기관이 행사함으로써 농업인의 사업계획과 자금소요에 대한 마케팅이나 재무·경영 측면의 심사가 불철저하여 일부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와 수를 대폭 줄이고 사업계획심사와 대상자선정에 있어 대출취급기관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되 행정기관은 지역농업발전계획과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도록 하며 사전심사 강화와 자금지원이후의 경영·기술컨설팅을 바탕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종합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제도하에서는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자금지원을 신청하고 대출취급기관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대출심사 전문가와 컨설팅 전문가를 활용, 사업계획과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고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자금지원이후에도 경영실태 점검등 사후관리를 연계 추진하고 전문적인 경영분석이나 기술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컨설팅기관이나 회사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후지원 및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

#### 나. 도입경위 및 추진계획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제도는 당초 '96~'97년 「농정발전기획단」의 논의와 최종보고서에서 제안된 후 '97년 12월의 「농업경영혁신종합지원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도 도입의 윤곽이 마련되었다.

또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개혁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99년부터는 전국 34개 지역(농협 시·군 지부 17개소, 지역축협 17개소)에서 총 15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2000년에는 원예특작과 축산분야의 12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국에 걸쳐 확대시행한 후 2001년부터 추가적인 사업통합을 바탕으로 제도를 전면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표 3-2-23>                      종합자금제와 기존제도와의 비교

	기    존    제    도	종    합    자    금
○ 지원방식	○ 개별사업별 분산지원	○ 사업계획에 의한 종합지원
○ 사업자선정	○ 시장·군수(농발심의회)	○ 대출취급기관
○ 자금지원	○ 연1회 선정지원 - 시설자금 위주 - 신용평가 위주	○ 수시 선정지원 - 시설·운영자금 종합지원 - 사업성등 종합평가
○ 사후관리	○ 시군이 관리	○ 금융기관이 관리

### 3. 농업행정쇄신 및 규제개혁

'98년도의 대폭적인 행정규제완화에 이어 '99년도중에는 '98기존규제정비 계획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농업분야의 진입제한 및 경쟁제한적인 관행의 발굴·개선과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규제중 국제협약이행, 환경보호, 안전유지 등을 위하여 존치가 불가피한 규제에 대하여는 품질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한 규제에 대하여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99 상반기중에는 농업관련사업에 대한 규제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확정하여 정부양곡 수송과 수도작용 비료공급에 있어서 시장진입 장벽을 철폐하는 한편, 농업자재산업에서 민간경쟁을 촉진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림부문의 각종사업지침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농업인들이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사전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농림부에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사전심사 등을 통해서 이를 최대한 억제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박세민)

### 4. 농정조직의 개편

#### 가. 농림부 및 외청의 직제개편

##### (1) 제2차정부조직개편 방향

정부는 '98년의 제1차 정부조직개편을 한 후 '99년에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 정부가 1년만에 다시 제2차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IMF관리체제를 계기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된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이라는 비판과 함께 다가

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정부조직도 이에 걸맞게 효율화·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정부부문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다.

####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중앙부처 본부의 기능을 핵심역량위주로 재편하기 위하여 규제·관리기능은 대폭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하며

둘째,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국·과를 통합하여 대국대과원칙을 구현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광역화·통폐합을 추진하고

셋째, 행정수요가 증가되어 기능이 확대되는 분야는 보강하되 전반적으로는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였다.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특징은 유사이래 처음으로 실시된 민간 전문업체를 통한 정부기관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기구나 인력 감축 못지않게 정부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여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정부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할 것이다.

## (2) 농림조직개편

농림부 및 외청의 조직개편은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인력은 축소조정하고, 중복기능 또는 집행기능은 이양하거나 위임하는 등 본부기구를 핵심역량위주로 재편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99.5.24.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하였다.

### (가) 농림부

농림부의 조직개편내용을 보면

- 농산원예국을 폐지하고, 식량정책국의 식량수급기능과 농산원예국의 식량생산관련기능을 통합하여 식량생산국으로 개편하였다.
- 유통정책국에 농산원예국의 채소·과수·화훼관련 기능을 이관하여 농산물유통국으로 개편하였다.

- 공보담당관·조사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식량관리과 및 유통관리과를 폐지하고, 농업정보통계관 소속의 정보화진흥담당과 경영유통정보담당관을 정보화담당관으로 통합하였다.
- 농산물품질관리기능이 강화된 국립농산물검사소를 그 기능과 부합되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와같은 조직개편결과 종전 1차관보·1실·7국·4관·27과·12담당관·3소속기관에서 1차관보·1실·6국·4관·25과·8담당관·3소속기관으로 1국·2과·4담당관이 축소되었으며, 공무원 정원은 농림부 37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종전 국립농산물검사소) 268인이 각각 감축되고, 국립식물검역소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해외병해충연구기능이 이관되고 관련연구인력이 이체되어 10인이 증원되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단계별 인력감축계획에 따라 이미 직제에 반영된 '99년말까지 감축인력 268인외에 2000년말까지 감축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115인에 대한 직제개정을 연도말에 추진할 예정이다.

<표 3-2-24>

농림부 조직개편 현황

	차관보	실	국	관	과	담당관	소속기관
종 전	1	1	7	4	27	12	3
개 편	1	1	6	4	25	8	3
증 감			△1		△2	△4	

<표 3-2-25>

농림부 공무원정원조정 현황('99.5.24)

(단위: 인)

	계	정무	별정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기능
'99.5.23	542	2	9	1	9	1	14	27	49	127	178	44	81
'99.5.24	505	2	8	1	8	1	12	23	47	123	171	40	69
증 감	△37	-	△1	-	△1	-	△2	△4	△2	△4	△7	△4	△12

<표 3-2-26> 농림부 소속기관 공무원정원 조정현황('99.5.24)

(단위:인)

	계	별정	일반직			연구직		기능
			소계	5급이상	6급이하	연구관	연구사	
'99.5.23	3,314	331	2,432	215	2,217	24	61	466
'99.5.24	3,056	308	2,257	213	2,044	26	69	396
증 감	△258	△23	△175	△2	△173	+2	+8	△70

(나)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의 조직개편내용을 보면

- 본청은 기술보급국을 기술지원국으로 개편하고, 동국의 기술연수기능 및 관련조직(기술연수과)을 한국농업전문학교로 이관하여 농업기술교육기능을 일원화하고, 연구관리국의 연구협력과와 연구조정과를 통합하여 연구운영과로 개편하고, 동국에 농업자재품질관리 및 시험기능을 통합하여 농업자원과를 신설하였다.
- 농업과학기술원은 환경관리과와 농업생태과를 통합하여 환경생태과로 개편하고, 유전자원 및 해외병해충연구기능을 각각 종자관리소와 국립식물검역소에 이관하고, 유전자원과 해외병해충과·농약품질과를 폐지하였다.
- 원예연구소는 저장이용과를 품질보전과로 개편하여 이용기술연구기능을 폐지하고, 제주감귤연구소를 제주농업시험장 소속으로 이관하여 감귤시험장으로 개편하였다.
- 또한,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천지소 및 작물시험장의 품질이용과를 폐지하고, 농업기계화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화하기로 하였다.

이와같은 조직개편결과 조직은 2국·2관·8과·7담당관·12소속기관으로서 본청의 1개과와 소속기관의 4개과·1개지소가 축소되었으며, 공무원 정원은 본청 22인, 소속기관 119인 등 총141인이 감축되었다.

한편, 단계별 감축계획에 따라 이미 직제에 반영된 '99년말까지 감축되는 141인외에 2000년말까지 감축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73인에 대한 직제개정

을 연도말에 추진할 예정이다.

<표 3-2-27> 농촌진흥청 조직 개편현황

	국	관	과	담당관	1차소속기관	2차소속기관
종 전	2	2	9	7	12	26
개 편	2	2	8	7	12	22
증 감			△1			△4

<표 3-2-28> 농촌진흥청 공무원정원 조정현황('99.5.24)

(단위 : 인)

	계	정무	별정	2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연구직		지도직		기능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99.5.23	320	1	26	4	2	10	5	15	31	25	55	36	37	73
'99.5.24	298	1	13	4	2	9	5	17	43	29	56	27	32	60
증 감	△22	-	△13	-	-	△1	-	+2	+12	+4	+1	△9	△5	△13

<표 3-2-29>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정원 조정현황('99.5.24)

	계	별정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교육직	기능직
			소 계	5급이상	6급이하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99.5.23	2,073	8	253	63	190	322	810	4	6	25	645
'99.5.24	1,954	12	237	64	173	312	745	5	7	25	611
증 감	△119	+4	△16	+1	△17	△10	△65	+1	+1	-	△34

(다) 산림청

산림청의 조직개편내용을 보면

- 산불통제관 및 이를 보좌하는 산림보호담당관 및 산불방지도담당관을 폐지하고, 임업정책국에 산지관리과 및 산불방지과를 설치하였고, 동국의 임산물유통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은 신설되는 사유림지원국으로 이관하였다.

- 국유림과 사유림의 관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경영국을 국유림관리국으로 개편하여 동국소속의 국유림관리과·산림경영과 및 산지계획과를 국유림관리과·국유림경영과 및 산림보호과로 재편하고, 자원조성국을 사유림지원국으로 개편하여 동국소속의 자원조성과·산림환경과·산림토목과 및 기술지원과를 사유림지원과·산림자원과 및 산림소득과로 재편하고, 야생조수보호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 광릉숲의 보전과 산림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립수목원을 신설하고, 이에 관리과·식물조사과 및 식물보전과를 설치하였다.
- 중부임업시험장의 수목원과를 국립수목원으로 이관하고, 장장의 직급을 3급 연구관에서 4급연구관으로 조정하였다.
- 의정부·운두령·강릉·춘양 및 보성국유림관리소와 북부·동부 및 남부산림토목사업소를 각각 폐지하였다.

이와같은 조직개편결과 3국·2관·11과·6담당관·7소속기관(2차기관 40개)에서 3국·1관·11과·4담당관·8소속기관(2차기관 32개)으로 개편되어 1관· 2담당관·5개국유림관리소 및 3개 산림토목사업소가 축소되었으며, 공무원 정원은 산림청본청 12인과 소속기관 119인 등 총 131인이 감축되었다.

<표 3-2-30> 산림청 조직 개편현황

	국	관	과	담당관	1차소속기관	2차소속기관
종 전	3	2	11	6	7	40
개 편	3	1	11	4	8	32
증 감		△1		△2	1	△8

<표 3-2-31> 산림청 공무원정원 조정현황('99.5.24)

(단위 : 인)

	계	정무	별정	2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연구직		기능
											연구관	연구사	
'99.5.23	1,529	1	4	4	1	6	12	11	32	77	-	-	38
'99.5.24	174	1	4	4	-	5	11	11	30	72	-	-	36
증 감	△12				△1	△1	△1		△2	△5	-	-	△2

<표 3-2-32> 산림청 소속기관 공무원정원 조정현황('99.5.24)

	계	정무	별정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소계	5급이상	6급이하	연구관	연구사	
'99.5.23	1,343	-	10	750	77	673	74	148	361
'99.5.24	1,224	-	10	692	70	622	68	135	319
증 감	△119			△58	△7	△51	△6	△13	△42

(행정관리담당관실 서기관 정희준)

## 나. 농림관련 기관 및 단체의 조직개편 현황

### (1) 농업기반공사 설립추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으로 2000. 1. 1.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1999.2.5.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농림부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15인으로 구성된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어서 실무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부와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들로 구성된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이 설치되어 1999.2.8.부터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설립사무국의 구성은 농림부 7명, 농어촌진흥공사 8명, 농지개량조합 6명, 농지개량조합연합회 5명 등 총 26명으로 전문분야별로 배치하였으며 '99년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등 3 기관을 통합하여 농촌구조개선업무를 전담하는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추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3개 기관 대표와 학계, 농업인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등한 조건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둘째, 통합이전에 각 기관별로 자체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여 비효율을 제거한 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써 통합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셋째, 기관통합을 통한 종합체제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성 확보로 영농편익을 향상시키는 물론 물관리의 자동화, 인력·경비절감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농업인에게 환원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야별 세부추진방안으로 우선 조직은 본부, 도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업무체제로 통합하되 공사체제로 일원화한다. 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사무소는 수계관리, 지역적 여건, 현행 농지개량조합구역을 감안하여 80여개로 광역화할 계획이다.

인력은 각 기관별로 통합전에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의 경우는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99년말까지 400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정년 및 직제조정, 관리면적 확대를 통해 농어촌진흥공사 수준으로 감축하여 '99말까지 3기관 총정원 규모를 5,974명으로 인력조정을 한 후 통합공사로 승계조치될 계획이다.

<표 3-2-33>                      기관별 자체 구조조정 실시계획

구 분	농진공	농 조	농조연	계
현정원	2,478명	4,024	672	7,174
'99년말	2,078	3,332	564	5,974

농업기반공사는 앞으로 농업기반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생산자단체와 함께 우리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촌소득원 개발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개발정책과 행정사무관 조재호)

## (2)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획예산위원회 주관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경영혁신시안」 및 출연연구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의 조정등을 위하여 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이 공포 발효(법률 제5733호, '99.1.29)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산하에 4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를 설치하였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경제사회연구회 소속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이관되었다.

(농업정책과 행정주사 박영근)

## 5. 협동조합개혁추진

### 가. 협동조합 개혁추진 경위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협동조합개혁을 주요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 4월 13일 농·축·임·삼협 등 생산자단체, 농업인대표,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7차례에 걸친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7월 31일 중앙회 조직개편 방안, 지역조합합병, 책임경영체제 확립, 지도·감독강화 등 50여개 과제를 「협동조합개혁방안」으로 선정하여 농림부에 건의하였다.

한편 1998년 7월 28일 농림부장관은 농·축·임·삼협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개혁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되 공동개혁안을 합의하여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것임을 천명함과 아울러

각 협동조합별로 자체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1998년 8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강도높은 자체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의 경우 당초 2000년까지 20% 감축키로한 인원을 1999년

초에 앞당겨 완료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1997년 7,317억원 수준의 부실채권을 1998년에는 4,877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각 협동조합은 지난해 자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을 시행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요청한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은 1999년 2월말 까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각 중앙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1999년 3월 8일 정부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1999년을 「협동조합개혁의 해」로 정하고 농·축·인삼업협동조합중앙회의 통폐합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확립했다.

농림부는 정부의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한 직후 정부,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에 걸쳐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논의한 결과

중앙회 통합, 일선조합의 합병, 일선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등 논란이 많은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의 개혁시안을 보완하는 한편, 백수십 차례의 각종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1999년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농업인 협동조합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농·축·인삼협 등 이해당사자들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축·인삼협회장의 진술 청취, 대체토론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였다. 농업협동조합법안은 1999년 8월 12일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1999년 8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나.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방향

협동조합개혁의 기본방향은 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의 협동조합」, 즉 농업인에 대한 봉사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품목별로 나뉘어져 기능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방만한 운영이 지적 되어온 중앙회 조직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그 기능도 회원조합에게 대폭 이양함으로써 회원조합을 유통·지도사업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하여 농

업인의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게 하고

유통개혁·가격안정 등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을 일선회원조합에 집중지원하고 신용사업은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효율화·전문화를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조합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농업인조합원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조합임직원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그동안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일선조합장들의 행태를 바로잡고 방만한 중앙회도 전문사업별로 분리하여 책임경영체제를 이룸으로써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투명한 경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하는데 있다.

## 다.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내용

### (1) 일선조합

일선조합을 신용사업 중심에서 유통·경제사업 중심의 조합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중앙회 사업을 일선조합으로 이관 또는 공동출자·공동경영토록 하였으며, 중앙회 통합으로 절감되는 재원과 재정자금으로 조합별로 유통자금을 조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조합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간선제외에 이사회 호선방식을 추가하여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인 조합장의 입후보자격을 2년 이상의 조합원 신분보유기간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합장 선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또한, 조합장을 상임, 비상임으로 구분하여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 업무를 집행토록 의무화하고 상임인 조합장이나 이사에게는 고의·중과실책임뿐만 아니라 업무소홀에 따른 경과실 책임도 부여하여 경영책임을 강화하였다.

조합에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은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명부외에 추가로 이사회의사록

을 비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 제안권, 서류열람 및 교부청구권 등을 새로이 인정하여 조합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조합별로 감사 2인중 1인을 상임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였다.

현재 동일가구당 2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가입제한을 폐지하여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준조합원 자격만 부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였다.

품목별 전문조합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구역과 조합원 자격과 사업 관할 구역을 자율적으로 정관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동일한 품목이나 업종을 취급하는 품목조합이 모여 법인격을 갖는 「연합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 (2) 중앙회

현재의 농·축·삼협중앙회를 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하고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설립하여 기존 농·축·삼협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하고, 지역농협·지역축협·인삼조합 등 기존 중앙회의 회원조합도 새로운 중앙회의 당연회원으로 간주하여 중앙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자동승계하도록 하였다.

중앙회장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도·감사업무와 대정부건의 등 농정활동을 전담하게 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토록 하고, 농업경제·축산경제 및 신용대표이사간 이권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조정권을 행사하여 중앙회 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이사를 두어 대표이사가 소관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경영에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대표이사 소관의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장대표자 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추천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였다.

축산부문에는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단수로 추천하면 중앙회장은 총회의 동의없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어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중앙회장에 회원조합을 지도·감독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조합을 감사하게 되며,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업무정지, 관련 임·직원 제재도 회원조합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법에서는 조합의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을 설치·운영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중앙회의 자기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도 우선출자 대상으로 규정하여 공적자금의 투입기회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은 농림부장관이 수행하되 신용사업의 건전성 부문에 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이 대폭 인정되었다.

신·경분리 문제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여 법 시행후 2년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2년이내에 시행토록 하였다.

(협동조합과 사무관 김종훈)

## 6. 농림분야 「제2의 건국운동」 추진

「국민의 정부」는 IMF관리체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2의도약을 이루기 위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효율과 낭비구조를 타파하고 합리적 사고를 추구하는 국민 의식개혁을 위한 범국민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98년 10월에 농림부내에 농림관련 각계 인사 25명이 참여하는 「농업·농촌재도약 추진협의회」를 설치했다. 이러한 『제2의 건국운동』은 다가오는 21세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과 농업인, 농촌의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운동이다.

『농업·농촌재도약추진협의회』에서는 농림분야 제2의건국을 위한 개혁 추진방향, 개혁과제 및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며, 관련기관과 단체별로 자체 추진반도 구성토록 하였다. 동 추진협의회는 '98.10.27일 제1차회의를 갖고 향후중점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98.11.11일 농업인의 날에는 「농업·농촌 재도약 및 친환경 농업원년」을 선포하였다. 「농업·농촌재도약」은 제2의 건국운동 방향에 맞추어 우리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이루며, 농업이 국가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경제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농업·농촌재도약』을 위한 개혁과제로는 3개분야 15개과제가 있으며, 첫째 친환경농업·생명산업지키기 운동으로 흙 살리기, 내고향 물살리기, 푸른들 가꾸기, 생명의 숲 가꾸기, 아름다운 농·산촌 가꾸기, 자원절약형 농업 실천 및 식량자급도 1% 더 올리기 등을 추진중이다. 둘째로 농업인 경영 혁신·농촌활력화 운동으로서 신지식농업인 발굴·확산, 농업인 자율·책임능력 배가,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재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로 우리 농산물 일류화·세계화 운동으로서 농산물 품질(안전성) 높이기, 우리 밀·우리콩 살리기, 도·농 농산물 직거래 및 농업 명인·명품·명소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개혁의 주체인 농림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 및 지원을 유도하고, 「신지식농업인」을 발굴·육성하여 21세기 「지식농업」시대를 구현하는 동시에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과 합동(Partnership)으로 3개분야 15개 추진과제가 완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농림분야 『제2의 건국운동』을 지속적인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김윤중)

## 제 9 절 WTO차기 농산물협상 대책 추진 및 남북농업 교류·협력 활성화

### 1. WTO 차기농산물협상 대책 추진 방향

WTO 차기농산물협상은 '99.11.30~12.3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제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98년도부터 가동한 협상대응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차질없이 협상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98.4월부터 가동한 협상대책단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통상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하여 협상동향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99.2월 실무지원반을 5개의 분야별 팀과 교수·연구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포함한 태스크포스 형태로 확대개편하여 예상쟁점을 분석하고 우리 입장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3/4분기중에는 협상 출범에 대비하여 협상전략을 짜고 직접 협상에 참여할 협상추진반을 가동할 예정이다.

협상담당조직에 통상분야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계속 고정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9년에는 통상전문변호사를 고용하여 주요국의 협상관련 동향정보를 획득하고 협상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다.

또한, 농업인 교육, 농업관련 공직자 대상 순회교육, 농림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차기협상 동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회 및 비정부기구(NGO)의 협상 관련 활동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

대외적으로는 WTO와 APEC, OECD, FAO 등 협상관련 논의의 장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있으며, 특히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의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 차기협상과 관련된 각종 국제 세미나와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협상이 임박함에 따라 주요 협상국 주재 농무관을 통해 차기협상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주요국과의 고위급 협상책임자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98년에 결성된 WTO의 수입국 비공식 모임을 우리나라가 주관하여 갖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99.5월에 농업장관회의를 갖고 앞으로 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김종철)

## 2. OECD의 차기 농업협상 관련 논의 대응

### 가. OECD 한국농정검토 보고서 발간

OECD는 '97년초부터 시작한 한국농정검토 작업을 마무리하여 '99년 3월말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한국농정검토보고서(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n Korea)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이 우리나라 농업정책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 최초의 보고서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보고서는 '79-'97년의 농업 일반현황과 농업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의 농업정책 방향으로서 개별농민에 대한 직접지불 확대, 지속가능한(sustainable) 친환경농업 추구, 적절한 수준의 농업생산기반 유지, 농업정책의 투명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발간으로 한국 농업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보고서가 기초하고 있는 OECD의 농정개혁원칙은 회원국들간의 합의와 WTO의 정책개혁 방향을 따르고 있으므로, 보고서의 권고를 향후 우리 농업정책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99년 6월에는 한국농정검토 세미나를 개최하여, OECD 사무국의 G. Viatte 식량농업수산물국장 등 관계자를 초청하고 학계, 언론계,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관련기관 등에서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향후 농정개혁 방향과 OECD의 주요 논의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이명순)

### 나. OECD 농업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활동 대응

OECD 농업위원회는 산하에 농업정책 및 시장에 관한 작업반(APM)과

농업위/무역위 합동작업반(JWP)을 두고 있다. '98년 12월의 제 129차 농업위원회에서는 향후 2년간의 OECD 작업계획이 승인되었는데, 이에 따라 2000년까지 APM에서는 주로 농촌고용, 농지이용, 소득위험관리 등 국내 정책에 대한 분석이 다루어지고, JWP에서는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WTO 차기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시장접근, 수출경쟁, 생명공학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99년 4월에 있었던 제130차 농업위원회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수입국측과 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국측이 다원적 기능에 대한 분석의 범위와 방식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였으며, 사무국이 다원적 기능의 개념 정립, 평가 및 계량화, 정책대안 제시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고서를 제출하면, 2000년말경에 보고서를 승인하기로 하였다.

또 '99년 6월에 있었던 JWP에서는 WTO 차기협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분석 작업으로서, 시장접근, 수출보조, 국내보조 측면의 UR 이행 평가, 식품안전 및 품질에 대한 연구, 시장접근 분석, 무역자유화와 환경의 관련성 연구 등의 작업 계획이 의제로 제출되었다.

즉 2000년초부터 시작되는 WTO 차기 농업협상의 일정과 시기를 같이하여 OECD에서도 무역관련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OECD가 차기 농업협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OECD 사무국의 작업 방향은 '98년 3월의 각료급 농업위원회에서 강화된 OECD 농정개혁원칙에 따라, 농업보조의 감축, 무역자유화의 확대 등 WTO의 농정개혁 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무국의 작업 진전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WTO 차기협상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OECD의 보고서에 논리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하여, 입장을 같이 하는 EU, 일본,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들과 공조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국제협력과 사무관 서해동, 이명순)

### 3. 남북농업교류·협력 방안

#### 가. 「국민의 정부」 남북 농업 교류·협력 추진방향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남북교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제반조치들을 시행했다.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이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1998년 4월 30일 발표한 「남북경협활성화조치」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토대위에서 민간주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정부는 과당경쟁 및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등 교류협력 질서 확립에 주력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북한식량문제의 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을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기본방향하에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질서있게 추진해 나가며, 정부차원의 지원은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차원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도 UN회원국의 일환으로서 UN기구의 대북지원에 대하여 우리의 경제력 등에 상응한 규모로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에서 교류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다 많은 농업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남북한의 농업부문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북한농업연구센터」와 연계하여 학계, 연구기관, 농업인 단체 및 정부부처가 광범위하게 참여한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남북농업 교류협력을 위한 정보, 기술, 자문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 나. 북한 식량 수급상황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매년 200만 톤이상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식량난은 집단생산체제의 비효율성,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비료·농약 등의 영농자재 부족, 수송체계의 마비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최근 연속된 기사재해(홍수, 가뭄)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분석에 의하면 1998년 북한의 곡물 수요량은 1인 1일 450g 배급기준으로 530만톤이나 1997년 곡물생산량이 쌀 150만톤, 옥수수 160만톤 등 총 349만톤에 불과해 180여만톤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은 이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100만명이상의 정규군을 유지하고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금수산 기념궁전 건설 등 정치선전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함으로써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집단적인 농업생산체제, 생산기반, 영농자재 공급, 농업기술수준 및 자원배분체제하에서는 매년 기근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문제는 외부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해결 될 수 없으며, 식량부족사태를 가져온 구조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북한 당국의 농업부문 개혁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는 자구적인 해결노력이 필요하다.

## 다. 농업부문 교역현황

남북한 교역은 1988년 '7·7특별선언'이후 북한에 대해 경제개방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1997년에는 위탁가공형태의 교역이 확대되고 대북경수로 건설사업의 진전 등으로 교역규모가 3억달러를 돌파하였으나, 1998년에는 IMF관리체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다 내수경기까지 부진하여 남북교역 관련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위축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교역여건을 감안, 1998년 4월 30일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남북교역대상물품 및 반입·반출승인절차



<표 3-2-35>

한국의 대북한 지원규모(1995~98)

연도	정부차원 지원		민간차원 지원	
	금액	비 고	금액	비 고
1995	2억3,200	쌀 15만톤		('95.9~'97.5 : 국적경유)
1996	305	혼합곡물,분유,기상자재	496	담요,밀가루,분유,식용유,종자
1997	2,667	혼합곡물,옥수수,분유,의료 등	1,740	옥수수,밀가루,라면,영양제 등
1998	1,100	옥수수,밀가루	2,085	곡물,비료,소,식용류,분유 등
계	2억7,272		4,321	

자료 : 통일부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1995년 8월 23일 북한이 최초로 UN에 수해 긴급지원을 요청한 이후 UN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다. 1995~1998년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우리정부 및 민간기여분 제외)은 7억 2,070만달러에 달하여 옥수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450만톤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표 3-2-36>

한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비교

(단위 : 만달러)

구 분	한 국	국제사회	총지원규모
1995~97	28,408	41,680	70,088
1998	3,185	30,390	33,575
계	31,593	72,070	103,663

자료 : 통일부

마. 민간부문의 농업협력 추진현황

남북한간 민간부문의 협력사업은 1998년말 기준으로 3개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남북한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본격적인 협력사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은 조심스럽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사업의 가능성을 시

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농업협력사업의 성격을 구분해 보면 ①계약재배를 매개로 농자재와 농산물을 교역하거나 합영농장을 설립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협력사업(두레마을영농조합, 백산실업과) ②종자 및 재배기술 교환과 공동연구를 통해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농업기술협력사업(국제옥수수재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2-37> 남북한 민간 농업협력사업 승인현황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승인	추진상황
국제옥수수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방식: 농업기술교류협력</li> <li>- 남측: 옥수수종자, 자재, 기술지원</li> <li>- 북측: 시험재배</li> <li>▪ 협력규모: 220만달러</li> <li>▪ 옥수수 신품종 현지 시험재배</li> <li>- 10개지구 1,000ha 시험재배</li> <li>▪ 재배기술교류 및 공동연구</li> <li>▪ 비료 및 종자지원</li> </ul>	'98. 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수수종자(수원19호)와 비료지원</li> <li>▪ 북한 10개지역 2,074ha에 파종 및 시험</li> </ul>
두레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방식: 계약재배, 합영농장설립</li> <li>- 합영농장(30ha의 채종, 시험농장)</li> <li>- 계약재배(약 3,000ha의 계약재배)</li> <li>▪ 협력규모: 200만달러</li> <li>▪ 인공씨감자 지원</li> </ul>	'98. 7.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씨감자 5톤과 비료200톤을 나진선봉행정경제위원회를 지정기탁형식으로 지원</li> <li>▪ 합작회사 설립은 지원</li> </ul>
백산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방식: 합영회사설립(나선지역)</li> <li>- 중국측 투자지분 인수</li> <li>▪ 협력규모: 81만달러</li> <li>▪ 버섯배지생산, 국내 농가에 보급</li> <li>▪ 버섯생산 및 수출</li> </ul>	'98.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사업 승인후 사업추진에 진전이 없음</li> </ul>

민간부문 농업협력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협력사업의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추진과정의 통제와 예측이 곤란하고 복측의 잦은 태도변화로 협력사업 추진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협력사업자의 전문성의 확보와 사업추진에 관련된 적절한 지원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바. 국제기구를 통한 농업협력사업**

국제기구에서도 북한의 농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한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농업개발 지원사업을 통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남북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FAO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한·FAO 신탁기금사업(50만불)과 농약지원사업(30만불)에 참여하고 UNDP의 복구사업에 피해복구장비를 지원('97년, 120만불)했으며, '98원탁회의(UNDP R/T)에 참석하였다. 국제기구에서 추진하는 북한농업개발 지원사업에 단순 참여하는 경우에는 우리측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므로 결국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례로 FAO의 신탁기금사업의 경우 우리측의 요구사항이 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사업 경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정작 중요한 조사, 감독, 평가작업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관 정연호)



여 백

## 부 록

- 농업·농촌기본법
- 「국민의 정부」 주요농정 추진사항

여 백

# 農業 · 農村基本法

##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와 國民經濟의 基盤인 農業과 農村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業 · 農村이 나아갈 방향과 國家의 政策方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理念) 農業은 國民의 食糧을 안정적으로 供給하고 國土環境保全에 이바지하는 등 經濟的 · 公益的 기능을 수행하는 基幹産業으로서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의 基盤이 되도록 하고, 農業人은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다른 産業從事者와 균형된 所得을 실현하는 經濟主體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農村은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産業 · 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이를 未來世代에 承繼되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第3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農業”이라 함은 農作物生産業, 畜産業, 林業 및 이들과 관련된 産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農業人”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3. “農業經營體”라 함은 農業人,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4. “生産者團體”라 함은 農業生産力의 增進과 農業人의 權益保護를 위한 農業人의 自主的인 組織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5. “農村”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6. “農産物”이라 함은 農業活動에 의하여 生産되는 農作物·畜産物·林産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産物을 말한다.

第4條(國家·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の 責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農村地域開發 등을 위한 綜合的인 施策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②農業人は 農業·農村의 發展主體로서 品質 좋고 安全한 農産物을 안정적으로 生産·供給하고 生産性向上과 經營革新 등을 통하여 國家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第2章 農業·農村施策의 基本方向

第5條(施策의 수립·施行의 기본원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市場經濟原理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農業의 公益的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第6條(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이 國家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필수적인 要素임을 認識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食糧自給水準의 目標를 設定, 유지하며 적정한 食糧在庫量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農業構造改善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生産·流通 등 綜合的인 農業構造의 개선을 통하여 農業의 競爭力을 높이고 農業人의 所得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農村地域開發 및 福祉增進)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을 都市와 連繫된 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農村의 快適性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地域의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전·계승하고 農村住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9條(環境親和的 農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環境保全 機能을 增大시키고 安全한 農産物의 生産 및 消費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

속가능한 環境親和的인 農業을 육성하여야 한다.

第10條(統·對備 農業政策) ①政府는 統·에 대비하여 北韓의 農業生産體制, 農地 및 農産物流通制度 등에 대한 調査·研究를 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南北韓間의 農産物去來는 民族內部去來임을 인식하고 南北韓間 農業部門의 相互交流 및 協力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第3章 農業構造改善

#### 第1節 農業人力の育成

第11條(家族農의 경영안정) 政府는 家族勞動力을 主軸으로 한 家族農의 生産性向上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家의 特性에 맞는 規模化·專門化·協同化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12條(後繼農業人의 육성) 農林部長官은 미래의 農業人力を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農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者를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後繼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第13條(專業農業人의 육성) 農林部長官은 專門農業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추고 農業發展에 中樞的이고 先導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農業人을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第14條(女性農業人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政策의 수립·施行에 있어서 女性農業人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女性農業人의 地位向上과 專門人力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15條(營農組合法人의 육성) ①協業的 農業經營을 통하여 生産性を 높이고 農産物의 出荷·加工·輸出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農業人은 5人以上을 組合員으로 하여 營農組合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營農組合法人은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營農組合法人은 農業人과 農産物의 生産者團體중 定款이 정하는 者를

그 組合員으로 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農組合法人에 出資하고 議決權이 없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④營農組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의 組合員 또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⑤商法 第176條의 規定은 營農組合法人の 解散命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法院에 營農組合法人の 解散을 請求할 수 있다.

⑥營農組合法人の 設立·出資·사업·定款記載事項 및 解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農業會社法人의 육성) ①企業적으로 農業을 경영하거나 農産物의 流通·加工·販賣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 農業人의 農作業을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者는 農業人和 農産物의 生産者團體로 하되, 農業人이 아닌 者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범위안에서 農業會社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③第15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農業會社法人의 設立·出資 및 附帶事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중 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7條(農業人의 經營革新 및 資金支援)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이 지속적인 經營革新을 통하여 所得을 높일 수 있도록 農業經營의 相談·諮問, 敎育訓練 및 情報提供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農業經營體에게 그 事業計劃, 技術水準 및 經營能力 등을 고려하여 農業分野의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第18條(農業關聯團體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의 權益을 보

호하고 經濟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 生産者團體 및 農業人團體 등 農業 關聯團體의 設立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第2節 農地의 이용 및 보전

第19條(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農地는 國民食糧의 안정적인 供給 및 環境 保全을 위한 基盤이며 農業과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資源으로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第20條(農地의 所有와 이용)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憲法상 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農地의 所有 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農業과 國家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農地의 利用增進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1條(農地의 보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農地의 보전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農業生産基盤이 整備되어 있거나 集團化되어 있는 優良農地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3節 農業生産構造의 高度化

第22條(農業生産基盤의 整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農業生産力이 확보될 수 있도록 農業生産基盤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3條(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 流動化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生産性を 향상시키고 農業人의 所得이 안정될 수 있도록 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産의 流動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4條(農業機械化 등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營農費用을 절감하



고 農業의 生産性を 높일 수 있도록 農業機械·農業資材·農業施設의 研究·開發·普及과 그 活用을 위한 教育訓練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5條(農業科學技術의 振興)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先進化·尖端化를 추진할 수 있도록 尖端農業科學技術 및 實用農業技術의 研究·開發·普及 등 農業科學技術振興을 위한 綜合的인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令으로 정한다.

第26條(벤처農業 등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分野의 尖端科學技術 및 營農·經營技法의 開發을 獎勵하고 이를 普及하며, 農業과 農業關聯産業의 有機的인 連繫를 통하여 農業의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農業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第27條(知的財産權 등의 보호) ①政府는 農業遺傳資源, 營農技術, 商標 등 有·無形의 農業關聯分野의 知的 權利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地域特化産業의 육성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域의 固有한 특성을 가진 農産物 및 그 加工品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28條(農業 및 農村地域의 情報化)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 및 農村地域에 대한 情報化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 및 農村地域 關聯情報를 제공하는 者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9條(農業技術開發事業의 추진) ①政府는 實用農業技術, 農業關聯 生産技術 등을 신속하게 開發·普及하기 위하여 農業關聯 研究機關 또는 團體 등으로 하여금 農業技術開發研究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研究課題를 수행하는 農業關聯 研究機關 또는 團體 등에게 이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 第4章 農産物의 需給安定 및 流通改善

第30條(農産物의 需給 및 價格의 安定) ①政府는 農産物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의 安定을 위하여 農業觀測, 生産調整, 收買備蓄 및 生産者團體의 自助金造成 등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또는 農産物流通業을 영위하는 者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1條(農産物의 流通改善)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生産者團體를 중심으로 한 生産地流通의 活性化를 적극 도모하고, 農産物의 生産地와 消費地에 都賣市場, 共販場, 物流센터등 다양한 流通施設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의 포장·規格化 등 物流의 標準化를 촉진하고 다양한 流通情報의 蒐集·제공 및 流通教育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32條(農産物의 品質管理 등) ①政府는 農産物의 商品性提高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原産地表示 및 品質管理 등을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國民의 건강과 農業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輸出入 農産物과 動植物에 대한 檢疫 및 衛生檢査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33條(農産物加工産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과 食品産業의 調和로운 발전과 農産物의 附加價値를 높이기 위하여 農産物加工食品 및 傳統食品의 研究開發, 加工施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第5章 農産物の交易 및 國際協力

第34條(對外通商 및 國際協力) ①政府는 우리나라의 權利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綜合的인 農業通商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農業分野의 國際協力增進을 위하여 農業政策에 관한 情報 및 農業人力·技術의 交流, 農業關聯 國際機構活動에의 참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海外依存도가 높은 農産物の 安定적 供給을 위하여 農業投資環境調査 등 海外農業開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5條(農産物の 輸出振興)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産物の 輸出振興과 우리 食文化의 傳播 등을 위하여 海外市場開拓, 貿易情報의 蒐集·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産者團體 및 農産物を 輸出하는 者 등에게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6條(農産物の 輸入管理) 政府는 農産物の 輸入增加로 인하여 國內의 農業發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第6章 農村地域開發 및 所得支援

第37條(農村地域開發施策의 수립)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삶의 질 향상과 國土의 균형있는 開發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農村地域開發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施策을 수립하는 때에는 環境保全을 고려하여 開發과 보전이 調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8條(農村地域産業의 振興 및 開發)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所得增大와 農村經濟의 活性化를 위하여 産業團地造成, 地域特産品生

産團地の 육성, 農産物加工業을 비롯한 農業關聯産業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都市民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都·農間の 交流擴大 및 農村住民의 所得增大를 위하여, 地域의 特色을 살린 綠色觀光 및 休養資源의 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地域文化施設 등의 設置·운영과 地域의 文化行事開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9條(農業人에 대한 所得支援) 政府는 農業人의 所得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지원을 한다.

1. 零細農 등을 위한 지원
2. 土壤 등 環境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農業災害에 대한 지원
4. 農業經營의 規模化 등 構造調整을 위한 지원
5. 條件不利地域에 대한 지원
6. 기타 農業生産과 직접 連繫되지 아니하는 所得補助

第40條(農業災害에 대한 施策) 政府는 自然災害로부터 안정적인 農業經營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農産物生産을 위하여 旱害·水害·風害·冷害 등 農業災害에 대한 豫防·應急對策·復舊와 農業災害保險, 共濟制度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41條(農地轉用負擔金) ①農林部長官은 農村 등의 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地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造成費를 納入하여야 하는 者에 대하여 轉用負擔金을 賦課·徵收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금액은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 관한法律에 의한 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賦

課基準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의 수준, 轉用에 따른 이익의 발생정도 등을 참작하여 差等賦課할 수 있다.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을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農地轉用の 許可·協議·同意 또는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農地轉用の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때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農地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承認을 얻어야 하는 者중 轉用負擔金의 賦課가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轉用負擔金이 減免되지 아니하거나 減免比率이 보다 낮은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轉用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轉用負擔金중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제외한 금액은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 納入하여야 한다.

⑥農林部長官은 農地法 第53條 또는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을 받은 者에게 轉用負擔金の 賦課·徵收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지급할 수 있다.

⑦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の 賦課·徵收 및 過誤納金の 반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轉用負擔金を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第7章 農業·農村發展計劃의 추진

第42條(農業·農村發展計劃) ①農林部長官은 農業의 발전과 農村地域의 均

형있는 開發을 위하여 農業·農村發展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廣域市·道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道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 計劃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市·郡·區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郡·區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發展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3條(農政審議會) ①農業·農村의 發展에 관한 基本計劃, 市·道計劃 및 市·郡·區計劃 기타 農業·農村의 發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に 中央農政審議會를, 市·道에 市·道農政審議會를, 市·郡·自治區에 市·郡·區農政審議會를 각각 둔다.

②각 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農業·農村發展計劃의 효율적 추진) ①農林部長官은 基本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豫算編成時 基本計劃에 포함된 事業費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각 地方自治團體의 農業·農村發展計劃에 대하여 基本計劃과의 連繫性, 推進實績 및 成果 등을 評價하여 그 결과에 따라 豫算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第45條(農政에 관한 年次報告書) ①政府는 매년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中央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 및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은 매년 당해 地域의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해당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종 農業施策 등에 대한 評價가 포함되어야 한다.

## 第 8 章 補 則

第46條(準農村地域에 대한 지원)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村외의 地域으로서 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과 都市計画法에 의한 開發制限區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農村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47條(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과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48條(權限의 위임 등) ①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漁村振興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管理基金의 運用·관리업무를 委託받은 者로 하여금 第41條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徵收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다음 各號의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1. 農業基本法
2. 農產物價格維持法
3. 農水產物輸出振興法

<부칙 이하 생략>

# I. 농가 부채대책 추진

## 1. 추진배경

'97년말 외환위기이후 경제가 위축됨에 따라 국민소득이 감소되고 소득 탄력성이 큰 쇠고기, 우유, 채소류를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농산물가격이 폭락하였다. 이로인하여 농가의 농업 조수입은 대폭 감소한 반면, 비료, 농약, 농구비, 사료 등 자재값이 인상되어 농업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채를 진 농가는 원금상환 및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농촌금융의 관행으로 되어있는 농업인 상호간의 상호연대보증 문제는 한농가의 도산이 타농가 또는 농촌사회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연대보증 문제의 해결이 농가부채문제의 커다란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 농가 경영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금리인하, 특별경영자금 지원, 농업자금연대보증 해소대책 등 다양한 농가부채경감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2. 추진경과

### 가.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민의 정부 출범후 농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한 「부채조사협의회」를 구성('98.4.18)하여 농가부채 규모와 조사 방안등에 관한 2차례 논의를 거쳐 부채조사방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98년 5월 18일과 19일 부채관련 토론



회를 개최하였고 부채규모 조사보다는 대책마련이 중요하다는 농민단체의 건의를 받아 「부채조사협의회」를 「부채협의회」로 확대 개편하고 '98년7월 25일 '98년8월12일 2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채대책을 협의하였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농단협 등을 비롯한 14개 농민단체에서 실질적인 부채대책 방안마련을 위해 「부채협의회」를 「농가부채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도 농민단체장으로 하자는 건의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민단체장(8명), 각 협동조합중앙회부회장(4명), 학계(4명), 농림부관련 공무원등이 참여하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98.8.17)하였고 8차의 회의를 거쳐 건의안을 마련, '98년 10월 13일 제출하게 되었다.

#### 나. 농가부채대책위원회 건의 내용

첫째, '98.10~'99.12 기간중 상환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 원금과 이자를 2년간 상환연기 한다.

둘째, 연기자금을 순연상환하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한다.

셋째, 정부는 기대출된 정책자금 금리를 IMF이전 수준으로 인하(6.5%→5%)하기 위한 이차보전 예산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99.12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상호금융자금 원금 2년간 상환유예한다.

다섯째, 농업인에 대한 상호금융 금리를 2%p 인하하고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추가인하 한다.

여섯째, 특히 어려운 농업인에 대하여 농업생산목적으로 사용한 상호금융자금을 엄격히 선별하여 정책자금 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협동조합과 정부가 함께 강구한다.

일곱째, 상호금융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 3. 농가부채 경감대책

#### 가. '98년도 추진 사항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98년 11월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을 수립하여 '98년10월부터 '99년12월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농업생산목적 중장기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상환기일을 2년간 연기하는 대책을 시행하였다. 상환연기 대상자금은 각종 농업시설자금과 경영체 육성자금 등으로 한정하였고 단기자금인 농업경영자금과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자금, 생활환경개선 등에 지원되는 자금은 제외하였다.

거의 모든 농가에 일률적인 혜택을 주었던 과거의 부채대책과는 달리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그 기준을 엄격히 하였다.

예컨대 농업정책자금을 부당 사용한 농업인 또는 성실한 농업인이라도 농업용 이외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부채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발표시에는 지원대상자를 부채잔액 5백만원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후속보완대책 마련시 3백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아직 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거치기간 중에 있을 지라도 이자가 고액 부채인 경우 상당한 상환부담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자금대출에 있어 보증인등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부채대책 자금을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운영에 특례를 마련하여 1억원 범위내에서는 담보나 보증인 없이 간이 신용조사에 의한 대출이 가능토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은 부채대책 추진에 따라 상환연기되는 중장기 정책자금규모를 총 1조4천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로 중장기 정책자금 상환연기 신청('98.11.30-12.23)을 받은 결과 95,690농가가 9,021억원(당초계획 1조4천억원)을 신청하여 지원계획대비 64.4%로 나타났다.

농가의 신청이 낮은 이유로는 연체농가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었을 뿐

만 아니라 소액 대출금은 신청을 기피하였고, 2년후 일시상환이라는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을 기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99년도 추진 사항

'99년1월1일부터 농업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중장기 정책자금 71,097억원에 대해 금리를 당초 연6.5%에서 1%P를 인하하여 5.5%로 운영하므로써 801억원의 부담경감효과를 가져왔다.

상호금융자금(농협 196,739억원, 축협 9,930억원, 임협 1,180억원, 삼협 223억원)에 대하여도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금리도 2%P 인하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농가경영을 회생시키고 고액 시설물의 유희화 방지하기 위해 1,000억원을 확보하여 정책자금 대출액이 5억원이상인 경영체를 대상으로 정밀 경영평가를 실시한 후 경영회생이 가능한 경영체에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실경영체 정리·인수지원 계획을 시행하여 경영체 인수희망자에게 인수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3월28일에는 농업생산목적의 상호금융 부채차입으로 고리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하여 특별경영자금 7,000억원을 마련하여 연리 6.5%,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87천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금리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농가의 저축을 증가시키고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축·임·삼협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하여 비과세를 2000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5월1일 정책자금 93,000억원의 금리를 0.5%P 추가 인하하여 IMF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데 이어, 7월 1일부터 농·축산경영자금 44,700억원에 대한 금리도 IMF이전 수준인 5%로 환원시켜 569억원을 농가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리고 농림수산업자 무입보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 농신보 제도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중산층·서민가계안정과 태풍 및 수해의 영향으로 과수낙과 및 인삼침수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99년 8월 제2회 추경예산에서 특별경영자금 1조4,500억원을 추가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생산목적 상호금융대출잔액이 1,000만원이상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협의 시·군지부 심사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선정한 후 5,000만원까지 연리 6.5%(이자년 1년 후취), 2년후 일시 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다. 농가부채 경감대책의 효과**

IMF이후 농자재가격상승 및 농·축산물가격 하락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농업인 단체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위원회」에서 건의 모든 사항을 수용하여 농가부채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시행하므로써 '99년 연말까지 1조4천억원의 농가의 직접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연대보증부담 완화 및 연체자 해소대책**

#### **가. 추진배경**

'98년 농업인 대표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세차례에 걸쳐 단계적인 부채대책을 추진하므로써 연간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농가의 직접부담경감 효과를 가져왔으나, 일부농가는 도산이 불가피하였고 연대보증관행으로 농촌에서 주채무자의 도산이 연대보증을 선 농가의 도산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연대보증문제가 농촌지역의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연대보증 피해를 차단할 특별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연대보증피해의 심각성 때문에 '99년8월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농어민의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99년 8월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연대보증 부담완화 및 연체채무 해소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나. 대책 내용

농업인에 대한 대출액 약 28조원중 연대보증 대출액은 43.7%인 12조2천 억원이며 이 금액의 56%에 해당하는 6조8,400억원이 농업용 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대출액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 부담완화 방안으로는

첫째로, 정상 상환중인 자금 6조4,800억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에서 무입보로 보증하여 해소시키기로 하였다. 2000년 1월~6월 기간중 채무자가 대출취급기관에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간이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체하고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추진된다.

둘째로, 연체상태에 있는 농업용 자금의 연대보증 해소를 위하여 '99년9월부터 지원되는 1조4,5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의 지원대상을 연체자도 대상으로 포함하여 우선 연체를 해소한 후 연대보증을 농신보 보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아울러 연체채무자가 스스로 연체를 해소한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농신보로 대체해 줄 계획이다.

## 다.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6조4,800억원에 달하는 농업용 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소함으로써 연대보증을 해준 약60만 농가들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한 보증피해로 도산하는 사태를 사전 방지하여 안정된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농업인들의 연쇄도산 우려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영농의욕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농가부채대책관련 추진 일지

일 자	내 용
'98. 1. 16	정책자금 상환연기 - 축산 및 시설원에 정책자금 3~6개월 상환연기
'98. 4. 2	한농연과 전농 공동 기자회견 - 농가부채 민관 공동조사위원회와 조사반 구성요구
'98. 4. 18	농가부채조사협의회 개최 - 농가부채 조사방법 및 농가부채 조사실시 논의
'98. 5.18~19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간담회 개최 - 농민단체, 생산자단체, 학계, 농림부 관계자 등 17명 - 농가부채의 조사, 부채대책 검토, 농가부채협의회 설치
'98. 5. 22	농가부채대책에 대한 회의 - 참석: 농경연, 생산자단체, 농림부 관계자 - 농업금융과 제시 대책(안) 논의, 농·축협에 대하여 부채 경감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 요구
'98. 6. 19	농가부채협의회 1차회의 - 농가부채조사 실시방법 및 일정협의, 농가경제 표본 농가 확인조사 등
'98. 7. 9	예산청, 농가부채 경영자금 1조원 관련회의 - 참석: 예산청, 농협, 농경연,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 - 농가부채대책 예산확보의 필요성과 농가부채 대책 추진 방향 토의
'98. 7. 15	농가부채협의회 2차회의
'98. 7. 30	전농가 및 농업법인의 농·축협 부채조사 - 150만 전농가 주민등록번호와 농업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산 입력하여 농가부채 조사
'98. 8. 12	농가부채협의회 3차회의 - 부채대책위원회 발족, 정책자금만 우선 경감하되, 상호금융도 경감대상에 포함, 경감대상 선별 필요 등

일 자	내 용
'98. 8. 17	농가부채대책위원회구성 및 1차회의 - 회의진행 방법 및 실무대책반 구성
'98. 8. 25	농가부채대책위원회 2차회의 - 실무작업단 구성, 부채규모문제, 상호금융 포함여부
'98. 9. 1	농가부채대책위원회 3차회의 - 부채경감의 목적, 상호금융부채 포함여부, 중장기 정책 자금 상환유예 우선순위 등
'98. 9. 8	농가부채대책위원회 4차회의
'98. 9. 15	농가부채대책위원회 5차회의 - 하한선 결정,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 및 지원 우선순위
'98. 9. 18	한농연주최 농가부채 대책수립 토론회 - 참석: 3당 의원 및 농민단체장 등 12명
'98. 9. 22	농가부채대책위원회 6차회의 -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안) 검토
'98. 9. 29	농가부채대책위원회 7차회의
'98. 10. 13	농가부채대책위원회 8차회의 -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정책건의서 확정
'98. 11. 24	농가부채 및 경영안정대책 세부추진계획 시행 - 중장기 정책자금 2년간 상환연기 부실경영체 정리·지원 - 상호금융자금 금리인하
'98.11.26~11.28	농가부채대책 세부추진계획 전국순회교육 실시
'98. 11. 28	농가부채대책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농가부채대책 추진 및 신청접수 상황 파악

일 자	내 용
'98. 12. 8	농가부채대책 지원신청기한 연장 - (당초) 12. 8 → (변경) 12. 15
'98. 12. 9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규정 제정 시달 - 부채대책자금 대출잔액 1억원까지는 간이 신용조사 및 보증인 없이 농신보 보증서 발급
'98. 12. 14	농가부채대책 보완지침 시달 - 지원대상 범위 확대 - 지원자금의 금리를 연 5.5%로 인하
'99. 2. 22	농가부채대책 후속보완조치 발표 - 후속지원자금 7,000억원 지원
'99. 3. 18	부실경영체 정리·인수지원 세부추진계획 시달 - 지원규모 : 1,000억원
'99. 3. 28	특별경영자금 세부추진계획 시달 - 지원규모 : 7,000억원
'99. 5. 1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5.5% → 5.0%)
'99. 6. 2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 개선 - 무보증 보증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99. 7. 1	농·축산 경영자금(44,700억원)금리 인하(6.5%→5.0)
'99. 8. 20	연대보증 부담완화 및 연체해소 대책 발표 - 농어민 연대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



## Ⅱ. 농산물 유통개혁

### 1.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배경

그동안 수차례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을 추진한 결과, 산지에는 포장센터나 집하장, 소비지에는 도매시장·물류센터 등의 유통시설이 확충되고 도매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하며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유통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등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가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개방시장과 농산물수입이 자유화되고, 대형유통업체가 급속히 확산되어 수입과 직거래를 통한 농산물 구입이 점차 늘어나 소비지에서 원하는 농산물을 공급하지 못할 경우 우리 농산물의 판로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농산물 유통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더군다나 '97년말 한국경제의 IMF관리체제이행에 따라 국민소득감소는 물론 농산물 수요의 급격한 위축, 재정긴축에 따른 투융자사업의 축소, 영농자금금리부담 가중, 환율인상으로 인한 영농자재가격의 등귀현상 발생등 IMF사태는 우리 사회·경제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의 가격안정을 위해 농산물유통개혁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그동안의 유통개선대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근의 유통여건변화와 IMF사태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농산물 유통개혁을 착수하였다. 급변 개혁은 과거와 달리 농업인·소비자·유통인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를 구성('98.3.19)하여 수차례에 걸친 회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농산물 유통개혁(안)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이 건의(안)을 바탕으로 「농산물유통개혁대책」을 확정·대통령께 보고('98.7.23)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안법, 품질관리법 등 법령 제·개정추진 및 유통예산을 대폭 늘려 '99년부터 유통개혁을 본격 추진하였다.

## 2. 농산물 유통개혁 대책 내용

### 가. 새로운 수급안정제도 정착으로 농산물 제값받기 실현

생산계획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토록 하는 수급안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관측센터」를 설치('99.1)하여 생산, 출하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면적·출하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하고, 「채소류 출하조절기획단」을 설치, 농·소·상·정이 공동참여하여 면적조정·출하조절·출하규격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유통협약을 실시하는 한편, 유통협약 품목도 마늘·양파에서 무·배추까지 확대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이를 강제적으로 조절하는 유통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경영비 수준의 하한가격을 보장하는 가격예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예시제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 ※ '99년산 가격예시 현황

고랭지배추(100원/Kg), 고랭지무(95원), 마늘(1,200원), 양파(180원), 봄무(90원), 봄배추(85원)

사후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수매·비축사업을 확대하여 가격폭락시 정부수매, 산지폐기 등을 적극 실시해 나가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수매·비축사업 자금으로 매년 1조1천억원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 나. 산지유통체계 혁신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체제 구축

농산물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소비시장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농업인의 영농규모가 영세하여 농업인의 유통참여가 어렵고 농협도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산지에서의 유통혁신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협동조합개혁과 연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일선협동조합이 생산단계부터 품목단일화, 영농지도, 공동출하·브랜드화 유통 및 출하

조절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유통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유통활성화자금을 신설하여 우수조합에 대하여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2000년 예산으로 2,0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산지 채소생산량의 30%수준을 계약재배하여 수급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산지 협동조합에 계약재배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등을 위해 자조금을 조성해 나가고, 조성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재정에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도록 채소·과일 산지유통센터(포장센터)를 2002년까지 220개소, 미곡종합처리장 370개소,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건설하여 생산량의 30~40%를 산지에서부터 선별·포장·브랜드화 하여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 **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가격 인하**

최근 경기침체와 상업증가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에게는 다소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는 값싸게 공급하여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직거래장터를 '99년중 50개소를 설치하고, 중소 도시에는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시장을 2002년까지 150개소 개장할 것이며, 직거래 장터 시설비와 운영비도 신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대형할인업체 등 가격 파괴점 확산을 위해 민간유통업체에게도 산지유통센터·물류센터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직거래알선 및 직거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해 나가며, 민간업체와 생산자단체간 지원조건도 완화하여 민간자본 및 유통망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협동조합 설립을 활성화하여 산지 생산자단체와 연계, 농산물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98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직거래를 '98년 4조4,000억원에서

'99년에는 5조4,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직거래 비중을 12%에서 15%로 늘려 나가도록 했다.

#### **라. 농산물 물류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그동안 도매시장 위주의 농산물 유통에서 탈피하여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경매없는 예약·주문거래로 유통단계를 단축하기 위해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98년 4개소를 개장하였으며, '99년 중 5개소를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물류센터는 유통단계축소 뿐만 아니라 파렛트 출하, 기계화 하역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으로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새로운 선진유통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 건설촉진을 위해 생산자단체(보조 70%)와 민간의 지원조건(용자 60% → 80%)을 개선하고,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센터로의 전환('99년 2개소)을 유도하고, 건설중인 12개소 이외에 「공공소유·민간운영」 방식(보조 100%)등 다양한 형태의 물류센터를 추가 건설('99년중 4개소) 하고 있다.

개장초기 물류센터 운영정착을 위해서 산지 생산자조직을 물류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할인점·판매점 등 대형유통업체를 판매가맹점으로 확보토록 유도하기 위해 매취자금 지원('99년 159억원)을 확대하였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 **마.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 및 도매시장의 운영방식 개선으로 경쟁력 제고**

물류센터가 개장되고 직거래가 활성화되더라도 농산물의 대부분은 도매시장을 경유하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정상화는 유통개선대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2001년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을 차질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중앙정부 보조율을 30~50%에서 70% 수준으로 높이고,

'99년부터 개장중인 기존공영도매시장의 시설개보수도 본격 추진(16개소)하고 있다.

시설확충과 아울러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 경매제도 뿐만 아니라 시설여건·거래액 등을 감안하여 지방, 신설도매시장 중심으로 도매상제의 도입이 가능토록 개방하였으나 중앙도매시장에서는 당분간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경매를 의무화하여 기준가격 형성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매시장을 경유하더라도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출하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역제도를 개선하여 기계화를 촉진하겠으며, 중도매인의 경쟁경매촉진으로 중간상의 마진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매시장의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불법행위 단속강화와 시범실시중인 가락동·대전 공영도매시장의 전산 경매를 확대하고, 출하주 등록제와 출하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가격동락을 최소화하여 출하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다.

#### **바.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30%수준 절감**

유통효율화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저가로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의 농산물 물류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결과 '97년 농산물 물류비는 6조 2천 억원으로서 유통비용의 32%로서 국가물류비의 GDP대비 1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업체류와 같이 부피가 크고, 부패가 쉬울 뿐만 아니라 인력에 의해 상·하차되는 농산물의 경우 물류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농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고, 판로도 확보할 수 있다.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부터 대량의 농산물이 포장화, 파렛트적재, 하역기계화 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우선, 비포장 농산물의 포장화 촉진을 위해 도매시장내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인상을 추진하는 등 포장품과 비포장품의 차별화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24개 주요농산물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적재효율이 90% 이상 되도록 재정비를 완료하고, 규격포장재에 대해서만 포장재가 지원되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하역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등 하역기계화장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99년부터 지원조건도 대폭 완화(보조50%, 융자30%)하여 지원하고 있다.

#### **사.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식생활 보장**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 및 건강·환경문제의 관심증대에 따라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는데 비해 인식 부족 등으로 농약과다 살포 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소비자 신뢰제고 및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제고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기존의 품질인증,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 도입되는 농산물표시제(GMO), 지리적표시제 등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조사 대상 농산물을 '98년 80개 품목 10,000건에서 '99년에는 90개 품목, 27,000건으로 확대하고, 안전성조사결과 고지사항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마련으로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또한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높이고, 소비자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인증을 '98년에는 90개 품목에서 '99년에는 9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품질인증 농가협의회를 결성하여 자율적인 품질인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아. 농산물 유통개혁 지원체계 강화 뒷받침**

농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및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투융자중 유통부문예산 비중을 '98년 3,096억원(6%)에서 '99년에는

5,477억원(15%), 2000년에는 20%수준이 증가되도록 했다. 대폭 확대되는 유통예산은 시설확충보다는 협동조합 유통사업지원,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 집중투자하기로 하는 한편, 농안기금은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수출·가공업체 운영 등의 자금으로 집중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농안법」 개정안을 '99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여 새로운 가격안정제도 도입과 도매시장거래제도 개선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 3. 기대효과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혁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산지생산자조직이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계약재배된 농산물을 대량으로 포장화·규격화·브랜드화하여 공동출하비율이 60% 수준까지 확대되어 시장교섭력이 강화되고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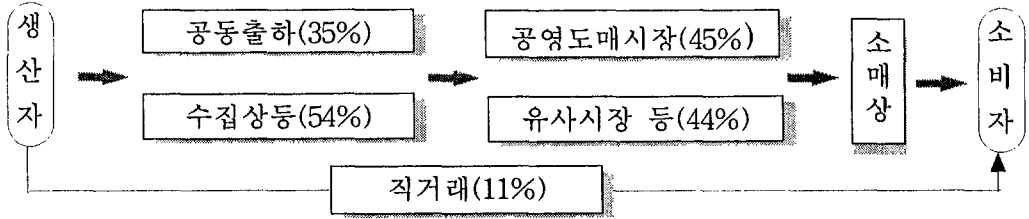
또한, 주요거점지역에 32개 공영도매시장, 18개 물류센터가 개장되고, 유사도매시장이 제도권으로 흡수될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따라 출하자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경쟁에 의한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될 것이다.

소비지에서는 산지생산자조직과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의 다양한 직거래 체제가 구축되고, 농산물 직거래 비율이 25%까지 확대되어 소비자가 편리하고 저렴하게 농산물 구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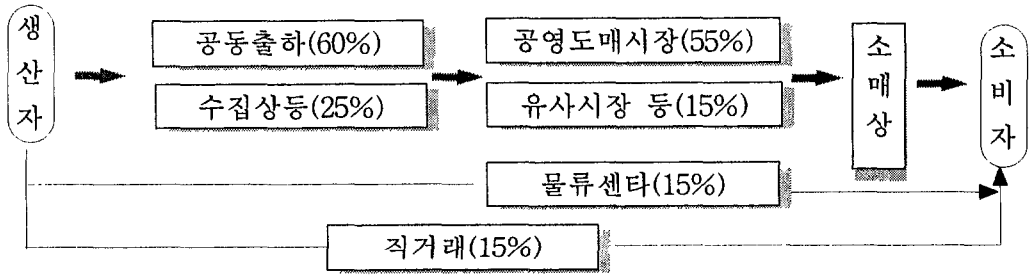
이와 같이 산지·도매·소매단계의 유통상의 비능률이 과감히 제거됨으로써 농산물 유통비용을 현 19조원에서 14조원으로 30% 수준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는 보다 싼값의 농산물 구입이 가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통개혁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농산물 유통모습 2002년

### < 현 행 >



### < 대책후 >



- ◇ 유통협약·유통명령·가격예시·생산출하조절 기획단 운영 등으로 가격등락이 큰 주요 채소류에 대해 「제값 받기」 실현
- ◇ 공영도매시장 조기확충과 시설개보수로 유사시장을 흡수하여 교통·환경·위생문제 해소와 물류효율 증대(2002년 55% 담당)
- ◇ 도매시장 이외에도 포장센터-물류센터-가맹점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물류망을 구축(2002년 15% 담당)하여 유통경로간 경쟁 촉진
- ◇ 안전성조사 및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식생활 안전보장 및 생산자-소비자단체의 직거래 제도화(15%)로 소비자가격 인하
- ◇ 포장화·규격화, 파렛트출하, 하역기계화, 유통정보화 등으로 6조 2천억원 수준의 물류비용을 30% 수준 절감

농산물 유통비용 5조4,000억원 절감



< 참고 >

농산물 유통개혁대책 추진일지

일 자	내 용
'98. 3. 14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단 실무회의
3. 19	제1차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3. 28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전체회의
3. 30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전자상거래반 회의
4. 2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직거래반 회의
4. 4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총괄 및 산지반회의
4. 6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제도개선반
4. 6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직거래반 전문가 초청회의
4. 6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물류개선반 회의
4. 10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총괄 및 산지반 회의
4. 10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제도개선반 회의
4. 11	농산물유통개혁대책 과제종합 발표회
4. 15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제도개선반 회의
4. 15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물류개선반 전문가 초청회의
4. 16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총괄 및 산지반 회의
4. 17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관계자 회의
4. 18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조정 위원회
4.22~25	공영도매시장의 물류센타 등 전환방안 협의
4. 23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전자상거래반 회의

일 자	내 용
4. 25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실무작업반 회의
5. 8	제2차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5. 19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소위원회
5. 22	축산물유통대책 회의
5. 22	농수축산물 코드·거래방식 표준화 회의
6. 8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소위원회
6. 11	제3차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6. 16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청회
6. 18	농산물유통개혁대책단 전체 회의
6. 18	전문가초청 의견수렴
6. 20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소위원회
6. 24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제도개선반 회의
6. 25	도매시장관리·운영일원화 방안 회의
6. 26	농산물유통개혁대책에 관한 공청회
6. 27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소위원회
6. 29	농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
6. 29	제4차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7. 23	농산물 유통개혁대책 보고회 개최(대통령보고)

### Ⅲ. 농지개량조합 · 농지개량조합연합회 · 농어촌진흥공사 통합

#### 1. 3개기관의 변천과정

##### 가.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은 1906년에 공포된 수리조합조례에 의하여 1908년 전북옥구서부수리조합을 효시로 설립되어, 광복 당시 남한에 425개수리조합, 1960년에는 695개수리조합에 달하였다. 1962년 토지개량사업법의 제정으로 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1970년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제정으로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된 후, 여러차례의 통폐합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104개 농지개량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농사개량사업,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1938년 회원 수리조합의 공동이익증진을 조성 및 대변하기 위하여 조선토지개량협회로 발족하였으며, 1940년 토지개량사업의 측량설계와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리조합 연합회로 개편되었다. 1962년 토지개량사업법의 제정으로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명칭이 변경되고 1970년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으로 지하수개발공사와 통합하여 농업진흥공사로 발족되었다

1971년 단위조직으로 고립된 농지개량조합의 이익증진과 권익대변에 필요한 중앙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농지개량협회가 다시 설립되고, 1973년에는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 개편되어 운영되다가 1978년에 농

촌근대화촉진법증개정법률로 공법인화 되었다.

주요업무로는 회원조합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지도사업, 회원조합의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훈련사업, 농지개량사업에 수반하는 환지사업, 경지정리사업의 조사설계 및 공사감독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다.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는 1970년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제정으로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통합하여 농업진흥공사로 발족되었다. 1990년에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확대 개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요업무로는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정비사업, 농지구묘화사업,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농어촌소득기반확충사업, 농어촌지역개발계획수립과 해외사업,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2. 3개기관의 통합배경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어 기능중복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농업생산기반정비업무중 기본조사·설계·감리업무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농어촌진흥공사가, 수리시설 유지관리업무는 사업규모에 따라 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가 분담하고 있다. 또한 수리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는 농지개량조합이 분담하고 있어 시공자와 관리자가 이원화되어 대규모 농업기반시설 이관시 하자보수 및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발생 등 분쟁원인이 되어왔다.

또한 농지개량조합은 운영경비를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으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소규모 농지개량조합 통폐합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였으나 성과가 미흡하여 다수 농지개량조합이 경영위기에 처함으로써 근본적인 운영개선

이 불가피하였다

그리고, 농업인구는 매년 감소추세이나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는 너무 많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MF관리체제의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맞아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오던 농업정비관련 기관조직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 3. 3개기관 통합추진경과

#### 가. 3개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 기능을 나누어 수행하고 있어 기능중복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역대 정부에서도 이의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대립으로 획기적인 개선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연합회 기능 통합이 과제로 선정되고, 이어서 1998년 7월3일 기획예산위원회에서 3개기관의 통합추진방안을 8월말까지 농림부농정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방침결정 및 발표함에 따라 농림부 농정개혁위원회에서는 1998년7월8일 이를 심의의결하고 1998년7월20일 농업인단체, 학계대표, 공무원,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대표 등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에 착수하였다.

#### 나.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 (1) 법제정 추진경과

3개기관 통합에 필요한 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98년8월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을 거친 후 1998년9월 8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1월27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입법과정에서 일부기관의 통합반대 등 어려움도 따랐으나, 농업인 및 농지개량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1999년1월5일 국회의결을 거쳐 1999년 2월5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법률 제5759호)이 제정·공포되어 2000년1월1일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게 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된 내용을 보면, 공사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지 등의 재개발사업”을 추가하였고, 법 시행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0년1월1일로 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의 인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고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운영에 지역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의 분사무소에 지역농업인의 대표로 구성되는 운영대의원회를 구성하고 주사무소에 운영대의원회 대표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두도록 하였다. 농지개량조합장 등 임원에 대하여는 농업기반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하도록 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개량조합직원을 승계한 때에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부터 농업기반공사가 승계한 재산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여 농업기반시설이 선량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였다.

## (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주요내용

첫째,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 종합 관리 등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둘째, 농업기반공사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용·보전에 관한 사업,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등을 하도록 하였다.

셋째, 농업기반공사는 이해관계인,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업기  
반공사관리지역을 설정, 관리·운영하도록 하였고,

넷째, 농업기반공사는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안에서 농업용수이용자에게  
농업용수를 성실하게 공급하도록 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부터 농업용수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정부는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및 농지조성에 필요한 자  
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및 농  
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한 것으로 보  
도록 하되 잔여임기와 업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종전의 직위에 상응한  
직무의 부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하도록 하였으며

일곱째,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당시 농어촌진흥공사, 농  
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직원은 농업기반공사의 직원으로  
보며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배치하도록 하였고

여덟째, 농업기반공사는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농어촌진흥공사, 농  
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하되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재산은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4. 3개기관의 통합효과

현재 농지개량조합은 수리시설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어 농번기에 업무  
가 집중되고, 농지구묘화사업을 담당하는 농어촌진흥공사의 군지부는 농한  
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양기관을 통합하  
게 되면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농민부담을 경감시키고 농  
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중복  
된 인력을 감축하여 분야별로 전문화하고,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기술개발

로 경쟁력 또한 높아져 개방시대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세 기관의 직원들 또한 새 농업기반공사의 직원으로 포괄승계되므로 신분이 안정되고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또한 3개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추진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제거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농업인에 대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3개기관의 통합으로 얻어지는 통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절감과 조직의 효율화 등으로 비용이 대폭 절감됨으로써 절감되는 부분은 조합비 경감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환원하고 국고지원액도 단계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고 될 것이다. 현행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술력과 농지개량조합의 지역성을 연계 활용하고, 시설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정성·내구성 등을 제고하여 시설물의 건설한 유지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농업용수 전반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계획적인 용수공급과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능력이 크게 개선 될 것이다.

셋째, 현재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80여개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 지고, 사업시행체계 일원화에 따른 건설비용 절감과 각종 공사감독·계약·사업비 과다 계상, 불합리한 낙찰율,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부조리 및 불합리한 관행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농업기반공사는 앞으로 농업기반정비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생산·유통을 담당하는 생산자단체와 함께 우리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업용수오염방지 등 종합적 수질관리로 식량자급기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생활환경개선, 농촌 소득원개발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농업개발



에 참여하고 통일을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 5. 농업기반공사 설립 추진 상황

### 가. 통합기본방향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 등 세 기관을 통합하여 농업생산기반을 확충·관리하고 농촌구조개선을 전담하는 경쟁력 있는 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통합추진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기관 대표와 학계, 농업인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농업기반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등한 조건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둘째, 통합이전에 각 기관별로 자체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여 비효율을 제거한 후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셋째, 기관통합을 통한 종합체제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성 확보로 영농편익을 향상시키는 물론 물관리의 자동화, 인력·경비절감으로 얻어지는 효과를 농업인에게 환원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분야별 세부추진방안으로 우선 조직은 본부, 도사무소, 지역사무소의 업무체제로 통합하되 공사체제로 일원화한다. 지역 및 현장중심의 조직은 수계관리, 지역적 여건, 현행 농지개량조합구역을 감안하여 80여개 지역사무소로 광역화할 계획이다.

인력은 각 기관별로 통합전에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의 경우는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감축(1999년말까지 400명)할 예정이다.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정년 및 직제조정, 관리면적 확대를 통해 농어촌진흥공사 수준으로 감축하여 1999년말까지 세기관 총정원규모를 5,974명으로 인력조정을 한 후 통합공사로 승계조치될 계획이다.

각 기관별 인력감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농진공	농 조	농 조 연	계
'98정원	2,478명	4,024	672	7,174
'99년말	2,078	3,332	564	5,974

## 나.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 구성·운영

### (1) 구 성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제정으로 2000년1월1일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법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1999년2월5일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농업기반공사 설립위원회는 농림부 장관이 위촉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위원장은 농림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부 차관보와 민간위원 1인을 각각 위촉하였다.

### (2) 임 무

농업기반공사설립위원회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출자 등 설립절차를 확정하고 주된 사무소 선정·2000년 예산편성 등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농업기반공사의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농업기반공사의 정관을 확정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등 농업기반공사설립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다. 설립사무국 설치·운영

농업기반공사설립위원회의 실무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림부와 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의 직원들로 구성된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이 설치되어 1999년2월8일부터 본격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설립사무국의 구성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장(농림부 농촌개발국장), 총괄반장(농림부 개발정책과장)을 두고, 그 밑에 기능별로

기획반, 법령반, 총무반, 교육·홍보반 등 4개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각 반별 실무요원은 농림부 7명, 농어촌진흥공사 8명, 농지개량조합 6명, 농지개량조합연합회 5명 등 총 26명으로 전문분야별로 배치하였으며 반장도 기관별로 분담하여 1999년12월31일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참고 1>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 현황

구 분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 법인성격 (근거법률)	정부투자기관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비영리공법인 (농지개량조합법)	비영리공법인 (농지개량조합법)
○ 주요기능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조사·설계·감리 - 영농규모적정화 - 농촌생활환경 개선 - 연구, 개발	- 농조의 공동이익 증진(회원조합지도)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조사·설계·감리 - 환지	- 농업생산기반정비시행(공사발주) -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 운영비조달	- 정부 출자금 - 사업수익	- 사업수익	- 국고보조금, 조합비 - 수익사업수익
○ 연간 사업규모 ('99예산)	7,174억	391억	2,502억 (일반회계 2,148억) (수익사업특별회계 354억) ※'98보조사업특별회계1 5,664억
○ 인 력 ('99말정원)	2,078명	564명	3,332명
○ 조 직 ('99.4월말현재)	본 사 : 5이사 17개 부서 지 방 : 9지사 4사업단 69지부 (18출장소)	본회 : 2이사 9개 부서 지방 : 8지회 ※ 자회사 1개소	104개 조합 (지소 295개소)

<참고 2>

농진공·농조·농조연 통합관련 추진일지

일 차	내 용
'98. 2.12.	농업생산기반조성 관련 기관의 기능 재조정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
'98. 7. 3. ~ 8. 5.	기획예산위원회에서 농진공·농조연·농조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 관련조직 통합방침 확정 - 농정개혁위원회에서 3개기관 통합방침 확정(7. 8)
'98. 7. 8.	전국농지개량조합100만조합원 3개 기관 통합반대 성명서 발표(동아일보 1면)
'98. 7.20.	농업인단체, 학계대표, 공무원, 3개기관 임원등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7차례 전체회의와 3차례 소위원회 개최하여 통합추진계획 확정
'98. 8. 3.	전국농조·농조연 노조 통합반대관련 농림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농수축산신문)
'98. 8. 6.	통합신설조직의 기능과 역할 토론회 개최(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관)
'98. 8.19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98. 8.27.	전국농조·농조연 노조 통합반대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 발표(동아일보 8면)
'98. 9. 3.	농진공 노조 3개 기관 통합찬성 발표(동아일보 5면)
'98. 9.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입법예고
'98. 9.12. ~ 9.13.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통합추진위원회 실무작업단 현지실사

일 자	내 용
'98. 9.18.	전국농조100만농민조합원회 3개기관 통합반대 발표(한국일보 1면)
'98. 9.30.	전국농조100만농민조합원회, 전국농조·농조연 노조 과천정부청사앞, 서울 여의도에서 “농지개량조합자체개혁방안 수용촉구 및 투쟁결의대회 개최
'98.10. 2. ~ 11.10.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법제처 심사
'98.11.11.	전국농조100만농민조합원회, 전국농조·농조연 노조 3개기관 통합반대 발표(중앙일보 7면)
'98.11.15.	한국노총연맹주최 생존권사수 및 총체적 개혁촉구 전국노동자·농민·시민대회(여의도 둔치)에서 농지개량조합자체개혁방안 관철을 위한 결의문 발표
'98.11.18.	전종철외 15,967명(소개의원 : 허남훈, 김영일외28인) 농업기반공사설립반대등 청원서 제출
'98.11.19.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98.11.20.	새정치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농정분야 당정협의 결과 발표 - 3개 기관 통합방침 확정
'98.11.2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대통령 재가
'98.11.26.	한나라당 3개 기관 통합지지 성명 발표
'98.11.2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국회 제출
'98.12. 3.	전국농조구조조정추진위원회 농지개량조합 자체개혁안 발표(농수축산신문 12면)
'98.12. 3.	한국노총·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 통합공사법안 반대 발표(경향신문 2면)
'98.12. 4.	전농외 15개 농업인단체 3개기관 통합환영 발표(문화일보)

일 자	내 용
'98.12.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제198회 정기국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98.12.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상정·심의
'98.12. 8.	농진공 노조 3개기관 통합 찬성 발표(한겨레신문 4면)
'98.12.1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의
'98.12.2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제199회 임시국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의
'98.12.2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의·의결(수정)
'98.12.28.	전국농조100만농민조합원회, 전국농조구조조정추진위원회, 전국농조·농조연 노조 통합공사법안 반대 관련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님께 호소문 발표(한국일보 4면)
'98.12.29.	전농의 15개 농업인단체 3개기관 통합환영 발표(중앙일보)
'98.12.29.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보고·의결(원안)
'99. 1. 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99. 2. 5.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공포
'99. 2. 5.	농업기반공사 제1차 설립위원회(위원장 농림부 차관) 개최 - 실무활동을 뒷받침할 사무국(사무국장 농림부 농촌개발국장) 개설, 운영규정 등을 확정하고 설립 준비업무에 착수
'99. 2. 8.	농업기반공사 설립사무국 설치 및 운영
'99. 3. 5	농업기반공사 제2차 설립위원회 개최 - 농업기반공사 설립예산 및 설립사무국 업무추진계획 등을 확정
'99. 5. 7.	농업기반공사 제3차 설립위원회 개최 - 농지개량조합 정년조정, 명예퇴직제도, 사무소 통합계획 등을 심의
'99. 5.27.	농업기반공사 제4차 설립위원회 개최 - 농업기반공사 조직·인력·인사제도에 관한 용역결과, 농지개량조합직원 정년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음

## IV. 협동조합 개혁

### 1. 협동조합개혁 추진배경

협동조합은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중앙회 조직의 비효율성 및 일선조합의 부실과 경제사업 소홀로 인하여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IMF 경제위기로 사회전반에 걸쳐 구조조정과 개혁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협동조합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연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농업인을 비롯한 온 국민속에 폭넓게 확산되었다.

특히, '80년대부터 농가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협동조합 종사인원은 크게 증가하여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에 의한, 농업인의 참여가 보장된 협동조합”이 되지 못하고 “임직원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 협동조합이 처해 있는 대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앞두고 협동조합이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 중심의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 우리 농업·농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협동조합 개혁의 목적이다.

### 2. 협동조합 개혁추진 경위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협동조합개혁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협동조합을 농업인을 위한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1998년 4월 13일 농·축·임·삼협 등 생산자 단체, 농업인대표,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동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7차례에 걸친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7월 31일 중앙회 조직개편 방안, 지역조합합병, 책임경영제 확립, 지도·감독강화 등 50여개 과제를 「협동조합개혁방안」으로 선정하여 농림



부에 건의하였다.

한편, 1998년 7월 28일 농림부는 농·축·임·삼협 4개 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개혁안을 합의하여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동개혁안을 합의하여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각 협동조합별로 자체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1998년 8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강도높은 자체구조조정을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농협의 경우 당초 2000년까지 20% 감축기로 한 인원을 1999년 초에 앞당겨 완료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1997년 7,317억원 수준의 부실채권을 1998년에는 4,877억원으로 축소하는 등 각 협동조합은 지난해 자구적 차원의 구조조정을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요청한 4개 협동조합중앙회의 공동개혁안은 1999년 2월말 까지도 마련되지 못하고 각 중앙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1999년 2월 23일에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8일 정부에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1999년을 「협동조합개혁의 해」로 정하고, 농·축·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통합을 포함한 개혁시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농림부는 정부의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한 직후 농·축·인삼협 등 생산자단체, 농민단체, 각계 전문가 및 정부로 구성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에 걸쳐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와함께 3. 8일 이후 TV·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정책토론, 학계·농민단체·협동조합 관계자·농업인과의 토론회·간담회 등을 200회이상 개최하면서 광범위하게 농업인과 일선조합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999년 4월 15일에는 전주, 창원에서 지방공청회를 4월 16일에는 수원에서는 중앙공청회를 실시하여 협동조합관계자와 전문가외에 소비자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농림부 홈페이지에 신문고를 개설하는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당초 정부시안을 보완한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중 제시된 추가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중앙회 통합, 일선조합의 합병, 일선조합장 선거제도 개편 등 논란이 많은 핵심과제에 대해 정부의 개혁시안을 대폭 보완한 농업인협동조합법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6.8)을 거쳐 6월1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농·축·인삼협 등 이해당사자들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농림해양위 의원들이 이해당사자인 농·축협회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농·축·인삼협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심지어는 과열양상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협동조합개혁법을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대체토론과 농·축·인삼협중앙회장의 의견청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8월12일 정부 제출안을 대폭 수정한 상태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고 8월13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3. 농업협동조합법 주요내용

#### 가. 일선조합 관련

일선조합은 신용사업 중심에서 유통·경제사업 중심의 조합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중앙회는 일선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여기서 나오는 사업이익금은 출자한 조합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중앙회 사업 중 회원조합과 공동으로 출자·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2003년 6월 30일까지 중앙회 지분의 50/100이상을 회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였다.

중앙회 통합으로 절감되는 재원과 재정자금으로 조합별로 유통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등의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하는 등 농산물의 재값받기가 가능해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이와함께 일선조합이 지역 농·축산업 정보센터로서 산지생산·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수

행토록 하였다.

또한, 조합실정에 맞게 품목별로 전문상담원을 두어 전문기술교육, 경영컨설팅, 출하시기조절, 품질관리 등의 지도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에 대한 수준 높은 영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조합마다 조합원 수 등 규모에 차이가 있고 지역조합·업종조합 등 그 특성이 각각 다르므로 조합장 선출방식을 직선제, 간선제외에 이사회 호선방식을 추가하여 조합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변경 의결방식을 조합원 투표방법에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완화하여 선출방식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상임인 조합장의 입후보자격을 2년 이상의 조합원 신분보유기간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합장 선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과 외부인사 등 7인이상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선거운동방법으로 공개토론회를 도입하여 후보자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였다.

현재의 조합장이 명예직이면서도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행사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권한에 비하여 책임한도가 낮아 조합경영이 부실화되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조합장을 상임, 비상임으로 구분하여 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어 업무를 집행토록 의무화하고 상임인 조합장이나 이사에게는 고의·중과실책임뿐만 아니라 업무소홀에 따른 경과실 책임도 부여하여 경영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사회 의결에 대한 업무집행시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의사결정의 신중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조합경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였다. 즉, 조합이 자율적으로 조합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장은 평가 및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운영에 적극 반영하게 하였다.

또한 조합은 정관, 총회의사록, 조합원명부의에 추가로 이사회이사록을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운영상황도 공개해야 한다.

조합별로 감사 2인중 1인을 상임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현재 정관으로 규정하던 것을 총회의결사항으로 하여 임원의 경영 능력과 조합경영 수지 등을 감안하여 조합원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 300인 또는 5/100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조합원 300인 또는 5/100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회계장부와 서류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청구권도 새로이 인정하였으며,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인 선임청구권을 보장하여 조합원이 조합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현행 조합원 20/100이상의 동의에서 500인 또는 10/100이상으로 대폭 완화하여 조합운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조합경영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경영과 조합의 사업이용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는 『조합원 책임』 규정과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합원이 주인되는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동일가구당 2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가입제한을 폐지하여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준조합원 자격만 부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였다. 다만 동일인이 같은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에 2개이상 가입할 수 없는 규정은 현재와 같이 존치하였다.

품목별 전문조합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의 구역과 조합원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농·축협과 달리 자율적으로 사업관할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목조합의 조합원은 그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 조합 특성에 맞게 조합원 자격을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조합이 품목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실정에 따라 조직전환이 가능해져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발전이 용이해졌으며, 중앙회의 회원조합장 이사중 1/3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임케 하므로써 새로운 중앙회내에서 품목별·업종별 조합의 대표성을 보장하였다.

'95. 6.23일 이후 설립된 품목조합은 경제·유통사업만 실시하고 신용사업 취급은 허용하지 않으므로써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에 전념토록 하였다.

## 나. 중앙회

각각 분리·운영되고 있는 농·축·인삼협중앙회를 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하고 새로운 중앙회를 설립하여 기존 농·축·인삼협중앙회의 재산과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토록 하였으며, 지역농협·지역축협·인삼조합 등 기존 중앙회의 회원조합도 새로운 중앙회의 당연회원으로 간주하여 중앙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자동승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회는 통합되지만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전문조합은 현행 명칭과 독자성을 가진 채 새로운 법에 의한 지역농협 등으로 유지된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3개 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 및 대의원은 임기가 종료되지만 직원은 새로운 중앙회의 직원으로 당연 승계되며 향후 잉여인력 조정시 각 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직원간 동일비율을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되 '98. 1. 1일부터 이법 시행일까지 현행 각 중앙회의 자체 인력 감축실적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하였다.

중앙회장은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도·감사업무와 대정부건의 등 농정활동을 전담하게 되므로 농업인의 권익대변 기능

이 더욱 보장되었으며, 중앙회장은 현행과 같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를 총회에서 선출토록하되 입후보자격 조건을 조합원 신분 2년이상 보유에서 5년이상으로 강화하고, 농업경제·축산경제 및 신용대표이사간 이견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 조정권을 행사하여 중앙회 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토록 하였다.

중앙회의 사업부문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이사를 두어 사업부문별 대표이사가 소관사업에 대한 경영목표 설정, 사업 및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승진·전보는 소관 대표이사가 각각 담당하는 등 대표권·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토록 하였다.

대표이사소관의 업무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장대표자 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천된 자를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집행간부는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의 집행간부는 소관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면하게 된다. 특히, 인삼사업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삼사업 집행간부를 반드시 두고 그 업무를 농업경제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전결처리토록 하였다.

축산부문의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어 축산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당초정부안보다 더욱 강화하였다. 즉,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축산부문 대표이사를 단수로 추천하면 중앙회장은 총회의 동의없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통합중앙회가 기존 축협중앙회의 재산을 승계한 부분은 신용사업외의 것은 축산부문 대표이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축산부문의 사업시행에 있어서 중앙회는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도 마련하였다

중앙회장을 회원조합들이 직접 선출함에 따라 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원조합을 지도·감독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중앙회에 설치하고 위원회는 회원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

하여 2년마다 1회이상 회원조합을 감사하게 되며,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업무정지, 관련 임·직원 제재도 회원조합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일선조합에 조합원등이 맡긴 예·적금에 대하여는 중앙회와 달리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예·적금 지급이 불가능하더라도 안전한 환급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으나, 새로운 법에서는 예·적금의 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을 설치·운영도록 의무화하여 회원조합이 예·적금의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조합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변제토록 함으로써 조합의 신용고객에 대한 안전장치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의 특성상 자기자본 증대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BIS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출자가 필요하나 회원조합으로부터의 재출자를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없고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도 우선출자 대상으로 규정하여 필요시 공적자금의 투입기회를 보장하였고 우선출자증권의 양도도 가능토록 하여 우선출자증권의 일시 양도에 따른 경영의 불안정성을 최대한 방지하였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일선조합 중 중앙회에 가입하기 못하고 있는 전문조합이나 업종조합이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기존 미가입 조합중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과 신규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 중앙회 가입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회 가입을 승낙하도록 의무화하여 일선조합의 중앙회 가입이 쉬워지도록 하는 등 많은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중앙회 신용사업의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앞으로는 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은 농림부장관이 수행하되 신용사업의 건전성 확보부문에 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권이 대폭 인정되었다.

금감위가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경영지도기준을 제정토록 하고 중앙회 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건전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점포의 축소, 임원의 직무정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을뿐만 아니라 은행법 적용을 대폭 확대하여 은행법령과 관련 규정 또는 은행법에 의한 지시 위반시 영업 행위 중지 또는 6월 이내 영업 정지 조치, 임직원이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임권고, 면직·정직 등의 문책 처분 요구 및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새로 적용토록 하는 한편,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금감위의 경영지도 기준 등에 대하여는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신·경분리 문제는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게 하여 법 시행후 2년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2년이내에 시행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농림부장관은 정부, 협동조합관계자, 농업인대표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법 공포와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하였다

#### **다. 품목조합연합회**

품목별·업종별 전문조합 육성을 위하여 「품목별 연합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인격을 인정하여 그 독자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동일한 품목이나 업종을 취급하는 품목조합이 5개 이상(전국단위 연합회는 전체 품목조합의 2/3이상)이 모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연합회는 품목조합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중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 중앙회 사업이용도 가능해진다.

연합회는 회원을 위한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제품 홍보, 정보교환 등의 사업이외에 물자의 공동구매 및 공동판매 등 다양한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과 회원을 위한 자금알선도 가능해질



뿐만아니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이 규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연합회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어진다.

#### 4. 협동조합개혁의 기대효과

첫째, 중앙회를 통합하게 되면 중복기능 정비로 인하여 경영관리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자금확보가 가능해지고 이 자금을 일선조합 육성에 집중 지원하게 되면 일선조합이 유통·경제사업의 중심체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앙회장은 사업경영이 아닌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도 및 조합원 권익보호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협동조합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지도활동이 대폭 확대되고 추곡수매가 건의, 농가부채 해결 등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게 되었다.

셋째, 중앙회는 일선조합과 결합되는 사업을 하지 않는 등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하나로마트, 물류센터, 사료공장 등 중앙회 소관사업을 단계적으로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거나 공동출자·공동경영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중앙회의 이익이 일선조합으로 환원될 뿐만아니라 통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서도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있게 된다.

넷째, 통합중앙회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선조합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정부와 중앙회가 단계적으로 조합당 30~50억원 규모의 유통지원자금을 선별 지원하게 되면 농산물 공동출하·공동판매 등 유통·경제사업이 활성화되고 농약·비료·사료 등을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게된다.

마지막으로 전국 3,000여개의 농·축협 소매유통시설을 망라한 농·축산물 통합유통망을 구축하여 협동조합의 가격주도력이 제고되게 될 것이다.

## 5. 향후추진 계획

농업협동조합법 공포과 동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2000년 7월 1일 새로운 중앙회의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설립위원회는 농림부 차관과 위원 중 농림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여 농·축·인삼협 임직원과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 정관 제정과 조직 및 인력조정, 자산실사 등 기존의 중앙회의 해산사무와 새로운 중앙회 설립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설립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무원과 협동조합 실무관계자로 설립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농·축·인삼협중앙회에는 임원과 간부급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새로운 중앙회의 조직·정관·인사 등의 통합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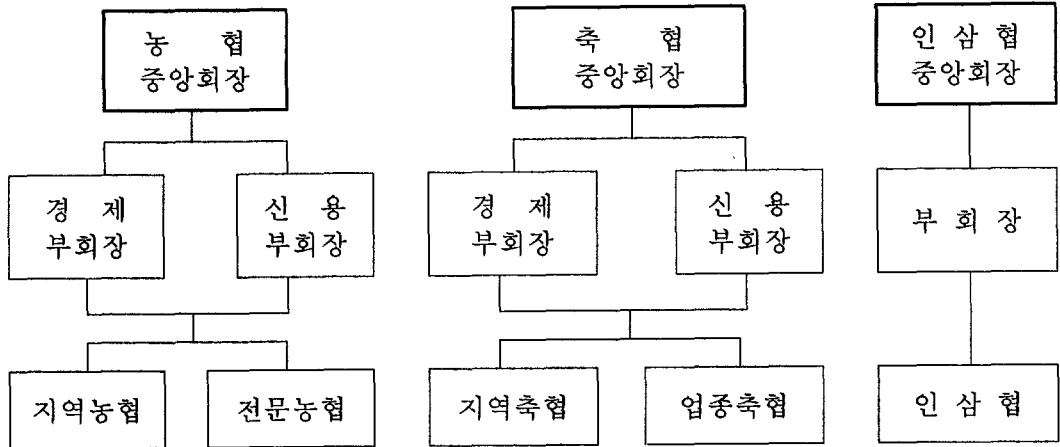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정관 작성 등 구체적으로 개혁작업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협동조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협동조합이 진정한 농업인의 봉사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김종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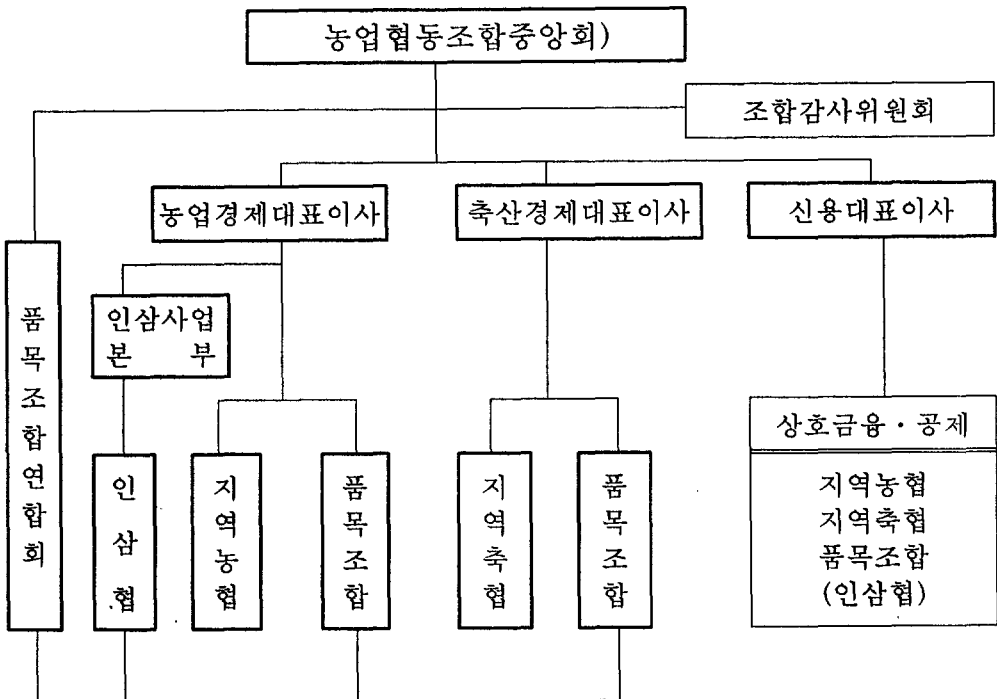
<참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직체계도

□ 현 행



□ 통합후



<참고>

협동조합개혁 추진일지

일 자	주 요 내 용
'98. 2. 12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협동조합개혁을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선정
4. 13	○ 농업인대표 등 20명으로 「협동조합개혁위원회」 구성·논의
7. 28	○ 4개 중앙회장에게 자체개혁방안과 협동조합 공동개혁안 마련 요청
9. 30	○ 4개 협동조합이 중앙회 조직개편에 대해 상이한 방안제시
11.11	○ 국정감사에서 협동조합개혁을 협동조합이 아닌 농림부가 추진 할 것을 촉구
'99. 3. 7	○ 농림부장관이 정부안에 대해 4개 중앙회장과 협의
3. 8	○ 협동조합 공동개혁안이 합의되지 못함에 따라 「협개위」 건의 와 협동조합자체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협동조합개혁방안(시안)」 발표
3. 8	○ 각계대표 28명으로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 구성·논의
3. 8~5.31	○ 중앙과 지방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4.19~5. 8	○ 「농업인협동조합법안」 입법예고
5. 21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완료
5.13~6. 2	○ 「농업인협동조합법안」 법제처 법안 심사
6. 3	○ 차관회의 심의 의결
6. 8	○ 국무회의 심의 의결
6. 14	○ 「농업인협동조합법안」 국회제출
7. 9	○ 제205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대체토론
7. 13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관 공청회 개최
8. 9	○ 제206회 임시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대체토론
8. 10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회부
8. 12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의결
8. 13	○ 제206회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
9. 7	○ 법 공포

여 백

## 제 2 부 임업부문

제 1 편 1998년도 임업동향

제 2 편 1998년도 주요 임정성과

제 3 편 1999년도 임정시책

여 백

# 제 1 편 1998년도 임업동향



여 백

# 제 1 장 국내외 임업동향

## 제1절 국내 임업동향

### 1. 산림자원 동향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1998년말 현재 6,436천ha로 전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국유림이 1,419천ha(22%), 공유림이 487천ha(8%)이며 사유림은 4,529천ha로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면적은 그 동안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에서 주택 및 산업시설용지 등 타목적 전용으로 1991년까지 매년 평균 8천ha가 감소되었으나 1992년이후에는 매년 5천여ha씩 감소되고 있다.

1998년말 현재 총 임목축적은 363,561천m<sup>3</sup>이며 이중 국·공유림이 143,199천m<sup>3</sup>(39%), 사유림이 220,362천m<sup>3</sup>(61%)이다.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56m<sup>3</sup>로 국유림 82m<sup>3</sup>, 공유림 56m<sup>3</sup>, 사유림 49m<sup>3</sup> 순으로 이웃 일본의 138m<sup>3</sup>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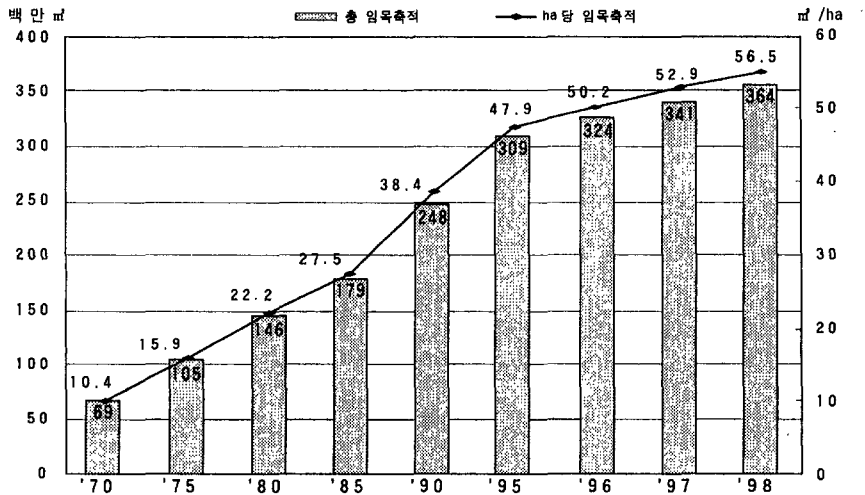
<표 1-1-1> 소유별 산림면적 및 축적

구 분	면적(천ha)	%	축적(천m <sup>3</sup> )	%	ha당축적
계	6,436	100.0	363,561	100.0	55m <sup>3</sup>
국 유 림	1,419	22	115,878	32	82
공 유 림	488	8	27,321	7	56
사 유 림	4,529	70	220,362	61	49

자료: 산림청 임업정책국

그러나 지난 1973년부터 추진한 1, 2차 치산녹화사업의 성공으로 임목축적은 1972년에 비해 5배 정도 증가하였다. 한편 임상별 산림면적은 침엽수림이 3,741천ha로 전체의 43%이며 활엽수림이 1,675천ha (26%), 혼효림이 1,829천ha (29%), 기타 죽림 및 무림목지가 181천ha로서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1-1> 임목축적 및 ha당 임목축적 추이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표 1-1-2> 임상별, 영급별 임야면적 및 임목축적

(단위 : 면적 천ha, 축적 백만m³)

구분		계	10년생 이하	11~20	21~30	31~40	41~50	51년생 이상
임야 면적	계 (%)	6,255 (100)	669 (11)	1,935 (31)	2,363 (38)	825 (13)	365 (6)	98 (1)
	침엽수	2,741	433	986	966	250	87	19
	활엽수	1,675	140	384	641	282	174	54
	혼효림	1,839	96	565	756	293	104	25
임목 축적	계 (%)	364 (100)	- (-)	75 (20)	149 (41)	79 (22)	46 (13)	15 (4)
	침엽수	159	-	46	69	29	12	3
	활엽수	98	-	10	36	24	20	8
	혼효림	107	-	19	44	26	14	4

주 : 총면적에서 죽림과 무림목지등 181천ha는 제외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나무 나이별 산림면적을 보면 20년생 이하가 전체 산림의 42%인 2,604천ha이고 21년생 이상이 58%인 3,651천ha이며, 축적은 20년생 이하가 전체 축적량의 20%인 75백만m<sup>3</sup>이고 21~30년생이 41%인 149백만m<sup>3</sup>, 31년생 이상이 39%인 140백만m<sup>3</su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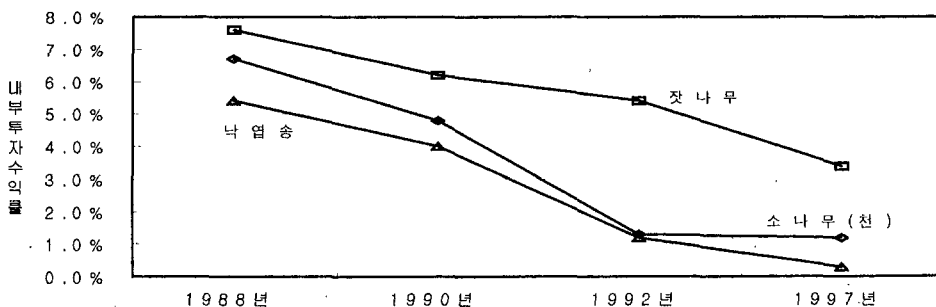
(임업정책과 임업사무관 임상섭)

## 2. 임업동향

우리나라의 사유림은 1998년말 현재 전체 산림면적 6,436천ha 중 4,529천ha(70%), 총임목축적 3억 6천 4백만m<sup>3</sup> 중 2억 2천만m<sup>3</sup>(61)를 차지하고 있어 임업경영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소유 규모별 산주 현황을 살펴보면, 산주수에서 5ha 미만이 1,908천명으로 91%에 달하나 산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4%에 불과한 상태이고, 더구나 산주 1인당 소유면적은 '87년 2.5ha, '93년 2.4ha, '97년 2.2ha로 점점 영세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규모 면에서 개별적 임업경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임업 수익성 면에서도 주요 수종의 내부투자수익률(IRR)의 추이를 살펴보면 목재가격은 정체하고 있는 반면 급격한 임금상승에 따라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1%대('97)에 달하는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2> 주요수종의 내부투자수익률 추이



자료 : 임업연구원

이에 따라 소규모 산주들은 개별경영을 포기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이고 적절한 산림관리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유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산림·임업분야에서의 이러한 현상 심화는 산림환경 기능의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최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에 부응하는 것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반면 산림자원 면에서 살펴보면, III영급(30년생)이하의 산림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기에 가지치기 및 간벌 등 적절한 숲 가꾸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건전한 산림으로 가꿀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표 1-1-3> 임목지의 임상별, 영급별 현황('98)

(단위: 천ha, %)

임상별	계	I	II	III	IV	V	VI
계	6,225 (100)	669 (11)	1,935 (31)	2,363 (38)	825 (13)	365 (6)	98 (1)
침엽수	2,741	433	986	966	250	87	19
활엽수	1,675	140	384	641	282	174	54
혼효림	1,839	96	565	756	293	104	25

자료: 산림청 임업정책국

그러나 정부 예산 중 임업부문 예산비중은 0.6% 정도에 지나지 않아 건전한 산림으로 육성해가기 위한 국내 임업 활동지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국내 임업활동의 정체는 개별 산주의 숲 가꾸기는 물론 특별회계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유림의 숲 가꾸기 사업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임업은 대부분이 소규모 경영이고 생산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수익률 또한 매우 저조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임업투자는 타산업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초장기적이고, 투자에 대한 대가는 다년간 누적된 것을 벌채시에 한꺼번에 거두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임업투자는 장기성 때문에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대단히 크고, 투자자금이 장기간 고정되므로 투자자의 자금유통이 어렵게 된다.

더욱이 산림에는 치산치수, 국토보전, 보건·휴양 등 공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회적·경제적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임업투자의 조건은 더욱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임업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임업경영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영산림보험제도를 도입하여 화재나 병충해에 의한 산림피해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임업경영이 임산물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고 국토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풍부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유지하는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산림의 건전성과 활력을 유지하면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지구환경문제로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저장고로서의 산림역할에 대해서도 강조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금후에는 도시와의 교류에 의한 산림·임업·산촌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과 이를 통한 산림이용의 부가가치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공익적 기능 혜택에 걸 맞는 적절한 부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얻음으로써 임업경영의 부진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박경석)

### 3. 목재시장 동향

건설업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목재시장은 건설산업이 1990년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어 온 불리한 여건에다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도율 증가, 수익률 악화 등으로 시장이 침체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1998년도는 외환위기로 인한 국내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환율 상승에 의한 생산비의 증가, 목제품의 수요감소로 임업 및 목재가공산업에 대한 투자위축으로 목재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목재산업자체

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원목시장을 보면, 원목을 직수입하는 인천지역 목재 가공업체의 원자재량은 수입재 보유 재고량으로 보아 당분간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 원목가격은 수입재의 경우 환율상승과 대금결제조건 악화로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1993년의 가격상승과 같은 폭등은 없었다. IMF 시대가 국내 목재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1998년 1/4분기의 원목수입량이 약 60%정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원목의 재고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제재업 가동률 저하로 증가하였다. 즉, IMF시대 이전의 외재재고량이 월평균 30만m<sup>3</sup>이었으나 45만m<sup>3</sup>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목재소비의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재고물량이 3~4개월 정도로 누적되면서 원자재 도입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로 되었으며,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목 수입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수입량 자체가 감축됨에 따라 주요 목재류 수입가격도 하락하게 되었다. 수종별로 보면, 남양재(케루잉)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나, 가문비나무와 뉴질랜드송은 3/4분기 이후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칠레송은 3/4분기까지는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하락추세를 보였다. 1998년도 우리나라 수입원목 중 약 47%를 점유하여 가장 비중이 큰 라디에타소나무의 경우 주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별채량의 감소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 약간의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목재집하장(전국 10개소)에서 판매한 소나무(2등품) 원목의 1998년도 가격동향을 보면,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원화표시 수입가격이 상승되면서 국내 소나무의 가격 경쟁력이 생겨 연초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6월 이후에는 약보합세를 유지하였다.

제재목 시장은 원자재 수입가격의 상승과 제재목의 수요감소로 제재업체 생산설비의 70% 정도가 도산되거나 조업단축 상태에 놓였다. 더구나 대부분의 제재공장이 영세하므로 고금리로 인한 자금난, 원자재의 수급 불안정, 제재목의 수요 감소가 지속되면서 일부 특수목재 가공업체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제재업은 원목가격 상승, 현금거래 및 금리상승 등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건축 성수기 시점에 건설업 경기의 침체가 겹쳐 판매와 가동률이 사상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다. 1998년도 1/4분기의 제재소 가동은 내수경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건설 및 가구시장이 침체되면서 목재 소요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제재소의 약 50% 정도는 가동을 중단했으며, 일부지역은 제재소 중 약 70% 정도가 휴·폐업 상태에 있다.

1998년도 제재목의 공장출고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나왕(4.5cm×12cm×2.7m)의 경우 1997년 대비 약 10%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미송(9cm×9cm×2.7m)의 경우는 전년대비 44%가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산 소나무(3.9cm×5.1cm×2.7m)의 출고가격 또한 전년대비 약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판시장은 IMF 시대가 미친 영향으로 인하여 건설업 투자의 감소와 환율 폭등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국내합판 수요가 전년에 비해 약 40% 이상 감소되는 극심한 경기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 합판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주요 원목수출국에서 벌채량을 감소시켜 수입원목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환율 인상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의 경기 불황으로 원목수입이 전년대비 감소되는 등 무역시장의 혼란이 대두되고 있어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 상승 또한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한편 합판수출은 환율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향상에 힘입어 다소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1998년도의 합판가격을 보면, 박판(3mm×1220mm×2440mm)과 후판(12mm×1210mm×2430mm) 모두 1/4분기까지 상승을 보이다가 2/4분기부터 하락하여 안정추세를 나타냈다. 예년과 달리 연초에 가격이 상승한 것은 환율에 의한 것이 주요인이다. 합판가격이 다시 안정추세로 돌아선 것은 환율의 안정과 내수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축 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합판의 대체재로서 시장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보드류의 국내시장은 출하가격의 인상과 함께 건축불황에 따른 수요감소로 국내판매는 부진할 것으로 여겨지나 수출은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회복으로 다소 개



선될 전망이다. 우선 수출경쟁국인 말레이시아도 환율이 상승되어 가격경쟁력이 상쇄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시장은 경제사정 악화로 물량확대가 어렵지만 일본, 대만, 중국 수출시장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보드류의 폐재원료는 주요 공급원인 제재소 가동률의 저하로 반입물량이 감소되고 있다.

1998년도 보드류(PB, HB, MDF)의 출고가격은 연초에 상승한 후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품목별로 가격을 보면, 파티클보드(PB) 가격(15mm×1210mm×2440mm)은 전년에 비해 약 50% 정도 상승하였으며, 하드보드(HB) 가격(3mm×1210mm×2440mm)은 전년대비 약 27% 정도 상승하였고, 중밀도섬유판(MDF) 가격(15mm×1210mm×2440mm)은 전년대비 약 8% 정도 상승하였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이성연)

## 제 2 절 국제 임업동향

### 1. 산림자원 동향

1993년 현재 세계 산림면적은 4,180백만ha로서 육지면적의 31%를 점하고 있으며, 농경지 면적의 2.9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북중미 20%, 남미 20%, 러시아 20%, 아프리카 18%, 아시아 13%, 대양주 5%, 유럽 4%로 분포되어 있으며, 국가별로는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미국, 자이레 순으로 산림면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

세계의 산림면적 추이

(단위 : 백만ha)

구분	'78		'83		'88		'93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세계	4,322	100	4,336	100	4,312	100	4,180	100
아시아	559	13	539	12	527	12	535	13
아프리카	787	18	778	18	768	17	761	18
유럽	155	4	156	4	157	4	158	4
북중미	712	16	858	20	856	20	855	20
남미	897	21	879	20	860	20	846	20
대양주	162	4	161	4	161	4	200	5
러시아	1,050	24	965	22	983	23	825	20

자료 : FAO yearbook, Forest Products, 1995

1978년 이후 지난 15년 동안 142백만ha의 산림이 감소되었으며, 1978~1988년까지 매년 6.7백만ha로 총면적 0.16%씩 감소하였고, 1988년~1993년까지는 매년 26.4백만ha로 0.61%씩 감소하여 감소추세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남미 지역은 감소추세이나 유럽지역은 오히려 산림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1993년의 경우 아시아의 증가와 러시아의 감소는 구 소련이 붕괴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면적 감소의 주요 원인은 화전경작과 농지·공업용지·주거용지로의 전환 및 열대목재의 남벌 등이다.

열대림의 경우를 보면 1980년말 1,910백만ha이던 열대림이 1990년에는 1,756백만ha로 10년 동안 154백만ha의 열대림이 사라졌다. 이는 연간 15.4백만ha가 감소된 것으로 열대림의 0.8%가 매년 파괴된 것이다. 지역별 연간 열대림 감소추세를 보면 아시아지역이 매년 3.9백만ha, 중남미에 4.1백만ha, 아프리카 7.4백만ha로서 각각 1.2%, 0.7%, 0.8% 감소되었다. 1990년말 현재 중남미에 918백만ha(52%), 아프리카에 528백만ha(30%), 아시아에

311백만ha(18%)의 열대림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의 임목축적은 1990년 현재 3,100억m<sup>3</sup>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남미, 구 소련, 북중미에 74%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중 침엽수가 1,140억m<sup>3</sup>이고 활엽수가 63%인 1,960억m<sup>3</sup>이다.

<표 1-1-5>

지역별 임목축적

(단위 : 억m<sup>3</sup>)

계	아프리카	북중미	남미	아시아	유럽	대양주	구 소련
3,100	250	640	915	380	120	60	733
(100%)	(8)	(21)	(29)	(12)	(4)	(2)	(24)

자료 : FAO yearbook, Forest Products, 1995

1993년 유엔 유럽경제자원회의(UNIECE)와 FAO에 의해 발표된 '1990년의 온대림 산림자원평가'에 의하면 온·한대림의 개발가능한 임목축적은 111,774백만m<sup>3</sup>이고 이중 3분의 2 이상이 침엽수이며 국별로는 구 소련이 50,310백만m<sup>3</sup>(45%), 미국 23,092백만m<sup>3</sup>(21%), 캐나다 14,855백만m<sup>3</sup>(13%)로 구 소련과 북미에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업국의 연간 생산량이 2,289백만m<sup>3</sup>인데 반해 벌채량이 1,761백만m<sup>3</sup>으로서 공업국은 오히려 임목축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6>

공업국의 개발가능 산림현황

구분	면적(천ha)	축적 (백만m <sup>3</sup> )		연간생장량 (천m <sup>3</sup> )	연간벌채량 (천m <sup>3</sup> )
		합계	침엽수		
계	897,540	111,774	75,513	2,289,068	1,761,463
핀란드	19,511	1,679	1,378	69,664	55,857
프랑스	12,460	1,742	663	65,855	48,000
독일	9,852	2,674	-	-	-
이태리	4,387	743	271	-	7,960
노르웨이	6,638	571	468	17,633	11,814
스웨덴	22,048	2,471	2,104	91,055	57,542
영국	2,207	203	111	11,088	8,133
포르투갈	2,346	167	110	11,286	10,879
기타유럽	53,509	8,259	6,714	310,169	208,114
구소련	414,015	50,310	37,061	699,852	517,609
캐나다	112,077	14,855	11,134	216,000	151,720
미국	195,596	23,092	13,128	640,000	619,587
일본	23,839	2,861	1,785	100,000	30,000
호주	17,005	1,796	267	35,840	19,959
뉴질랜드	2,060	351	319	26,676	14,288

주: 1) 개발가능산림(Exploitable Forests)의 정의: 목재생산에 법적·기술적·경제적 제약이 없는 산림

2) 일본의 성장량과 벌채량은 일본임업백서 1986~1990년 평균치로부터 추정  
 자료: ECE/FAO평가, FAO "UNASYLVA" 174 Vol. 44, 1994

(임업연구원 임업연구관 공지수)

## 2. 주요 국가의 임업동향 및 임업정책

### 가. 일 본

#### (1) 임업동향

##### (가) 산림자원 현황

일본의 국토면적은 3,778만ha, 인구는 1억 2,400만명이며, 산림면적은 2,515만ha('97)에 달한다. 산림면적 중 인공림은 1,040만ha, 천연림은 1,338만ha로서 각각 41%와 53%를 차지하고 있다. 총 임목축적은 34억 8,300만 m<sup>3</sup>이며, 이중 인공림이 54%, 천연림이 46%를 차지하고 있는데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138.5m<sup>3</sup>이다. 임산물 장기예측에 따르면 2025년에 176m<sup>3</sup>/ha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면적률은 67%로 선진국 중에서 핀란드(76%), 스웨덴(68%)에 이어 3위인 반면 국민 1인당 산림면적은 0.2ha로 세계평균인 0.8ha의 1/4에 불과하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조림한 1,000만ha의 인공림은 성장이 왕성한 임령(林齡)에 도달하여 연간 축적량이 약 7,000만m<sup>3</sup>씩 증가하고 있고, 인공림의 일부는 벌기에 달하고 있어 국산재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 (나) 임가(林家)경영

임업경영체에는 임가, 회사, 시정촌(市町村)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최근 산촌의 인구유출에 따라 부채소유자의 산림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산림관리의 부실이 염려되고 있다. 임가호수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에 23,000호 감소하여 250만 9천호에 달하였고, 그중 1ha 미만의 임가가 60%로서 증가추세에 있다. 보유 산림규모 20~500ha의 임가 1호당 경영수지('96)를 통한 경영활동을 살펴보면, 특용임산물을 포함한 임업 조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한 반면, 임업경영비는 6.6% 감소한 결과 임업소득은 17.1% 증가하여 74만엔에 달하였으나, 임업수익성은 매년 떨어져 1%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임가 1호당 생산활동을 위해 투하한 노동량은 고용노동이 전년도에 비해 20.9% 감소하여 11인일이 된 반면, 가족노동은

3.9% 증가하여 54인일로서 고용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4.1% 저하한 16.5%를 나타냈다.

#### (다) 목재수급

목재수요량은 1억 1,000만<sup>m</sup> 전후로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이중 목재수요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건축부문에는 제제품의 공업제품화, 2×4공법주택 등의 증가에 의한 건축공법의 다양화, 표준화·규격화로의 발전, 집성재의 진출 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목수의 감소, 고령화 등에 의해 조립 규격재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제재용재의 수요는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반면 구조용 집성재, 합판수요는 증가하였다. 목재공급량에서는 국산재가 계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약 2,200백만<sup>m</sup> 수준까지 떨어졌고, 자급률은 20%로서 총 수입액 37조 9,934조엔의 약 5%에 해당하는 1조 7,359억엔('96)을 석유, 액화천연가스에 이어 목재수입에 지출하였다.

### (2) 주요 임업정책

#### (가) 일본 임업정책의 변천

일본에서는 1897년 산림계획과 보안림, 기타 산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속배양과 산림생산력의 증진을 도모코자 삼림법을 제정하였으며, 1964년에는 임업발전과 임업종사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산림자원의 확보와 국토보전을 위하여 임업에 관한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임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삼림법과 임업기본법은 일본임정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1960년대의 고도경제성장기에 급증하는 목재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외재수입의 확대를 추진한 결과, 외재지배체제의 목재시장이 형성됨으로써 농산촌의 급속한 분해와 산촌 과소화가 급격하게 진행하자 소규모 임업경영을 탈피하여 삼림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임업구조개선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오일쇼크 등으로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임업분야에도 임도부설, 조림·보육의 조직적 추진이 삼림조합을 추진체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1970년대 말에는 외재지배체제를 전제로 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육림, 소재생산, 유통, 가공, 제품유통까지 즉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전 부문을 시스템화하여 경쟁력을 확보코자 하는 지역 입업정책이 등장함으로써 시정촌이 지역 입업정책의 관리자로서 부상한 반면, 소규모 입업경영과 삼림조합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1970년대 말의 대대적인 공공투자의 결과 야기된 방대한 재정과 방만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긴축예산, 행정개혁이 시작되면서 지역 입업정책은 재정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어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국유림과 민유림이 연계된 「푸르름과 맑은 물」의 원천으로서의 산림정비, 국산재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입업생산, 가공, 유통의 조정 및 정비를 목표로 내세우며 유역관리시스템의 확립과 산림계획제도의 개선을 제기하였다. 한편 국유림은 만성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환경중시 추세를 반영하여 대대적인 조직개혁과 더불어 공익적 기능중시 경영으로 방향전환을 하기에 이르렀다.

#### (나) 주요 입업정책

산림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청에 따라 산림의 질적 충실과 공익적 기능의 일층 발휘를 위한 산림정비의 추진, 입업, 산촌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국유림 사업의 개혁 및 민유림에서의 새로운 산림정비 전개방향, 입업·목재산업의 활성화 방책,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중심으로 입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림 경영은 1997년 12월 결정된 「국유임야사업의 발본적 개혁」에 의거하여 ①국유림의 관리경영을 목재생산기능 중시에서 공익적 기능중시로의 전환 ②고용문제 및 노사관계를 충분히 배려한 조직·직원의 철저한 합리화와 감축 ③독립채산제를 전제로 한 기업특별회계제도에서 공익적 기능이 높은 산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편입을 전제로 한 특별회계제도로의 이행 ④누적채무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조노력을 전제로 하면서 이것을 상회하는 채무의 일반회계로의 귀속을 기본으로 하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한편 국민의 지원 아래에서 「국민의 산림」으로서 국유림을

관리 경영해 가기 위해 사전에 경영계획을 공표하여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1,000만ha 인공림의 7할은 아직 35년생 이하로서 보육, 간벌 등이 필요하고, 건전한 산림은 국토보전과 홍수방지 및 갈수완화 기능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탄소를 저장함에 따라 지구온난화 방지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간벌의 중점적·집단적 실시, 복층림시업(複層林施業), 장벌기시업(長伐期施業) 등의 추진, 활엽수 육성 등을 통한 다양한 산림정비를 추구하고 있다. 한편 효율적인 임업활동을 통한 산림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자치성, 국토성, 임야청이 연대하여 「산림·산촌대책」, 「국토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조치를 실시하여 시정촌이 주도적 입장에서 산촌지역 등에서의 간벌 등의 산림정비·보전, 지역진흥을 도모해 가도록 시정촌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임업생산활동을 통해 산림정비에 공헌하도록 지역재의 저비용 안정공급체제 확립, 목재공급자, 사용자, 소비자의 연대강화 등 목재산업 진흥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

## 나. 뉴질랜드

### (1) 임업동향

#### (가) 산림자원 현황

뉴질랜드의 총 국토면적은 약 2,700만ha로서 북섬(1,160만ha), 남섬(1,500ha), 스튜와트섬(17만ha)을 주로 하여 이루어져 있다. 국토면적 중 산림은 천연림이 640만ha, 인공림이 160만ha로서 산림면적률은 약 30%('98)이다. 그중 천연림은 뉴질랜드 자생종으로 구성된 산림으로 벌채가 금지되는 보존림이 대부분이고, 인공림은 90%이상이 라디에타소나무 조림지로서 목재생산을 위한 상업경영림이다. 총 임목축적은 3억 2,900만m<sup>3</sup>이며,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202m<sup>3</sup>에 달한다.



### (나) 목재생산 및 수출

1996년도 원목생산량은 1,640만m<sup>3</sup>으로서 인공림에서 1,620만m<sup>3</sup>, 자생림에서 20만m<sup>3</sup>가 생산되었다. 원목생산량의 40%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60%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데, 주요 수출국은 일본(29.6%), 호주(28.2%), 한국(16.6%)의 순이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은 198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6년도 임산물 수출액은 NZ \$2,586백만으로서 뉴질랜드 총수출액의 12.8%, GDP의 6.9%를 차지하였다.

### (2) 주요 임업정책

뉴질랜드의 산림은 200여년의 노력으로 이룩된 것이다. 영국에서 대규모 이민이 개시된 1840년경 국토의 52%(1,400만ha)가 산림이었으나, 그후 100년간 농지개간으로 산림은 600만ha로 감소하였고, 자연식생은 영국풍 목초지로 변하였다. 19세기말 경에 산림개발로 인한 산지보전 문제가 제기되자 1919년 산림청(Forestry Service)을 설립하고 대규모 외래수종(라디에타소나무) 조림을 1923~1936년에 걸쳐 실시하였고, 1947년에는 임업연구원을 설립하여 인공조림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1960년대의 제2차 조림 붐, 1990년대의 제3차 조림 붐에 의해 160만ha의 인공림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1984년 노동당이 집권하자 경제불황 타개를 위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에 국유림의 민영화를 포함한 임업개혁을 단행하였다. 산림청을 폐지하고 뚜렷하고 투명한 목적을 갖는 임업부(Ministry of Forestry), 임업공사(Forest Corporation), 보전청(Department of Conservation) 3개기관에 업무분산을 실시하였고 인원감축의 효과를 달성하였다. 임업부는 임업정책과 권고, 조사연구, 검역 등의 임무를, 보전청은 국유지(비생산림)나 천연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임업공사는 100% 정부소유의 영리기업으로서 인공림의 경영, 제재와 판매, 종묘생산과 판매를 담당하는 3부문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1989년에는 민영화 2단계로서 국유림 자산법에 의거하여 자산 및 경영권을 매각하였다. 매각대상은 임목만으로 한정되었고, 토지는 매각대상

에서 제외되었는데, 1990년 NZ \$10억에 상당하는 17만ha의 국유림 경영권의 매각을 시작으로 1996년까지 45만ha가 매각되었다. 이는 “정부에 의한 자산관리는 비효율적이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실시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경제효율, 수익성의 향상을 가져왔다. 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민간조림이 왕성해져 조림면적이 증가하였고, 원목수출에 의한 수입증가, 임업고용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었지만, 상위 3사에 편향적으로 임목자산 보유가 집중되고, 인공림의 다목적 기능발휘를 위한 탄력성을 상실함으로써 다목적 이용을 위한 공중권리의 경직화 초래, 수익추구 주의에 따른 계획적 벌채·조림의 순환리듬의 훼손 등 부정적인 면도 지적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임업개혁은 자생수종의 천연림과 도입수종에 의한 인공림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목재생산과 보존이라는 산림관리 2분론이 국민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자연조건과 사회여건을 갖추었던 점, 단일수종의 대규모 인공조림, 기계화된 평지임업, 자본회전의 속도(벌기 25~30년), 육종·육림·벌채·가공·판매까지의 시스템화된 일관경영, 철저한 무역지향 등 대농장형의 기업경영체제 등 뉴질랜드 임업의 특질이 있어 가능했던 것이다.

## 다. 독 일

### (1) 임업동향

#### (가) 산림자원 현황

독일의 산림면적은 총 1,074만ha로 전체 국토면적 3,565만ha의 약 30%에 불과하며, 국민 1인당 산림면적도 0.13ha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독일은 이처럼 낮은 산림률 때문에 산림정책의 목표를 산림의 보전 및 확대에 두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2차대전후 현재까지 산림면적이 매년 약 0.3%씩 증가추세에 있다. 임상(林相)은 독일 전체적으로 약 60%가 침엽수이며 활엽수는 약 34%이다. 서독의 활엽수 비율(37%)은 구 동독(25%)보다 높는데, 이는 서독지역의 기후 토질이 동독지역에 비해 활엽수에 더 적합한데도 원인이 있지만, 또 한가지는 서독의 활엽수 장려책에도 기인한다. 정부

는 오늘날 공해로 인한 산림피해 감소,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 등을 위해 다양한 활엽수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1-7> 독일의 산림현황

구 분	단 위	독 일	구 서독	구 동독
인 구	백만명	81	63	18
국토면적	천ha	35,650	24,850	10,800
산림면적	천ha	10,741	7,758	2,983
산 립 률	%	30	31	28
임목축적	m <sup>3</sup> /ha	277	302	212

자료 : BMELF, Waldbericht der Bundesregierung. 1997.

임목축적은 높은 장령림(長齡林)비율 때문에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다. 벌기령은 일반적으로 침엽수는 100~120년, 활엽수는 150~250년을 적용하고 있다. ha당 평균축적은 277m<sup>3</sup>이나, 구 서독은 302m<sup>3</sup>로 구 동독의 212m<sup>3</sup>보다 월등히 높다.

구 동독은 과거 50여년 간의 계획경제 체제하에서 무질서한 목재이용으로 일부 지역에서 산림의 보속경영 체계가 파괴되어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독일은 이러한 산림자원을 토대로 매년 약 4천만m<sup>3</sup>의 목재를 생산하여 총 목재수요량의 약 78%를 자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수입량과 아울러 수출량도 많다는 점이다. 특기할 사항은 최근 들어 대경재(大徑材)의 수출이 활발하여 1994년부터 고가인 대경원목의 자급률이 100%를 넘어선 반면, 저가의 소경재(小徑材)는 과잉공급 추세가 심화됨에 따라 소경재 소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표 1-1-8>

독일의 목재수급 현황('95년)

(단위 : 백만m³)

공 급	수 요
○ 국내벌채 40.0	○ 재고증가 1.0
○ 고 지 31.4	○ 국내소비 91.0
○ 수 입 81.3	○ 수 출 60.7
○ 재고감소 -	
합 계 152.7	합 계 152.7

자료 : BMELF, Bericht ueber die Lage und Entwicklung der Forstund Holzwirtschaft. 1997.

소유별 산림면적은 국유림 34%, 공유림 20%, 사유림이 46%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구 동독의 국유림이 많은 반면 공유림 비율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구 동독의 사유림에는 현재는 국가 소유이나 사유화 중에 있는 643천ha가 포함되어 있다.

<표 1-1-9>

독일의 소유별 산림현황('95년말 현재)

(단위 : 천ha, %)

구 분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구 서독	7,758(100.0)	2,358(30.4)	1,869(24.1)	3,530(45.5)
구 동독	2,983(100.0)	1,262(42.3)	256(8.6)	1,465(49.1)
합 계	10,741(100.0)	3,620(33.7)	2,125(19.8)	4,996(46.5)

자료 : BMELF, Bericht ueber die Lage und Entwicklung der Forstund Holzwirtschaft. 1997.

(2) 주요 임업정책

(가) 정책목표

주요 산림·임업관련 법률은 연방산림법(공식명칭: 산림의 보전과 임업

육성에 관한 법)과 주산림법이 있다. 1975년에 제정된 연방산림법은 행정 대상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각 주는 연방산림법에 근거하여 각 주 여건에 부합하는 산림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산림정책 목표는 ① 산림의 경제적 이용(이용기능) 및 환경에 대한 산림의 중요성, 특히 자연계의 지속적인 활동성, 기후, 수리(水理), 대기정화, 토양생산력, 경관조성, 농업 및 사회 간접자본 시설 그리고 국민의 휴양(보호 및 휴양기능)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이유로 하여 산림을 보전하고 필요한 경우 늘리며, 질서정연한 임업경영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 ② 임업을 육성시키는 것 ③ 공공의 이해와 산림소유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주산림청의 과제는 ①국유림의 관리 및 경영 ②공유림의 기술지도 및 공유림 관리소의 운영지원 ③사유림에 대한 조언, 지도, 기술지원 ④산림의 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수립 ⑤영림감독 및 산림보호 업무 등이다.

#### (나) 산림행정

독일은 정치적으로 의회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16개 자치주(구 서독11개, 구 동독 5개)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므로 산림행정도 각 주가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기본 정책수립과 국제관련 업무만 주관하고 실제적인 산림정책은 주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산림행정기구로는 연방정부 농림부에 산림청이 있고, 각 주정부도 독립된 산림청을 두고 있다.

독일의 중앙부에 위치한 헷센주(전체 산림면적 약 90만ha)의 경우, 주산림청 산하에 3개의 지방영림국이 있고, 지방영림국 산하에 111개의 영림서가 있다. 영림서는 산림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데 관리면적은 평균 약 7,000ha이다. 그 외 주 산림청 산하에 임업센타와 임업연수원이 있다. 독일의 특징은 국가가 영림서를 통해 국유림과 함께 공·사유림도 대부분 관리, 경영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심각한 국가 재정난의 해소와 최근 산림경영(특히 국유림)의 적자개선을 위해 연방 및 각 주 산림청은 1993년부터 행정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있다. 헷센주의 경우, 주 산림청은 1995년 9월 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1995년~2001년까지 공무원 120명 감축과 일부 조직의 통폐합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산림청과 지방

영림국의 인력을 15% 감축하였으며, 임업시험장과 영림계획서를 통합하여 영림계획·임업연구·산림생태센터로 개편하였다.

영림서는 현재 111개 영림서 중 25개를 감축하여 영림서당 평균 관리면적을 7,000ha에서 9,000ha로 상향조정하고, 관리소 역시 772개중 112개를 감축하여 관리소당 평균 관리면적을 현재 1,000ha에서 1,170ha로 상향 조정키로 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 외 임업기계사업소와 사유림지도소를 통합 혹은 폐지할 계획이다.

#### (다) 통독 이후 구 동독지역의 산림관리정책

1990년 10월 구 동독 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가입함에 따라 독일통일은 법적으로 완성되었다. 즉 동독이 서독에 흡수됨에 따라 통일 이후 산림·임업관련 법률의 개·제정은 동독지역 주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 후 연방법률이 대부분 기본틀(Rahmengesetz)만 정한 상태에서 각 주는 자체 법률을 제정해야 했기 때문에 동독 지역에서의 법률 시행은 상당기간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분야의 경우 1993년 말까지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었다. 각 주는 주산림법을 1993년 말까지 모두 제정하였다. 주수렵법은 1992년 말까지 제정이 완료되었는데 통일 직후부터 새로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는 통일조약에 의거 통일 이전의 수렵제도에 따라 수렵이 행해졌다. 임업종자 및 묘목법도 1994년 말까지 수렵법과 유사하게 적용되었다.

구 동독 지역에서의 임업보조사업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농업구조개선 및 연안보호를 위한 공동과제법에 의거 제정된 “임업보조규정”에 따라 통일 이전인 1990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 1991년 1월부터 동독 지역에서도 “농업구조개선 및 연안보호를 위한 공동과제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독 지역의 임업보조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동독지역에서는 주(州)시행법(Ländereinführungsgesetz)에 의거 통일 이전인 1990년 8월부터 주산림행정 조직개편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임업경영서는 해체되고 신탁법에 의거 국가임업경영서의 재산과 관리산림을 임시로 신탁관리기관으로 이관시켰다. 신설된 주산림청은 신탁청의 위탁으로 해당지역 모든 신탁림

(信託林)의 경영을 위임받았다.

동독 지역에서 새로운 산림 행정조직은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구 서독과 같이 3단계(주산림청 → 지방영림국 → 영림서)로 하여 "단일영림서(Einheitsforstamt)"체제를 도입하였다.

통일 직전 동독 지역에서의 산림분야 종사인력은 산림 1,000ha당 3.24인이었으나, 이것이 통독 후에는 산림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2.60인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당시 서독지역 수준인 2.34인 정도까지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동독지역 산림관련 단체의 조직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통일 과정에서부터 서독지역 단체의 도움으로 동독지역의 산주협회 및 산림공무원 협회 등 많은 단체가 분야별, 지역별, 주별로 결성되어 서독지역에 이미 결성되어 있던 중앙본부에 대부분 가입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독일 통일 후의 임업정책은 앞으로의 대북한정책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박경석)

### 3. 목재수급 동향

세계의 목재 소비량은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목재 소비량의 증가가 현저하다. FAO 자료에 의하면, 1996년 전세계 원목(roundwood) 생산량은 3,354백만m<sup>3</sup>으로 1995년도에 비해 0.3% 증가되었다. 전세계 원목 생산량 중 연료재가 56%를 점유하였으며, 제재목, 목질판상재, 종이 및 판지 등의 생산을 위한 산업용재가 1,490백만m<sup>3</sup> 생산되어 44%를 점유하였다. 개발도상지역에서는 과거 30년 동안 주로 인구증가에 의한 연료재의 소비량이 2배로 되었다.

산업용재 생산량 중 수종별 점유율을 보면, 62%가 침엽수용재이고, 38%는 활엽수용재로서 전년도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었다. 용도별로는 전체의 62%인 920백만m<sup>3</sup>이 제재 및 단판용이며, 펄프용이 28%인 414백만m<sup>3</sup>, 나머

지가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중미지역이 전체 산업용재 생산량의 40%를, 유럽지역이 25%, 아시아지역이 19%, 남미지역이 9%, 아프리카지역이 5%, 오세아니아지역이 3%를 점유하고 있다.

1996년도 전세계 제재목 생산량은 430백만<sup>3</sup>m<sup>3</sup>으로 1995년도에 비해 0.6% 정도 증가되었다. 지역별 제재목 생산량의 점유비율을 보면, 아프리카지역이 2%(9백만<sup>3</sup>m<sup>3</sup>), 북·중미지역이 41%(177백만<sup>3</sup>m<sup>3</sup>), 남미지역이 7%(28백만<sup>3</sup>m<sup>3</sup>), 아시아지역이 23%(98백만<sup>3</sup>m<sup>3</sup>), 유럽지역이 26%(110백만<sup>3</sup>m<sup>3</sup>), 오세아니아지역이 2%(7백만<sup>3</sup>m<sup>3</sup>)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10> 세계 목재생산 및 소비현황('96)

구 분		원 목		제 품			
		연료목 · 목탄 (천 <sup>3</sup> m <sup>3</sup> )	산업용 원 목 (천 <sup>3</sup> m <sup>3</sup> )	제재목 (천 <sup>3</sup> m <sup>3</sup> )	목 질 판상재 (천 <sup>3</sup> m <sup>3</sup> )	펄 프 (천톤)	종이· 판지류 (천톤)
아 프 리 카	생 산	519,884	67,931	9,147	1,822	2,131	2,695
	소 비	519,736	61,168	12,395	2,019	1,708	3,406
아 시 아	생 산	905,236	280,153	98,166	45,292	42,869	81,926
	소 비	904,800	334,326	114,524	47,188	51,333	89,758
오세아니아	생 산	8,756	41,461	6,764	2,158	2,330	2,651
	소 비	8,745	23,128	6,557	1,704	1,851	3,333
유 럽	생 산	82,439	369,650	110,285	44,167	38,047	80,936
	소 비	83,325	368,276	101,671	43,678	43,040	72,913
북 중 미	생 산	155,437	600,447	176,948	49,911	83,448	106,847
	소 비	155,170	586,180	165,858	49,539	73,680	99,000
남 미	생 산	193,007	129,890	28,336	6,037	9,719	9,328
	소 비	192,651	119,863	25,214	4,348	6,369	10,453
계	생 산	1,864,760	1,488,530	429,645	149,385	178,543	284,383
	소 비	1,864,427	1,492,939	426,233	148,474	177,962	278,767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9.



<표 1-1-11>

품목별 5대 생산국('96)

구 분	국별 생산비중(%)
연료 목·목탄	인도(15), 중국(11), 인도네시아(8), 브라질(7), 나이지리아(6)
산업용 원목	미국(27), 캐나다(12), 중국(7), 브라질(6), 러시아(5)
제재목	미국(26), 캐나다(15), 중국(6), 일본(6), 러시아(5)
목질판상재	미국(26), 중국(10), 독일(7), 인도네시아(7), 캐나다(7)
펄프	미국(33), 중국(14), 캐나다(14), 일본(6), 스웨덴(5)
종이·판지류	미국(30), 중국(11), 일본(11), 캐나다(7), 독일(5)

자료 : FAO, State of the World's Forests, 1999.

1996년도 전세계 목재펄프생산량은 157백만 톤으로 1995년도에 비해 3%정도 감소되었다. 지역별 목재펄프생산량의 점유비율을 보면, 북·중미 지역이 54%(84백만톤), 유럽지역이 25%(39백만톤), 아시아지역이 13%(20백만톤), 기타지역이 8%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도 전세계 종이 및 판지의 생산량은 284백만 톤으로 1995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지역별 종이 및 판지생산량의 점유비율을 보면, 북·중미지역이 38%(107백만톤), 유럽지역이 28%(81백만톤), 아시아지역이 29%(82백만톤), 기타지역이 9%를 차지하였다.

FAO에서 예측한 2010년 세계의 산업용 원목생산량은 1996년의 1,489백만m<sup>3</sup>에서 2010년에는 1,872백만m<sup>3</sup>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가 84백만m<sup>3</sup>, 아시아가 421백만m<sup>3</sup>, 오세아니아가 502백만m<sup>3</sup>, 북중미가 658백만m<sup>3</sup>, 남미가 153백만m<sup>3</sup>이다.

이와 같이 인구의 증가와 산업발달로 목재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지구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보존의 강화를 세계적인 규범으로까지 규정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재공급의 지속적인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화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목재수급의 균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림·육림에 의한 자원축적량의 증가와 함께

경제성이 있는 해외조림 투자대상국을 선별 투자하여 국내에 필요한 목재 자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함께 기술개발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임업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이성연)

## 4. 임업분야 국제회의 및 협약체결 동향

### 가. 일반동향

1992.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한 의제21(산림황폐방지, 지속가능한 산림개발, 생물다양성 보존)과 산림원칙성명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UN을 비롯한 국제기구(FAO, ITTO), 지역협의회(몬트리올, 헬싱키프로세스) 및 산림관련 비정부기구(NGOs)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 이에 대한 방향 정립을 위한 국제적인 지침, 기준과 지표를 개발 중에 있고, 더 나아가 이의 국내적인 이행을 위한 자국의 산림법령의 개정등 활발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47차 UN총회('92.12)에서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의제 21의 이행상황을 검토·감시할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를 결의하였으며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는 각국이 보고한 산림관련 사항과 산림원칙에 대한 국제기구 이행 전반을 최종 평가하기 위하여 동 산하에 산림에 관한 정부간 패널(IPF)을 설립하여 1995~1997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관리에 관한 지표개발 및 법적 구속력을 가진 포괄적 산림관련 국제규범 작성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UN지속개발위원회는 유엔차원에서 산림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산림패널을 승계하여 모든 정부가 참여 논의하는 정부간 산림포럼(IFF)을 새로이 구성하여 뉴욕 및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는 UN본부 및 구주사무소에서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국제 산림협약 체결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논의

- 모든 형태의 산림, 특히 개발도상국 산림의 경영, 보존, 개발활동의 지원을 위한 국제기금 설치 검토
- 모든 산림제품의 비차별적인 국제교역 및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문제 검토
-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지원을 위한 기술이전 문제
- 산림훼손의 원인분석, 전통적인 산림관련 지식, 환경보호를 위한 산림 복구문제, 산림보존문제 등

산림문제는 관련 국제회의 외에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사막화방지협약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97.11, 일본 도쿄)에서 1990년 기준대비 1차 목표기간(2008~2012)에 온실가스 배출 평균 감축량은 미국 7%, 일본 6%, EU 평균 8%, 전체 평균 5.2%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도상국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만 OECD에 가입한 선발 개도국으로서 감축 목표를 설정토록 계속 압력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하다.

교토회의에서는 토지이용 변화와 산림부문에서의 배출/흡수량을 감축 목표 이행 실적에 반영키로 하였다. 목표년도 순 흡수량이 기준년도(1990년) 순 흡수량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만큼 산업부문에서 더 배출할 수 있으므로 온실가스 주흡수원인 산림의 보전과 이의 확대가 국내 대응책으로 주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 나. FAO 제14차 산림위원회 · 각료회의

FAO 산림위원회는 매 2년 FAO 본부인 로마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제14차회의는 1999. 3월에 개최되었다. 또한, 각료회의는 세계의 임업부 장관이 참석하여 매4년마다 현안사항을 집중 논의한다. 이 회의에 우리나라에서는 산림청 차장과 기술지원과장이 참석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은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과정 및 정부간 산림패널등 유엔환경개발회의 후속조치에 대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주요 논의사항은 산림자원 조사평가의 강화,

기준 및 지표의 정의, 임산물 무역촉진, 국가산림계획 이행 및 국제적 제도 체제이다.

그 외에 SFM 토대마련을 위한 국가산림정책 개발 등이 중점 의제로 논의되었으며, 우리나라 대표는 우리나라 산림정책, 1998년 수립된 제4차 산림기본계획, SFM 이행 및 실업자 고용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준과 지표에 대한 국내적 이행은 이미 캐나다, 미국, 러시아 등은 이론적 단계를 정립한 후 산림모델링을 현지에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적용체계의 수립을 위한 SFM 이론을 정립하고, SFM 현장적용을 위한 선진모델링을 도입할 단계에 와 있다.

유엔가입으로 우리나라의 FAO 분담금이 1997년 280만\$에 달하고 있으나 임업분야에서 관련 전문가의 FAO 진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앞으로 관련전문가를 FAO에 파견하여 국제간 교류 협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FAO 산림위원회 15차 회의는 2001년 3월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다.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이사회**

국제열대목재기구 제24차 이사회가 1997.5.20~28간 가봉 리브리빌에서, 제25차 이사회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2회 개최되며 상반기에는 열대목재 생산국에서, 하반기에는 ITTO 본부가 소재한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고 있다.

국제열대목재이사회는 1998년말 현재 생산국 28개국, 소비국 23개국 등 5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열대림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달성, 열대목재 교역추진과 열대 산림국가의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브라질, 인니, 말레이시아 등은 주요 열대목재 생산국 회원이고, 소비국 순위는 일본, 중국, 한국 순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열대목재 생산국(인니, 말련)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열대목재 원자재를 들여와 이용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의 기반을 확보하

였으며 특히 1970년대에는 세계 최대 합판 생산국이기도 하였다.

열대 산림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 속한 나라들로 원주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화전경작으로 매년 수백만ha의 산불을 발생시키고, 지나친 남벌과 도벌 등은 열대산림의 파괴를 불러오고 있어, 지구 산소 공급원인 열대림의 보존은 전세계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상품에 대한 통합프로그램으로부터 독립하여 1983년 열대목재협정을 채택, 1986년11월 ITTO를 결성, 일본 요코하마에 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1998년까지 행정분담금으로 1,880천\$을 납부하였으며, 특별회계 기여를 통한 사업지원금으로 1996년도에 10천\$과 1997년도에 100천\$을 인니, 가이아나, 가봉, 볼리비아, 피지, 중국, 필리핀에 10천\$~20천\$을 지원했다. 1997년 하반기에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는 입장이 되어 열대 산림국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당분간 어렵게 되고 있다. 일본의 사업비 지원액은 전체 사업비의 약 80%에 해당하는 15,000천\$ 정도이며, 스위스, 미국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사업비지원은 열대 산림국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의한 산림관리와 목재가공산업에 기술적인 지원을 통하여 열대림의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므로 지구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라. 기후변화협약**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제1차 당사국총회('95. 3, 베를린)에서는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강화를 위해 베를린 위임(Berlin Mandate)을 결정하였으며, 제2차 당사국총회('96. 7, 제네바) 각료회의에서는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베를린 위임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채택하였다.

제3차 당사국총회('97. 12, 교토)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를 채택하여 선진국의 200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산림 등 흡수원(Sink)에 의하는 배출 온실가스의 흡수기능을 새로이 추가하고 배출

권 거래,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 등의 도입으로 의무이행의 신축성을 제고하였다.

교토총회에서 선진국에 대한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합의로 한국 등 선발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상원은 결의를 통해 한국, 멕시코, 중국, 인도 등을 의무국가로 규정하였으며, EU 역시 OECD 가입국인 한국, 멕시코에 대하여 의무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교토회의 이전까지는 주요 의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주로 다루다가 이 회의 이후부터 흡수원을 고려한 순배출량 개념이 도입되면서 산림에 대한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제4차 당사국총회('98. 11,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3차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를 이행키로 하는 행동의 틀에 합의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행동계획은 선진국들의 CO<sub>2</sub> 등 온실가스 감축방법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안, 개도국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라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2000년 제6차 당사국총회 때까지 확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차 총회의 최대 쟁점인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안은 산업적 손실을 우려한 개도국의 격렬한 반발로 논의 자체가 무산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이 예상되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산림청은 이와 관련된 산림부문의 지속적인 정보수집을 위하여 국제회의 참가 등과 동시에 관련 부처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마. 생물다양성협약

우리나라는 1994. 10월 동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그 동안 1994~1996년까지 3차례의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었고, 1998. 5월에는 제4차 당사국총회가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되었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생태계의 구성요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다

인구증가, 산업화, 열대림 파괴 등으로 지구 생물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1990년대는 하루에 140여종이 소멸하였고, 2000년대는 전체 종수의 20% 멸종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체제 구축을 위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생물다양성 협약을 채택하게 되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의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및 이익에 관한 의무, 기술에의 접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의무, 생명공학의 관리 및 이익배분, 토착민·지역사회 전통지식 보호 인정 등이다.

1998. 5월 슬로바키아에서 개최된 제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산림을 독립 의제로 선정하여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보공유체계(Clearing House Mechanism) 설치, 식물분류를 위한 Inventory, 완충지역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본 회의에는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과학환경심의관 및 관계부처에서 4명의 담당사무관이 참석하였고 산림청에서는 산림환경 담당사무관이 참석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대표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추진상황, 기준·지표 개발 필요성 및 SFM 관련 제9차 몬트리올프로세스 서울개최 등에 관하여 발언하였다.

앞으로 산림청의 대책으로는 국립수목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산림 생물다양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생식물의 자원화·산업화를 위한 특허출원을 장려하여 국가 식물자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화 방안 등이다.

(국제협력과 임업사무관 강 호 덕)

## 제 2 장 국내 임산물 수급동향

### 제1절 임산물 수급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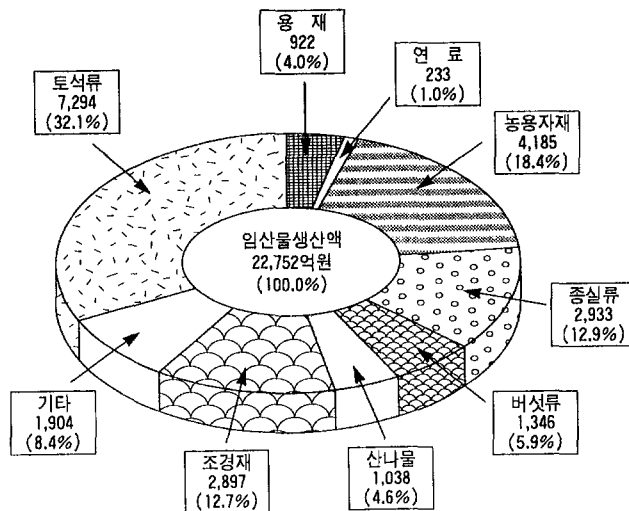
1998년도 임산물 총 생산액은 2조 2,752억원으로서 1997년에 비해 921억 원(4.2%)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취 임업적 성격이 강한 임산물의 경우, IMF 관리체제 하에서의 경기침체와 위축된 소비 분위기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조경수·분재·야생화 등 신규품목의 산입으로 2,8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산나물·수지·약용류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수실(종실)·명개잎·농용자재류 등에서는 큰 감소를 보였다.

한편, 국민총생산(GNP) 계정시 채석업으로 분류하는 토석류 생산액은 전년대비 약 32%가 감소한 7,294억원이었다.

토석류를 제외한 임산물생산액의 종류별 구성비율은 수실·농용자재가 1998년도 임산물 총생산액의 46.1%를 점유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조경재 18.7%, 버섯류 8.7%, 산나물류 6.7% 순이었다.

<그림 1-2-1>

1998년도 임산물 생산액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표 1-2-1>

연도별 임산물 생산액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94	%	'95	%	'96	%	'97	%	'98	%
합계	21,621 (9,608)	100	20,831 (9,798)	100	21,074 (10,499)	100	21,831 (11,106)	100	22,752 (15,458)	100
용재	643	3.0	676	3.2	735	3.5	793	3.6	922	4.0
연료	3	0.0	230	1.1	132	0.6	177	0.8	233	1.0
농용자재	70	0.3	3,147	15.1	3,165	15.1	3,415	15.6	4,185	18.4
중실	1,192	5.5	2,957	14.2	3,400	16.1	3,448	15.9	2,933	12.9
버섯	31	0.1	914	4.4	853	4.0	942	4.3	1,346	5.9
산나물	704	3.3	689	3.3	758	3.6	874	4.0	1,038	4.6
조경재	-	-	-	-	-	-	-	-	2,897	12.7
기타	6,965	32.2	1,185	5.7	1,456	6.9	1,457	6.8	1,904	8.4
토석	12,013	55.6	11,033	53.0	10,575	50.2	10,725	49.1	7,294	32.1

주 : ( )내는 토석류를 제외한 합계임.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1. 용재

1998년도 용재 생산량은 922천m<sup>3</sup>(전년대비 1.1%증)으로 생산액은 922억원(전년대비 14.0%증)으로 임산물 총 생산액 2조2,752억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수종별로는 소나무 386천m<sup>3</sup>, 리기다 120천m<sup>3</sup>, 낙엽송 73천m<sup>3</sup>, 잣나무 29천m<sup>3</sup>, 참나무류 193천m<sup>3</sup> 등으로 이들 5가지 용재가 전체 용재 생산량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8년도의 국내재 소비량은 전년대비 35%가 증가한 1,428천m<sup>3</sup>이었다. 국내재 소비의 증가 원인은 산지전용에 의한 생산증가와 외환위기에 의한 환율급등 등으로 국내재의 높은 가격경쟁력 때문으로 분석된다.

용도별 소비(공급)형태는 「제재 및 목가공용」이 495천m<sup>3</sup>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용」417천m<sup>3</sup>, 「펄프용」406천m<sup>3</sup>, 「갱목용」110천m<sup>3</sup> 등으로 이용되었다.

<표 1-2-2>

수종별 용재생산량('98)

(단위 : 천m<sup>3</sup>, %)

계	침엽수						활엽수				포플러류
	소계	소나무	리기다	낙엽송	잣나무	기타	소계	참나무	아까시	기타	
849	614	387	120	73	29	5	233	193	7	33	2
100.0	72.3	45.6	14.1	8.6	3.4	0.6	27.4	22.7	0.8	3.8	0.2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 2. 종실류

임산물 생산 통계조사 대상의 종실류는 밤, 호도, 대추, 잣, 도토리, 은행, 산딸기, 뽕은감, 머루, 다래, 산초, 제피 등이다.

1998년 종실류 총 생산량은 143,511M/T이었으며, 생산액은 약 2,933억원으로 임업총생산액의 1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 14.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생산량은 밤 109,956M/T, 뽕은감 19,469M/T, 대추 8,913M/T, 도토리 1,651M/T, 호도 1,037M/T, 은행 1,014M/T 등이며, 이들 6가지 종실이 전체 종실류 생산의 9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뽕은감은 1998년 처음으로 임산물 생산통계에 포함된 품목으로 종실류 총 생산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 3. 버섯류 및 산나물

주요 임산버섯은 송이를 비롯하여 표고, 느타리, 목이버섯 등으로 1998년 버섯류의 총 생산량은 4,527M/T으로 전년대비 6.3%가 증가한 실적을 보였

다. 생산액으로는 전년대비 42.9%가 증가한 1,346억원으로 1998년 임산물 총생산액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품목별 생산실적은 표고가 가장 많아 4,049M/T으로 전체 버섯 생산량의 89.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송이 278M/T, 느타리 59M/T, 목이 27M/T의 순으로 생산되었다.

<표 1-2-3> 연도별 종실류 생산량

(단위 : M/T)

구분	'90	'95	'96	'97	'98
계	95,801	112,070	126,741	146,039	143,511
밤	85,043	93,655	108,346	129,673	109,956
대추	5,953	13,180	13,969	11,061	8,913
호두	906	1,311	1,149	1,167	1,037
잣	868	1,084	496	1,004	800
기타	3,031	2,840	2,781	3,134	22,805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표 1-2-4> 연도별 버섯류 생산량

(단위 : M/T)

구분	'90	'95	'96	'97	'98
계	2,997	4,106	4,325	4,260	4,527
송이	945	654	168	243	278
표고	1,648	2,824	3,404	3,800	4,049
목이	24	25	26	22	27
느타리	87	464	617	99	59
기타	293	139	110	97	114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한편, 산나물류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2.8%가 증가한 23,825천kg이었고 생산액은 전년대비 18.8%가 증가한 1,038원으로 임산물총생산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산나물류 중 생산액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취나물로서 산나물류 총생산액의 32%를 차지하는 332억원이었고, 다음으로 더덕 300억원(29%), 도라지 156억원(15%), 두릅 99억원(10%), 고사리 94억(9%)의 순으로 생산되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 및 환경 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무공해 식품에 대한 선호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밤, 잣, 표고, 산나물 등의 자연식품 소비도 증가되고 있다.

<표 1-2-5>

### 산나물류의 생산

(단위 : 천kg, 억원)

구분	'97		'98	
	생산량	생산액	생산량	생산액
계	21,130	874	23,825	1,038
고사리	1,913	82	21,717	94
더덕	2,372	215	3,064	300
두릅	1,257	80	1,408	99
취나물	9,687	296	11,123	332
도라지	3,801	146	3,978	156
기타	2,100	56	2,081	57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 4. 조경재 · 기타

조경재는 1998년부터 임산물 생산액 통계에 신규 포함된 품목으로서 조사대상은 조경수, 분재, 야생화 등이다.

1998년 조경재류의 생산액은 2,897억원으로 임산물 총생산액의 18.7%를

차지하는 중요한 품목이다.

1998년에 임산물 생산통계에 신규품목 개발로 추가된 품목과 생산액은 조경재류의 조경수 2,391억원, 분재 284억원, 야생화 222억원 및 뽕은감 88억원, 목초액 32억원, 장뇌 6억원, 등굴래 72억원 등으로 1998임산물 총생산액의 13.6%를 점유하는 3,095억원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조경수·분재·야생화 등의 조경재를 비롯한 신규품목은 금후 임산물 생산액 증가 및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품목으로 기대된다.

<표 1-2-6>

조경재의 생산규모('98)

구 분	계	조경수(천본)	분재(천본)	야생화(천개)
수 량	-	20,969	3,003	5,709
생산액(억원)	2,897	2,391	284	222

자료: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김철상)

## 제 2 절 임산물 교역 동향

### 1. 임산물 수출 동향

1998년도 임산물 수출액은 총 2억 9천만\$로서 지난 해 보다 약 15%감소한 실적을 나타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밤 등의 종실류와 합판·섬유판·마루판·제재목 등의 목재류, 송이·표고 등의 버섯류 등이다.

1998년의 임산물 수출 중 수출액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밤」이었다. 「밤」은 전체 수출액의 23%를 차지하는 65,284천\$의 실적을 기록하여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합판 18%(53,053천\$), 석재 17%(47,575천\$), 송이버섯 12%(34,042천

\$), 섬유판 9%(26,798천\$), 마루판 6%(17,276천\$), 표고버섯 3%(8,703천\$), 제재목 1%(4,154천\$)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1998년도 임산물 수출은 밤·송이·표고 및 합판·섬유판·마루판 등의 품목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7>

임산물의 수출실적

(단위: 천\$, %)

순위	'97년수출			'98년수출		
	품 목	수출액	비 율	품 목	수출액	비 율
	계	339,072	100.0	계	288,420	100.0
1	석 재	93,693	27.6	밤	65,284	22.6
2	밤	88,393	26.1	합판	53,053	18.4
3	합 판	30,624	9.0	석 재	47,575	16.5
4	송이버섯	30,088	8.9	송 이 버섯	34,042	11.8
5	섬 유 판	27,035	8.0	섬 유 판	26,798	9.3
6	마 루 판	15,765	4.6	마 루 판	17,276	6.0
7	제 재 목	9,831	2.9	표 고 버섯	8,703	3.0
8	표고버섯	8,292	2.4	제 재 목	4,151	1.4
9	벽 지	2,595	0.8	목제케이스	3,626	1.3
10	죽 제 품	2,386	0.7	벽 지	2,046	0.7

자료: 산림청 임업정책국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지난 해와 같이 총 수출액의 59%(170,218천\$)와 12%(35,843천\$)를 점유,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으로, 이들 두 나라는 전체 수출액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영국 6%(17,411천\$), 홍콩 5%(13,338천\$), 미국 4%(10,553천\$) 등이 주요 수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출이 증가한 주요 품목인 합판·마루판·목제들 등의 목재류는 국내경기 침체 및 인도네시아 등 수출국의 정치·경제적 불안에 편승하여

수출증가를 이룩하였다. 또한 송이·표고 등의 버섯류는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 중국·북한 등 경쟁국보다 생산·유통부문에 있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쟁력 있는 수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표 1-2-8> 수출 대상국별 실적(상위10개국)

(단위 : 천\$)

순위	'97년			'98년		
	수출국	수출액	비율	수출국	수출액	비율
	계	339,072	100.0	계	288,420	100.0
1	일본	249,567	73.6	일본	170,218	59.0
2	중국	37,215	11.0	중국	35,843	12.4
3	홍콩	9,733	2.9	영국	17,411	6.0
4	미국	7,393	2.2	홍콩	13,338	4.6
5	네덜란드	6,918	2.0	미국	10,553	3.7
6	러시아	5,068	1.5	네덜란드	9,076	3.1
7	독일	3,899	1.1	독일	3,626	1.3
8	아랍에미리트	2,174	0.6	대만	3,602	1.2
9	대만	1,804	0.5	포르투갈	2,245	0.8
10	싱가포르	1,742	0.5	남아공	2,068	0.7
기타	-			-	20,440	7.2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 2. 임산물 수입동향

1998년도 임산물 수입은 외환위기, IMF 관리 체제하에서의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총수입액으로 전년대비 61%가 감소한 약 10억 6백만 \$의 실적을 보였다.

<표 1-2-9>

임산물의 수입실적(상위10품목)

(단위 : 천\$, %)

순위	'97년 수입			'98년 수입		
	품목	수입액	비율	품목	수입액	비율
	계	2,583,884	100.0	계	1,006,217	100.0
1	원목	877,117	33.9	원목	349,655	35.7
2	제재목	452,520	17.5	제재목	165,623	16.4
3	합판	449,052	17.4	합판	154,398	15.3
4	성형목재	119,741	4.6	칩	50,610	5.0
5	단판	111,708	4.3	단판	42,625	4.2
6	석재	97,595	3.8	성형목재	35,978	3.5
7	칩	94,872	3.7	석재	32,480	3.2
8	파티클보드	53,650	2.1	파티클보드	25,121	2.5
9	목탄	29,029	1.1	목탄	15,157	1.5
10	로진	27,099	1.0	섬유판	10,317	1.0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표 1-2-10>

수입 대상국별 실적(상위10개국)

(단위 : 천\$)

순위	'97년			'98년		
	수입국	수입액	비율	수입국	수입액	비율
	계	2,583,884	100.0	계	1,006,217	100.0
1	인도네시아	437,952	16.9	인도네시아	179,399	17.8
2	말레이시아	403,053	15.6	뉴질랜드	146,359	14.5
3	미국	354,273	13.7	미국	138,095	13.7
4	뉴질랜드	304,055	11.8	중국	136,999	13.6
5	중국	293,838	11.4	말레이시아	132,101	13.1
6	칠레	222,748	8.6	칠레	51,503	5.1
7	러시아	77,384	3.0	러시아	45,350	4.5
8	파푸아뉴기니	67,304	2.6	파푸아뉴기니	28,124	2.8
9	브라질	55,781	2.2	호주	21,529	2.1
10	호주	52,670	2.0	캐나다	15,551	1.5
-	-	-	-	기타	111,207	11.3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주요 수입품목은 국내 수요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목을 비롯하여 제재목, 합판, 칩, 단판, 성형목재, 섬유판 등의 목재류와 석재 등이었다.

주요 수입 대상국별 점유율은 인도네시아가 임산물수입 총액의 17.8%를 차지하는 1억8천만\$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뉴질랜드가 15%를 점유하는 1억5천만\$, 미국 14%(138백만\$), 중국 14%(137천\$), 말레이시아 13%(132천\$)의 순이었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김철상)

## 제 2 편 1998년도 주요 임정성과

여 백

# 제 1 장 산지의 자원화 기반조성

## 제1절 경제림의 지속적 육성

### 1. 우량종묘 및 경제수종묘 공급기반 확충

조림의 성패를 좌우하는 우량한 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량종자 공급원 확보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1998년에는 우량종자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 채종원 조성(12수종 13ha) 및 전나무, 활엽수 등 유용수종에 대한 신규 채종림(3수종 9ha)을 지정하였다.

또한 2040년까지 조림용 종묘의 채종원산 종자 100% 공급 목표달성을 위해 용재수종, 내공해수종, 환경수종, 특용수종을 신규 채종원으로 조성하고 개량효과가 높은 2세대 채종원 조성도 착수할 계획이다.

묘목생산에 있어서는 산주 희망수종과 제4차 산림기본계획상 활엽수 조림비율이 40%인 점을 감안하여 향토 유용활엽수 묘목을 점증적으로 확대 생산하고, 그 밖에도 도시·공단 등 주변 식재용 공해에 강한 환경정화수종 생산, 경제적 가치가 높고 수형이 아름다운 단풍나무, 느티나무와 방화수림대 조성을 위한 내화성 수종도 생산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분비나무, 주목, 비자 등 특용수종과 일반조림이 어려운 수종 양묘를 위한 온실 시설과 산지묘포 조성 확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묘목 생산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종묘생산지 표시 등 품질인증제를 완전 정착시켜 우량 종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산림자원과 임업사무관 심영만)

## 2. 자원가치가 낮은 산림을 경제림으로 육성

조림사업은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조성기반 구축을 목표로 지역 및 산지 특성에 맞는 생태적 조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림방법의 다양화, 양적 조림에서 질적 조림으로의 전환, 수종별 다양한 특성을 활용한 조림 등을 추진한 결과 17,785ha 계획에 20,383ha의 조림을 추진하였다.

경제수 조림은 경영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ha당 식재본수를 일률적으로 3,000본으로 하던 것을 활엽수는 5,000본, 낙엽송은 2,000본으로 조정하는 등 조림방법을 개선하였고, 파종조림, 용기묘조림으로 임업경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도로·도시·마을·관광지 주변등의 산림과 공한지에 향토특색수종 큰 나무 조림을 실행하여 속성녹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기에 조성토록 하였다.

또한 도시경관림, 미래의 숲, 생명의 숲, 명산 가꾸기등 지역특색 녹화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산림정책을 전개하였고 산림을 경제·환경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휘되도록 시범전시림을 조성하여 경영입정 시대의 산림자원 조성방법을 제시하는 등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중점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재위주의 침엽수조림에서 소득유망 유실수·활엽수 등으로 조림수종을 확대하였다.

조림수종을 1997년도 26수종에서 1998년도에는 황칠나무, 고로쇠나무, 음나무 등을 추가하여 48수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상수리 파종조림, 용기묘 조림을 시범 추진하였다.

둘째, 도시·공단 주변 환경조림(1,460ha)과 5대강유역 수원함양(1,140ha) 조림을 추진하였다.

셋째, 도로변, 사적지, 관광지 등에 큰나무 조림(1,515ha)을 추진하였다.

넷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도시경관림 조성, 미래의 숲, 생명의 숲, 명산 가꾸기, 관광림 조성, 무궁화 동산 조성 등 지역특색 녹화사업(230ha)

을 본격 추진하였다.

다섯째, 생태적 자원 조성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전시림을 조성하였다.

1개 전시림 구역은 100~150ha로 지역 실정에 맞는 면적 규모로 조성하고 도·지방산림관리청별로 1개소씩 1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식재수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향토 경제수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고성산불 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도 송이산 복원조림을 완료하고, 인가주변, 도로변, 관광지 주변에는 큰나무를 심어 경관숲이 조성되도록 하였으며, 내륙산간 지역에는 상수리나무, 잣나무 등 경제수를 심어 복구조림을 착실히 추진하였다.

<표 2-1-1>

'98 조림계획 대 실적

(단위 : ha, 천본)

사업별	계 획		실 적		비율 (%)	
	면적	본수	면적	본수	면적	본수
계	17,785	51,238	20,383	54,923	115	107
○ 경제수조림	15,444	46,834	16,042	48,290	104	103
○ 큰나무조림	1,381	2,072	1,614	2,652	117	128
○ 고성산불피해복구	730	2,115	727	2,106	100	100
- 경제수	263	825	260	813	100	100
- 큰나무	305	458	305	461	100	100
- 용기묘	162	832	162	832	100	100
○ 지역녹화사업	230	217	584	1,296	254	597
○ 유실수조림	-	-	1,416	579	-	-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산림자원과 임업사무관 심영만)

### 3. 육림사업의 확대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조성

지난 30년동안 심은 어린 나무들을 경제·환경적 기능이 높은 우량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정책을 조림 위주에서 육림 중심으로 전환하고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등 육림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적기·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작업의 질과 성과를 높이고 있다.

1998년도에는 육림사업 추진 방향을 첫째, 생산임지 중심의 대단위 권역을 선정하여 통합 육림을 실행하고, 둘째, 지역완결, 통합사업, 보조율 단일화를 사업실행 원칙으로 설정하여, 시장·군수는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에 대하여 총 사업량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ha당 사업단비를 통합 조정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선 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제도 정착을 유도하였다. 또한 덩굴제거 사업에 대한 보완작업은 당해년도 추기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덩굴제거 효과를 제고하였으며, 덩굴제거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현행 글라신액제 주입방법을 현장애로 기술 개발 과제로 개발된 디캄바 도포 방법을 보급하여 인력·경비 절감과 최덩굴 고살효과를 증진하였다.

아울러 영세산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육림사업비의 정부보조율을 개선하여 육림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8년도에는 189,996ha의 육림사업을 실행하여 계획대비 100%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1-2>

국고보조금 개선

(단위 : %)

사 업 별	'97			'98		
	국고	지방비	자부담	국고	지방비	자부담
· 풀 베 기	40	40	20	40	40	20
· 어린나무가꾸기	40	40	20	40	40	20
· 덩 굴 제 거	40	40	20	40	40	20
· 천 연 림 보 육	40	40	20	40	40	20
· 간 벌	40	40	20	40	40	20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표 2-1-3>

'98 육림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사업별	계획	실적	비율(%)
계	188,641	189,996	100
플베기	88,960	89,041	100
덩굴제거	42,999	61,072	100
어린나무가꾸기	24,077	24,210	100
천연림보육	9,016	9,030	100
간벌	24,589	24,643	100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산림자원과 임업서기관 박종호)

## 제 2 절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대대적 추진

### 1. 추진 배경

우리의 산림은 30년생 이하의 나무가 전체산림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한창 가꾸어 주어야 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가꾸지 못하고 바라만 보아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지난 1997년말에 우리는 IMF라는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많은 실업자가 발생되었으며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현안과제였고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실업대책이 추진되었다.

정부 실업대책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공공근로사업인데 산림청에서는 숲 가꾸기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실업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됨으로써 1998년 1단계부터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 2. 추진 성과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이 정부가 시행한 20여개의 중앙부처 시행 공공근로사업중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의 생산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데 있다.

실직자를 고용하여 숲을 가꾸어 주는 것은 숲의 경제적 가치는 3배, 환경적 가치는 2배를 증진시킴은 물론 숲 가꾸기 추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벌재등 부산물을 수집 활용하여 국내재 공급률을 높여 외재 대체효과를 가져다 주고, 부가가치가 낮은 간벌재, 작은 가지 등은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축산 폐수정화용 톱밥과 조사료 원료로 공급함으로써 축산 농가와 환경단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독특한 성과이다.

1998년의 경우 전국 250여개 사업시행기관(국유림관리소, 시·군·구), 762개 사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주요 성과로서 고용실적을 보면, 단계별로 차이가 있지만 1일 평균 15,000명에서 29,000명이 참여하였고 연인원으로 환산할 때 150만명을 고용하여 단일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실직자를 고용하였다. 또한 외형적인 고용 실적 외에 질적인 면에서 특이한 점은 다른 공공근로사업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서울역 노숙자 등 600여명의 도시지역 실직자를 경기도 양평, 광주, 이천, 용인, 의정부 지역과 강원도 강릉, 인제 지역에 현지 숙박형태로 고용한 점이다.

그리고, 근로자 1,500명을 선발하여 기술교육을 이수시켜 숲 가꾸기 기술지도인부로 활용하여 작업지도는 물론 안전 관리 등을 맡아 생태적·기술적인 숲 가꾸기를 추진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들 실직자가 가꾼 산림은 40,000ha로서 목표량 34,700ha보다 초과 달성하였고 사업에서 생산되는 간벌재 등 산물을 44천m<sup>3</sup>를 수집하여 질이 좋은 간벌재는 표고자목, 펄프, 원주가공건축자재로 공급하여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굵은 간벌재, 가지 등은 톱밥과 톱밥조사료 원료로 공급하여 축산농가에 조사료용과 축산 폐수정화용으로 활용하여 축산농

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수질개선에도 기여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외에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연합, 녹색연합 등의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창립된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은 1,500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생명의 숲 시범림에서 숲 가꾸기 현장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숲 가꾸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좋은 계기도 마련하였다.

<표 2-1-4> '98 숲 가꾸기 사업실적

구 분	연고용인원		예산집행(백만원)		사 업 량			
					숲가꾸기(ha)		도시산림정비(ha)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1,300	1,486 (113)	54,894	54,761 (100)	34,700	40,044 (113)	2,850	3,097 (104)
국 유 림	440	508 (115)	19,100	19,098 (100)	11,000	121,798 (116)	-	-
민 유 림	840	956 (112)	34,903	34,782 (100)	23,200	26,641 (112)	2,850	3,097 (104)
민간단체	20	22 (20)	891	891 (100)	500	605 (121)	-	-

자료: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산림자원과 임업서기관 박종호)

## 제 2 장 경쟁력 있는 임업육성

### 제1절 사유림 경영의 활성화

#### 1. 사유림 경영구조의 개선

산림면적 5ha 이하의 산주가 약 91%로서 소유규모가 영세하고, 산주의 41%가 부재산주로 되어 있어서 방치되고 있는 사유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지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임지의 규모화를 위하여 임업을 목적으로 임지를 구입할 경우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임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임지의 분할·병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산림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영세한 산주들에게는 임지규모화를 통하여 임업경쟁력을 가지도록 임지의 공동경영, 공동시설, 공동작업, 공동판매하는 협업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협업체 조직과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협업지도와 임업기술지도를 전담하는 협업지도원을 85명 배치하고, 인건비, 운영비 및 산림사업비(자부담의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소득사업에 대해서도 33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산림경영 의욕은 있으나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하고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방치되고 있는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는 대리경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2. 임업경영 주체 육성

### 가. 사유림경영 임업인 육성

산림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독립가·임업후계자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사유림경영의 핵심선도 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독립가는 지속가능한 임업경영을 할 수 있는 임지규모를 가졌거나 남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1998년에는 12명을 선정하여 현재 총346명이 선정되어 있다.

임업후계자는 임업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임업경영의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1998년 124명이 선정되어 현재 총553명이 선정되어 있다.

독립가·임업후계자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임업경영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세제·금융·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금융지원으로는 임업진흥기금에서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육성자금을 각각 50억원씩 장기저리(5년거치 10년상환, 이율 연3%)로 융자하고 있고, 세제지원으로는 상속세 중 기초공제액 4억원(일반 2억원), 일괄공제액 7억원(일반인 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증여세 면제, 취득세 감면, 임업장비 구입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임업후계자·독립가에게는 일반 산주보다 산림경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신고로 별채할 수 있는 별채량의 확대 및 자가보수용 신고 별채를 허용하고 별채시업시 첨부서류를 생략하는 등 다양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최신 임업기술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산림경영 선진화를 도모하고, 산림유공자 후보자로 추천하여 포상하며, 임업 선진국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표 2-2-1>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요건

구 분		선 발 요 건	선발권자
독립가	모범	소유산림 300ha 또는 조림실적 100ha	산림청장
	우수	소유산림 100ha 또는 조림실적 50ha(유실수 20ha)	시장·군수
	자영	소유산림 20ha 또는 조림실적 10ha(유실수 50ha)	시장·도지사
	법인	소유산림 500ha 또는 조림실적 300ha	산림청장
임업후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독립가(모범, 우수)의 자녀</li> <li>○ 5ha이상 산림을 소유(직계존속·형제 또는 자매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자</li> <li>○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산림용종자, 산림용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소재, 야생화, 산채 기타 산림청장이 정하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li> </ul>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표 2-2-2>

독립가 및 임업후계자 선발계획

(단위 : 명)

구 분	합계	독 립 가					임 업 후계자	
		계	모범	법인	우수	자영		
연도별	1993	587	374	62	12	133	167	213
	1994	610	371	63	12	130	166	239
	1995	602	336	56	13	115	152	266
	1996	672	335	57	14	113	151	337
	1997	763	334	56	14	110	154	429
	1998	899	346	54	14	113	165	553

구 분	합계	독 립 가					임 업 후계자	
		계	모범	법인	우수	자영		
시도별	부 산	2	2			1	1	
	광 주	1						1
	대 구	2	2			1	1	
	대 전	5	2			1	1	3
	울 산	7	4			1	3	3
	경 기	74	29	5	1	13	10	45
	강 원	141	67	15	1	30	21	74
	충 북	70	32	4	3	13	12	38
	충 남	82	20	2		8	10	62
	전 북	107	38	3	2	11	22	69
	전 남	119	50	13	1	12	24	98
	경 북	107	41	5	4	9	23	66
	경 남	152	59	7	2	13	37	93
	제 주	1						1

주:연도말 현재 누계인원임.

자료:산림청 사유림지원국

## 나. 협업경영

협업경영은 영세 산주들이 임업경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발적으로 임지를 집단화하고 공동경영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시설, 공동생산, 공동시업을 하는 협업활동으로 1998년말 현재 247개 협업체가 조직되어 있다. 협업경영을 활성화하고자 협업지도원 85명을 배치하여 인건비 80%, 운영비 100% 및 산림사업비(자부담비의 30%)를 지원하였으며, 협업체 공동소득사업으로 24개소에 33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협업체의 양적 확대에서 탈피하여 협업경영을 내실화 하는 정책으로 전

환하고자 협업경영 중점단지 5개소(울주, 평창, 청원, 진안, 순천)를 지정하고 중점단지에 대해서 전담지도원을 배치하고 공동소득 사업을 집중 지도하였다.

<표 2-2-3>

**협업체 조직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93까지	'94	'95	'96	'97	'98
협업체수 (누계)	247	31 (171)	16 (187)	15 (202)	15 (217)	15 (232)	15 (247)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사유림지원과 임업사무관 남송희)

## 제 2 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기반 확충

### 1. 임도시설의 내실화

#### 가. 현 황

임도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할 목적으로 임내(林內)에 시설하는 산길로서 과거에는 단순히 임산물을 운반하는 통로 정도로 인식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임산물 운반뿐만 아니라 조림·육림·임목생산등 산림작업을 기계화하고 원목 등 각종 임산물의 수송을 원활히 하며,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오지 산림의 개발과 미이용 자원의 활용도 제고 등 산림경영을 성력화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하는 임업경영에 있어서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또한, 농산촌의 교통은 물론 농산물 유통도로 등으로 활용되고, 지역 산업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지역공

도이다.

우리나라 임도는 1968년 국유임도 개설을 시작으로 1984년부터 민유임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1998년말까지 시설된 임도시설 거리는 13,515km로서 ha당 임도밀도는 2.1m에 불과하여 선진 임업국인 일본 5m/ha, 미국 10m/ha, 독일 40m/ha에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 나. '98년도 임도 추진계획 및 실적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도를 확대 시설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는 총 사업비 91,066백만원을 투자하여 1,159km를 시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2-4> '98 임도시설 추진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비 고
	물 량 (km)	사업비 (백만원)	물 량 (km)	사업비 (백만원)	
계	1,159	91,066	1,102	73,756	
국 유 임 도	197	29,062	154	11,839	
민유임도(보조)	891	57,574	854	57,574	정산결과에 따라 증감발생
민유임도(용자)	71	4,430	94	4,343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도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도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따라 효율도가 높은 간선임도망을 구축코자 임업진흥촉진지역을 중심으로 임업경영 및 지역개발촉진 등 다목적 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간선임도를 시설하고 있다.

또한 견고한 임도시설을 위하여 설계·시공 등에 필요한 산림토목기술자



를 양성 배치토록 하고,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산림토목사업소를 조직 운영하여 임도시설을 전담케 하는 등 임도 시공기술 축적에 노력한 결과 시공기술이 향상되고 설계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 다. 문제점 및 대책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유임도 시설사업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의 비율로 지원하여 시설하고 있으나, 산주 자부담 10%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영세 산주들은 부담이 과중하여 시설을 기피하고 있고 60%가 넘는 부재 산주들은 일일이 찾아 협의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1개 노선상에는 2km기준 평균 10~13명의 산주가 있어 의견의 일치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본계획 노선에 따라 시설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8년 부산·대구·인천·울산·강원·경남·제주도에서는 산주 자부담 1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계획성 있는 임도망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견고한 임도의 구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사비가 책정되어야 하나, 임도시설 km당 단비는 1998년의 경우 민유임도 63백만원으로 매우 빈약하여 절·성토면의 고정시설이나 피복이 어렵고 각종 공작물을 적지적소에 구축할 수 없어 여름철 폭우시에는 피해의 예방에 그 만큼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견고한 임도를 구축하려면 km당 시설비가 최소한 85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정부예산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다.

<표 2-2-5>

임도시설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km)

구분	1968~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누계
계	650	1,047	1,214	1,163	1,109	2,022	1,717	1,560	1,102	13,515
국유임도	203	484	497	443	388	380	325	318	154	3,816
민유임도	447	563	717	720	721	1,642	1,392	1,242	948	9,699
누계	2,581	3,628	4,842	6,005	7,114	9,136	10,853	12,413	13,515	13,515
ha당(m)	0.40	0.56	0.75	0.93	1.10	1.40	1.68	1.92	1.92	2.10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산지관리과 임업사무관 이철수)

## 2. 임업기계화 촉진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은 지난 30여년간의 치산녹화의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임업경제성과 생산성 향상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성공적인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형질을 가진 임목자산과 그 자산을 적기에 생산 공급하여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수한 노동자본과 고정자본 등 생산요소의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경영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농산촌 노동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대표적인 3D업종으로서의 높은 노동부하와 노동비용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실정이다.

앞으로 산간오지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얻기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비록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숲 가꾸기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더이상 인력에 의존한 산림작업을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즉 노동의 안전성과 효율성, 적시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와 이에 걸 맞는 경영방법의 개선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여건으로는 현시점에서 적극적인 기계화를

추진하기에는 작업공간의 지리적인 여건, 열악한 자원분포, 임도의 미비, 전문기술인력의 부족 등이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업기계화는 미래의 임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안이며, 이에 더하여 점점 더 높아지는 노동임금, 외재도입여건의 악화, 안정적인 목재공급에 대한 수요증대, 영급·축적 등 점차 개선될 산림자원 구조 등은 높은 수준의 기계화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노동절약형으로의 전환은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5년부터 임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차 산림기본계획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임업기계장비를 개발, 개량보급하고 있으며 기계화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기능인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밤수집기, 자동수간주사기, 식재기 등 18종의 임업기계화 개발되었으며, 다목적산림차, 소형윈치, 동력지타기 등 각종 산림사업장비 등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표 2-2-6> 임업기계 개발 추진현황

구분	계	기 계 명
개발실적	18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청(3종) : 굴삭기·세렉스집재기, 자주식집재기</li> <li>○ 임업연구원(6종) : 밤수집기, 밤박피기, 원목자동천공기, 표고재배기 2종, 자동수간주사기</li> <li>○ 민간(9종) : 산불진화차, 방제차, 동력윈치, 크레인상하차기, 톱밥제조기, 파쇄기, 트랙터집재기, 하베스터, HAM200</li> </ul>
개발중	4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업연구원(3종) : 다목적산림차, 소형윈치, 지타기</li> <li>○ 산·학(1종) : 굴삭기 타워집재기</li> </ul>

자료 :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1998년말 현재 지방산림관리청 3,204대(11%), 지방자치단체 10,583대(38%), 임협 14,007대(51%)가 보급되어 활용되고 있다. 향후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인 2007년까지 336,387백만원을 투입하여 149,624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국유림경영과 임업사무관 김용관)

### 3. 임업전문인력 양성

임업 기능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술력 향상, 농산촌의 새로운 소득원 및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현재 기능인영립단을 조직하고 있다.

임업기능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1995년에 산림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능인에 대한 육성과 장비지원·취업촉진방안 등을 법령으로 제도화하였으며, 1997년 임업진흥촉진법 제정시 관련 규정을 산림법으로부터 분법하였다.

1998년까지 기능인영립단은 372단 4,427명이 조직되었으며, 향후 산림사업물량이 매년 20%씩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동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임업기능인력 12,000명을(1,000개단)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따라 양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연중 작업물량의 균형적인 배분을 통해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산재보험등 후생복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임업기능인의 직업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지금까지 3주 이하의 단기 기능인력양성에 치중함에 따라 현장의 작업을 감독·관리하고, 산림경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현장 임업전문가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산림경영관리자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1998년에는 3개월 1기 40명을 양성한 바 있다.

합 계	국 유 립	민 유 립
34개단 387명	4개단 48명	30개단 360명

자료 :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 임업사무관 김용관)

### 제 3 절 임산업 경쟁력 강화

#### 1. 목재산업 육성 및 국내재 이용촉진

우리 산림은 조림한 지 30년 이하의 산림이 전체의 80%에 달하는 관계로 직경 15cm 미만의 간벌·소경재가 주로 생산되고 있다. 국산재는 대체로 미성숙재가 많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수입재와의 경쟁에서 떨어지는 실정이다.

1998년 기준으로 전체 목재수요량의 93%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왔기 때문에 합판, 보드류 등 지속적으로 생산시설을 개체한 일부산업을 제외하고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생산능력이 계속 악화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목재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임금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IMF 이후 환율상승에 따라 수입원목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규모의 제재소가 휴·폐업되는 등 국내 목재업계는 업체수 감소 및 생산능력 저하 등의 변화를 겪은 바 있다.

정부에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임산물 가공·이용시설의 규모화·현대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 통나무 가공시설, 목탄·목초액시설, 목각시설 등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품목을 대상으로 '98년 31개소에 걸쳐 83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국산 간벌·소경

재 및 폐목재를 이용하는 목탄·목초액시설 6개소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국산재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 임산물 가공업체에서 국산재를 구입하는 경우 76억원을 지원하여 업체의 원자재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건축·가구산업의 기초 원자재인 합판·보드류업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7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합판은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원목확보가 어려운 활엽수 대신 침엽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고, 보드류는 수입재 대신 국산 소경·간벌재 및 폐목재를 이용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앞으로 꾸준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목재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국산재의 공급량을 1997년 1,062천m<sup>3</sup>에서 1998년 1,428천m<sup>3</sup>으로 확대하여 국내 임산업의 원자재난 경감 및 국산재 이용촉진을 도모하였다.

(산림소득과 행정사무관 고기연)

## 2. 단기소득 임산물을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

단기소득 임산물을 수출 및 소득전략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에 의한 생산기반 구축,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을 통한 경영구조개선 및 상품의 규격화·표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1997년부터 표고, 밤, 분재, 야생화, 산채류 등 주요품목에 대한 산업육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1998년도에는 산지에서 소득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대통령지시에 따라 산지소득증대 대책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였다.

표고의 경우 노지재배 위주의 생산구조를 시설재배 구조로 전환하고자 1998년 708천m<sup>2</sup>의 재배시설을 지원하여 시설재배 비율을 24%로 높였고, 표고재배단지 7개소(원목 6, 균상 1)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표준재배모델 5개모델을 추가로 개발하여 1998년말 현재 총 12개 모델을 개발 보급하였다. 표고자목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고자목 생산구역을 8,611

ha를 지정하였고, 표고신품종(산림8호)개발, 균상재배 자동화시설 실연 등 연구개발에 성과를 보였다.

밤의 경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밤나무 단지내 작업로 시설 600km를 지원하였고, 생산시기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저장밤의 품질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저온저장시설 15개소를 지원하는 한편, 밤박피가공시설 1개소를 지원하여 가공제품 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그외 송이 생산증대를 위하여 송이 환경개선 사업을 100ha 추진하여 수출증대를 도모하였고, 대추산업 육성대책 및 산채류 산업육성 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채·약초재배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조경수·분재·야생화·자생란 등 관상자원이 적극 개발될 수 있도록 재배자금(112억원)을 지원하였고, 우리 꽃 박람회, 난대전, 분재대전 등 전시회를 개최하여 소비촉진을 도모하였다.

이같은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9,941억원의 생산액을 보였으며, 조경수 등 통계에 신규로 계상된 품목을 제외할 경우에도 전년대비 17% 증가한 6,846억원을 생산하여 IMF 체제로 인한 총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여 주었다.

(산림소득과 행정사무관 최병암)

### 3. 임산물 유통체계 개선

산지 자원화 계획 추진으로 조립한 임목이 간벌 단계에 도달하고 있어 국내 목재 생산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밤, 버섯, 잣, 산채등 단기 소득 임산물 또한 국민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른 무공해 자연식품 선호경향으로 그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대부분이 다수의 영세 생산자에 의한 부업적 소량·분산생산으로 시장교섭력이 취약하고 국내 임산물 유통시장의 대부분이 중간상인이 지배하고 있어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물류비용과 유통마진으로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낮은 반면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수입임산물과의 가격경쟁이 불리해지고 국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도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국내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을 배제함으로써 임산물 생산자·소비자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유통 기반시설의 설치를 생산자 단체인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계통조직에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다.

1998년도에는 주요 임산물 생산·소비 거점지역에 임산물직매장 16개소(경기광주, 평창, 충주, 청양, 서천, 정읍, 완도, 영주, 상주, 경산, 영덕, 청도, 고령, 창원, 사천, 함안)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간벌·소경재 등 국산재를 산지로부터 수집하여 산업원료 및 목제품 공급안정을 위해 목재집하장 2개소(봉화, 함양)를 설치한 바 있다.

UR 파고등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험축적과 유통시설의 체인화 실현,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신뢰성 제고등으로 유통시설지의 대부분이 매출액 증가, 경영수지 개선 등 점진적인 운영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임산물 유통시설의 확대설치 및 운영개선에 따른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유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품질이 우량한 국산 임산물의 공급안정으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국내 임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림소득과 행정사무관 이규태)

## 제 4 절 임업협동조합 육성

산림조합 체제에서 임업협동조합 체제로 전환한 지 5차년도를 맞이하여 협동조합 체제 기반구축과 임업을 사유림경영의 핵심 추진체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임업협동조합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1997년도보다 적자 조합수는 크게 감소(25개→12개)하였고, 출자금은 확대



(218억→251억)되는 등 조합의 자립기반이 많이 향상되었다.

1994년 말부터 시작한 지역조합의 상호금융업무는 4년여에 불과한 기간임에도 119개의 금융점포를 개점하여 1998년말 현재 총수신고 8,078억원을 달성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향후 금융시장의 개방과 시중금리의 인하추세 등을 볼 때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임업부문 생산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전문조합 설립도 적극 유도하여 1997년 전북표고조합 설립이래 1998년도에는 공주밤전문조합을 설립하여 품목별 전문조합의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기타 임업기술지도원 787명을 통한 대산주 임업기술지도와 임산물직거래 장터 개장 등 유통구조개선과 해외임지개발 사업등을 중점 추진하여 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1998년도는 농·축·임·삼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은 소홀하고, 신용사업에 치중하여 임직원을 위한 조직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협동조합개혁이 논의 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임협도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282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7개 사업소를 3개 사업소로 축소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사유림지원과 행정사무관 이명수)

## 제 5 절 임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

### 1. 액화목재의 폴리우레탄 발포재 개발

임업연구원에서는 1991년부터 「목질계 신소재개발 연구」중 목재를 액체화시켜 석유계 합성수지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재의 액화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목재(특히 폐목재)의 액화기술과 액화목재의 폴리우레탄발포재 제조기술을 개발하였다. 1998년 10월 이 연구결과에 대하여 특

허청으로부터 발명특허(발명의 명칭 : 액화목재의 제조방법, 특허번호 제 173442호)를 획득하였다.

1999년 5월 이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는 업체((주)에스원 하이테크)가 특허청에 특허의 통상실시권 허여신청서(특허권의 수익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업체가 처음 1년간 이 특허의 통상실시권으로 특허청에 납부·신청한 금액(국고에 납부되는 수입금액)은 2,250만원으로 결정되었다. 2년차 이후의 이 특허의 통상실시권 사용료는 매년 재계약하며, 이때의 국고 수입금액은 동 업체의 연간 총매출액의 3%기준으로 산정되어,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02년 이후에는 매년 3~4억원의 금액을 특허의 통상실시권 사용료로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이 기업은 추정(예정)하고 있다. 이 기술의 양산체제가 성공할 경우, 국가공무원이 개발한 특허를 국가가 기술료를 징수하는 몇 안되는 매우 드문 사례가 될 것이다. 특허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잡을 경우, 총수입금액은 약 15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이 업체는 예상하고 있다.

액화목재의 원료는 사용후 폐기되고 있는 폐목재(특히 행정계통으로 수집된 폐가구류)의 이용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통상 우리의 생활폐기물중에는 종이 및 목재류가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양은 국민소득이 증가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로서, 선진국의 경우는 생활폐기물중 목재 및 종이류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실례로, 폐가구는 행정계통을 통하여 일부 수집은 되고 있으나, 철물, 플라스틱, 접착제, 도료, 안료 등이 혼재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재활용(산업원료로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처리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폐가구 등은 주로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 비용은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조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목재수요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목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액화목재의 원료는 새로운 목재를 산에서 벌채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중의 폐기 목질자원(폐목재·폐종

이 류)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한편 목재를 액화시켜 합성수지의 원료로 이용하게 되면, 석유자원의 소비를 그 만큼 줄이게 되고 화석자원의 사용이 억제되어, 금후 CO<sub>2</sub> 배출권 거래제(또는 탄소세)를 도입코자 하는 OECD 등의 탄소소비량 감축노력에도 직접적으로 공헌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CO<sub>2</sub> 배출량은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액화목재의 제조 공정은 비교적 간단하여 예상가격은 기존의 폴리우레탄 발포재의 원료인 석유계 폴리올 가격보다 약 10% 정도 저렴할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폴리우레탄 발포재 제조공장의 공정 변화없이 액화목재를 발포재의 원료로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원료의 대체가능성이 매우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액화목재 발포재의 물성은 제조조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나, 대개 기존의 발포재와 유사하며, 그의 용도는 건축재 및 냉장고 등의 단열재, 충격흡수재(쿠션재), 상품포장 등 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용되는 양식용 부유기구, 사진액자틀, 가구·침대의 장식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임업연구원 목재가공과장 공영토)

## 2. 임목의 조직배양기술 개발

조직배양기술은 1960년대 중반경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작물의 육종 등 농업종묘의 대량번식에 많이 이용되어 왔으나 임목에 있어서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수종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

조직배양기술 개발이 임목 육종에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분야는 관행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성번식이 불가능한 수종 또는 유전적으로 전환된 우수한 형질의 대량증식과 단기간 내에 대량증식 할 수 있는 기술의 축적이다.

현재 진행중인 조직배양 기술개발은 배발생 캘러스 및 체세포배를 유도하는 것으로, 침엽수류는 낙엽송을 대상으로 하여 배발생시킨 캘러스로부터 체세포를 발달시켜 식물체로 재분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소나무에서도 미숙종자를 배양하여 배발생 캘러스와 체세포 배를 유도하였으며, 활엽수종인 상수리나무에서는 미숙배 채취시기 및 식물생장 조절물질 종류에 따라 체세포배 유도를 증가시켰으며 무궁화에서도 체세포배유도가 가능하였다.

임목의 조직배양에 의한 기술개발은 ①우량개체로 선발된 박달나무, 거제수나무, 참나무류, 피나무류 등 유용활엽수의 기내배양에 의한 우량개체를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내염, 내건성을 가지고 있는 유프라티카포플러의 대량증식, 가시없는 민두릅의 대량증식도 연구 중에 있으며 ②흰배롱나무, 미선나무, 망개나무 등의 멸종위기의 희귀 수종도 조직배양으로 증식하는 방법을 확립하였고 ③유실수종인 호도나무, 양다래×다래 교잡종 등의 조직배양 기술개발도 확립되어 실용화를 위한 우량 호도나무 증식을 집중 연구 중이다.

(임업연구원 생물공학과장 손성호)

### 3. 세포배양 및 신물질 개발

#### 가. 세포배양 기술 개발

식물의 세포배양은 식물체에서 떼어낸 세포를 인공적인 환경조건(빛, 온도, 영양배지 등)에서 무균적으로 배양하는 기술로서, 대량의 식물체를 유도할 수 있고 이들로부터 식물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이차 대사산물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 특히 세포배양에 의한 이차 대사산물의 생산을 계절의 변화나 병충해의 영향 없이 균일한 수준의 산물을 언제든지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이 기술은 산업화의 지름길로 기대된다. 세포배양연구가 지금까지는 실험실내 플라스크 수준에서만 연구되었으나 이를 대형화함으로써 공업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유리하고 재배된 식물에서 추출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세포대량증식을 위한 100리터, 300리터, 500리터급 생물반응기를 개발하였으며 자동화된 300리터급 생물

반응기도 개발, 가동 중에 있다. 특히 주목 세포배양을 통한 항암제 택솔 생산법 개발은 대규모 세포배양용 탱크에서 배양 중에 있으며 곧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생물반응기를 이용한 산삼 세근의 대량증식 기술 개발은 산삼 세근 배양 6주만에 140배로 증식시키는 기술로서 중규모 공장체제를 갖추게 되면 산업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생체시료, 배양세포 및 배양액으로부터 물질을 효과적으로 추출, 정제할 수 있는 장치와 추출법도 개발하였다. 이는 곧 관련 생물공정 연구에 응용 보급하게 될 것이며 관련 산업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산림자원 식물로부터 신물질 개발

산림자원 식물로부터 각종 유용생리 활성물질을 탐색하고 이를 생물공학 기법으로 생산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항암 활성수종을 선발하였다. 희수, 개비자, 비자나무 등 10수종의 항암 활성을 조사하여 항암 활성이 우수한 수종을 선발하였으며 특히 위암, 폐암 등 항암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희수나무의 항암제 캄토데신은 각 부위별, 자생지별 함량을 분석하고 화학구조를 동정하였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희수나무는 기내 증식법 구멍과 세포배양 조건을 함께 연구 중이다. 또한 이용범위가 넓고 인체에 부작용이 적어 국민들로부터 선호가 높은 천연방부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세균, 진균 등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4수종을 선발하였다. 항생물질을 동정한 결과 소나무 항생물질 일부와 황벽나무의 프로토베르베린을 동정하였고 항생물질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액체-액체 추출법을 개발하였다. 이들 항생물질의 저장력을 조사한 결과 식료품, 육류, 어류 등의 저장력을 상당기간 연장시킬 수 있었으며, 추출물을 혼합하여 면(麵)제 식품에 처리하였을 때는 단일물질에 비하여 저장력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밖에 유용 생리활성 물질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600여종의 식물체를 수집하였고 2,300여종에 달하는 유용 식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관 안진권)

#### 4. 형질전환에 의한 신기능성 품종 육성

식물의 형질전환은 항생물질의 내성 유전자와 최근 농업에 유용한 유전자 암호를 해독하는 선발에 이용될 수 있는 유전자가 개발되었다. 이들은 virus 내성, 내충성, 중금속, 제초제 등에 저항하는 특성을 담배, 페츄니아, 토마토 등의 모델 식물에서 형질전환 시켰으나 목본에서 수행된 것은 거의 미미한 실정이었다.

임목에서 형질전환은 유전자 조작, 유전자 발현, 유전적 개량에 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여 현재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수종 연구, 내충성 품종 연구, 내스트레스성 품종 연구, 환경정화 수종 연구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이들 형질 전환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상태에서는 잘 썩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 연구는 세가지 유전자를 조합한 것으로 이를 아그로박테리아에 삽입시켜 식물 형질전환을 위한 운반체를 완성한 후 현사시 나무에 유전자를 삽입하여 생산하는 방법으로 건중량의 약 0.85%까지 플라스틱이 함유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품량 개체를 계속 선발 중에 있다.

② 내충성, 내염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살충 효과 유전자와 내염효과 유전자를 불리하고 이를 수원 포플러와 현사시에 각각 형질전환 시켜 신기능성 품종을 개발하였다.

③ 토양의 오염된 물질 제거를 위하여 토양내 중금속만 흡착하는 유전자를 현사시에 형질전환 시켰으며 이것이 성공되면 오염지역에 식재하여 환경정화 수종으로 육성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관 노은운)

#### 5. 대나무숯 제조기술 개발

WTO출범과 함께 동남아산(중국, 미얀마 등) 값싼 대나무 제품의 대량유입과 대체재의 등장으로 현재 국내 대나무 가공산업은 장기적 침체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8,000여ha에 달하는 국내 죽림은 수년째 제대로

간벌, 경영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죽세가공용 대경죽은 줄어들고 소경죽만이 무성하게 자라 죽림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죽림농가의 소득증대와 죽림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대나무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고품질의 대나무숯을 제조할 수 있는 전용탄화로가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다. 전용 탄화로에서 구워진 대나무숯은 1,000℃의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에 제조되어 일반 목탄에 비해 매우 단단하고 통전성(通電性)과 흡착력이 탁월하며 원적외선과 음이온 방사율이 높다. 또한 대나무숯은 목탄에 비해 칼륨 등 미네랄을 2배 정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

현재 대나무숯을 생산하는 곳은 경남과 전남의 6군데 정도이며 연간 약 300톤을 생산하고 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고 육질이 얇기 때문에 목탄에 비해 얻어지는 양이 적다. 따라서 값싼 농업적 이용보다는 대나무숯의 특수성을 살린 제품개발이 고부가가치의 창출에 유익하다. 대나무숯의 건강효과를 살린 제품으로서 아파트바닥재, 벽지, 수질 및 주정 여과재, 실내장식재, 탈취재, 목욕재, 방석, 베개, 매트리스, 신발안창, 양말, 팬티, 고급연료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바닥재, 벽지 등 대나무숯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제품의 지속적인 등장으로 대나무숯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황토 등 천연 제품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와 대나무숯의 건강효능 입증 등으로 인해 대나무숯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증설 및 신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나무의 모양을 그대로 살린 대나무숯 장식식품은 일반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일본은 10여만ha의 대나무 자원이 있으며 1990년초 본격적으로 대나무숯을 제조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도 교토대학에서 일본죽탄·죽초액협회가 창립되어 대나무숯에 대한 규격화를 기하고 있다. 건강 3점세트(밥숯, 물숯, 목욕숯)를 중심으로 10여종의 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며 목탄에 비해 대나무숯이 2배의 효과(흡착력, 미네랄 등)가 입증되어 대나무숯 시장이 활성화

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최고급 목탄인 비장탄이 수십년간 확고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확대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중국에는 400만ha의 막대한 대나무 자원이 있으며 주로 건축재, 합판, 마루판재로 대량 생산되고 있고 마루판재는 국내에도 일부 수입되고 있다. 대나무숲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나 일본의 요구로 일부 제조되고 있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박상범)

## 제 6 절 국유림 경영개선

### 1. 국특회계 운영개선 및 국유림 확대 집단화

#### 가. 국특회계 운영개선

##### (1) 국특회계 운영현황

국유림의 경영·관리를 위해 1966년도부터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다 1994년에 재정경제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특별회계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특회계의 예산규모는 1988년도부터 산지자원화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세입은 1980년대 중반까지 토지대여료 및 임목매각대가 대부분이었으며 목재가격의 하락과 산림자원화를 위한 절벌정책으로 1988년부터 대부분 토지매각대에 의존하고 있다.

1992년부터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세입결손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IMF체제 이후 부동산 경기의 둔화로 토지매각이 여의치 않으며 임목매각과 토지대여료 등 경영수익도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표 2-2-8>

연도별 세입결손액

(단위 : 억원)

'92	'93	'94	'95	'96	'97	'98
662	969	265	-	147	548	791

자료 :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2) 문제점

우리나라의 산림은 아직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가 80%를 차지하고 있어 수익보다는 지속적인 육림과 산림보호를 위한 투자가 확충되어야 하나 계속적인 세입부족으로 현행의 국특회계 운영방식으로는 국유림 경영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으며 또한 매각 가능한 재산의 소진으로 조만간 회계운영이 한계에 봉착될 것으로 예측된다.

(3) 개선방안

안정된 국특회계 운영을 위해서는 토지의 취득과 처분 등 순수 재산관리 부문은 현행의 국특회계로 운영하고 국유림의 공익적 기여도를 감안하여 경영사업비와 기본적 경비는 일반회계로 점차 편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유림야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3조 8천억엔의 누적적자가 발생되었으며 이중 2조 8천억엔은 일반회계에서 승계하고 공익적 성격의 사업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유림관리과 행정사무관 김성륜)

## 나. 국유림 확대 집단화

### (1) 국유림 확대 집단화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유림은 대부분 주요 산맥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고 용재 생산은 물론 수원함양, 국토보존, 대기정화 및 국민 휴양공간 제공,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산림의 공익적, 환경적 기능 증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98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유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22%에 해당하는 1,419천ha로서 일본의 31%, 독일 40%, 미국 34% 등 입업선진국의 국유림률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국제적인 환경보존운동이나 산림자원의 증축,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산림환경 기능제고, 산림문화 창달 등 경제적, 공익적 측면에서 국유림 경영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 (2) 국유림 확대 집단화 목표

이에 따라 국유림률을 30%까지 제고시키기 위하여 1988년부터 국유림 확대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국유림의 확대는 기존 국유림에 개재되었거나 연접되어 있어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을 집중 매수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국유지와 산림경영에 적합한 사유림을 상호 교환하는 한편, 일본인 명의재산이나 소유자 미복구 재산 등 무주부동산을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화하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확대 소요재원은 도시주변의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자투리 토지 등을 연차적으로 매각 처분하여 충당하고 있다.

1998년도에는 9,250ha의 국유림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산림경영 적지 사유림매수 4,233ha, 국유림과 사유림과의 교환취득 946ha, 무주·은닉재산 취득 1,169ha 등 총 6,348ha의 국유림을 확대하였다.

<표 2-2-9>

국유림 확대실적

(단위 : ha)

구분	계	'93	'94	'95	'96	'97	'98
합계	58,256	2,356	8,229	11,963	19,368	9,992	6,348
사유림매수	24,465	1,221	1,513	5,383	5,749	6,366	4,233
교환취득	4,085	211	2,219	177	102	430	946
무주·은닉재산취득등	29,706	924	4,497	6,403	13,517	3,196	1,169

자료 :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관리과 행정사무관 이경일)

2. 국유림 책임경영제 정착

국유림 관리에 경쟁원리와 기업형 경영방식을 국가조직에 최초로 도입, 1996년부터 115개팀 373명의 국유림경영팀을 구성하여 일선현장 담당자 중심의 책임경영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8년도에는 일률적인 시행에 따른 그간의 경영팀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리청별로 국유림이 집단화된 지역을 집약경영구역으로 설정하여 경영팀별 담당면적 과다로 인한 책임경영제 추진의 효율성 저해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관리소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영팀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정착기반을 구축하였다.

<표 2-2-10> 지방산림관리청별 집약경영구역 설정현황('98년말 현재)

(단위 : ha)

지방청별	계	집약경영 구역	일반관리 구역	집약경영면적평균	
				경영팀	면적
합계	1,246,700	574,743	671,957	86(246)	6,683(2,336)
북부	425,238	207,478	217,760	25(71)	8,299(2,922)
동부	357,674	250,081	107,593	25(78)	10,003(3,206)
남부	242,017	67,928	174,089	16(50)	4,245(1,359)
중부	84,103	25,600	58,503	8(17)	3,200(1,505)
서부	137,668	23,656	114,012	12(30)	1,971(788)

주 : ( )는 팀원 및 1인당 집약경영 평균면적임.

자료 :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국유림경영과 임업사무관 최수천)

## 제 7 절 산촌 종합 개발

### 1.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산촌 종합 개발 사업은 산촌 지역에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낙후된 산촌지역을 산림경영과 임업진흥을 위한 중심마을로 육성함으로써 산촌주민에게는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국민에게는 휴양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간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며 산촌지역의 정주인구의 유지(증가)를 통해 임업 노동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주변 산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95년부터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까지 150개 마을을 개발할 목표로 1998년말 현재 9개 마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16개 마을은 조성중, 22개 마을에 대한 사전설계를 완료하였다.

사전설계 22개 마을은 자연휴양림 입구 마을등 발전가능성이 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생산기반 확충등 소득증대에 중점을 둔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산촌 종합 개발사업은 소득과 생활환경의 정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산촌지역에 다양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지자체 및 산촌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WTO 출범과 더불어 농산촌지역이 더욱 어렵게 되고 특히 산촌지역은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알려 졌으나 산촌 종합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산촌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로쇠, 두릅등 소득수종 조립, 육림, 사방·임도등 산림사업을 산촌지역에 투자 확대하여 소득기반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농림부, 행자부, 건교부 등 관련사업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산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과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종합개발사업으로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다.

<표 2-2-11>

산촌종합개발 추진실적

(단위 : 마을)

도 별	계	'95	'96	'97	'98	'99
계	47	1	3	5	16	22
경 기도	4	-	-	1	1	2
강 원 도	7	1	-	-	3	3
충청북도	6	-	1	-	2	3
충청남도	4	-	-	1	2	1
전라남도	6	-	1	-	2	3
전라북도	6	-	-	2	1	3
경상북도	8	-	-	1	3	4
경상남도	6	-	1	-	2	3

자료 :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2. 산촌종합개발 내실화 및 지원체계 확립

그 동안 산촌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투자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1998년에는 개발 완료마을(9개소)에 대하여 투자타당성, 주민만족도 등 조사를 관계공무원, 연구기관,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산촌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조사결과 산촌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는 전략미흡, 투자의 중복성, 산촌개발 모델의 정립 등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개발대상 마을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역할제고 및 개발대상 마을의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산촌개발사업추진요령」(산림청예규)을 제정하였으며, 산촌마을의 개발유형별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산촌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부지원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지역개발 관련사업의 투자를 확대 유도해 나가고 있다.

(국유림경영과 임업사무관 최수천)

# 제 3 장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

## 제 1 절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1. 도시림의 체계적 관리

#### 가. 목적 및 추진방향

도시·공단 등 도시생활권 지역의 「나무와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오염 감소와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질 높은 「그린」 창조를 위해 생활권 주변 산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 시설과 연계된 산림녹지 체계의 형성으로 생태적 관리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자연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도입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숲을 조성토록 추진하고자 한다.

#### 나. 세부 추진계획

##### (1) 도시림 자원조사 및 관리단위 구분

도시지역 산림의 분포상태, 수목 건강도 등 산림조사와 위성자료 분석을 병행 실시하고 도시유형·규모별로 도시림 총량기준을 제시하여 도시림의 유형·이용수요 및 기능에 따라 생활환경림, 환경보전림, 보건휴양림으로 구분 관리토록 하였다.

##### (2) 유형별 도시림 조성·관리체계 구축

도시별 특성에 맞는 도시림 관리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유형별 녹지량 및 규모, 수종선정 및 시설물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도시림의 위치, 규모별

조성·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등 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 (3) 도시생활 환경림 보전지역 확대

산림의 위치 및 기능상 보전해야 할 산림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전 녹지 또는 산림법에 의한 생활환경보안림으로 지정하고 보전대상 산림은 공익 입지로 구분하여 타용도 전용을 억제토록 하였다.

### (4)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나무와 숲은 환경정화 기능과 도시경관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상록수를 병용하여 계절감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단지나 짜투리땅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최대한 이용토록 추진하였다.

### (5) 녹지공간을 이용한 시민의 자연학습장 조성

나무와 숲의 기능 및 효용을 몸소 체험하고 산림휴양을 겸한 생활공간으로 활용토록 자연관찰 시설과 최소한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추진하였다.

<표 2-3-1> 도시림 연차별 추진계획

사 업 내 용	99	2000	2001
- 도시림 자원조사 및 기능분류			
- 도시림 관리체계 정립			
- 도시림의 휴양·풍치기능 고도화 기술개발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 다. 추진 성과

첫째, 인구 밀집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다양한 이용 압력을 받고 있는 도시림의 합리적 이용·관리 조성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시 환경보전·휴양·임업생산성 유지 등 도시림의 환경적, 경제적 기능 확보 및 증대방안을 제시하여 생활권 주변 산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둘째, 전국 주요 도로변에 벚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 137천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지역별 향토수종 보전과 주변 경관조성에 기여하였다.

셋째, 「21세기를 향한 도시림 관리 워크샵」을 개최(7.15, 임업연구원) 하여 도시림 조성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림 조성 관리 사례 등을 발표 토론함으로써 도시림 업무에 큰 도움을 얻었다

(산림자원과 임업서기관 박종호)

## 2. 지역특색 조림등 환경조림 확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대기, 수질등 우리의 자연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자연친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변, 도시·마을 주변, 관광지 주변등 산림과 공한지에 향토 특색수종인 큰나무조림을 추진(1919ha, 3,113천본)하였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경기장 주변은 물론 주요 도로변, 관광지, 사적지 주변등의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여 금수강산을 복원, 푸른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림 9천ha, 육림 68천ha, 가로수 190천본을 심고 산지사방 110ha, 훼손지 131ha를 복구하며, 무궁화 2,000천본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다.

특히, 도시경관림 조성, 미래의 숲, 생명의 숲, 명산 가꾸기등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역특색 숲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584ha, 1,296천본)하였다.

(산림자원과 임업사무관 심영만)

## 3. 5대강 유역 산림 특별관리

국민소득과 여가의 증대에 따라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쾌적한 휴식 공간에 대한 수요는 급증 추세에 있으나,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으로 대기, 수질등 자연환경의 악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특히, 5대강 유역의 상수원



오염은 국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각 부처 합동으로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대처하고 있으나 깨끗한 물의 원천인 산림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깨끗한 물 공급기지로서의 산림관리를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전국 5대강 유역 산림을 중심으로 수원함양 기능을 강화해 나갈 종합대책을 마련·추진코자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 기능 제고를 위한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수질오염과 수량(水量) 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여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관리권역 대상 산림은 5대강 유역 산림 중 수질개선 및 수원함양에 직접 영향을 주는 본류를 기준으로 좌우 5km 유역내 산림중 우선 취수장 주변 산림 330천ha에 대하여 산림특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다.

1998년도에는 상수리, 굴참나무등 참나무류와 자작나무, 전나무등 수원함양 기능과 수질정화 기능이 높고 뿌리의 양이 많은 수종 위주의 조림과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육림사업과 수질개선 관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황폐산지·계천등에 산지사방, 야계사방, 사방댐을 시설하였다.

<표 2-3-2> 5대강 유역 산림특별관리 추진실적

구 분	단위	추진계획	추진실적	비 율
○ 조 립	ha	1,140	3,706	325%
○ 육 립	"	12,511	24,706.3	197
- 풀 베 기	"	3,939	9,130.5	232
- 어린나무가꾸기	"	1,761	3,446.8	196
- 덩굴제거	"	975	4,405.5	452
- 천연림보육	"	3,769	3,311.0	88
- 간 별	"	2,067	4,412.5	213
○ 사 방				
- 산지사방	ha	9	18.5	205
- 야계사방	km	10	14.7	147
- 사 방 댐	개소	1	15	1,500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산림자원과 임업사무관 심영만)

## 제 2 절 산림 휴양시설 확충 및 산림문화 진흥

### 1. 자연친화적 휴양시설의 확충과 경영체계의 합리화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내 휴양시설을 확대 조성하여 국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대 개발하여 자연학습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공간 주변에는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언제나 쾌적한 분위기에 서 휴식을 할 수 있는 휴양공간을 제공해 나가고 있다.

<표 2-3-3>                      산림휴양시설 조성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계	1998까지실적	1999계획	2000~2007
계	315	128	14	173
자연휴양림	115	75	0	40
산림욕장	83	38	5	40
숲속수련장	117	15	9	93

자료 :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또한, 이용객 휴양만족도 향상과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양림 이용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쾌적한 휴양분위기 정착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이미지 형성사업(C.I.P)을 추진하는 등 휴양공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 2. 산림체험 기회의 확대

산은 이제 목재만을 생산하는 토지의 위치를 넘어서 국민생활에 필수 불

가결한 생활공간이 되어 가고 있다. 임업의 경제적 관점은 물론 사회, 문화, 보건, 휴양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들을 충족 시켜야 하는 종합적인 임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산림휴양 공간도 단순한 휴식을 위한 곳이 아니라 자연교육과 산림체험의 장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중미산, 청옥산, 통고산 등의 휴양림에 산림환경해설판과 체험공간을 설치하였으며, 모든 휴양공간에 자연학습을 위한 기초시설 구축과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발판을 마련하였다.

### 3. 산림문화 진흥

#### 가. 추진 배경

1990년대 들어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와 ‘생활의 질’을 중요시함에 따라 산림과 관련한 문화·휴양적 수요가 급증하는 등 의식주 중심의 생활양식이 정신적·정서적 만족을 얻기 위한 문화적 복지 추구의 생활양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등산·산림욕·산악레포츠 등 산림문화휴양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산림정책은 국토녹화·산지자원화 정책과 같은 경제적 사업에 집중한 결과, 위와 같은 산림에 대한 문화적 수요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마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산림정책도 경제적 기능 증진 위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림의 본질과 고유기능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문화·복지적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성원과 참여 속에 금수강산을 복원하는 「산림르네상스의 개화」와 임정의 당면과제 해결 및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도 산림문화 정책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 나. 기본 방향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향상 및 ‘산림르네상스 개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산림문화운동의 이념적 지표를 정립하고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연 조화적 전통산림문화를 계승·발전시켜 국민 친화적·자연 친화적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국민과 함께 하는 임업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국민들의 산림체험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산림문화 상품화 방안을 모색한다.

## 다. 추진 내용

### (1)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에 관한 인식 확산

한국 문학을 주도하는 한국문인협회 회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의 숲과 문학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그 동안 문학작품에 나타난 숲의 역할을 조명하고 향후 생명의 숲에 관한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자연휴양림 체험 행사를 개최하여 산림에 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주력하였다. 이는 1997년 한국여성문학인들을 대상으로 한 ‘숲과의 만남’이라는 행사와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우리 산림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2) 산림문화행사 활성화

전국 산림 휴양공간에서 시행되는 산림문화 행사의 활성화와 일반 국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월별, 장소별, 산림문화 행사 이용안내에 관한 체계적 정보제공과 안내서를 제작·보급함과 동시에 지역별 상설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여 산림문화의 생활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 (3) 자연교육 확대를 통한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

자라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숲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녹색학교(Green School)을 운영, 총 6,125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푸른숲선도원을 5만여명을 선발, 지역별 하기수련대회 및 산림체험 기회제공, 숲을 주제로 한 글짓기 등 백일장을 개최,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국유림경영과 임업서기관 최준석)

## 제 3 절 산림재해방지

### 1.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 가. 산불발생 현황

1998년에는 건조주의보가 5회, 44일간 지속되었으며 크고 작은 산불이 거의 매일 발생하여 산불진화에 어려움이 많은 해였다.

1994년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1998년까지 이어지면서 총 265건 1,014ha의 산림피해를 입혔고 낮에는 물론 밤에까지 계속되어 30ha이상 대형산불이 3건이나 발생하여 602ha의 피해(전체 피해면적의 59%)를 보았다.

지역별 대형산불을 살펴보면 강원(강릉, 동해), 경남(양산)의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륙성 계절풍과 험한 산악지형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되고 건조기 강풍을 동반하여 인력에 의한 지상진화가 어려워 초동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 104건(39%), 논·밭두렁 소각 65건(25%), 쓰레기 소각 24건(9%), 성묘객실화 16건(6%) 담배불 실화 13건(5%), 어린이 불량난 등 기타가 43건(16%)으로 모두가 사람의 부주의에서 발생한 인재(人災)이며, 군 사격에 의한 산불도 4건, 7.6ha의 피해를 입어 자체 산불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인재(人災)이며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재산을

소실하고 환경을 파괴하므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애립의식을 가지고 산 불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표 2-3-4> 최근 5년간 산불발생 현황

○ 산불발생 추세

구 분	5년평균	'94	'95	'96	'97	'98
건 수(건)	476	433	630	527	524	265
면 적(ha)	2,101	781	1,013	5,368	2,330	1,014
건당피해(ha)	4.41	1.8	1.6	10.2	4.4	3.83
피해재적(m <sup>2</sup> )	91,882	3,623	7,197	363,685	40,815	44,092
금액(백만원)	3,646	254	451	13,319	1,629	2,516

○ 원인별

(단위 : 건)

구 분	5년평균	'94	'95	'96	'97	'98
합 계	476	433	630	527	524	265
입산자실화	221	194	312	248	247	104
논·밭두렁태우기	89	64	138	73	103	65
성묘객실화	32	41	34	38	33	16
어린이불장난	19	24	18	30	10	11
기 타	115	110	128	138	131	069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나. 주요 추진상황

1998년에는 산불예방조치 강화를 위한 산림법 개정('97. 10. 11)에 따라 산불관리통합규정등 관계 훈령을 정비하고 산불관련 벌칙강화 등 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각 시·군·구 및 지방산림관리청등 일

선 산림행정기관에서 산림내 화기물소지 입산금지·흡연·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 등 집중계도 단속으로 입산자 실화가 8%나 현저히 감소하였다.

특히, 봄철에는 KBS2, MBC, SBS 등 TV3사와의 산불조심 광고방송 계약에 따른 주기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봄·가을철 건조기에 주요등산로 등에서 전국 일제히 산불조심 캠페인 등 홍보활동의 적극 전개와 아울러 국무총리 특별지시 시달(2회), 산불예방 당부를 위한 장관 서한문 발송 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산불방지 노력과 강수량 증가등 기상여건에 힘입어 지난 해 동기에 비하여 발생건수 면에서 49%의 감소(△259건)와 피해면적에서 56%(△1,316ha)를 격감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다.

(산불방지과 행정사무관 조이성)

## 2.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지구상의 약 60만여 종의 곤충 중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산림병해충은 약 3천여 종이며, 그 중에서 비교적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산림병해충은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소나무재선충, 잣나무넓적잎벌, 솔나방, 흰불나방 등 10여종이다.

1998말 현재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총 371천ha로서, 1997년말 발생면적 377천ha보다는 약 6천ha가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약 6%에 해당되는 넓은 산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중 솔잎혹파리는 1988년도 말에는 발생면적이 327천ha까지 달한 적이 있으나, 그 동안 지속적인 방제에 따라 1998년말에는 발생면적이 197천ha로 강원도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감소추세이며, 앞으로 2~3년 후면 강원도 지역도 완전 회복추세로 반전이 예상된다.

<표 2-3-5>

연도별 산림병해충 발생면적

(단위 : 천ha)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계	359	360	354	372	370	378	371
솔 잎 흑 파 리	212	211	212	215	209	208	197
솔껍질각지벌레	11	12	13	14	16	14	16
소나무재선충	(0.1)	(0.1)	(0.1)	(0.1)	(0.1)	1	(0.3)
잣나무넓적잎벌	10	10	8	9	10	11	14
밤나무해충	36	39	42	51	55	54	58
흰불나방등 기타	90	88	79	83	80	90	86

자료 :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표 2-3-6>

연도별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단위 : 천ha)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계	234	247	288	285	254(301)	281(351)	240(320)
솔 잎 흑 파 리	53	64	80	105	115	123	83
솔껍질각지벌레	8	8	12	11	14	16	11
소나무재선충	2	2	3	3	1(3)	1(3)	2(8)
잣나무넓적잎벌	6	10	11	8	9(10)	10	12
밤나무해충	71	76	91	76	38(82)	41(106)	41(114)
흰불나방등 기타	94	87	91	82	77	90( 93)	91( 92)

주 : ( )내는 중복방제에 의한 연면적임.

자료 :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산림병해충 방제는 연중 종합방제의 실행과 조기발견·적기방제를 통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소나무 3대 해충인 솔잎흑파리, 솔껍질각지벌레, 소나무재선충은 계



획 94천ha에 96천ha의 실적을 올리는 등 소나무림을 적극 보호하였다. 아울러 잣나무 및 밤나무해충은 헬기 연 540대를 지원, 연면적 124천ha에 대한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산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흰불나방 등 우리 생활주변의 환경을 파괴하는 돌발해충도 93천ha를 방제하는 등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산림병해충 퇴치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림보호과 임업사무관 최덕호)

### 3. 산사태 예방 및 환경친화적 사방

#### 가. 산사태 예방

산사태는 강우량·지형·식생 등의 복합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연속 강우량 200mm이상, 시우량 30mm이상일 때 그 발생빈도가 높다.

1998년에는 전국의 산사태 위험지 89개소 87ha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우기 이전까지 비닐피복·우회수로 등으로 응급 보완 조치하였으며,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관계공무원 비상근무 등 피해최소화에 노력하였으나, 사상 유례없는 6차례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1,282ha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92명에 달하였다.

피해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총 900억원의 복구비를 투입,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시행하였다.

<표 2-3-7>

'98 산사태등 피해현황

기관별	피해물량		복구비	인명피해	비고
	산사태	임도			
계	ha 1,282	km 184	백만원 90,055	명 92	
시·도계	1,172	159	79,961	92	
서울	19	-	6,021	8	
대구	2	3	541		
인천	68	-	3,267		
광주	2	-	1,200		
대전	1	1	235		
울산	-	1	67		
경기	449	36	24,712	61	
강원	31	3	2,096		
충북	77	20	5,544	1	
충남	75	10	4,686		
전북	2	-	186		
전남	8	2	804	3	
경북	356	52	22,605	16	
경남	82	31	7,997	3	
지방청계	110	25	7,103		
북부	72	13	4,340		
동부	6	3	468		
남부	20	7	1,442		
중부	3	1	329		
서부	9	1	524		
임업연구원	(시험연구시설 1건)		2,991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 나. 환경친화적 사방

사방사업은 1907년 서울 창의문밖(세검정주변)에서 처음 “적묘공”을 실시한 것이 그 효시로서 90여 년의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사방사업의 특징은 재해예방과 녹화 복구를 근간으로 하는 가장 환경친화적인 산림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해방이후 국토의 녹화와 산림 자원조성 기반구축에 거의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고 이와 같은 성공 모델을 다른 후진국들이 앞다퉈 배워가기도 하였다.

그 동안 대단지 황폐지는 대부분 녹화 복구되었으나 산사태 및 산불, 병해충등에 의한 소면적의 잔류 황폐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및 황폐계간에서의 사력 유출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1998년도에는 재해예방 측면에서 사방댐·야계사방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예방 사방사업이 보다 수준 높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방댐과 야계사방은 상류 수원의 맑은 물 공급 및 유수안정과 황폐 방지는 물론 「산불취수원」으로서의 역할등 다목적 차원에서 확대 시공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대배경에 따라 앞으로의 사방정책의 기조는 초창기의 산지토사 유출방지의 「사방공사」개념에서 2000년대 환경시대에 부응하는 「환경보전공사」 개념으로 발전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1998 사방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3-8> '98 사방사업 추진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비 율	비 고
산 지 사 방(ha)	105	105	100%	
예 방 사 방(ha)	20	20	100	
야 계 사 방(km)	55	56	102	
사 방 댐(개소)	63	75	115	
수질정화시설(개소)	3	3	100	
마을환경사방(마을)	3	3	100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산지관리과 임업사무관 김동권)

## 제 4 절 식물자원의 보전관리

### 1. 야생식물자원 보전관리

자생식물의 보존은 지구상에 식물종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법적 제재와 조사 기능에서 나아가 증식과 현지의 보존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우리 꽃 박람회에 희귀식물 홍보 및 증식된 식물을 전시하고 희귀 및 특산식물 포스터(4종)를 발간하여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하였다.

#### 가. 대상식물의 선정

관련 문헌을 종합하여 희귀식물로 언급된 900종류에 대하여 40인의 식물분류학자에게 설문지 발송 및 분석, 희귀식물 평가기준 체계 대입, 설문지 응답결과의 항목별 점수화, 가중치 부여, 전문가 검토회의 과정을 거쳐 산림청 희귀식물 목록으로 217종 후보종 42종을 선정하였다.

#### 나. 자생지 조사 현황

자생지 현황, 개체군의 구조 및 특성, 보존지역의 상태 등을 종합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사야장을 개발하였다. 이는 앞으로 전국적인 모니터링에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또한 200여종의 식물을 동시에 조사하다 보니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며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분포특성 연구 및 분포도 작성을 목표로 보존 우선순위가 높은 종들을 대상으로 집중분포 조사를 실시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9>

자생지 조사현황

연 도 별	'95년	'96년	'97년	'98년
종별 조사지역	24종 31지역	32종 45지역	56종 71지역	52종 60개지역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 다. 수집 및 증식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생체, 종자, 삽수, 및 포자등 증식해야 하는 부분이 모두 다르며 일반적으로 희귀식물이란 경쟁에 있어서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지금까지 종자 또는 생체의 증식에 국한되었던 증식방법에서 1998년에는 예비실험으로 모새달의 인공증식 실험을 한 바 있으며, 땃강나무류 및 능금나무 인공증식 실험을 실시 중에 있다.

수집된 종은 일차적을 수목원내에 보존하며 수집된 종 가운데 보존이 시급한 종, 관상적, 약용등 보급 및 대량 증식가치가 있는 종, 증식방법이 규명이 안된 종 등을 우선 집중 증식하고 유전적인 특징이 유지될 정도의 개체군 크기로 식재하며 그 가운데 자생지 멸절된 식물은 복원에 이용하게 되고 지금까지 청사조, 산개나리 등 12종 236본 복원하였다.

<표 2-3-10>

희귀식물 수집 및 증식실적

구 분	95년 실적	96년 실적	97년 실적	98년 실적
생 체	26종 1,087본	26종 292개체	30종 1,000개체	42종 985개체
종 자	15종 4,595립	9종 630개체	10종 2,000립	9종 1,360립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 라. 자생식물의 현지내 및 현지외 보전

수목원내 희귀식물을 식재한 그 자체가 바로 현지외 보존이 된다. 희귀식물 보존원을 설치하여 집약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자생지 조사는 대상식물의 분포현황을 조사(생태적, 분류학적 유전적 특징)하여 지속적인 보존대책(생태적인 조절, 법적 보호 대상지로 지정 검토, 최대 효율 면적 선정)을 수립하고 조사된 자생지 가운데 일정한 개체군 이상의 희귀식물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게 되는데 1998년에는 6개소 1,503ha의 천연보호림을 지정하였다.

(산림자원과 임업사무관 김동수)

## 2. 비무장지대 산림생태계 조사

### 가. 조사 개요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 생태계 조사는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에 걸쳐 있는 다양한 생태경관에서 서식생물의 종 구성과 입지 환경을 밝히고 산림자원량을 파악하여 통일후의 자원관리와 보전체계를 확립하고자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6년부터 중동부 산악지역, 중서부 내륙지역, 서해도서 및 한강하구, 임진강하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참가한 인원은 8개 분야별 전문가 52명이 참가하였다. 조사 분야는 식물상 및 식생, 입지환경 및 토양, 산림자원, 곤충,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미생물 분야(버섯 및 균류) 등이다.

### 나. 조사 결과

#### (1) 중동부 산악지역

중동부 산악지역은 가칠봉, 도솔산, 두타연, 건봉산, 향로봉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이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은 한국특산식물인 금강초롱꽃 등 517종에 달하였다. 야생동물은 포유류의 경우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 산양, 하늘다람쥐, 수달 등 22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조류의 경우 천연기념물인 원앙, 황조롱이, 새매, 붉은배새매, 까막딱다구리 등 37종이 분포하였다. 파충류는 한국 특산종인 구렁이 등 13종, 양서류는 한국 특산종인 도롱뇽 등 10종 그리고 어류는 한국 특산종인 버들가지, 금강모치 등 12종이 서식하였다. 곤충은 나비류의 경우 멸종위기종인 왕은점표범나비 등 64종이 분포하였으며, 나방류는 북방수증다리밤나방 등 86종, 딱정벌레류는 칠성무당벌레 등 90종이 나타났다. 미생물은 꽃구름버섯 등 106종이 서식하였다. 입지환경은 일반 산림토양보다 염기와 질소성분은 많으나 유효인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중서부 내륙지역

중서부 내륙지역의 조사는 금학산, 철원평야, 야월산, 천덕산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은 희귀식물인 낙지다리 등 550종이 있으며, 포유류는 고라니, 노루, 너구리, 두더지, 다람쥐 등 5종, 조류는 천연기념물인 두루미, 새두루미, 흑두루미,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 등 85종이 분포하였다. 파충류는 자라, 살모사 등 10종, 양서류는 한국 특산종인 도롱뇽, 아무르산개구리 등 9종 그리고 어류는 한국 특산종인 묵납자루, 줄납자루 등 37종이 서식하고 있다. 곤충의 경우 나비류는 암떡부전나비 등 30종, 나방류는 한국 미기록종인 회색좁나방 등 23종, 딱정벌레류는 뽕족날개하늘소 등 89종 그리고 미생물의 경우 큰이빨벼섯 등 91종이 분포하였다.

## (3) 서해도서 및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

서해도서 및 한강하구, 임진강 유역은 백령도, 대청도, 강화도, 김포, 파주, 연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식물의 경우 한국특산식물인 정향풀 등 500종이 분포하였다. 야생동물의 경우 포유류는 천연기념물인 물범 등 10종, 조류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100여종, 파충류는 한국 특산종인 구렁이 등 10종, 양서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등 10여종, 어류는 한국 특산종인 눈동자개, 얼룩동사리 등 12종이 서식하였다. 곤충은 나비류의 경우 푸른부전나비 등 20종, 나방류는 점갈고리박각시 등 10종 그리고 감소추세종인 고추좁잠자리, 좁길앞잡이 등이 분포하고 있다. 미생물은 미기록종인 가칭 녹청꽃잎벼섯 등 100여종이 나타났다. 이 지역의 입지환경은 다양한 산림토양형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연천 지역은 내륙지방으로는 유일하게 화산회 토양이 분포하고 있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관 신준환)

## 제 4 장 산림행정 쇄신 및 법령·제도 개선

### 제 1 절 산림행정조직 개편

산림행정조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으로 임업연구원, 산림항공관리소, 5개 지방산림관리청, 시·도에 산림과 또는 녹지과(시·군에 산림과 또는 녹지과)를 두고 있다.

1998년도에는 정부 구조개혁에 따라 기구축소 및 인력 감축이 단행되었다.

#### 1. 기구개편 및 인력감축('98.2.28)

본청 공보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을 폐지하였고 과단위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으로 위임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인원 99인(4급3, 5급1, 6급1, 7급2, 8급6, 연구관5, 연구사34, 기능직47)을 감축하였다.

#### 2. 연구기관 및 산림항공관리소 조직개편('98.8.1)

임업연구원의 산림생물부·산림미생물과·산림곤충과·입지환경과를 폐지하고 산림경영부를 산림자원부로 개편하였으며, 유사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임목육종연구소를 임목육종부로 개편하여 임업연구원에 통합하고, 서무과·원종과·동부육종장을 폐지하였다. 또한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하여 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하에 원주지소를 신설하였다.



### 3. 교육훈련기관 개편('98.12.31)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임업연수원을 임업연수부로 개편하여 임업연구원에 통합하고, 인원13인(4급1, 5급2, 6급1, 7급2, 기능직7)을 감축하였다.

<표 2-4-1>

#### 산림행정 조직 및 정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97. 12. 31		'98. 12. 31		증 감	
	조 직	정원	조 직	정원	조 직	정원(%)
계	본청: 3국2관19과 소속기관: 49기관	1,641	본청: 3국2관17과 소속기관: 47기관	1,529	본 청: △2과 소속기관: △2기관	△112(6.8)
본 청	3국2관19과	199	3국2관17과	186	△2과	△ 13(6.5)
1차소속기관	9기관	524	7기관	434	△2기관	△90(13.0)
2차소속기관	40기관	918	40기관	909	-	△ 9(1.0)

자료 : 산림청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병호)

## 제 2 절 산림관련 법령정비

### 1. 산림법시행규칙 개정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전임지를 인접토지와 합필을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 3ha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 입장료를 당해 휴양림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휴양림 조성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대나무의 수요가 감소하여 대나무 벌채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따라 종전에는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신고 하도록 하던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분묘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5m 이내로 완화하는 등 『산림법시행규칙』을 개정(농림부령 제1276호, 1998. 2. 13)하였다.

## 2.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 제정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 및 권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임업진흥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 대하여 자금 및 유통정보 등을 지원하고, 임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개인 독립가의 자녀, 1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있는 자,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임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임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임업진흥계획에 조립·육림·임도시설·병해충방제·임산물가공업지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임업진흥촉진법시행규칙』을 제정(농림부령 제1282호, 1998. 3. 3)하였다.

## 3. 국유임산물매각규칙 개정

국유임산물 중 입목의 일반매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중 별채실적의 하한 및 매출실적을 없앴으로써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참가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유임산물을 매각한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산물의 소재지에서 매수인에게 산물의 인도증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산물의 소재지에 나가지 아니하고도 매수인에게 인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매수한 산물의 벌채·반출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산촌의 인력부족에 대처하고 임업진흥촉

진법에 의한 영림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임산물매각규칙』을 개정(농림부령 제1294호, 1998. 10. 8)하였다

(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미라)

## 제 3 절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 1. 추진 배경

IMF 관리체제를 조기에 벗어나고 국가경쟁력을 세계 10위권대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존하는 규제의 존폐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 후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규범에 미흡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신설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강화하여 규제신설을 강력 억제하고, 모든 규제의 등록과 규제총량제·규제일몰제 등을 도입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이 1998. 3. 1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추진에 따라 산림행정규제개혁을 1998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임업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완화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키고자 산림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검토를 하였다

### 2. 추진 경과

규제개혁을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코자 규제개혁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2회('98.4.16, '98.5.6)실시하여 규제개혁 마인드를 진작시켰다

규제개혁 당위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된 후 “산림행정규제개혁작업팀”을 구성하여 산림관계 전법령과 규정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2회의 자체 정책토론회와 소속기관, 시·도, 학계, 임업후계자, 독립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토론을 거쳐 산림행정규제를 276건으로 최종 확정하고, 1998년도에 총규제의 50%에 해당하는 138건은 폐지, 82건은 규제수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소관규제의 80%인 220건을 정비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림법, 임업진흥촉진법, 사방사업법 등을 개정코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 3. 주요 내용

첫째, 영림계획에 대한 사항으로서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을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전환하고, 독립가, 특수개발지역, 산업비림 소유자에 대한 영림기술자 고용명령제도와 시장·군수가 산주에게 영림계획의 변경을 명령하는 제도, 그리고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을 때 대집행하는 제도를 폐지토록 하였다.

둘째, 조림장려 제도로써 벌채허가시 조림비용 사전 예치의무와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이용·가공·판매하는 자에 대한 조림명령 제도를 폐지토록 하였다.

셋째, 휴양림의 위탁관리승인 및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고용권장제를 폐지하고, 입장료를 자유로이 정하도록 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토록 하였다.

넷째, 영림단을 조직 운영하고자 하는 임업기능인에 대한 등록 및 등록 변경사항 신고, 등록취소, 산림사업의 도급자격제한 등을 폐지하여 기능인 영림단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토록 하였다.

다섯째 임업후계자, 독립가, 임업기술지도원 등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산림경영 전문인력의 육성을 도모토록 하였다.

여섯째 보전임지관리 제도로써 3ha미만 분할금지제도를 폐지하여 산지이용 및 임야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토록 하였다.

일곱째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위탁, 사유림의 대리경영제한, 임산물유통시설 설치(운영)의 자격제한 등을 완화하여 산

림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진입규제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병호)

## 제 4 절 산림정책 모니터제 운영

### 1. 운영 개요

산림정책에 대한 수요와 현안과제에 대한 여론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반영하기 위하여 임업종사자, 교수 및 교사, 임업관련 단체, 공무원 등을 산림정책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였다.

1997년도부터 운영하여 왔으나 모니터요원의 대부분이 임업관련 종사자(90%)로 구성되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미흡하고 참여율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1998년도에는 모니터요원의 확대, 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방안 강구, 인터넷을 활용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였다.

<표 2-4-2> 산림정책 모니터요원 위촉현황

직업별	계	공무원	임업종사자	교수 교사	임협	환경 단체	사업 상업	농업	회사원	기타
인원(명)	375	111	67	62	30	21	19	13	12	40
비율(%)	100	30	18	17	8	5	5	3	3	11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 2. 운영 결과

### 가. '98년 제1차 설문조사결과('98.2.26~4.10)

녹화임정에서 경영임정으로 전환한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주요과제, IMF 체제에 따른 실업대책 등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내용·구성 등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의견이 70%이상을 차지하였고, 기본계획의 10년 단위 작성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71.8%가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산림의 장기성을 감안하여 3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나타났다.

국민적 기대조사에서는 산림휴양·문화진흥과 산촌 종합개발 사업이 39%로 가장 많아 최근의 높아진 휴양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는 73%가 정부예산을 늘려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 나. '98년 제2차 설문조사결과('98.10.1~11.10)

모니터요원 확대 및 운영방안 개선 후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7문항)과 산림정책분야(4문항)에 대한 '98년도 제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가 숲 가꾸기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98%가 숲 가꾸기를 실행한 산림은 공익기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제시 의견에서는 국민홍보강화(38명), 경제림육성(23명), 산림훼손방지(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숲 가꾸기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근로자를 사업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간벌 및 가지치기 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산림시책 수요 면에서는 대 국민 홍보강화와 피부에 와 닿는 임정개발, 임업소득증대와 산림훼손방지 시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앞으로 운영방향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여 모니터요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인터넷 등을 통해 제시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모니터 활동이 적극적인 요원에 대한 기념품 증정, 포상, 감사패 등 보상방안을 강구해 나감과 아울러 제출된 주요 의견과 조사결과는 산림지, 임업신문, 주요일간지 등에 게재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산림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정책과 행정사무관 박기남)

## 제 3 편 1999년도 임정시책



여 백

# 제 1 장 1999년도 임업정책 방향

## 제 1 절 1999년도 임정목표

1999년은 제4차 산림기본계획 기간(1998~2007)의 제2차년도이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해이다.

지금 우리 임업은 제 1·2차 치산녹화 및 산지자원화 사업 추진으로 녹화에 성공한 산림을 잘 가꾸어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수요에 부응해야 하며,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목표인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을 통하여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산림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은 그 동안 이룩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 하에 임정(林政)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심는 임업에서 가꾸는 임업으로 전환하여 경제적·공익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둘째, 산림농업(Agro-Forestry)을 통하여 산지소득을 증대시키고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셋째,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윤정수)

## 제 2 절 1999년도 임정방향

1999년도 임정은 제1절에서 기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하고자 한다.

숲 가꾸기 사업은 정부의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가장 성과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어 관련 예산도 1998년도 549억원에서 1999년도에 1,766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따라서 지난 해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량실업으로 인한 인력을 적극 흡수하는 한편,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제2의 녹화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하고자 한다.

아울러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환경운동연합 등 각종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우리와 우리 후손을 위해서는 숲 가꾸기 사업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뒷받침되는 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숲 가꾸기사업의 산물을 이용하여 축산용 톱밥 및 조사료를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 활용은 물론 외화절감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임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 고자 한다.

목재·식용·관상·휴양 등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의 각종 수요에 부응하고 임업인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도록 새로운 소득원의 개발과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산재 이용촉진 등 임산물 수요창출을 위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하여 직거래체계를 구축하고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늘려 나갈 방침이다.

셋째, 산림의 환경·휴양적 기능을 증대시켜 나가하고자 한다.

도·농 통합으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산림과 5대강유역의 산림을 잘 가꾸고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맑은 물 공급에 힘쓰는 한편, 자생식물등 산림생물자원의 보전·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한다.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시설운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산촌개발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운영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보호 분야에 있어서는 장비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산불과 병해충 발생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 사방댐등 산림재해방지시설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산업화·도시화의 진전으로 산림환경 기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여건상 지원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녹색복권』을 '99. 8. 6부터 발행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할 녹색자금을 조성·운용할 계획이다. 『녹색복권』은 기존의 복권과 달리 복권 1매를 구입함으로써 한 그루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창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의 투명성·공개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넷째, 지속 가능한 임업경영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과학적인 산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임도시설과 임업기계화를 촉진하며, 독립가·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경영주체를 집중 육성해 나가는 한편, 국유림의 경영을 혁신하고 국가관리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림자원의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 등 국유림의 선도적 역할도 더욱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임산물 수출을 증대시키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산림분야 국제협력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익을 증진시키며 국제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한다.

임산물 수출목표를 전년대비 18% 증가한 285백만\$로 정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유망품목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

산비 및 유통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수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운영, 임산물 수출확대 대책회의 정기 개최 등 임산물 수출증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자간 국제회의 및 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양자간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자원보유 개도국과의 임업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며, APEC, WTO, FTA 등 통상문제에 대해 민·관 공동대책반을 운영하고 분야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통상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임업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성과의 실용화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생물공학기술을 응용하여 이미 개발에 성공한 유용 신물질은 산업화를 촉진하고, 임업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임업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선진화된 임업경영, 새로운 소득 창출과 연계되는 임업연구체계가 구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하고자 한다.

일곱째,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제를 개편하여 대리경영 등을 통해 산림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조합원을 위한 조합, 산림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합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에서 기술한 정책방향으로 임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산주, 임업인,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개발, 행정규제 완화와 더불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윤정수)

### 제 3 절 1999년도 임정부문 예산

1999년도 임정부문 예산 편성방향은 산림자원의 육성과 산지의 소득증대, 산림의 환경·휴양기능 증진 및 임업기술 개발 보급 등 주요 임정시책을 뒷받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 IMF 체제로 인한 국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임정부문 예산은 1998년도 추경대비

31.6% 증가한 648,50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특히, 다음 사업들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첫째, 치산녹화기에 심은 조림지에 기존 육림사업과 병행하여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여 조기에 경제림을 조성하고, 산림경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임도등 산림경영기반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늘려 나가도록 하였다.

숲 가꾸기 사업을 산림청 주관으로 일원화하여 생태적·기술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1,76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생산임지 중심으로 임도를 집중적으로 시설토록 하는 한편, 독립가·임업후계자 등을 양성하여 산림경영 주체로 육성토록 하고 산사태등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의 시설도 확대토록 하였다.

둘째,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밤·표고 등 산지소득증대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이용·가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비 48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산촌마을을 산림경영과 소득원 개발 거점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하였다.

셋째,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 휴양시설의 확대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다.

우리 고유수종과 야생 꽃으로 국토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꽃길 조성 사업비 4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와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한 대형헬기 확보 및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생물다양성 보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였다.

넷째, 첨단과학을 이용한 실용적 임업기술 개발이 가능토록 관련 연구사업비를 확충하였다.

우량 신품종 육성 및 유용유전자원 보전연구, 산림자원으로부터 무공해 생물농약의 탐색기술과 새로운 임산소득원 개발 및 생물공학 응용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표 3-1-1>

1999년도 임정부문 회계별·경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98추경 (A)	'99예산 (B)	증△감 (B-A)	%
회계	○ 일 반 회 계	216,667	334,020	117,353	54.2
	- 사 업 비	190,030	309,585	119,555	62.9
	- 기 본 적 경 비	26,637	24,435	△2,202	△8.3
	○ 재 정 용 자 특 별 회 계	7,500	6,000	△1,500	△20.0
	○ 농 어 촌 구 조 개 선 특 별 회 계	98,067	179,541	81,474	83.1
	- 임 업 진 흥 사 업 계 정	68,542	150,133	81,591	119.0
	- 농 특 세 전 임 금 사 업 계 정	29,525	29,408	△117	△0.4
	○ 국 유 재 산 관 리 특 별 회 계	170,394	128,942	△41,452	△24.3
	- 사 업 비	146,778	112,706	△34,072	△23.2
	- 기 본 적 경 비	23,616	16,236	△7,380	△31.3
합 계		492,628	648,503	155,875	31.6
경비	○ 사 업 비	442,375	607,832	165,457	37.4
	- 산 립 자 원 의 육 성	126,614	292,078	165,464	130.7
	· 조 립 및 육 립	69,125	60,175	△8,950	△12.9
	· 숲 가꾸기 사 업	-	176,600	176,600	-
	· 임 도 건 설 등	57,489	55,303	△2,186	△3.8
	- 산 지 소 득 및 유 통 · 가 공	75,113	113,371	38,258	50.9
	· 임 산 소 득 기 반 조 성	29,668	39,990	10,322	34.8
	· 임 산 물 유 통 · 가 공	30,751	47,727	16,976	55.2
	· 산 촌 중 합 개 발 등	14,694	25,654	10,960	74.6
	- 산 립 환 경 · 휴 양 기 능 증 진	66,589	64,139	△2,450	△3.7
	· 산 립 휴 식 공 간 조 성	10,995	11,433	438	4.0
	· 산 립 병 해 충 방 제	18,797	20,041	1,244	6.6
	· 산 립 보 호 등	36,797	32,665	△4,132	△11.2
	- 국 유 립 경 영	146,778	112,706	△34,072	△23.2
	· 조 립 및 육 립	30,878	10,351	△20,527	△66.5
	· 임 도 시 설	33,671	6,826	△26,845	△79.7
	· 재 산 관 리	34,221	24,402	△9,819	△28.7
	· 위 탁 사 업	-	49,911	49,911	-
	· 산 립 보 호 등	48,008	21,216	△26,792	△55.8
	- 기 술 개 발 등 기 타	27,281	25,538	△1,743	△6.4
	· 임 업 기 술 개 발	12,838	11,598	△1,240	△9.7
	· 산 립 행 정 지 원 등 기 타	14,443	13,940	△503	△3.5
	○ 기 본 적 경 비	50,253	40,671	△9,582	△19.1
	- 인 건 비	42,179	31,966	△10,213	△24.2
	- 기 준 경 비	8,074	8,705	631	7.8

자료 : 산림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판석)

## 제 2 장 1999년도 주요 임정시책

### 제 1 절 경제적 ·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 기반구축

#### 1. 우량종자 · 묘목 생산 공급

우량형질의 묘목을 생산 · 공급하기 위하여 조림용 종자는 전량 채종원 및 채종림에서 공급하는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OECD 규범에 맞는 생산체계 및 산림용 종묘의 품질보증체도를 도입하여 우리의 제도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1999년도에도 우량종자에 의한 건묘 생산을 하기 위해 2000년 조림용으로 50백만본(민유림44, 국유림6)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용 종자는 채종원산 종자로 우선 수급토록 하고 부족한 종자는 채종림 · 채종임분에서 채취한 종자를 종자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종자에 한해 품질보증표, 색깔 표시 및 산지증명서를 부착하는 등 국가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우량종묘 유통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 2. 지역특성과 생태계에 적합한 다양한 조림사업 추진

경제 · 환경적으로 건전한 자원조성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과거의 대면적 벌채에 의한 획일적인 양적 위주 조림에서 벗어나 생태적 · 질적 조림으로 전환하여 수하식재, 유용수종 혼식, 소구역 벌채조림 등 복층림 및 혼효림 등의 조림을 추진하고, 산불 · 병해충 등 피해지에는 지대별 복구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임지의 여건과 생태계 회복시기를 감안하여 수종, 본수, 시기 등을 조정 식재할 수 있도록 조림방법을 제시하여 효과적이고 완벽한 조림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1999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대면적 단일수종의 획일적 조림에서 탈피하여 지형, 토질, 지세 등을 고려한 소면적 적지적수 조림을 추진하고,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류 벌채지는 인공조림을 지양하고 그루터기에서 발생하는 움푹을 보육 후계림으로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특색 조림등 경관림 조성을 확대하고 공익기능을 증진토록 할 계획이다.

대청댐 등 주요댐(호수) 주변 국토경관을 조성(232ha)하고, 산지 꽃나무 벨트, 미래의 숲, 철쭉단지 조성사업 등(342ha)을 추진하며 도로변, 사적지, 관광지 주변 등에 큰나무조림(1,800ha)을 확대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특산 특용수종인 후박나무, 황칠나무,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옷나무 등(4천ha)을 조림하여 산지소득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표 3-2-1> '99 조림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민유림)

(단위 : ha)

세 부 사 업	계 획		실 적		비율(%)	
	면 적	본 수	면 적	본 수	면 적	본 수
계	16,014	44,225	18,175	48,765	113	110
○ 경제수조림	13,340	40,395	13,836	41,469	104	102
○ 큰나무조림	1,600	2,400	1,952	3,001	122	125
○ 지역녹화조림	342	137	298	799	87	583
○ 주요댐(호수)주변 경관림조림	232	93	175	225	75	242
○ 고성산불피해복구	500	1,200	500	1,200	100	100
○ 유실수조림	-	-	1,414	913	-	-
○ 가로수	-	-	-	1,158	-	-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산림자원과 임업사무관 심영만)

### 3.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시설

#### 가. 1999년도 임도시설 계획

임도는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필수 산업화 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시설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로 시설하던 민유임도를 1995년부터 농어촌특별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사업량 및 km당 사업단비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견고한 임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1999년도 시설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2-2>

'99 임도시설 추진계획

(단위 : km, 백만원)

구분	계획	사업비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용자
계	972	77,472	44,926	21,558	5,334	5,654
국유임도	172	18,034	18,034	-	-	-
민유임도(보조)	710	53,784	26,892	21,558	5,334	-
민유임도(용자)	90	5,654	-	-	-	5,654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 나. 기본 방향

국·민유 임도의 연계는 물론, 지역 공도와 연결된 간선임도 위주의 종합적인 임도망을 구축함과 아울러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산림 시범단지등 조림·육림, 벌채 보속 사업지에 집중 시설할 계획이다.

현지여건에 부합하는 설계·시공으로 견고한 임도를 구축하여 임도피해의 최소화와 기설임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보수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시설방법도 과거 물량위주에서 탈피하여 임도개설에 따른 산림생태계 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급경사지 및 토사유실 등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임도시설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품질” 우선의 견고하고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가 구축되도록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 다. 추진 계획

합리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선 지형과 당해 산림의 기능 및 장기적 시업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산림경영상 활용도가 높고 각종 사업이 집중되는 생산임지로서 국·민유림이 연계되고 지역개발 효과가 높은 간선 임도망을 우선 선정 시설한다.

임도 설계는 현지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산림훼손의 최소화와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토록 하되, 예산에 의한 물량 위주의 설계는 지양하고 견고한 임도가 설계되도록 시공난이도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단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질적인 설계로 전환한다.

민유임도의 경우는 시설비중 산주 자부담 10%가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소유규모의 영세성, 투자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자부담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계획적인 임도망 구축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산주 자부담을 임업진흥기금에서 용자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지원한다.

임도시공에 있어서는 전년도 사전 설계 분은 해빙과 동시 착공하고 1999년 설계 분은 설계완료 즉시 발주 착공케 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시공을 방지하고, 임도시공 기술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성실 시공토록 조치하고 하도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한다.

임도는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한 다음 관리를 잘하는 것도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므로 각 기관별, 노선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후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 등 보수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해피해우려 또는 상승지는 우기전 현지를 확인 조사하여 사전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또한 과거 설치한 임도의 경우 낮은 단비로 설치한 결과 일부는 피해발생위험·경관저해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같은 기존임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위하여 대대적인 보수 및 구조 개량을 통하여 견고한 임도를 만들고 유지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라. 임도시설 장기계획

우리나라 산지특성을 감안하여 ha당 적정 임도밀도를 10m로 책정하고 2030년까지 56,000km를 시설하는 장기계획물량을 감안, 제4차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별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2-3> 임도시설 장기계획

구분	계획	추진실적 ('68~'98)	1단계		2단계	3단계	누계
			'99	'99~2004	2005~2007	2008~2030	
사업량 (km)	계	13,515	972	9,665	4,969	26,879	56,000
	국유임도	3,816	172	2,119	905	7,988	15,000
	민유임도	9,699	800	7,546	4,064	18,891	41,000
사업비 (백만원)	계	599,486	65,340	623,708	321,601	1,769,623	3,381,116
	국유임도	176,194	15,108	150,612	66,210	584,402	993,851
	민유임도	423,292	50,232	473,096	255,391	1,185,221	2,387,265
ha당밀도(m)		2.10	2.25	3.75	4.27	10.0	10.0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산지관리과 임업사무관 이철수)

## 4. 자연생태계 보호 및 지역주민 편익을 위한 사방사업 추진

사방사업은 국토보전을 근간으로 하여 황폐지의 녹화피복과 재해예방을 위한 토목적 공사를 위주로 시공하였으나,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

발전에 따라 자연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강구해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어류가 서식하는 계류에 사방댐을 시행할 때에는 어도(魚道)를 시공하고 각종 공작물의 시공은 콘크리트·깁돌보다는 돌망태·자연석등을 사용하고 계안에는 갯버들을 식재하여 수변 생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지역주민편익을 위해서는 야계사방 시행지에는 독쌍기를 이용한 농로를, 바닥막이는 농사용 보(洑)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방댐 주변에는 녹음수를 식재하고 부댐을 이용한 물놀이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 광산, 목장 등에서 오폐수가 흐르는 계류에는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고 있으며, 1999 사방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2-4> '99 사방사업 추진계획

구 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국 교	지방비	
계		21,801	15,385	6,416	
산 지 사 방	100ha	3,676	2,697	979	
예 방 사 방	20ha	1,076	753	323	
사 방 지 추 비	754ha	504	353	151	
야 계 사 방	52km	6,593	4,615	1,978	
사 방 댐	56개소	8,757	6,130	2,627	
수 질 정 화 시 설	3개소	240	168	72	
해안침식지복구	3km	955	669	286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산지관리과 임업사무관 김동권)

## 제 2 절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내실화

### 1. 숲 가꾸기 사업

#### 가. 추진 방향

숲 가꾸기 사업은 고용효과가 높은 산림사업을 우선 실행대상 사업으로 선정하되 대단지 경제림 조성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을 권역화하고, 기존의 산림사업과 실행목적, 작업체계, 사업공정 등을 차별화하여 실행하며,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이용 가능목은 최대한 수집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산재 활용도 증진에 기여하고 취업자에 대하여는 산림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귀농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나. '99 추진계획

##### (1) 사업의 종류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가꾸어 주어야 될 대상 산림을 선정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간벌,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조림 예정지 정리 및 조림, 산불방지를 위한 임내정리, 임도 보수정비(간벌재를 이용한 목책 등), 도시림 가꾸기, 위생간벌 및 피해목 벌채, 수간주사 작업, 산물수집 및 톱밥·조사료 생산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2) 사업현황

전국 853개 사업장에서 연 480만명의 실업자를 투입하여 12만ha 산림을 가꿀 계획으로 총 1,766억원이 투입된다.

<표 3-2-5>

숲 가꾸기 사업현황

구 분	계	민유림	국유림	생명의숲
- 예산(백만원)	176,600	41,006	131,003	4,591
- 사업량(ha)	120,600	27,600	90,000	3,000
- 연고용(천명) (상시고용)	4,820 (20,000명)	1,100 (4,500명)	3,600 (15,000명)	120 (500명)
- 기술교육(명)	4,500	1,500	1,500	200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3) 산물수집 · 활용계획

간벌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표고자목 · 펄프재 등으로, 굵은 나무, 나무가지 · 잎 등 부가가치가 낮은 것은 톱밥 · 조사료로 공급하게 되며, 유기농협회, 축협, 축산업자 등 수요자와 연계하여 산물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표 3-2-6>

숲 가꾸기 산물 수집 · 활용계획

구 분	산물생산량	산물생산액	
		원 화	의 화
계	200,000m <sup>3</sup>	195억원	13백만불
간벌 소경재	100,000m <sup>3</sup>	105억원	7백만불
톱밥 조사료	100,000m <sup>3</sup>	90억원	6백만불

주 : m<sup>3</sup>당가격(소경재70불, 톱밥60불), 톱밥조사료 '97년 수입가격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4) 실직자 기술교육 실시

숲 가꾸기사업에 기능인부로 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에게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3개 훈련원(강릉, 양산, 진안) 및 임업연수부에서 산림의 기능과 역할, 산림 작업방법, 기계장비 사용법, 안

전관리 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표 3-2-7> '99 실직자 기술교육 계획

계					기 간
계	강 령	양 산	진 안	임업연수부	
4,500명	1,320	1,280	1,300	600명	'99.1~11월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 2.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은 숲을 가꿈으로써 국토보호 및 산림자원 조성에 기여하고 고용 및 자원봉사의 기회를 부여하며, 국토·자연·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정신을 함양하여 국가 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산림 선진국의 초석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경실련등 많은 민간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결성하였다.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이 벌이고 있는 숲 가꾸기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운동으로 승화되고 있음은 물론 숲에 감사하고 숲을 사랑하는 마음이 국민의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시민에게 숲 가꾸기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이 펼치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과 연계되어 전 국민의 숲 가꾸기 참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과 임업서기관 박종호)



## 제 3 절 사유림경영의 활성화

### 1. 사유림경영의 기반구축

영림계획이 의무제에서 권장제로 변경되고 산림사업의 대집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유림의 방치가 우려되어 사유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할 임업경영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임업경영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독립가·임업후계자 선발·육성, 협업경영 활성화 그리고 방치산림의 경영관리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유림을 직접 경영하기를 원하는 임업후계자, 경영할 여건을 갖춘 독립가에 대해서는 선정요건을 완화하여 지속적으로 수를 늘려 나가고, 이들이 임업경영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행정 지원을 집중하고 영림계획에 의한 자율사업을 확대하며, 단기소득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유림 임업경영의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협업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양적인 확대보다 기존 협업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중점 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점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소득사업의 지원, 협업지도원의 전담배치를 통한 협업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사유림 소유자의 절반 정도가 부재산주이고 이들 산림은 계속 영세화하는 추세이며 경영관리는 방치 상태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한다.

(사유림지원과 임업사무관 남송희)

## 2.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산림분야의 각종 도면과 통계 및 문서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구축된 자료의 활용을 위한 개별 응용프로그램 개발·실용화로 산림자원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1995년부터 산림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중이다.

그 동안 전국 산림식생에 대한 종합정보인 임상도 751도엽과, 산지이용의 근간이 되는 산림이용기본도 793도엽, 국유림경영의 기본단위인 국유임소반도 277도엽의 전산화 완료와 구축자료를 현업에 활용하기 위한 국유림영림계획 프로그램을 1998년에 개발하였으며, 1999년부터 이를 현지업무에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임도현황 자료를 나타낸 임도망의 전산화와 현업에 활용할 지리정보운영용 시스템의 보급 및 현지 운영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자료의 현업활용과 각 시·군 및 관련단체에 확대 보급을 위해 현장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산림입지도등 산림관련 공간정보 및 통계정보의 전산화와 구축된 자료를 활용할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시스템의 보급 및 운영요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산림자원의 과학적 관리와 산림행정의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8> '99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세 부 사 업	단위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비 고
○ 임도망도 전산화(DB구축)	매	758	239	
○ 시스템구축	하드웨어	대	8	38
	소프트웨어	개	13	32
○ 산림지리정보시스템 교육	명	100	-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업정책과 임업서기관 이용직)

### 3. 임업전문인력 양성

산촌주민을 중심으로 임업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산림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임업기능인 중·장기양성계획』에 따라 영림단을 연차별로 조직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는 신규로 38개단 510명을 조직토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신규 조직된 영림단의 조기정착을 위한 장비지원으로 8종 480대, 566백만원 투입할 계획이다.

산림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임업기능인 교육·훈련은 현장위주로 하여 교육과정별(신규, 보수, 순회) 차별화를 도모하고, 임업기계의 운전조작기술 및 점검·정비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직업으로서 영림단 임업기능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충분한 작업물량 확보와 시기별 적정배분토록 하고 상조회 운영을 통한 구성원간의 결속력 강화 및 복지증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3주 이하의 단기 기능인력양성에 치중함에 따라 현장의 작업을 감독·관리하고, 산림경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현장 임업전문가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산림경영관리자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3개월 3기 120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국유림경영과 임업사무관 김용관)

### 4. 산촌 종합 개발

산촌은 산촌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의 휴양장소로서, 또한 수자원 함양과 국토 보전 등 국민 전체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공간상의 한 부분(약46%)으로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산촌지역의 문화적·지리적·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단순 농림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산촌 종합 개발사업과 같이 산촌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산림사업을 추진

하게 되었다.

금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을 보면 1997년 설계한 16개 마을과 1998년 설계한 22마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농림부, 행정자치부 소관 연관사업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착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99년 설계대상지 12개소는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보다 효과적인 설계를 위하여 지역 대학교수등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내실 있는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의 신·개축,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마을회관, 마을안길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소득원 개발을 위한 공동저장·판매, 이용가공시설, 산나물, 산지과수, 관상수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산촌개발을 통하여 산촌지역의 진흥은 물론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마을로 육성, 나아가 지역 임업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7년에 실시한 전국 산촌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대상 산촌을 구분·지정하여 대상지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마을을 집중 개발하는 한편, 마을의 특성과 개발 여건 등에 부합하는 유형별 개발모델을 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산촌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종합적 평가와 점검이 미흡함에 따라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산촌개발을 완료한 9개 마을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체계를 점검, 발전방안을 도출하여 정책화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국유림경영과 임업사무관 최수천)

## 제 4 절 산림농업을 통한 산지소득증대

### 1. 산림농업 생산기반 확충

#### 가. 중점 추진방향

1999년 단기임산물 생산액을 전년대비 11% 증가된 1조 1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첫째, 임산물 주산단지 위주의 품목별 집중지원을 통한 규모화·거점화 추진, 둘째, 산림복합경영 모델개발 및 확산을 통한 경영기반 구축, 셋째, 소득사업 관련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적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장기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9년도 중점추진 방향은 밤·표고 등 대형품목 위주의 자원정책을 송이·대추·산채·약초 등 다양한 임산자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산림복합경영의 이론적·경험적 정책기반을 확립하는 데 두고 있다.

#### 나. 주요 품목별 산업육성

##### (1) 임산버섯

표고는 최근 10년간 내수의 급격한 확대(연평균 29% 증)에 따라 생산도 높은 증가세(연평균 12% 증)를 보이고 있어 내수충족 및 수출물량 확보를 위해 생산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99년도에는 재배시설 774천㎡를 지원하여 시설재배 비율 33%를 달성할 예정이며, 표고재배 단지는 원목단지 8개소, 균상단지 2개소 등 총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여건에 맞는 표준재배 모델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균상재배 시설을 포함한 11개 재배모델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표고자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표고자목 생산구역』을 11천ha를 추가 지정토록 하고 국유림 표고자목 매각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표고종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임협미생물사업소의 종균저장 규모를 확충하여 시장 영향력을 유지하고, 표고종균 가격을 인하토록 할 것이다.

송이는 전반적으로 채취량이 감소되어 가는 추세로 송이 증산을 위해 송이 환경개선 사업 100ha를 추진하는 한편, 송이 인공재배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다.

## (2) 종실류

밤의 경우 국내수요의 정체, 해외수요의 감소에 부딪쳐 있는 문제를 해결코자 밤 가공식품개발 및 밤 박피 가공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밤 농가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산증대는 억제하는 대신 노령목 갱신(1,200ha)을 착실히 해 나가고, 생산비의 절감을 위해 밤 작업로 시설(820km) 및 밤 생산장비(10개소)를 지원하고, 작업로 시설을 자율적으로 시설토록 규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추의 생산지원을 위해 건조기, 건조장, 관수시설을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빗자루병등 병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에 방제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각 시·도에 묘목검사 장비를 지원하여 대추묘목 검사시 조직검사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 (3) 산채·약초류 등

산림 내 수하식재가 가능한 고사리, 취, 더덕, 두릅, 장뇌, 작약, 천마 등의 재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전임지에서도 허용허가가 가능토록 국유림 대부제도의 개선, 사유림 형질변경 및 별채허가 제도의 완화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재배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특히 청정 임산물의 생산으로 유도키 위해 목탄·목초액·유기질 비료를 신규로 지원하여 고품질의 건강식품을 증산토록 할 방침이다.

## (4) 관상자원

조경수, 분재, 야생화, 자생란 등 임산 관상자원을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키 위해 우리 고유의 신품종을 개발·육성하고, 수요 촉진 및 홍보를 위해 우리 꽃 박람회, 난대전, 분재대전 등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업

농 육성 및 대량생산 유도를 위해 생산자금(12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금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되는 국토공원화 사업 및 우리 꽃길 가꾸기 사업에 우리 고유품종의 관상자원이 식재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히 해 나갈 것이다.

#### 다. 산림복합경영의 추진

산림은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자원의 보고이나, 임업은 목재생산의 장기성·저수익성과 소유 규모의 영세성으로 산업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목재중심의 산림경영의 한계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임산자원의 농업적 활용을 통하여 산림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해 발굴·보급되기 시작한 3개 유형의 복합경영모델을 토대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7개소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사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통해 이론적·정책적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 라. 임산물 주산단지 육성

1990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임산물 주산단지는 1999. 6월 현재 10개 품목 56개 단지로 확대되었다. 지금까지 지정에 그치던 주산단지를 실질적으로 육성코자 1999. 2월에 「임산물 주산단지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각 주산단지의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발전단계에 따라 재분류하고, 차별화된 지원을 통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정책방향을 정립하였다. 임산물주산단지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3-2-9> 단기소득 임산물 주산단지 지정현황('99. 6현재)

시도별 품목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56	15	8	3	6	5	3	10	6
밤	6	-	-	-	공주, 부여	순창	광양		하동, 산청
대추	5	양평	영월					경산, 청도	밀양

시도별 품목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호도	1	-	-	영동					
잣	1	가평	-						
표고	21	용인, 안성, 화성, 김포, 광주, 양평, 여주, 파주	원주	청원, 영동	공주, 부여, 논산, 청양	진안	장흥1, 장흥2	상주, 청송	거제
송이	10		삼척, 안양, 고성, 인제					울진, 봉화, 영덕, 문경, 안동	거창
산채	9	가평, 남양주	홍천, 평창			무주, 진안, 부안		울릉	남해
약초	1	양평 (장뇌)							
산과실	1	파주 (머루)							
수액	1	남양주 (고로쇠)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산림소득과 행정사무관 최병암)

## 2. 임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소득제고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한 경제림 조성 시책은 국산재 가공산업 육성이 시급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숲 가꾸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목질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톱밥, 목탄·목초액, 보드류용 및 집성재 원료로 최대한 공급할 계획이다.



톱밥의 경우 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생산시설 부족으로 공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숲 가꾸기 산물을 현지에서 톱밥으로 제조하기 위하여 지난해 국유림관리소에 8대의 톱밥제조기를 공급한 바 있고, 올 해에는 20대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임업협동조합 계통조직도 목재집하장을 설치한 임협을 중심으로 톱밥 제조시설을 지원하여 제재부산물인 죽데기와 간벌재 활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국유림관리소와 임협에서 공급하려는 톱밥량은 총 33만<sup>m</sup>에 이른다.(국내 총수요량 283만<sup>m</sup>)

소경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을 위해 금년도에도 목탄·목초액 시설 4개소, 목각 생산시설 5개소 등 임산물 이용가공시설 36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산업계의 원자재 확보 원활 및 운영 활성화와 국산재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국산재 구입자금(지원계획:101억원)을 민간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토목용 주요 건축 자재인 합판·보드류 시설개체(改替)를 위한 자금지원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산 간벌재 및 폐목재의 재활용을 촉진토록 할 것이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거푸집용 합판, 가설재 등이 「건설폐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에 수집대상 품목으로 포함되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파티클보드 등 국내 임산업계의 원자재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 밤, 표고를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생산자의 소득보장과 수요 확대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7개소 지원할 계획이다. 밤의 경우 연간 생산량이 10만톤을 넘는 주요작물로 일본, 유럽 등지로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가공품인 마론그라세, 밤음료, 밤과자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소득과 행정사무관 고기연)

### 3.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유통구조 개혁

WTO체제 출범 이후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도 등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하여 유통기반시설 확충과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 육성 및 지원강화, 생산자의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등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1999년도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임산물 생산, 유통, 소비량에 따라 산지와 소비지를 연계한 권역별 임산물 유통시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2004년까지 총 162개소의 임산물 유통시설을 전국에 설치할 계획이다.

1999년도에는 임산물생산 주요 거점지역에 임산물직매장 14개소, 목재종합집하장 1개소 등 산지유통시설 15개 시설을 설치하여 산지 유통시설과 소비지 유통시설을 연계한 직거래 유통체계를 구축코자 하며, 산지에서 소량·분산 생산되는 임산물을 대단위 소비지 권역별로 「수집·저장·선별·가공·포장」등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생산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제2차 임산물종합유통센타를 영동권역(강원동부 또는 경북북부)에 3개년 사업('99~2001)으로 시설할 계획이다.

또한 밤, 대추, 표고 등 주요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전문조직 육성으로 시장 대응능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경쟁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지역 특산물로 개발토록 56개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품목별 기초 조직을 육성하고 생산자 조직에 대하여는 출하조절 자금등을 우선 지원하고 생산자 조직 단위로 지원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소비자를 연결하는 신속하고 실제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유통정보제공을 위하여 1997년도에 임산물유통정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1998.6월부터 농림수산정보센타 정보망을 통하여 임산물생산·가격·직거래 정보 등 임산물 유통정보를 생산자·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999년에

는 임산물의 전자상거래(Cyber Market) 및 직매장의 전산화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지원을 확대하여 물류비용을 줄이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등으로 임산물의 브랜드화 유통을 지원하고 있다.

(산림소득과 행정사무관 이규태)

## 제 5 절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1.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수질오염과 물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확충하고자 수원함양에 직접 영향이 있는 5대강 유역 산림을 집중 관리하고 생태·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산림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조림사업은 대면적 개발을 지양하고 소구역 조림과 수하식재, 천연갱신 등으로 복층림을 조성하고 수원함양 기능 및 수질정화 기능을 높이도록 뿌리의 양이 많고 땅 속 깊이 뻗는 수종을 선정 식재할 계획이다.

조림지 및 천연림에는 적기에 육림 등 보육작업을 실행하여 우량림으로 유도하며, 황폐산지·계천에 대한 산지·야계사방과 사방댐 시설로 수원함양 및 관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환경보호에도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5대강 유역 산림 특별관리를 위해 취수장 주변 산림을 제외한 본류 유역 5km 이내 산림(830천ha)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결과를 토대로 682천ha에 대하여 산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도부터 8년간 수원함양림을 조성·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한강수계 국·공유림 보안림 지정에 따른 산림법령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한강수계 수질개선 지역내 국유림에 대하여는 목축, 종축, 광업,

학교, 청소년시설 용도로 신규·대부 사용허가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표 3-2-10>

**'99 5대강유역 산림사업계획**

구 분	단 위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섬진강	그외지역
○ 조 립	ha	1,075	334	428	94	111	91	17
○ 육 립	"	11,425	2,358	4,268	1,267	577	1,884	651
- 천연림보육등	"	9,551	2,431	3,656	908	488	1,640	428
- 간 별	"	1,874	327	612	379	89	244	223
○ 사 방								
- 산 지	ha	4	-	1	-	-	1	-
- 야 계	km	13	-	3	6	-	4	2
- 사 방 댐	개소	-	-	-	-	-	-	-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산림자원과 임업사무관 심영만)

## 2. 야생 식물자원 관리

21세기 생물자원 전쟁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고유의 자생 식물자원 보전과 관리기반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 가. 수목원조성 및 관리

수목원 관리인력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미 조성된 지방수목원에 종자은행, 석엽표본 보관시설, 자연학습시설을 설치하고 지역 향토 식물종의 조사·수집·증식 등 현지의 보전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수목원으로 육성 추진할 계획이다.

### 나. 자생식물원 조성

우리 고유의 자생식물 상설전시 및 대국민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명산 자연휴양림내에 30ha 규모로 자생식물원을 조성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1999년도 상반기 중에 기초조사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온실 및 관리사를 건축하며, 자연휴양림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계절별로 감상할 수 있는 야생화와 관목류 등을 집단적으로 점차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 전에 학계, 민간단체, 생산농가, 임업연구원 등의 관계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성사업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을 추진하고 자생식물 관련 민간단체가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자 한다.

#### 다. 우리 꽃길 조성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색에 맞는 자생식물을 식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이미지 창출과 전통적인 야생경관을 복원하는 한편, 2002년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국제 꽃 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내국인, 외국인을 위한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우리 꽃과 식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한 우리 꽃 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는 우선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99년도 1/4분기까지 시·도별로 조성계획을 수립 완료후 본격적인 조성을 추진하되 산림청, 임업연구원, 관련시·도, 자생식물 관련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성 장소 선정, 식재 식물종 선정, 식재방법, 사업지침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우리 꽃길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우리 꽃길 조성 5개년계획」을 1999년 말까지 수립하고자 한다.

<표 3-2-11> '99 우리 꽃길 조성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합 계	서울	대전	충남	전북
사업량(km)	32	10	8	6	8
투자액(백만원)	2,286	714	572	428	572

자료 : 산림청 사유림지원국

## 라. 희귀 및 특산식물 조사와 국가식물정보망 구축

희귀·특산식물 자생지를 지속적으로 조사(전국 30지역 30종류)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주요 자생지는 천연보호림으로 지정하고, 자생 식물자원 관리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식물자원정보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1999년도 신설된 국립수목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 수목원과 사설 수목원·식물원 보유종의 목록화, 식재위치, 유출·입 관리정보 등 자료를 입력하고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료 및 정보제공을 추진하고자 한다.

(산림자원과 임업사무관 김동수)

## 3. 산림휴양시설 운영의 내실화

이제 자연휴양림은 단순한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연휴양림은 그 동안 숲속의집 등 시설물 확충(하드웨어 구축)에서 이제는 이용객들의 방문만족도 향상 등 운영의 내실화(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휴양패턴에 맞게 자연학습·체험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휴양림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숲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산림탐방 활동도 안내 해 주는 숲 해설가 제도를 통하여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정착 시키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실질적인 임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숲의 다양한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누리도록 하는 산림의 공익화를 위한 실천으로 UNDP와 공동으로 나무·숲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산림유적지, 휴양지, 주산단지 등과 연계한 산림문화 코스(산림휴양권역)를 구상하여 급변하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국유림경영과 임업서기관 최준석)

## 4. 『녹색복권』 발행으로 녹색자금 조성

### 가. 『녹색복권』 발행 배경 및 추진 경위

산림은 당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자산으로서 목재생산 등 경제적 기능 외에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국토를 보전하는 등 환경적 기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산림환경 기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992년 ‘리우선언’에서도 산림의 수원보전, 지구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의 흡수, 토양보전 등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를 권장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 예산 중 산림투자는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확보방안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금으로 동 자금에 충당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환경기능을 증진하는 일에 국민적인 이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98.7.6 국회환경포럼 소속의원 37명이 「녹색복권」 도입을 위한 산림법개정안을 발의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1998.12.29 국회심의 의결되어 1999.8.6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 나. 녹색자금회계 설치 및 자금용도

「녹색복권」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리비를 제외한 전액 「녹색자금」 회계에 전입되어 산림법에서 정한 자금의 용도로 집행될 것이다.

또한 녹색자금은 복권판매 수입 외에도 정부 외의 민간 출원금, 녹색자금 운용에서 발생한 수입금과 기타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며 이는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적인 회계로 운영하게 된다.

녹색복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산림의 깨끗한 물 공급 기능 제고 등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목적에 사용된다.

첫째,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 환경개선 사업에 쓰여진다.

5대강 유역 산림에 대해 수원함양 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개발하고 산림저수댐 등 수원함양 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공해방지를 위한 생활환경 및 조성사업에 사용된다.  
토사유출방지, 경관조성 등 국토보전사업과 산림의 CO<sub>2</sub> 흡수기능제고, 도시·공단지역의 공기정화 등을 위한 생활환경림 조성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산림내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사업 지원에 쓰여진다.  
민간단체의 야생조수보호 활동지원, 자생식물 보전관리 및 증식·복원사업, 희귀 및 특정 동식물의 서식 환경조성 및 적정 밀도유지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기타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원, 산림내 청소년들의 자연체험 활동 시설의 설치 및 교육·홍보사업,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활동 지원, 기타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 **다. 복권 발행계획**

발행 첫 해인 1999년에는 판매량을 감안하여 발행량 조절이 가능하고 발행·판매 및 관리가 용이한 즉석식 500원권과 5,000원권 2종류로 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1999년도 발행규모는 50억원 가량이다.

(산림지원과 임업사무관 한문영)

## **제 6 절 산불방지등 산림보호대책 강화**

### **1. 산불 예방활동 강화로 피해 최소화**

#### **가. 우리나라 산불의 특성**

우리나라 산림은 대부분이 20~30년생으로 불에 타기 쉬우며, 산림내



가연성 지피물이 많아 산불발생 개연성이 높고, 경사·기복이 많은 산지로 산불발생시 연소진행 속도가 빨라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산불 발생시 고온 및 난기류, 진행방향 급변 등으로 근접진화가 곤란하고 농산촌 인구감소·노령화로 자체 진화인력이 부족하며, 봄·가을철 건조기에 계절풍이 겹쳐 동시 다발로 확산되는 경향이다. 또한 우리나라 산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 나. '99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불방지 근무태세 및 공조체제 확립을 위해 산불조심기간중(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에는 산림청을 비롯하여 시·도, 지방산림관리청은 물론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등 전국산림관서에 산불방지대책본부상 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또한 국가재난방지차원에서 행정자치부, 국방부, 기상청 등 관련부처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시·도 주관으로 소방·경찰관서, 관할 군부대, 공원관리부서, 임업·환경단체 등과 지역 공동산불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범 국민적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으로서 산림의 중요성과, 산불의 위험성,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산불위험시기에 산불조심 TV 홍보방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TV,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특집보도를 하는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중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산불조심 캠페인의 날로 지정하여 주요등산로, 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산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하고 반상회,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영농교육, 각종 회의시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일간지에 산불조심 당부내용을 실어 계도한다.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 강화를 위하여 열차, 지하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계도방송 실시, 산악회 등 각종 단체에 산불조심 협

조요청, 현수막·입간판 등 다양한 홍보물을 이용하여 산불조심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산불위험지역 입산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조치하고 논·밭두렁 소각을 마을별로 공동 소각토록 하는 한편 기상상태별 산불예방행동지침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또한 군사훈련에 의한 산불방지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산채 및 약초 채취자 집중관리, 어린이 불장난 감시강화, 성묘 및 무속행위자 화기물 취급 집중감시 야간산불·방화에 대비하여 순찰조 편성운영 등 산불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계도·감시하고, 강화된 산불방지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며 산불예방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초동진화의 총력추진을 위해 산불조기발견을 위한 산불무인감시시스템을 1999년도에 2개소를 신설하며 앞으로 2002년까지 25개소로 확대 설치한다.

우리나라는 산악형 산림으로 지상진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소형 산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에 의존하고 있다.

효율적인 공중진화를 위하여 현재 지방 격납고 4개소를 2001년까지 7개소로 확대 시설하여 헬기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또한 위험지역은 현지에 전진배치 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무선중계기('99신설 9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산불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중진화 기반시설인 취수원의 체계적 관리, 항공유 급유 지원체계 개선 및 유조차 적정배치로 헬기에 의한 공중진화 능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지상진화를 위해서 산불진화 지휘체제를 구축하고 공중진화대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산불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산불진화대의 정예화 및 산불진화훈련실시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뒷불감시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여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홍보의 지속적 전개 및 철저한 예방활동과 선진 진화

장비의 개발·확충을 통하여 산불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불방지과 행정사무관 조이성)

## 2. 산림병해충방제 방법개선

산림병해충은 조기발견, 적기방제를 통한 방제성과 제고가 중요하므로 예찰조사 기능강화 및 기동진단반을 구성·운영하였다. 특히 피해가 심한 솔잎혹파리는 수간주사, 천적방사, 항공엽면시비 등 가능한 방제방법을 총동원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하는 한편, 국·사유림 방제 실행주체간 공조체제 유지를 통한 지역완결방제로 방제효과를 높였다. 솔껍질각지벌레, 잣나무넓적잎벌 및 기타 해충도 발생 전면적을 방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며 아울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 저독성 약제 『이미다』의 실방제 적용 및 돌발해충의 환경친화적 방제 가능성 모색을 위한 시범방제 추진 등 효과적인 방제방법의 꾸준한 연구개발과 환경친화적인 방제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병해충 방제와 동시에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1999년도 산림병해충 방제계획량은 230천ha를 책정하고 사업비 501억원(국비 266, 지방비·기타 235억원), 총 투입인원 703천명, 사용약제 543톤, 헬기 연 912대를 투입하여 연중 종합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3-2-12> '99 산림병해충별 방제계획

(단위 : ha)

계	솔잎혹파리	솔껍질각지벌레	소나무재선충	밤나무해충	흰불나방등 기타 해충
229,716	76,267	13,494	1,995	38,210	99,750

자료 : 산림청 국유림관리국

(산림보호과 임업사무관 최덕호)

## 제 7 절 임산물 수출증대와 국제협력 강화

### 1. 임산물 수출증대 추진

1999년도 임산물 수출은 합판 수출의 호조 지속 및 밤 수출 회복이 전망되어 수출 목표를 전년대비 18%가 늘어난 285백만\$로 정하였으며,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임산물 수출이 안고 있는 문제점인 수출시장 편중, 수출품목 한정, 수출업체의 영세성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출확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대책회의·간담회 개최 및 수출현장 방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애로 해소 추진 등 효과적인 수출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우수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자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출촉진 자금 지원이 수출증대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미주(7월), 일본(9월)지역에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 유망품목 및 신규 수출시장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통하여 수출품목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셋째, 영세한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장·운송비, 포장기계·운송차량·선별기 구입비 및 목재 원자재·단기소득 임산물 원료 구매자금을 신규 지원하거나 또는 확대하여 임산물 수출증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표 3-2-13>

'99 임산물 수출목표

(단위:천\$)

		'99 목표	'98 실적	증 감(%)	비 고
계		285,000	240,845	18	
소 계		140,000	122,716	24	
목 재 류	합 판	65,000	53,053	23	
	섬 유 판	23,000	26,798	△14	
	마 루 판	18,000	17,276	4	
	목 재 품	34,000	25,589	33	

		'99 목표	'98 실적	증 감(%)	비 고
단기소득 임 산 물	소 계	145,000	118,129	23	
	밤	88,000	65,284	35	
	송 이 버 섯	35,000	34,042	3	
	표 고 버 섯	12,000	8,703	38	
	기 타	10,000	10,100	△ 1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송경원)

## 2. 국제협력 증진 및 통상협력 강화

### 가. 국제협력 증진

국제협력의 다변화를 통한 산림자원 외교 증진 및 국가 위상 제고를 목표로 1999년도에는 양자간 국제 임업협력 활성화,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개도국 지원 및 교류 확대, 산림협약 체결에 대응한 국내·외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양자간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미얀마 등 주요 임업국가와의 임업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임업협력협정에 따라 개최되는 한·인니 임업협력회의 등 정례회의를 내실 있게 준비·협약해 나가고자 한다.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자원보유 개도국과의 임업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개도국 공무원 임업연수 훈련을 실시하고, 인도네시아 소경목재 이용사업, 미얀마 산림녹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및 중국 황폐지 복구 협력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협약 체결 등이 논의되고 있는 IFF 및 OECD, ITTO, 사막화방지협약 등 각종 국제기구·회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지정·양성하고 산림협약 체결을 대비한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국제 논의동향 파악, 대응전략 등을 수립하여 아국의 국익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국제협력과 임업사무관 강호덕)

## 나. 통상협력 강화

1999년도는 WTO 차기협상이 개시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해 보다 통상협력 분야에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WTO 차기협상이 이미 의제로 확정된 농업 및 서비스 분야 이외에도 임산물에 포함된 공산품 분야 및 기타 최근 대두된 무역과 관련된 이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임산물 분야에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차기협상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여기에는 임업관련 단체, 산주, 학계, 연구기관 등을 참여하도록 하여 차기협상 대응시 적절한 산림 경영을 통한 공익적 가치, 임산물의 다원적 기능, 지구환경문제 등을 연계한 협상논리 개발 및 목재자원 보유국의 수출규제 철폐 제기 등 결집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APEC과 관련해서는 1998까지 APEC 논의의 최대 쟁점인 9개 분야 조기 자유화가 WTO에서 다루어지도록 결정됨에 따라 올해에는 역내 비관세 장벽 철폐 및 경제협력 등에 비중을 두고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합판·보드류 등 우리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피해가 없도록 일정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면서도 양국이 협정체결의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송경원)

## 제 8 절 장기·안정적 목재공급을 위한 해외조림 확대

목재수급 안정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직결되나 국내자원 빈약으로 현재 목재 자급도는 4%에 불과하고 90%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외재 의존형 목재수급 구조는 목재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국내 수목생

장의 한계로 2000년대 중반까지 장기화될 전망이다.

또한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협약, 열대목재협약 등 각종 국제협약이 체결되면서 세계 산림의 보전과 천연림에 대한 벌채 규제가 강력히 시행되어 오고 있어 목재가격 상승 및 원자재 확보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가변적인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예상되는 목재 도입 여건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 직접 조림을 통한 장기 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를 추진해 오고 있다.

1993년 호주에 최초 조림을 실시한 이후 연차적으로 조림면적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2050년까지 100만ha 조림으로 50% 목재자급을 이룬다는 장기 계획상 1999년도 조림목표는 7,000ha이다.

1999년 조림목표 달성을 위해 수목생장 여건이 좋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권을 우선 대상으로 투자환경 조사를 실시(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하여 진출 희망업체에 제공하고, 또한 투자안정성 보장을 위해 임업협력 협정을 체결(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및 노동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앞으로의 투자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계획상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 자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98: 82 → '99: 91억원)하고, 조림사업비 이외에 무육관리비를 지원하고, 융자비율을 상향조정 지원하며, 융자기간도 수종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진출업체 또는 진출 희망업체가 투자의욕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해외조림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표 3-2-14>

해외조림 장기계획 지표

구분	단위	2010	2020	2030	2040	2050
해외조림면적	천ha	334	534	734	936	1,000
목재공급	천m <sup>3</sup>	30,746 (100)	35,348 (100)	38,559 (100)	40,531 (100)	42,043 (100)
- 국내재	"	3,234 (10)	4,635 (13)	6,844 (18)	9,486 (23)	12,574 (30)
- 순수수입재	"	23,312 (76)	22,295 (63)	19,315 (50)	14,645 (37)	8,669 (21)
- 해외조림목	"	4,200 (14)	8,400 (24)	12,400 (32)	16,400 (40)	20,800 (49)

자료 : 산림청 임업정책국

(국제협력과 행정사무관 김동욱)

## 제 9 절 임업기술 개발 촉진

### 1. 산삼·송이 등 고부가가치 산림자원의 개발

#### 가. 산삼 인공배양기술 개발

산삼 등 산림유용자원의 대량생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과 인공배양기술을 개발하여 임업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생물공학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할 계획으로 많은 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산삼, 민두릅 등 고부가가치를 지니는 유용산림자원을 대량증식하기 위하여 생물반응기 배양 환경조건을 구명하고 자동화 배양공정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산업화를 위하여 대용량 생물반응기(5톤급)를 설계, 제작하고 있다.

식물생물공학은 식물이나 식물유래물질 또는 식물의 시스템을 응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 또는 공정을 제조하거나 개선을 위하여 개발하는 기술로서, 임업분야에 있어서는 신기능성 생물제품 개발을 위하여 임목의



대량증식을 위한 조직배양 기술개발과 신기능성 물질의 대량생산을 위한 세포배양 기술 개발 및 생물반응기라는 탱크를 이용하여 세포, 조직, 기관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산업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오염지역의 정화 등 환경수종과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에 의한 형질전환수종의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산업화 기술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길은 그리 멀지 않다.

(임업연구원 생물공학과장 손성호)

#### 나. 송이 증수기술 개발

송이는 1998년도의 경우 278톤이 생산되어 34백만불(\$)의 외화획득을 올리고 있는 유망 임산물이다. 국내의 송이 생산량은 해마다 감소경향이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임업연구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임산물중 하나인 송이의 생산성 격감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한 결과, ① 판수처리에 의하여 송이 갯수가 1.8배 증가하였고 무게는 1.2배 증가하였다. ② 임분관리 시업기준으로 상대적 공간지수(RSI)를 적용하여 수고거리의 35% 내외로 수간거리를 조절함이 좋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③ 송이산의 생산성을 진단한 결과 마귀광대버섯, 다박싸리, 자주줄각버섯, 황소비단그물버섯 등의 균근성버섯의 다수 출현은 송이균환의 쇠퇴 징후로 판단되었고, 탈수소효소 활성이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낙엽굵기와 객토 등의 시업이 필요함을 밝혔다. ④ PCR-RAPD 분석에 의하여 송이의 18s rDNA 염기서열을 구명하였다. ⑤ 송이의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식생정리와 송이 캡씩우기 등에 대하여 계속 연구 중에 있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가강현)

## 2. 현장수요 중심의 실용화 기술개발

### 가. 국산재를 이용한 경골목조트러스 개발

전 국토 면적의 65% 이상이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임목 축적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간벌재를 비롯한 국산재의 생산 잠재력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촌의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에 의한 생산비 상승, 목재 유통구조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국산재는 저급용재로 이용되고 있다. 국산재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중소경제의 가공·이용기술을 개발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용도를 창출하는 것이 국산재의 이용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임업의 중요한 현안과제라 할 수 있다.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산재를 목조건축용 건축부재로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산재를 목조건축의 지붕구조 및 장선구조 등 단면치수가 큰 목재가 주로 사용되는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목조트러스를 개발하여 이용하고자 한다. 특히 목조트러스의 필수 기술인 접합부를 개발하고 트러스 설계기술과 제조 및 시공기술을 개발하여 건축비 절감 및 목조건축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나. 국산재를 이용한 건축부재 개발

국산재를 건축부재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은 저급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재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국산재를 건축부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산재 이용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산재를 구조부재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적 건조기술을 개발하여 국산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조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국산재의 구조성을 평가하여 구조부재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조부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국산재를 건축내장

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면강화 기술을 개발하여 국산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국산재를 구조부재로 사용하여 건축한 건축물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화구조를 개발하여 목조주택의 화재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을 목구조에 적용하기 위한 목조건축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국산재 이용의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산 원목 및 제품의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유통체계를 개발하여 국산재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심국보)

### 3. 임산자원의 단기소득 상품화 기술개발

#### 가. 단기소득원인 밤나무, 호도나무 신품종 개발

##### (1) 밤나무 신품종 개발

기존의 밤나무 재배품종들보다 우수한 품종을 육성, 보급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1976년까지 국내의 우량품종들을 모수 또는 화분수로 47조합을 인공교배하여, 1978년부터 교잡 실생묘를 개체별로 특성을 검정하고 1989년에 밤나무 흑별에 대해 내충성이며 수확량이 많고 과실형질이 우량한 30개체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우량교잡종 30개체를 접목증식하여, 1991년에 경기, 충북, 경남 3개지역에 식재하고 1997년까지 적응성을 검정한 결과 밤나무 흑별에 강하고 재배종 유마에 비하여 과실무게 1.3배, 수확량 1.2배인, 대립다수성 '대보'(상면1호×이평)품종과 과실무게 1.1배 속껍질 박피율 66.7%(재배종 15%)인 내피박피성이 양호한 '박미1호'(동농2호×상면1호), '박미2호'(동농2호×함중)등 교잡종 3품종을 개발하여 1998년도에 신품종으로 명명하였다.

신품종 밤나무는 1998년부터 접목 증식하여 각도에 접수 공급원인 채수포를 1999년에 1.5ha를 조성하였고, 2000년에 1.5ha를 조성하여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 호도나무 신품종 개발

수익성이 높은 호도나무는 천안, 영동, 무주, 김천 등지를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연간 생산량이 1200톤에 불과하여 국내수요에 크게 부족해 연간 1400여 톤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업연구원 임목육종부에서는 1985년부터 국내외 우량품종간 96조합을 인공교배하여 그 교잡종과 국내에서 선발한 84개체를 식재하여 1997년까지 내한성, 과실 특성들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추위에도 강하고 재래종에 비하여 과실무게 2.7배, 수확량이 3.4배인 내한성 대립다수성인 '왕호도'(레이크×상촌4호)와 내한성이고 재래종에 비하여 과실 속알맹이 무게가 1.9배, 수확량이 3.6배인 고품질, 다수성인 '수원1호'(맥킨스타×상촌2호), '수원2호'(산성4호×레이크), '영동'(풍매선발)등 4품종을 개발하여 1998년도에 신품종으로 명명하였다.

신품종 호도나무를 1998년부터 접목증식하여 각도에 접수 공급원인 채수포를 1999년에 0.9ha를 조성하였고, 2000년에 0.6ha를 조성하여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농가에 확대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관 이문호)

## 나. 전통 한지의 용도 개발

전통 한지의 용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임산 인피섬유 자원 개발』과 『전통한지제조기술의 기계화에 의한 새로운 용도개발』 및 『기능성 한지벽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1997년 현재 닥나무 인피섬유 생산량은 448톤(40.5억원)이며, 일본에 86톤(989천\$) 수출하고 있다.

전통한지는 과거 농한기 노동력을 이용한 수초지(手抄紙) 생산 방식으로 생산력이 낮고 중소 업체에서 일부 한지(화선지, 책지, 포장지, 소지 등)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나 영세한 실정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인피섬유 생산을

국가적인 기술보호산업으로 지정하여 보호 육성하고 있으며 선진 기술의 노하우 반출 기피로 인하여 정보수집이 곤란한 실정이다.

일본은 인피섬유를 특수지(문화재보수지, 차봉지, 절연지, 특수필터, 인공 피부이식지 등)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임업연구원 남부임업시험장에서는 한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한지 제조 및 한지의 용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실적은 『임산 인피섬유 자원 개발('93~'96)』에서 한지 위생냅킨과 한지 필터 및 한지 차광지를 개발하였고 『전통한지제조기술의 기계화에 의한 새로운 용도개발('94~'96)』에서 한지 벽지와 한지 포장지 및 한지 명함지를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기능성 한지벽지 개발('97부터 추진중)』에서 원적외선 및 난연효과와 일광 견뢰도 등을 부여한 소재를 개발 중에 있다.

앞으로는 대량 생산기술 및 기능성을 부여한 전통 한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와 한지의 용도 개발에 의한 닥나무 재배 농가 확산을 통한 농산촌민의 소득증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조현진)

#### 다. 대나무초액 이용기술 개발

기 개발된 대나무숯 상품의 시장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나무숯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비닐, 타일, 쌀포대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나무숯의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연기를 냉각 응축한 대나무초액은 살균력과 침투성이 매우 뛰어나 농업용으로는 토양개량, 식물생장촉진 및 해충기피제로, 임업용으로는 묘목 및 유실수 생장촉진제로, 축·수산용으로는 사료첨가제 및 각종 악취제거제로, 공업용으로는 탈취제 원료나 방부제로, 의약용으로는 각종 피부질환치료제로, 그리고 환경정화용으로는 공원, 골프장의 농약절감 및 식생 촉진제로써의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나무초액을 효율 좋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되어 죽종별 회수율조사 및 성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나무초액을 오래 전부터 농림축수산업분야에서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건강 음료로도 개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대나무초액에 대한 연구나 제품이 전무한 실정이나 대나무에서 추출한 죽력(竹瀝)은 담제거 및 심신안정제로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앞으로 정제기술의 개발과 함께 대나무초액의 특성을 살린 각종 제품의 개발(항균비누, 약취제거제 등)이 기대된다.

(임업연구원 임업연구사 박상범)

## 제 10 절 임업협동조합 개혁

### 1. 추진 현황

우리나라 산림은 녹화는 되었으나 30년생 이하의 어린 나무가 대부분으로 앞으로 20~30년간은 본격적인 목재생산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전체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사실상 경영 방치상태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임업의 현실을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산주에 대한 기술지도와 조림·육림·임도시설등 정부의 산림사업 대행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임협의 역할 또한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98년부터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개혁을 위해 1999. 3. 8 일 농·축·인삼협 중앙회는 1개 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고, 임업협동조합은 현재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산림조합 체제로 개편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개혁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임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을 마련, 현지 조합장과의 간담회·공청회·부처협의·입법예고·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999.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였다.

## 2. 주요 개혁방향

임협은 농업인의 협동체인 농업인협동조합과는 달리 토지(임야)소유자로서 산주 중심 조직이며 이들을 위해 산림사업을 전담 실행할 수 있는 공사 성격의 산림조합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을 산림조합(연합회)체제로 전환하되 210만 산주와 임업인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체로 탈바꿈하고, 산림의 70%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관리주체로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임협법개정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첫째, 연합회는 회원조합과 경합되는 임도, 사방, 휴양림 등 시공 사업사업은 회원조합으로 이관하고, 회원에 대한 지원 및 교육·지도 기능 위주로 개편하며

둘째, 회장은 회원에 대한 교육·지원 업무와 대정부 건의 활동업무를 담당하고, 상임이사(1인)는 임업경제 관련사업을 전담 실행하여 책임경영토록하고 소관업무(임업경제, 복권, 공제, 신용 사업 등)에 대해 대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셋째,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전담 실행기관으로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제사업, 중개업무 등을 추가하여 조합의 업무영역을 확대토록 하였고

넷째, 산림조합이 모든 산주와 임업인이 중심이 되어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나도록 현행 소재산주에서 모든 산주와 임업인으로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확대 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혁방향이 반영된 임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안이 금년도 국회심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2000년 7월 1일부터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또한 연합회 조직의 경량화, 조합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연합회와 조합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유림지원과 행정사무관 이명수)

# 친환경 · 품질인증 농산물은 벌레가 먹고 못생겨도 더 맛있고 안전해요

유기재배



농약 · 화학비료 사용않고 재배

무농약재배



농약 사용않고 재배

저농약재배



농약 1/2이하 사용 재배

일반재배



농약 · 비료 적정사용 재배

품질인증 농산물은 정부가 안전성을 보증합니다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999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1999년 9월 일 인쇄

1999년 9월 일 발행

발행 : 대한민국 농 립 부

편집 : 농림부 농업정책과

인쇄 : 대 양 출 판 사

☎ 503-6063

---

<비매품>